

발간등록번호

11-1101000-000051-01

국무총리실 5년의 기록

조화로운 정책 선진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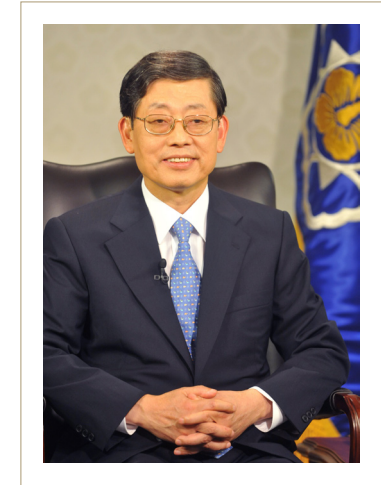
정책자료집 ①

2008.2 ~ 2013.2



국무총리실 5년의 기록
조화로운 정책
선진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❶ 2008.2 ~ 2013.2



이명박 정부는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성과자료집에는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국격제고, 공생발전, 열린고용 등 이명박 정부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실 정책성과자료집에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지난 5년간의 정책 조정사례를 주요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적인 정책과 국가적 사업들이 어떻게 입안되고 결정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부가 최선의 결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고민을 했는지 그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이번 자료집에 담겨진 소중한 경험을 발판 삼아 다음 정부가 한 단계 발전된 국정 운영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아울러 정책성과자료집이 정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1월

국무총리 김 황 석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룩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했으며, 정치발전으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지고 가치와 생각들이 다원화 되어갈수록 통합의 구심력보다는 갈등의 원심력이 더 커져가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성을 가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라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이견을 지혜롭게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범정부적 과제나 국가적 현안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학교폭력 근절 및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수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실에서는 새만금사업, 세종시 이전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단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혁해나가는 일에도 진력해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성과자료집에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무총리실이 담당해온 국정운영의 총괄관리,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국책사업 추진, 규제개혁, 정책분석평가 등 모든 업무수행 및 추진과정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정부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가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국정의 중심에서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3년 1월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차례

국무총리실 5년의 기록

조화로운 정책 선진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① 2008.2~2013.2

발간사 2

총론 8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국무총리실장
국무총리실 조직 및 인력 현황, 조직개편 현황

제 1 편

국정운영의 총괄관리

제1장 주요 국정협의체 운영 18

1. 국무회의·차관회의
2. 국정조정회의
3.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4. 고위당정협의회

제2장 국정 핵심 아젠다 추진 54

1. 100대 국정과제 관리
2. 국격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추진
3. 기후변화 대비 녹색성장 추진
4. 공정사회 구현
5. 교육 개혁
6. 건강한 사회 만들기
7. 에너지 협력외교
8. ODA 선진화

제3장 위기상황의 체계적 관리 204

1. 사회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2.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3.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4. 천안함 피격사건 대응
5.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대응
6. 일본 원전사고 대응
7.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대응
8. 김정일 사망 관련 상황관리
9.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대응

제4장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관리 259

1. 연혁 및 기본 현황
2. 합리적 기관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
3.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
4.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제5장 정부 정책홍보기획 기능 강화 271

1. 정책홍보 기능강화 추진배경
2. 정책홍보기획관실의 출범과 주요 업무
3. 정책홍보 관련 주요 업무 추진성과
4.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홍보 기능의 재편

제 2 편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제1장 주요 정책의 기획·조정 292

1. 일반 행정·외교안보 분야
2. 경제 분야
3. 사회 분야

제2장 공공갈등의 관리 494

1. 공공갈등 관리기반 구축
2. 중앙·지방 간 갈등
3. 입지 갈등
4.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갈등

국정운영의 총괄관리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국제사면추진 및
국제협력사업

국제개발

정부업무평가 및
국민과민감도

지식재산권
문화체육관광

조세사면업무 추진

1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실장

【 국무총리 】



2008.2.29~2009.9.28



2009.9.29~2010.8.11



2010.10.1~현재

【 국무총리실장 】



2008.3.1~2009.1.19



2009.1.20~2010.8.11



2010.8.12~2011.9.4



2011.9.5~현재

2 국무총리실 조직 및 인력 현황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협·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둔다(「정부조직법」 제18조).

국무총리실 조직은 2차장 7실 1원, 27국 1담당관 6심판관으로 구성되며, 소속 기관으로 조세심판원을 두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내국세, 관세 및 지방세 심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차장은 국무총리실의 전략기획업무, 사회위협갈등관리 및 규제개혁 등을 총괄한다. 소속으로는 국정운영1실, 국정운영2실, 사회통합정책실, 규제개혁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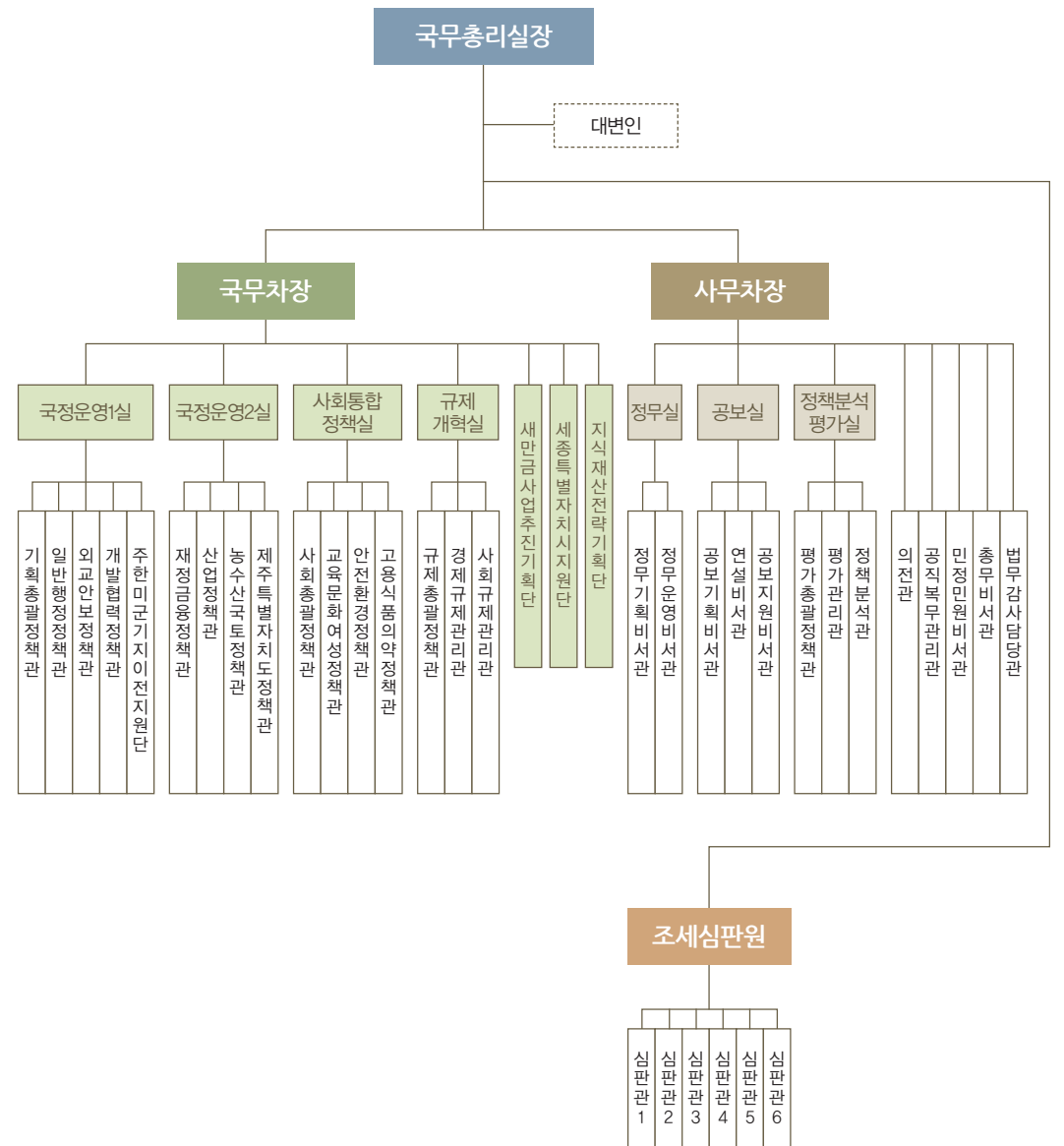
사무차장은 정부·공보·의전·공직복무 관련 업무, 정부업무평가, 국무총리실 인사·예산·창의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소속으로는 정무실, 공보실, 정책분석평가실, 의전관, 공직복무관리관, 민정민원비서관, 총무비서관, 법무감사담당관이 있다.

국무총리실의 총 정원은 432명으로 정무직 3명, 고공단 41명, 3·4급~5급 259명, 6급 이하 129명이다.

2012년 12월 현재

구분	계	정무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계	432	3	41	16	60	34	150	128
총리실(본부)	318	3	34	15	47	27	97	95
조세 심판원	114	-	7	1	13	7	53	33

【 국무총리실 조직체계도 】



3 국무총리실 조직개편 현황

국무총리실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통합되면서 신설되었다. 정부 출범 시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지휘·조정·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특명을 수행하던 국무총리 보좌기관인 국무총리비서실이 통합되었다. 신설된 국무총리실은 정부 부처의 기능재편에 따라 정책조정과 민정 관련 기능이 축소되어 탄생하였으나, 축소된 조직으로는 범부처 관련 현안해결과 부처 간 상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2008년 7월에는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국무총리의 원활한 내각 통할 및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국정운영실과 사회통합정책실의 역할을 국정분야 담당 체제로 개편하였다. 또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하였다.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정책조정 및 심사평가, 규제개혁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조직 내 업무분장 조정 및 조직 개편도 실시하였다.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간 업무분장 조정을 통해 규제개혁실, 제주지원위사무처를 국무차장 소속에서 사무차장 소속으로 이관(2009.3)하였고, 2010년 8월에는 업무 성격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민정민원비서관실을 국무총리실장 직속에서 사무차장 소속으로 조정하고, 규제개혁실을 사무차장 소속에서 국무차장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 신설과 총괄 기능 및 주요 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도 실시하였다. 국정운영실을 국정운영 1실과 2실로 분리하고, 하부조직 개편을 통해 개발협력정책관, 정책홍보기획관, 산업정책관을 신설한 반면, 제주지원위사무처는 3국에서 1국으로 축소(2009.12)하였다.

또한 공공갈등관리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과제를 직접 추진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 업무를 사회통합정책실에서 국정운영1실로 이관(2011.7)하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그동안의 국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정책홍보 기능개편에 따라 국무총리실의 국가정책홍보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2012.2)하였다. 2012년 4월에는 개정된 법률¹⁾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로서 법무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공직복무관리관실 개편(파견인력 감축, 총리실 자체인력대체)을 통해 업무 연속성 및 조직역량의 강화를 꾀하였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8.3 공포), 총리실이 자체감사기구 설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포함, 자체감사기구로서 '법무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소요인력 5명 증원

【 2008년 이후 직제개정 현황 】

구분	일자	조직개편 내역	비고
제정	2008.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통합, 국무총리실 발족 	정원 388명(본부 280명, 조세심판원 108명) *타 부처 정원(19명) 제외
1차 개정	2008.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위험갈등관리실을 사회통합정책관실로 변경 	정원 변동 없음
2차 개정	2008.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조정기능 추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정원 변동 없음
3차 개정	2008.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반영, 정원 증가 	정원 4명 증가 (고위 1, 3급 1, 4급 1, 5급 1)
4차 개정	2008.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차장 간 업무분장 조정 가능 규정 신설 	정원 변동 없음
5차 개정	2009.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괄 개정 	정원 변동 없음
6차 개정	200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수를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 가능직 직렬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 	정원 변동 없음
7차 개정	2009.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임용령」 개정(2009.9.8)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 근거 마련 	정원 조정 (기능직 9명 → 일반직 9명)
8차 개정	2009.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운영실을 국정운영1·2실로 분리·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정책관, 정책홍보기획관, 산업정책관 신설 및 제주지원위사무처 개편 반영, 정원 증가 	정원 22명 증가(고위 4, 3-4급 1, 4급 4, 4-5급 3, 5급 10) *타 부처 정원 △9명
9차 개정	2010.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윤리지원관’의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 관련 공직자 복무 관리’ 기능 보완 	정원 변동 없음
10차 개정	201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제 내용 중 정원 일부 조정 	정원 조정(기능직 9명 → 일반직 9명, 전산주사 1명 → 시설주사 1명, 기능직 위생원 1명 → 조리원 1명)
11차 개정	201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인 국정관리 체계 구축, 정책조정 역량제고를 위한 공직복무관리관실 및 정책홍보기획관실 정원 증가(5명)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정원 증가(6명) 	정원 11명 증가 (4급 2, 4-5급 3, 5급 6) *타 부처 정원 + 3명

구분	일자	조직개편 내역	비고
12차 개정	201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2명) 	정원 2명 증가(5급 1, 7급 1)
13차 개정	2011.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지원위사무처 기간 연장 및 정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을 3년 연장(2011.6.30 → 2014.6.30) - 정원 3명 감축(13명 → 10명) 	정원 426명(2011.6 현재) (본부 312명, 조세심판원 114명) 정원 1명 감소(5급) *타 부처 정원 △2명
14차 개정	2011.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변인 기능에 온라인 대변인 지정운영 근거 마련 「공무원임용령」 개정(2009.9.8)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 근거 마련 정원대체계약직 2명 추가(5급 1, 6급 1) 국무총리실본부 운영정원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제 적용 제외 	정원 조정 (기능직 10명→일반직 10명)
15차 개정	20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의 정책홍보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인력 9명 문화부로 이체 	정원 9명 감소 (고공단 나급 1, 4급 2, 4-5급 1, 5급 5)
16차 개정	201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감사기구로서 법무감사담당관실 신설(+5명) 공직복무관리관실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파견인력을 감축하고, 대신 총리실 인력으로 대체(+3명) 연구관은 행정·기술직 5급 정원에 통합 신설, 6급 시설직·전산직 등 기술직은 행정·기술직 6급 복수정원에 통합 	정원 8명 증원 (4급 1, 4-5급 3, 5급 2, 6급 1, 7급 1)
17차 개정	2012.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서울청사 집무실 보좌인력 보강(+2명) 세종시 국무총리공관 관리, 운영인력 보강(+5명)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실무인력 직급 조정 기능직 일반직 전환 및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정원 7명 증원(5급 1, 6급 1, 8급 1, 기능7 2, 기능9 2) 정원 조정(8, 9급 각 1명→ 6, 7급 각 1명, 기능직 5명→ 일반직 5명, 기능 10급 41명→ 기능 9급 41명)
18차 개정	2012.12.28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정원 조정 (기능직 4명→일반직 4명) 정원 432명(2012.12 현재) (본부 318명, 조세심판원 114명) *타 부처 정원(11명) 제외

국정운영의 총괄관리

- 018 제1장 주요 국정협의체 운영
- 054 제2장 국정 핵심 아젠다 추진
- 204 제3장 위기상황의 체계적 관리
- 259 제4장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관리
- 271 제5장 정부 정책홍보기획 기능 강화

1 주요 국정협의체 운영

제1절 국무회의 · 차관회의

1. 국무회의 개요

국무회의는 국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헌법 · 정부조직법 등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88조

-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에서는 헌법개정안, 법률안, 예산안 등 헌법에 정해진 17개 사항(헌법 제89조)과 개별 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 밖에 각 부처에서 정보공유 및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책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를 상정하여 보고한다. 국무회의마다 평균 30건 내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2. 선전 ·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3. 헌법개정안 · 국민투표안 · 조약안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4. 예산안 · 결산 ·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5.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8. 영전수여
- 9. 사면 · 감형과 복권
- 10.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 분석
-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14. 정당해산의 제소
-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16. 검찰총장 · 합동참모의장 · 각군참모총장 · 국립대학교총장 ·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17. 기타 대통령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 국무총리(부의장)와 국무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18명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했으며(대통령, 국무총리, 16명의 국무위원), 그 외에도 대통령실장, 법제처장 등 14명이 배석하도록 했다.

【 국무회의 참석자(2012.10 현재) 】

의결권자 (총18명)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수산물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특임 장관

배석자 (총14명)

대통령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감사원 사무총장,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했으며, 대통령 주재 시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주재 시에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회의의 안건 검토 및 상정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준비 등을 주도함으로써 국무회의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으로 운영되도록 뒷받침했다.

【 국무회의 준비 및 관리절차 】

구분	일시	조치내용
차관회의 개최	전주 목요일	국무회의 안건 사전심의(국무총리실장 주재)
↓		
국무회의 개최	화요일(08:00)	안건 심의·의결(원안·수정 의결, 보류)
↓		
후속조치 관리	수요일	국무총리실에서 부처에 전파하고 관리

2. 차관회의 개요

차관회의는 「국무회의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으며,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은 원칙적으로 차관회의를 먼저 거쳐야 하나, 긴급한 사안이거나 불가피한 경우 차관회의 사전 심의 없이 국무회의에 직접 상정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장인 국무총리실장과 각부 차관 16명으로 차관회의를 구성했으며, 그 외에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법제처 차장 등을 배석자로 했다.

【 차관회의 참석자(2012.5 현재) 】

의결권자 (총17명)

국무총리실장(의장),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외교통상부 차관, 통일부 차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특임 차관

배석자 (총12명)

중소기업청장,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국가과학기술위 상임위원,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서울시 행정제부시장, 감사원 제사무차장, 법제처 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통상교섭조정관

차관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19층 국무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무총리실장은 차관회의 의장으로서 차관회의가 실질적인 정책심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국무총리실은 차관회의의 안건 검토 및 상정, 회의 준비(행안부 협조)를 실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관회의의 기능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했다.

3. 이명박 정부의 국무·차관회의 주요 성과

1) ‘주요 현안토론’을 통한 국정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확산

토론 중심의 국무회의 운영을 위해 2008년 8월부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주제 선정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이 각 수석비서관실 및 각 부처로부터 제안을 받아 선정했으며 선정된 토론 주제에 대해 소관부처 장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국무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러한 현안토론을 통해 참석자 간의 국정철학 이해와 정보·인식 공유는 물론, 국정의 공론화와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 현안토론 주제 선정 예 】

- 물가안정을 위한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대책 (2008.9.2 농식품부)
-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8.9.23 국방부)
- 한글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2008.10.7 문화체육관광부)
- 재정지출 확대방안(비공개) (2008.10.21 기획재정부)
- 내수 활성화 및 소비진작방안 (2008.11.4 기획재정부)
- 관광산업 진흥방안 (2008.11.11, 11.18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고용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8.12.2, 12.23 노동부)
- 국무위원으로서 1년간의 소회 및 개선, 제안사항 (2008.12.30)
- 공공부문 인턴의 효율적 활용방안 (2009.1.6 행정안전부)
- 설 연휴기간 중 정부정책 홍보방안 (2009.1.20 문화체육관광부)
- 국격제고를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 (2010.2.23 국무총리실)
-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2010.4.20 노동부)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향 (2010.6.1 국무총리실)
-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2010.7.6 행안부)
- 지방재정 건전화방안 (2010.7.20 행안부)
-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2011.1.18 복지부)
- 일본 대지진 계기 국가방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2011.3.8 행안부)
-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SNS 활용 확대방안 (2011.4.26 문화부)
- 주5일 수업제 시행계획 (2011.7.12 교과부)
- 한미 FTA 비준동향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방안 (2011.10.18)
- 장시간 근로 현황 및 개선방향 (2012.2.14 고용부)
- 유럽 주요국 신용등급 강등 등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2012.1.17)

- 주5일 수업제 시행 보완대책 및 학교폭력대책 추진상황 (2012.4.3 교과부)
-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식조사 및 홍보방안 (2012.4.17 복지부)
-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2012.5.22 여가부·권익위)
- 정책 마케팅 현황 및 추진방향 (2012.6.5 문화부)

2) 'e-국무회의 시스템' 운영의 성공적 정착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e-국무회의 시스템'을 보다 발전시켜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의안 상정과 관리는 모두 'e-국무회의 시스템'을 통해 운영했다. 또한 'e-국무회의 시스템'을 전 부처가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과 연계시킴으로써 모든 부처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다.

중이 없는 국무회의의 구현으로 연간 약 3억2,000만원에 이르는 인쇄비를 절감했으며, 모든 안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안건 이력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체계화했다.

3) '일하는 정부'에 걸맞는 회의운영 시스템 개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며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개최 원칙을 정착하여 회의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 주재와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균형있게 개최¹⁾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참여정부까지는 국무회의장 테이블을 U자형으로 배치하여 직위순서별로 착석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라운드 테이블로 교체하고 의장석은 한가운데에 배치했다. '일하는 정부'라는 국정철학을 회의 운영을 통해 구현한 것이다. 권위주의를 탈피해 허심탄회한

토론이 가능해지고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보다 활성화되었다.

4) 국무회의의 전심단계로서 차관회의의 실질적 운영

차관회의 역시 각 부처가 상정하는 의안에 대해 이견을 적극 조정하고, 국무총리실장이 차관회의 의장으로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등 회의 운영을 실질화했다. 특히 법령안에 대한 의장의 실질적 검토와 의견제시를 강화했으며, 관계부처 차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차관회의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1) 2008년 1월~2012년 10월 국무회의 중 대통령 주재 128건, 국무총리 주재 128건

제2절 국가정책조정회의

1.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개요

1) 회의 신설 배경

2008년 초 금융위기 등으로 서민생활에 주름이 깊어지고, 독도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잇따랐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내 소통과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는 국정기조에 따른 정부정책을 조율하고 국정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관급 논의기구로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운영²⁾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08.7.24)

2) 회의체의 기능과 구성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내각의 최고정책조정기구(Control Tower)이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통할·감독 기능 수행, 범정부적 중요 국책사업 및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 국가전략 차원에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참석한다. 정책관련 재정지원, 조직 및 인력활용, 국정홍보 등의 협력을 위

2)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운영('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현안 대응 필요에 의해 '국가정책조정회의' 신설, 「국가정책조정회의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21호, 2008.7.23 제정)

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회의에 상시적으로 참석토록 하고 있다. 의장인 국무총리 보좌와 안전 후속조치 등을 위해 국무총리실장과 국무·사무차장도 참석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내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및 안전 관련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구성】

의 장	국무총리
구성원	기획재정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전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국무총리실장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전 관련 수석비서관
	* 필요 시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회의 참석·발언 가능(예 : 규제개혁위원장)

3) 운영 방식과 성과

가. 운영 방식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부처 간 이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각종 사회적 이슈나 갈등 사안에 대해 정부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에 총리실이나 정책 추진 주무부처에서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에 보고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개최되고 있다.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각 부처 안전보고, 토론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2~3건의 안건이 논의된다. 2008년 7월 첫 회의 이후 매년 3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2012년 11월 말 현재 총 133회에 걸쳐 403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회의 결과는 「국가정책조정회의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반기별로 국가정책조정회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국무총리실 각 정책관실을 통해 점검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행상황 점검·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후속조치가 미흡할 경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논의하여 보완·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진행 모습

2.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평가

1) 연도별 회의 운영 실적

가. 2008년 회의 개최 내용

2008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후 13회에 걸쳐 사회갈등 예방, 독도영토관리, 국가 안보 및 국민안전 관리 등 40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① 핵심 국정 기조 추진방향 논의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국정 핵심 운영 기조로 천명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한미 FTA 국회비준 대책(2008.10),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현황(2008.10),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2008.11) 등이 논의되었다.

② 사회적 이슈·계기성 과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2008년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불거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한 달이 넘게 시위가 발생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 확산, 제주 해군기지 등 당면 현안·갈등 사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 강구가 시급히 요청되었다.

사회갈등 예방 및 대응(2008.7), 독도 영토관리 대책(2008.8),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 대응(2008.8),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2008.9),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2008.11) 등이 논의되었다.

③ 정책 갈등 해결 지원 등 당면현안 논의

쌀직불금 제도개선 방안(2008.10), 사이버 폭력 방지 제도개선(2008.10), 방학 중 아동급식 대책(2008.12) 등 당면현안과 멜라민 검출 관련 대책 마련(2008.9), 방사성 폐기물 관리방안(2008.9) 등 국민 건강·안전 관리 관련 안건, 주한미군기지 이전(2008.11), 경인운하 추진(2008.12) 등 주요 정책 갈등 해결 안건도 논의되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제1차(2008.7.24)~제35차(2009.9.25)



나. 2009년 회의 개최 내용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는 2009년 우리 경제의 수출과 내부의 동반 침체를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 및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총 30회, 8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① 핵심 국정 기조 추진방향 논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제36차(2009.10.9)~제66차(2010.7.30)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위기 대응 범정부 고용대책(2009.1), 청년 고용 대책 및 일자리 나누기 방안(2009.2), 민생안정지원체계 점검(2009.2), 영세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대책(2009.4) 등이 논의되었다.

② 사회적 이슈·계기성 과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하반기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 고령화 심화에 따라 여성·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및 출산장려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5차례나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대책(2009.6), 석면관리 종합대책(2009.7), 안전제도 개선(2009.12)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대책도 협의·조정되었다. 그리고 여성 일자리 대책(2009.5), 50+세대 일자리 대책(2009.7), 저출산 대응전략(2009.12)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노력했다.

다. 2010년 회의 개최 내용

2010년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친서민정책의 확산과 정착에 중점을 두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한 결과, 총 28회, 78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① 핵심 국정 기조 추진방향 논의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법질서 준수·시민의식·개방성 등 사회의 질적 부문이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범정부 차원의 '국격제고 추진 TF'를 구성하여 과제를 발굴·추진했다(2010.2).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개선에 크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공부문의 인사운용이나 자격증 취득과정에서의 각종 학력규제를 폐지하여 학력이 없어도 누구나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자 규제를 개선했다(2010.4).



김황식 국무총리가 첫 번째로 주재한 제67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0.10.8)

② 사회적 이슈 · 계기성 과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실업률이 개선되고 추가지수도 꾸준히 상승했지만, 부의 집중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대기업 · 수출기업의 성장이 중산층과 서민에까지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을 사전에 발굴 · 수립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서민정책 개선 보완방안(2010.10), 친서민 중점과제 추진계획(2010.12)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체감효과를 제고했다. 그 밖에도 해외취업 활성화방안(2010.6), 외국인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2010.7), 국제결혼 건전화방안(2010.10),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2010.12) 등 주요 현안도 상정되어 대책이 마련되었다.

라. 2011년 회의 개최 내용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대두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문제 및 청년실업 증가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과제도 논의되었다.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아 공정경쟁, 대 · 중소기업 상생 등 공정사회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및 실천과제를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일자리 · 교육 · 고령화 · 보육 · 주거 · 녹색성장 등 총 31회, 93건의 안건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되었다.

① 핵심 국정 기조 추진방향 논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실 중점 추진과제였던 ‘공정사회 구현’ 과 ‘건강사회 만들기’ 과제를 착실히 추진했다. 특히 추진체계 구축 등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8대 중점과제와 80개 실천과제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정한 사회 추진계획(2011.1), 공정한 사회 추진과제 실행계획(2011.3),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확산 계획(2011.5), 가맹 · 유통 분야 공정경쟁 환경조성(2011.9),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2011.9), 교육희망사다리 구축방안(2011.11),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2011.11) 등이 논의되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사회병리현상 해소를 위한 ‘건강한 사회’ 12대 과제도 국무총리 아젠다로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입양제도 선진화(2011.5), 자살예방 대책(2011.6), 학교폭력 근절(2011.7), 마약퇴치(2011.9), 가출 · 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2011.10) 등 전체 12개 과제 가운데 9개 과제가 상정되어 대책을 마련했다.

② 사회적 이슈 · 계기성 과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2011년에는 유난히 대형재해가 잦았다.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7월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9월 대규모 정전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또한 2010년 하반기 경복을 중심으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축 매몰과 물가상승, 매몰지 관리 등 2차 피해도 크게 나타났다.

일본 방사능 누출에 따른 대국민 영향 및 대책(2011.3)과 일본 원전사고 대응현황(2011.4), 국가주요시설 지진방재실태 점검(2011.6),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방향(2011.11) 등이 논의되어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본산 수산물 ·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즉각적으로 결정되어 발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③ 국민의 건강 · 안전 관리 강화

중부권 호우 복구대책(2011.7),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체계 점검(2011.11),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2011.5),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2011.10),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2011.10)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기준을 높이고 점검을 실시하였다.

마. 2012년 회의 개최 내용

2012년은 집권 5년차로서 ‘일하는 정부’ 기조하에, 국정성과 가시화와 핵심과제 마무리를 위해 부처 이견 과제 조정 및 실천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 ‘공정한 사회’, ‘친서민정책’, ‘일자리 창출’ 과제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11월말 현재 총 31회, 10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① 핵심 국정 기조 추진방향 논의

‘공정한 사회’ 과제로는 북한이탈주민 희망 프로젝트(2012.2), 공공조달 · 국방조달의 공정성 제고(2012.4), 농산물 유통구조개선(2012.6), 불공정 약관정비(2012.9) 등이 논의되었고, ‘친서민정책’ 으로는 소상공인 ·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2012.2),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2012.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012.6), 휴대전화 민원해소(2012.10) 등이 상정되었다. ‘일자리 창출’ 과제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활성화방안(2012.5),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2012.7) 등이 상정되었다.

② 사회적 이슈 · 계기성 과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임기 내 마무리 과제인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2012.2), 복지정보통합관리망 구축(2012.7), 국

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2010.2.9),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2012.10) 등에 대해 임기 중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했다. 약가제도 개편(2012.2), 제주 해군기지(2012.2) 등 주요 갈등현안을 상정하여 이견을 조정했다.

③ 사회 현안 점검·평가

또한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서민생활, 복지 등 관련 주요 정책현안과 구조적·잠재적 정책문제에 대한 현장중심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륜자동차 제도 분석(2012.2), 신고 포상금 제도실태 분석(2012.3), 건강기능식품 관리실태 분석(2012.4), 민간 응급이송체계 분석(2012.5),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2012.7), 귀농귀촌 지원실태 분석(2012.11) 등이 상정되어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2) 주요 성과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지난 5년 동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시에 마련하는 등 내각의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첫째, 국정현안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과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는 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 공정사회, 동반성장 등 국정 아젠다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셋째,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수립과 함께 사전 예방체계 구축 등 갈등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넷째,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재해 관리대책을 강화했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래 대비 과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요 정책과 당면현안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주요 성과】

- 국정현안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경제위기 대응 고용대책(2009.1), 독도 대책(2008.7 등 2회),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2009.4), 지역발전정책(2008.11), 교육비리대책(2010.7) 등
- 핵심 국정 아젠다의 추진방향 구체화
 - 공정사회 교육희망사다리구축(2011.11), 공정병역(2011.11), 일을 통한 공정사회(2011.12) 등

- 친서민 비정규직법 보완(2009.1), 여성 일자리 대책(2009.5), 외국인 근로자 기본권의 보호(2011.11), 취약계층 공직진출 지원 확대(2011.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2011.11) 등
- 주요 정책 갈등 해결 지원
 - 사회갈등 예방 및 대응방안(2008.7 등 3회), 원전부지 확보방안(2008.9),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 갈등해소(2010.7),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2012.2) 등
 - 주한미군기지 이전(2008.11), 경인운하 추진(2008.12), 용산화재사고 대책(2009.1),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개선(2009.7), 쌍용차 파업(2009.8), 대중소 유통 갈등해소(2009.9) 등
- 국민 건강·안전 관리
 - 신종플루 대책(2009.7 등 5회), AI 방역대책(2009.10), 석면관리 종합대책(2009.10), 구제역 대책(2010.5 등 6회), 일본 방사능 누출에 따른 대국민 영향 및 대책(2011.3 등 5회), 국가주요시설 지진방재실태 점검(2011.6),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2012.3 등 2회),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012.1), 약가제도 개편의 효율적 추진(2012.2),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2012.7) 등
 - 가뭄대책(2009.1), 폭설·한파 대책(2010.1),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2010.7), 겨울철 안전관리(2010.12), 중부권 호우 복구대책(2011.7), 폭설대책(2011.2) 등
- 미래 대비·사회 현안 점검·평가
 - 공무원 연금개혁(2008.10), 저출산·고령화 대책(2009.12 등 6회), 신성장동력 점검과 향후 정책과제(2011.4), 베이비붐 세대 고령사회 대책(2011.10),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2012.8) 등
 - 경제자유구역 운영실태(2009.11),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실태(2009.12) 지자체 경전철 사업 평가(2011.3), 기부식품 제공사업 평가(2011.6), 신고포상금 제도 분석(2012.3),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2012.7) 등

3. 국가정책조정회의의 향후 운영방향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최고위급 국가정책조정기구로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전문적인 판단과 현장 의견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학계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토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 기회를 부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의견 청취, 이해관계인 회의 참석 등을 통해 현장성을 제고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방안이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논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사회·건강사회 과제 등 국민 참여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조치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처의 추진상황 점검·관리 기능 강화와 함께 국무총리실 정책관실 및 정책분석평가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이 요구된다.

하고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입전형료 인하 및 단계별 전형료 적용 등 전형료 합리화를 추진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입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면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당일 오후 국무총리는 보금자리주택 건설현장(강남구 세곡동)을 방문하여 현장근로자,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저임금, 임금체불, 고용불안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 근로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표방하는 공생발전의 취지와 건설근로자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다. 제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2011.10.28)

2011년 10월 2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대책 보완방안, 대입전형료 부담 완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우선돌봄 차상위 35만가구를 신규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실직, 휴·폐업, 출소 및 노숙을 위기사유로 추가 지정하여 긴급 지원키로 했으며,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등 3만1,000가구에 난방유(200l)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고, 무료급식단체에 대한 양곡 할인지원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비하여 고령사회 대책 보완을 위해 임금피크제 요건 완화, 점진 퇴직제 도입 등 민간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숙련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상생형 일자리 발굴·확대,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대입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대입전형료 인하 및 단계별 전형료 적용 등 전형료 합리화를 추진하고,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대입전형료 면제 또는 감면을 확대하며, 대입전형료 환불제도 등을 위한 법령 제·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회의 당일 오후 국무총리는 중랑구에 위치한 경로당(망우본동)을 방문하여 동절기 대책과 경로당 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라.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2011.12.9)

2011년 12월 9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 방안,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 방안으로 응급환자 신고접수, 현장출동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1339(복지부)를 119(소방방재청)로 통합하고, 방재청 내 구조구급 총괄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위해성 재평가, 사각지대제품 등에 대한 종합대응, 안전관리 공통기준 개선, 의약외품 추가지정, 가습기 살균제 추가실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지난 10



심폐소생술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월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장애인 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배제,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확대 설치,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회의 당일 오후 국무총리는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체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월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장애인 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배제,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확대 설치,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회의 당일 오후 국무총리는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체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마.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2012.2.3)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서민생활 밀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방안, 대학등록금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민생활 밀집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불공정약관, 불법다단계, 가맹점 창업자 피해 등 3대 서민생활 밀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 1만개 육성, 사업조정지원센터 설치(2012.2), 법정대표단체로 소상공인연합회 육성(2012.7 법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준수 여부 모니터링,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완화지수’ 반영, 대학재정수입 다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제공 절차 등을 세부 규정하는 일반법(안)을 제정키로 하고, 1단계로 11개 부처의 198개 사업 시스템 연계를 금년 8월에 완료키로 했다.

바. 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2012.3.30)

제6차 회의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 분석·평가,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을 위해 성과평가, 예산 심의 등을 통해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포상금 신고범위를 명확화·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신고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전문신고자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고령층, 취약지역 등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문화향유 지원, 문화·여행·체육바우처를 통합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 제7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2012.5.11)

제7차 회의에서는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추진계획, 대입전형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독거노인 120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공동생활가정 등 사회적 가족 구성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전수조사 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소득지원 및 건강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해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국무총리

흔레비용 실태조사, 민관 협력 국민인식 캠페인 전개, 공직사회 건전 흔레문화 선도, 공공시설 예식장으로 개방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대입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립대 대입전형료 5% 이상 인하, 사립대도 국립대 수준 인하 유도, 전형료 환불 법적 근거 마련방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회의 당일 오전 국무총리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독거노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독거노인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가정의 달 5월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덜 느끼도록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아.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2012.6.15)



서민정책 유공자 포상

제8차 회의에서는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 하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를 위해 결핵 취약계층 90만명에 대한 결핵검진 실시, 전국 보건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의심자’ 정보 통보, 학교에서 결핵환자 발생 시 학급 및 기숙시설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역학조사 실시, 결핵조기 치료를 위한 결핵진단법,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의 보험 급여화, 결핵환자 입원병실 확대, 결핵 치료 회피 시 제재수단 강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하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자연재해 대응체계 점검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응 강화, 방학 중 아동급식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아동보호 강화, 독거노인·노숙인 등 후서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식중독·감염병 등 여름철 건강 위협요인 예방 강화,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등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당일 오전 국무총리는 서민생활 안정에 공로가 큰 민간인과 공무원 22명에게 훈장 등 서민정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제9차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 하절기 서민대책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발표 및 점검 등을 논의했다. 하절기 서민대책 현장점검을 토대로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업무 효율화를 위해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식재료 조달시스템 개선(전자조달 등록업체 관리 및 시설기준 강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위반업체 정보 공유),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 강화, 우수업체 확산 유도, 학교급식 환경개선(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식품알레르기 민감 학생 보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자. 제9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개최(2012.8.31)

제9차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 하절기 서민대책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발표 및 점검 등을 논의했다. 하절기 서민대책 현장점검을 토대로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업무 효율화를 위해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식재료 조달시스템 개선(전자조달 등록업체 관리 및 시설기준 강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위반업체 정보 공유),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 강화, 우수업체 확산 유도, 학교급식 환경개선(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식품알레르기 민감 학생 보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차. 제10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개최(2012.10.19)

제10차 회의에서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방안, 휴대전화 민원 해소 종합대책 추진상황,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방안 등을 발표 및 점검했다. 정부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식품만을 취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누·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식품과 물품도 푸드뱅크에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휴대전화 민원해소를 위해 6월 22일 발표했던 「휴대전화 민원해소관련 종합대책」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휴대전화 민원해소 종합대책 시행으로 휴대전화 민원이 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관성적으로 존재하던 4개 분야 551건의 연령규제사례 중 529건(486건 폐지, 43건 완화), 11만7,000개의 일자리 연령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 직후 영등포구 푸드마켓 2호점과 이동식 푸드마켓(영등포구 당산1동) 사업현장을 차례로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기부식품을 전달했다.

2) 서민정책 중점과제 관리

정부는 서민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성과 도출을 위해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 과제, 주요 분야별·계층별 서민대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와 부합하며 서민층의 정책체감도가 크게 기대되는 과제, 임기 내 실현가능한 과제를 발굴해서 중점과제 중심으로 15개 분야 55개 과제를 선정했다.

【중점과제 목록】

- ①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분야(4개 과제) -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료 수납방식(분납·선납 등) 개선 등
- ② 아동·청소년 분야(4개 과제) - 빈곤아동·청소년 돌봄체제 연계 강화, 보호사각지대 어린이 안전 등
- ③ 교육 분야(4개 과제) -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대입전형료 제도 개선 등
- ④ 주거 분야(6개 과제) - 전세시장 안정, 비주택거주자(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보호 등
- ⑤ 의료 분야(4개 과제) -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고액재산보유자 제외 등 피부양자제도 합리화 등) 개선 등
- ⑥ 문화생활 분야(2개 과제) -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 지원
- ⑦ 일자리 창출 분야(3개 과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공공기관 진출확대 등
- ⑧ 임금 및 근로여건 분야(3개 과제) - 불공정 임금지불 제도·관행 개선 등
- 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2개 과제) -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강화 등
- ⑩ 사회적기업 분야(3개 과제) -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활성화 등

- ⑪ 일과 연계한 복지(4개 과제) - 기초수급자 탈수급 촉진 등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기초수급자 현금급여 계좌 압류 방지 방안 마련 등
- ⑫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강화(3개 과제) - 부처 간 복지정보 연계체계,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
- ⑬ 기부·나눔 인프라 확충(4개 과제) - 기부·나눔관련 법·제도 개선, 기부금 사용 투명성 제고 등
- ⑭ 서민금융 분야(4개 과제) - 금융접근 기회 확대 및 비용 경감, 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제도 개선 등
- ⑮ 서민 애로해소 및 생활비 부담 경감(5개 과제) - 상조업 피해예방,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 및 비용 절감 등

2012년에는 4개 분야 55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로 현장점검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서민 생활대책점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핵심 서민정책을 마무리하고, 분야별 서민대책 및 취약계층별 대책을 점검·보완하며, 서민층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계기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 ① 핵심 서민정책 마무리(17개 과제) - 유아교육·보육(누리과정 등), 서민금융(미소금융 등), 주택(보금자리주택 등), 대학생 부담경감(든든학자금 등), 열린고용(선 취업·후 진학) 등 5대 서민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역점
- ② 분야별 서민대책 점검·보완(18개 과제) -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서민층 생계비 부담 경감, 서민층 의료서비스 향상, 복지전달체계 개선, 기부·나눔문화 확산 등 서민생활 직결과제의 성공적 정착
- ③ 취약계층별 대책 점검·보완(13개 과제)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대책,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대책, 노인대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대책의 성과제고 및 보완
- ④ 서민층 법적보호 강화 및 계기별 대책 수립(7개 과제) -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의무 이행, 동절기 서민대책 등 관련 서민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3) 계기별 서민정책 발굴

서민·취약계층의 경우 여름·겨울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건강·생계 등이 위협에 노출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2011년부터는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동절기 및 하절기 대책을 확정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동절기에 서민·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범부처적으로 동절기 대책을 수립해왔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방학 중 아동 돌봄 및 급식 지원, 폭설 등 재난예방, 서민물가 안정,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했다.

하절기에는 예상되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중앙·지방·민간이 긴밀히 협력·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여름방학 아동안전, 여름철 피서지 안전강화, 여름철 날씨 안전, 여름철 생활안전 등 서민생활 안전 등을 중점 추진했다. 정부가 수립한 동·하절기 대책이 현장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

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지역이나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시정 조치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가. 2008년 동절기 대책

2008년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11.20)에서 관계부처(복지부·노동부·교과부·행안부·국무총리실) 합동으로 동절기 대책을 확정했다. 2008년 절감예산 적극 활용 및 2009년 예산 조기 집행으로 대책 효과를 제고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교육복지 강화, 취약근로자 취업지원 강화 및 고용안정, 동절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 등 추진하며, 국무총리실 내 「사회안전망 점검 및 개선 TF(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구성·운영하여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일용직 인력알선현장 방문

특히 1차 점검(11.20~12.8)을 통해 차상위 계층 양극화인 지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동절기 지역노인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등을 보완토록 했고, 2차 점검(12.8~22)을 통해 노숙인 대책,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지도 등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일용직 인력알선현장(서울시 남구로역, 11.19)과 노인요양시설을 방문(11.26)하여 동절기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나. 2009년 동절기 대책

2009년에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동절기 생활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12.2~11)하고, 점검 결과를 국가정책조정회의(2010.1.8)에 보고했다. 특히 노숙인 결핵예방을 위한 격리치료시설 확보 및 의료지원 강화, 아동급식 급식방법 다원화 등 구체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 2010년 동절기 대책

2010년에는 국무회의(11.30)에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위기가구·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중앙과 지방의 공동노력과 협조 강화, 신규 사업은 불용예산 활용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기로 했고, 응급구호용 쪽방 및 특별자활사업 확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화재안전상태 점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1월),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등을 중점 추진기로 했다. 아울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동절기 대책 및 주요 서민정책 시행현장을 점검

(12.13~24)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점검결과를 보고(2011.1.14)했다.

라. 2011년 하·동절기 대책

2011년에는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7.8)에 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여름철 위험요인별 맞춤형 대책 추진, 현장점검 위주의 사전적 예방활동, 지자체·민간과의 협조 강화에 역점을 두고 아동급식, 취약계층, 식중독·감염병, 자연재해(장마·태풍, 폭염), 물놀이·교통사고 대응 강화,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중점 추진했다. 특히 방학 중 아동급식, 독거노인, 노숙인·쪽방, 식품안전 및 감염병 피서지 물가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현장점검을 실시(7.25~8.12)하여 기상이변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 방학 중 아동급식 인프라 지속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0.28)에서 보고했다. 동절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강화 및 나눔문화 활성화, 동절기 서민물가 안정 및 재해안전 강화를 역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취약가구를 발굴(행복e음 활용)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교·각종 돌봄교실 운영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주거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절기 서민·취약계층 생활실태, 분야별 대책 추진현황, 서비스 전달체계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2011.11.30~2012.1.11)하고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 결과를 보고(2012.3.30)했다. 점검을 통해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상시 지원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 지원 강화,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확대,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조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마. 2012년 하절기 대책

2012년에는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6.15)에 하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범정부적 신속대응체계 구축,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 지자체 역할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장마·태풍, 폭염), 아동돌봄, 취약계층(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식중독·감염병, 물놀이·교통사고 등 위험요인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4. 서민생활대책의 추진성과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인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서민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

특히 서민정책 중점과제 관리, 동절기 대책 등을 회의체에서 논의하여 서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했다.

1) 서민부담 완화

대학등록금 및 대학생 주거지원, 대입전형료 제도개선, 미소금융 도입 등을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서민부담을 완화했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설(2008), 4년제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신설(2009),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2011) 등 다양한 국가장학사업을 추진했다. 대입전형료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의 자발적인 대입전형료 인하를 유도하여 2007년에 10.9% 증가했던 전형료가 2012년에는 1.9%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7,722호(매입 579, 전세 7,143)의 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기숙사비가 평균 10만원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2008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미소금융 총 10만6,639건 5,754억원을 지원하여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했다.

2) 서민 주거생활 안정

보금자리주택 도입, 전월세시장 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다세대·다가구·도시형주택을 2009년 2만6,000호에서 2011년 10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공급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 활성화,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 전세자금지원 확대, 전월세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했다.

3) 일을 통한 복지 실현

비정규직 종합대책,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연평균 3조867억원을 편성, 지난 4년간 연평균 59만 7,000명, 총 238만9,000명을 지원했다. 또한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패키지 지원 서비스를 실시해 10만여 명이 참여한 결과, 참여자 취업률이 2009년 54.1%에서 2011년 65.2%로 증가했다.

4)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

건설노무자 불공정임금 개선,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강화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건설노무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2011.11.28)하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1.11.28)했다.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산재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2012.5.1 시행)했으며, 실업급여 적용(고용보험 가입 제도 시행, 2012.1.22)을 추진했다.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예산 증액(2002~2007년 7,163억원→2008~2012년 1조428억원), 온누리상품권 신설(2009) 및 판매 확대(2009년 104억원→2011년 10월 2,224억원)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했다.

5) 계기별·계절적 상황에 맞춘 서민대책 발굴

동절기·하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통해 위기가구, 노숙인·주거취약계층, 독거노인 생활안정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지원제도 예산을 확대(2008년 337억원→2012년 589억원)하여 위기가구(46만가구)에 한시 생계비를 지원(2009.5.11~12.15, 4,942억원)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를 확대(2007년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2011년 고시원·여인숙·노숙인쉼터 및 부랑인시설 거주자)하여 주거지원이 확대(2007년 5,173호→2011년 4만9,196호)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를 시행(2008년~)해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2012년 7만가구 구축)하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2011년 중앙 1개소)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6) 새로운 제도적 기반 마련

기초수급자 탈수급 촉진, 사회보험 가입확대, 취약계층 공직진출 확대 등 새로운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험지원을 늘려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2~1/3을 지원(2012.7)했다. 아울러 탈수급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확대(행정인턴 10% 신규, 장애인 30%→50%),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지원(2010),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프로젝트 등(탈수급률 2007년 6.3%→2010년 9.0%)을 적극 추진했다. 취약계층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7·9급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국가직, 2009년 6.5%→2011년 6.7%), 9급·기능직 채용 시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확대(2009년 54명→2012년 280명 예정)했다.

7) 기부 및 나눔 문화 정착

기부·나눔 활성화 방안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영역을 확대했다.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국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참여율이 증가(기부금 규모가 2007년 8조7,500억원→2011년 10조300억원으로 약 15% 증가)했다. 또한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

여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2010.6)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여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5. 서민생활대책에 대한 평가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는 범정부 차원으로 서민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서민정책 추진역량을 결집시키고자 노력했다. 글로벌 경제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기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했고,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각 부처, 지자체,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 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탈수급을 유도하는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적극 추진해왔고, 누리과정, 국가장학사업 등을 통해 서민층의 소득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발생을 최소화했다. 저렴한(주변시세 대비 50~85%) 보금자리 주택 공급,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추진, 전세자금 이자경감 등을 통해 집값 안정 및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했으며, 미소금융, 신용회복지원 등을 통해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고와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범정부 차원의 서민정책 추진으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고,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쌓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민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서민생활대책 추진상 애로사항

정부의 적극적인 서민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 여건의 한계, 서민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치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서민정책 추진성과와 노력을 국무총리 주재 회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국무총리 현장방문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홍보효과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도 발생했다.

서민정책 과제 대다수가 다수 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므로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차원으로 수립한 서민정책이 현장에서 착근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앙-지방-민간부문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 향후 개선방향

대부분의 서민정책이 다수 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부처 간 협의·조정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민정책 수립과 집행 시 관계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관계부처가 서민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서민정책을 정부지원방식으로 추진·해결하는 것은 정부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 및 민간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서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와 함께 정책수혜자인 국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서민정책에 대한 불만·미흡요인을 발굴하여 즉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민정책이 일선에서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은 제도개선 등 수시로 보완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는 등 서민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서민정책의 내용을 소개·안내하여 서민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략홍보와 사례 중심의 쌍방향적인 소통창구를 통해 고객 지향적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 개최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차 (201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퀵서비스 기사 근무여건 개선방안(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 비주택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국토부) ■ 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국무총리실) ■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운영계획(국무총리실)
2차 (2011.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고용부, 국토부) ■ 대입전형료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교과부)
3차 (2011.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국무총리실) ■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대책 보완방안(국무총리실) ■ 대입전형료 부담 완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교과부)
4차 (201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국무총리실) ■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방안(국무총리실) ■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지경부)
5차 (20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생활 밀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공정위) ■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방안(중기청) ■ 대학등록금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교과부)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복지부) ■ 2012년도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운영계획(국무총리실)
6차 (2012.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포상금제도 분석·평가(국무총리실) ■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지원방안(문화부)
7차 (2012.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복지부) ■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추진계획(여가부) ■ 대입전형료 부담 완화방안(교과부) ■ 5월 가정의 달 계기 가족가치 제고방안(여가부)
8차 (2012.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복지부) ■ 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국무총리실)
9차 (2012.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완화방안(복지부)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교과부) ■ 하절기 서민대책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국무총리실)
10차 (2012.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추진현황(복지부) ■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방안(복지부) ■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방안(국무총리실) ■ 휴대전화 민원해소 종합대책 추진상황(국무총리실)

제4절 고위당정협의회

1. 고위당정협의회의 의의

‘고위당정협의회’는 행정부가 마련한 법률안, 대통령령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해 여당과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당정간 정책협의와 조정을 통한 정부정책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고위당정협의회 및 부처별 당정협의회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참여정부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고위당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을 2008년 3월 18일 개정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 여당에서는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소장, 정책위부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안건 관련 상임위원장 및 정조위원장, 당대변인, 원내공보부대표,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관계 부처장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장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장, 정부수석비서관, 관련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이처럼 ‘고위당정협의회’는 정부 주요정책 등 당정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정부·여당 간 최고위급 협의체라 할 수 있다.

‘고위당정협의회’의 개최계획은 여당, 청와대, 관계부처의 요청이나 국무총리실 자체에서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여당, 청와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보통 국무총리공관이나 국회에서 개최한다. 회의 개최결과는 여당 대변인이 국무총리실장과 협의한 후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고위당정협의회는 2008년 12회, 2009년 8회, 2010년 3회, 2011년 5회, 2012년 8월 현재 2회를 개최했다.

2. 이명박 정부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현황(2008.2~2012.12)

1) 2008년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현황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는 고위당정협의회가 12회 개최되었다.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는 4월 임시국회 추진 주요 법안 및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긴밀히 당정간 협력을 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정이 서로 협조하는 체제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2008년 4월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렸고, 한승수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대책, 한미 FTA 국내 보완 대책,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등 학생 성폭력 관련 대책, 어린이 지키기 종합대책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및 경제살리기 대책 등을 논의했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민생을 위한 고유가 극복대책을 발표했다. 유류비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근로자와 자영업자, 버스나 화물차 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및 농어민, 소형 화물차 소유자 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결정했다. 제5차 협의회에서는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논의했고, 제6차 협의회에서는 쇠고기 후속조치 및 고시내용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건국 6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제8차 협의회에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관련 대책과 독도 수호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제9차 협의회에서는 세계개편안의 방향 설정에 대해 협의했다.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금융시장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당정이 함께 논의했다.

제11차 협의회에서는 2008년 정기국회 정부중점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2008년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인 제12차 협의회에서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추진과 함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차상위 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점검 및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2008년도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현황 】

일자	장소	안건
4.18(금)	국무총리 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임시국회 추진 주요법안 및 한미 FTA 비준 동의안
5.6(화)	국회 귀빈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대책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 등 학생 성폭력 관련대책 어린이 지키기 종합대책
6.3(화)	국무총리 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경제동향 및 경제 살리기 대책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조기추진 대책
6.8(일)	국무총리 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6.21(토)	국무총리 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쇠고기 협상 결과 보고

의했다.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절한 투자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하여 동해와 서해지역에 한미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고, 대북지원에 있어서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지역의 취약계층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10년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현황 】

일자	장소	안건
2.3(수)	국회 귀빈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경제동향 및 대책 ■ 최근 북한 동향 및 대책 ■ 2월 임시국회 통과 필요 중점법안
3.22(월)	국무총리 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정부 중점법안 추진계획 ■ 자영업자 등의 법정교육 제도 합리화 방안
6.23(수)	국무총리 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 천안함 사태 대응조치 ■ 남북경협 관련 대책방향 ■ SSM 관련 대응방향 ■ 기타

4) 2011년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현황

2011년도에는 5차례의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 측의 한·EU,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반기 처리요청에 대해 당정은 비준 동의안 처리 방식과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도출하기로 하면서, 당에서는 한·EU,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정부의 대국민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정부에서 선정한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 56건의 조속한 처리 요청에 대해 당은 특임장관과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의 구제역·AI 발생 및 조치 상황 보고에 대해 당은 정부의 초동 대처 미흡을 지적하고 살처분 매물의 경우 침출수 유출 등 2~3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측의 면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축산인들의 예방의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당도 정부와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에 동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및 대학구조조정 병행 문제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제도, 4대 보험제도 등을 비롯한 여러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대상과 규모를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2011.1.27)

직 대책 보고가 미흡하다는 당의 지적에 따라 추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당과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제반예산과 법규정비를 요청하는 정부의 보고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한편, 금번 집중호우가 평년보다 많았지만 수해피해 내역이 줄어든 것은 4대강 공사 때문이므로 그 점에 대해 자료의 제시와 함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논의와 함께, 하반기 경제운용에 물가안정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에 민생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기 위해 당의 정책위의장과 정부의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근무를 2단계로 강화하였다. 향후 산사태·급경사 등 위험지역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재해복구예산 조기집행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상기후변화를 반영한 단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사표방지를 위한 대책, 단체관람객 지원방안과 대회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제4차 회의에서는 2011년 세계개편안과 관련하여 당정은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감세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5차 회의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안을 처리하는 문제, 농어업·축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분야에 대한 보전책을 검토하고, 특히 한미 FTA로 피해가 큰 농어업·축산업 분야를 선진 강국형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미 FTA로 인한 효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특히 일반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 2011년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현황 】

일자	장소	안건
1.27(목)	국무총리 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 정부중점법안 및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통과대책 ■ 한미, 한·EU FTA 비준동의안 ■ 구제역, AI 발생동향 및 방역대책 ■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검토안
7.21(목)	국회 귀빈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 일자리 및 비정규직 대책 ■ 호우 피해복구 및 수해대책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등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계획

일자	장소	안건
7.28(목)	대구 스타디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등 집중호우 피해현황 및 대책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방안
9.7(목)	국회 귀빈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세계개편안
10.21(금)	국회 귀빈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비준동향 및 대응방향 ■ 한미 FTA 이행법령 제·개정 및 보완대책 추진현황

5) 2012년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현황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2012.8.30)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당의 정치적 상황 및 여당 지도부의 여건으로 인해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 총 2회 개최되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 처음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영유아 보육비와 관련하여 만 0~2세 보육비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속한 협의를 거쳐 올해분 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여 부모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기로 결정했고, 만 0~5세 양육

수당에 대해서는 당,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여 당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공항 지분매각 문제,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정책과 노인빈곤 대책문제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최근 소위 ‘묻지마’ 범죄, 성폭력 등 범죄 발생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당정 간에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회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당정 간 긴밀한 협의하에 대책 이행에 필요한 법률개정과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묻지마’ 범죄,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생치안 강화와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 재소자 및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태풍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대책’ 관련해서 당정은 태풍 피해 복구·지원을 위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의 경우 특별재

난지역을 최대한 신속히 지정하기로 했으며, 관계부처 장관 등 공무원들의 현황 파악 등 현장 확인을 통한 피해복구·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2012년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현황 】

일자	장소	안건
7.17(화)	국회 귀빈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경제상황 보고 및 대책 ■ 당 총선공약 실천 관련 예산반영 ■ 주요 현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지원 문제 - 노인빈곤 문제 해결방안 - 부동산거래 정상화 대책 및 하우스푸어 문제 해소방안 - 서민금융대책 - 주요 국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지분매각 문제 • KTX 경쟁체제도입 문제
8.30(목)	국무총리 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안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관련 ■ 태풍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대책

2 국정 핵심 아젠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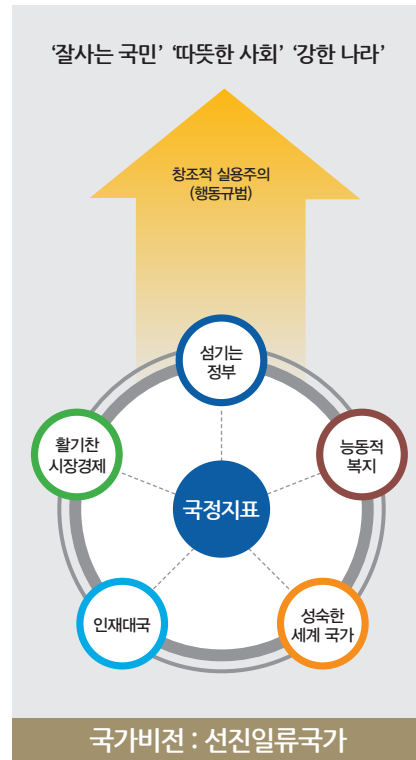
제1절 100대 국정과제 관리

매 정부는 정권 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1.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개요 및 변천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을 종합 정리하여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5대 국정지표와 193개 국정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10월 그간 정책수요 등을 종합 반영하여 「5대 국정지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후 매년 부처 업무보고, 대통령 신년사, 8·15 경축사 후속조치 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리해오다, 2011년 6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계별로 세분화된 세부실천과제를 통폐합하는 등 과제를 재정비했다. 또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중심의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국정과제 기본 틀

- 5대 국정지표 :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운영 방향
- 20대 국정전략 : 국정운영 방향의 실현을 위한 전략
- 지표별 4개 국정전략 수립
- 100대 국정과제 : 국정전략의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 전략별 5대 국정과제 수립
- 세부실천과제 :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Action Plan



2. 국정과제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체계 개선

2008년 개통된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세부실천과제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과제개요, 추진 상황 및 매월 점검결과 등 모든 이력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세부실천과제는 추진상황에 따라 정상추진, 지연, 일부지연, 완료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해왔으며, 각 부처는 매월 자체점검보고서를 등록하고, 국무총리실 점검담당자가 추진실적 및 점검내용을 확인하는 체계를 2010년까지 유지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분기별로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과제완료 시 국정과제점검협의회 및 국무회의의 완료승인을 얻은 후 성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정과제를 관리하면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우선 몇몇 세부실천과제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과제명을 사용하여 정확한 과제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며, 지나치게 과제를 세분화하여 일부과제가 중복 추진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관리방식에 있어서는 과제의 목적달성 여부 판단을 일정대로 추진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성과 및 효과에 대한 평가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점검상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점검대상이 지나치게 많아 문서 위주로 점검하게 되는 현행 방식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 정책고객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과제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세부실천과제 중 성격이 유사한 과제는 통폐합하고, 여건변화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진 과제는 삭제하는 등 정책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과제명을 개선하고, 과제의 범위와 수준도 적절하게 재조정했다.

또한 과제 관리방식도 개선하여 정상추진·지연·일부지연·완료 등 단선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사업집행과제와 성과관리과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하게 되었다. 사업집행과제는 추진 중인 단계를 정상·지연·일부지연·종료로 구분하여 과제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종료보고서를 제출해서 국정과제점검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종료하도록 했다. 반면, 성과관리과제는 종료과제

의 성과를 관리하는 단계로, 성과창출 여부에 따라 완료과제와 미진과제로 구분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서 확인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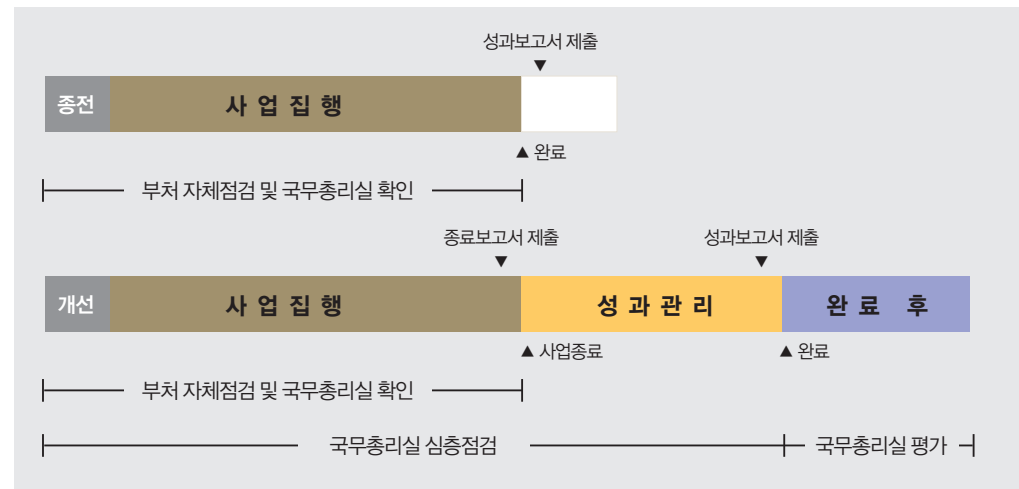
【 과제관리체계 개선】

분류	과제단계	변경내용			
		정상추진	지연	일부지연	완료
종전	사업집행과제	정상추진	지연	일부지연	완료
개선	사업집행과제	정상추진*	지연	일부지연	사업종료**
	성과관리과제	- 성과창출 승인 후 [완료] 부여 - 성과 미창출 시 [미진] 판정 후 보완 또는 관리종결			

*추진일정에 부합하게 추진 중인 경우 **과제계획시한 내에 과제를 종결한 것으로, 성과관리과제로 이행된 것을 의미

점검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부처·국무총리실이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집행과제를 매월 점검 및 확인하는 상시 점검시스템을 확립했다. 사업집행과제 및 성과관리과제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부처 관련,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등 주요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이 점검관련 정보수집 차원에서 현장의견 청취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실이 민관합동현장점검단을 구성해 2011년부터 분기별로 1회씩, 총 6회에 걸쳐 심층 현장점검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정과제점검협의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해오고 있으며, 완료과제에 대한 분석평가를 강화하여 성과보고서 제출과제 중 정부 핵심사업, 주요 사회이슈 및 국민관심 사항 등에 대해서는 평가실에서 정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점검 및 평가시스템 요약】



3. 국정과제 추진현황

1) 2008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950개 세부실천과제 중 922개 과제(97.1%)가 완료 및 정상추진 중이고, 2008년 완료대상 247개 과제 중 224개 과제(완료 202개, 법률안 국회 계류 22개)는 정부 내 조치를 완료(90.7%)하였다.

국정지표	과제수	완료	정상추진	일부지연	지연
섬기는 정부	232	37	183	10	2
활기찬 시장경제	317	90	225	1	1
능동적 복지	155	40	110	1	4
인재대국	74	9	65	-	-
성숙한 세계국가	172	29	134	9	-
계	950	205(21.6%)	717(75.5%)	21(2.2%)	7(0.7%)

- 1) 부처의 자체점검 및 총리실의 확인·점검을 거쳐 과제별 추진단계 판단(2009.2.13 기준)
- 2) 일부지연은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추진시한 내 당초 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205개 과제 완료(추진시한 2008년 202개 과제, 조기완료 3개 과제)

※ 2008년 완료대상과제이나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22건에 대하여는 추진시한 연장과 함께 '정상추진'으로 분류하였다.

2) 2009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1,062개 세부실천과제 중 985개 과제(92.7%)가 완료 및 정상추진 중이다.

국정지표	과제수	완료	정상추진	일부지연	지연
섬기는 정부	258	77	172	4	5
활기찬 시장경제	365	159	175	8	23
능동적 복지	173	72	86	7	8
인재대국	81	39	33	6	3
성숙한 세계국가	185	59	113	7	6
계	1,062	406(38.2%)	579(54.5%)	32(3.0%)	45(4.2%)

- 1) 부처의 자체점검 및 총리실의 확인·점검을 거쳐 과제별 추진단계 판단(2010.1.28 기준)
- 2) 일부지연은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추진시한 내 당초 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연 또는 일부 지연되고 있는 과제 77개의 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사유	일부지연	지연	계
① 관련 법률 제·개정안 국회 계류	12	28	40
② 경제위기로 여건 변화, 남북관계 경색	6	3	9
③ 국회,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	4	6	10
④ 연구용역 등 내부절차 지연	10	8	18
총계	32	45	77

3) 2010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1,169개 세부실천과제 중 1,090개 과제¹⁾(93.2%)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다.

국정지표	과제수	누적완료	2010. 4/4분기 완료	정상추진	일부지연	지연
섬기는 정부	267	100	28	121	10	8
활기찬 시장경제	409	177	25	180	16	11
능동적 복지	198	86	21	77	8	6
인재대국	91	42	7	31	3	8
성숙한 세계국가	204	73	14	108	7	2
계	1,169	478(40.9%)	95(8.1%)	517(44.2%)	44(3.8%)	35(3.0%)

1) 부처의 자체점검 및 총리실의 확인·점검을 거쳐 과제별 추진단계 판단(2011.11 기준)
 2) 일부지연은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추진시한 내 당초 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연 또는 일부 지연되고 있는 과제 79개의 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사유	지연	일부지연	계
① 관련법안 국회계류,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여건에 의한 지연	22	20	42
② 여당,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	5	5	10
③ 여건변화 등에 의한 내부절차 지연	8	19	27
총계	35	44	79

1) 누적완료 478 + 2010.4분기 완료 95 + 정상추진 517

4) 2011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현재 추진 중인 494개 세부실천과제를 점검한 결과, 471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고 23개 과제가 일부지연 또는 지연되고 있으며 53개 과제는 4/4분기에 추진계획상의 사업을 종료하여 성과관리 단계로 전환되었다.

국정지표	2011.12 과제수	2011. 4/4분기 성과관리 (누적)	2011. 4/4분기 추진				(성과관리전환)
			정상추진	일부지연	지연	계	
섬기는 정부	167	62	102		3	105	(13)
활기찬 시장경제	270	103	161	5	1	167	(20)
능동적 복지	146	67	75		4	79	(7)
인재대국	79	39	35		5	40	(8)
성숙한 세계국가	146	43	98	5		103	(5)
계	808	314	471 (95.1%)	10 (2.2%)	13 (2.6%)	494	(53) (10.6%)

1) 부처 자체점검 및 총리실의 확인·점검을 거쳐 과제별 추진단계 판단(2011.12 기준)
 2) 일부지연은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추진시한 내 당초 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연 또는 일부 지연되고 있는 과제 23개의 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사유	지연	일부지연	계
① 관련법안 국회계류,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여건에 의한 지연	4	10	14
② 여당,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	5	2	7
③ 여건변화 등에 의한 내부절차 지연	1	1	2
총계	10	13	23

5) 2012년 3/4분기 국정과제 추진현황

2012년 3/4분기 현재 추진 중인 432개 세부실천과제를 점검한 결과, 423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고 9개 과제가 일부지연되고 있으며 28개 과제는 2/4분기에 추진계획상의 사업을 종료하여 성과관리 단계로 전환되었다.

국정지표	2012.9 현재(누적)			2012. 2/4분기 추진			
	과제수	성과 관리	관리 종결	정상 추진	일부 지연	지연	계
섬기는 정부	172	80		92	-		92
활기찬 시장경제	276	133	3	140	3	1	144
능동적 복지	149	81	1	67	-	1	68
인재대국	84	50	1	33	-		33
성숙한 세계국가	149	54		91	4		95
계	830	398 (48.0%)	5	423 (51.0%)	7 (0.8%)	2 (0.2%)	432 (52.0%)

1) 부처 자체점검 및 국무총리실의 확인·점검을 거쳐 과제별 추진단계 판단(2012.6 기준)
 2) 일부지연은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추진시한 내 당초 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연 또는 일부 지연되고 있는 과제 9개의 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사유	지연	일부지연	계
① 관련법안 국회계류,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여건에 의한 지연	-	3	3
② 여당,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	-	4	4
③ 여건변화 등에 의한 내부절차 지연	-	2	2
총계	0	9	9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하는 정부' 기조하에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핵심과제를 마무리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완료할 예정이다.

제2절 국격(國格)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추진

1. G20 정상회의 유치 및 국격 제고 추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달성했다. 또한 6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9년 11월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에 집중된 나머지 성장의 그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이룩한 외형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결과 중시 풍토의 만연,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 취약, 결과에 대한 불복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준법정신, 시민의식, 사회적 개방성 등에 있어서도 성숙한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격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은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우리의 수준을 가늠해볼 때, 2008년 기준으로 우리의 Anholt 국가 브랜드 지수²⁾(NBI) 순위는 조사대상 50개 국가 중 3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세계 13위의 경제규모(2007년 GDP 기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에 따라 언론 및 학계 등에서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2009년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이벤트에 그칠 수도 있고,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G20 정상회의 유치를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의식·관행·제도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로 하고 국격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했다.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세계 외교의 중심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좋은 계기로 정치·사회·법질서·도덕수준 등에서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후속대책을 수립하기 바랍” (2009.9. 이명박 대통령)

2) Anholt 보고서는 국가 브랜드를 "How a country is seen by others"로 정의

2. 국격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선정

국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의 품격’을 뜻하는 것으로,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인식, 관습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구조와 틀이 바뀌어야 한다. 국격제고는 정책 몇 가지를 추진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달성될 수는 없다. 품격을 높이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격제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격제고를 위한 노력과 추진체계가 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9년 10월 범국가적 차원의 국격제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격제고는 국민적 의식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정책과제가 발굴되고 국민적 동참 속에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의 품격 제고를 위한 필요과제를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문만이 아닌 정부와 민간 간 상호 협력과 도움이 필요했다.

따라서 정부는 2009년 10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정부위원회로 구성된 「국격제고 추진 TF」(팀장 : 국무총리실장)를 출범시켜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국격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발굴·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추진과정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추진과제 발굴은 1차적으로는 각 부처 및 위원회별로 소관업무와 관련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국격제고 TF의 검토 및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또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민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총리주재 각계 지도층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의 아이디어 수렴 및 국민적 참여를 유도했고,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과제발굴을 추진했다. 또한 대국민 인식조사(2010.2)를 실시하여 국격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가정책조정회의(2010.3.18)



시민단체 오찬간담회(2010.3.23)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발굴한 법령 규정, 제도, 관행, 국민인식과 문화 등에 관한 150여 개 과제들은 ‘필요성’, ‘중요성’,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했다. 그 결과 2010년 3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체감도와 정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격제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012년 3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국격제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격제고 추진방안은 ‘품격 있는 시민, 품격 높은 나라’를 비전으로 5대 추진방향과 80개 추진과제, 그리고 4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었다.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이 된 나라’,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기술 강국’,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 시스템’, ‘세계와 함께하며 존경받는 나라’ 등 「5대 추진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8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글로벌 시민 의식 함양’,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세계 최고 기술·디자인 브랜드 홍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ODA 확대·발전’ 등 국격제고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는 물론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추진할 다양한 과제들이 80개 추진과제에 포괄적으로 망라되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운동으로서 전개할 「4대 실천운동」을 마련했다. ①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운행·음주운전 안 하기 ②공공장소와 휴대전화 할 때 작은 목소리로 하기 ③깨끗한 거리와 간판 만들기 ④사이버 예절 지키기 등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정부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협조를 통해 ‘올해부터 이것만은 꼭 지키자’고 다짐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각 부처는 80개 소관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책임지고 추진해나가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격제고 TF」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해나가도록 했다.



3. 80개 과제 추진실적 및 주요 성과

1)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이 된 나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G20 정상회의를 유치할 정도로 경제력은 크게 성장했지만 국민의 기초질서나 예절 등 시민의식은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리고 법질서 수준과 준법의식이 낮아³⁾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근절되지 않는 불법집회와 시위 등 시위문화의 후진성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며,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수준으로 법질서를 선진화하고 시민의식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집회시위 문화의 선진화와 함께 생활중심 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이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했다.

가.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선진 시민의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제도 신설·제도 등을 실시했다. 교차로 꼬리물기·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 등 교통질서 선진화를 연중 추진하여 2009년 대비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8.7%, 음주운전 사망자는 19.3%, 이륜차 사망자는 10%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

‘G20 성공 개최를 위한 글로벌 에티켓 지키기’ 온라인 이벤트·광고(2010.11)와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2010.9)을 전개했으며, 시·도 교육청별 377개 창의·인성 교과별 연구회 운영(2010.9)과 체험·실천 위주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2010.10)하여 진행했다. 또한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캠페인, 병역면탈 의심자 재검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정착(2010.8~12)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글로벌 에티켓 지키기 캠페인

나. 품격 높은 대화와 소통문화 정립

품격 높은 대화와 소통문화 정립을 위해 방통위는 방과후 학교를 활용한 인터넷 윤리교실과 찾

아기는 인터넷윤리 순회강연을 연중 실시했다(인터넷 윤리교실 240개교 9,034명, 인터넷 윤리 순회강연 32개교 7,634명). 또한 청소년 유해 영상물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5만7,139건)하고, ‘뉴미디어 시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처방안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2010.11)를 개최했다.

또한 7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행사와 ‘아름다운 청소년 언어 지키기’ 업무협약 체결(방통위, 여가부)을 통해 온·오프라인상에서 품격 높은 의사소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다. 법질서 준수

법무부는 법질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스쿨존 지키기 행사(2010.7),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사랑 자원봉사단 발대식(2010.9),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2010.10), 법질서 동영상·공익광고 제작·배포(연중)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범죄예방위원 워크숍(2010.11), 법문화진흥센터 워크숍(2010.12)을 개최하고, 법교육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다양화를 추진했다.

경찰청은 합법적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합법추진 불법필벌’ 기조와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불법폭력시위 27%, 경찰부상자 97%를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 공정위는 중국·EU·미국·호주와 양자 카르텔 실무협의회(2010.7~12), ‘국제카르텔의 규제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2010.8)를 개최했고, 노동부는 해외투자기업 중국 현지 노무관리 설명회(2010.11), 해외진출 예정기업 대상 노무관리 설명회(2010.6~12) 개최를 통해 기업들의 법 준수 활동을 지원했다.

라. 법령·제도의 선진화

법제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국경위에 보고(2010.10)하고,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70건)를 발굴해 국무회의에 보고(2010.11)하여 법령·제도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경찰청은 전체 교차로 중 선행직진 전환 68.4%, 비보호 좌회전 구역을 1만 5,702개소로 확대(2010.1~10)했고,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진입규제에 관한 단계별 개선작업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와 국제심포지움을 개최(2010.10)하고,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규위반 정도에 따른 행정형벌 기준 권고안 마련(2010.12)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진정으로 품격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세계 10위

3)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OECD 30개국 중 27위로 발표

권 국가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나눔문화는 아직 미진하다.⁴⁾⁵⁾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기업 1봉사단체 결연 등 기업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함께 대학생의 사회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나눔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세기 진행된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재한 외국인이 120만 명에 달하는 등 우리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 수용과 함께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인이 살고 싶어 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해소, 외국인 인권 보호,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가.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등

① 자원봉사 확산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어르신자원봉사단(5만2,000명)을 운영(행안부)하고 대학생들의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사업을 추진(교과부)했다. 이를 통해 의료 등 전공과 연계된 봉사 프로그램(56개, 8,400만원) 개설, 자원봉사 동아리(54개, 5,300만원) 지원 및 중·단기 해외봉사단(각 39명, 909명) 파견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복지부는 휴먼네트워크 구축사업(2010.12 기준, 213개 기관 2만2,000명 멘토 활동)을 추진해 5대 분야(성장·자활·생명·장애·글로벌넷) 핵심 협력기관을 선정(2010.9)하고 '어깨동무'(KBSN, 5.2)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한 홈페이지, 블로그, 방송(46건) 및 휴먼대상 시상식(2010.11) 등을 통해 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

'행복나눔 N 캠페인'(21개 기업 참여)과 나눔활동 우수자 정부포상(93명) 및 대한민국 나눔문화 대축제(2010.9) 등을 통해 나눔 활성화를 유도했으며, 의사, 한의사, 미용사 등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전문적·지속적 봉사활동을 하는 '1004 지역사회봉사단(목표 1,004개)'을 운영(2010.12, 1,280개)했다.

② 제도개혁

기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정기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2010.2.18)했으며, 기부금 세제 개선방안을 담은 관련 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2010.12)했다. 복지부는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전문 모금기관 설립을 추진하여 2011년 4월 출범식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사업을 시작했다.

③ 기업참여

기재부는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집』(삼성전자 등 16개 사례) 발간과 '지속가능경영 대상'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우수 실천사례를 전파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 참여를 독려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 경영공시 반영을 위한 매뉴얼을 개정·공시했으며,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실시하여 목표 9,085명 대비 121.1%(1만1,001명)를 달성(2010.9)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나. 여성·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① 여성

여가부는 2010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수여식,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협약식(2010.11.19, 33개 기업·기관 인증) 및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2010.12)했고, 성인지 예산제⁶⁾ 정착을 위해 기금까지 확대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2010.4)하고, 성인지 예산 전담관제(2010.5), 2011년 성인지 예산서 국회 제출(2010.9) 등을 추진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을 마련(2010.2.18)했으며, 기재부는 행정기관 시간제근무 시범운영 MOU 체결(2010.3) 및 공공기관 시간제근로 시범운영(11개소, 2010.4~10)을 실시했다. 행안부도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통보하고 유연근무제를 전면 실시(2010.5~6)해, 국가·지자체 23개 기관 1,238명이 유연근무제를 채택했다. 또한 시간제 근무로 인한 승진·경력평정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2010.6.15)했다.

② 농촌

교과부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확대 방안을 수립(2010.3)하고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통폐합 본교 또는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전원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시설을 현대화(2년간 총 10억~20억원)하고, 지정 후 3년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총 9,000만원)했다. 2010년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513억원) 및 연중 돌봄학교 지원(230억원)을 통해 농산어촌 맞춤형 지원 및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③ 장애인·노인 등

방통위는 방송·웹·문화예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 제작(지상파 등 41개사, 30억원) 및 방송수신기 보급(2010년 1만7,000대 보급)을 실시했다. 행안부는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우수 사이트 품질마크 부여(4회) 및 사용자 중심 웹

4) 2007년 국내 기부금 규모는 GDP 대비 약 0.9%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종교단체 기부가 80%를 차지하는 등 개인 기부는 매우 미흡
5)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 이상 국민의 하루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2분에 불과하고, 봉사참여 국민비율도 1.7%로 매우 낮음

6) 성인지 예산제는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예산제도로, 2010년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에 도입돼 시행됐다.

접근성 모니터링(2010.7~11)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 환경을 보장했으며, 문화부는 장애인문화예술 축제(2010.9.13~20) 및 장애인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14억5,000만원) 실시,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등(2010.4, 5억원)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익신장을 도모했다.

④ 입양

복지부는 입양기관 알선비용 현실화(전문 240만원, 지정 100만원) 및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차등 지원(중증 57만원, 경증 55만1,000원), 입양의 날 행사 및 입양주간 행사(2010.5) 등의 실시를 통해 입양 관련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배려

① 규제개혁

법무부는 온라인 사증추천·심사시스템을 가동(2010.2.1)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가의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2010.3)했으며, 「국적법」 개정(2010.5)을 통한 제한적인 복수 국적을 허용했다. 또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11.1 시행)하여 우수인재 선정 요건, 국적선택 명령 및 국적상실 사유와 종류 등을 구체화했다.

② 고용지원

외국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부는 귀국예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온라인 취업알선(655명) 및 귀국지원 안내문(8만건) 발송, 귀국지원 사업설명회(39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근로환경에 대해 연중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③ 다문화 지원

여가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충(159개소)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210명)를 실시했으며, 결혼이민 예정자에 대한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4,622명 사전교육)했다. 그리고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0.11 시행)하고, 중개업체에 대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베트남어·몽골어 등을 지원하는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방통위는 양방향 다국어 자막서비스(KBS 주관 1,486편의 자막)를 제작·방송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10.12)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중학교 취학 기회를 확대(거주사실 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로 전·입학 가능)하고,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다문화 교육강좌’ 지원(교·사대 20개, 2억원) 및 교원 연수 등(400명)을 실시했다.

3)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자연유산을 활용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친환경·미래 및 첨단기술 분야의 선도국가 달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을 지속 추진했다. 또한 문화·기술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협력을 강화했으며, 국민이 직접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형 캠페인과 함께 시범사업들을 추진했다.

가.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문화부는 웹 2.0을 기반으로 한 위키피디아형 한국어 사전시스템을 구축(2010.12)했으며, 농식품부는 한식재단·해외 한식당 협의회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식 BI 및 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을 꾀했다. 또한 한식전문교육 확대(스타셰프·향토음식 전문가 과정 300명, 한식조리 특성화대학 3개소) 및 해외 한식당 개설(9개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부는 글로벌 기획개발 워크숍을 개최(파리 7월, 도쿄 9월, 베이징 9월, LA 11월)하고 국제공동지원단을 발족하여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게임분야에서는 국제게임컨퍼런스 KGC 2010(2010.9) 및 G-Star 전시회(2010.11), 2010 세계e스포츠 대회(2010.10), 2010 국제e스포츠연맹(IESF) 총회(2010.10) 등을 개최해 게임강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또한 세계 우수작품의 번역 및 출간(번역 111건, 출간 52종), 세계문학 거점도시 한국문학 포럼(2010.7~12, 중국 난징, 타이완, 미국 미시건, 일본 아키타)을 개최했다.

전통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10개소, 문화부) 사업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8개소, 지경부)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닦았다. 또한 문화부는 전통연희(세종조 회례연·태평서곡 등 총 34회 1만7,510명 관람), 전통고궁공연(55회 4만 1,400명 관람) 및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2010.8)·천차만별 콘서트(2010.9), 2010 아리랑페스티벌(2010.9) 등을 개최하여 전통문화 활성화를 추진했다.

나. 미래 첨단기술 강국

지경부는 한국디자인 DNA 발굴사업(144건) 및 디자인코리아 2010(2010.12)를 개최하고, G20 방송통신 미래체험전 Giga인터넷을 시연·전시(2010.11)했다. 방통위는 세계 최초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 개시(2010.10)하고,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2010.12)했다. 복지부는 ‘국제진료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제를 추진(2010.8)하고, 외국인 전용병동 설립·제도개선(2010.12), MSH china-국내 의료기관 직불네트워크 구축(2010.11, 5개소), Bio Korea 2010 개최(2010.9) 등을 실시했다.

다. 녹색성장 선도국가 도약

녹색성장 부문은 녹색위 주도하에 지경부·환경부 등의 협조를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운영(2010.6), 부문

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용역 추진(2010.7)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법률」에 관한 입법을 추진(2010.11)했으며,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2010.10)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를 구성(2010.11)하고, 미국 일리노이주와 MOU 체결(2010.7), 홍보관 개관 및 스마트그리드 주간행사를 개최(2010.11)했다.

국토부는 에너지 절감형 보급자리주택(그린홈)을 건설하여 11만3,000호를 공급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을 수립·배포(2010.12)했으며 녹색혁신도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환경부는 강릉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2010.9~), 도시생태계 복원 관련 비오톱 지도·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10개소)을 추진하는 한편, 「생태관광 헌장 및 수칙」을 제정(2010.10)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참여범위 확대(230개 지자체, 174만 세대 참여), Me First 운동·그린스타트 1,000만 네트워크 구축(358개 단체), 그린리더 양성(1만4,410명),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2010.12)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라. 품격 높은 생활공간 확보

국토부는 수변경관 가이드라인, SOC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평가지표를 개발(2010.12)하고, 경관도로 조성사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2010.12)했다. 또한, 해안마을 경관개선 시범사업에 착수(2010.11)하는 한편,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2010.12)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Rural-20 여행코스 개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농어촌 경관사진 콘테스트 개최(2010.9~12) 및 농촌 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을 실시했다. 그리고 행안부는 간판문화 선진화 정책설명회(2010.6~11)를 개최하고 간판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4) 경쟁력 있고 투명한 선진 시스템

한 국내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와 함께 후진적인 노사문화와 정치문화가 선정된 바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9년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39위, IMD 등 국제평가기관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7년 연속 최하위 수준(56위/57국)으로 평가했다.⁷⁾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지방토착비리, 교육비리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깨끗한 선거문화,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선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도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을 통해

외형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으나, 의식·관행의 전환이 제도적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남았다. 사회 전반에 선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류가 널리 확산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해관계의 상충 등 애로가 발생하기도 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제적이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성과가 미흡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문제점이 있는 구체적인 사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전개했다.

가.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

기재부는 ‘유망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향’을 수립(2010.4)하고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2010.6)했다. 또한 ‘2010 상·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2010.8, 2010.12)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2010.11) 결과, 2009년 발표 순위(19위)보다 3단계 상승한 16위를 기록했다.

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

권익위는 「청렴韓 나라 만들기 원년 캠페인」을 실시하여 사회 저변에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공정위는 정유사-주유소 간 모범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 1대 1 전속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2010.11)했다.

다.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장 신청 및 지방관서의 발굴에 의한 지원대상 127개소를 선정·지원(2010.4~11)했다. 신청지원은 94개소(중소기업 58, 대기업 13, 공공부문 14, 단체사업장 9), 발굴지원은 33개소(중소기업 18, 대기업 10, 공공부문 2, 단체사업장 3)에 달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근로시간 면제제도 합의 현황이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1,624개소(도입률 86.5%)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라. 안전의식 및 시스템 확립

행안부는 2010 안전관리 캘린더를 제작하여 배부(2010.2)했으며, 노동부는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했다. 농식품부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해서 안전의식 및 안전시스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5) 세계와 함께하며 존중받는 나라

G20 정상회의 유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현저히 높아졌다. 이에 상응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도 함께 상승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요구되는 기여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

7) 우리나라 근로자 1,000명당 파업 근로손실일수(78.6일)는 OECD 평균(37일)의 2.1배 수준

로써 세계로부터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하고, 아이티 지진 등 국제 재난구조 활동에의 신속한 참여와 지원 확대뿐 아니라 물·식량·질병 등 범세계적 문제에 적극 대응했다.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을 탈피하여 원조공여국의 대열에 합류한 유일한 국가라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사업(KSP)을 적극 추진했으며, 국제개발협력(ODA) 규모 확대,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적극 노력했다.

가. 범세계적 문제해결 기여(외교부·국방부)

외교부와 국방부는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UN의 PKO 활동 지원과 대테러 활동 국제공조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 250명)과 아프간 PRT 방호부대(오쉬노부대, 350명)를 파견(2010.2, 2010.7)했고, UN PKO 참여법을 제정하여 시행(2010.4.26)했다.

또한 아이티 지진피해지역 국제구조활동 지원(2010.1.15~25), 해외긴급구호 업무 표준 매뉴얼 수립(2010.7, 외교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출범(2010.6.16, 녹색위),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주요 투자분야로 물문제 해결 추진, 몽골·필리핀·아제르바이잔과의 랜드마크 사업 선정(2010.10)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병행하여 전개했다.

나. 국제개발협력 확대·강화(외교부·기재부·공정위·교과부)

외교부와 기재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발효(2010.7)와 국제개발협력의 날 선포 및 기념식(2010.11.25) 개최, EDCF 선진화 계획(2010.10) 및 2011~2015 ODA 기본계획 수립(2010.12), 2010년 중 5개 부처 통합 해외봉사단(4,318명) 파견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체제를 체계화하고 ODA를 확대·발전시켰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기재부는 발전사례 모둠화 사업을 추진했고, 공정위는 경쟁법 기술지원을 위해 KOICA 교육 및 OECD 정책센터 교육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베트남·몽골과 반부패 MOU 체결(2010.2)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을 지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과부에서 추진한 '글로벌 코리아 스콜라십'(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통해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지원했으며,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했다.

다. 국제사회에서 역할 강화(외교부·산림청)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합의하고,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무역과 개발, 반부패 등 주요 의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도출했다. 또한 아프리카·남미 등 지역의 비(非) G20 회원국을 대상으로 아우리치 활동을 추진하고 관련 의제에 있어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했다. 외교부는 2010년 JPO 최종 선발, 2011년 파견인원 확대, UN PKO 관련 국제논의 참여, 유엔분담금 적시 납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역할을 늘려나갔으며, 산림청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준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 결정(2010.4)과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2010.5)는 국제사회에서 변방국의 이미지였던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 한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통일부·보훈처·국방부·문화부)

한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부는 6·25 60주년 「평화통일대행진」 행사를 개최(2010.7.26~31)했고, 보훈처는 6·25 60주년 계기 참전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행사를 실시했으며, 국방부는 6·25 전사자 종합정보체계를 구축(2010.12)했다. 또한 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등을 계기로 애국선열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문화부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에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염전, 대곡천 압각화, 매사냥 등 11건을 신규로 등재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과 협약을 체결(2010.7)하고, '제6회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2010.9, 서울) 및 '제5회 해외한국학 대회'(2010.10, 타이완)도 개최했다. 외교부는 코리아넷 다국어서비스, 재외동포 인물·단체 통합 DB 서비스(약 15만 건) 등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년 대비 2010년 코리아넷 방문자 수 48%, 회원 수 15.7%가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4. 민관 협력을 통한 4대 실천운동 추진

과제별 소관부처 책임하에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한 80개 개별과제와 달리, 4대 실천운동은 국민운동단체·시민사회단체 및 각종 직능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각종 캠페인 전개를 통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1) 교통질서 선진화(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운행·음주운전 안 하기)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운동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2010.3~6)했다. TV광고(3.26~4.30)와 KTX·수도권 역사·전동차 내 홍보(2010.5.4~6.10)를 실시하여 2010년 6월까지 음주사고 사망자 수(314명)가 전년 대비 30.1%(-135명)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법무부는 코레일(KORAIL) 등과 연계하여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2010.2.12~15)하고, 범질서 선진화를 위한 TV 공익광고(2010.8~10)를 실시했다.

2) 공공장소에서와 휴대전화 할 때 작은 목소리로 하기

행안부는 글로벌 시민실천 10대 과제 전국캠페인(2010.3~10)과 청소년대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2010.3~9)을 실시하고, 2010년 2월부터 YTN·매일경제신문 등 언론사 협조를 통해 글로벌 에티켓 언론 공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찰청은 공공시설·장소 질서 확립 3단계 전략(준비·홍보·단속)을 마련하여 기초질서 문화대전(2010.3.18~4.30) 및 기초질서 동영상 경연대회(2010.4) 등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포털에 공공장소 예절 등에 관한 웹툰방(9편)을 개설(2010.1~3)하여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고, 경찰청은 주요 기초질서 확립 관련 '테마 단속'을 실시했다(2010.7~8 오물투기·광고물 무단첨부, 2010.9~10 음주소란, 2010.11~12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

3) 깨끗한 거리와 간판 만들기

행안부는 '아름다운 간판달기, 불법간판 추방운동'을 전개(2010.4~12)했다. 직능단체·직종별 단체와 협력,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을 지속 추진했으며, '간판문화 선진화' 공동협력협약을 체결(2010.5.11)하고,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3만2,326건)했다.

서울시 등 국제행사 개최도시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현수막을 일제 정비(2010.8~10)하고, 환경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3만4,000여 기관, 121만명이 참여하여 도로·하천·관광지 등의 쓰레기 수거 대청소운동을 전개해서 쓰레기 2만6,000톤을 수거(2010.3.22~4.2)했다. 또한 서울시는 껌·담배꽂 등 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 근절 홍보 및 집중수거·단속을 실시하여 2010년 5월 말 기준 5만6,491건을 단속했으며, 2010년 8월까지 홍보 위주로 계도하고, 9월 이후 행사장·숙소 주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2010년 6월에는 껌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명문화했다. 법무부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TV광고와 민간단체와 연계한 캠페인 등을 전개(2010.1)했다.

4) 사이버 예절 지키기

행안부는 선플달기 전국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2010.4)하고, 법무부는 '범사랑 서포터즈' 건전 댓글문화 정착운동을 전개(2010.5)했다. 방통위는 불건전 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윤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예방 TV광고(2010.6, KBS·MBC 등)·신문광고(2010.5.31), 초·중학생 교육(180개 학교 6,500명) 및 교육전문가(283명) 양성 등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범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제4기 누리 캅스' 884명을 위촉하고, 지방경찰청별 발대식을 개최(2010.4.28)했으며, 단속을 통해 사이버폭력 사범 2,975명

을 검거(전년 동기 대비 58.8%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법무부는 KBS와 '사이버 질서'에 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공동기획(2010.1)하여 방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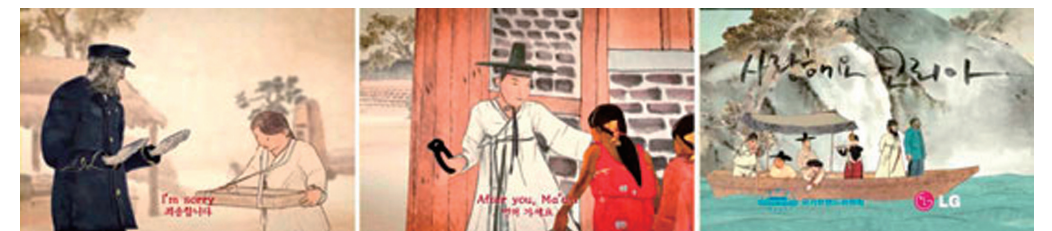
5. 국민체감형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

국격제고 홍보는 언론·방송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협조를 통해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전개했다. 특히 기념일 및 주요 행사와 같은 각종 계기를 활용하고, 과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여 「4대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80개 추진과제 캠페인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일반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TV 예능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국격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구전(口傳) 홍보 등을 통해 공론화를 유도했다. tvN <남녀탐구생활>(2010.6.19, 문화부), SBS <이문세의 사랑해요 코리아>(브랜드위, 2010.4.12~6.28) 등이 방송되었다.

부처 홍보대사 중심의 국격제고 릴레이 기고(2010.5~10)도 실시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체육인·연예인(선동열·박해미 등)을 중심으로 공감코리아와 NATE를 통해 '국격제고' 공동캠페인 형식으로 게재하여 국격제고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로고 개발은 4대 실천과제 팝업 홍보(2010.4.9~22, 부처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국격제고 동영상 제작 및 캠페인 로고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2010년 7월 말, 국격제고 로고 디자인 및 응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부 광고 및 홍보물·공공부문 서식에



동양인과 서양인이 만나는 콘셉트를 통해 친절 한국을 소개한 광고 장면



<남녀탐구생활>을 각색한 '글로벌 시민탐구생활'의 한 장면

활용했다. 또한 5대 추진방향과 4대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가미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2010.7)하여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했다.

6. 국격제고 추진에 대한 평가

국격제고는 사회, 문화, 인식, 관습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구조와 틀을 바꾸는 것으로,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국가적 역량 결집 및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선진시스템의 도입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국가적 행사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발적 협력 등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고 사회 전반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다만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 ‘연평도 포격 도발’(2010.11.23) 등 연이은 돌발 이슈의 발생으로 국격제고 과제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적극적인 민관 공동캠페인을 통한 범국민적 참여 활성화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시민의식 선진화 등의 과제는 장기간에 걸친 민관 협동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결과에 일회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관 합동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지속 추진했다.

7. G20 정상회의 이후 국격제고 추진

국격제고 추진을 통해 교차로 꼬리물기·음주운전 감소,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 선진 법·제도 도입,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 사회 제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사회선진화 인프라 구축과 국민의식 전환 과제 등 장기 추진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 이후에는 ‘공정사회 실천과제’와 ‘브랜드 과제’, 국정과제 등과 연계해서 국격제고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격 과제 중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 등 「제도개선 과제(20개)」는 ‘공정사회 실천과제’(국무총리실 「공정사회 추진 TF」)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국제 이미지 제고 등 「의식개선 과제(26개)」는 ‘브랜드 과제’(국가 브랜드위)와 연계하여 지속 추진했다.

참고 국격제고 추진과제⁸⁾ 현황

번호	추진 과제(80개)	비고
1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브랜드 과제
2	시민질서 선진화	브랜드 과제
3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에 적합한 창의·인성 교육 강화	브랜드 과제
4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정착	공정사회
5	인터넷 윤리 교육과 홍보·캠페인 강화	국정과제
6	건강하고 활기찬 인터넷 세상 만들기	국정과제
7	방송 언어·드라마 품격 향상	국정과제
8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공정사회
9	선진 시위문화 정착	공정사회
10	생활 중심 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공정사회
11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법 준수로 국가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방지	국정과제
12	국민 불편과 기업부담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	공정사회
13	규제의 합리화,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추진	국정과제
14	교통신호체계 선진화	국정과제
15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국정과제
16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공정사회
17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휴먼네트워크	공정사회
18	민간자원 나눔의 확대 다양화	공정사회
19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령 개정(2010.12)
20	의료부문 모금기관 육성	공정사회
21	실질적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공정사회
22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공정사회
23	사회 취약계층 등 방송접근권·웹 접근성 제고	국정과제
24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	국정과제
25	국내입양 활성화	국정과제
26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정책 추진	브랜드 과제
27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사회
28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브랜드 과제
29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브랜드 과제
30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공정사회
3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과 연계	공정사회
32	기업의 나눔 문화 활성화 지원	공정사회
33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공정사회
34	세종사업	브랜드 과제
35	세계인에 감동 주는 한식	국정과제
36	문화·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정과제
37	전통 문화·예술 및 공간의 브랜드화	브랜드 과제
38	세계 최고 기술 디자인 브랜드 홍보	브랜드 과제
39	차세대 방송·통신 기반 구축	국정과제

8) 국격제고 추진과제(80개)는 G20 정상회의 이후 국정과제, 브랜드 과제, 공정사회 실천과제 등으로 연계하여 추진

번호	추진 과제 (80개)	비고
40	한국 의료의 글로벌화	브랜드 과제
4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대책	국정과제
42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해외전파	국정과제
43	녹색도시 조성 및 해외 수출	브랜드 과제
44	모범적인 녹색생활 국가로 도약	국정과제
45	국토·도시 디자인 개선	브랜드 과제
46	국가 기간시설 디자인 개선	브랜드 과제
47	아름다운 우리 농산여촌 알리기	국정과제
48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브랜드 과제
49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공정사회
50	지역 토착·교육 비리 근절	공정사회
51	거래관행 공정화 추진	공정사회
52	깨끗한 선거문화 풍토 조성	국정과제
53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공정사회
54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	국정과제
55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기업환경 개선 등	국정과제
56	사회 갈등의 합리적 관리	국정과제
57	노사관계 질서 확립 및 협력 분위기 확산	국정과제
58	전임자 복수노조 제도 시행	타임오프(2010.7) 등 시행
59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국정과제
60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선진 노사관계 시위문화 확립	국정과제
61	국민의 안전의식 선진화	국정과제
62	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	국정과제
63	국민건강 위해요소 근절	국정과제
64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 확대	브랜드 과제
65	국제 재난구조 활동 확대	국정과제
66	질병·물·식량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국정과제
67	녹색성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국정과제
68	국제개발협력체제 체계화	브랜드 과제
69	우리 경제발전 경험 공유	브랜드 과제
70	ODA 확대 발전	브랜드 과제
71	차세대 인적교류 확대	브랜드 과제
72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종료
73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브랜드 과제
74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및 기구 설립	브랜드 과제
75	국제회의·행사 개최를 통한 이미지 제고	브랜드 과제
76	한반도 평화 이미지 제고	브랜드과제
77	6·25 60주년을 국제사회에 대한 감사 행사로 추진	종료
78	애국선열 정신계승을 통한 정체성 확립	국정과제
79	한민족의 우수성 재조명, 홍보	브랜드 과제
80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브랜드 과제

국격 제고 추진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09.9.27	■ 이명박 대통령, 국격제고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 지시
2009.10.28	■ 1차 '국격제고 추진TF' 개최 : 국격제고 추진TF 구성
2009.11.13	■ 2차 '국격제고 추진TF' 개최 : 과제조정(150개)
2009.11.20	■ 3차 '국격제고 추진TF' 개최 : 과제조정(137개)
2010.1.13	■ 민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국격' 개념화
2010.1.26	■ 4차 '국격제고 추진TF' 개최 : 과제조정(80개)
2010.2.16	■ 국격제고 관련 '민간자문단 간담회'
2010.2.23	■ 국무회의 : 국격제고 추진방안 및 중점과제 논의
2010.2.24	■ 5차 '국격제고 추진TF' 개최
2010.2.26	■ 국가정책조정회의 : 국격제고 추진방안 및 중점과제 논의
2010.3.18	■ 국가정책조정회의 : '국격제고 추진방안' 확정
2010.3.23	■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 '국격제고 추진방안' 및 '4대 실천과제' 발표
2010.3~	■ 국무총리실·관계부처 중심 추진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추진
2010.5.14	■ 국가정책조정회의 : 국격제고 추진상황 점검
2010.7.15	■ 6차 '국격제고 추진TF' 개최 -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
2010.9.17	■ 7차 '국격제고 추진TF' 개최 - '4대 실천과제' 추진방안 및 국격제고 홍보계획 등 집중 논의
2011.1.20	■ 8차 '국격제고 추진TF' 개최 - 국격제고 추진체계 재편을 통한 장기목표 달성과제 지속 추진

제3절 기후변화 대비 녹색성장 추진



1. 녹색성장 추진체계 확립

1)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및 기획단 설립

1992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자,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3차에 걸쳐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추진했으며, 2001년 9월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무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범정부적 대응기반을 구축했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요구되었고, 2007년 5월 제3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총괄·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해 12월 국무조정실 내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단장 : 정책차장, 2부 4팀 22명)'이 설치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의 기후변화 추진체계 보장 지침에 따라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의 조

직은 2정책관실 7팀, 29명으로 확대되었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기후변화 관련 정부대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기후변화대책조정협의회(국무총리실장 주재)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었다.

2)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온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기능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심체로서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관리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08년 12월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하고, 2009년 1월 녹색성장기획단을 설치했다. 이후 2009년 2월 16일 마침내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는 전 부처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어 국무총리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했고, 민간과의 소통 활성화와 전문성 극대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관계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총 48명으로 구성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녹색성장 관련 주요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장 및 정부 산하기관장 18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되었다. 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는 각각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녹색성장·산업분과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분과위원회, 녹색생활·지속발전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이 향후 60년 국가 비전으로 선포될 당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특히 녹색성장정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후변화 관련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고,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등 녹색성장과 직결되는 법률들이 있었으나, 각종 녹색성장 관련 법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시행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2008년 말 당시 선진 각국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 이용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0·20 기후변화·에너지 종합법」을 2008년 12월 제정했고, 영국은 2008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한 「기후변화법」을 제정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 발전 등 녹색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008년 말,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과 법률을 통합적·유기적으로 연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마련했고, 기본법 초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개혁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은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입법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에 모범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산업·국토·환경·국민행동 전반에 걸친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으로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녹색성장 위원회 및 기획단, 녹색산업 육성, 녹색기술·녹색금융 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었고,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별도 입법) 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녹색건축, 녹색교통, 녹색생활, 녹색소비 등 사회 각 부문의 녹색화 추진을 위한 방향 등 관련 규정을 두었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후속 작업으로 시행령 제정 작업이 추진되었다. 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대상·방법·절차 및 인벤토리 등을 규정했는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개혁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10년 4월 14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새로이 도입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주관부처 문제를 두고 환경부와 지경부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2010년 3월 산업계·학계·NGO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견을 해소했다. 4대 부문별 관장기관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이 목표관리제 운영을 담당하되, 환경부가 관련 지침 제정 등 총괄기능을 맡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배출권거래제는 교도의정서에서 규정된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으로서, 각 기업이 자체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배출권 구입비용을 비교하여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이다. 즉 감축비용보다 구입비용이 더 비싼 경우에는 자체 감축을 추진하고 경쟁기업에 비해 감축비용이 더 싼 경우에는 감축목표보다 추가로 더 감축한 후 그 추가감축분을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도록 함으로써 각 기업들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산성비 규제정책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면서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세에 비해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특히 EU가 2005년 총량규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 1990년에 비해 2011년에 EU의 GDP가 40% 증가했으나, 온실가스는 이에 따라 40%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6%를 감축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녹색기술 개발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을 입증했다. 배출권거래제는 EU 외에도 뉴질랜드·호주·미국 북동부 10개 주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될 예정이고, 중국·일본도 베이징·상하이·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국무총리실은 2009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즉 동법 제46조는 정부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도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 등록, 관리방법, 거래소의 설치, 운영방법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의 입법을 추진했다. 국무총리실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산업계 및 관계부처 등과 수십 차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 특히 각계 이견이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및 2011년 2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법을 소관하는 부처로서 법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조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①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시점을 당초안인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②과태료 상한선을 당초안인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③과징금 상한선도 톤당 배출권 평균가격 5배에서 3배로 인하하고 ④제1차 계획기간 무상 할당비율을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1년 4월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에 구성된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환경단체·산업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 총 7 차례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2012년 5월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재적 151명, 찬성 148명, 기권 3명)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를 달성하고, 고탄소·저효율 경제구조를 저탄소·고효율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후속조치로서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배출권 할당·관리 주무관청, 무상할당 비율, 조기감축 실적 및 상쇄 인정비율,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 등 핵심 쟁점을 포함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시행령 제정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법제연구원)을 바탕으로 배출권 할당·거래·상쇄 3개 분야에 관해 학계 등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6차례 포럼을 개최했고, 산업계 및 협회, NGO와 10여 차례 의견수렴과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무관청을 어느 부처로 하느냐를 두고 환경부와 지경부·국토부·농림부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2012년 7월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조정했다. 조정결과 주무관청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되, 지경부·국토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즉, 업체별 할당량 결정과정에서 관계부처에서 민간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공동작업반(반장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을 설치하고 산하 각 부문별 실무작업반에서 업체별 할당량 시안을 만든 후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관계부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 위원 : 관계부처 국장급)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유상할당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부담 감을 위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를 무상할당하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97%를 무상할당, 3%만 유상할당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획기간에 관계없이 100% 무상할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들이 외국 기업

과의 경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했다. 국무총리실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와 산업계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보완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2년 11월 15일 법률과 함께 시행했다.

3.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추동력 확보

1) 녹색성장 이행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6월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시 그간 논의되었던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성과 점검을 지시했고, 김황식 국무총리 또한 2011년 5월 OECD 각료이사회 후 녹색성장정책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주요 핵심 녹색성장과제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매월 국무총리 주재 이행점검회의에 상정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마련토록 조치했다.

2011년 9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이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 및 그린카 산업발전과제를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 이후로도 매월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여 점검한 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재 보고대회를 통해 점검결과를 보고함으로써 2012년 11월 현재까지 총 11차례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점검을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정책들은 신재생에너지, LED, 전기차, 녹색생활, 녹색기술 R&D, 녹색금융, 녹색 ODA, 물산업, 녹색소비,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녹색성장정책 전반을 포함했고, 녹색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에 대해 추진방향의 타당성, 목표달성 가능성, 현장체험도 등을 집중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점검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이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했다.



2) 녹색성장 특정평가

국무총리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정책에 대해 수행하는 특정평가에 2009년부터 녹색성장과제를 포함하여 실시했다.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동법 제

12조에 따라 녹색성장 과제에 대한 점검·평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국무총리실 내 평가 주관부서도 정책분석평가실에서 녹색성장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운영2실로 변경되었다.

녹색성장 특정평가는 매년 연초에 각 평가대상 부처로부터 평가대상 과제(안)을 제출받아 ‘특정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 시행했다. 평가대상 과제(안)에 대해서는 녹색성장정책에 관해 경험과 지식이 깊은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민간평가단을 구성한 후, 평가대상 부처 담당자가 참석하는 ‘평가과제 설명회’를 개최, 평가대상 과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평가대상과제를 확정했다. 이렇게 확정된 평가과제에 대해 각 부처로부터 당해 연도의 추진실적(10월 말 기준)을 제출받은 후, 11월에 부처별 추진 실적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평가단이 분과별로 토론을 거쳐 우수·미흡사례 및 우수·미흡기관을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평가를 실시했다. 최종 평가결과는 12월에 녹색성장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각 부처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게 하고 그 여부를 확인하는 등 평가결과를 환류하도록 했다.

특히 2012년도에는 녹색성장 비전선포(2008.8.15) 이후 4년 성과를 마무리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녹색성장 성과 및 국민체감도를 집중 점검·평가함으로써 정책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평가의 목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부처별이 아닌 정책분야별로 과제 추진실적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각 부처의 녹색성장 정책과제를 그 내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기술, 녹색생활 실천, 기후변화 적응 및 국제협력 등의 정책분야로 구분했고, 민간평가단도 정책분야에 따라 5개 분과(녹색산업·기술분야를 2개 분과로 구성)로 구성하여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3)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총괄관리 및 국가승인

원래 ‘청정개발체제(CDM⁹⁾)’ 사업이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 및 기업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획득한 탄소배출권(CER¹⁰)을 자국의 감축의무 달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2005년부터 개도국 스스로 CDM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직접 CDM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CDM사업은 국가가 추진 주체이나 현실적으로는 각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 참여했다.

CDM사업은 사업발굴 단계부터 탄소배출권(CER) 발행까지 총 7단계로 진행되는데, ①사업개발(사업자) → ②국가승인(국가승인기구, DNA) → ③타당성 평가(운영기구, DOE) → ④등록(UN CDM EB) → ⑤모니터링(사업자) → ⑥검증 및 인증(운영기구, DOE) → ⑦탄소배출권(CER) 발행(UN CDM EB)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국가승인은 사업자가 신청한 프로젝트가 CDM사업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과정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개발체제(CDM) 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위원 : 환경부·지경부 등 8개 부처 국장급)에서 국가승인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12년 10월 현재까지 총 117건¹¹⁾의 CDM사업을 국가승인했으며, 이중 73건이 UN에 등록¹²⁾되어 있다. UN에 등록을 완료한 우리나라의 주요 CDM으로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100MW), 수도권 매립지 메탄가스 발전(50MW)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온산 로디아 N2O 회수·소각사업, 삼성전자 및 LG의 LCD 제조공정에서의 SF6 감축사업 등이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CDM 국가승인기구를 운영하는 CDM 총괄기관으로서, 국내 기업들이 5MW 이하의 극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을 CDM 등록하는 데 심사를 간소화해줄도록 UN CDM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에 요청했으며, 환경부의 목표관리제 지침을 개정,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CDM사업에 따른 배출권(CER) 획득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4. 녹색성장 정책조정 및 총괄업무 수행

1) 온실가스 감축 추진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각 분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 녹색산업·기술 육성 등 각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나감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다했다.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정부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7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합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감축잠재

9)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0)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CDM사업을 통한 감축실적에 대해 UN이 발행하는 탄소배출권

11) 전 세계로는 총 4,034건의 사업이 UN에 등록

12) 등록건수 기준으로 세계 8위, 온실가스 연간 예상감축량 기준으로는 세계 4위 (1억9,500CO₂ 규모(약 1,463억원, 1CER=€5 기준))

량 분석 등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2009년 7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2009년 8월 4일, 2020년 BAU 대비 각각 21%(1안), 27%(2안), 30%(3안) 감축을 목표로 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으며, 국무총리실은 감축목표 설정이 국민생활은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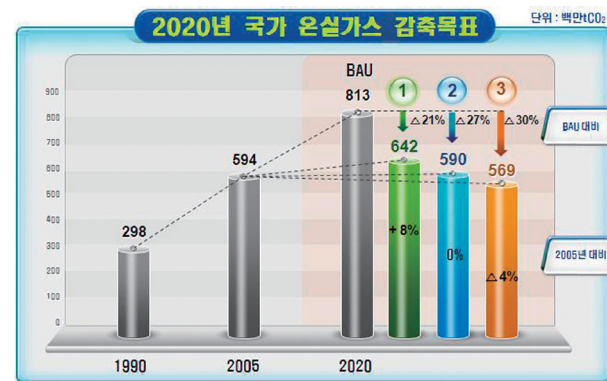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 후 3개월간 산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과 80여 차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2009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확정되었다. 이는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마련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이며, 국제사회가 IPCC(기후변화에 관한 UN 산하 과학자 그룹)의 권고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 수준이다.

이는 또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국무회의”라고 평가한 바 있다.

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정부는 2009년 1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문별 감축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산업, 건물, 교통, 농업, 폐기물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고, 업종별 감축목표는 산업부문 내에서 철강, 자동차, 전자,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업종별로 다시 나눈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는 부문별로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5년 단위 연도별 감축목표와 함께 산업계와 국민에게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부여하는 세부 목표의 근거가 되었다.

국무총리실은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초안분석, 정부안 마련,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하기까지 정책을 조율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다.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하여 정부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업종(철강, 자동차, 석유, 시멘트 등 9개)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산업계·NGO 간담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는 2011년 7월 부문별·업종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목표는 수송부문 34.3%, 건물부문 26.9%, 공공부문 25%, 산업부문 18.2%, 폐기물부문 12.3%, 농업어업부문 5.2% 등이다.

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 또는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계획과 관리체계 등을 마련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협약(VA)을 도입·시행했으나, 그동안 참여기업의 보수적인 목표설정과 낮은 관심 등으로 실적이 미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유가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협약을 강화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다배출사업장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목표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0년 4월 녹색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11년 3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환경부 고시)’을 제정했다. 국무총리실은 지침의 초안단계부터 총괄기관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원활한 협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독려했다. 개별 기업들의 온실가스·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에 불과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1년 7월 목표관리제 시행 대상업체로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497개 업체를 지정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012년 본격 시행되었으며, 국무총리실은 녹색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목표관리제 이행결과를 점검했다. 공공부문의 감축목표는 2011년도에 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6% 감축, 2015년도 20% 감축인데, 2012년 7월 2011년도 공공부문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5.6%의 감축실적을 보여 목표치(6%)를 거의 달성했고, 일부 시·도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배출량을 크게 감축했다. 이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7월 국무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감축활동에 관한 행태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2) 녹색산업·기술정책 지원

가. 녹색산업·기술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을 통하여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육성에 관한 각종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녹색산업·기술육성과 관련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 입법적·정책적인 지원 노력을 했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정책과 제도가 원활히 이행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기획단과 함께 2011년 9월부터 국무총리 주재 이행점검회의를 10차례 개최, 그동안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각 부처의 범정부적인 노력에 따라 녹색기술 R&D에 대한 정부투자가 확대(2008년 1조4,000억원→2011년 2조5,000억원)되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었다.

그 결과, 태양광, 2차전지 등 27대 중점 녹색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2009년 50.9%에서 2011년 77.7% 수준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간부문의 투자도 확대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0대 그룹 녹색투자 총액은 15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74.5%가 증가했다.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 도출되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07~2010년 고용 3.7배, 매출액 6.5배, 수출액 7.3배, 민간투자 5.1배 증가했다. 그 밖에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2011.4),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2011.11, 시화호), 세계 두 번째 양산형 전기자동차 개발, 세계 2위의 LED 소자 생산국으로 등극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나.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마련

2009년 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했는데, 동 개선방안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연비(17km/L) 및 온실가스(140g/km)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그런데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위반을 제재하는 법개정을 둘러싸고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제재조항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2010년 4~5월 세 차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설정과 관련된 사항은 지경부와 환경부의 통합고시로 규정하고, 업체에 대한 제재근거·수단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고시 제정 이후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조정했다.

3) 녹색국가로서의 위상제고 추진

가. OECD와의 녹색성장 협력 강화

2010년 10월 우리나라는 OECD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는 OECD 설립 50주년 및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 이사회에 참석, '녹색성장 세션'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가 공동체로서 녹색성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녹색성장 선도국인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을 널리 소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이러한 노력은 2010년에 OECD 원조 공여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등 OECD 중견 회원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와 OECD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 GGGI(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화

정부는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녹색성장전략과 정책을 개도국에 전달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 6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했다. GGGI(초대의장 :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자산으로 확립하기 위한 'Think & Act Tank'로서, 녹색성장 모델의 개발·전파모델 마련,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사업 추진,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업무로 정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설립을 주도한 GGGI를 국제기구화하기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 노력하여 덴마크 코펜하겐과 UAE 아부다비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우리나라 외에 덴마크·UAE·영국·독일·일본·호주 등 6개국으로부터 기여금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포럼(GGGF)에 참석, 덴마크를 비롯한 관계 국가에 대해 GGGI의 국제기구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GGGI는 2012년 10월 현재까지 총 18개국이 서명하고 4개국이 비준했으며, 마침내 2012년 10월 23일 국제기구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다.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2010년 제16차 칸쿰 기후변화총회(COP 16)에서 세계 각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동 기금을 GCF(Green Climate Fund)로 명명했다. GCF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규모 때문에 기후변화의 World Bank로 불리며, 그 사무국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와 독일·스위스 등 총 6개국이 경쟁했다.

우리나라는 UN 기후변화협약 등 많은 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본과 수많은 국제기구를 갖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와 경쟁하여 당초 유치 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막판 설득으로 2012년 10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2차 GCF 이사회에서 녹색기후기금(GCF)¹³⁾ 사무국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13)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기후변화 장기재원 중 상당부분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할 예정이다. 장기재원은 공공·민간재원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나감에,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CF 사무국 유치는 우리나라로서는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를 처음 유치하는 역사적인 성과로써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녹색성장 노력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국제사회가 공감한 결과라고 하겠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2012년 10월 덴마크 공식 방문 시 덴마크 총리에게 우리나라의 GCF 사무국 유치노력을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개도국에 녹색성장을 전파할 GGGI, 녹색기술 연구·전파를 담당할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 녹색성장 전략-자본-기술로 이어지는 그린 트라이앵글(Green Triangle)을 완성하게 되었다. 또한 GCF 유치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녹색성장 선도국임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금융, 관광, 컨벤션, 국제협력 등 각종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교육, 의료, 문화 등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더욱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국운상승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대비 녹색성장 추진일지

【녹색성장 추진체계 확립】

일 자	주 요 내 용
2001.9.20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2007.7.23	■ 기후변화대응기획단 설치
2008.9.15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9.1.5	■ 녹색성장기획단 설치
2009.1.5	■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녹색성장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일 자	주 요 내 용
2010.1.13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10.4.13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10.11.25	■ 배출권거래제 도입 관련 관계차관회의
2011.2.9	■ 배출권거래제 도입 관련 관계장관회의
2011.4.15	■ 배출권거래제 법안 국회 제출
2012.5.14	■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2012.7.10, 7.16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 관련 관계차관회의
2012.11.15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

*「배출권거래제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절 공정사회 구현

1. 국정기조로서의 공정사회 대두와 정책화

1) 공정사회의 개념과 특징

공정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로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 원칙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하면서 화두가 되었다. 경축사에 나타난 ‘공정사회’의 핵심적인 지향 가치는 자유와 창의 존중,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패자부활 기회 부여, 약자 배려와 공동체 의식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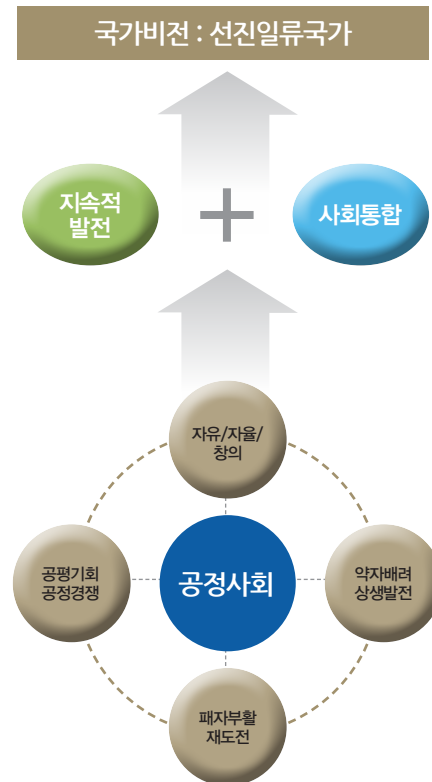
핵심적 지향가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공정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최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각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기여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구조를 지향한다.

둘째, 공정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모든 개인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사회이다. 이는 출발과 과정에서 특권과 편법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책임지는 것을 요구한다.

셋째, 공정사회는 ‘패자부활’과 제도전이 가능한 열린 사회를 의미한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일어선 사람은 더 높이 올라설 수 있게 하며 계층이동이 가능하여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사회이다.

넷째, 공정사회는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유대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이 충만한 사회이다. 취약계층과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시민사회가 배려하며, 도시와 지방, 노동자와 사용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러한 공정사회의 핵심 가치는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한 과제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갈등과 격차를 완화하고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자유·창의 존중과 공정한 경쟁은 역동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 패자부활과 약자배려는 분열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가져올 것이다.

2) 공정사회의 대두 배경

가. 압축발전과 고도성장의 그림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¹⁴⁾, 1인당 소득 2만달러 달성¹⁵⁾ 등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¹⁶⁾도 실현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불과 60여 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성장에 집중된 나머지 사회 곳곳의 어두운 면을 지나쳐 온 것도 사실이다. ‘빨리빨리’리는 결과 중시 풍토가 사회 곳곳에 깊이 파고든 반면,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은 취약한 까닭에 결과에 대한 불복이 만연하여 사회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감소, 소외감과 상대적 빈곤층 증가, OECD 국가 중 높은 자살률, 낮은 행복지수 등 사회적 위험 요소¹⁷⁾가 상존하고 있다.

나.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는 길

우리는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고도성장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했지만, 개인의 자율과 책임 및 공동체 의식은 아직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결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 성숙한 시민의식과 수준 높은 국격에 기반한 선진국가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 되었다. 편법과 반칙 등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하고, 사회갈등과 격차가 증폭된다면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공정사회’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자 실현시켜야 하는 가치이다.

다. ‘공정사회’는 이명박 정부의 구체화된 국정목표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구현을 국정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활기찬 시장경제’와 ‘친서민 중도실용’을 핵심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공정사회는 개인의 창의와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더불어 더 넓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호공존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정지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14) 인구 5,000만명 이상이고 1인당 소득 2만달러 이상인 선진 7개국(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의 일원, 무역 1조달러 클럽(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한국), IT 정보화 선두주자, 45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국토는 세계의 0.1%에 불과하나 경제영토는 세계의 60%를 차지

15) 201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591달러

16)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발표한 것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6개국(The Economist, 2010)

17) 조선일보의 조사(2011.1.1)에 의하면 행복자 비율이 1992년 77.9%에서 2010년 70.3%로 하락했다. 이는 베트남 83.6%에도 미달하며, 동아일보 조사(2011.1.1)에 따르면 한국의 공존점수는 100점 만점에 50.99점에 불과하다.

3) 실천방향 모색과 추진체계

가. 실천방향의 모색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경축사에서 국정운영기조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제시한 데 이어 8월 27일 확대비서관회의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천은 정책을 마련할 때와 일상생활을 할 때 2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뤄져야 한다”며, “실천할 수 있고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9월 27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일시적 구호가 아니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 운영의 중심기조이고 다음 정권까지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각 부처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조직의 특성에 맞게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사회 기준에 맞는지’를 발굴하여 공정사회에 맞는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9월 28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국정과제전략협의회’에서 ‘공정한 사회 추진과제 발굴 및 공감대 확산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2010년 10월 1일 제41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김황식 국무총리도 취임사에서 “오랫동안 제가 품어온 소망 또한 ‘자유가 들쭉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는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공감대 확산 노력

정부의 공정사회 추진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언론에서도 ‘공정사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10년 8월부터 9월 초에 이르는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비리와 전 외교부장관 딸의 특채 사건이 맞물리면서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국민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다.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40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연일 화제를 모았고, 〈슈퍼스타 K2〉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환풍기 수리공 출신인 허각이 우승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분출되고 있었다.

이즈음 실시된 ‘공정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 약 70%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라고 응답했다. 코리아리서치 센터와 동아일보가 실시(2010.9.10)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17.2%, 대체로 불공정 53.2%)’고 응답한 비율이 ‘공정하다(매우 공정 2%, 대체로 공정 24.4%)’고 답한 비율보다 44%p 높게 나타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중앙일보·KDI가 공동으로 실시(2011.2)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공정성 점수는 53.3점이고, 불공정한 사례나 관행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분야로는 정치계(31.2%), 법조계(14%), 언론계(12.1%)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정책기조로서 ‘공정한 사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62.8%였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사 결과, 공정한 사회 구현에 대한 계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4.1%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공정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출처	문항 및 응답 결과
헤럴드경제 20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확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27.3%),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21.4%),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17.8%), 사회적 특권의 폐지(9.5%)순
동아일보 20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공존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느끼는 공존 점수는 100점 만점에 50.99점 - 원리와 원칙이 살아 있고 부정이 없는 공정사회 점수는 48.95점 ■ 우리 사회의 공존을 저해하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층의 부도덕(40.7%), 부의 편중과 세습, 빈부격차(28.3%), 교육 복지제도의 불합리·불평등(12.2%), 지역 편중(11.3%)
넬슨컴퍼니 코리아 2010.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서울 및 4대 광역시 거주 성인남녀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부 간의 갈등(93.6%), 진보와 보수(88.1%), 노사 간의 갈등(86%)
문화일보 2010.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사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19세 청소년 211명 면접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류층의 솔선수범(37.9%),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25.6%), 법 준수(12.8%) ■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수준(성인남녀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진국 수준(44.4%), 선진국 진입 수준(37.3%), 선진국 수준(5.3%), 후진국 수준(6.2%), 중진국 진입 수준(5.6%)
내일신문·한길리서치 2010.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사회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76.5%가 교육·채용·인사 등에서 공정하지 않다 -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공정(51.3%)’, 대졸 이상에서는 ‘불공정(90.7%)’, ‘공정(8.8%)’
동아일보 2010.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지도층 솔선수범(35.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21.4%),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 운영(20.2%), 학연·지연·혈연 등의 타파(18.3%)
문화일보 2010.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권력층의 실천의지와 솔선수범(33.1%),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28.1%), 약자에 대한 배려(15.8%), 불공정을 묵인하는 국민의식 개선(10.9%), 공정한 법과 제도의 마련(10.1%)

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과제발굴 노력

이러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추진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2010년 10월 4일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내부토론을 거쳐 발굴하도록 각 부처에 발굴지침을 전파했다. 이를 위해 10월 5일 청와대 정책기획관 주재로 KDI·KIEP·조세정책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교육·노동·산업 등 주요 분야 연구원장과 연구회 이사장, 국무총리실 등이 참석한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10월까지 연구기관별로 '공정한 사회' 관련분야 중·장기 중점추진 필요과제를 선정·발굴하는 한편, 향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정책과제 발굴과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10월 6일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주관하여 재정·행안·교육·복지·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실무 TF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이 실시되어 8·15 경축사 후속조치과제와의 연계, 정책과제와 실천과제를 구분하여 발굴, 2011년도 연두업무보고와의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공정한 사회' 정책과제 발굴과 체계적인 통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차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1급이 참석하는 '공정사회 실천 TF'를 구성·운영하여 각 부처의 추진계획을 총괄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행안·교육·복지 등 공정사회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실무 TF'를 수시로 운영하여 실무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관별 실정을 감안해 공정사회 추진 관련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10월 6일 논의된 '실무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과 협의하여 10월 7일 추진과제 발굴지침을 보완·시달했다. 정책과제와 실천과제를 구분하여 발굴하되, 실천과제는 '나눔과 봉사'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행동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정책과제 선정기준으로서 ①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는 법제도·의식·관행 ②공정사회

를 위해 심화·발전시킬 과제를 위해 심화·발전시킬 과제 ③글로벌 스탠다드 충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발굴하기로 했고, 실천과제로는 나눔·봉사 등 실생활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0년 내 도입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2011년 이후 도입·추진할 과제인 중

장기 과제로 분류토록 했다.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작성기조로는 첫째, 균등한 기회 보장, 반칙과 특권의 배제, 사회적 약자(경쟁탈락자 등)에 대한 배려 등 '공정사회'의 기본이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각 부처 업무특성을 나타내며 공감대 확산의 촉매역할을 할 과제와 특히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둘째로, 가급적 신규과제 중심으로 선정하되, 8·15 경축사 후속조치를 포함하는 기존의 모든 과제를 포함하여 구체적·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셋째로, 사회지도층의 출신수범 등 긍정적·발전적 롤 모델을 확산하고 부정적·갈등적 측면을 최소화하여 상생·동반·사회통합 등 순기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축소 지향적 공정이 아닌 '확대 균형적' 공정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한 과제의 수는 기관별로 적절히 선정하되 부처는 5개, 청은 2~3개 내외로 하기로 했다. 직원토론회·연찬회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내부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2011년도 업무계획'에 공정사회 추진과제를 주요내용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부처별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추진과 아울러 국무총리실 내부에서도 실별 국·과장 참석하에 내부토론회를 개최하여 과제발굴에 나섰다. 2010년 10월 15일 국무차장 주재로 과제발굴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열어 실별로 균등한 기회 보장, 반칙과 특권 폐지 등 실별 대표과제로서 정책과제를 1~2개, 실생활 속에서 가시화 될 수 있는 실천과제를 1개 발굴했다. 10월 20일, 국무차장 주재로 기재부·특임장관실 등 22개 기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제1차 '공정사회 TF'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등 일부 과제가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친서민정책과 중첩되기 때문에 공정사회와 관련은 있으나 제외하기로 하고,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항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지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상적 정무기능을 과제로 포함하는 것은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네이밍을 하며, 과제의 레벨과 위상에 대해 부처별로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과제·부처별 대표과제·부처 자체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과제를 분류하고, 정부와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하기로 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먼저 정부·공공기관의 파워유저(핵심인력)를 육성하고, 모범 실무(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벤치마킹을 유도했다. 청와대 정책기획관 주재로 과천(9.16)·광화문(9.29)·대전정부청사(9.30)에서 각 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공정사회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공공기관과 산하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간담회도 개최되었다. 이후 각 부처·공공기관에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10.21, 국토부), 과장급 이하 직장교육(9~10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되었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통계연수원 등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공정사회' 교육과정(교수요원 및 5급 등 재직자 대상)도 개설되었다.



학계 및 언론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2010년 12월 7일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주관하여 동아일보와 함께 ‘공정사회와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사회와 세계화’, ‘공정사회와 기업’, ‘공정사회와 기회균등 : 교육 및 인력개발 강조’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12월 9일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국무총리실과 중앙일보가 후원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5개 국책연구원이 참여하는 제4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가 ‘공정한 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총 다섯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별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는데, ‘더불어 사는 공정한 사회’, ‘법질서 선진화와 사회적 신뢰구축’, ‘공정한 사회와 서민복지’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2011년 3월, 『페어소사이어티』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집필진은 정책 분야별(정치·경제·복지·노동·교육·사회 등)로 전문가 10인(김주성·이승훈·이우진·박길성·안상훈·김태기·정용덕 교수 등)이 참여했다. 『페어소사이어티』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론적·철학적 토대와 함께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공무원의 정책 수립 및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했다.

4)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선정

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검토·논의

각 부처에서는 부처의 업무가 공정사회 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공정사회에 부합하도록 ‘정책 목표’를 재설정하고, ‘정책수단’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공정사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방향으로 선정된 이후, 과거라면 그냥 지나쳤던 문제들을 공정의 잣대를 통해 하나씩 개선했다.

각 부처는 실천과제를 확정하기 위해 정부기관, 국책연구기관, 국회, 시민단체, 언론, 트위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기관·국책연구기관 제출과제 283개, 국회·시민단체·언론 등 제기과제 111개, 일반국민·네티즌·트위터 등 제안과제 43개 등 총 442개의 과제가 발굴되었다. 국무총리실은 트위터(@PrimeministerKR)를 통해 정책제안을 공모(2010.11.16~23)했고, 행정안전부(2010.12~2011.2)와 환경부(2010.11.15~12.5), 공정거래위원회(2011.1.24~2.22)에서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했다. 실천과제의 선정기준으로는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체감도가 높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제도·관행 개선과제 중심으로 발굴하고자 했으며, 재원조달 등 실천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는 제외했다. 또한 사회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2010년 12월 9일 제70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상정하여 중점과제와 과제 추진방식을 토론했고, 2011년 1월 13일 국무총리실 국정운영 1실장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TF’를 개최하여 부처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1월 14일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한 사회」 추진계획’을 상정하여 추진 기본계획 및 추진과제, 추진체계 및 관리, 홍보 및 공감대 확산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공정사회의 목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였다. 추진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사회적 과급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핵심적인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참여와 협력(정부는 불공정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관행을 개혁하며, 민간은 법·질서 준수 등 의식을 선진화하고 나눔과 배려문화를 정착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추진 노력), 전략적 접근(제도·규제개혁 등 단기해결 가능과제를 집중추진할 추동력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관행·문화 개선 등 중장기 추진 과제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등 3가지 전략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5대 분야의 안(1)공정하고도 엄정한 법집행과 부패척결 (2)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사회적 차별의 시정 (3)편법 배제와 정당한 권리·의무 행사 (4)약자 배려와 재기의 기회 보장 (5)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85개의 추진과제가 정리되었다.

정부기관, 국책연구기관, 국회, 시민단체, 언론, 트위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방향을 정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2010년 12월 9일 제70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상정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계획’에서는 공정사회 추진방향을 ①입학·채용의 기회 균등 확대 ②공평한 국방·납세 의무의 이행 ③공정한 법집행과 따뜻한 법치 구현 ④공정한 경쟁시장구조 조성 ⑤일상생활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 ⑥사회적 약자의 보호 ⑦재기의 기회 지원 ⑧공직윤리 확립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 ⑨사회병리의 근절 등 9개 분야로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서 9개 분야는 조금 많다는 지적이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부처가 제출한 과제의 세부내용들이 기존에 하던 대로 업무계획을 낸 경우가 많아 좀 더 창의성을 발휘하여 내용을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정부가 모든 일을 망라할 수는 없으므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정부 전체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

2011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박효중(서울대), 박찬욱(서울대), 윤평중(한신대)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정사회가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며, 큰 욕심 내지 않고 차분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전체 틀을 잡아서 점검·추진해나가며 적절치 않은 것은 빼내고 융통성·탄력성 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2월 7~9일 사흘 연속으로 국무총리 주재하에 ‘공정사회’ 실천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간부 격려,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기관별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2월 7일에는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대한 대응,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대처, 피의사실 공표 문제, 영장항고제, 양형기준, 일수벌금제, 서면, 외국인 정책 등이 논의되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인사·법집행·수사·재판과정에서의 공정문제가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공정문제로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을 전제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관예우·유전범죄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제하고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서 바꾸어나가는 노력·의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2월 8일에는 국세청장, 차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국세청 간부 오찬이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되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정한 세정의 문제는 인사 및 수사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핵심적인 공정문제”이므로 “고질적인 탈루·은닉자와 고리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되, 성실한 납세자는 발굴 홍보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펼쳐 주실 것”을 요청했다.

2월 9일 개최된 경찰청 간부 오찬에서도 경찰청 청장, 차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는 법과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이 ‘공평한 법집행’을 통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며, “불법 폭력시위, 각종 비리, 공무집행사범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되, 서민대상 범죄 근절,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친서민 경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다. 공정한 사회 기본계획 확정

국무총리실은 2월 17일(목)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러한 내용과 추진방식·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부처에서 공정한 사회 실천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사항 등을 점검하고,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국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 및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와 함께 하도급, 전관예우 등 기득권층의 우월적 지위 및 특권과 관련된 과제를 중심으로 8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5대 추진방향별로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의 생활현장과 사회 및 직장에서 불공평·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안들을 선별하여 80개 추진과제를 엄선했다.

【 5대 추진방향과 주요과제 】

5대 추진방향		주요과제
1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부패척결과 공직윤리 강화,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구형, 구속기준 확립 등
2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개선, 입학사정관제 투명화·내실화, 지역인재·취업기회 확대 등
3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고소득층 세원 투명성 및 탈세관리 강화,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등
4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서민금융 공급확대 및 사금융에 의한 피해 방지 등
5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벌금 부과, 실패한 중소기업인·위기청소년·출소자 등의 재기의 기회 보장, 지식·재산·재능 등의 기부·나눔문화 확산 등

【 8대 중점과제 】

- ①공정과제와 성실납세 ②전관예우성 관행개선 ③교육희망사다리 구축 ④공정한 병역의무
- ⑤공정·투명한 공직인사 ⑥열린 고용사회 구현 ⑦일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 ⑧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고, 각 부처가 민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협의했다. 또한 공정사회 실현의 핵심 성공요소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선진시민의식 함양, 생활 주변의 불공정사례 개선 등에도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개선방안 등이 보고되어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 이후, 2011년 3월 10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TF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공정한 사회 추진과제 실행계획 및 중점과제 추진계획,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이 보고되어 토론이 이루어졌다.

라. 공정납세, 성실납세 대책

2011년 3월 31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의 주제는 ‘공정납세, 성실납세’였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납세자의 성실납세의식 향상, 신용카드 거래 보편화 및 현금영수증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등으로 변호사, 의사,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금액과 세금이 성실하게 신고·납부되는 추세이지만,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금거래,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탈루한 세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국민들,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해당되는 근로소득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마.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2011년 6월 3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는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을 주제로 논의했다. ‘전관예우(前官禮遇)’란 퇴직 관·검사가 변호사 개업 시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 또는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직 시와 동일하게 대우해주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 변호사법 등을 통해 ‘전관’의 영향력 행사를 규제해왔다.

최근 ‘들쭉날쭉한 구속기준과 양형’ 등 법조계 전관예우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특권의 잔재로서 사법불신의 중요한 이유로 인식되어왔다. 정부는 전관예우 관행이 정부정책 결정이나 민간시장 질서를 왜곡시켜 국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공정사회 구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관예우 관행의 원인을 취업 후 청탁·알선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없고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퇴직공직자와 재직자 간 유착가능성의 차단을 위해 미국 등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취업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바. 열린 고용사회 구현

2011년 9월 3일 개최된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의 주제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고졸출신으로 ‘선 취업 후 진학’을 하여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 학력으로 인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고졸출신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의 움직임은 볼 때 우리 사회는 학력편견에 대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30대 그룹 총수들이 고졸출신을 적극 채용하고 인재로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등 좋은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논의된 각종 학력차별 완화에 대한 대책들은 일시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정부 혼자 학력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사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하려는 학교의 노력,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움직임 등이 함께 확산될 때 우리 사회의 학력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력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했다. 공정사회 8대 중점과제 중 나머지 과제인,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2011.11), 공정한 병역의무(2011.11), 일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2011. 12), 공정거래 문화 조성 및 공정·투명한 공직인사(2011.12)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방향 및 세부실천내용을 확정했다. 8대 중점과제 외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공정환경(2011.5), 취약근로자 근로개선(2011.7) 등 80개 실천과제도 각 부처 주관으로 추진했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약 60개 과제를 논의했다.

2. 공정사회 5대 방향과 정책과제

1.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구분	주요 내용
복지·의료체계 공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부정수급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공무원 4,060명 확충(2011년 1,060명, 2012년 3,000명), 시·군·구별 복지대상자 정보와 전산시스템을 통합하여 전국단일 DB로 구축 ■ 과다의료 이용자·장기입원자 관리 강화 및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최종대상자 결정 및 관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중복투약자가 사업 전 867명에서 사업 후 310명으로 감소
법질서 경시풍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합법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파업은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관철 등으로 불법집회·시위 및 노사분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권 집회시위를 「원천금지 ⇒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으로 방침 변경 * 신고된 집회 27만8,053건 중 25만2,537건(90.9%)에 대해 MOU 체결(2011.2~2012.10) * 집회시위 금지통고율(2011.2~2012.10), 전 3년 평균 대비 57.8% 감소 ▶ 합법축진 불법필벌 시행 후(2011.1~2012.10) 전 3년 평균 대비 전체집회 34.1%, 불법폭력시위 18.7%, 경찰부상자 65.9% 감소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3.29)·시행(9.30)을 통한 공공·민간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불이익 원상회복 등 보호장치 마련(법 위반 시 최대 3년·3,000만원 부과), 국가·지자체에 수입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최대 10억원), 피해 발생 시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 접수(1,206건)·처리(908건), 보호신청 15건 중 신분보장(3건)·신변보호(1건) 등 보호조치, 보상금 총 712만원(6건) 지급(2012.10 현재)
집행·심사·보상 등의 공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심사의 공정성 제고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심사와 상이판정을 일원화, 기록판독 실명제 마련 등 ■ 보험범죄 제재 강화 등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범죄 전담검사제 확대 및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FAS) 개선,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기준 마련 ▶ 2012.1.1~9.30 총 2,475건 6,832명 검거, 115명 구속(범죄금액 879억6,600만원)

2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구분	주요 내용
열린 고용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로 '선 취업 후 진학'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특별전형 시행대학(2010학년도 3개교 → 2013학년도 67개교) ■ 취업중심의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정착 가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취업률(2009년 16.7% → 2012년 37.5%), 2013년 2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취업희망률 59.0%(2012.2 졸업자 대비 16.5% 상승),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지원업무협약(38건, 2012.10 기준)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기회 보장 및 온종일 돌봄·교육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돌봄교실(2008년 2,962개교 3,334교실 → 2012년 5,652개교 7,086교실) ■ 다문화·장애학생 지원 및 소외계층 예술·체육 영재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과정 마련(2012.7), 이중언어강사 확대 배치(2011년 125명 → 2012년 242명), 학생오케스트라 확대(2011년 65개교 → 2012년 300개교) ■ 자율고 등 우수학교 정원의 일정 비율(자율고 20%, 마이스터고 10%)을 교육취약계층으로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마이스터고 입학자(2012년 472명 → 2013년 528명)
공직인사 공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 선발 확대(2005~2009년 매년 50명 → 2012년 80명) 및 취약계층 공직 진출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구분모집(2010년 298명 → 2012년 542명), 저소득층 구분모집(2010년 73명 → 2012년 376명), 기능인재 선발(2010년 30명 → 2012년 100명) ■ 채용제도 투명성 제고 및 인사관리·지자체 인사 공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시행(66개 직무분야, 103명 선발), 부처 주관 5급 외 채용시험 관리·감독 강화(2012년 704건 2,605명 사전협의 및 사후점검)
성·비정규직·장애인 등 고용 차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고위직으로의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용률(2008년 33.56% → 2012년 35.24%), 여성관리자비율(2008년 12.51% → 2012년 16.62%) ■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등에 대한 자율적 개선 유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20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고용평등감독관(2009년 3,843개소 4,250명 → 2012년 4,595개소 4,957명), 기간제·과건·사내하도급·용역 등 유형별로 총 7,866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범위반 6,301개소(3만1,000건) 적발, 6,018개소 시정완료

3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 없는 사회

구분	주요 내용
공정과세 성실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탈세 엄정 대처,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 강화 및 특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2012년 10월까지 2조1,193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8,641억원은 채권확보(재산압류, 소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조치(2010년 15건 → 2011년 50건 → 2012년 10월 152건) ■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한 철저한 신고 검증,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전문직 등에 대한 불성실신고 혐의자의 신고 후 검증을 통해 1조3,301억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287억원 부과(2011.2~2012.10)
전관예우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행위제한제도 도입 및 현행 취업심사제도 보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 저축은행 부실사태 논란 후 금감원 임직원 취업 대폭 감소(2009년 26명, 2010년 25명, 2011년 4명, 2012년 3명), 취업제한위반자 형사고발(2건) 및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41건) ■ 민간인 참여 확대 등 공직자윤리위 심사기능 내실화 및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제한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한 위법사실 확인을 위해 공직퇴임변호사 총 783명 수임내역 점검, 20곳 내외 로펌으로부터 비변호사 고위퇴직공직자 명단, 활동내역 점검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전반의 특혜요인 제거 및 예산·기금 사용 투명화를 통한 특혜시비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사유(중학교 졸업 미만)로 인한 병역면제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공공기관의 금고지정 관련 협력사업비가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 용도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개선(2012.6)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권익 보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고용 사업장 4,625개소(2011.2~2012.10)를 점검하여 최저임금 위반 498건, 야간·휴일근로제한 위반 663건, 근로시간 미준수 334건 등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부담 공정성 제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9억 초과 고액재산 보유자 1만8,000명 피부양자 제외(2011.8 월평균 22만원), 상한선 상향조정으로 약 3,400명 보험료 추가부담(2011.7 월평균 30만원), 2012년에는 고소득 직장가입자 약 3만5,000명 보험료 163억원 부과(2012.9)

4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구분	주요 내용																																												
국민불편 법령·진입규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도입 등 국민불편법령 발굴 및 신속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국립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면제, 스키장 안전시설 세부기준 마련 등 신규과제 168건 발굴(2011.2~2012.11),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해 하위법령 특별정비 등을 추진하여 총 325건 국민불편법령 정비 완료(2011.2~2012.11) ■ 국민생활 밀접분야 진입규제 개선 및 불공정 약관·규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3개의 약관사건을 심사 및 처리하고, 아이폰 A/S 약관, 온라인 주요 사이트 개인정보약관 등 276건을 사업자의 자진시정으로 종료 																																												
가맹사업·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별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 및 자율규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업분야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제빵업종(2012.4), 피자·치킨업종(2012.7)의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 마련·시행 ■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차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총 512억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인하됨으로써 납품·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중소기업인 자생력 제고 등 중소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이양과 진입장벽 유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분야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2011.12),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분야 43개 업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중 ■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Fast-Track 제도 도입,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 서면교부 의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문화(2011.6.30 시행)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및 의약품 부정·비리 신고센터 설치 <p>【리베이트 적발 현황(2011.6~2012.6)】</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처분 의뢰 연도</th> <th colspan="5">제공자</th> <th colspan="3">수수자</th> </tr> <tr> <th>제약 회사</th> <th>의약품 도매상</th> <th>의료기기 제조업자</th> <th>기타 (마케팅 대행사 등)</th> <th>계</th> <th>의사</th> <th>약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56</td> <td>19</td> <td>2</td> <td>3</td> <td>80</td> <td>3,070</td> <td>2,565</td> <td>5,635</td> </tr> <tr> <td>2011.6</td> <td>39</td> <td>17</td> <td>-</td> <td>3</td> <td>59</td> <td>2,843</td> <td>2,340</td> <td>5,183</td> </tr> <tr> <td>2012</td> <td>17</td> <td>2</td> <td>2</td> <td>-</td> <td>21</td> <td>227</td> <td>225</td> <td>452</td> </tr> </tbody> </table>	처분 의뢰 연도	제공자					수수자			제약 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제조업자	기타 (마케팅 대행사 등)	계	의사	약사	계	전체	56	19	2	3	80	3,070	2,565	5,635	2011.6	39	17	-	3	59	2,843	2,340	5,183	2012	17	2	2	-	21	227	225	452
처분 의뢰 연도	제공자					수수자																																							
	제약 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제조업자	기타 (마케팅 대행사 등)	계	의사	약사	계																																					
전체	56	19	2	3	80	3,070	2,565	5,635																																					
2011.6	39	17	-	3	59	2,843	2,340	5,183																																					
2012	17	2	2	-	21	227	225	452																																					

5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구분	주요 내용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 복지 연계 강화를 위해 취업상담-직업훈련·직장적응력증진-취업알선의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 집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 기초생활수급자 참여(취업률, 탈수급률): 2009년 2,368명(38.9%, 57.5%) → 2010년 2,505명(38.6%, 54.7%) → 2011년 7,869명(40.8%, 41.9%) → 2012년 10월 9,261명(취업률 47.0%) ■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생활안정망 확충 등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2007년 36.9% → 2011년 49.7%), 생계급여 수급률(2007년 63.5% → 2011년 46.7%), 정규학교 중도탈락률(2007년 10.8% → 2011년 3.3%) ■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로 소외지역 주민의 권익보호 및 편익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7월 행정 등 15개 지소 설립, 2012년 7월 예산 등 9개 지소 설립, 2011년 법률상담 17만4,049건, 민사 법률구조 4,647건 지원, 2012년 9월 현재 법률상담 21만9,359건, 민사 법률구조 5,173건 지원
취약계층 권리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영세납세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2011년 2월부터 영세납세자를 위한 소액전담심판부 별도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처리기간(176일 → 127일), 소액 90일 이내 처리비율(34.9% → 47.9%) ■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강화,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상습체불사업주 구속수사: (2009년 2건 → 2012년 11월 17건),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을 통해 1,199개 사업장의 위반·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099개소를 점검하여 638개소 시정조치 ■ 경제·의료지원, 상담, 심리치유, 법률조력, 수사기관·법정동행, 범죄현장정리, 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95명의 피해자 지원(2012.10 기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최초로 '중상해' 인정 구조금 지급, 국민임대주택을 통한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16명 입주 완료)
기부·나눔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의 쉬운 나눔실천 제고 및 교육·재능기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1월까지 총 74개 주요 기업, 공공기관, 단체·협회 등과 교육기부 MOU 신규 체결, 저명 문화·예술인 100인의 명예교사 통한 155회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
실패 후 재기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기 중소기업인·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패한 중소기업인 2011년 2월~2012년 10월에 총 155명 신청, 120명 신용회복 지원, 재창업지원위원회 설립(2012.4), 1호 승인(2012.6) 이후 2012년 10월까지 총 27명이 신청하여 6명 지원 확정

3.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사회 건설

1) 지자체·공공기관의 공정사회 활동과 성과

가.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의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확산

① 추진배경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만날 일이 드물고 정부의 각종 정책을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반면, 출생·혼인·사망신고와 같이 중요한 가족사에서부터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할 일은 많아서 지방공무원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정책과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부정책들의 대다수는 최종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결국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의 공정성은 많은 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평가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인·허가 과정이나 행정처분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지방공무원 한명 한명이 보여주는 행태가 국민들이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 느끼는 척도가 된다. 한편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방자치의 역사가 20년을 넘어가면서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계속 높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정사회의 가치가 제대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년(成年)을 맞은 지방자치가 선진 지방자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지방행정의 공정성은 확보되어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사회의 비전과 가치를 지방에 전파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②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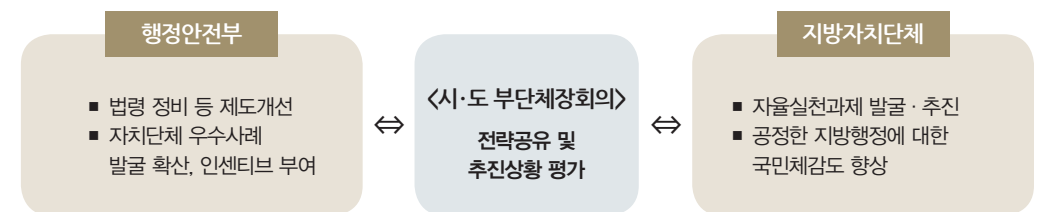
● **주민 체감도가 높은 7대 주요과제 선정**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10월 시·도 부단체장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가 합동 토론회(2010.10.21)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지방행정의 범위는 대단히 넓고 다양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했다. 또한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인지라, 일정한 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우선 주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 ‘사회적 배려’, ‘공직자 의식 선진화’ 등 4대 중점방향에 맞추어 7대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1년 2월 자치단체에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지방행정구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4대 방향 7대 주요과제】



●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한 실천과제 발굴·추진** 행정안전부는 매월 개최되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활용하여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2011년 2월 이후 총 5회에 걸쳐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그 결과 중앙-지방 간 원활한 협력하에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의 공정성 체감도 조사’를 2011년 3~8월에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의 불공정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한 지방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접하게 되는 각종 애로사항이나 각종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에 대해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16~20인으로 지방인사위원회 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사안별로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했다. 2011년 1월에는 지방공기업 임직원 채용절차와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지방자치



단체의 공정한 지방행정구현 추진계획'에 따라 시·도에서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자체 TF를 구성해 2011년 5월까지 420여 개의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했다. 2011년 9월에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정사회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고, 우수사례 선발을 추진하기도 했다. 시·도에서 총 160개의 사례를 접수, 서면심사를 거쳐 16개 사례를 선발했고, 워크숍을 통해 시도별 발표회를 열고 주부모니터단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날 선발된 6개 우수사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도, 민간보조금 보조기준 설정 및 성과평가 등 강화 (최우수)**
 - 124개 사업유형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도입하여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강화하고 2년간 457억원의 예산을 절감
 - 민간보조금 사업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민간보조금 예산에 반영
- **대전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건강카페 설치 (우수)**
 - 시청사 등 공공건물에 건강카페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직접 빵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2011년 3개 설치, 장애인 14명 고용)
- **경상북도, 불공정한 지방계약제도 관행 개선 (우수)**
 - 심사위원 평가점수 결과 공개, 계약금액별 평가위원 수 차등화를 통해 계약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제고
-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통합 및 경영혁신 (장려)**
 -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인천시 산하 4개의 공기업을 2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2015년까지 3,33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 **경기도, 조직과 직원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전보인사시스템 구축 (장려)**
 - 부서별 결원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직원 희망과 부서별 추천 등의 절차를 통해 전보인사 공정성 시비 요인을 사전에 해소
- **충청남도, 합의제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 (장려)**
 - 온정적 성향의 자체감사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비리 등을 엄격하게 감사·처리

나. 공공기관

① 추진배경

최근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공정한 사회 구현이 중요한 국정 과제로 대두되었다. 공공기관도 단순히 기관 설립 목적만을 달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사회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민간부문과 광범위하게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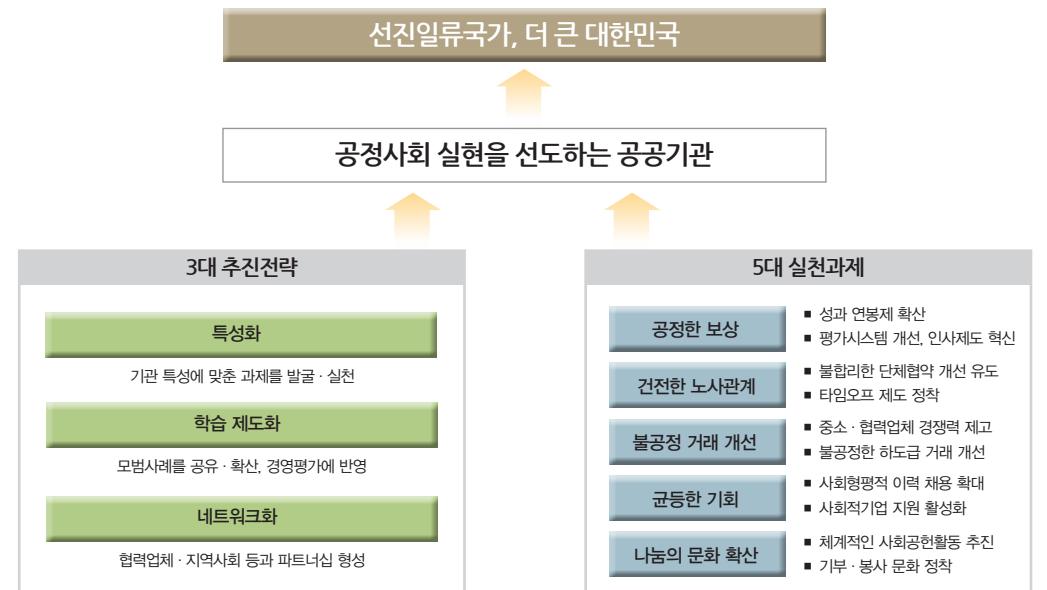
수립하고 실천적인 과제들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2011년 3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② 추진계획

● **추진전략** 공공기관들의 규모나 역할이 다양각색인 점을 감안할 때, 수많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건설·금융·연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기관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사회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특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즉 기관 고유 업무와 연계된 공정사회 실천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기관의 자율적인 활동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학습·제도화' 전략을 수립했다. 각 기관들이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셋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있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네트워크화'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 중소기업체나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 **실천과제** 공공기관들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보수체계와 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발전시켜 3대 추진전략의 틀 안에서 5대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공정한 보상, 건전한 노사관계, 불공정거래 개선, 균등한 기회, 나눔의 문화 확산이 그것이다. 이 중 공정한 보상과 건전한 노사관계는 공공기관의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여 공정사회를

【3대 추진전략과 5대 실천과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불공정거래 개선, 균등한 기회, 나눔의 문화 확산은 공공기관이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서 사회적 책임(CSR)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과 실천과제에 맞추어 공공기관에서는 각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과제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했고, 총 122개 공공기관에서 579개 과제를 추진했다.

● **추진체계** 공정사회 실천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에서는 공정사회 실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성과 및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2011년도에는 분기별 1회씩 총 네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공정사회 실천 추진 현황, 성과 및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개최 일시 및 주요 협의 내용】

협의회 일시	주요 협의 내용
제1차 협의회 (201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24개 기관별 실천과제 확정 ■ 불공정거래개선·동반성장 사례 및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력원자력의 공공기관-협력업체 간 인력 파견제 도입 등
제2차 협의회 (201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확대 방안 및 민간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공사의 열린채용 사례 및 애로사항 공유 등
제3차 협의회 (2011.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열린고용 및 나눔의 문화 확산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력원자력의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 계획 등
제4차 협의회 (2011.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추진성과 종합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외부에서 바라본 공공기관 공정사회 평가, 동반성장·열린채용 우수사례 등 공유

③ 추진실적

2011년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에 따라 122개 기관에서 수립한 579개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550개 과제(95%)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들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 **불공정 거래 개선**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석유공사는 자금조달 능력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공공기관 입찰경쟁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를 실시했다. 마사회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 등 8개 기관은 중소기업체들과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기관-중소협력업체 간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 **균등한 기회** 2011년도에는 공공기관들의 사회형평적 채용이 강화되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인원은 2010년도 89명에서 2011년도 280명으로 증가했다. 여성 채용인원도 늘어났다. 2010년에는 1,415명을 채용하는데 그쳤으나, 2011년에는 50.6% 증가한 2,131명을 채용했다.

● **나눔의 문화 확산**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지출액은 2010년 1,785억원에서 2011년 2,682억원으로 50.2% 증가했다. 또한 민간 사회적 기업의 물품과 용역에 대한 구매액수도 2010년 169억원에서 2011년 289억원으로 늘었다.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은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효과적인 기부·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2010년 44개에서 2011년 76개로 늘었고, 2011년에는 12개의 기관이 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 **공정사회 실천 우수 사례집 발간**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실천노트』를 발간했다. 동 책자는 공공기관들이 고졸 취업생, 중소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미있는 사례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외부 민간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0개 기관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했다. 각 사례들은 공공기관들이 공정사회 실천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과정을 생생한 이야기 형식으로 담아 읽는 이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실천노트」에 담긴 주요 우수 사례】

【열린 고용】 한국동서발전(주)의 마이스터고 채용할당제

한국동서발전은 2001년 공채부터 학력제한을 철폐했다. 그러나 채용현황을 자체분석한 결과, 고졸사원은 1명도 입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인 열린채용 방식이 오히려 학력·스펙을 기준으로 차별한 것이다. 이에 동서발전은 직무분석을 통해 고졸사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마이스터고 채용할당제'를 마련하여 고졸사원들을 채용했다. 승진·복리후생·임금 등에서도 대졸사원과 균등한 조건을 마련하여 채용 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생 협력】 한국전력공사의 수출 촉진회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해외전력회사 실무 엔지니어들은 중소기업의 면담 요청에 일말의 관심조차 없다. 한전은 중소기업자재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들과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출촉진회'를 개최했다. 해외 바이어뿐만 아니라 해당국 전력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을 초빙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2009년부터 열린 수출촉진회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계약금액은 2009년도 477만달러에서 2011년도 2,605만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사회 공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희망Replay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직접적·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러한 고민을 배경으로 시작된 '희망Replay'는 단지 채무조정을 넘어서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의지를 제고시키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희망Replay의 핵심 사업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①기초 생활 지원 ②신용 교육 ③취업 알선 ④문화체험 지원 등이다. 특히 사고로 남편을 잃고 빚만 남겨진 한 여성은 자산관리공사가 지원하는 가족여행을 갔다 온 후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정한 사회 구현에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실천과 노력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공정한 사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속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협의회를 통해 논의했던 제도 개선 방안들과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유했던 각 기관의 경험들이 향후 지속적인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4. 공정사회를 넘어 공생발전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공정사회 추진 결과, 공정성이 사회 전 분야의 가치판단 기준 및 행동규범으로 부각되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신드롬, <슈퍼스타 K2>에서 ‘허각’이 공정성의 아이콘으로 부각되는 등 공정사회 이슈의 공론화로 국민들의 잠재되어 있던 공정성에 대한 열망을 분출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었던 전 관예우, 조세포탈 등을 근절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고, 학력차별, 우월적 권한 남용 등의 시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부가 사회의 환부를 온전히 드러내고, ‘공정’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시대적 명제’라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었다. 기업은행·한화 등 기업의 고교 졸업자 채용 확대, 오디션 열풍 등 능력 중심의 ‘열린 채용’ 증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능기부 확산 등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다. 공직비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추진동력이 저하되었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도 다소 부족하여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낮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과 제도개선에 치중하면서 보다 근본적 해결책인 국민의식과 문화의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국민의 호응과 관심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도 하고 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전 세계 성장둔화,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나라가 높은 물가와 높은 실업률에 신음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새로운 발전모델로 제시하면서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며,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공생발전’을 위해 ‘공정사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과제들이 사회

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열린 고용 사회’ 구현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나, 이것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도 두루 확산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전액 학비 지원과 산학 연계를 바탕으로 ‘선 취업, 후 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둘째,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 받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셋째, ‘동반성장’ 확산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생존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공정한 시장경쟁 조성 방안 마련에도 더욱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정한 사회는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계속 이어가 실천으로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정부와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힘을 합쳐 함께 해나가야 한다. 공정사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추진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공정사회는 기존의 잘못된 관습과 문화를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분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사회 각 분야를 이끄는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지도층부터 ‘나부터 먼저’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변화할 때, 공정사회는 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사회 구현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0.8.15	■ 이명박 대통령, 제65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기조로 ‘공정사회’ 천명
2010.9.28	■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국정과제전략협의회’에서 ‘공정한 사회 추진과제 발굴 및 공감대 확산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기로 결정
2010.10.4	■ 국무총리실,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도록 각 부처에 발굴지침 전파
2010.10.5	■ 국무총리실 주재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 10월 말까지 연구기관별로 ‘공정한 사회’ 관련분야 중·장기 중점 추진 필요과제를 선정·발굴하기로 결정
2010.10.6	■ 국무총리실 주재 재정·행안·교육·복지·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실무 TF회의’ 개최

공정사회 구현 추진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10.10.20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기재부·특임장관실 등 22개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제1차 '공정사회 TF' 개최, 부처별 대표과제 발표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2010.12.9	■ 제70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계획 확정
2011.1.14	■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공정사회」 추진계획 확정
2011.1.31	■ 국무총리 주재 '공정사회 추진'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11.2.17	■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개최, 5대 방향, 8대 중점과제, 80개 실천과제 확정
2011.3.10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제3차 공정사회 TF 개최, 공정한 사회 추진과제 실행계획 및 중점과제 추진계획,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 보고 및 토론
2011.3.31	■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개최, '공정 과세, 성실 납세' 구현방안 마련
2011.6.3	■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개최,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대책 마련
2011.8.3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제6차 공정사회 TF 개최, 2011년 상반기 「공정사회」 추진현황 점검 결과 및 과제 추진사항, 부처 간 이견 조정방안 등 논의
2011.9.9	■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개최, '열린 고용 사회 구현방안' 논의 및 개선 방안 마련
	■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 개최, 가맹·유통사업 분야 공정경쟁 방안 마련
2011.11.18	■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 개최, 공생발전을 위한 교육희망사다리 구축방안 마련
2011.11.25	■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마련
2011.12.23	■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4차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추진 방안 마련
2012.2.2	■ 국무총리 주재 '공정사회 보고대회' 개최, 우수사례 발표 및 범국민 실천방안 등 토론
2012.3.2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제8차 공정사회 TF 개최, 2012년 공정사회 실천과제 관리계획 확정
2012.7.30	■ 2012년 상반기 각 부처 실천과제 추진상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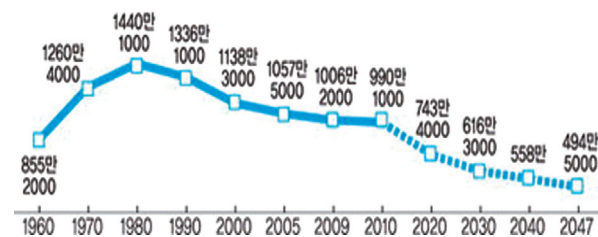
제5절 교육개혁

1. 교육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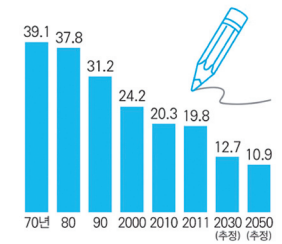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두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저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힘, 사람의 힘을 꼽는다. 전후(戰後) '천막교실', '길거리교실' 을 지나 1960~70년대 중등교육의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콩나물교실' 을 거치면서도 우리나라 교육열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현장에 우수한 생산인력을 공급하고, 활발한 계층이동을 유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기능을 담당했다. 우리 학생들의 우수성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확인된다. 2009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의 성적을 보였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위 25%)을 극복하고 상위 25% 이내 학업성취도(읽기영역)를 거둔 학생의 비율도 가장 높다.

2. 교육개혁 추진 필요성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다.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대한 불만과 함께 교실붕괴, 학교붕괴, 사교육 악순환이라는 말이 확산되었다. 학교는 획일적인 규제와 입시위주 교육으로 자율과 특색을 잃어버렸고,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국제적 학업성취 수준에 비해 공부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이고, 자기학습관리능력도 최하위 수준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지식정보화, 세계화 등 학교 밖 세상은 급격히 변하여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학교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만 6~21세)가 급속히 줄어 2009년 약



【학령인구 추이】 (2010년 이후는 전망, 단위: 명, 자료: 통계청) ※학령인구: 만 6~21세



【학령인구 비중 추이】 (단위: %)

1,000만명에서 2020년 743만명, 2030년 616만명, 2040년 558만명으로, 학령인구 비중도 2010년 20% 수준에서 2030년에는 12.7%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인해 학생들 한명 한명의 재능을 살리고 꿈을 키워주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정책도 수요자 중심교육, 자율과 책무, 다양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1995년 문민정부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학생중심 교육체제로 바꾸고,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규제를 지양하고, 단위학교가 자율을 갖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은 지덕체를 균형 있게 키우는 교육적 가치 실현보다는 학생선별을 위한 입시에 더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교육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입시정책’에 의해 초중고 교육이 변형되면서 좋은 취지의 교육정책도 변질되거나 교육현장에 착근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대학의 학생선발에 정부의 간섭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2007년 내신이 상대평가로 전환되면서 '내신-수능-논술'에 대한 학업부담으로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체육관에서 진행된 대규모 입시설명회. 입시 정보를 들으려는 학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3. 주요 교육개혁 정책

이명박 정부는 입시중심의 획일적인 교육과 사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창의적이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자율과 다양, 책무성 강화’로 특징되는 초중등 교육정책과 ‘다양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의 입시정책,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 등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했다.

1) 초·중등 교육의 자율과 다양, 책무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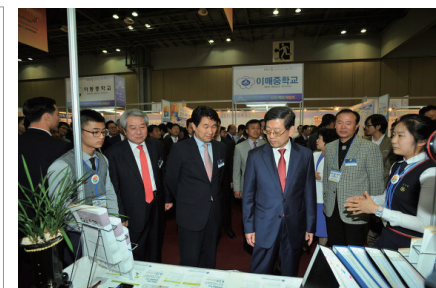
우선 ‘자율화와 다양화 정책’은 1만1,000여 개 학교가 학생, 학부모, 지역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적 결정을 하고, 그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중앙

정부의 상명하달식 교육시스템은 과거 모방형 인력양성에 적합한 시스템이었다. 창의적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교육 자율성이 더욱 커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이명박 정부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2008.4.15)하여 29개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 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2009.6.11)을 추진하여 교육과정 자율화, 교직원인사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등을 실행했다.

이러한 자율화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다양한 학교’가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학교모형인 자율형 사립고(51개교)와 자율형 공립고(97개교)를 지정하고, 농·산·어촌 지역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기숙형고(150개교)를 지정했다. 또한 취업 중심의 직업전문학교로 마이스터고(28개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진로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각기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2,627개교를 창의경영학교로 지정했고,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형 등의 모형으로 창의인성교육과 학생맞춤형 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주입식 학습량을 감축하고, 집중이수제와 블록타임제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학습부담을 줄이면서 유의미한 체험과 참여하는 수업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국민교육공통과정을 기존 고1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완성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고교마다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교과외 활동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고, 관련 시간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재능을 갈고닦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자율화와 다양화 정책은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이러한 자율에는 상응하는 책무성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다수의 규제를 두고 이를 지켰는가 여부로 책무성을 확보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학교 정



왼쪽) 고교 다양화 학교 유형인 '기숙형 고교'의 성공사례로 경남 함양고가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출처 : 문화일보) 오른쪽) 김형식 국무총리가 2011 좋은학교 박람회 행사장에 방문하여 전국의 다양하고 우수한 학교 사례를 관람하고 있다.

보공시(2008.12.1)를 통해 최소한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도 과거 자의적 평가가 되기 쉬웠던 정성평가를 줄이고 결과중심의 정량평가 위주로 단순화하여 시·도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 시·도 교육청 평가요소 및 비중 】

구분	평가방법	평가주체	2011년 평가비중	2010년 평가비중	비고
〈Ⅰ〉 교육성과	정량평가	교과부	70%	38%	공개 data 활용
〈Ⅱ〉 교육정책	정성평가	평가위원회	15%	55%	서면, 현장조사, 관계자 면담 등
〈Ⅲ〉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교과부	7%	전문기관 의뢰
	청렴도	설문조사	국민권익위		결과활용

※ 평가지표 간소화 : 305개(2009) → 40개(2010) → 18개(2011) → 19개

2)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아울러 정부는 우리 학생들이 점수 1점 향상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꿈을 찾고 키울 수 있도록 입시제도에 있어 입학사정관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성적, 소질, 적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즉 단순히 시험성적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대학별 대학이념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선발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된 입학사정관제는 이번 정부에서 크게 확대되어 2013학년도에는 4만3,138명의 학생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다. 아울러 학생들의 진로인식과 진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중·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채용하여 현재 3,016개교에 배치하고,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3)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변화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대학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대학입시’였다. 그에 비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어떤 대학이 ‘잘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대학 또한 학생 선발경쟁은 해도,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은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학정책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에 대한 정보를 대내외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공시’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였다. 또한 평가인증을 통해 대학 스스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이 나올 토대를 마련했으며,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2008년 500억원, 2009년 2,649억원, 2010년 2,900억원, 2011년 3,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대학교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실대학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실대학에 투입하지 않기 위해 하위 15%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했고, 학자금대출제도와 연계하여 2010년 9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의 명단도 공개했다. 2011년 1월에는 13개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하여 경영컨설팅을 통해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경영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으로 단계화해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등록금을 경감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했다. 우선 국가 장학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학생의 경제·생활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해왔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설, 2009년 국가근로장학제도 확대(전문대생 →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 2011년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1,000억원) 등 2011년 국가장학금을 5,218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둘째, 2010년에 등록금 인상을 상한제와 함께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돈돈학자금)를 도입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2008년 7.8%에서 2011년 4.9%로 낮추었다. 아울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2010년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이 책정되도록 지도·점검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한나라당에서 등록금부담경감 대책을 발표하여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금으로 통합하고, 장학금 규모도 2012년 한 해에만 약 1조9,24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또한 대학 자체 재원을 통해 7,500억원의 장학금을 마련하여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5%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모든 국민이 교육전문가라 할 만큼, 교육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정책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단적으로 과거 강남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지목되어 경제부처 장관이 강남지역의 평준화 해제를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동력이었지만, 한편으로 불필요한 선행학습과 입시학습,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저하 등 다수의 문제점을 낳았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9년 11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교육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 대비 증가(4.3%)하여 서민계층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학원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전국 3,276개 학원을 점검하여 1,398개 위반 학원을 적발했지만, 뛰는 사교육비를 잡기에는 부족했다. 2009년 4월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의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발언 논란 이후 그해 6월 정부는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이 대책을 통해 교과교실제 도입, 외고의 변형된 형태 지필고사 금지, 과학고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확대, 조례를 통한 학원 교습시간 단축, 학원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 새롭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서민층이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9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교육비 주범으로 외고가 거론되면서 외고 폐지 논란이 확산되었다. 사교육 문제는 교육담당 부처뿐 아니라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에게도 매우 큰 과제였다.

【 정부의 주요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내용 】

200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고액·부당 학원비 특별지도·단속 강화 ■ 공교육 내실화: 교원평가제 확대, 교과다양화300, 영어교육 질 제고 등 ■ 입시부담 경감: 특목고 입시개선(내신중심) 유도, 입학사정관제
200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학교 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평가제 도입,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영어교육의 질 제고 ■ 입학제도 개선: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외고 변형된 지필고사 금지, 과학고 입학사정관제 도입), 과학올림피아드 및 영재교육 선발방식(관찰·추천) 개선 ■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추진, 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 강화 ■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학원 교습시간 시도 자율 단축운영 유도, 신고포상금제 도입 ■ 기타: 사교육 절감성과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 대폭 반영 등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요구되었고, 그해 11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협의회’ 1차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과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이 논의되었다.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는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전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2009년 12월 정부는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주범으로 논란이 되었던 외고를 비롯하여 과학고 등의 특목고 입시를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전환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배제했다. 그 결과 특목고 진학 희망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11.3% 감소했다. 특히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증가 일로에 있던 사교육비가 처음 감소세로 꺾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0.8% 감소했다.

국무총리 주재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협의회’는 격월로 개최되며, 근본적인 공교육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이 논의되었다.

2차 회의에서 창의·인성교육 강화 방안(2009.12.24)을 논의하며 창조형 인재를 위한 탐구·토론식 수업 확대방안, 창의성과 잠재력 위주의 학생 선발을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검증 프로세스 등을 마련했다. 특히 고교 다양화와 입학사정관제 활성화에 따라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여 진로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3차 회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지식경제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직업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체험활동 결과를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0년 3월부터 고등학생에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흔히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 교육의 주체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 3자를 들 수 있다. 특히 사교육 결정 주체로 어머니의 비중이 매우 높고¹⁸⁾, 정보획득 경로도 ‘주변 학부모를 통해서’¹⁹⁾라는 답변이 가장 높을 정도로 교육에 있어 학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4차 협의회에서는 사교육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학교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일 저녁과 주말의 학부모 모임을 장려하고 강제할당식의 봉사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학교교육 모니터링 및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여 개의 학부모회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학부모의 국가·지역단위 교육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는 한편, 학기 초에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동 회의에서는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가 보고되었다. 2009년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008년 4.3%에서 2009년 3.4%로 0.9% 감소하여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실태조사 이후 처음 줄어들었다. 특히 방과후학교와 EBS 등의 사교육 대체 효과가 실태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²⁰⁾

18) 초등학교 81.8%, 중학교 71.2%, 고등학교 49.4% (교과부「2009 학부모 사교육 의식조사」)

19) 초등학교 68.1%, 중학교 59.0%, 고등학교 43.8%

20)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3만원 적게 지출, EBS 참여 고교생은 미참여 학생보다 연간 19만5,000원 적게 지출.

5차 협의회에서는 서울대 백순근 교수가 「창의성 제고를 위한 학력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백순근 교수는 동 발표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학습자 개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술형·논술형·토론식 수행평가 확대, 절대평가체제로 단계적 전환, 교사의 학력평가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 제안을 기반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수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 12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신 상대평가 제도를 성취평가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20~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012년도부터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고, 2014년도에는 모든 교과가 성취평가제로 바뀌게 된다.

【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협의회(2009.11~2010.6) 】

회차(개최일)	목 록
1차 (2009.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경감 대책 소개(교과부) ■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교과부)
2차 (2009.1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협의회 논의사항 향후 추진계획(교과부) ■ 창의·인성교육 강화 방안(김세직 위원, 교과부) ■ 학교의 권한 및 책무성 제고 방안(한국교총)
3차 (20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협의회 논의사항 향후 추진계획(교과부) ■ 진로교육 강화 방안(교과부) ■ 학교의 권한 및 책무성 제고 방안(교과부)
4차 (201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협의회 논의사항 향후 추진계획(교과부) ■ 2009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교과부) ■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학부모 역할 강화 방안(교과부)
5차 (2010.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협의회 논의사항 향후 추진계획(교과부) ■ 창의성 제고를 위한 학력평가 방안(서울대 백순근 교수) ■ 교원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교과부) ■ 학력요건 합리화 기본 방안(국무총리실)
6차 (201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확대·배치 방안(교과부) ■ 창조형 인적자원 강화를 위한 소요비용 추계(김세직 위원) ■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한국교육과정평가원)
7차 (2010.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인성교육 강화방안 세부 실행 계획(교과부) ■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자원 지원 방안(국무총리실)

5. 「교육개혁협의회」를 통한 교육정책의 정착과 제도개선

2010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대책회의」(2010.3~5, 총 3회)를 통합하여 「교육개혁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개혁협의회」는 교과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교육현장, 학계, 산업계, 언론계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자문기구’로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운영되면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 업무 전반을 다루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동 협의회를 ‘교육개혁의 견인차, 객관적 비판자, 지지자 역할을 하는 실천적 협의회’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교육개혁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2010.12.9)

교육개혁협의회는 12월 9일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교육개혁정책 중간점검 및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현 정부 들어 추진한 교육개혁의 성과로 학교 자율화·다양화, 학교정보 공개 확대, 창의·인성중심의 교육과정 개정 등 학교현장의 제도 개선을 들 수 있으며, 한편으로 든든 학자금 도입 및 대출금리 인하, 소외계층 교육비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 확충 및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경쟁력 제고를 추진해왔다. 다만 여러 개혁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 교육현장의 부담이 증가하여 추진상 완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도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대입전형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이 방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액·면제, 대입전형료 환불제도 개선, 대입전형료 수입·지출 공시 개선, 집행잔액 환불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전형료 책정과 적정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 제2차 교육개혁협의회(2011.1.28)

두 번째 회의에서는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제로 안정적인 대학재원 확보 방안과 지역대학 발전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에 따라 대학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재원 다변화 방안」으로 다양한 기부제도 발굴 등을 통한 대학기부 활성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 R&D 자금 유인, 조세특례대상 대학 관련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대학 재정지원의 집행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실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방안」이 논의되었다. 기존 4개의 산학협력사업을 ‘산학협력선도 대학육성사업(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으로 통합·확대 개편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3,000억원)의 30% 이상을 산학협력 및 취업분야에 투자토록 했다. 산학일체형 협력을 위해서 ‘산업단지 캠퍼스’를 2013년까지 총 15개 구축하도록 하고, 교수의 임용·평가체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토록 했다.

한편 동 협의회에서는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발제로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동 방안은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의 배경이 된 인적자본이 1990년대 후반 들어 그 효율성이 떨어졌음을 밝히며, 창조형 인적자본의 축적만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의 필수과목 및 필수학습내용을 축소하고, 토론·연구수업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3) 제3차 교육개혁협의회(2011.4.25)

세 번째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첫 번째 안건은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대응방안」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20년 교육환경 전망으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교육양극화, 산업구조와 인력수요의 변화, 글로벌 교육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영유아·초중등·대학·평생학습·한국교육의 글로벌 리더십 분야로 나눠 15개 과제를 제안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교육내용·방법·평가방식 혁신, 포괄적 학교복지체제 구축,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적 분화지원, 외국의 한국학습 기회 확대 등이 제안되어 위원들 간에 열띤 논의가 있었다.



김황식 국무총리,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담화문 발표(2011.5.2)

두 번째 안건은 「만 5세아 공통과정」이었다. 「만 5세아 공통과정」은 2009년 11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제안된 이후 사회적 반향이 있었던 과제로, 조기입학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취학연령 인하가 아니라 유아·보육의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만 5세 어린이라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받게 되고, 교육·보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만 5세 어린이가 동일한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2011년 5월 2일 관계부처가 모인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만 5세아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했다.

4) 제4차 교육개혁협의회(2011.6.14)



주5일 수업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

주5일 근무제 확산과 더불어 학생들이 주말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특히 나홀로 자녀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토요일 돌봄 및 토요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말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2011년 2학기에 10%의 학교에서 시범 실시하여 운영모델을 확산하도록 했다. 실제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도입 결과, 99.6%(1만1,451개교)의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20% 내외의 학생들은 학교의 토요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동 협의회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대학생 멘토링, 전문경력인사 멘토링, 전문대학의 청소년 진로캠프, 기업의 CEO STEAM 교실 등 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한 교육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대 교육기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5) 제5차 교육개혁협의회(2011.9.6)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제5차 협의회에서는 지난 4년간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선도모델 확산,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와 전문성 제고 등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입학사정관제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관리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의 유치·수학·귀국의 전주기적 관리를 도모하고 대학의 유치·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6) 제6차 교육개혁협의회(2011.10.25)

6차 협의회에서는 KDI 김희삼 연구위원의 발제로 「선진한국의 미래 인재상과 양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선진한국의 개념에 ‘행복한 나라’의 비전이 포함되어야 하고, 미래 인재상에서도 창의, 인성, 긍정의 요소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등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하고, 대학입시에서도 전공별로 필요한 핵심역량 위주의 특성화·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진로교육과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문화와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교육의 최근 경향 및 향후 대책」도 보고되었다. 총사교육비가 2009년 21조6,000억원에서 2010년 20조9,000억원으로 3.5% 감소한 데 이어 2011년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다.²¹⁾ 사교육비 감소 추세는 방과후학교, 고교 입시제도 개선, EBS 수능강좌, 학원 운영 투명성 제고 등 공교육 내실화 정책과 함께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주5일 수업제와 영어교육 개편, 입시제도 변화 등 새로운 사교육 증가 유발요인에 대해서는 영어, 수학의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대체 서비스의 고도화, 학부모·학생 대상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을 실현하도록 했다.

7) 제7차 교육개혁협의회(2011.12.19)

제7차 회의에서는 교육개혁협의회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교육의 수요자(학부모, 대학생), 공급자(교사, 교수), 활용자(기업) 1만3,3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보고에 따르면 교육 관련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기할 사항은 교육 수요자의 인식이 보다 더 긍정적이었던 반면, 교육 공급자의 인식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 공급자들의 적극적인 정책 공감과 참여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논의되었다. 대안교육 발전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 후 제11차 협의회에서 상정되어 안건이 확정되었다.

8) 제8차 교육개혁협의회(2012.2.15)

우선 교육계 현안과제였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무총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도록 관계부처와 일선현장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2월 중 민관합동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국무총리가 직접 학교폭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부터 도입되는 만 5세 누리과정의 준비상황과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도입하는 방안이 상정되었다. 또한 주5일제 전면 도입과 사교육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의 기능 확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학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방과후학교를 목표로 삼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확립, 사회 우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중학교 인성함양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돌봄 사교육 수요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21) 2011.8 기준으로 학생 학원교육비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

9) 제9차 교육개혁협의회(2012.4.30)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2020년까지 2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는 한국유학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온라인 원스톱 유학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GKS(Global Korea Scholarship)을 2015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협의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인력수요와 외국인 유학생을 긴밀히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무총리는 양적인 유학생 유치 확대뿐 아니라 유학생들의 학업, 주거, 건강, 문화교류 등 유학생생활 전반에 세밀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안건은 「2012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2012.3.16~18)」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선포한 ‘교육기부 공동체’를 구체화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및 실천방안」이었다. 그간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주요 대기업 36개사와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충 등의 성과를 낸 데 이어,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를 중점목표로 잡고 교육기부 동아리 인증, 국가장학금 지급 시 교육기부 참여학생 우대 등 연 2만명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자 확보정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기업, 대학, 출연연 등 공공기관, 지자체의 교육기부도 확대하고 있다.

10)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2012.6.27)

10차 협의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모집이 어려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여 지역대학 육성 대표 브랜드로 키우고,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 확대, 기업특화 교육트랙 확대 등 현장중심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편입학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을 줄이기 위해 대학 편입학 규모를 축소하고, 실시 횟수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대학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청년기업가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최근 신고졸시대로 불리는 고졸 취업 증가 추세를 반영해 이들 고졸취업자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후(後) 진학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선 취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후 진학 장학금을 확충하며, 사내대학 등 후 진학 지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기업의 후 진학 친화적 인사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11)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2012.8.27)

11차 협의회에서는 지난 협의회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대안교육 발전방안」을 확정 짓고, 대학

수시전형이 다가오는 시점에 맞춰 대입전형료 경감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012년 초 발생한 대학 특별전형 입시 부정 문제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교권붕괴 현상을 보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대부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행정권력과 안전사고로부터 신분보장 및 보호를 중심으로 규정된 교원보호법률을 개정하여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권침해 은폐방지와 예방강화를 위해 교장 등 관리자 인식 개선과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권침해 분쟁 시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교육개혁협의회 상정안건 】

회차 (개최일)	목 록
1차 (2010.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개혁정책 중간점검 및 향후 운영방향(교과부) 대입전형료 개선방안(교과부)
2차 (201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방안(교과부) 대학재원 다변화 방안(교과부)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 방안(서울대연구팀)
3차 (2011.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대응방안(KEDI연구팀) 「만 5세아 공통과정」 도입 방안(교과부·복지부)
4차 (2011.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5일 수업제」 확대 시행 방안(교과부)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교과부)
5차 (201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육재정 여건 분석 및 향후 운용방향(교과부) 입학사정관제 추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교과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선진화 방안(교과부)
6차 (2011.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한국의 미래 인재상과 양성방향(KDI연구팀) 대학구조개혁 추진상황 보고(교과부) 사교육 최근 경향 분석 및 대응 방안(교과부)
7차 (2011.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교육과학기술부 업무계획(교과부) 교육개혁 국민인식조사 및 향후 교육개혁방향(KEDI연구팀) 대안교육 발전 방안(교과부)
8차 (2012.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교과부) 5세 누리과정 준비상황 및 3~4세 누리과정 도입방안(교과부)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교과부)
9차 (2012.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특별전형 개선방안(교과부)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교과부)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및 실천방안(교과부)
10차 (2012.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진학 생태계 활성화 방안(교과부) 지역대학 발전 방안(교과부)
11차 (2012.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권보호 종합대책(안)(교과부) 대안교육 발전 방안(교과부)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교과부) 대학 특별전형 개선 및 대입전형료 경감 추진상황 보고(대교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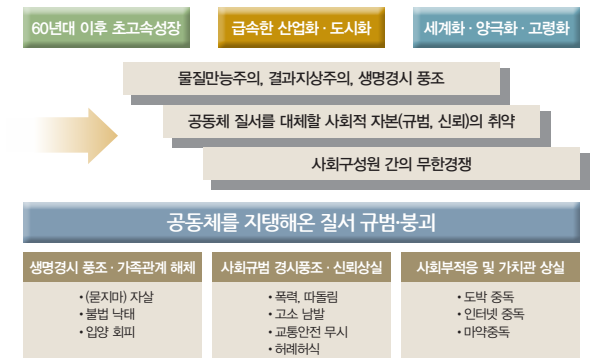
제6절 건강한 사회 만들기

1. '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 배경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5,566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8명으로, 2명 수준에 불과한 그리스를 14배 앞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청소년과 학교폭력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가운데 재학기간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22.7%로 10명 중 2명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도박과 마약에 대한 중독은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건널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 마약류 범죄는 최근 국제교류 증가, 마약 밀반입 국가 다변화, 신종 마약 확산 등으로 인해 광범위화·저연령화·다양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사회적 손실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조4,899억원(GDP 0.2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서 2010년 한 해에만 22만6,000건의 교통사고로 35만명이 부상하고 5,505명이 목숨을 잃어 무려 11조7,77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낙태, 무분별한 고소, 인터넷 중독, 관혼상제 허례허식 등 사회적 부적응 및 개인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각종 사회병리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초고속성장 및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결과, 물질만능주의, 결과지상주의, 생명경시 풍조 등 가치전도현상이 확산되고 공동체 질서를 대체할 사회적 자본(규범, 신뢰)이 취약한 데다, 사회구성원 간의 무한경쟁 등으로 공동체를 지탱해온 질서·규범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사회' 과제 추진과 병행하여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양식은 물론,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만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무총리실에서는 사회병리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라는 범정부적 틀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사회병리현상 해소를 추진하게 되었다.



2.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선정

국무총리실은 생명과 가족의 가치 존중, 상호 신뢰하는 사회 구축, 각종 중독 현상과 사회적 병폐 해소를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급증추세에 있는 부정적 현상 중에서 다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및 민관협력 여지가 있는 과제 중심으로 12대 과제를 선정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p>◆ 생명과 가족 존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살예방 ② 인공임신중절 예방 ③ 건전한 입양문화 만들기 ④ 가출·위기 청소년 줄이기 ⑤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p>◆ 신뢰 있는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⑦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⑧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⑨ 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 	<p>◆ 중독 없는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⑪ 인터넷 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⑫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전문가 의견수렴,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과제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기본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국민들의 인식과 생활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정부부처, 관련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고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역량 집중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대비 실적, 홍보, 민관협력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2012.1.26~2.24)을 실시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별 개선대책 수립】

일시	개선 대책
2011. 3.25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중점 추진대책(안)
2011. 5. 2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추진현황 및 세부 시행계획
2011. 5.13	입양제도 선진화 방안 - 국외입양 아동 줄이기 대책 중심으로 -
2011. 6.10	21세기 생활 공감형 관혼상제 추진계획
2011. 6.17	자살예방 대책 추진계획 -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방안 -
2011. 7. 1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추진계획(안)
2011. 7.15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추진방안
2011. 7.29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 추진계획
2011. 9. 2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대책
2011.10.14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
2011.11.16	인공임신중절 예방 개선·보완대책
2012. 2.10	사행산업 건전화 및 도박중독 예방·치유 대책

점검 결과, 12대 과제가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분야의 경우 정책대상, 집단별로 인지도·체감도가 상이하므로 사회병리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 기업, 종교계 등과 연계하여 홍보·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세부홍보계획 수립, 효과적인 홍보 매체 발굴·확대, 홍보매체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관협력 분야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참여확보,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었으며, 국민인식전환·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활성화·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점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했으며, 국무총리 주재 과제별 현장보고회 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정책대상자들의 문제점, 애로사항 발굴·해결에 활용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상호작용 및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주재하에 과제별 현장간담회를 추진(2012.2.23~11.26)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총리 주재 간담회 개최 내역】

일시	과제명	장소 / 주요내용	참석대상
2.23(목)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광양중학교 - 학교폭력 관련 현황 발표, 참석자 의견청취 및 토론 등 - 생활지도시, Wee클래스, 전문상담실 등 학교 현장 참관 등 	전문상담교사, 학생대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대표 등 15명
2.29(수)	인터넷중독 & 아름다운인터넷 세상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공관 - 건전한 인터넷윤리문화 조성 및 인터넷 중독현상 해소를 위한 각계의 관심 및 협력 당부,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학계 전문가, 상담사, 학부모 및 중독수기 입상자 등 19명
3.7(수)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법동중학교 - 학교 현황 소개 및 국무총리 특강 	대전시 교육감, 법동중학교 학교장 및 학생 등
3.20(월)	교통사고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공단 - 2011년도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중점 추진대책 보고(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및 유관기관, 시민단체, 교통사고 피해자 등 의견 청취 및 토론 -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시설 및 UTIS(첨단도교통정보 시스템) 참관 	교통사고 피해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
3.28(수)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법동중학교 - 학교 현황 소개 및 국무총리 특강 	대전시 교육감, 법동중학교 학교장 및 학생 등
4.13(금)	자살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자살예방대책 추진현황(복지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현황 보고 및 노원구, 동대문구, 인천시 사례발표, 자살위기 극복자,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청취 	자살위기 극복자, 민간단체장, 전문가 등 23명
4.20(금)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로몬 LAW파크(국내 유일의 법체험 시설) - 추진현황 보고 및 간담회, 솔로몬 로파크 시설 및 청소년·학생 법체험 참관 	유관단체, 민간전문가 등 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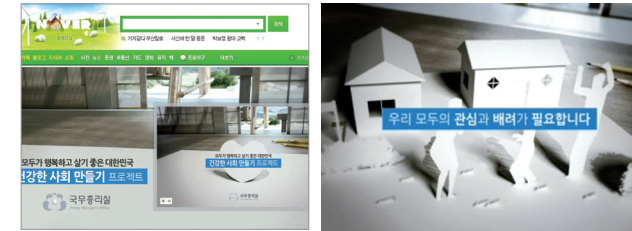
일시	과제명	장소 / 주요내용	참석대상
5.3(목)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세대학교 대강당 -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 전국 초중고 학교장 대상 특별강연 및 현장의견 청취 	전국 초중고 학교장 등 1,500명
5.17(목)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제일고 -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 학교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학교장, 교원, 학생 등
5.29(수)	가출·위기 청소년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초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과제 추진현황 보고,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현장점검 및 센터 참관, 종사자 고민·애로사항 청취 	청소년상담원, 지도교사, 위기청소년 등 25명
5.30(수)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공간 - 학교폭력 근절 관련 모범 교원 대상으로 학교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학교폭력 근절 모범교원 등 35명
6.18(월)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학교폭력 신고 접수, 경찰청 및 유관기관(Wee 센터, CYS-NET) 인계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117신고센터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강원 117센터 직원 등
7.26(목)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영문초등학교 - 방학 중 학교 프로그램 보고,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 놀이체육 등 방학 중 프로그램 참여, 방학 중 학교도서관 참관, 방학 중 동아리 활동 및 학교 급식 참여 	서울시 부교육감, 학교장, 교사, 학생 등
11.16(금)	건전한 입양문화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공간 -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입양기관, 국외입양인 관련 자원봉사자 등 10명
11.23(금)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주 한빛중학교 - 독서동아리 관련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 학교시설 참관 	경기도 부교육감, 학교장, 교사, 학생 등
11.26(월)	교통사고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공간 -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관계자 등 15명

간담회 시 제기된 건의사항은 국무총리실 내 소관 정책관실 및 관련 부처에서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행 가능한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개인의 행동양식을 바꿔야 하는 건강한 사회 과제의 특성상 캠페인·공모전·교육 등 민간과의 상호작용 및 참여가 중요했다. 이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민간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먼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심을 페이스북 댓글로 공모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그래, 결심했어!' 이벤트(2011.8.17~31)를 실시했다. 총 470여 건이 접수되었으며, 3,000여 건의 공유 및 RT를 통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 아젠다에 대한 온라인상의 관심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건강한 사회 과제별 인물 중심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자살, 입양, 낙태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 관련 UCC를 제작(2011.10~)하여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했다.

12대 과제별 웹툰을 1편씩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특정 말풍선을 누리꾼들이 직접 댓글로 완성하는 '건강한 사회 웹툰 완성 이벤트(2012.2.3~5.2, 13주간)'를 통해 건강한 사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으며, 이벤트 결과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사회' 오프라인 캠페인 현장 이벤트(명예기자단 활용) 등에 배포하여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아울러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소개·설명하는 내용의 교육용 홍보영상물(4분)을 제작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부터 건강한 사회 만들기

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고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전광판 광고용으로도 제작해 전국 130여 개 전광판에 올려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홍보(2012.2, 2012.5)했다. 또한 2011년 11월 30일자 『위클리 공감』(136호)에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 함께 만듭니다'라는 내용으로 기획특집 기사를 게재하여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랑, 행복, 희망으로 전하는 건강한 사회'라는 주제로 캠페인용 홍보영상(40초)도 제작했다.

'학교폭력, 자살, 인터넷중독'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참여를 호소했으며, 페이퍼 애니메이션이라는 참신한 제작기법을 활용하여 주제전달 효과를 높이고,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했다.

홍보영상은 YTN 등 4개 케이블TV 채널과 인터넷포털(네이버) (2012.5.22~7.1) 광고 및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 지역 지하철, 주요 철도 역사 전광판 광고(2012..7.17~10.31) 등에 게재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는 그 범위와 성격이 포괄적이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은 과제별 주관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역량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과 홍보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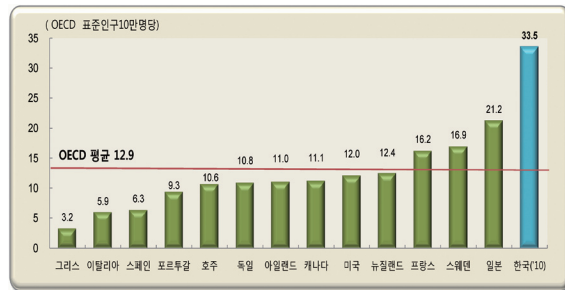
또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두 개의 축'으로서 하드웨어 측면의 「공정사회」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건강한 사회」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민간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동력 확보 및 불합리한 국민의식 개혁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3. 자살 예방대책 추진

1) 자살 예방대책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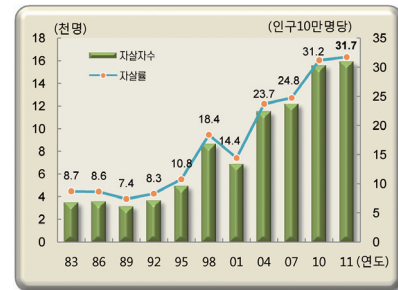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2011년 인구 10만 명 중 31.7명으로, 연간 자살사망자 수가 1만5,906명이며, 1일 평균 4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다. 2010년 OECD 국가의 평균 자살사망률이 12.9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3.5명(국가 간 연령표준화를 적용)으로 2위인 일본(21.2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2009년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인해 소요된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대 4조9,663억원에 달하고 있어 자살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15.6%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3.2%는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간 자살시도를 한 사람’은 10만8,000명으로 추산되어 자살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 OECD 표준인구 기준 국가별 비교표 】



* OECD Health Data 2012(국가 간 비교를 위해 연령표준화를 적용)

【 자살자 및 자살률 추이, 1983~2011 】



* 통계청 <2012>

정부는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자살을 단순한 개인문제로 생각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미흡한 제도적 지원체제와 관계기관 간 취약한 협력체제로 인해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예방’을 「건강한 사회 만들기」 과제로 선정했다.

2) 자살 예방대책 추진내용

가.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그간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울증 예방 등 개인의 정신보건 분야와 사회환경적 분야 등 세부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왔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2012년 3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보건복지부는 제8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1.6.17)에서 기존의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고위험군 관리강화, 자살예방 강화,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별로 12개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기반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다. 자살예방의 날 주간행사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에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 9월 5일과 2012년 9월 10일에 「자살예방법」 제16조에서 정한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개인 및 단체(기관) 등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2012년에는 WHO 서태평양사무국과 공동으로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이는 미디어포럼(9.11~12)과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회의(WHO 서울포럼, 9.13~14)를 개최했다. 미디어포럼에서는 언론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바른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회의에서는 20여 개국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자살예방 전문가들과 자살예방 선진국의 정책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국의 자살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 자살예방 대책 추진계획 내용 】

주요내용
① 생애주기별 고위험군 관리
② 자살시도자 관리
③ 군, 교정기관 고위험군 관리
④ 전문인력 양성
⑤ 민간중심의 자살예방 활동 추진
⑥ 생명존중 인식개선
⑦ 미디어 관리체계 구축
⑧ 치명적 자살수단 관리
⑨ 인터넷 자살 유해사이트 관리
⑩ 통합 예방 인프라 구축
⑪ 자살정보관리체계 구축
⑫ 범정부 자살예방정책 추진체계 구축

라.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 현장간담회(2012.4)

그간 추진해온 「자살예방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4월 13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자살예방 관련부처(복지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자살위기를 극복한 시민과 지역자살예방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자살예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서울시 동대문구·노원구, 인천시 지역자살예방센터 등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제 자살사망자 수 감소를 보인 지자체 시범사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

3) 자살 예방대책 추진성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자살자 수가 감소하여 자살예방대책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서울시 동대문구는 지역병원 응급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시도자를 관리한 결과, 2010년 106명이던 자살자 수가 2011년 82명으로 감소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자살예방사업 전담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동사무소 복지인력을 증원해서 자살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 관리를 강화한 덕에 자살자 수가 2010년 153명에서 2011년 128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대책인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살예방 기본계획」에는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라 ①생명존중문화의 조성 ②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③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④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⑤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⑥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각 부처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자살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자살예방대책 추진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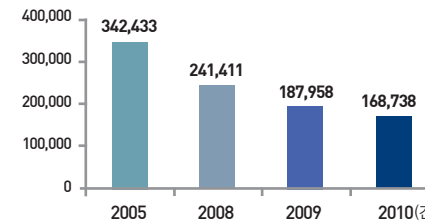
일 자	주 요 내 용
2011.1.31	■ 「건강한사회 만들기」 실천과제로 '자살예방' 선정
2011.3.30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2011.6.17	■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2011.9.5~6	■ 자살예방의 날 주간행사
2012.3.3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012.4.13	■ 자살예방 현장간담회 개최
2012.9.10~14	■ 자살예방의 날 주간행사

4. 인공임신중절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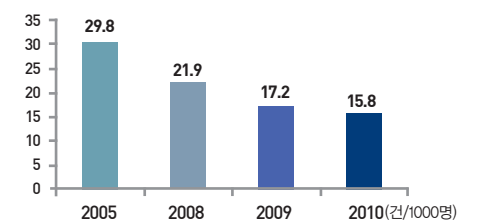
1) 인공임신중절 현황

정부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현재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는 연간 17만여 건이며, 2010년을 기준하여 가임기여성(15~44세)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당 15.8건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다소 높은 편이다.²²⁾ 그러나 2008년과 비교하면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는 2008년 24만건에서 약 30% 감소했고, 인공임신중절률 또한 21.9건에서 약 28% 감소했다.²³⁾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연도별 추이】



【인공임신중절률 연도별 추이】



2)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추진

우리나라는 과거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펴온 탓에 생명존중 가치관의 왜곡, 잘못된 피임상식 확산, 낙태시술 용이 등 올바르지 못한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 2010년 2월 제50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8대 25개 세부과제)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예방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0년 2월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등 26개 기관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그해 6월에는 5대 분야 협약안을 도출해 사회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후 분기별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인공임신중절 관련 허용 여부나 허용 범위에 대하여는 종교계·여성계·의료계 등 각계의 현저한 시각차와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명 존중이라는 큰 틀에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다. 2010년부터 임신 중 감기약 등 약물복용에 따른 부작용 여부나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²⁴⁾, 24시간 '위기임신 상담·

22) 독일 7.2건, 일본 10.3건, 미국 18.9건
 23) 2010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연세대
 24) 관동대학교 제일병원 수행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아가사랑, www.aga-love.org」을 구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숙녀 다이어리)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고 자신의 생식 건강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2005년 이후 5년 만에 국내 인공임신중절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산부인과 경영 지원을 통한 분만실 유지·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2011년 2년에 걸쳐 분만수가를 50% 인상했으며, 분만취약지역에 산전관리 및 분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분만인프라 불균형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한편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산모의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산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2011년부터 청소년산모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1인당 120만원 이내)을 시작했다. 당초 2011년 지원대상은 미혼모자시설 입소 청소년이었으나, 2012년부터 만 18세 이하 모든 산모로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부-우리는 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비 전용카드인「맘편한카드」를 도입하여 신분 노출을 꺼리는 청소년이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인공임신중절의 근본적 예방책은 올바른 성(性)인식 확립과 계획적 피임실천이라 하겠다. 정부는 유아·초·중·고교 성교육 실태조사를 2010년 실시하고, 실태를 반영한 교사용·상담인력용 성교육 매뉴얼과 보조자료를 개발하여 2011년 전국 보육시설 및 초·중·고교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 또한 2012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성폭력상담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각 지역 초등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야한 질문 쿨한 대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성교육 전문가가 학부모들과 임신, 출산, 생명존중 등 성 가치관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부모들의 자녀 성교육 방법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젊은층의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를 구성²⁵⁾하여 가두홍보, SNS 활용 등 온라인 홍보, 또래교육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모전 개최,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익광고 송출 등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추진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

2009년 산부인과 의사 내부 고발에서 비롯된 언론 이슈화를 계기로 2010년 2월 정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결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긍정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 인공임신중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미혼의 경우 중절률은 여전히 높지

않는 실정²⁶⁾이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생명권을 주장하는 종교계와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여성계 사이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장기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는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적극적 피임 실천 교육 등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보다 향상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지속적으로 힘을 예정이다.

인공임신중절 대책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0.2.26	■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 마련(제50차 국가정책조정회의)
2010.2~	■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약체」 구성·운영(종교계·여성계·의료계 등 참여)
2010.4~	■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개설·운영(관동대 제일병원 수행)
2010.12~2011.10	■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연구 실시
2011.1.31	■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로 선정
2011.7.29	■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방문 및 관계자 의견수렴(국무총리실·복지부)
2012.2.7, 2.17	■ 인공임신중절 예방관련 현장 방문(강남여성병원, 이화여대) 및 관계자 의견수렴(국무총리실·복지부)

5. 건전한 입양문화 만들기

1) 개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해외입양을 보내는 국가이다. 2010년 미국의 해외입양

25) 2011년 37개 대학, 99명

26) 2008년 13.9건, 2009년 12.7건, 2010년 14.1건

아 출신국을 보면 한국이 863명으로 중국, 에디오피아,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양질의 미래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요보호아동의 국내 가정보호가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국내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국외입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요보호아동의 보호는 가정보호가 최적형태라는 아동복지 원칙에 따라 선진국은 40~50년 전부터 가정보호 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외입양 지속으로 아동 해외수출국이라는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대두되었고, 국내 입양 활성화 및 미혼모 발생 예방, 미혼모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병행함으로써 국외입양 아동 감소 및 아동권익을 증진하는 입양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다.

2) 국내의 입양 현황

1958년 전쟁고아 입양에서 시작된 국내의 입양은 2007년부터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추월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매년 해외입양을 10%씩 줄이는 해외입양 할당제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국외입양 아동수를 줄인 만큼 국내입양은 증가하지 않아 전체 입양아동수는 감소 추세이며, 국내입양의 경우 사회적 편견, 여아 선호, 까다로운 선별입양(친부모 학벌, 혈액형, 외모 등) 등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국내외 입양현황】

연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	7만7,507 (31%)	6만6,146 (30%)	1,461 (41%)	1,332 (41%)	1,388 (52%)	1,306 (51%)	1,314 (54%)	1,462 (59%)	1,548 (63%)
국외	16만5,528 (69%)	15만5,044 (70%)	2,101 (59%)	1,899 (59%)	1,264 (48%)	1,250 (49%)	1,125 (46%)	1,013 (41%)	916 (37%)
계	24만3,033	22만1,190	3,56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3) 국내입양의 문제점

보육, 교육 등 아동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로 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현실화되지 않은 입양기관의 입양수수료도 국내입양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가정에 대한 월 10만원의 입양수당 지원은 시설보호 아동 지원의 10% 수준으로, 입양활성화로 연계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입양건수는 감소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설마다 대기아동 및 연장아동(12개월 이상)이 증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는 원가정 보호가 최선이지만,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고, 양육여건이 미흡한 수준이다. 2005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이유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경제적 어려움, 양육비 부담, 아동의 장애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미혼 임신부가 1998년 7.2%에서 2009년 29.5%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 시 양육의사가 있는 미혼모는 53%에 이르고 있다는 점²⁷⁾과, 국내외 유명 연예인 등 사회 저명인사의 공개입양 등이 입양에 대한 인식변화로 이어져 입양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4) 입양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내용

2011년 5월 13일 발표된 「입양제도 선진화 방안」은 보호필요아동의 권익증진을 통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국가위상 제고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보호필요아동 감소, 원가정 보호 확대, 국내입양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먼저 국내입양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요보호 아동 입양 절차 전반에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11년 8월 4일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했다. 그리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입양가정 양육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향후 지원대상을 13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양대기아동 가족 찾아주기를 위해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도입했고, 입양인 뿌리찾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둘째, 요보호 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 내실화 등 예방체계를 구축했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내실화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했다.

셋째, 아동의 원가정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미혼모의 자녀양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정서적 지지와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생 미혼모의 학업지속 관련 규제 완화 등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넷째, 다양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각종 교육·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미혼모 예방과 편견해소,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했다.

건전한 입양문화 만들기의 핵심테마인 입양특례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외입양의 감축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했고 국내의 입양의 가정법원허가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자의 양부모 자격을 제한하고, 출생하고 7일이 경과한 후에 한 입양동의만 효력을 인정하는 등 입양숙려제를 도입했다. 그 외 입양아동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 학대·패륜행위 시 파양청구 명시,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 인정, 중앙입양원 설립·운영 등에 관해 규정했다.

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5) 입양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성과

입양아동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입양·미혼모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홍보로 사회적 인식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불충분한 수준이지만, 국내입양가정·미혼모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단계적 강화를 통해 양육부담이 점차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아동 행복증진, 국가인적자원 확보, 장래 사회비용 절감,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오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 자	주 요 내 용
2011.1.31	■ 건강한 사회 만들기 10대 실천과제로 '해외입양 줄이기' 선정
2011.2.25	■ 해외입양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TF 구성 - 관련부처(3), 학계(1), 연구계(2), 현장전문가(2)
2011.5.13	■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발표 - 입양제도 선진화 방안(국외입양 아동 줄이기 대책을 중심으로)
2011.8.4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11007호)
2011.9.20	■ 미혼모자시설 포럼
2011.11.12	■ 전국입양가족대회

6. 가출·위기청소년 줄이기

1) 가출·위기청소년 줄이기 개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17%인 약 87만명 정도가 위기청소년²⁸⁾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28) 가정여건 등의 위기로 인하여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있다. 가출·학업중단 등 고위험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돌봄기능의 약화, 유해환경 접촉 증가 등으로 인해 위기로 인이 가중되어 비행·범죄로 이어지는 등 '벼랑 끝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²⁹⁾ 그간 수차례 위기청소년 관련 대책을 마련³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예산 확보 및 부처 간 연계부족으로 인해 효과가 저조했다.

이에 건강한 사회만들기 과제에 포함하여 기존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부처 간 협조·이행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했다. 가출·위기청소년 줄이기를 위해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8개 부처)으로 ①적극적 위기에방 및 조가지원 ②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③청소년유해환경개선 ④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⑤민간과의 연계·협력강화 등 5개 세부과제를 수립추진 중이며, 반기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고 있다.

2) 주요 성과

첫째, 적극적 위기에방 및 조가지원을 위해 우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가출·학업중단·이주배경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유형별 보호·지원 근거를 마련(2011.12 개정, 2012.8 시행)하고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에 대한 접근 제한을 강화(2011.9 개정, 2012.9 시행)하는 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을 확대³¹⁾ 하며,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적극적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무료전화(1388), 문자(#1388), 인터넷(Cyber1388.kr), 앱(1388App) 등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접근경로를 다양화하고,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속 위기에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했다. 117 학교폭력 신고전화 및 윈스톱지원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확대 등 학교폭력 신고·상담체계도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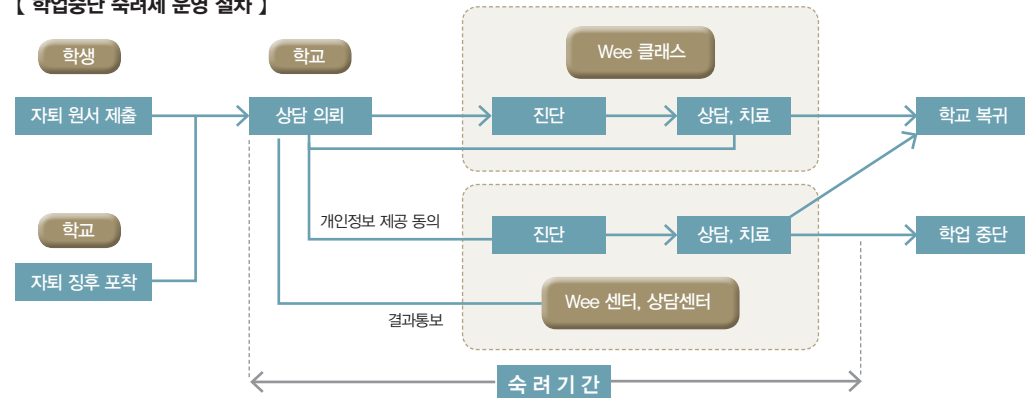
둘째,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 2013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³²⁾ 하고 청소년쉼터의 지역·성별·유형별 균형배치를 목표로 2011년 83개소에서 2012년 92개소로 확충하였으며, 의료특화형 이동쉼터 설치³³⁾ 및 일시쉼터 야간보호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학업중단 이전 숙려기간을 두어 Wee 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상담을 권고하는 '학업중단 숙려제'³⁴⁾를 2012년부터 확대 추진하였다. 숙려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을 안내받고, 여

29) 가출청소년 신고현황 : 2008년 2만3,000명 → 2009년 2만2,000명 → 2010년 2만8,000명(경찰청) / 고등학생 학업중단 비율 : 2008년 1.73% → 2009년 1.74% → 2010년 1.76%(KEDI) / 청소년 범죄현황 : 2009년 11만6,000명 → 2008년 12만3,000명 → 2009년 11만8,000명(경찰청)
30) 가출청소년보호대책(2008), 위기청소년 보호·관리 추진실태 개선방안(2009)
31) 2010년 1,126개교 → 2011년 4,300개교 → 2012년 4,500개교 실시(초1, 초4, 중1, 고1)
고위험 청소년을 위해서는 거주형 치료·재활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2012.10개소)에서 보호·치료·교육·자립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32) 2011년 186개 → 2012년 224개 → 2013년 246개(시·도 포함)
33) 의료특화형 쉼터(버스) 4개소 신규 설치를 통해 배회·노숙형 가출청소년 발굴
34)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가부에서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2011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상담복지센터가 시범 운영한 결과, 상담학생의 17.8%가 자퇴의사를 철회하여 그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절차 】



또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위기청소년 대안교육 및 비행원인 진단, 보호자교육 등을 수행³⁵⁾하는 한편, 비행·범죄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사례관리를 확대³⁶⁾하였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감안, 두드림 존³⁷⁾을 통해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후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셋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면서 인터넷 게임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차단(일명 ‘셋다운제’)를 본격 시행(2011.11~)했다. 그리고 인터넷게임중독 청소년 상담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중독과 몰입예방상담센터 운영 및 인터넷 레스큐스쿨(인터넷게임중독 치료)³⁸⁾을 확대했다.

넷째,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조손가족 희망사다리사업³⁹⁾ 및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⁴⁰⁾을 신규추진 또는 확대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부모, 수용자 부모를 둔 위기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가출청소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가출 원인인 가족문제 심층진단 및 가족관계 회복지원도 강화했다.

다섯째, 민간과의 연계·협력강화를 위해 중앙단위에서는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신설·운영(2012)하여 「청소년정책 관계기관협의회」⁴¹⁾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단위에서는 CYS-Net 운영협의회 및 1388청소년지원단을 활용하여 민간자원 발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예방, 멘토링,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등을 추진했다. 또한 가출문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35)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11년 6개소 → 2012년 10개소 / 2012년 5만3,798명 대상으로 법교육 등 추진
 36) 청소년 동반자: 2011년 880명(보호관찰청소년 2,000명 등 지원) → 2012년 980명
 37) 2009년 20개소 → 2010년 30개소 → 2011년 36개소 → 2012년 50개소
 38) 중·고교생, 12일간 치료: 2011년 160명(8회) → 2012년 600명(30회)
 39) 손자녀 학습지원, 기사도우미 파견, 주거환경 개선, 장학기관 연계 등 조손가족 지원 강화 / 2011년 4개 시·도 시범운영 → 2012년 16개 시·도 확대
 40) 무료법률지원 2009년 808건 → 2010년 1,634건 → 2011년 2,000건 → 2012년 2,500건
 41)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간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관심 제고를 위해 ‘청소년 쉼터 주간(10월 마지막 주)’을 활용, 가출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지지 확대를 위한 홍보도 강화했다.

3) 추진상황 점검 및 앞으로의 방향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책수요자인 위기경험 학부모,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서 점검·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현장보고회를 개최(2012.5.29)하여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관련정책(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여성아동보호종합대책 등)과의 상호연계 강화, 정책현장 및 수요자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주무부처의 지속적인 이행노력 조치독려 등을 통해 위기에방 및 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다.

가출·위기 청소년 줄이기 추진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11.10.14	■ 가출·위기청소년 보호강화방안 마련(국가정책조정회의)
2012.2.6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5.29	■ 현장보고회(서울 서초구 청소년지원센터)

7.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1)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대국이면서 동시에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OECD 평균보다 2배 높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GDP의 1%를 넘는 교통후진국이다. 교통사고는 매년 5,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00만명 이상의 부상자를 야기하며, 연간 12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2) 문제점 인식을 통한 추진전략 설정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후진국형 사고인 보행자 사고가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가 4.4명으로 OECD 평균 1.4명(2009)과 비교하여 약 3.1배 높았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 및 고령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35.2명(2009)으로 OECD 평균인 11.4명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한편 이륜차 및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2006~2010)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사고의 경우 연평균 9.6%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전거 사고 역시 9.2%의 증가율을 보였다.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비해 피해규모가 커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음주운전, 과속운전 등 중대 법규위반이 많은 점이다. 과속운전의 경우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사고 시 치사율이 약 10배 이상 높아 이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다.

3)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대책 추진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5개년 계획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7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5개년 종합시행계획(2008~2012)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점검·관리를 위해 2008년 4월에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국장급 및 민간전문가(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는 종합시행계획 초기인 2008년도에는 4월 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4회 개최했으며, 2009년 이후 매년 2회씩 개최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하여 성공적 과제추진에 기여했다. 한편 공동추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안전환경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무과장 및 공동추진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위원으로 구성한 실무기구 성격의 교통안전협의회를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대책 추진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현장보고회(2012.3.20)

2011년의 경우 교통사고 감소를 둔화로 인해 종합시행계획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 사회통합정책실장)에서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에서 도출된 안건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시달했다. 2011년도 6개 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고질적인 보행환경 전면 개편,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 음주운전 예방 및 교육 강화, 교통사고 잦은 곳 집중 개선, 지방자치단체 책임 및 역할 강화, 국민교통안전 의식 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추진 마지막 해로,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시키고 그간 성과를 전체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2년 3월 20일 도로교통공단에서 국무총리 주재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현장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보고회를 통하여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그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및 의료기관 관계자,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교통사고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대책의 성과와 과제를 2012년 9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5)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 점검

종합시행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중점추진대책 추진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각종 안전점검(교통안전인프라, 도로교통 사망사고지점, 안개구간 등)을 실시했다. DMB 시청 중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했으며, 국무총리실 후원으로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통질서의식 제고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6) 교통사고 사망자의 지속감소 등 소기의 성과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

자가 15.2% 줄었고, 지난해에도 5%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도 2007년 3.1명 수준에서 2011년에는 2.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합동으로 이뤄낸 성과라 할 것이다.

【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망자 (감소율)	6,166 (기준연도)	5,870 (-4.8%)	5,838 (-0.5%)	5,505 (-5.7%)	5,229 (-5.0%)
	5년간 937명(-15.2%) 감소				
자동차 1만대당	3.1	2.9	2.8	2.6	2.4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던 1990년대 초반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기까지 약 13년이 소요되어 선진국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감소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소율이 예전에 비해 둔화되고 있어 교통안전 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이용자 행태 개선,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의 선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에서 교육홍보에 이르기까지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교통안전 노력이 필요하다.

8.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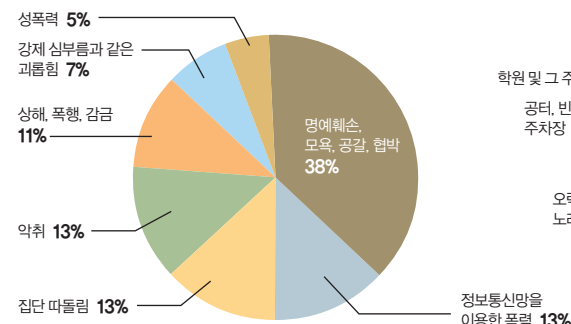
학교폭력이 저연령화·집단화되고, 따돌림을 비롯하여 아동대상 성폭력이 증가하면서 종전의 학교 중심 대책으로는 학생 안전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7월 29일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를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2년 4월 교과부에서 실시한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 체감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39만명 중 17만명(12.3%)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협박이나 욕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과 비방 등 언어폭력(51.2%)과 집단 따돌림(13.3%)이 전체 응답유형 가운데 64.5%를 차지하는 등 정서적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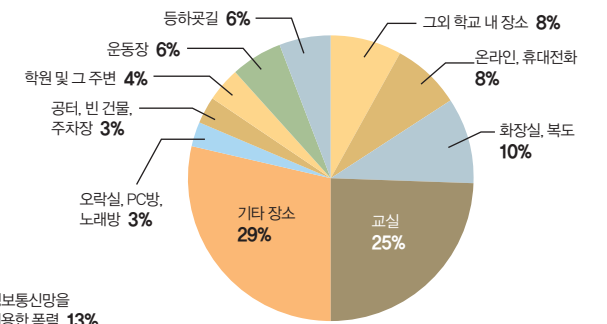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8.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 공동추진위원회 개최(1차)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수립 관련
2008.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2008~2012)을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
201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세미나 개최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 주최: 한국교통연구원, 후원: 국무총리실
2011.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인건보고 - 2011년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중점 추진대책안 보고
2012.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주재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현장보고회 개최 (민관 공동추진위원회 9차) - 관계부처 추진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교통사고 유가족,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간담회 실시
2012.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대회 개최 - 장소: 코엑스(주최: 국무총리실·국토해양부·경찰청 / 주관: 교통안전공단)
2012.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인건보고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

【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응답 현황 】



【 학교폭력 발생 장소 응답 현황 】



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및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2012.4~)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여섯째,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 단위학교별 학교폭력 실태과 악을 통해 효과적 대책수립에 활용하고자 국가 수준의 전수조사를 두 차례 실시(2012.4, 10 실시, 초·중·고 전체, 약 541만명)했으며, 부모·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했다.

일곱째, 학교안전 인프라를 점검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및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1,934개교에 대하여 배움터지킴이, CCTV 등 학교 안전 인프라 현장 점검을 실시(2012.8~9)했으며,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실시자(647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완료했다.

여덟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타인을 배려하는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인성교육 내용을 강화한 누리과정을 개정(2012.7.10)했으며,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인성교육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근절 추진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04.7.30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
2005.2	■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2005~2009) 기본계획 수립
2010.1.13	■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2010~2014) 기본계획 수립
2010.6.23	■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1.5.19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
2011.7.29	■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을 마련·발표
2012.2.6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2.4.1, 5.1	■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4.4	■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2012.6.12	■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2012.9.4	■ 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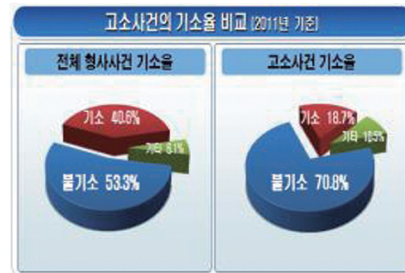
9.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1) 개요

우리나라 고소사건은 전체 사건의 22% 내외를 차지하여 일본에 비해 50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 인원도 1,200여 명으로 일본의 약 170배 수준이다. 반면 최근 5년간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 정도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잘못된 ‘법 만능주의’에 기인한 무분별한 고소가 우리 사회에 팽배함에 따라 사회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관련기관의 업무가 과중해져서 정작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 전반의 불신풍조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형성을 방해하여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원인 분석

이처럼 고소가 빈발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①거래 시 계약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등 비합리적 거래관행이 남아 있고, ②민사소송은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강제집행이 곤란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 ③재산 범죄와 민사 채무 불이행을 구별하지 못해 국가, 특히 수사기관에 그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고소·고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계약 내용과 증빙을 명확화하여 합리적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고소·고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거래 관행을 선진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3) 추진실적 및 성과

정부는 공증의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증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증 사무소가 없는 14개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 공증사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올바른 법의식 함양을 위해 법교육 실시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쉽고 효율적인 권리확보 절차를 알 수 있도록 ‘법교육 출장강연’, ‘시민법률콘서트’ 등을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청소년의 올바른 법의식 함양을 위해 ‘모의재판 경연대회’, ‘생활법 경시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했고, ‘솔로몬 로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민·형사 사건절차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법사랑 사이버랜드’와 스마트폰용 앱인 ‘법아 알려줘’ 등을 개발하여 생활법률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앱, UCC, 블로그, 트위터 등 뉴미디어와 같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정책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무료 법률구조제도, 법률홈닥터 사업 등을 집중 홍보했고, 전국 대학생 187명으로 구성된 ‘법사랑 서포터즈’와 함께 거래 및 법률 문화 선진화를 위한 현장 취재, 캠페인 등을 전개했으며, 학생·일반인을 상대로 ‘법질서확립, 비합리적 계약 및 이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주제로 한 UCC·만화 등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를 개선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5월 전자소송 방식의 민사소송을 도입하였고,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사집행 개선방안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구조 강화·확대를 위해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법률구조공단 지소 45개를 설치했고, 농·어촌 및 무변촌, 산간벽지 주민의 사법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이동법률상담 전용버스를 운영하여 윈스톱 법률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결혼이민자 등에까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시범사업(2011.4~2012.3)을 실시했으며, 2012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20명을 선발하여 각 지역 거점기관(지자체 11개소, 사회복지협의회 9개소)에 배치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동안 높은 문턱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법률구조 알선, 법률상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가능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현장보고회(2012.4.20)

셋째, 고소남용사건에 대한 수사를 자제하는 등 민·형사 사건을 준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불법 음원 다운로드 등에 대한 고소의 경우 대검찰청에서 각하 또는 기소유예하도록 처리 지침을 시행한 결과, 9만여 명에 이르던 저작권법위반 사범이 3만 명 선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검찰에서는 무고사범을 엄벌하고 있다. 작년 1월부터 올

해 2월까지 무고사범 2,916명을 인지하여 그중 116명을 구속했으며, 무고사범 단속 실적을 홍보하여 무고성 고소를 억제하고 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4월 20일(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솔로몬 로파크’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피해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2009년 63만건에 이르던 고소사건이 2010년에는 51만여 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 수십 년간 비합리적인 거래관행과 실효성이 부족한 민사절차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어온 실정이라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고소·고발 줄이기는 거래 관행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국민들의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교육 활성화,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의 장기적·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 자	주 요 내 용
2011.1.31	■ 건강한 사회 만들기 10대 실천과제로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선정
2011.7.15	■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추진방안 관련 보고 및 논의
2012.4.20	■ 국무총리 주재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현장보고회 개최

10.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1) 개요

무선인터넷의 이용 확대 및 스마트폰 보급,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의 인기로 인해 정보 확산 및 소통이 활성화되는 신(新)인터넷 시대에 들어섰다. 스마트 기기가 이끌어가는 신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상의 정보 및 소통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악성댓글 등의 역기능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스마트 인터넷 시대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전 국민이 IT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인터넷 문화 선진국을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는 2011년 2월에 ‘건강한 사회 만들기’ 실천 과제로 선정되어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아인세 범국민운동, 한국인터넷드림단 활동, 인터넷 윤리 브랜드 개발·홍보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2)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을 갖도록 체험형 인터넷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했다. ‘인터넷 윤리교실’과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 체험활동’, ‘인터넷 윤리 순회강연’을 초·중·고 404개 학교의 2만513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2011)했고, 유치원생 5,976명을 대상으로 ‘유아 인터넷 미디어 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인터넷 윤리교실’은 UCC를 제작하면서 인터넷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활용을 유도하는 수업으로, 2008년 교육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대상을 확대해 2011년에는 291개교 7,998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2012년은 239개교 6,22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초중고 정규 수업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인터넷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결합해 2011년 서울·경기 1,555명(53개교)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며, 2012년에는 수도권 외에 부산·광주지역까지 확대하여 3,16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정기적인 인터넷 윤리교육 진행이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순회강연’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 2012년 인터넷 윤리교실 운영현황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계
교육인원(명)	3,951	2,272	6,223
학교 수(개)	169	70	239

【 2012년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현황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육인원(명)	2,355	328	477	3,160
학교 수(개)	87	14	19	120

【 2012년 인터넷 윤리 순회강연 운영현황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계
교육인원(명)	17,523	295	17,818
학교 수(개)	70	2	72

아울러 일선 현장의 인터넷 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1년에 2,622명, 2012년은 10월 말 현재 2,414명의 초·중등 교원 및 장학관, 교장이 교육을 수료했다. 또한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4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본인의 인터넷 윤리의식 수준을 인지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 자세를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교원 오프라인 연수 교육

【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현황(2012) 】

구분	초등	중·고등	대학	계
2012	20,973	4,728	11,348	37,049

3) 아인세 범국민운동 전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범국민협의회’(2011년 65개→2012년 78개)를 구성해 연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며, 실천적 문화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범국민협의회는 민간/협회/단체(43), 언론사(13), 정부/산하기관(11), 네트워크 제공사업자(8), 교육계(3)가 참여한 민간 네트워크로, 우수 인터넷 윤리 홍보 콘텐츠를 공모·시상하는 인터넷 윤리대전을 개최하고, 연간 1단체 1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4) 한국인터넷드림단 활동

‘한국인터넷드림단’은 1~3기에 걸쳐 총 9,016명의 청소년이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선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2년도에는 전국 20개교에서 실시하는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선플달기 캠페인, 지킴이 활동과 같은 인터넷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아인세 리더 캠프, IT기관 탐방, 멘토링, 인터넷 효앨범 제작,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3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 및 활동현황

5) 인터넷 윤리 로고·캐릭터 개발 및 홍보

인터넷 윤리가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터넷 윤리 브랜드 ‘토닥이’와 ‘웰리’를 개발했다. 2011년 12월, 전국 주요 극장, 편의점, 전광판, IPTV 등에 인터넷 윤리 홍보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지상파 방송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터넷 윤리 대국민 홍보를 추진 중이다.

특히 2012년 6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주간(6.11~16)에는 SNS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SNS를 통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강화했고, KBS, MBC, SBS, EBS 방송사와 함께 공익광고 및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터넷 윤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서울시 초·중·고 1,284개교에 인터넷 윤리 실천수칙 포스터를 배포하여 청소년 대상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6)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기기 및 서비스가 증가하고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이용자의 건강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음란, 도박, 법질서 위반 정보도 함께 증가했다. 이에 국내 웹하드 서비스를 통한 음란물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였으며,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 방통심의 위 심의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성을 통해 신속 조치하는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 관련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연계한 인터넷 윤리 공익광고 송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 TV(KBS, MBC, SBS), 라디오, 기타 방송사(EBS, 케이블TV)에 1.5개월 동안 매체별 100여 회 송출
2011.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인터넷 윤리 브랜드 및 징글송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인터넷 윤리 로고(토닥이) 및 캐릭터(웰리) 개발
2011.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인세] 아인세 주간 선포식 및 대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에서 방통위원장, 일반인 등 400명 참석
201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인세] 인터넷윤리체험전 및 드림단 인터넷윤리골든벨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엑스포(9.23), 부산BEXCO(9.30), 광주컨벤션센터(11.17), 춘천창작개발센터(12.2) [아인세] 올바른 인터넷 이용방법 확산 컨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블로그산업협회 및 소셜미디어 일반인 등 53명 참석
2011.9.2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인세] 온라인 서약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포털, 통신사업자, 봉사단체 온라인 기부캠페인 전개
2011.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인세] IT와 함께하는 행복한 실버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문화체험, 교육, 취업정보 제공 및 공모전 수상작 전시
2011.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인세] 2011 인터넷 윤리대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고, 연간 우수 드림단 활동단원에 대한 포상 실시(우수단원 3명 시상)
2012.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인세] 제1차 아인세범국민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아인세주간행사 추진계획 및 회원사 간의 협력방안 논의
201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림단] 제3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지역(4.5)을 시작으로 전국 드림단 시범학교(20개교)에서 지역별 3기 드림단 발족을 축하하는 학교별 자체 발대식 개최 - SNS(드림단 페이스북 등)를 통한 서울지역 발대식 생중계로 전국 드림단원 참여 및 소통 강화(실시간 댓글 및 인증샷 보내기 등을 통해 총 31개교 756명이 동시 참여)
201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지상파 TV, 버스, 지하철, 전광판에 인터넷 윤리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및 EBS, 서울시내 주요 버스 42대, 지하철 3호선 34개 역 승강장 및 객실에 인터넷 윤리 광고영상 송출
2012.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국제 인터넷 윤리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인터넷 윤리 이슈·대응방안 공유 및 토론
2012.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인터넷 윤리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와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공모전(앱·UCC·표어·포스터) 시상

11. 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

1) 개요

1970~80년대에는 관 주도 혼례규칙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고비용 혼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혼례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한 채 상업적·물질적 혼례로 혼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만혼·비혼의 한 원인이 되고 하객부담 또한 가중되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를 건강한 사회 만들기 과제로 선정(2011.3)하여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추진계획'을 마련(2011.6)했다. 규제보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선과 홍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혼례문화를 개선·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허례허식 혼례를 지양하고 실속 있는 생활공감형 혼례문화를 정착시키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2) 주요 내용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2011년에는 실용적 관혼상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초점⁴²⁾을 두고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문화조성, 홍보 및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공직사회 건전 경조문화 선도, 공공시설 예식장 적극 개방·활용 등 3개 분야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2012년에는 2011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실천 확산에 중점을 두고 ①혼례비용 실태조사 및 예비부부 교육 ②건전혼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③ 검소하고 개성 있는 혼례여건 조성 등을 중점 추진했으며,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추진방안도 함께 추진했다.

3) 주요 추진성과

먼저 시민단체⁴³⁾와 연계해서 올바른 혼례가치관 교육, 혼례의 중요성과 준비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예비부부·부모 대상 교육 등을 강화했다. 둘째, 방송 예능·교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검소한 혼례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혼례 사례·정보를 공유하는 혼례 블로그를 운영하여 합

리적 혼례 방법·프로그램 등 정보를 제공했다. 민관 협력 국민인식 캠페인⁴⁴⁾을 전개하고 참여⁴⁵⁾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수도권 및 지방 주요 도시의 혼인 예식장 방문과 신혼부부 대상 면접을 통해 혼례식장 예식 가격, 패키지 상품, 계약 내용 등을 파악하여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예식협회 등에 개선을 요구하고, 예식업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혼례예식 비용 모니터링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검소하고 개성 있는 혼례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체 보유 강당 등을 혼인 예식장으로 개방하도록 적극 권장·유도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보도하기로 했다. 비용 절감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혼례 여건 조성을 위해 알뜰하고 친환경적인 혼례 모형 개발·보급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히 부처·지자체(산하기관 포함), 공공기관 등의 시설을 혼례예식 장소로 개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실속 있고 의미 있는 혼례를 치르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⁴⁶⁾

앞으로 공공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그 운영 수준도 높이며, 혼례정보 제공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호화 경조사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공직자의 신분 때문에 경조사가 관계형성 도구, 뇌물·청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경조사처벌 전통문화가 왜곡되어 부패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부패친화적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 추진했다.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의 솔선수범 동참확대⁴⁷⁾, 공공기관별 자율적 경조문화 조성⁴⁸⁾ 등을 추진하여 공직사회부터 건전한 경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변화·실천을 유도했다. 공공시설 이용,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는 이를 실천하는 젊은이를 격려하고 '내 힘으로 하는 참 혼인식'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고자 '참 혼인식' 주례(2012.9.16, 서울종합법원청사)를 서거나 사회지도층 건전 혼례문화 '1,000명 서약' 캠페인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솔선수범으로 앞장섰다.



총리가 주례 선 작은 결혼식
"자기 힘으로 결혼식 비용 절감으로 용기있는 젊은이들이 내 아들도 이렇게 서약 것" 이 두 사람은 평소 즐기던 결혼식(예식장)과 달리, 예식장 대신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 자리에서 신혼부부에게 축하를 건넨다. (2012.9.16, 서울종합법원청사)



김항식 총리 '참 혼인식' 주례(2012.9.16) 관련 보도

42)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협의회' 출범(2011.7) '아름다운 혼례문화 정착 100인 선언식' 개최(2011.10) / 시대공간 혼례문화 확산 토론회(2011.10)
43) 소비자시민모임 '대학생·미혼남녀 대상 교육' / 한국YWCA연합회 '청년여성·부모대상 교육' / 청년여성문화원 '신랑각시 혼인교실, 부모교실' / 국민운동단체(세마을 지도자, 이·통장, 지역유지, 일반 시민 등 대상)

44)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건전 혼례문화 확산 대백의 일환으로 '내 힘으로 하는 작은 혼인식 100쌍' 캠페인 추진 중(2012.4~) : 스스로 마련한 비용(1,000만원 내외)으로 혼인할 예비부부 100쌍을 선정·지원하여 검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혼례문화 확산·유도
45) 사회지도층 대상으로 혼례 사례 지속 발굴, 언론을 통한 확산 유도 / 일반인 대상으로 고비용 허례허식을 타파한 아름다운 혼례문화 조성 수기 공모, 사례집 발간 /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2012년 9월부터 1,000명의 작은 결혼식 릴레이 약속(하객은 신랑·신부 친구 및 친지 중심으로, 호화혼례의 주례는 서지 않는 등) 캠페인
46) 공공시설 예식장소 일반 국민에게 정보 제공, 전문 홈페이지(http://weddinginc.org)를 통해 확인 가능(2012.9~)
47) 2012년 반부패 경정력 평가에 '건전한 경조사 등 고위직 솔선수범'을 평가항목으로 반영(2012.3), 건전한 경조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2012.9)
48) 지침시달(2012.1.18, 공공기관장 서한 등을 통한 의지표명, 공공시설 결혼식장 활용 확대, 과도한 경조사 통지 자체 등),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검소한 경조사 실천사례 다수 확인(친인척·지인 중심의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화환 등 거절, 공공시설 활용 등)

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3.18	▪ '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를 건강한 사회 만들기 과제로 선정
2011.6.10	▪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추진계획 마련(국가정책조정회의)
2012.5.11	▪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추진계획 보고(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2.9.4	▪ '공공시설 개방 현황 및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

12. 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1) 현황

사회가 불안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며 경제가 침체될수록 뜻밖의 행복인 '요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마련이며, 일확천금과 인생역전에 대한 환상과 인간의 본능은 사행산업의 급성장을 가져온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사행산업 총매출이 10년 만에 5배나 증가(2011년 18조원)하고, 국내총생산(GDP) 중 사행산업 순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평균(0.58%)보다 높은 0.67%(2007년 기준)까지 늘어난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행산업의 확산 추세하에 사회구성원들의 도박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9.5%로, 외국에 비해 3~4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성인 중 80만여 명은 당장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 유병률(CPGI 기준)】

국가	한국	캐나다	호주	영국
유병률	9.5%	1.5~2.9%	2.4%	1.9%
발표연도	2007	2005	2006	2007

2) 과제 개요

도박중독은 우울증, 자살은 물론, 가정파탄, 범죄와 같이 개인, 가족, 사회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번 중독되면 재발률이 높고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사전에 국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비극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규모는 합법산업의 3배 이상으로 과약⁴⁹⁾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도박은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등 범법행위와 연계되어 그 부작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점점 교묘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도박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물론 금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인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 이상 불법도박 및 도박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정부의 엄정한 관리와 강력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무총리실은 우리 사회의 불건전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하나로 '불법도박·도박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불법도박 단속의지를 천명하여 사행심 확산을 단속하는 한편, 도박중독에 대한 개인, 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3) 주요 추진성과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성 및 법적 기반 마련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헌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그동안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사행산업 매출총량관리, 전자카드 도입,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 등을 통해 사행산업을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시키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목적으로 다양한 관리·감독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도박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건강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다만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가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함에도 그동안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기구로 출범한 사감위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권이 없고, 단속 근거도 분명하지 않

49) 2008년 기준 불법도박시장 규모 53조7,000억원 추정(2009, 사감위)

은 등 통합적 감독관리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국무총리실은 2012년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화 및 도박중독 예방·치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이하 「사감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했다. 특히 「사감위법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며 법안 개정관련 정부 입장을 정리했고, 마침내 2012년 5월 「사감위법 개정안」⁵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불법도박 감시 기능 부여 등을 통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의 행사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나. 「불법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 구성·운영

불법게임기 설치 운영으로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바다이야기’ 사건 발생 이후,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8년부터 관계부처 합동 「불법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을 구성했다. 2008년 10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 방통위, 문화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⁵¹⁾으로 「불법게임·도박물 근절대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주재로 반기별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관계부처들은 동 대책반을 통해 과제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협조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등 상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오고 있다. 그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복권 총량 제한이나 사행산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불법 온라인 사이트 조기 차단 조치를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이외는 별도로 2012년 2월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희망길벗 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 및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를 방문, 실제 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4)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2012년 11월 말 개정 「사감위법」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 개정 및 실행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정 「사감위법」을 근거로 사행산업자들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이를 통해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

50) 「사감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사감위의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추가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설치 법제화
 • 중독예방·치유업무를 전담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법인)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징수
 51) 국무총리실, 방통위, 법무부, 문화부, 국세청, 경찰청, 국정원, 사감위 등

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관련 계기일과 연계한 현장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성공적인 중독 극복자 및 일선 상담업무 담당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추진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0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 구성 - 관계부처 합동 「불법게임·도박물 근절대책」 발표
2009.3~20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 운영(6회)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연중 상시 단속체제 구축, 게임 등급 분류기능 민관 이관,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추진계획 등 논의
20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사행산업 건전화 및 도박중독 예방·치유 대책을 마련·발표
2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 운영(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주재)

13. 인터넷 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1) 개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자 수 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IT강국⁵²⁾이며, 최근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이용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은 사회 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부상해왔다. 반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폭력과 범죄, 과도한 인터넷 및 게임 중독 등 역기능도 계속 증가하여 익명의 다수가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인터넷 및 게임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52)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95.9%) / ITU(국제전기통신연합)조사 ICT 발전지수 종합 세계 1위(CT역량 2위) / ICT이용도 세계 1위(2011)

되고 있다. 「2011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사용 국민의 7.7%인 234만 명이 인터넷 중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인(6.8%)에 비해 유·아동(7.9%) 및 청소년(10.4%)의 중독률이 높게 나타나 일찍부터 중독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치료대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인터넷·게임 중독은 개인의 정서함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 역시 인터넷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환경임을 인지하고,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주요 내용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놀이치료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전경

‘인터넷 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는 국무총리실에서 추진 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의 하나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종합계획」하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방교육·중독 상담 및 치료 등 관련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해당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며, SNS 및 동영상, 방송 광고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 해소를 포함한 12대 건강사회 만들기 과제에 대한 홍보 역시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및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를 방문, 실제 상담 및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정책 현장을 확인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는 인터넷 중독 해소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12년 2월에는 관계자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 인터넷 중독을 극복한 학생과 학부모, 일선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 및 의사,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인터넷 중독 해소 관계자 오찬 간담회(2012.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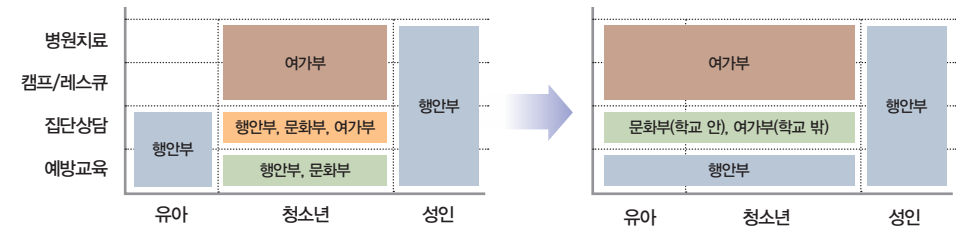
3) 주요 추진성과

2010년에는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종합계획(2010~2012)’을 수립하여 유·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등 모든 연령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포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실행과제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인터넷중독 정책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표준 마련, 부처 간 업무조정 협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대응 방안 논의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초에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도 범부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정했으며,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예방교육(130만명)과 전문상담(70만건)을 진행하고, 고위험 중독자를 대상으로 캠프, 방문상담 등 심화프로그램을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중독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콘텐츠를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책협의회는 그간 다소 중복적으로 추진해오던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중독 대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방교육-전문상담-치료연계」 등 세부 업무영역을 부처별 특성에 따라 조정했다. 유아·청소년 대상 사업의 경우 예방교육은 2002년부터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해온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학교방문 집단상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센터를 통해 실시하며, 여성가족부는 캠프·레스큐스쿨 등 기숙형 상담과 병원치료 연계사업을 전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성인 대상 사업은 예방교육부터 상담·치료연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수행하기로 했다.

【업무영역 조정 결과】



아울러 업무조정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고 상담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영역별 혼란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 산하기관과 상담기관 등⁵³⁾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기로 했다. 「예방교육-상담-치료」 등 사업 간 체계적인 연계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상담기법 공유, 상담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중독자 공동치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5개 국립병원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존질환⁵⁴⁾을 보유한 고위험군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53)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복지상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공주병원 등 13개 기관
54) 하나의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증상이 따라오는 현상(인터넷중독 + 대인기피증 등)

14.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1) 개요

최근 국제교류 증가와 마약 밀반입 국가 다변화 및 신종 마약확산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광범위화·조직화·다양화되는 추세이다. 해외유학생 등은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 마약류(JWH-018, 5-메오딤트 등)를 사용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제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집 및 유통 경로국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제사회에서 관리 취약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외모를 중시하며 성적 지상주의 풍조가 만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수요가 증가하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남용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업 스트레스,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유해화학물질(본드, 부탄가스 등) 복용 경험이 증가(2009년 1.6% → 2010년 2.7%)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연구(2009)에 따르면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조4,899억원(GDP 0.26%)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회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은 「건강한 사회 만들기」 과제에 포함하여 2011년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약퇴치·약물오남용 줄이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민간전문가 및 복지부, 법무부, 대검찰청, 식약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민관 합동으로 치료보호기관, 교정시설, 공항, 항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 마약류 실태조사(2011.4-5)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우선 마약류 밀반입 다변화에 따라 주요 국가 경로별 마약밀수 정보분석팀을 운영하고 선진국 벤치마킹 추진 등 마약정보 분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장기 출어선·수상레저사업자 중 마약류 밀반입 우려자를 선정·집중 관리, 수산물 수출입업자·수산시장 주변 마약류 첩보수집 활동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사회복귀 활성화, 교정시설의 치료·재활기능 강화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 보강도 함께 추진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해 사회문제 야기 품목 취급업체를 지도·점검하고 상시 온라인 불법판매를 모니터링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 포털사 등과 MOU를 체결하여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소비자단체 등과도 소비자들의 건전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활동 등 협력 사업을 펼쳤다.

3) 주요 추진성과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를 통해 얻어진 주요 성과는 마약류 공급차단, 마약류 수요억제, 홍보·예방강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마약류 공급차단은 유엔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단(INC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 결과, 제35차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에서 한국대표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우리나라 대검찰청 주관으로 창립, 추진하게 되었다. 해외에서 새로 등장하거나 급속 확산 중인 신종마약류(7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샘플 입수를 통해 국내 마약류 유관기관에 지원했고, 인터넷 이용 마약범죄 단속 및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의뢰(4건), 사이트 차단요청(방통위 등 275건), 해외 신종마약류 사이트 차단(8개)이 이루어졌다.

마약류 수요억제 부문에서는 전국 시·도별 치료보호기관 4개를 신규로 지정했으며, 검찰 입원의뢰 환자에 대한 검찰청과 치료보호기관 간 환자관리(인수인계, 문제발생 시 조치방안 등) 및 치료경과에 대한 주기적 보고체계 등에 대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다.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우수자는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을 실시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발을 위한 송천재활센터 입소인원을 증원하고 시설개선비 확보 등 인프라를 확충했다.

홍보·예방 강화 부문에서는 불법 마약류 폐해 및 퇴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류 대리운반 근절 캠페인 및 전시회(2011.6),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2011.4-6) 홍보 포스터 및 책자 배포, 양귀비 소량재배사범 대상 홍보·계도를 비롯하여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2011.6), 『식욕억제제 안전복용 가이드』 배포(2011.11), 일간지·인터넷매체·생활밀착형 대중매체(KTX, 지하철)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가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효율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기 위하여 복지부·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간에 MOU를 체결(2011.6)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 20주년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2012.6.26)을 개최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을 마약류(향정)로 지정 관리(2011.2)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2011.9)했으며, 의약품안심서비스(DUR)를 전국 요양기관에 확대 시행하고 질환별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개발·보급(5종)했다.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2011년 1차)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추진
2011.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합동 마약류 실태조사(4.27~5.2) - 민간위원, 마약퇴치운동본부, 복지부, 대검찰청, 식약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참여 - 치료보호기관, 교정시설, 공항, 항만 방문조사
201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2011년 2차) - 마약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안 등 - 대검찰청 주관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상설기구화 추진 등
201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안건보고 -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1.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2011년 3차) - 국가정책조정회의(9.2)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관련 현장점검(2.3~9)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학생건강정보센터 등
2012.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 - 한국마약퇴치운동 20주년 기념식 - 세계마약퇴치 현황과 발전방향(심포지엄)
2012.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 유엔 등 국제마약기구 및 전 세계 마약수사기관 등과 국제협력 도모

제7절 에너지 협력외교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임에도 에너지의 96%, 광물자원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해외의존형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로 인해 우리 경제는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 등 에너지·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공급 교란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21세기 들어 중국 등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자원 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산유국의 공급 능력은 정체됨으로 인해 국제 원유와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한편 러시아, 중남미 등 자원보유국은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었다.

그간 정부는 1973년과 1979년에 발생한 1, 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석유비축, 자원개발 등 다양한 에너지·자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정적인 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전환하고,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들을 추진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협력외교 강화’를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고, 국무총리의 주요 임무에 에너지협력외교를 포함시켰다.

“우리 경제의 엔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힘쓸 것임”

(2008.2.26,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2. 에너지협력외교의 목표 및 추진계획

1) 에너지협력외교의 목표

에너지협력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란 국가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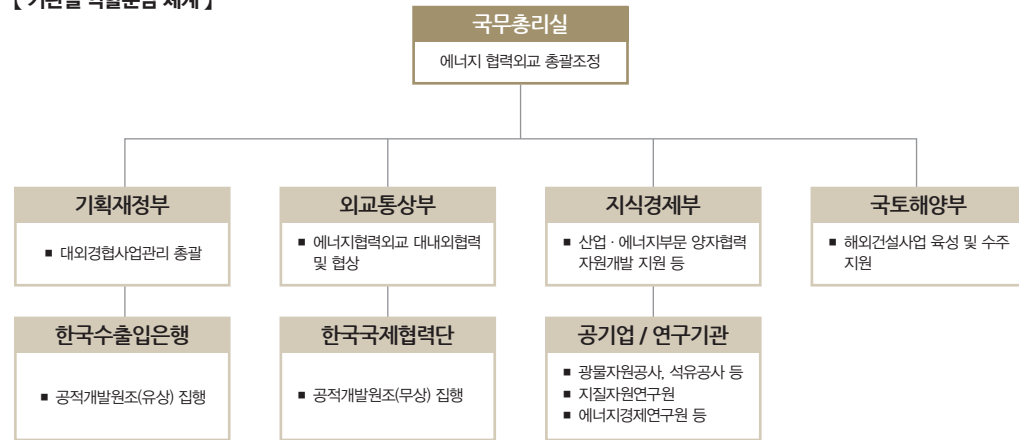
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여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률⁵⁵⁾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에너지협력외교의 일차적 목표는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을 수주하고, 수주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상대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은 결국 당사자들이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성사되지만, 그 과정에서 깊은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협력외교는 우리 기업의 사업진출을 단순히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결부된 관련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전반적으로 격상시키는 포괄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에너지협력외교의 추진계획

가.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이명박 정부는 단기성과 위주의 자원개발 외교, 범정부적 차원의 사업추진 인프라 미흡⁵⁶⁾ 등 그동안 지적받아온 우리 에너지협력외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8년 3월 국무총리실에 자원협력과를 신설하고,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⁵⁷⁾ 및 2010년 10월 ‘한-아프리카 협력지원협의회’⁵⁸⁾를 만들어 범정부적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별 역할분담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기관별 역할분담 체계】



55) 자주개발률이란 정부가 주요 에너지원의 자립능력 제고 및 해외자원개발의 역량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의 정책목표로 설정한 계량적 지표로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여 확보한 자원량(자주개발물량)을 자원의 총수입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56)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8. 산업자원부)에서는 그간 국가에너지위원회 등 전략논의기구 등 추진체계를 강화했으나 범정부적 차원의 사업지원 부족 및 부처 간 연계부족으로 효과가 저하되었다고 지적함
 57)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2008.3 설치) : 국무총리실장 주재, 기재부·외교부·지경부 등 유관부처 차관 및 자원개발 공기업/연구기관 기관장 참석
 58) 한-아프리카 협력지원협의회(2010.10 설치)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기재부·외교부·지경부 등 유관부처 관계 국장 및 공공기관 책임자 참석, 자원부국이자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

즉 국무총리실은 에너지협력외교정책의 총괄조정 및 에너지·자원 관련 국내 현안을 조정하는 사령탑 역할, 외교통상부는 에너지협력외교와 관련한 대내외 협력과 협상 및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역할,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자원 부문 양자협력 강화 및 해외 석유·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지원 역할 등으로 분담했다.

나. 추진전략

정부는 2008년 에너지협력외교의 목표를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에너지 기술자립도 제고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3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전략적·호혜적 에너지협력외교를 추진했다. 러시아, 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에 대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별 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우라늄·철·동 등 6대 전략광물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추진했다.

【지역별 자원개발 전략】

구분	여건	진출전략
러시아 중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풍부 → 진출 여지 큼 - 카스피해 석유 잠재매장량은 2,700억 배럴로 제2의 중동이라 불림 - 우라늄의 세계적 매장량 부존 ■ 오일머니 증가 → 경제성장 열망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지형 자원개발(정유, IT, 발전소 등) ■ 산업·투자 협력 강화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풍부하나 정세 불안으로 자원개발 실적 저조 ■ 사회인프라 취약, 중국 진출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지원 ■ 패키지형 자원개발(발전소, SOC 등)
동남아 대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러시아에 비해 자원이 많지 않으나 지리적 인접성으로 자원으로입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지원/기술연수 등 산업협력 강화 ■ 자원협력위 지속 개최
중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풍부하나 지리적으로 멀어 자원으로입 여건 불리 ■ 자원민족주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 자원외교, 자원협력위 등 정부 협력채널 강화 ■ 실수요자 중심의 제련소 등 처리시설 진출 병행
중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자원보유지역이나 자국 국영회사 중심으로 운영하여 진출 여지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틈새 공략을 통한 진출 교두보 마련 - 이라크 쿠르드 지역 진출 - 예멘, 오만 등 보유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진출 가능성 있는 국가진출

자료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광물별 자원개발 전략】

광종	현황	개발전략
우라늄, 동	원천·산업원료로서 중요하나, 자주개발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자원외교로 신규사업 발굴 ■ 광진공 등 정부투자기관 선도투자 유도 ■ 중앙아시아(우라늄), 남미 및 아프리카(동) 지역 집중 공략 ■ 중점투자국 : 카자흐, 캐나다, 호주, 우즈베크, 니제르, 남아공, 나미비아, 칠레, 페루 ■ 미래대비 전략투자국 : 미얀마, 몽골, 잠비아, 콩고 등

광 종	현 황	개발 전략
철, 니켈	중국·인도 등의 제철 수요증가로 투자 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소 건설 등과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인도(철), 마다가스카르(니켈) 프로젝트 집중관리 중점투자국: 호주,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래대비 전략투자국: 남아공 등 아프리카 국가
유연탄, 아연	한전·고려아연 등 국내 수요의 안정적 공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수요자·유통업체·자원기업 등의 컨소시엄 구성 진출 원가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의 선택과 집중 호주·인도네시아 등과의 자원협력위 채널 활용 중점투자국: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페루 미래대비 전략투자국: 남아공, 러시아, 몽골, 모잠비크, 콩고

자료: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그리고 우리의 자원 확보만을 도모하는 일방적 자원외교에서 벗어나 자원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경험·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호혜적 전략’을 추진했다. 또한 다양한 자원협력 채널과 외교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입체적 전략’을 추진했다. 즉 자원개발사업의 진출이전 단계 - 사업발굴 단계 - 사업확보 단계 - 후속관리 단계의 사안별로 정상외교, 사절단, 자원협력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장 적합한 외교지원수단을 동원하여 체계화된 에너지협력외교를 추진했다.

“에너지를 수입만 해오는 ‘일방통행식, 수탈형’ 자원외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인적, 물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가져나가 개발도상에 있는 자원부국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쌍방통행형’, ‘상호 호혜적’, ‘윈-윈’의 자원외교를 추진해나가겠다” (2008.2.29, 한승수 국무총리 취임사)

【단계별 외교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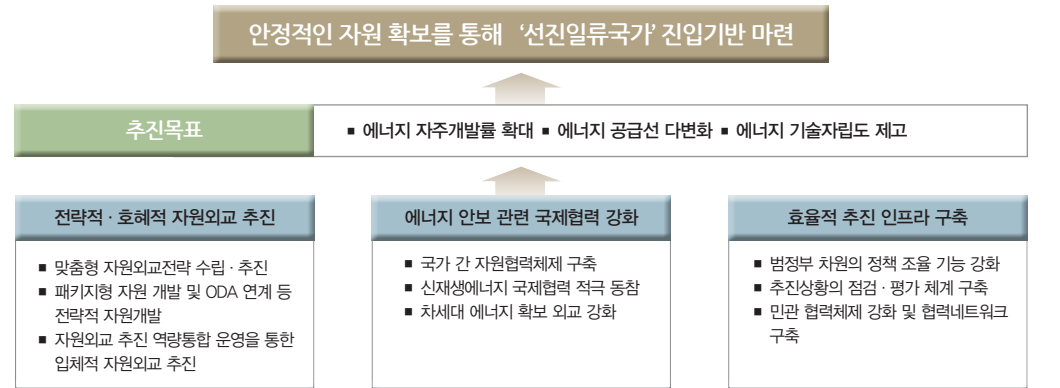
구 분	활동 목표	외교 지원
진출이전 단계	여건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위기 조성: ODA 지원, 사절단 등 인맥관리: 주요인사 초청·연수
사업발굴 단계	정보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수집: 관계부처, KOTRA 등 민관합동 조사단 파견
사업확보 단계	협상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계기 마련: 자원협력위 협상지원: 사절단 협상타결 지원: 정상회담·국무총리회담
후속관리 단계	진행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상황 점검·관리: 자원협력위 애로해소: 사절단

자료: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둘째, 에너지 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자원보유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양자 협력 채널 강화 및 다자 협의체(에너지 관련 국제회의 등) 참여를 통해 국제적 협력노력을 강화했다.⁵⁹⁾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질서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⁶⁰⁾ 석유대체에너지(가스 하이드레이트, 오일샌드, 석탄액화사업) 등 차세대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노력을 강화했다.

셋째, 범부처 차원에서 에너지 협력외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추진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 검토 및 에너지협력외교정책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지역전문가 및 자원개발 전문인력과의 정보공유, 정책자문, 공동이슈 발굴 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했다.

【에너지협력외교 추진계획】



자료: 국무총리실, 자원외교 추진계획(2008.3)

3. 추진성과 및 평가

1)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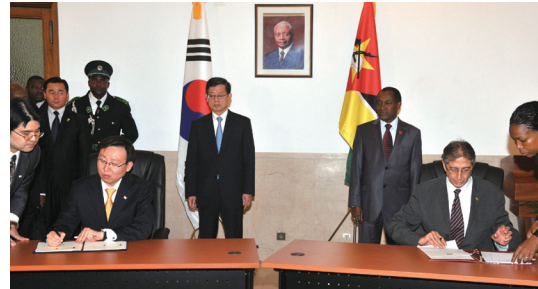
가. 국무총리의 에너지협력외교 활동 전개

국무총리는 석유·가스, 광물 등 자원이 풍부하고 정부 최고위층의 영향력이 큰 중앙아시아 지역, 전통적인 에너지·인프라 협력국가인 중동 지역, 터키·UAE 등 한국과의 원전협력 요청국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을 전개했다.⁶¹⁾

59) 다자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체인 REEEP(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파트너십), IPHE(수소경제를 위한 국제파트너십) 등에 참여
 60)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공동개발사업 등에 참여
 61) 2008년 5월 중앙아시아 지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방문, 2008년 11월 도하개발포럼 참석을 계기로 카타르·쿠웨이트·터키 방문, 2009년 3월 터키 물포럼 참석을 계기로 터키·요르단 방문, 2009년 6월 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UAE 방문, 2010년 12월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파라과이·우루과이 방문, 2011년 9월 불가리아·우크라이나 방문, 2012년 1월 세계미래에너지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만·UAE 방문, 2012년 7월 케냐·모잠비크 방문 등 총 8회, 17개국 방문



한승수 국무총리, 카자흐스탄 총리와외의 확대회담(2008.5.13)



김황식 국무총리, 한-모잠비크 총리회담 후 '자원협력 MOU' 체결(2012.7.12)

나. 범정부 대표단 및 조사단 파견

국무총리실은 지난 5년간 중앙아, 중남미 등 에너지협력외교의 주요 전략지역을 대상으로 외교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으로 구성된 에너지협력대표단을 총 36차례 파견했다. 대표단 파견은 제3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의 단계별 외교지원전략에 따라 정상·국무총리 등 고위급 외교활동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대표단은 유망한 자원협력 국가를 선별하여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사전 실무 협상을 통해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자원·인프라 분야 협력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호적 협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자원개발 MOU 체결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는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표단을 파견하여 상대국에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탐사사업은 대표적인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사례라고 할 것이다. 2008년 5월 한승수 국무총리의 중앙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카자흐 공동탐사계약을 체결⁶²⁾한 후 광구계약, 시추선 건조 등 자원협력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상대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본격적인 유전개발을 위한 광구시추 사업에 착공하게 되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에너지 개발 및 신시장 진출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對)아프리카 에너지협력 외교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2008년 이후 국무총리실은 남아공, 모잠비크, DR콩고, 가봉 등 아프리카 13개국에 8차례 민관합동대표단을 파견했다. 2012년 7월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로는 처음으로 케냐와 모잠비크를 공식 방문했다. 특히 모잠비크와는 지질조사연구, 광물탐사 및 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2011년 7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이은 대(對)아프리카 진출 모멘텀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표단은 중동, 동남아시아, 대양주,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사

업의 협력기반 조성,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플랜트 건설 경쟁력 등 장점을 활용하여 자원개발과 SOC 건설의 동반진출 모델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다. 범정부적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체계 구축·운영

국무총리실은 2008년 3월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유관부처 및 기관별 에너지협력외교의 주요 성과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전략을 총괄·조정해왔다. 협의회는 2008년부터 2012년 11월 현재까지 반기별 1~2회로 총 18회 개최되었고, 에너지협력외교의 활동성과 점검,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 점검 등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고위급 순방 이후의 후속조치 점검 등을 통해 에너지·인프라 협력사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지원했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말까지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프라·개발협력·농업·보건 등에 초점을 맞춰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한-아프리카 협력 지원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특히 2012년 3월에 열린 제17차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서는 ‘한-아프리카 협력주간(10.15~18)’을 설정하여 그간 부처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개최해온 기획재정부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외교통상부의 한-아프리카 포럼, 지식경제부의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 등 3개의 장관급 다자간 협의체를 한-아프리카 협력주간에 통합 개최하도록 하는 「2012년 한-아프리카 협력주간 행사계획」을 마련했다.⁶³⁾

이에 따라 2012년 4~10월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했다. 지원단은 국민공모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상생발전을 의미하는 ‘Sharing Today, Shining Tomorrow’를 첫 번째 한-아프리카 협력주간행사 슬로건으로 선정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2)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성과

가. 자주개발률의 획기적 제고

정부는 2008년 에너지협력외교의 목표를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에너지 기술자립도 제고로 설정했다. 특히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07~2016)에 따라 석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06년도의 3.2%에서 2016년에는 28%로 제고하고, 6대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의 자주개발률을 2006년도 16.6%에서 2016년에는 38%로 확대한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62) 2008년 5월 국무총리 중앙아 순방 시 한-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구성,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탐사계약, 아제르바이잔 코카서스 광물자원 공동탐사 협의, 우즈베키스탄 우준쿠이 가스전 공동탐사 계약 등이 체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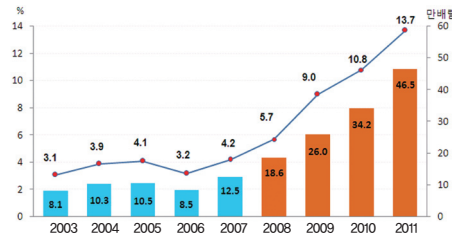
63) 2010년 12월 '제14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한-아프리카 다자간 협의체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 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7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개최시기, 진행방식 등에 대한 이견 조정을 거쳐 '2012년 한-아프리카 협력주간 행사 계획'을 마련함

그 결과 2011년도에 확보한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물량(일일 46만5,000배럴)이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도에 확보한 물량(일일 12만5,000 배럴)의 약 4배 수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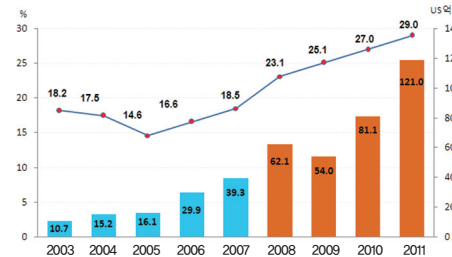
이는 50년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자주개발률이 2004년 이후 22~24%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6대 전략광물의 경우도 2011년도의 연간 생산액이 121억달러로 2007년도의 39억3,000만달러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2007년도에 자주개발률이 0%였던 우라늄이 2011년에는 6.5%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전력, 포스코 등 실제 수요기업이 광물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자주개발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10~2019)에서 강조한 리튬, 희토류 등 희유금속도 2007년의 6.1%에서 2011년의 12%로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당초 2012년 목표치(12%)를 조기에 달성했고, 초중질유·세일가스 등 비전통자원의 경우도 북미·호주 등 기존의 진출지역 외에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 신규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 석유·가스 자주개발물량과 자주개발률 추이 】



【 광물자원 자주개발액과 자주개발률 추이 】



나. 미래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역사는 30년 남짓으로 기술, 경험, 인력 등 자원개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점점 높아지는 자원부국들의 진입장벽과 미국·유럽의 메이저 기업, 중국·러시아의 거대 국영기업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에너지협력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즉 에너지협력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프로젝트 확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수단인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한국석유공사의 UAE 대형유전개발 사업 참여,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대형광구 탐사·개발 사업 참여를 들 수 있다.

2011년 3월 우리나라는 UAE와 ‘100년간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 관계’에 바탕을 둔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개발 진출 기회를 확보했고, 2012년 3월 최종 본 계약 체결을 통해 고품질의 원유와 안정적인 투자여건을 보유한 석유매장량 1,000억 배럴의 세계 6위 매장국인 UAE 유전에 본격 진출하게 되었다. 그동안 UAE에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4개국만이 진출해 있었지만, 1970년대 일본이 진출한 이후 UAE가 유전을 개방한 첫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가 된 것이다. 이처럼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UAE에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정상외교 등을 통해 양국 간에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UAE 유

전확보를 통해 4% 이상 자주개발률을 제고시켰고, 유가급등과 같은 비상시에 생산물량을 100% 국내에 도입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유가, 이란 원유 수입제재 등 석유공급 위기 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계 3위 석유매장국인 이라크의 유망광구 4곳도 정상외교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라크 중앙정부가 정한 ‘일일 생산량 20만 배럴 이상 규모 기업’이라는 입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양국 정상 간 양해각서 체결(2009.2) 후, 4개의 대형광구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자원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가스공사가 이라크 유전개발 입찰을 통해 총 14개 광구 중 4개 광구를 낙찰받은 것은 양국 정상 간의 강력한 협력의지가 있기에 가능했다.⁶⁴⁾

이외에도 정부는 세계적인 자원부국들과의 다각적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2008년부터 에너지협력외교를 통해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미개척지역을 중심으로 22개국에서 총 71건의 MOU를 체결했으며, 이 중 MOU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발전시켜 본 계약 체결, 기술·정보교류 등 성과를 낸 것은 22건에 달한다.⁶⁵⁾

【 2008년 이후 에너지협력외교 주요 성과 】

구분	주요 성과			
	구분	2007	2010	2012(목표)
자주개발률 제고	석유·가스	4.2%	10.8%	20%
	6대 전략광물	18.5%	27%	32%
	新 전략광물(리튬·희토류)	3%	8.5%	12%
미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급 외교를 통한 대형 유전개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유전확보로 4% 이상 자주개발률 제고 -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협정」 체결(2011.4)로 이라크 진출 기반 확보 ■ 2008년부터 고위급외교 통한 총 71건의 MOU 체결(20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중 본 계약 체결 10건, 기술·정보교류 성과 22건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2012.1)

3) 에너지협력외교 평가 및 향후 방향

우리나라는 제1, 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1970년대 후반부터 자원개발에 착수했으나 국제 유가 향방에 따라 정책기조가 자주 변동했고 외환위기의 여파 등으로 자원개발 사업이 진퇴를 반

64) 14개 낙찰광구에 참여한 25개 기업 중 미국 엑스모빌 1개, 러시아 가스프롬 1개, 이탈리아 ENI 1개, 네덜란드 Shell 2개, 중국 CNPC 2개의 광구 지분 확보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입찰 참여기업 중 최대광구인 4개를 낙찰 받음

65) 공동평가·탐사로 유망성이 확인되거나 계약조건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10건, 기술·정보 교류 등의 성과를 낸 것이 12건임. 그 외 현재 평가·탐사를 진행 중이거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33건임

북한 결과, 2005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4.1%로 프랑스(95%), 중국(14%)은 물론이고, 일본(9.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자원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고 대통령 주재의 국가에너지자문회의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자원개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에너지협력외교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석유공사 대형화 등 공기업의 자원개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중점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상급 에너지협력외교를 적극 추진했다.

가. 자주개발률 초과 달성

그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 자원보유국의 정치적 불안정 등 외부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협력외교의 질적·양적 확대 및 자원개발 투자확대에 힘입어 자주개발률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2009년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목표(7.4%) 대비 1.6%p 상회한 9%를 기록했고,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목표(25%)보다 0.1%p 초과 달성했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협력외교 및 적극적인 투자지원하에 우리 기업들이 국제 유동성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생산광구 매입, 국제 석유기업 M&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가스 자주개발률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제고되었지만, 아직 자원공급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 자주개발률 수준(35%)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원개발 사업이 최종적인 성과를 확보하기까지는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⁶⁶⁾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협력외교는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국무총리실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에너지협력외교 중점대상 국가들과의 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점검·지원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국무총리 순방, 고위급 사절단 등 다양한 채널과 가용수단을 결집하여 전략적 에너지협력외교를 전개할 계획이다.

나. 범정부적 에너지협력외교 체제 강화

국무총리실은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진출 전략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협의체에서는 패키지형 대형자원개발 사업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논의·조정하여 부처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별 자원협력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조치의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적기착공, 기술 및 정보교류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자원협력의 전략적 요소가 산업에서 플랜트, IT, 개발협력 등으로 다원화됨에 따라 이를 우리가 필요한 자원 확보와 연계시키는 국무총리실의 총괄 조정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국무총리실은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원개발과 일괄타결(Package Deal) 형태의 자원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 관련 정책수단 간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2012년 한-아프리카 협력주간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아프리카와 포괄적 협력채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금번 행사에는 잠비아 대통령 등 아프리카 총54개국 중 50개국의 산업-경제-외교 분야 300여 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행사기간 중 아프리카 24개국의 기업 CEO, 고위급 인사와 양자·다자 면담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유망사업 정보 획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금번 행사로 우리 기업의 에너지·자원개발, 건설·플랜트 분야의 아프리카 신흥시장 개척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이는 아프리카와의 실질협력관계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한-아프리카 협력주간을 2~3년 주기로 설정하고, 농업·환경 분야 정부 협의체 및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대화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66) 자원개발사업은 탐사 성공률이 낮고(10~15%) 대규모 투자액이 소요되는 등 사업 리스크도 높아 최종적인 성과를 확보하기까지는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지님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8.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 개최 - 국무총리 중남아시아 지역 순방계획 논의
2008.5.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승수 국무총리, 중남아시아 지역(우즈베크, 카자흐, 투르크멘, 아제르) 방문 - 잠빌광구 지분 양수, 신규 광구 참여방안 등 논의
2008.6.1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장, 중남아시아 지역(우즈베크, 투르크멘) 방문 - 국무총리 중앙아 순방관련 성과사업 후속조치 추진 협의
2008.11.27~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승수 국무총리, 중동 지역(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방문 - LNG선 수주, 정유공장 건설, 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방안 등 논의
2009.3.1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승수 국무총리, 중동 지역(터키, 요르단) 방문 - 원전건설 등 우리 기업 진출 협조 등 논의
2009.3.24~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 관련 주요기관 전문가 간담회 - 해외 원전시장 전망 및 한국형 원전 수출전략, 원자력 발전현황 등 논의
2009.6.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승수 국무총리, UAE 방문 - 원자력분야 협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논의
2010.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한-아프리카 협력 지원협의회 개최 - 아프리카 주요 인사 방한·방문국 후속조치 추진현황 점검, 한-아프리카 협력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010.12.30~20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황식 국무총리, 중남미 지역(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방문 - 파라과이, 우루과이와의 자원·인프라 분야 협력 등 실질협력관계 강화 방안 협의
2011.9.26~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황식 국무총리,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방문 - 한·불가리아 비즈니스 포럼 참석 및 우크라이나와 광해방지 MOU 체결 협의
2012.1.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황식 국무총리, 세계미래에너지회의 참석 및 UAE·오만 방문 - LNG 및 원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관련 협력 논의
2012.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 개최 - 2012년 한-아프리카 다자간 협의체 개최 계획, 2012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계획 등 논의
2012.7.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황식 국무총리, 케냐, 모잠비크 방문 - 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강화 방안 논의
2012.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 개최 - 2012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성과 및 평가,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 2012년 한-아프리카 협력주간 추진성과 등 논의

제8절 ODA 선진화

1. ODA 개요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흔히 '공적개발원조', 혹은 '국제개발원조'로 불린다. 다만 최근에는 '원조'(Assistance)라는 용어가 시혜적 의미를 지닌다는 지적과 더불어 '개발'을 위한 개도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OECD DAC 통계지침에 따르면, ODA란 '정부에 의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ODA가 되기 위해서는 ①주체가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적인 기관일 것 ②대상이 OECD에서 지정한 개발도상국 혹은 국제기구일 것 ③목적이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일 것 ④차관의 경우, 상업차관보다 일정 수준 이상 유리한 조건일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ODA는 크게 개도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bilateral) ODA와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원하는 다자(multilateral) ODA로 구분되며, 양자 ODA는 다시 상환의무에 따라 무상(grant)원조와 유상(concessional loan)원조로 구분된다.

【 ODA 구분표 】

구분	자금의 상환유무	원조형태
양자 ODA	무상(grants) - 상환의무 없음	프로젝트 원조 / 프로그램 원조 / 기술협력 / 혼합신용 중 무상지원 / 개발식량원조 / 인도적 지원 / 채무탕감 등 채무구제 / 국내 및 국제 NGO에 대한 지원 /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 개발협력 수행과 관련된 행정비용 / 기타
	유상(non-grant) - 상환의무 있음	차관 / 출자
다자 ODA		출연(분담금 포함) / 출자 / 양허성 차관

2. 우리나라 ODA 현황

1) 우리나라 ODA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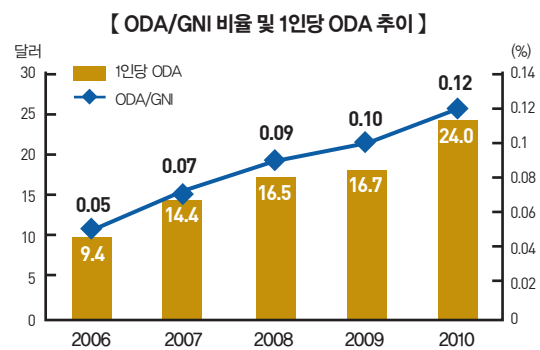
우리나라 ODA의 특징은 과거 수원국(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에 성공한 역사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방 직후 수원국으로서 긴급구호를 받기 시작했고, 한국전쟁 후 전후 복구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본재·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원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강한 발전의지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종의 원칙을 적용해 원조를 경제·사회개발의 촉진제로 활용, 인프라·인적자본·생산역량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성공의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에 보답하고 지구촌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ODA 사업을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EDCF(1987)', 'KOICA(1991)'를 설립하여 원조의 기본 틀을 갖추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및 국제원조규범 준수를 위해 원조규모를 확대하고,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 세대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고유한 경험을 국제개발협력의 장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배, 전쟁과 빈곤 등 개도국과의 역사적·정서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신뢰감 형성, 단기간에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경험 등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고유의 자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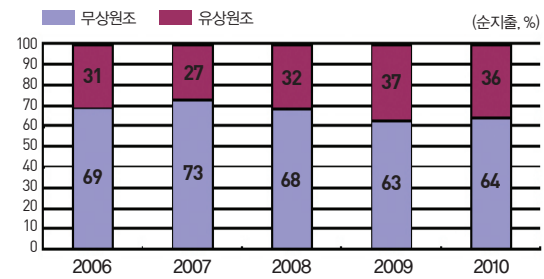
한편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시행한 것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ODA) 선진화 방안」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마련 등 ODA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해왔다. 아울러 G20 서울정상회의(2010.11)에서 개발의제 도입을 주도하고,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2011.11)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개선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2) ODA 규모 및 구성

우리나라는 국가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ODA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GNI 대비 ODA 비율은 2006년 0.05%에서 2010년 0.12%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유럽재정위기 등 세계적으로 어려운



【 2006~2010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지원비중 추이 】



경제환경하에서도 2010년 원조 규모는 총 11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여 DAC 회원국 중 증가율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결과 ODA 규모 기준 DAC 회원국 중 18위로, 2009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하고 국민 1인당 ODA 지출액도 지난 5년간 2.5배 이상 증가(2006년 9.4달러 → 2010년 24달러)했다.

또한 2000년 64%에 달했던 유상원조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2003년 무상원조 비중이 유상원조 비중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지난 5년간(2006~2010)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율은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유상원조 비중이 30~40%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와 역사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녔으며, 세계적으로 빈곤인구가 가장 많은 아시아 지역에 지난 5년간(2006~2010) 약 50%의 원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지역별 ODA 지원현황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비중(%)
아시아(Total)	175.0	258.0	282.8	319.5	578.0	1,613.3	51.8
아프리카(Total)	51.4	73.8	107.1	97.5	142.6	472.3	15.5
중 동	72.2	71.1	30.9	21.7	34.6	203.5	7.6
유럽	31.9	17.7	14.7	48.9	41.5	154.8	5.1
아메리카(Total)	26.7	55.5	70.5	57.4	66.2	276.2	9.0
오세아니아	1.8	4.3	2.7	1.9	5.6	16.3	0.5
지역 미배분	42.5	45.1	70.0	68.9	64.7	291.1	9.5
합 계	401.4	525.5	578.7	615.8	933.2	3,054.6	100.0

3. ODA 추진체계 개편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령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구축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2010.7 시행)함으로써 ODA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 기본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중점협력대

상국 선정, 국제개발협력 평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ODA에 대한 종합적·포괄적인 근거법령 제정은 OECD DAC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우리나라 ODA에 대한 스페셜 피어 리뷰(Special Peer Review)에서도 권고한 사항이었으나,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제정이 지연되어왔다. 이에 국무총리실에서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단일 정부입장을 마련함으로써 동 법령이 실제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무상원조 및 UN·기타 국제기구 분야는 외교부가 주관하고, 유상원조 및 국제금융기구 분야는 기재부가 주관하되,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를 총괄·조정토록 하는 현행 ODA 통합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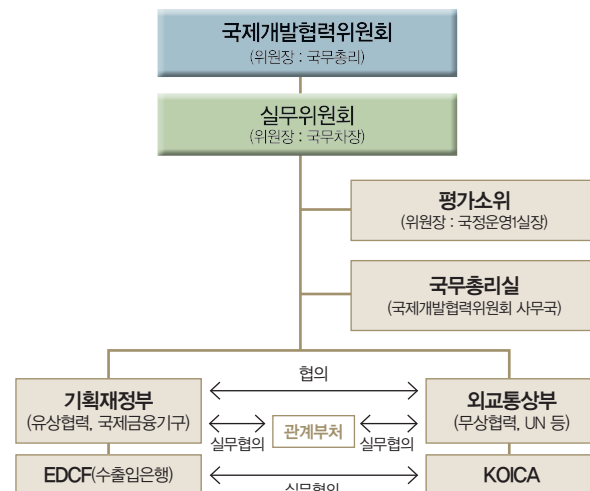
【기타 ODA 관련 법령(연도순)】

법령(시행연도)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1963)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기구의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 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1987)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
「한국국제협력단법」(1991)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및 협력 사업에 관한 규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07)	긴급구호대 파견, 물품지원, 임시 재해복구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 필요사항 규정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중심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OECD DAC 가입(2010.1)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2010.1)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ODA가 유상(기재부)과 무상(외교부)으로 나뉘어 30여 개 기관에서 추진됨에 따라 사업 간 중복 및 연계성 부족 등을 초래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떨어뜨린다는 대내외적인 지적을 감안, 국무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실질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

【ODA 통합추진체계】



총리실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2010.1)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ODA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ODA 담당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관,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재편되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한편 기재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각각 무상원조 협력과 유상원조 협력의 시행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시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연간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평가, 국제개발협력 관련 범정부 차원의 조정 필요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과 위임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ODA 추진체계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2010.1)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국무총리실장을 지정하고, 국무총리실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업무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전략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국제개발협력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협력정책관실 출범 이후 ODA 체계 통합 및 조정 성과

- ODA 현황 전수 실태조사 실시(32개기관, 1,073개 ODA 사업실태 조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실무위원회, 평가소위원회 포함) 조정역할 강화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수립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조정
-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추진
-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및 3개국 시범 CPS 수립
- 통합평가 시스템 구축 및 평가 시행
- 통합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통합 홈페이지, 통합 슬로건 및 BI 선정 등)
- 대표적 중복 사업조정 및 패키지형 연계강화(새마을운동사업, 모자보건사업, 직업훈련사업 관련 TF 운영)
- 한국형 ODA 모델 및 시스템 구축 추진

3) 현장중심 추진체계 구축

ODA는 개도국 현장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현지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과 다양한 현지기관과의 협력이 사업 성과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하여 현장중심 추진이 중시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현장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기관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 현장화와 함께 현장에서의 사업조율 메커니즘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선진화 방안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수립 시 현장 중심의 ODA 사업 발굴, 현지 ODA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시켰으며, 2010년도 소위평가 결과에 현지 협의체 활성화 방안 수립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ODA 사업 추진과 현장에서의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협력 대상국 위주로 재외공관 내 ‘현지 ODA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협의체는 정부관계자(공관), KOICA 및 EDCF 실무자, 수원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국가별 원조사업 지원방향 및 전략, 지원사업 목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KOICA·EDCF 등 주요 시행기관의 구조 및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현장인력 확대 등)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사업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화 기반확대를 바탕으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단계부터 사업의 발굴·집행·모니터링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 과정에서 재외공관 및 현지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KOICA의 경우 ‘현장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기존 본부의 사업집행 권한을 해외사무소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장인력 확대 추이 】

구분	2007년	2011			2015(계획)		
		계	사무소	주재원	계	사무소	주재원
KOICA	42명(20%)	82명(33%)	28소	16명	143명(41%)	35소	미정
EDCF	5명(8%)	11명(13%)	3소	5명	23명(14%)	5소	9명

* 괄호안 %는 전체 인력 대비 현장인력

4. 국제개발협력(ODA) 전략 수립

1) 국제개발협력의 비전 및 통합전략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7 시행) 제3조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5대 기본정신을 개도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로 규정하고 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2011.11)

다. 또한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개도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도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와 조건의 개선, 개도국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G20·HLF-4 등 글로벌 개발협력 포럼에서도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비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의 비전을 전 정부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에 따라 개발협력정책관실 주도하에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등을 마련했으며,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의결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통합 ODA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외교부 등 주관기관은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국제회의 연설 등

- G20 서울정상회의 시 대통령의 의장 서신(2010.11.3) : ‘개발격차 완화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개도국 및 최빈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견고한 성장 제고’를 서울 개발 컨센서스의 목표로 제시
- 부산 HLF-4 기조연설(2011.1.30) : ‘협력대상국의 자생력 확충’, ‘포용적인 국제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성과 지향적인 개발협력’을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

2)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주도하에 1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하여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의결한 대한민국 최초의 ODA 중장기 전략으로,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이라는 3대 가치를 기본정신으로 하여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3대 선진화 전략 및 기반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가.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우리나라는 전후 독립국 중 최빈국에서 DAC 회원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기존 공여국과 차별화된 역사적 배경을 국제개발협력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하고, 개발도상국의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 개발경험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이러한 한국의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경험(정책 및 제도), 사업기술(프로젝트), 감성(진정성) 유형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 및 원조 경험이 풍부하고 개발도상국의 원조수요가 많은 8대 분야(경제, 보건 의료, 인적자원, 행정·ICT, 농업,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환경)를 중심으로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우수한 정책·제도 중 개도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정리하여 개발도상국 정부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현재 우리가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및 사회 인프라 확대 등 실제 ODA 사업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기술 목록을 구축(8개 분야 134개 목록)함으로써 프로젝트 사업 및 기술협력 등 ODA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거 식민지배나 내전 등 수원국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ODA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했다.

나.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이전에는 다원화된 추진체계하에 유·무상 원조기관이 별도의 전략을 수립·수행·평가하는 등 분절화 문제가 대두되어 국가 차원에서 비효율이 야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유·무상 통합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별 ODA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그간 유·무상 각각 운영해오던 중점협력국을 26개국으로 통합하여 양자 원조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별로 수립했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을 통합 수립하여 중점협력국에 대한 ODA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업수행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사업 발굴 및 선정 절차에서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는 물론, 수원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주요 시행기관인 KOICA와 EDCF의 현장인력 확충, 부처별 해외봉사단 사업예산을 KOICA의 World Friends Korea 사업예산으로 통합, 원조사업 간 연계모형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강화

G20 의장국, OECD DAC 회원국 등 최근 달라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포괄적 다자원조 전략 수립, 국제기구 참여 확대, 국제원조규범 준수와 형성과정 참여,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우선 다자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다자원조 전략을 수립하여 MDGs 달성,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개발협력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 차원의 접근이 힘든 취약국가 인도적 지원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 등을 통해 양자 원조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신탁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및 컨설팅 등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인력이 국제기구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 ‘국제기구 진출확대 실무 T/F’를 설치하고 부처별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UN, MDGs(다자개발은행), OECD DAC의 권고사항 등 국제사회의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OECD DAC, MDBs, UN총회 및 개발기구 집행이사회 등에도 참여하여 국제개발협력 규범 형성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긴급구호 예산·인력·장비 확대 및 긴급구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라. 국제개발협력의 기반확대

세계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발전상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 우리가 국제원조를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보은을 위해 개도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 및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25%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언 이행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통합홍보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ODA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ODA 홍보 TF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ODA 통합 BI를 도입하고 ‘대한민국 통합 ODA 홈페이지(www.odakorea.go.kr)’ 등을 개설했다.

이외에도 NGO 및 민간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체계적인 ODA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담은 분야별 계획을 기재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수립하고 국무총리실이 종합·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3) 5개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기재부·외교부 등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에 따라 ODA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했으며,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의결했다. 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이 제시한 기본방향, 3대 전략, 기반확대를 토대로 2015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과 2012년 국제개발협력 연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 한편 연간 시행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KOICA, EDCF, 사업 수행부처 등 ODA 사업 시행기관이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이 이를 종합·조정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 최종 확정하고 있다.

5. 주요 ODA 제도 개선

1)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2008년 OECD DAC의 스페셜 피어 리뷰(Special Peer Review)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ODA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분야별·부처별로 분산되어 선정되었던 중점협력대상국을 국무총리실 및 기재부, 외교부 주도하에 유·무상 통합 26개국으로 선정하고, 양자 ODA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중점협력대상국은 OECD DAC 수원국 중 중하위 소득국(3,705달러) 이하 그룹에서 수원국의 소득수준, MDGs 달성도, 거버넌스, 원조수행 여건 등을 중

합적으로 고려하여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2010.10)을 거쳐 최종 선정했으며,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통합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대상국가 ODA 사업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2) 통합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기존에는 유·무상 원조기관이 개별적으로 국별지원전략(CAS)을 작성하여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마련 시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해 유·무상 통합 CPS를 수립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수원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ODA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유·무상 연계 등 체계적인 OD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CPS 작성은 국무총리실이 통합 CPS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원조담당기관(기재부, 외교부, EDCF, KOICA 등)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작성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내용 작성, 중점 프로그램 선정 및 설계, 수원국과의 정책협의(최소 2회) 등 CPS 수립의 전 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CPS 작성 시 국가별로 2~3개의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원조 효과성을 높이고, 중기지원 예산 계획을 포함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CPS 작성주기는 수원국의 개발 계획 수립 시점을 고려하여 3~5년 주기로 설정했으며, 2013년 상반기 중 26개국에 대한 CPS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 기존 CAS와 유·무상 통합 CPS의 비교 】

구분	기존 CAS	유·무상 통합 CPS
작성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상 기관이 각각 작성 -유상: 기재부(EDCF) -무상: 외교부(KO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 주관 TF(시범 3개국) 유·무상 관계기관 합동 TF(23개국)
대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관 간 협의절차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전문가와 폭넓은 협의
대외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협의 등을 통한 공식협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협의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상 기관이 각각 중점분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상 통합 중점지원분야 설정 국제규범 조화 내용 포함 지원예산, 조직 등 이행전략 포함 구체적 기여사항 포함 범분야(여성 등) 지원계획 포함 타 공여국 및 NGO 협력전략 포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평가, 모니터링 방법 포함

3) ODA 사업모델 마련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원조 수요가 큰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조합·활용하여 ‘국내기관 간 협조체계, 수원국 중심의 원조, 사후관리’ 등을 모듈화한 사업모델 수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운동, 직업훈련 프로그램, 모자보건 사업의 3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사업모델 수립 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가. 새마을운동 모델

새마을운동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채택한 국가정책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보유한 성공 발전경험이며, 개도국 전체 인구의 약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개도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활용 영역과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제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논의 결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새마을운동 TF(외교부,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농진청, 경상북도 참여)를 구성하여 새마을운동 ODA 사업모델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그간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최초 사례로서, 시범적으로 2개 지역(라오스, 르완다)을 선정·추진하여 성공사례를 도출한 후, 타 지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중앙/지방 공무원, 마을 지도자 및 주민대표 등을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마을별로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발굴부터 완료 과정에서 마을의 자립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3단계는 1,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통합형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근마을 및 지역단위로 이를 파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라오스, 르완다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 직업훈련 모델

직업훈련은 우리나라가 산업인력 양성 등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높아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2000년 이후 우리 전체 ODA의 3.7%를 차지(DAC 회원국 평균 0.39%)할 정도로 주요한 ODA 모델이다. 그러나 그간 유상과 무상원조 기관이 상호연계 없이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유·무상 원조기관 및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를 통한 패키지형 사업 지원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고용부가 직업훈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외교부(KOICA)·기재부(EDCF) 등 원조기관과 유기적 연계 부족
- 훈련시설 건립 후 통상 2년까지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수원국의 역량 및 재원부족 등으로 관리가 미흡

이에 제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직업훈련분야 ODA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직업훈련 전문기관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ODA 콘텐츠 적용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직업훈련 ODA 모델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참고할 예정이며, 고용부의 발전경험 콘텐츠 및 전문성과 외교부(KOICA), 기재부(EDCF)의 개도국 원조 경험·노하우·지역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다. 모자보건 모델

모자보건은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핵심분야로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고 개도국의 수요도 큰 분야이다. 그간 관련기관이 상호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원조의 분절화 문제가 제기되어왔으나, 제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자보건 분야 ODA 통합 추진전략을 수립키로 의결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의 경험 및 비교우위 분야를 정리하고, 관계기관별 전문성·사업경험 노하우 등을 연계하여 중점협력국의 모자보건 현황별 적용 가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라오스 KOICA 아동병원을 이종욱 펠로우십과 연계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Teaching Hospital로 육성하고 있으며, EDCF에서 건립 중인 무힘빌리 의과대학에 보건의료 봉사단(WFK)을 파견하는 등 유무상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4) 통합평가체계 구축

과거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시행 기관별로 각기 상이한 기준과 방법을 바탕으로 ‘자체평가’만을 실시해왔으나, 국제개발협력 정책·전략·프로그램·프로젝트 등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ODA 사업에 공통적인 평가 원칙·기준·절차를 적용하는 통합평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평가소위원회’를 구성(2009.8)했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합평가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했다.

평가소위는 이를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의결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했다. 통합 평가체계는 자체평가와 소위평가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2010년 6개 기관 18건, 2011년 4개 기관 21건의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소위에서 심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그간 국별·분야별·형태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 6건을 선정하여 소위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2012년에는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농림수산 분야 ODA 평가, WFK 종합평가 등의 소위평가를 실시했으며, 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의결하였다.

【 소위평가 주요 결과 】

연도	평가대상	주요 결과
2010	캄보디아 ODA 지원	캄보디아 국별협력전략 수립(CPS), 사업수행체계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제시,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선진원조기법 활성화(PBA, 프로젝트형 사업설계 모형) 추진 방안 마련
	새마을운동 ODA 사업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MDGs 달성에 기여하고 수원국의 인지도와 만족도도 높음. 다만 기관별 분절화 및 중복 완화를 위해 새마을운동 모델 구축을 위한 합동 T/F 구성 및 운영 필요
	유·무상 연계사업	1995년 이후 총 22건 7억5,000만달러를 유무상 연계사업 형태로 지원했으며, 특히 2008년 이후 국토부 등 개별부처가 타당성 조사, 기술협력 등 ODA 사업을 확대하면서 급증. 전략수립에서 사후 평가까지 체계적인 유무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연계모형을 발굴할 필요
2011	개발컨설팅 ODA사업	개발컨설팅 ODA 사업으로 개발컨설팅 사업(KSP, KOICA 정책자문사업, KISDI 정책자문사업)과 프로젝트 사전단계 컨설팅(EDCF F/S, KOICA F/S, KOICA 개발조사) 사업이 시행 중. 개발컨설팅 시행기관 간 사업 협력 및 연계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정책자문사업의 특성상 소관부처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
	주요부처 ODA 시스템	유무상 통합추진체계의 법제화 시행 1년 이후 통합추진체계의 기본틀이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실제 사업 추진단계에서의 상호협력력을 위해 보다 구체화된 기관 간 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 필요
	ICT 분야 ODA 지원	ICT 유관부처 합동으로 'ICT 분야 ODA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소득수준, 기술수준, ICT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단계별 적합한 ICT 사업(안) 제시 등이 필요
2012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2년 주기 메타평가 실시, 자체평가 실시 기관별로 ODA 사업평가에 대한 내부지침 마련, ODA 평가담당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ODA 평가 워크숍 개최, 정책제언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소위에 보고, 용역제안서 및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ODA 평가전문가 Pool 마련, ODA 평가 윤리지침 마련 등 필요
	농림수산분야 ODA	유관부처 합동으로 「농림수산분야 통합 ODA TF를 구성하여 기관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수립, KOICA-KOPIA 현지사무소 간 상시 협의체계 구축, 「농림수산분야 ODA 지원전략」 등을 수립하고 이를 CPS와 연계, 패키지형 사업 추진방안 마련 등 필요
	WFK 종합평가	WFK 사업의 장기비전, 목표, 통합원칙, 범위,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WFK 통합시행 로드맵」 수립, 봉사분과협의회 및 WFK 통합시행 TF를 중심으로 「WFK 사업 중기계획」 마련, WFK 브랜드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 WFK 통합평가를 마련 및 합동 평가토론회 개최 등 필요

5) 통합홍보 실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ODA 홍보 TF를 설치하여 ODA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의 홍보계획 및 홍보활동을 조정, 점검 및 평가하고 있다. 동 TF를 통해 2010년 이후 매년 범정부적 ‘통합 ODA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초·중등 교과서에 ODA 관련 내용 포함(2010년 이후), ODA 통합 BI(Brand Identity) 및 통합 캐치프레이즈 선정(2011.8, 제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통합 ODA 홈페이지(www.

odakorea.go.kr) 구축(2012.1) 등 국가 ODA 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또한 주요 언론사와 연계하여 ODA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ODA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광고 및 언론 기고도 적극 시행했으며,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한국원조역사전시회’를 개최했고, 주요 계기에 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ODA를 홍보하는 등 홍보대상의 범위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은 ODA 규모 확대공약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도 등을 파악하여 ODA 정책 방향 설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 2012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 갤럽에 의뢰)를 실시하였다.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제공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65.9%, 개발도상국 원조제공 찬성의견은 87.3%, 대외원조 기여도 및 효과에 대한 찬성의견은 8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인 2011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으나 정책지지도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무총리실은 ODA 규모 확대공약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도 등을 파악하여 ODA 정책 방향 설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 2012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 갤럽에 의뢰)를 실시하였다.

【 연도별 여론조사 주요항목 결과 비교 】

구분	2005	2008	2011	2012
■ 한국의 대외원조 사실에 대한 인지도 - 내용인지도 :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 단순인지도 : 들어본 적은 있다 포함	37.1% 76.4%	51% 83%	52% 83%	64.9% 35.1%
■ 정부의 개도국 원조에 대한 찬성도	62.3%	-	89%	87.3%
■ 현재 대외원조 규모 평가 - 적절하다 - 너무 크다/축소해야 한다 - 너무 적다/확대해야 한다	35.8% 13.0% 47.6%	44% 34% 14%	63.3% 26.7% 10.0%	64.4% 27.4% 8.2%
■ 대외원조 기여도 및 효과	59.7%	77%	79.4%	81.5%

6. 한국형 ODA 모델 마련

한편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 패러다임이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전환되고 공여국 간 역할분담·원조조화 등이 중시됨에 따라 한국의 발전경험 및 비교우위를 총정리하여 수원국의 수요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개도국의 발전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한국형 ODA 모델 수립 논의가



ODA 통합 캐치프레이즈 및 통합 BI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한국형 ODA 모델 수립 TF(위원장 : 국정운영1실장)를 구성했으며, 총 18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형 ODA 모델에 대한 그간의 논의와 연구를 집대성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했다(2012.3~8).

한국형 ODA 모델은 우리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수원국의 빈곤퇴치·자립·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Action Plan)으로서 2010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보완·구체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화하여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의결했다(2012.9).

특히 한국형 ODA 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59개 ODA 프로그램은 자립과 지속가능발전에 핵심적인 4대 영역(경제/사회/거버넌스/범분야 이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중심, 참여와 협력, ODA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철저히 현지화하여 수원국에 적용·추진하게 된다. 한국형 ODA 모델은 관련 후속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실적 및 수원국 협의 등을 바탕으로 3년마다 지속 보완함으로써 수원국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을 반영한 201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함으로써 2013년부터는 한국형 ODA 모델을 본격 적용·추진하게 되었다.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의결(2012.9)

7. 향후계획 : 피어 리뷰(Peer Review) 후속조치



피어 리뷰 한국 실시단 방문(2012.6)

ODA 추진체계 개편과 주요제도 개선 등에 대한 OECD DAC의 피어 리뷰(Peer Review) 한국 현지실사가 2012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다. 피어 리뷰란, OECD DAC 회원국이 같은 동료회원국의 ODA 제도 전반을 평가하여 모범사례에 대한 회원국 간 상호학습을 촉진하고 피평가국의 원조효과성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국제규범 준수 및 원조효과성 제고 등의 목적을 갖고 세부 주제별로 진행된다.



한국은 지난 2008년 OECD DAC 가입을 위한 스페셜 피어 리뷰(Special Peer Review) 이후 4년 만에 그간의 노력을 평가받게 되었다. 피어 리뷰 실사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선진화 방안 마련,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 주도 등 그간 한국의 통합 ODA 추진체계 구축 성과와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2012년 12월 11일과 12일간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정부대표단은 OECD DAC의 피어 리뷰 검토회의와 후속 편집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 과정에서 우리 ODA 정책에 대한 DAC 동료 회원국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DAC 가입 이후 구체적 성과와 진전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ODA 발전에 유용하고 실현가능한 권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정부는 피어 리뷰를 우리의 ODA 정책과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회원국들과 정보 및 노하우 공유, 상호 소통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한국의 ODA 정책개선과 아울러 ODA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및 지지기반 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ODA 선진화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DAC 가입
2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신설
20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마련 26개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추진방안 마련 ODA 통합 통계기관 선정
20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개발협력 5개년 기본계획 마련(2011~2015) 2010년도 통합소위평가 실시
2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도 종합 시행계획 마련
20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B 및 통합 캐치프레이즈 선정 ODA 사업모델 마련(새마을운동, 직업훈련, 모자보건) CPS 수립 -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20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개최
20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도 종합 시행계획 마련 ODA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국제기구 신탁기금 실태 점검 실시
2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ODA 홈페이지(www.odakorea.go.kr) 개설
20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S 수립 - 볼리비아 2011년도 통합소위평가 실시
2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어 리뷰(Peer Review) 한국 실사단 방문
20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마련 CPS 수립 -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방안 마련
20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어 리뷰(Peer Review) 최종 검토회의 참석 2012년도 통합소위평가 실시 2013년도 종합 시행계획 마련 CPS 수립 - 몽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3 위기상황의 체계적 관리

제1절 사회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1. 추진배경

현대사회는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산업화 등으로 인한 단순한 재앙이 아닌, 예견된 잠재적 위험에 따른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접어들었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최악의 상태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간 사회위험에 대해 재난이나 사고 중심의 사후수습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근원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나치게 정부 중심적이고 기관별로 나뉜 위험관리체제로 인하여 부처나 이해관계자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나 조정이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다. 특히 개인 및 기업 등 사적(私的)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위험관리가 미약해 시장영역에서 위험을 생산·관리·통제하는 자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개별부처 차원이 아닌,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사회위험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사회위험의 진단 및 전망

1) 사회위험의 개념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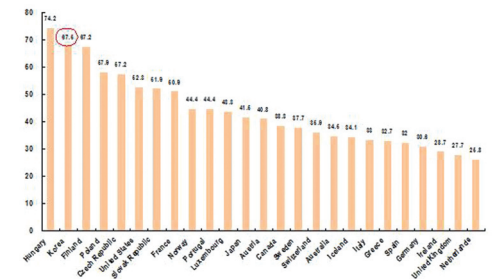
사회위험(Social Risk)은 그 원인이나 전개과정 혹은 그 피해의 결과가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의 생활이나 사회의 존립기반에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나 현상을 말한다. 그 유형은 지구적 생태(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자연적 재해(수해, 지진 등), 기술적 재난(산재, 사이버범죄 등), 건강(식품안전 등), 사회적 해체위험(학교폭력, 성폭력 등) 등 다양하다.

2) 주요 사회위험 발생현황

우리나라는 헝가리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안전사고(외인)로 인한 사망이 많은 국가¹⁾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안전사고(외인)로 인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 등 먹거리와 질병 등 생활 안전 분야에서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 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 명당 외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



【생활안전 관리 실태 비교】

구 분	한국	OECD 등 주요국
위해식품회수율	10%(2007)	미국 36%(2003)
식중독 발생률/100만명	201명(2007)	일본 162명(2007), 미국 86명(2006)
예방가능 응급환자 사망률	34%	미국 15%(2003)

빈곤, 자살 등 사회경제적 위험도 IMF 경제위기 이후 악화추세에 있다. 자살의 경우 IMF 경제 위기 시 급격히 상승한(1997년 14.1명 → 1998년 19.9명) 후 일시적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2001년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험 비교】

구 분	한국	OECD 등 주요국
상대빈곤율	16.5%(2006)	호주 11.2%, 독일 9.8%, 일본 15.3%
자살	24.7명(2006)	일본 20.3명(2003), 핀란드 18.4명(2004), 미국 10.2명(2002)

1) OECD Health Data(2007)

3) 미래의 사회위험 전망

지속적 경제발전과 성장 추구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득수준이 2만달러인 시점을 기점으로 국민들의 안전요구 수준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²⁾ 광우병 사태, 멜라민 식품오염사건 등 안전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 주요 위험의 내용 변화 】

순위	10년 전(%)		현재(%)		10년 후(%)	
1	건축물 붕괴	10.99	신종질병	7.19	사이버범죄	8.16
2	태풍, 홍수, 호우	8.93	불안정 고용과 취업난	6.47	신종질병	6.60
3	대형폭발사고	6.18	급격한 경기변동	5.31	생명윤리 침해	6.12

출처 : 이재열 외, '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의식조사', 소방방재청 제출 연구보고서(2005)

2008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안전상태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위험해졌다'고 답했으며, 10년 후에도 여전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

(단위 : %)

	10년 전과 비교하여			10년 후		
	위험해짐	변화 없음	안전해짐	위험해질 것	변화 없을 것	안전해질 것
2008	61.4	22.7	15.9	54.1	26.7	19.2

3. 사회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1) 비전과 정책목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위험관리 임무가 국무총리실에 새롭게 부여되었다. 국무총리실은 '세계 일류국가 수준에 걸맞는 선진형 안전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위험의 요인을 분석하고 요인별 사회위험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전략목표 설정 및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회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부재와 공적신뢰 부족에 대응하여 과학

적·객관적 분석에 근거한 사회위험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2) 추진전략

국무총리실은 주요 사회위험요인 선정 및 포괄적 분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 회의(2008.4.28)와 보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008.6.5), 기업위험관리 전문가 자문회의(2008.6.20) 등을 개최했다.

이러한 전문가 자문과 더불어 「사회위험요인분석 및 체계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³⁾을 통해 22개 위험요인을 선정하여 분석했다.

국무총리실은 위험영역의 특이성, 인명·재산피해 정도,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2개의 주요 위험요인을 선정했으며, 주요 사회위험요인 분석 결과, 위기의 발현속도(Speed of Crisis Development)⁴⁾에 따라 위험관리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기의 발현속도가 빠른 급발성이나 복합적 성격의 위험(12종)은 향후 소관부처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시했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 추진이 필요한 지발성 위험(10종)은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동 관리해나가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 22개 사회위험의 유형 구분 】

구분	위기의 발현속도(Speed of Crisis Development)		
	급발성 위험	지발성 위험	복합적 성격의 위험
1	재난위험	수해, 화재, 지진	
2	생활안전	식품안전, 사이버안전	산업재해
3	자원부족위험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4	건강 관련 위험	인수공통전염병, 신종 전염병	만성질환
5	범죄위험		조직폭력, 마약범죄
6	사회경제적위험		빈곤, 자살, 고령화, 다문화 간 갈등
7	청소년 관련 위험		청소년폭력, 학교폭력

3)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다수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연구로 진행(주관 : 한국행정연구원, 2008.4~10)

4) 급발성 위험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쉽게 위기로 진화하는 특성을 가지며, 지발성 위험은 위험이 누적되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위기로 발현됨

2) 소득수준이 1만달러면 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일반화되고, 1만5,000~2만달러에 이르면 안전문제가 일반화됨

3) 추진성과

국무총리실은 사회위험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사회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회위험관리체계’를 제시했으며,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22개 사회위험요인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분석하여 관계부처 설명회를 갖는 등 적실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토대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22개의 사회위험요인을 위기의 발현속도 등에 따라 구분해 위험관리전략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위험요인별로 각각의 비전과 전략목표는 물론, 위험관리 선진화를 위한 미래과제를 제시하여 사회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사회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추진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08.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위험 요인분석 및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2008.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위험 관계 전문가회의 - 한국행정연구원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등 참여
2008.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보험개발원 실장, 전주대 교수 등 참여
2008.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워크숍 실시 -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2008.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위험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 삼정회계법인 상무 등 참여
2008.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대상 설명회 실시
20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대상 22개 위험요인에 대해 비전·전략목표 등 제시

제2절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1. 추진배경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일회성 국지 도발은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면전과 대비되는 형태로서, 원인과 유형에 따라 그 피해 내용이 다양하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직접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전기·가스·통신·공공전산망 등 국가기반이 공격을 받아 국가경제의 타격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신인도와 무역·주식·환율·유동성 등 국가경제 전반에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관광객의 입국이 격감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0년 천안함 인양 시 대형 크레인이 사고발생 후 3일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던 상황과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전기, 수도, 침구류, 비상식량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긴급대피소에서 주민들이 밤새 추위와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모습, 여객선을 이용해 연평도를 이탈하는 피난행렬과 인천의 짐질방에서 전채민 생활을 하는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정부는 비상대비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구체화된 ‘언론취재 지원 원칙 및 절차’가 없어 통제구역도 없이 무분별한 취재가 이루어지거나 CNN 등 언론의 잇단 오보에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비한 상황이 벌어졌다.



연평도 대피소에 대피 중인 주민 모습



인천으로 출도하는 주민 모습

【 연평도 사태에 관한 CNN 오보내용 관련 기사 (2010.11.29, YTN) 】

CNN 오보논란, 연평도사태-한미합동훈련에 한국 극도 혼란?

UDT전우회 국방부 앞 시위-경찰충돌 '최루탄 쏘다' 전 세계 타진

'미국, 한반도 전쟁연습 시작' '호전적인 군인들이 시위에 나섰다' '한국인 분노-폭력과 정치혼란'

미국 (CNN)이 27일 UDT전우회(해군특수전여단 수중폭파대 동지회) 소속 회원 140여 명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군당국의 안이한 대응에 항의하며,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보복공격을 촉구하는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을 보도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의 '위기상황 점검 TF'를 구성하여 일련의 위기사태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점검하고,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며 연평도 포격도발 상황에 대한 초기대응, 상황관리, 수습·복구 등 전반적 재점검을 통해 국지도발 시 위기상황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상황 발생 시 국무위원·정부기관장의 정위치 복귀 등을 위기대응 매뉴얼에 명시하고 개선안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관련기관 전파, 합동교육 및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지도발, 대형재난, 기간산업시설 파괴 등 평시 국가 위난상황하에서의 효과적인 난민(이재민) 수용·구호대책 및 관련법령 보완이 필요하여 이를 동시에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위기관리 매뉴얼과 위기관리법령 정비 TF'를 구성하여 초기대응 등 위기유형별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재난대응 관련 대국민 홍보·협력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국지도발, 대형재난, 기간산업시설 파괴 등 평시 국가 위난상황하에서의 효과적인 난민(이재민) 수용·구호대책 및 관련법령도 보완하기로 했다.

2. 위기관리 법령 정비

위기관리 법령 정비 TF는 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이 팀장을 맡고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안부, 법제처, 방재청의 담당과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방위기본법」, 「비상자원대비관리법」, 「통합방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정 중인 상태여서 제외하고, 3개 법률과 위기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여부를 검토했다.

1) 「민방위기본법」

민방위사태에 대처하는 「민방위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이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타 법률과 기능이 불명확한데다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더라도 수습 및 복구 등에 대한 규정 미비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지도발 수습·복구에 필요한 규정과 민방위 운영상 미비점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 의무 규정 보완, 비상대피시설 등 설치근거·설치기준·점검·개선 관련 규정 신설, 자원민방위대 편성, 긴급구조 의무화, 수습 및 복구 규정 신설, 경보 발령권한 확대, 경보 통제소 근거 마련, 자원민방위 연합대원의 재해 등 보상 규정 신설 등이다.

2)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 조사 시 변경사항 및 신고필요사항 등이 즉각적으로 현행화되지 않아 비상대비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와 시·도 교육청 등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시상황에서의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의 지원에 관해서는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평시에 국지도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자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비상사태 시 사용토록 하되, 통합방위 사태 시에도 물자의 소유자 등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돌발사태에도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상대비 자원 활용방법 개선, 중앙 및 지자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3) 「통합방위법」

연평도 포격 도발 시 병력 및 물자 동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현행 통합방위법령상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동원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작전 초기 일반인의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수행을 위해서 경계태세 '1급' 상태에서는 작전지역 내 작전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인원에 대한 제한적 통제가 필요하나, 법적 제한으로 통제가 불가능했다.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작전책임지역에서 일반인의 안전보장과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통제구역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지도발 시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계태세 '1급' 또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부분적으로 인력, 물자, 장비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상대비 자원 활용방법 개선, 중앙 및 지자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4) 위기관리 법률 개정 및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위기와 관련된 법령의 다원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법령별로 국가 위기⁵⁾ 개념이 상이하고 포괄 안보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비상대비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⁶⁾과 「국가전시지도지침」⁷⁾ 등에서는 '전시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국가위기관리지침」

5) 위기(crisis)는 비상사태(emergency), 재난·재해(disaster, hazard), 사고(incident) 등의 유사한 개념을 두루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 혼란 방지를 위해 이후에는 '비상대비'로 용어를 통일하여 전쟁, 재해·재난, 전염병 등이 망라된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6) 법률 제847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목적)에 비상사태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있음

7) 대통령훈령 제117호 「국가전시지도지침」 제1절(총칙)에 '위기사태를 국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있음'

침'에서는 '국가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었다(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4, 15~17). 또한 국가위기를 「민방위기본법」에서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인위적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이한 국가위기 개념은 포괄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 집행 시 상호 상충될 경우 하위법이 무력화되는 취약점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유기적인 국가기능과 자원의 연계와 통합을 가로막아 효율적인 대응조치를 곤란하게 한다는 점이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태 발생 시 「민방위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 어느 법령에 따라 대응 조치할 것인가를 놓고 혼선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위기관리 법령 정비 TF는 가칭 「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되, 위기관리기본법에서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위기 관련 용어를 '국가위기' 개념으로 하고, 위기 유형별로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위기대응기구를 '국가위기관리회의'로 하는 한편, 위기 유형별로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위기관리계획을 '국가위기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는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위기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위기관리 법률을 우선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총괄 관리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기관리 법령정비 TF에서 검토한 자료를 기초로 관계부처에서 소관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했다.

우선적으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비상대피시설, 소방 및 방공 장비 등을 설치·비치하고,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주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통합방위법」을 개정⁸⁾하여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통합방위사태의 극복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중 그 지정 당시에 미리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인력자원대상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여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평소 국지도발 단계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명구조 및 대피시설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지도발 등에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평소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중점관리대상 지정 시 국지도발 대응을 위한 참여와 사용 협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지도발 발생 시 다시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것은 사태 수습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후계체제 불안정성 등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면 도발보다는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의 경우와 같이 NLL 및 접경지역에서 기습적인 국지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 위기가 닥쳤거나 임박한 상황에서의 위기대응은 이미 늦다. 평시에 위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활동의 기본이 되는 위기식별과 이에 대한 대비, 대응조치 및 조직, 활동방향 등을 수록한 위기관리의 기본문서로,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가상하여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임무와 역할, 조치사항 및 내용,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수록한 행동요령을 말한다.

【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체계 】

문서	내용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기관리 개념과 방향 정립 ■ 분야·기관별 위기관리 활동 기준 제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유형별 관련기관의 임무와 역할 정립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기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유관·실무기관이 실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 조치사항 및 절차 수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시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

국가위기는 현재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중심으로 안보·재난·국가핵심기반 등 3대 분야 36개 유형으로 체계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04년 10월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이 처음 제정된 이후 정부 조직개편, 재난 관련 법령 제·개정, 새로운 유형의 재난사례 발생, 가상 시나리오 재설정 등 새로운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참여정부에서는 모든 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대통령실 주관으로 관리해왔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분야의 매뉴얼을 대통령실(구 NSC 사무처)로부터 인수(2008.5.28)받아 관리하게 되었고, 국무총리실은 부처·기관의 위기관리 업무를 조정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적인 자연재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물류·금융·정보통신 마비, 감염병 및 가축질병 확산 등 위기사태가 증가했으며, 특히 사회적 위기는 발생원인과 전개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과급범위가 넓어 적절

8) 「민방위기본법」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통합방위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되어 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 예방이나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국무총리실 내 부서 간 업무소관이 불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유형별, 단계별로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구체화되지 못해 위기대응 대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주관기관이 변화하는 위기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위기유형별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여 위기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위기관리지원 매뉴얼을 제정(2009.8)하게 되었다.

지원매뉴얼을 최초 제정할 당시, 위기관리 대상은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분야 20개, 안보분야 1개 등 총 21개 유형으로 하고 있으며, 위기유형별로 국무총리실 내에 위기관리 책임관을 지정하여 상황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정책과 위기대응 관련 주요 대책을 협의·조정,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종합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중간단계 의사결정기구인 상황평가회의와 주요 동향을 파악·전파하고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 검토하여 상황평가회의를 지원토록 하는 상황실 운영 관련사항, 위기 단계별로 조치해야 할 기본적 임무 등을 규정하여 체계화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태풍 곤파스(2010.9.1~2), 집중호우(2011.7), 대규모 정전사태(2011.9.15) 등 반복적인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사상초유의 정전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검하여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전면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위기관리 업무체계 개선 TF 구성·운영(2011.1~4),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대응 체계에 대한 정부합동점검(2011.10.20~28),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의형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위기상황 전파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위기경보 수준별 홍보전략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보고 및 홍보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주관기관별 표준매뉴얼을 개선·보완했다.

국무총리실 지원매뉴얼도 주관기관별 표준매뉴얼 정비 결과,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책임관의 업무체계 명확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대국민 홍보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지원매뉴얼상의 위기관리 대상 】

분야	유형
재난분야(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3) : 풍수해, 지진, 화산폭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산폭발 유형은 2012년 9월 표준매뉴얼이 마련(방재청)되었으며, 이에 따른 실무 매뉴얼과 행동조치매뉴얼 작성 완료 이후 반영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재난(8) : 산불, 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대규모 환경오염,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댐 붕괴, 지하철 대형 화재사고, 공동구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재난(3) : 감염병, 가축질병,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국가핵심기반분야(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원유수급, 원전안전, 금융전산, 육상화물운송, 식용수, 보건의료, 정보통신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9.6.16	■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2009.5~6	■ 위기관리 매뉴얼상 국무총리실 역할 관련 대통령실, 행안부 협의(수시)
2009.8.21	■ 국무총리실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지원 매뉴얼 제정
2010.6.18~11.30	■ 주관기관(부처별)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일제 정비
2010.11.23	■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발생
2010.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 위기관리 법령 등의 정비 추진
20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기관리 업무체계 개선 TF 구성·운영(대통령실 주관), 주관기관별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일제 정비
2011.2.25	■ 위기관리 법령정비 TF 1차회의 개최
2011.3.4	■ 위기관리 법령정비 TF 2차회의 개최
2011.3.11	■ 위기관리 법령정비 TF 3차회의 개최
2011.3.18	■ 위기관리 법령정비 TF 4차회의 개최
2011.4.25	■ 위기관리 법령정비 TF결과 국무총리 및 대통령 보고 완료
2011.10~20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대응체계 정부합동점검, 주관기관별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일제 정비
2012.1.3	■ 국무총리실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 지원매뉴얼 개정

제3절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1. 추진배경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전염병⁹⁾은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힌 재앙이었다. 흑사병(14세기), 결핵(19세기), 스페인 독감(20세기) 등 세균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병들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과학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2009년 전 세계는 기존에 없던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는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2009년 4월 초 미국과 멕시코에서 의심 감염자가 발생하고, 4월 25일 WHO에서 공식 감염자로 확인한 이후 급속히 확산되면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종플루의 공포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9년 5월 처음으로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빠른 속도로 감염자가 늘어났고, 사망자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높아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정 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긴급하게 구축했으며, 국무총리실에서는 일일 상황을 수시 점검(2009.4~)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TF를 구성(2009.8)하여 범 정부적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 위기단계별 정부의 대응조치

우리나라 신종플루는 멕시코를 여행한 여성이 2009년 5월 2일 첫 확진환자로 판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신종플루 진행에 따른 정부의 주요 대응조치는 전염병 국가위기경보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진행되었다.

신종플루의 개념과 발병 증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은 흔히 독감이라 하고 일반 감기와 구별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이 있는데, 바이러스 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이번 신종플루는 A형 인플루엔자 H1N1의 변종에 의해 발생했으며, 사람·돼지·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된 새로운 형태이다. 전형적인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 피로감, 두통 및 근육통이며, 경증인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7일 이내에 자연 치료되기도 하나, 치명적인 폐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구분	해외 유입단계 (4~6월)	지역사회 확산 시작단계 (7~8월)	지역사회 확산단계 (9~10월)	대유행 단계 (11~12월)
위기단계	주의	경계		심각
대응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가족부 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설치 국무총리실 일일 상황 점검 등 비상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 구성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실무대책 TF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시도 및 시군구 인플루엔자대책본부 운영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내 중앙 재난대책본부 구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치료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입 최대한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발견 및 신속한 격리로 유행 확산 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바이러스제 적극적 투약 및 거점병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실시 및 고위험군 중증화 방지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공항 입국자 발열 감시(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서 즉시검사 및 격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검사 여부, 고위험군 여부와 관계없이 투약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영유아 등 예방접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지역 입국자 및 확진환자 동승객에 대한 추적조사(5.27~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국민, 학생, 임산부 등에 대한 개인행동 요령 마련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병원에 마스크 등 감염방지 물품 추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병원을 외래진료에서 입원환자 및 중환자 관리로 역할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내·공항 홍보 및 해외유학생 하계방학 입국 대비 해외 현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유행 대비 거점병원 지정(총 45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약국을 전국 약국으로 확대 운영(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발생 일일 감시체계 가동(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확대 운영(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병원 격리공간 설치 및 의료진 운영실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환자치료 프로토콜 보급 및 교육 (11.2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O, 미국 등 각국 공관을 통한 정보수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바이러스제 의약품·보호장비 등 추가 비축 및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석연휴 비상의료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 대상 신종플루 검진 등 의료봉사 활동 실시(11.29)

1) 관심단계(Blue, ~2009.4.27)

‘관심’ 단계는 해외에서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내에서 원인불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내 가금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당시 미국과 멕시코에서 돼지 인플루엔자 A(H1N1)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자, WHO에서는 멕시코에 전문가를 파견해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9 H1N1 바이러스가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WHO는 국제전염병 위기경보 4단계(지역사회 유행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동물 간 재배열 바이러스가 확인됨)를 선포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4월 24일 검역을 신속하게 강화하여 국내 유입 차단을 시도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국가격리병상 사전 점검(5개 병원, 197개 병상), 관련 지침 마련 등을 실시했다.

9) 2010.10.30, '전염병'으로 법적 용어 변경

2) 주의단계(Yellow, 2009.4.28~7.20)

4월 28일 멕시코 여행 후 귀국한 '추정'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 국가위기경보단계는 '주의'로 격상되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일일 상황점검을 실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대책을 논의하면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5월 2일 우리나라의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신종플루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여 위험지역 입국자 전화 추적조사 및 2차 감염 방지에 힘썼다. 5월 13일 만 1세 미만도 항바이러스제 투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5월 27일에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확진검사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했다.

신종플루 발생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6월 11일 WHO에서 위기 최고 단계인 6단계로 격상했고, 6월 12일부터 보건소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실시했다.

3) 경계단계(Orange, 2009.7.21~11.2)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오른쪽부터, 2009.10.27)

7월 21일 신종플루 환자가 900명을 넘어 서면서 전염병 국가위기경보단계는 '경계' 단계로 격상되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신종플루 정부합동 실무대책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협조 및 공동대응을 도모했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시도별 치료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와 개인 보호구를 지원했다. 외래 및 입원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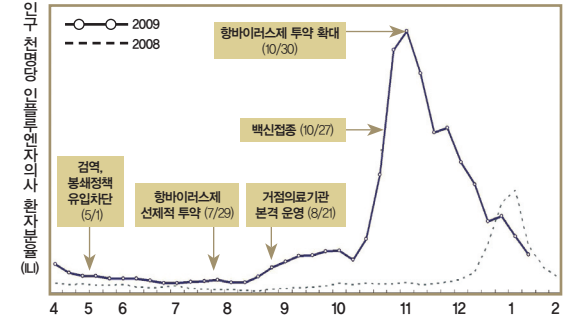
내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8월 15일 신종플루 첫 사망환자가 발생하자 보건소 및 거점치료병원, 거점약국에 24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배포하고 거점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심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신종플루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 발표했는데, 8월 21일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조기 확보 및 접종 실시계획(1,336만 명)을 발표했다. 또한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0월 27일 국무총리실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와 논의를 거쳐 정부의 조치방안 및 국민 행동요령을 알리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4) 심각단계(Red, 2009.11.3~12.10)

11월 3일,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전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최초로 범정부 통합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된다. 11월 11일부터 학생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학교장 재량하에 휴교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11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대상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영유아, 임산부 등 대상자별 예방접종 예약을 실시하고, 12월 7일 미취학 아동부터 예방접종을 했다.



【2009년 인플루엔자환자분율에 따른 주요 정부 조치】

5) 경계단계(Orange, 2009.12.11~2010.3.7)

학생들의 예방접종도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서 신종플루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12월 11일 전염병 국가위기경보단계를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체했다. 다만 소아, 청소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순차적인 예방접종사업은 계속 실시했다.

6) 관심단계(Blue, 2010.4.1~)

2010년 4월 1일 신종플루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개학 이후 유행 조짐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5월부터는 평소 계절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의 치료 및 투약으로 환원했다. 당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2010년 3월 31일 기준으로 260명으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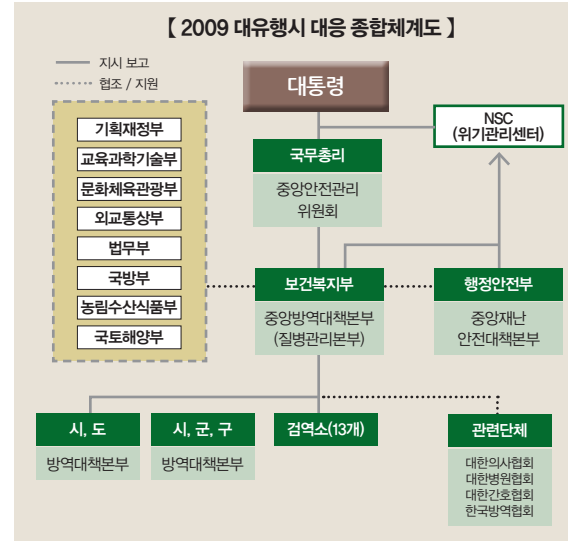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방문한 정운찬 총리(2009.10.1)

3. 범정부적 통합대응

국무총리실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인 대책을 마련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조기 중

식에 기여했다. 초기 단계부터 일일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무의 조정·지원을 실시했다. 2009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신종플루 정부합동 실무대책 TF'을 운영하여 범정부적 공동대응과 협조를 강화했다. 정부합동 실무대책 TF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 담당실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동 회의를 통하여 예방접종·항바이러스 투여 계획 및 관련 예산 확보방안, 국가 위기경보단계 수준(경계→심각 격상 필요성 등) 등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제를 정비했다. 11월 3일 심각단계에서는 전염병 발생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 '신종 인플루엔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도록 지원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했다.

2009년 8월 29일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는 경남 진해시에 있는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인 「김해중앙병원」을 방문했다. 신종플루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9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전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하달하고, 공직자들이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 경제위기 극복 등 국가적인 어려움을 맞이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1일에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첫 민생현장 점검으로 종로구 계동 복지부 내에 위치한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방문하고, 추석 대비 비상의료체계 운영상황 및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신종플루 거점병원인 서울대병원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4. 신종플루 대응에 대한 평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에 대한 정부 업무를 평가해보면,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상황임에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범정부적 대책기구, 민관 합동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기관·단체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결하여 전 국가적인 대응을 실시했다. 검역 및 환자격리를 조기에 실시하여 지역사회 유행단계를 지연시켰는데 그 결과 일본 및 중국은 5월에 신종플루가 확산된 반면, 한국은 7월에 확산되어 동북아 3국 중 확산이 가장 늦었다. 또한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으로 신종플루 확산을 조기 저지했다.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을 신속히 진행하여 신종플루 확산 이전 국민의 4%에서 2009년 말 20% 수준까지 확대 비축되었다. 국내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개발·생산함으로써 백신주권을 확보했으며, 예방접종이 시작(2009.10.27)된 이후 선진국(계획 접종률 대비 5~39% 사용)에 비해 높은 예방접종률을 달성했다(백신 계획량 대비 71.4% 사용).

아울러 신종플루 유행 단계별로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별 예상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정부, 전문가, 언론 등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를 확보해서 일관성 있게 한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상 유언비어에 적극 대응하고, 예방수칙 홍보나 백신 안정성, 이상반응에 대한 정확한 홍보 등을 실시했다.



MBC <PD수첩>(2009.9.1) 대국민용 홍보자료 의료기관용 홍보자료 교육기관용 홍보자료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추진일지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09.4월 초	■ 북미에서 신종플루 환자 발생	관심단계
2009.4.24	■ 검역 강화로 국내 환자 유입 차단	
2009.4.26	■ 국무차장 주재 관계부처 첫 회의 개최, 일일 상황점검 실시(지속)	
2009.4.27	■ WHO 인플루엔자 위기단계 4단계 격상 ■ 국내 최초 의심환자 발생	
2009.4.28	■ 국가위기단계 격상(관심 → 주의) ■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주의단계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2009.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O 인플루엔자 위기단계 5단계 격상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복지부 「중양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설치·운영 	
200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확진환자 확인 	
2009.5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 시 검역 강화로 환자 국내유입 차단 	
2009.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등학교 및 일차 의료기관(약 1만 개) 일일보고체계 가동 대규모 행사 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실시 	
2009.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O 인플루엔자 위기단계 6단계 격상 	
2009.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보건소 비상근무체계 강화 	
2009.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집단발병 증가, 국가 위기단계 격상(주의→경계) 시·도 및 시·군·구 인플루엔자대책본부 구성·운영 	경계단계
200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 '신종플루 정부합동 실무 대책 TF' 구성·운영 	
2009.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사망환자 발생 	
2009.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종 인플루엔자 가을철 유행대비 대응방안' 논의(제3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든 의심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거점의료기관) 	
2009.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가족부 중양인플루엔자 대책본부 확대운영 	
200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응방안' 논의(제34차 국가정책조정회의) 	
2009.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석 연휴기간 유행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 추진 응급의료기관(453개)의 신종플루 비상진료체계 운영 	
2009.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계획' 논의(제37차 국가정책조정회의) 	
2009.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심각단계
200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임산부, 영유아, 노인 등 예방접종 예약 및 접종 실시 	
2009.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위기단계 하향조정(심각→경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 	경계단계
2010.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위기단계 하향조정(경계→주의) 	주의단계
201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위기단계 하향조정(주의→관심) 	관심단계
2010.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O, 6단계에서 대유행 후단계로 하향 조정 	

제4절 천안함 피격사건 대응

1. 사건 개요

2010년 3월 26일(금) 21시 22분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제 2함대 소속 천안함(초계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되었으며,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되었다.

2. 정부의 대응

국무총리실은 사건 발생 직후 국무총리실장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건 발생 이후 3월 28일 1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실종자 수색 등 사고수습에 총력을 다해줄 것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을 당부했다.



또한 3월 28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백령도 사건 현장과 구조작업에 투입 중인 성인봉함을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받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종 장병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며 군장병을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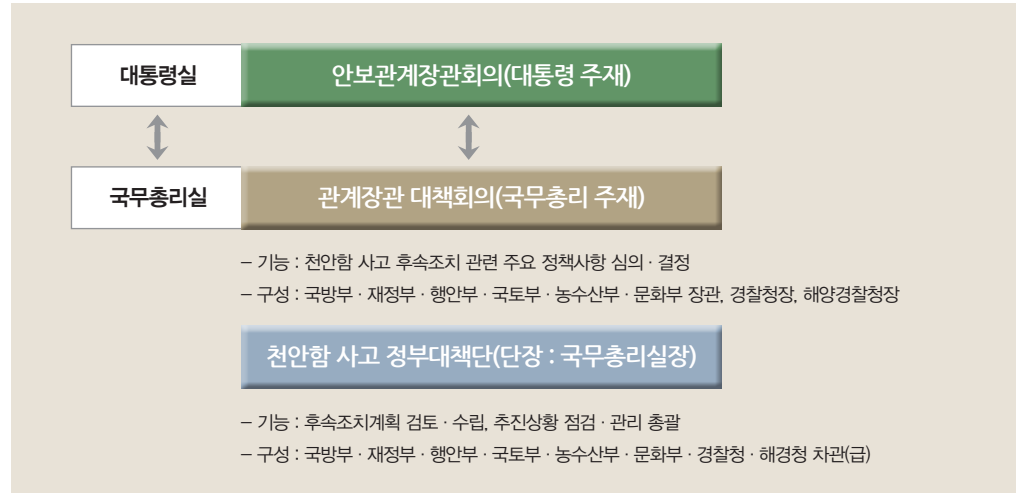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2010.4.2)

사고 발생 이후 정부·군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원인 규명과 실종자 수색 등 수습이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 언론의 무절제한 보도가 지속·확대됨에 따라 4월 1일 정부는 내각차원의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장관 대책회의(국무총리 주재)', '천안함 사고 정부대책단(단장: 국무총리실장)' 등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정부대책단의 실무지원을 위해 국정운영1실장을 팀장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정치, 경제, 사회, 외교관계 등 타 분야로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언론협조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협조지원 필요사항을 협의·조정했으며, 필요 시 현안 상황과약 및 관리, 전파 체계를 구축·운영했다.

【 천안함 사고대책 범정부 추진체계 】



국무총리는 4월 2일 2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방부·군의 실종자 수색, 선체인양 등 사고수습 상황과 공직자 근무강화, 민간피해 지원대책 등 관련부처의 협조·지원사항을 집중 논의했으며, 모든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4월 5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고, 특히 천안함 ‘금양호’ 침몰사고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선박 및 선원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대책회의 및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실종자 구조, 천안함 선체인양 및 원인규명, 전사자 장례절차 및 보상·서훈, 금양호 사고수습, 성금 배분 등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의·조정을 실시했다.

실종 장병 구조활동은 4월 3일까지 군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실시되었으며,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4월 4일 구조활동을 중단하고 인양활동으로 전환했다. 이후 4월 24일까지 실종자 46명 중 41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실종자 수색작전을 종료, 4월 25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 대표 합동분향소를 개소했다.

국무총리는 4월 25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례기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영결식 당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군2함대 대표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조문했다.

【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현황 】

구분	일자	회의 내용	회의 결과
1차	2010.3.28	• 초계함 침몰관련 수습대책 • 사고관련 경제분야 영향 및 대응	• 실종자 수색에 최선, 조속한 시간 내 진상규명과 사고수습을 위한 지원 • 이번 사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각부 장관이 공직자의 근무태도 챙길 것을 지시
2차	2010.4.2	• 부처별 지원대책 및 상황관리방안	• 고(故) 한주호 준위 훈격관련 (국방·행안부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협의 후 결정) • 행안·농림·국토·문화·기재부 등에 긴밀한 협조·지원을 당부·지시
3차	2010.4.9	• 천안함 사고수습 및 지원상황 • 금양호 사고수습·지원 방안	• 사병 보상금 문제는 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시작·검토, 국가유공자 예우제도 관련 전반적 검토 착수 • 금양호 선원 의사자 인정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 타 지원방안도 강구 • 금양호 인양은 인양작업을 검토 또는 시도 등을 하고 나서 계속 여부 판단
4차	2010.4.16	• 천안함 사망장병 장의 및 보상·서훈 • 금양호 사고수습	• 장의 격(해군장), 영결식 장소(2함대사령부), 장의 시기(유족과 협의), 분향소 설치 • 보상금(전사에 준함), 서훈(화랑무공훈장), 성금 전달 • 농림부가 보험금 선지급 및 성금 등으로 조기협의 마무리 추진 등
5차	2010.4.23	• 천안함 장례·분향소, 금양호 등 관련	• 5일장으로 영결식·안장식 진행 • 시·도 자치단체에 시민분향소 설치 • 금양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선적지인 인천시에 천안함 희생자 분향소 설치 시 함께 설치
6차	2010.4.30	• 천안함 성금 배분 및 추모사업 • 금양호 사망·실종자 예우	• 천안함 희생장병과 고(故) 한주호 준위는 4억~4억5,000만원, 금양호 희생자는 2억~2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유족과 논의 결정 • 성금 잔액은 추모사업에 사용 • 금양호 사망·실종자 예우(의사자에 준함), 장례지원(인천시에서 장례비용 지원, 필요 시 행안부 지원)
7차	2010.5.7	• 보상·서훈제도 개선, 사고 원인 조사결과 등 • 금양호 의사자 심의시기, 성금 배분 등	• 서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내용대로 제도개선 추진 • 사고 원인은 국방부가 총괄 발표되되 조사참가 외교관계자 입회 • 금양호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예정(5.14)대로 개최, 인정여부 심의 •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및 천안함 전사자 합동분향소 조문(2010.4.25)

천안함 침몰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되자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자 명비에 헌화 및 묵념한 후 호국영령실 앞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이어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이 대북조치가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5·24조치」로 통칭되는 이 성명은 UN안보리 회부 등 외교통상부의 조치, 남북교류협력 중단 등에 관한 통일부의 조치, 한미군사합동훈련 등이 망라된 국방부의 군사조치를 담고 있다. 이들 조치는 5월 21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확정되어 5월 24일 발표된 것이다.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피격은 전 국민은 물론 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도 국민의 건전한 안보의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 나아가 국제사회의 실효적인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을 절실히 일깨워주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많은 귀중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 얻은 국가안보상의 교훈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국민적 지혜와 제반 역량을 모아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가안보태세를 견실히 다지는 전기가 되었다.

3. 정부대응 평가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이후 국무총리실은 안보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대통령실과 유기적인 협조 및 역할분담 체제를 유지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 정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대응 체계를 유지했으며, 정부 내 역할 분담과 조정·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안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은 천안함 사건이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의 타 분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대응방향을 결정하고 각 부처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등 확고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및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급 정부대책단회의 등을 통해 실종자 구조, 함체의 탐색 인양작전, 희생자에 대한 장례와 예우절차 및 보상, 생존자 관리, 대국민 홍보 등 사후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집중했다. 정부는 사건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로 이루어진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천안함 침몰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피격이 원인’이라는 조사결과를 도출했다.

정부는 5월 20일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천안함 바로 알리기’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호국·보훈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심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으나, 정부 조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단체 및 개인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홍보효과가 반감되었다.

천안함 피격사건 대응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0.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21시 22분경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 - 실종자 46명
2010.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 사고 수습 및 정부 지원상황 점검
2010.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백령도 현장방문 구조활동 격려
2010.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백령도 현장 방문
2010.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활동 중 한주호 준위 순직
2010.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양98호 침몰(선원 7명 실종, 사망 2명)
201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 장병 구조활동 중단, 인양활동으로 전환
2010.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함 함미 인양, 실종자 36명 시신 발견
2010.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장관,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담화문 발표
2010.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함 함수 인양 작업 중 실종자 1명 시신 발견
2010.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함 함수 인양, 실종자 1명 시신 발견 - 20시부로 실종자 수색 종료(실종자 46명 중 6명은 미발견)
2010.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담화문 발표 해군2함대사령부에 대표 합동분향소 개소
2010.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함 46용사 영결식(2함대사) 및 안장식(대전현충원)
2010.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 보상서훈제도 개선, 생존장병 치유, 국민성금 배분, 금양98호 사망·실종선원 관련 지원 논의
2010.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고(故) 한주호 준위 가정 위로방문
2010.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 -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
2010.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함 사건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2010.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담화문 발표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대북조치 담화문 발표

제5절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대응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2010.11.23)

1. 사건 개요

2010년 11월 23일(화) 14시 34분경 북한군이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사격을 자행하자 해병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 만행으로 우리는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군인 2명이 전사했으며, 다수 인원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건물 133동과 전기 및 통신시설이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2. 정부의 대응

대통령실은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 및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정부 입장 발표내용(2010.11.23)

-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이다.
- 더욱이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강력히 대응했으며, 북의 피해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시에는 단호히 응징할 것이다.
-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인 11월 23일 16시부로 전 공무원 비상대비령 발령을 지시하고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대책을 논의했으며,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하여 주민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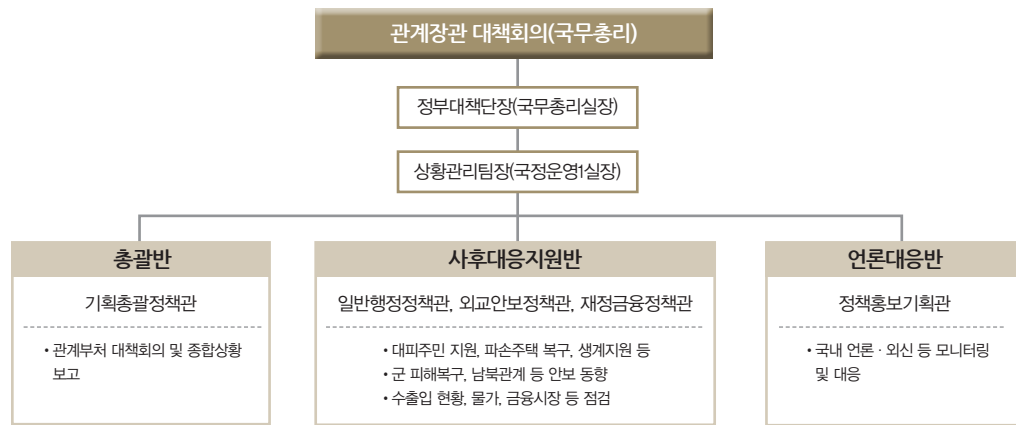
그리고 11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주민안전 확보, 피해복구 및 긴

급지원, 물가·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점검, 전력 시설 복구지원, 수출입 동향 모니터링, 물자 및 여객 수송관련 안전대책, 응급의료지원 대책 등 부처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11월 25일부터 신속한 사태의 수습과 범정부적 지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급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대응 체계인 ‘연평도 도발 관련 정부대책단(단장: 국무총리실장)’을 구성했으며, 국무총리실 내에 ‘상황관리팀(팀장: 국정운영1실장)’을 구성하여 ‘정부대책단’의 실무지원 및 피해복구, 주민지원상황 점검·지원, 국내외 언론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유관기관 배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11월 26일 ‘정부대책단회의’를 개최하여 연평도 피해 주민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 피해복구 대책, 민간인 인적 피해지원 방안, 출도 주민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 대책, 연평도 주택개량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부처 간 협의사항을 점검했다.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범정부 대응·지원체계(2010.11.25)】



국무총리는 11월 27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교전 중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장병들을 위문했으며, 전사자 영결식(국군수도병원)과 민간인 사망자 합동분향소 조문 후 유가족을 위로했다. 오후에는 인천에 있는 연평도 출도 대피주민 임시숙소를 방문하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하며, 임시숙소 지원사항을 점검했다.



위기관리상황실 점검(2010.11.23)



긴급 관계장관회의(2010.11.24)



정부는 12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특별취로사업비 예산 증액을 통한 연평도 주민의 어업손실 보상, 사망·부상자 지원, 시설피해 복구, 출도주민에 대한 숙소·생계·복지 긴급 지원 등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서해 5도 주민지원 강화,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해 5도 종합발전방안’ 추진을 결정했다. 그리고 최근 안보위기와 관련하여 민방위 등 비상대비태세, 난민 수용 및 구호대책, 민방위 체계, 위기상황 정보 전파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위기대응태세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부처별 추진분야를 점검했다.

1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평도포격도발 관련 피해복구 및 서해5도 발전대책’을 포함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공식 발표했으며, 12월 8일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2011년도 연평도 지원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 정부대응 평가

정부는 ‘연평도 포격도발’ 발생 직후 ‘정부대책단’ 및 ‘국무총리실 연평도 도발 관련 상황관리팀’ 등 범정부 차원의 상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후속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은 탈도(脫島) 주민들의 임시주거·교육대책 및 생계지원, 민간인 인적피해 지원,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정부 예



담화문을 발표하는 김황식 총리(2010.12.6)

산지원, 어민피해 대책 등 피해 국민지원을 위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고수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서북도서지역의 군 전력을 보강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했으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국정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사건은 ‘천안함 피격사건’ 과 더불어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대응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0.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시 34분경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 및 내륙에 3회에 걸쳐 170여 발의 포격도발 - 우리 군은 즉각 경고방송 및 대응사격(80발) 청와대,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국무총리 주재 긴급 간부회의 - 전 공무원 긴급 비상근무태세 발령
2010.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
2010.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정부대책단' 및 '상황관리팀' 구성·운영
2010.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201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연평도 피해복구 및 서해5도 발전계획' 담화문 발표
2010.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2010.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제6절 일본 원전사고 대응

1. 사고 개요

2011년 3월 11일 14시 45분경, 도쿄 북동쪽 370km 거리인 도호쿠(東北) 지방 부근 해저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지로부터 인접한 해변에 있는 후쿠시마 제1발전소와 제2발전소, 오나가와 발전소, 도카이 발전소 등 4개 원전 부지에서 매우 높은 강도의 지진이 감지되고, 운전 중인 원전 11기가 모두 자동 정지되었으며, 원전 인근 송전 철타 등이 심각한 손상을 받아서 후쿠시마 제1발전소가 소외전원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지진 발생 약 52분 후,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 14~15m 규모의 쓰나미가 도달하여 부지고가 10m인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모든 원전 건물이 약 4~5m 높이로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내 비상디젤발전기 등 비상 전원 공급 설비도 기능이 상실되었다. 후쿠시마 제2발전소는 쓰나미에 의하여 원전 일부가 침수되었으나 소외전원 1개 선로가 정상으로 유지되었고, 추가로 2개 선로가 신속하게 복구됨에 따라 원전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진앙지에서 가장 인접한 오나가와 원전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지고 및 지형적인 특성으로, 침수에 이르지 않아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 3.11 동일본대지진 발생 】



【 최근 일본 대규모 지진 발생현황 】

연도	지역	규모	피해상황
1923	간토대지진	7.9	14만명 사망
1995	고베대지진	7.2	6,436명 사망, 4만3,000여 명 부상
2000	돗토리현	7.3	100여 명 부상
2005	미야기현 해안	7.2	100여 명 부상
2008	이와테, 미야기현	7.2	사망 10명, 실종 12명

자료 : 기획재정부 및 언론 보도 재정리

2.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전개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원전 1, 2, 3호기는 지진 발생 전 정상운영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불시 정지 후 다량의 잔열이 발생했으나, 전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제어불능 상황에 처함에 따라 원자로

의 핵연료를 적절하게 냉각시키지 못했다. 이에 후쿠시마 원전 제1발전소 1, 2, 3호기의 노심에서 냉각수가 증발하고 수소가 발생하면서 격납용기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2011년 3월 12일 15시 36분,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원자로건물 상부가 파괴되었다. 3호기는 3월 14일 수소폭발을 일으켜 원자로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2호기는 3월 15일 수소폭발을 일으켜 격납용기 아래쪽이 파손되었다. 4호기는 정기보수를 위해 2010년 11월에 이미 노심의 핵연료를 모두 사용 후 핵연료저장조에 옮겨놓은 상황이었으나, 3호기 배기계통에서 역류한 수소로 인해 수소폭발을 일으켰다. 원자로 건물의 수소폭발로 인해 대기 중으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 일본 정부는 방출된 방사성 물질 총량을 $1.6 \times 10^{17} \text{Bq}$ 의 I-131과 $1.5 \times 10^{16} \text{Bq}$ 의 Cs-137으로 평가(2011.5.16)했으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원자력 사건등급(INES) 7등급에 해당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방사성 물질 유출 현황

출처: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보고서(2011.3.15)

3.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상대응 활동

인근 국가의 대규모 원전사고는 유례없는 일로, 정부는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고 당일인 3월 11일, 원자력안전 주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황반을 구성·운영하여 24시간 대비체제에 들어갔다.

상황반은 일본의 원자력안전보안원과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여 후쿠시마 사고 진행상황 등 자료 수집, 일본 정부의 주민보호조치 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함과 동시에 국내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등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 활동을 수행했다.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다음날인 3월 12일, 언론대응 상황반을 설치하여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주재로 원자력위원회를 개최(2011.3.28)하여 국내 원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일본 원전사고 대응 정부합동 TF팀을 구성·운영(2011.4.6)했다. 정부합동 TF

팀은 부처 간 정보공유, 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여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내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 등 국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했다.

1) 국내 원전 안전관리 대책 논의

3월 28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58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에서 정부는 일본의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원전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총리 주재 제258차 원자력위원회

먼저 국내 21개 모든 원전 및 연구로, 핵주기시설 등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사선 피폭 등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일본의 사례와 같은 지진발생에서 대형 해일, 전력 차단, 대형 원전사고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 시 원전 인근 주민과 민간환경 감시기구, 원전 사업자의 의견도 반영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면 해당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일본 원전사고에서 주는 시사점을 심층 분석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완벽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전 안전점검 및 대책을 새롭게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충실하게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활동 및 출입국 방사능 감시체계 가동

그동안 환경방사능 감시활동은 일상 업무로서 주기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인근 국가의 원전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단계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1단계는 일본 원전사고 직후 발령되었으며, 전국 70개 환경방사능감시망의 공간선량률 관측 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대기부유진 관측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시켰다. 또한 지속적인 대기확산 분석을 통해 기류를 통한 방사성물질 유입을 감시했다. 2단계는 방사성 물질이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인 3월 28일에 발령되었으며, 대기부유진 관측을 주 1회에서 매일 실시로 단축

했다. 또한 해수 및 해양생물, 빗물, 수돗물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주 2회 실시로 강화하여 방사성 물질 유입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경로에 대해 방사선 영향 감시를 실시했다.

대기와 해류 등을 통한 방사능 물질의 확산 유입 외에도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 및 사람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각 공항과 항만에서도 방사능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초기에 인천 및 김포 공항을 통해 이루어지던 출입국 검색은 전국의 각 항만, 공항 등으로 확대 운영했다. 2011년 3월부터 4월 13일까지 총 15만712명의 입국자 중 오염자 2명이 발견되었으나, 두발과 의류 일부분의 경미한 오염에 그쳐 제염 처리한 후 귀가시켰다.

3) 비상대응 커뮤니케이션 실시

2011년 3월 11일 19시 03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제1발전소에 긴급사태가 선언되면서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국내 언론의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정부는 3월 12일 즉각적으로 원자력안전 주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언론대응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체계적인 언론대응을 시작했다. 언론 브리핑룸을 이용해 매일 일정 시간에 정기적으로 국내 주요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상황반은 일본 원전사고 주요 상황 전개에 따라 급증하는 방송, 신문, 잡지, 지역 언론 등 전국의 언론 인터뷰 및 강연 요청(160건), 취재 협조(200여 건) 등에 대응하고 9건의 기자회견과 100여 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재난에 대해 동정을 금하지 못하는 한편,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관심에 대응하여 일본 원전사고 특별 웹페이지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홈페이지에 개설(3.12)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국민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상황전화를 개설했다. 일본 원전사고 특별 웹페이지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황, 일일 국내 방사능 분석 결과, 방사선 비상시 주민 행동요령, Q&A 등을 게시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황 전화를 통한 질의는 8,696건이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는 575건으로 평상시 1년간 질의건수인 약 130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들은 일본 사고로 인한 국내 환경방사선량률 변화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홈페이지의 접속횟수의 증가에서 잘 나타나는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간 접속건수가 평균 8,845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도에는 5월 31일 현재, 1월 1일부터의 누계접속건수가 359만5,860건에 달하며, 3월에만 197만3,771건이 접속되었다. 이런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와 일반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버)에 실시간 환경방사선 측정결과를 제공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일차적인 관심은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나, 이외에도 예상보다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기관 간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했다. 이에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원자력안전 대응홍보 관계부처 회의(4.1)를 통해 방사성 물질 안전(교육과학기술부), 국내 원전 안전(지식경제부), 식품안전(식약청) 등 3개 분야별 총괄기관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문화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문화재단 등 관계 부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기적 대응전략 수립 및 홍보 메시지 개발(One-Voice) 등을 수행했다.

4) 원전에 대한 안전성 재점검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으로 국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2011년 3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 원자력 시설의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 우려 불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대형 지진과 해일로 인한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원전 안전점검’을 수행했다.

또한 장기가동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의 불시정지(2011.4.12)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정부에 정밀점검을 요청해옴에 따라 계속운전 중인 고리 1호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고리원전 1호기 정밀점검’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추가로 실시했다. 국내 원전 안전점검단은 총괄위원회 공동위원장(2명)을 비롯한 6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36명)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37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했고,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단(지자체, 주민대표, 민간환경감시기구)에게 점검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항목에 반영했다.

국내 원전 안전점검에서는 대형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원전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지진·해일, 전력·냉각·화재방호계통, 중대사고 대응, 비상대응 체계 등 6개 분야 총 27개 항목에 대해 국내 전체 원전, 연구로 및 핵주기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원전 안전점검 결과, 현재까지 조사·연구를 통해 예측된 최대 지진과 해일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계속운전 중인 고리 1호기도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한편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해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 50개의 장단기 안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고리 1호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른 원전과 달리 매년 실시되는 정기검사 시 계속운전 관련 점검항목(주요기기 수명감시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원전 안전점검 이후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하여 원전부지별로 주민 설명회(2011.5.27~6.30)를 개최하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에 대해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5) 일본 원전사고 대응 정부합동 TF 활동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는 국제사회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대사고로, 일본의 원자력 안전진화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인접 일본발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관심과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교과부, 지경부 등 유관부처 국장을 팀원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2011.4.6)해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가. 제1차 TF회의(2011.4.7)

국내 방사능 측정 결과를 신속하게 홈페이지(원자력안전기술원)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과도한 반응 자제를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이 방사능 해수 방류 등 외교사안을 관련국가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교과부-외교부 간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원전 안전 점검(3.28~4.22)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나. 제2차 TF회의(2011.4.13)

당시 원자력 안전 관련 주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전사고 7등급 상향 조정에 따른 대응계획, 원자력 안전 토론회 개최, 『알기 쉬운 원자력 홍보책자』 발간 등을 보고했다.

특히 일본 원전사고가 최악인 7등급으로 판명됨에 따라 북핵실험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2007.12)했던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대응 매뉴얼」 중 상황 인지·전파·보고, 환경방사선 영향평가, 주민보호 조치 방사선 비상진료 관련 부분을 대폭 보완하여 6월부터는 개선된 매뉴얼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 제3차 TF회의(2011.4.15)

방사능 감시 운영현황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및 방사성 오염물질 해양 관측·감시체제와 일본산 수입식품 관리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방사선사고에 대비하여 전 국토 환경방사선 감시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무인 방사선감시기 및 지방방사능 측정소 등을 확대하고, 주변국 핵실험탐지장비 및 공·항만 방사선오염감시기 추가 등을 결정했다.

또한 한일 원자력전문가 회의(2011.4.12~13, 일본외무성 회의실) 결과와 향후계획이 논의되었는데, 적극적 협력을 통한 주변국 및 IAEA 등과의 공조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일본산 수입품의 수입요건 강화, 방사성 오염물질 해양 관측·감시, 수돗물에 대한 방사능 분석 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농림수산물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해양부(한국해양연구원), 환경부 간의 업무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라. 제4차 TF회의(2011.4.19)

일본 원전사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재평가 및 정부 차원의 조치사항 적절성을 검토하고, 사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부처별로 어떤 조치들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역할분담을 논의했다. 특히 국외사고로 인한 방사선비상발령 주체가 정부기관임을 분명하게 정의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사선 측정 및 분석을, 지식경제부는 대국민 홍보를, 행정안전부는 방사능 오염 및 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관련 조치를, 소방방재청은 방사능 재난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역할분담을 결정했다.

또한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운영과 진료계획 이행가능성을 재평가하여 만일의 사태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확립했다.

마. 제5차 TF회의(2011.4.28)

일본 원전사고 진전상태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고 부지 내 방사능 오염지도가 공개됨에 따라 국내 방사능 영향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해 방사성 체논농도도 극미량으로만 검출되는 등 거의 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접국가 방사능사고 시 범부처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근거마련 및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대응 매뉴얼」에서의 부처별 역할 및 위기대응 체계를 재검토했다. 또한 음식물 섭취제한, 옥내대피 및 소계를 위한 선량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유사시 국내 대응을 위한 종합체계 및 현황을 재검토했다.

바. 제6차 TF회의(2011.5.9)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국내 원전에서 최악의 재난 발생 시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해일·중대사고 등 6개 분야에서 도출된 50개 장단기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향후 5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안전설비 보강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방사성 물질 유출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학생 원자력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안전교육, 응급대응 등을 교육과정 에 반영하는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사. 제7차 TF회의(2011.5.18)

주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원전 상황 분석을 통해 원자료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을 내린 후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 시 모니터링 강화 필요 등 향후 중점 감시 요소를 도출·보고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간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진행 중이던 3국 원자력안전 규제책임자회의 등을 활용하여 안전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아. 제8차 TF회의(2011.5.31)

교육과학기술부는 15개 관계부처·청 및 국무총리실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작성된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보고하면서 부처별 의견 및 반영결과를 함께 보고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도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설정할 것을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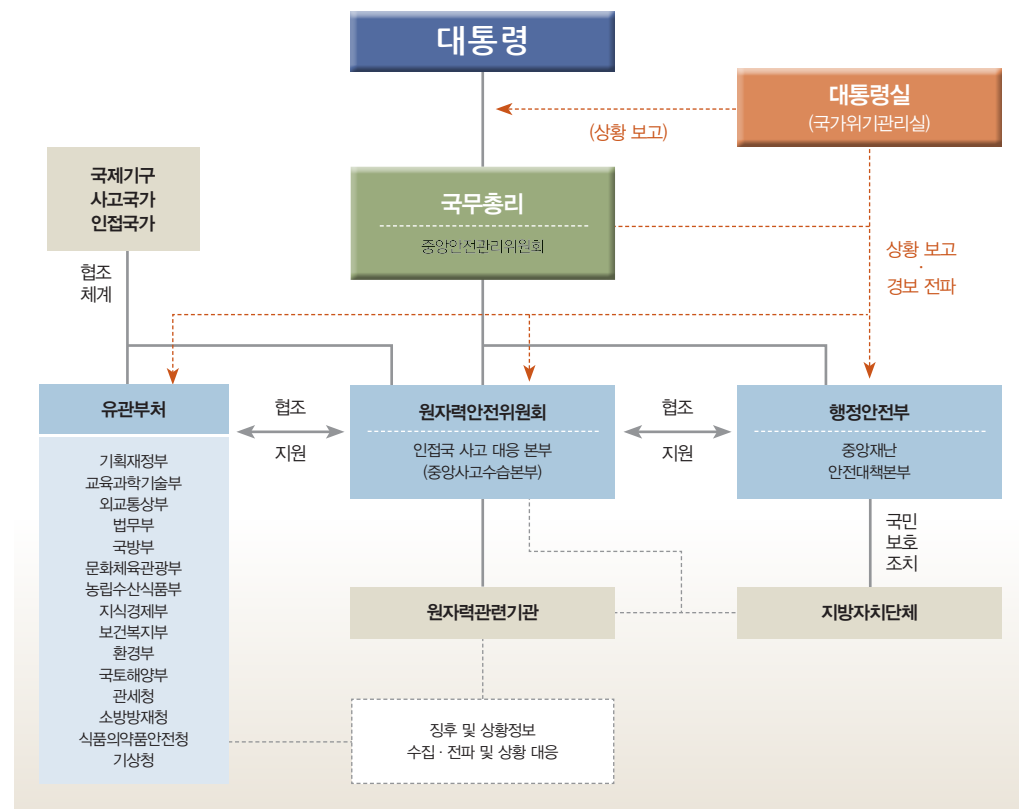
자. 제9차 TF회의(2011.7.1)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최종 확정했고, 8월까지 행정안전부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매뉴얼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10월까지 관계부처별 실무매뉴얼을 작성할 것을 결정했다.

차. 제10차 TF회의(2011.7.25)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물질 오염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중 해양환경 공동조사 사례 검토 및 인접국(한·중·러) 간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기관별로 연구협력 사업과 공동 세미나 계획을 마련하고, 한·일 환경공동위(9월) 개최 시 인공위성 추적 표류부이 투하 및 회유어종 표지방류 등 공동사업 논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체계도 】



6) 일본에 대한 지원 및 협력

후쿠시마 지역의 인명 구조 및 재외동포 구조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중앙119구조단, 서울·경기 구조대원, 의료진, 통역요원, 외교부 직원 등 102명으로 긴급 구조대를 파견했다. 긴급 구조대에는 방사선 방호에 대한 전문요원이 없어 현장구조 활동 시 피폭 위험 및 제염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토록 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인원은 긴급 구조대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대사관의 자문역으로 교민들에게 방사선 관련 현황 및 대처방안을 설명하는 등 재외동포 지원에도 힘썼다.

한일 간 정부 차원에서의 정확한 정보전달과 협력 방침 마련을 위한 한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현지 일본기관(JNES)에도 KINS의 전문가를 파견했다. 2011년 4월 12~13일, 일본에서 개최된 1차 한일 전문가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방안이 협의되었다. 6월 14~15일 기간에 일본에서 개최된 2차 한일 전문가 회의에서는 1차 회의 이후 후쿠시마 진행 및 추가 확인사항과 일본 국가보고서 개선 제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KINS의 전문가 2인이 차례로 일본 JNES에 5월부터 3개월간 파견 형식으로 머물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국내 영향평가,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 등을 수행했다.

4.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우리나라는 일본 원전사고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한 국가였다. 사고 다음날인 3월 12일에 구조견과 구조대 파견을 시작으로 복구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전달과 전문가 파견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다. 또한 사고 당일과 다음날 각각 국내에 종합 상황반과 언론대응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김항식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 합동 일본 원전사고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국내적인 대응 조치도 즉시 이루어졌다. 원전사고 대응 TF팀을 통해 방사능 감시체제, 식품 안전관리, 국내 원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사능 관련 장비·약품을 보강했으며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원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내외적 대응은 시기와 방법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그간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의 유일한 대안으로 추앙되어오던 원전에 대한 인식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우리나라가 처한 에너지 현실이 달라진 것은 없다. 우리나라는 막대한 전력수요 증가와 화석에너지 자원의 한계, 기후변화 대응, 원전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이 필수 불가결한 국가이므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8.27)’에 따라 정부의 현 원자력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원전사고 대응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본 대지진 발생
2011.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원전사고 대응 조직 설치·운영 1단계 환경방사능 감시활동 강화
2011.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원전사고 특별 웹페이지 개설
2011.3.1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원자력 시설 긴급 현장점검
2011.3.17~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발 항공기/선박 승객 방사능 오염검사 실시
2011.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발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조사
2011.3.2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원전 안전점검
2011.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단계 환경방사능 감시활동 강화
201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 안전 대응홍보 관계부처 회의
2011.4.6~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원전사고 대응 TF 구성 및 운영
2011.4.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한일 전문가 회의
201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 개선대책 사업자 통보
2011.5.27~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주민설명회
2011.6.1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한일 전문가 회의

제7절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대응

1.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제기

2011년 5월 16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지역방송인 KPHO-TV가 “1978년경에 캠프캐롤(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고엽제가 매립되었다”는 스티브 하우스 등 전 주한미군 3명의 증언을 보도하면서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이 최초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3일 뒤(5.19), 우리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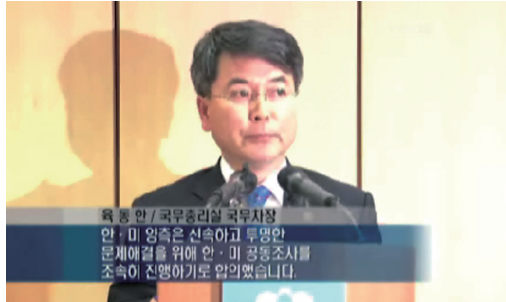
인터넷 뉴스 보도화면(2011.5.20)

2. 「정부대응TF」 구성 및 운영

정부는 이번 사건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내 언론 보도 직후인 5월 20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지 내 조사를 위한 한미 협의, 캠프 주변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지역주민대표와 환경단체, 민간전문가 등)」 구성 및 환경영향조사(토양, 지하수 조사 등) 착수, 국무총리실 내 「정부대응 TF(위원장: 국무차장, 위원: 외교·환경·국방·행안부 실장)」 구성·운영방안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논의가 이루어졌다.



긴급 관계기관회의 및 총리실 국정운영1실장의 회의 결과 브리핑(2011.5.20)



정부대응TF 위원장-미8군사령관 면담 및 기자회견(2011.5.22)

그리고 회의 종료 후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에서 논의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했다.

「정부대응TF」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합동 대응체제 구축, 미군과의 주요협상 내용 검토, 한미공동조사단 조사활동 모니터링 및 지원,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반 파견, 그리고 대언론 및 대국회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정부대응TF」는 5월 22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대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제기된 의혹을 조속히 확인하고 지역주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미군기지 내 한미 공동조사방안 등 대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존슨(John D. Johnson) 미8군사령관이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육동한 국무차장을 면담했다. 국무차장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에서 「정부대응TF」를 구성·운영하고 있음을 존슨 사령관에게 설명하고, 동 사안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한미 공동으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SOFA 환경분과위를 통해 한미 공동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존슨 사령관은 이번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한미 공동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한국 국방부 및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모든 관련 자료를 공유해나간다는 주한미군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캠프캐롤 의혹 제기 직후 이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했다. 한미 공동조사 초기에 미국 측이 조사범위를 고엽제 매몰여부 조사로 한정하고, 기지 내부조사는 한국 측 참관하에 미군이 실시하며, 기지 주변조사는 미군 참관하에 한국 측이 조사하는 것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SOFA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고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와 기지 내외부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정부대응TF」는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한미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의

현장 점검과 총 26회의 TF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를 통해 공동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미 간 협조사항과 관계 부처 간 조치사항을 점검·조정하고, 언론·지역주민·시민단체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대응전략과 홍보전략 등을 검토·논의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정부대응TF」는 한미 공동조사를 진행 중 스티브 하우스(고엽제 매립 의혹 증언자)가 캠프캐롤에 직접 방문하여 추가로 매립 의혹을 제기한 장소와 미국 측의 반대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던 41구역(최초 화학물질이 보관되었던 장소) 토양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토양조사 필요성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미국정부에 전달하여 12월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3.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

한미 양측은 5월 26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SOFA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티브 하우스의 고엽제에 관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한미 공동조사 실시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미 공동조사단은 한국 측 대표(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16명)와 주한미군 측 대표로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5월 27일부터 고엽제 매몰 문제 관련 캠프캐롤 주변지역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시민단체·기자단·지역주민 등의 현장 참관하에 지하수 4개소에 대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졌고, 이후 지하수 및 토양·하천수에 대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졌다. 또한 6월 2일부터는 기지 내부에 대한 수질 조사와 지구물리탐사, 토양시추조사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지 외부 지하수 시료채취 및 기지 내부 토양 시추조사

한미 공동조사단은 중간조사 결과가 완료될 때마다 철곡군 현장에서 한미 공동조사단 및 정부기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환경단체, 기자단을 대상으로 결과발표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6월 16일, 7월 8일, 8월 5일, 9월 9일 총 4회에 걸쳐 중간발표를 하고, 12월 29일 최종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한미 공동조사를 종료했다.

【 한미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현황 】

일자	조사 내용	조사 결과
2011.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캐롤 기지 주변 (반경 2km 이내) 지하수(10개), 하천수(6개) - 총 154개 항목에 대한 수질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에서 고염제 성분인 2,4-D, 2,4,5,-T, 다이옥신 미검출 ■ 하천수 3개 지점에서 극미량의 다이옥신(0.001~0.010 pg-TEQ/L) 검출 * 미국 EPA의 먹는 물 기준(30pg/L)의 1/3,000~1/30,000 수준이며, 최근 왜관지역평균(0.070 pg-TEQ/L)의 1/7~1/70 수준  <p>한미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2011.6.16)</p>
201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기장 지역 지구물리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가지 탐사기법에 의한 이상대를 종합 해석하여 토양시추지점 (총 40개) 선정
201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캐롤 내 지하수 이용 관정(6개소), 헬기장·D구역에 설치된 지하수 관측정(16개소) 시료채취 - 총 91개 항목 수질분석 ■ D구역·41구역 외부지역 토양(22개) 및 하천퇴적물 (5개) 시료 채취 - 총 92개 항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염제 주요 성분인 2,4-D, 2,4,5-T 및 고염제 불순물로 함유되는 2,3,7,8-TCDD 미검출 ■ 일부 지점에서 TCE, PCE 항목이 EPA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 고염제 주요 성분인 2,4-D, 2,4,5-T 및 고염제 불순물로 함유되는 2,3,7,8-TCDD 미검출 ■ 22개 토양(0.001~1.152 pg-TEQ/g)과 하천퇴적토(0.002~0.880 pg-TEQ/g)에서 다이옥신 미량 검출 * 일반토양 전국평균 : 3.487pg-TEQ/g
201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브 하우스가 새롭게 지목한 지역에 대한 지구물리탐사 및 토양시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지 내부에 대한 지구물리탐사 및 83개소의 토양시추 결과, 드럼통 매립 징후 미발견
201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구역 지하수 수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구역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고염제 사용이나 매립을 단정지을 수 있는 증거는 미발견 - 다만 한국 측 분석 결과 1개 지점에서 2,4,5-T가 0.161µg/L (WHO 음용수 기준의 1/50) 검출, 미국 측 분석결과에서는 미검출
2011.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지 내부 토양시추조사 ■ 41구역 지하수 추가 수질조사 ■ 과거 근무자 172명에 대한 인터뷰 및 32개 기관에 대한 기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구역 2개 지점에서 2,3,7,8-TCDD 미량 검출 ■ 41구역 지하수에서 2,4,5-T 미검출 ■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기타 화학물질 등이 굴착되어 미 본토로 수송되었다는 증언 확보 -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 캠프캐롤에 고염제가 매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음

4. 성과 및 의의

정부는 「캠프캐롤 고염제 매립 의혹」 제기 직후 한미관계, 지역주민, 언론, 환경단체 등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응TF」 운영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정부대응TF」는 캠프캐롤 기지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총 26회의 TF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조정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정부는 적극적인 대국회 및 대언론 활동, 지자체·지역주민에 대한 소통강화 및 지역안정화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한미 공동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사실 확인 이전에 불필요한 의혹 확산으로 사회 갈등요소가 증폭되는 것을 방지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부대응TF」의 범정부적인 노력과 캠프캐롤 기지 내부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단의 투명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캠프캐롤 고염제 매립 의혹」 관련 사건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대응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보도 관련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민관 합동조사단 및 정부대응TF 구성·운영방안 논의
2011.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 국방부, 환경부, 미8군사령부 관계관 캠프캐롤 답사
2011.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대응TF(팀장: 육동한 국무차장) 1차회의 개최 - 이후 총 25회의 TF회의를 통해 한미 공동조사 등 현안 논의
2011.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8군사령관, 정부중앙청사 방문, 정부대응TF 팀장과 면담 - 고엽제 매몰 문제 관련 한미 공동조사에 적극 참여 의사 전달
2011.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FA환경분과위 개최, 한미 공동조사 합의
2011.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공동조사 시작(캠프캐롤 주변지역 지하수 시료채취)
201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대응TF 위원장, KTV 「생방송 정책와이드」 인터뷰 -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조사 진행상황 설명
2011.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곡군청 내 정부합동지원반(환경·국방·행안부, 경북도 관계자) 설치
2011.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대응TF 위원장, 캠프캐롤 조사현장 방문 및 칠곡군 관계관 간담회
2011.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공동조사단, 캠프캐롤 기지 밖 지하수·하천수 조사결과 발표 - 고엽제 성분 불검출, 3개 지하수 관정에서 오염물질 기준 초과
2011.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사, 미국 측의 1992년, 2004년 보고서 관련 공개 브리핑
201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공동조사단, 캠프캐롤 기지 내 지구물리탐사 1차 조사 결과 및 토양조사계획 브리핑
2011.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대응TF 위원장, 대구·경부지역 언론인 간담회
2011.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국민대책협의회, 스티브 하우스(고엽제 매립 증언자) 캠프캐롤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 개최
201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공동조사단, 캠프캐롤 기지 내 지하수 및 기지 밖 토양조사결과 발표
201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계획 브리핑 및 조사 개시
201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공동조사단, 스티브 하우스의 추가 지목지역 지구물리탐사 및 토양조사 결과, 41구역 수질조사 결과 발표
2011.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공동조사단,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공동조사 최종발표

제8절 김정일 사망 관련 상황관리

1.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011년 12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북한 방송을 통해 발표되었다. 뇌졸중에 따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은 2008년부터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해 줄곧 제기되어왔고, 우리 정부도 북한 지도자의 건강문제와 후계체제 동향을 예의주시해오던 차였다.

2011년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언론매체는 정오를 기해 특별방송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과거 '특별방송'이라는 표현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와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사용된 바 있었다.

북한은 당일 낮 12시 조선중앙TV 특별방송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보도했다. 12월 17일 08시 30경 중증급성심근경색과 심한 심장성 쇼크 합병으로 사망했으며, 12월 17일부터 29일까지 애도기간을 갖고 12월 28일 평양에서 영결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2. 정부의 대응조치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은 갑작스러웠지만, 이미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기에 정부는 준비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차분하게 대응책을 수립해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접한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소집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2011.12.19)

대통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과 경찰의 비상경계태세 돌입을 긴급 지시했으며, 공무원 전원에 대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대북 경계태세를 한 단계 격상 운용했으며, 통일부는 북한에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 대책을 시행했다.

이어서 소집된 비상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대응상황 및 주변국과의 협력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경제상황을 각별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주재 긴급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국내외 경제 금융시장에 동요가 없도록 정부합동대책팀을 구성하여 일일단위 경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 정상과 통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3. 조문단 관련 정부 담화문 발표

정부는 이튿날인 12월 20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후속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차원의 조의표명 및 조문단 파견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과거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국내적으로 대북 조문단 파견 문제가 상당기간 논란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균형감 있게 정리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위로를 표명하고,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는 방북하여 조문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일부 장관은 외교안보장관회의 직후 이러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관련 정부 담화문(2011.12.20)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방국과 긴밀하게 협력해가면서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에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애도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12월 23일로 예정했던 전방지역에서의 성탄트리 점등을 금년에는 유보하도록 교계에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 북한 상황과 관련하여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조문단 방북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하여 북한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4. 국내외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나마 불안요소를 보였으며, 시민사회도 적지 않은 동요를 보였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북 조문단 파견 문제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세력 간에 다양한 찬반논쟁이 제기되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2월 19일 국무총리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따른 불안요소가 시민사회 전반에 파급되거나 남남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이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군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경계 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고, 각 부처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의 모든 분야를 세심하게 챙기고, 모든 공직자도 절제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은 상황발생 직후 홍윤식 국정운영1실장을 반장으로 종합상황대책반을 긴급 가동했다. 종합상황대책반은 북한 동향과 외교안보 대응 상황, 국내외 시장경제 및 민생동향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상황반은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었으며 12일 동안 총 19회에 걸쳐 상황보고가 이루어졌다.

국내 금융시장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소식에 주가·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수일 이내에 변동폭이 다소 완화되었다. 실물시장도 단기간에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았으며, 수출입·생활필수품 등 실물경제도 영향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시점	12.16	12.19	12.20	12.21	12.22	12.26	12.27	12.28	12.29
코스피(p)	1,840.0	1,776.9	1,793.1	1,848.4	1,847.5	1,856.7	1,842.0	1,825.1	1,825.7
원/달러(원)	1,158.6	1,174.8	1,162.2	1,147.7	1,156.2	1,155.0	1,158.8	1,156.0	1,151.8
5년물 CDS(bp)	159	168	169	162	161	휴장	160	160	162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인 12월 2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1)을 유지하고, 신용전망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도 초기에는 조문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갈등 양상이 나타났으나, 정부가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함에 따라 조기에 안정을 되찾아갔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따른 비상대응 상황은 12월 30일까지 지속되었다. 공직자에 대한 비상근무는 공직사회 안정 및 연말연시 지나친 경제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군은 자체적으로 상시적인 대북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5. 정부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정부의 위기대응태세와 우리 사회의 안보 면역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망 발표 초기, 단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조문 등과 관련해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상황대응체제 구축과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설득 행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정부의 차분하고 신속한 대응 등 주요 갈등 이슈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방침을 확정하고 대응해나감에 따라 과거와 달리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으며, 안보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내적 성숙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관련 정부 대응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12.19(월)	■ 12:10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대북 안보태세 점검 등)
	■ 12:40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 발령
	■ 15:00 비상국무회의 및 긴급 위기관리대책회의
2011.12.20(화)	■ 07:30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금융·수출입 등 경제동향 점검)
	■ 08:00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비상금융상황대응팀 구성)
2011.12.20(화)	■ 16:10 정부 담화문 발표(조의표명 및 민간조문단 방북 방침)
2011.12.22(목)	■ 07:40 비상경제대책회의
	■ 08:00 위기관리대책회의(주요 경제상황 점검)
	■ 14:00 국회 긴급현안질의
2011.12.23(금)	■ 07:30 국가안전보장회의('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 해제)
2011.12.26(월)~27(화)	■ 민간 조문단(18명) 방북
2011.12.28(수)	■ 08:00 위기관리대책회의(주요 경제상황 점검)
2011.12.29(목)	■ 07:30 물가관계장관회의(주요 품목 수급동향 점검)

제9절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대응

1. 사고 개요

2012년 9월 27일 오후 3시 43분, 경북 구미4공단 내에 있는 LCD 액정세척제 제조공장인 (주)휴브글로벌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호장비 없이 불산 20톤을 적재 탱크로리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밸브를 통해 약 8톤의 불산이 공기 중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등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산단 주변지역 212ha 농작물 고사, 수목 13만797본 및 가축 3,943여 두 피해, 차량 1,962대 부식 등 상당한 규모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또한 지역주민 및 근로자 등이 1만2,243건의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피해지역인 산동면 봉산리, 임천리 565세대 중 340명이 자택을 떠나 인근 자원화 시설 및 청소년 수련원 등에 임시 거주했다.

2. 사고 수습 및 지원 체계

1)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가동

사고 직후,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고, 화학사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환경부 장관)를 가동하여 오염지역 탐지 및 시료 채취·분석, 우수로 차단 및 처리수 저류 등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 관계차관회의 개최

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사고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매주 개최했다.

10월 4일 열린 1차 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현지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날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재난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환경

부, 고용부, 지경부, 방재청 등 정부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키로 했다.

2차 관계차관회의(10.8)에서는 중앙재난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능력으로는 이번 사고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사고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즉시 행정적 절차를 밟아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당일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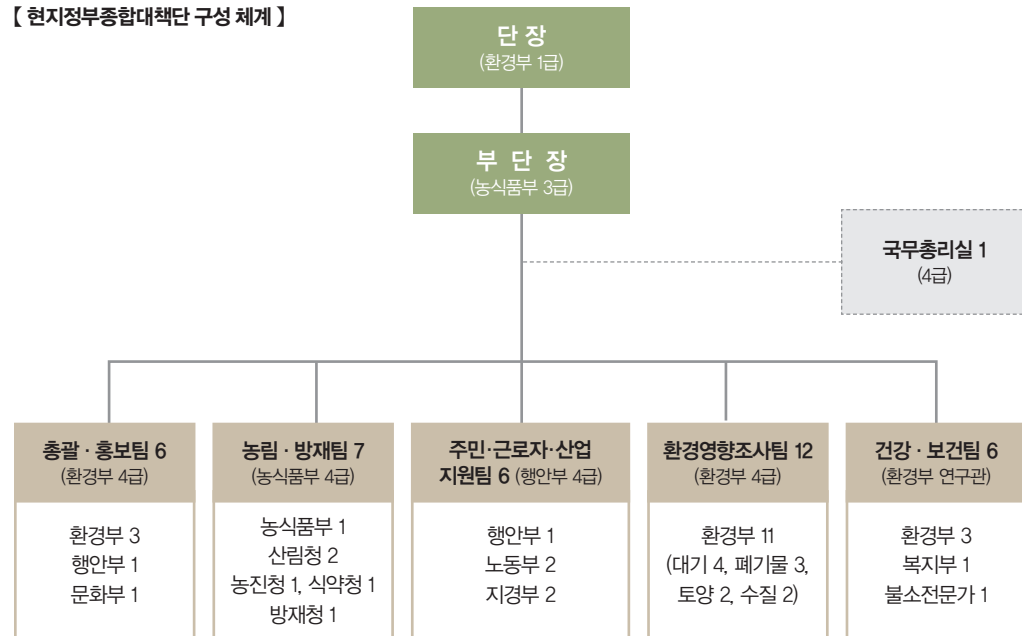
3차 관계차관회의(10.11)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지원 기준을 결정했다. 인적 재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고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시기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국고 대 지방비 지원 비율을 70대 30으로 결정했다.

4차, 5차 관계차관회의(10.18, 10.25)에서는 분야별 세부 지원기준과 지원일정을 확정했으며, 부처별 피해 지원·복구 활동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했다.

3) 현지정부종합대책단 설치

정부는 정부종합대책단을 현지에 구성하여 피해조사, 주민지원 및 복구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언론 대응과 주민 소통을 전담했다. 현지정부종합대책단은 환경부 1급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농식품부, 복지부, 지경부, 고용부 등 5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농림·방재팀, 환경영향조사팀, 건강보건팀 등 5개 팀 40명으로 구성되었다.

【 현지정부종합대책단 구성 체계 】



3.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1) 피해지원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피해지역의 농작물, 가축, 수목, 기업·소상공인, 차량, 주택·축사, 건강검진, 폐기물 처리, 도배·장판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555억원을 지원했다. 생계지원금, 농산물, 가축 등 주민 생계와 관련한 분야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이후 기업, 차량 등 기타 분야에 대한 2차 지원을 실시했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지원비와 응급·장기구호비를 지원하고, 피해지역 농작물, 가축, 수목은 폐기한 후 시기에 상응한 보상을 했다. 주택, 축사 등 피해 건물 및 차량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지원하고, 개인이 부담한 건강검진비, 잔재 농작물·수목 등 폐기 처리비, 주택 도배·장판 교체비도 지원했다. 건물 및 기계설비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손실 금액을 지원하고,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융자 형태의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재산손실과 영업손실을 지원했다. 아울러 급변 사고의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연체금 징수 예외, 지방세 징수 유예 등 간접지원도 실시했다. 이번 피해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사고업체인 (주)휴브글로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 분야별 피해 지원기준 】

농작물(채소·과실류 포함)	폐기 후 시가 지원
가축	폐기 후 살처분 가축 보상 단가 적용 지원
수목(임산물 포함)	폐기 후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지원
주택·축사	축사 지붕 수리비 지원, 주택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지원
차량	보험처리 후 개인부담액 전액 지원, 보험 미가입자는 수리비 전액 지원
건강검진	개인부담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폐기물	농작물·임산물 폐기물은 소각비용 지원, 초본류는 산업폐기물공제조합의 처리비용 적용 지원
도배·장판	도배·장판 교체비 지원
기업	한국손해사정인협회 등 전문기관이 조사·사정한 금액 지원 (영업손실은 융자형태 지원)
소상공인	한국손해사정인협회 등 전문기관이 조사·사정한 금액 지원(영업손실 포함)

2) 안전관리 강화

사고 후 남아 있는 잔류 불산(약 12톤)은 현재 CCTV를 설치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 중이며, 저농도로 전처리 후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지역 업체에 대해 공장건물 내외 세척과 제독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불산 노출수준을 평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 환경 및 건강관리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사고 직후 대기, 수질, 토양·지하수 등에 대한 불산 농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민간단체, 정부측정기관으로 민간환경영향조사단을 구성했으며, 대기(10개소), 수질(4개소), 토양·지하수(82개소), 실내공기질(15개소) 등 매체별 환경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대표, 의학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 합동건강영향조사단을 통해 거주주민 약 1,100명 및 근로자 약 56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하여 향후 2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주주민 등에 대해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증 등 검진, 상담·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사고 인근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무료 건강상담을 실시했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4. 정부합동점검 및 제도개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과 관련기관의 안전관리실태 및 비상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환경부, 행안부, 지경부, 고용부, 방재청 등 부처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40개소와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73개소를 대상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위기관리 매뉴얼의 적정성·현실성과 숙지 상태, 방재장비 비치 및 위험물질 관리자 선임·교육 여부, 관련 법령상 미비점과 관리 누락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초기 대응기관의 매뉴얼 부재, 사고 대응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유해화학물질 담당자 등의 전문성 미흡,

위험물질 관련 종사자의 자격 규정 부재, 방제기관의 장비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2년 12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화학물질을 여러 부처에서 관리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 주관부처가 모호해지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소관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환경부로 대응·수습체계를 일원화하여 사고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이와 함께 화학사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피해확산이 빠른 화학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령 발령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현실화하는 등 위기대응 매뉴얼의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개선하고 부처별로 운영·관리 중인 위험물질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유관부처 간 정보를 신속히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이동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운송 단계에서도 실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UN 코드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물질 분류·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히 물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화학사고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관련기관 담당자에 대한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고, 사고 대응기관에는 부족하고 노후화된 제독장비, 물질 분석장비 등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제고키로 하였다. 아울러 공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 물질을 확대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인을 선임토록 할 예정이다.

불산 누출사고 대응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2.9.27	■ 중앙사고수습본부(환경부) 설치
2012.10.4	■ 제1차 관계부처 차관회의
2012.10.5~7	■ 중앙재난합동조사 실시
2012.10.8	■ 제2차 관계부처 차관회의
2012.10.8	■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2.10.8	■ 현지정부종합대책단 설치
2012.10.9	■ 불산 누출사고 관련 법적·제도적 보완 지시(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
2012.10.11	■ 제3차 관계부처 차관회의
2012.10.15~19	■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관계부처 자체점검
2012.10.18	■ 제4차 관계부처 차관회의
2012.10.23	■ 1차 피해복구 지원 예비비(108억원) 국무회의 심의·의결 (1차 지원비 총 292억원)
2012.10.24~11.8	■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정부합동점검
2012.10.25	■ 제5차 관계부처 차관회의
2012.10.30	■ 2차 피해복구 지원 예비비(36억원) 국무회의 심의·의결 (2차 지원비 총 263억원)
2012.11.7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1차 회의
2012.11.14	■ 정부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마련
2012.11.15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개선 관련 민간전문가 자문단 회의
2012.12.14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 관련 관계부처 3차 회의
2012.12.21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개선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4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관리

제1절 연혁 및 기본 현황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출연연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3개 연구기관, 3개 부설기관을 감독한다. 각 연구기관은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국가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1월, 「출연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및 경영혁신을 위해 각 부처 소속으로 관리되던 42개 연구기관을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5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하고, 국무총리가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영국의 경제사회연구회(ESRC),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회(CNRS),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주요 유럽국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방식인 민간연구회 체제를 참고한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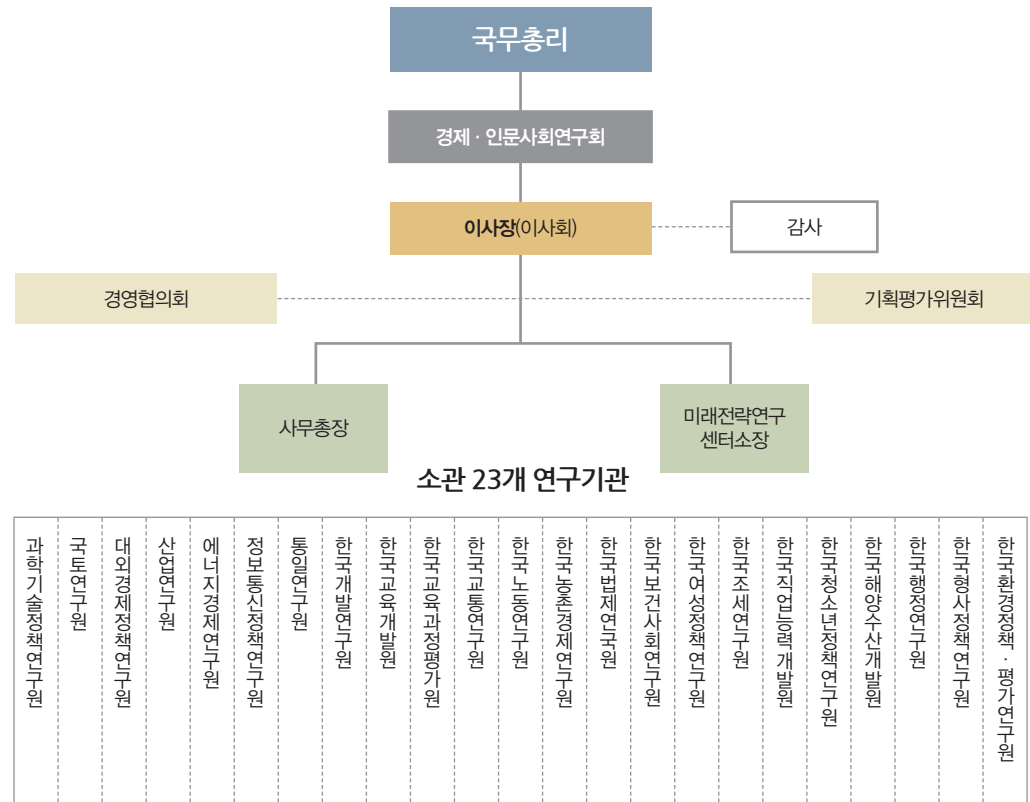
감독관청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연구기관	KDI 등 23개 연구기관	KIST 등 10개 연구기관	생산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
근거법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후 2004년 10월에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를 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을 감독관청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는 한편, 2005년 7월에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합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설립하고 국무총리가 계속 감독하도록 했다.

이러 2008년에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공공기술연구회를 폐지하고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속 23개 연구기관과 3개 부설기관을 감독하며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연구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연구회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정부 이사 8명과 민간 선임직 이사 8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구성 체계 】



* 부설기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토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한국개발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연구기관의 그 밖의 수입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출연연법」에 따라 매년 재원을 출연하여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출연금과 그 밖의 정부 부처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012년도 예산은 총 9,758억원으로 이 중 정부출연금이 44%인 4,323억원이며, 나머지는 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수탁한 과제의 수행대가로 받는 금액과 기타 수입이다.

2012년 12월 현재, 전체 인력은 총 2,871명이고, 이 중 박사급 연구인력은 1,538명으로 전체 인력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제2절 합리적 기관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

1. 연구기관 투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R&D 예산은 연평균 9.7%의 증가세¹⁾를 보여왔고, 이러한 R&D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에 대한 재원 투자규모도 연평균 13.7%의 증가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금은 2008년 2,938억원에서 2012년 4,323억원까지 증가했고, 각 부처 수탁과제 확대에 따른 자체수입 또한 2008년 2,890억원에서 2012년 5,434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재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예산규모 현황 】

(단위: 100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합 계	582,854	668,314	733,392	824,168	975,751	13.7%
출연금	293,788	340,119	394,024	419,049	432,309	10.1%
자체수입	289,066	328,195	339,368	405,119	543,442	17.1%

* 수입 예산 기준

투자규모 확대에 따른 수행과제 증가로 인력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비정규직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최근 5년, 30.6% → 41.8%)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단위: 명)

연 도	총 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연구직(A)	행정직(B)	
2008	3,563	2,472	1,886	586	1,091(30.6%)
2009	3,677	2,521	1,927	594	1,156(31.4%)
2010	3,898	2,551	1,961	590	1,347(34.6%)
2011	4,157	2,632	2,030	602	1,525(36.7%)
2012	4,780	2,817	2,123	669	1,963(41.1%)

1) 2008~2012년 정부 R&D 투자 규모 추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정부재정 총지출(조원)	262.8	284.5	292.8	309.1	325.4	5.5%
정부 R&D 투자(조원)	11.1	12.3	13.7	14.9	16.0	9.7%
총지출 대비 비중(%)	4.2	4.3	4.7	4.8	4.9	-

2.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네트워크 강화

1999년부터 각 부처 산하의 연구기관을 연구회 소속 체제로 개편하여 연구회가 23개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면서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부처 산하로 운영될 때보다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인 부처의 정책수립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와 같은 연구기관의 정부정책 대응능력 제고를 보완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원 간에 공식적·체계적인 정책연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처와 연구기관의 유대관계 강화는 물론,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주축이 되어 연구기관-부처 간 협의체인 '정책연구협의회'를 구성했다.

연구기관장과 관련 정부부처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여 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즉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정부와 연구기관 간의 중지를 모아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실행대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24개 부처와 23개 연구기관 간 정책연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12월까지 실무급 1,083회, 장·차관급 193회 등 총 1,276회의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실제로 그 활용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책연구협의회 운영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
소 계	21회	43회	659회	553회	1,276회
장·차관급	21회	43회	69회	60회	193회
실무급	-	-	590회	493회	1,083회

운영과정에서 정부 측 참여인사가 차관급으로 한정될 경우 정책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국장 등의 실무급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협의회는 더욱 활력을 띠었다. 앞으로는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각 연구기관이 국가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지식을 충실히 제공하여 합리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3. 연구기관의 합리적 경영기반 마련

연구기관 예산, 조직 운영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국무총리실은 각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2009년 이전에는 감사원과 국회 등 외부통제를 중심으로 감사체제를 유지했으나, 2009년부터는 국무총리실이 감독관청의 지위에서 연구원 전반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개선하기 시작했다. 연구사업비 집행 및 관리, 조직·인력 등 기관운영 분야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742건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했다. 연구회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편성된 예산과는 달리 별도의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한 것이 지적사항의 주를 이루었다. 한 예로 일부 연구기관은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 외에 매년 연구사업비(관)에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직원에게 연구장려금과 능률제고수당 명목의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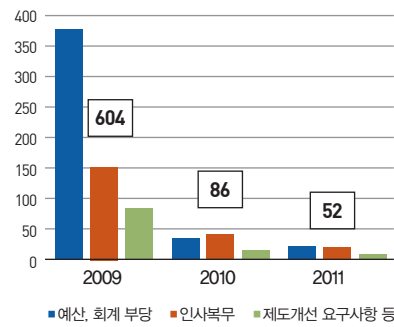
국무총리실은 이와 같은 운영상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통해 기관운영의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예산 부적정 집행실태가 기관별 상이한 규정 및 관련규정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여 2010년 3월에는 「연구기관 운영 제도개선 및 표준지침」을 제정했다.

고용계약제, 연봉제, 인사, 예산집행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기관 운영의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분야별 운용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뒤이어 2010년 7월에는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각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기관 예산결산 업무해설서」를 마련했다. 이 해설서를 통해 연구기관 간 예산과목 등을 표준화하고 예산편성·집행·결산 체계를 정립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 간 상이한 예산과목을 우선 통일했고, 이후 2010년 12월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예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 수단도 마련했다. 정규직원에 대한 연봉급여,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 등 인건비성 예산을 '인건비' 예산에서만 집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경상운영비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던 각종 수당 및 맞춤형 복지 등 예산을 모두 인건비 예산으로 이관·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실태가 반복될 경우 부당집행 금액을 철저히 환수하고, 필요 시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1999년 이후 도입한 연봉제가 실제 운용에 있어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금액이 자동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의 수준도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업적과 성과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 수준 확대 등 내실있는 연봉제 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 연구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했다(2010.12.20, 성과연봉제 표준지침). 이처럼 연구기관의 예산 편성 기준 등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제도 및 행태 개선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태 점검 시 문제된 사항은 2009년 604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86건, 2011년에는 52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연도별 연구기관 점검 결과²⁾】



한편 2012년도부터는 국무총리실 내에 정규 감사 조직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공식적인 감사 차원에서 기관의 운영상황을 상시 점검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했을 뿐 아니라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여 안정적인 연구기반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관련 지침이 연구기관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반영하지 않고 적용되고 있어 연구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혼선과 편법 운영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앞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운영 방향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4. 연구기관 평가 개선

국무총리실은 「출연연법」 제28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과 기관 경영 활동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관발전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 정부와 국민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면한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연구기관 평가제도는 연구성과 관리와 경영관리로 나누어 보완·발전되어왔다. 한 해 두 번 실시하던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연 1회로 줄여 평가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2011년)했으며, 평가대상 연구결과물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외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누진감점제를 도입하여 지적사항 불이행 시 추가감점을 적용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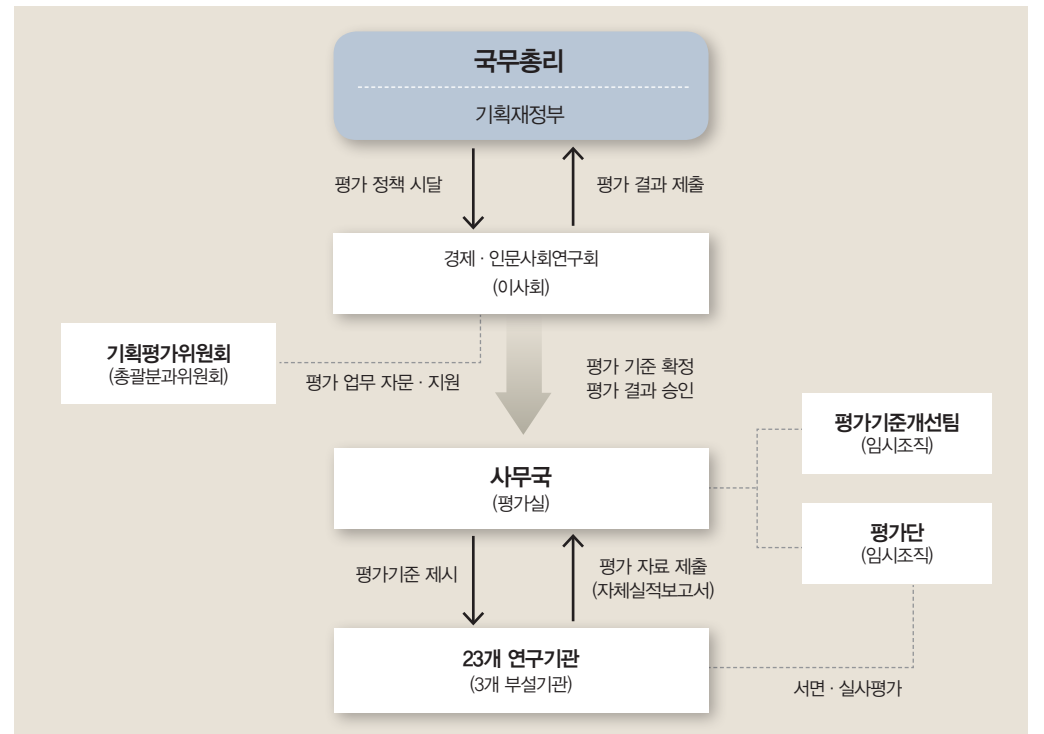
그리고 2012년에는 평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여 그간 경영관리 중심의 평가에서 연구성과와 품질을 중심으로 한 평가로 대폭적인 방향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기관평가와 기관장 리더십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평가지표 축소 및 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 평가부담을 덜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그간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으로 경영관리 분야가 상당수 정비되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연구기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연구보고서에도 고도의 연구윤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1년에는 연구윤리 평가를 최초로 도입했다. 연구기관이 생산하는 정책연구 보고서에 적용되는 연구윤리 기준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절심사 기준과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연구기관 연구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윤리 평가는 기관별로 세 편의 대표보고서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윤리 평가를 위해서는 연구보고서 검색시스템 및 연구윤리시스템 등 안정적인 시스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 운영 시 나타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기관 발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이나 기관이 원하는 경우 종합적인 기관 진단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6개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3개 기관, 2011년 통일연구원 등 9개 기관, 2012년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고, 각 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기관 체질개선 및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 평가추진체계】



2) 실태점검 결과 분야 상세내용
 - 예산, 회계: 퇴직적립금, 연구사업, 예산회계, 계약, 수당, 급량비,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차량관리, 부서운영
 - 인사복무: 인사조직복무, 출장, 출강 및 대외활동, 노무관리
 - 제도개선 및 기타: 평가, 계약제, 연봉제, 능률성과급, 자료관리

제3절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

1. 주요 국가정책 추진 지원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연간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수도 점차 증가했다. 2008~2011년에는 연평균 2,816건 규모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지난 5년간 매년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3,181건의 연구를 수행 중이어서 2012년도에도 예년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8~2011년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기본연구가 연평균 1,106건으로 전체 연구의 39.3% 수준이며, 각 부처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주하여 수행하는 과제는 1,710건으로 60.7% 수준이다.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 100만원)

연도	합계	기본연구(건수)	수탁과제연구(건수)
2008	320,992(2,644건)	105,889(964건)	215,329(1,680건)
2009	341,601(2,736건)	124,034(1,083건)	236,195(1,653건)
2010	369,536(2,853건)	148,639(1,146건)	220,897(1,707건)
2011	401,965(3,030건)	166,221(1,229건)	235,945(1,801건)
2012	456,652(3,181건)	198,301(1,184건)	258,351(1,997건)

특히 녹색성장, 공적개발원조(ODA), 공정사회 및 공생발전, 복지정책 등 국정 주요 아젠다에 대한 정책적 기초를 제공한 점은 주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아울러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정책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연구기관은 기본연구의 일환인 수시과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의 적시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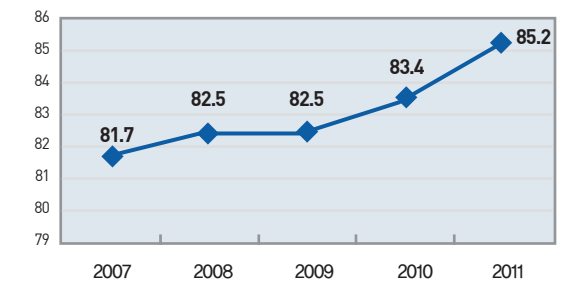
또한 각 연구기관은 정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내부에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총 20개 연구기관에서 88개의 각종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한국개발연구원의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인재선발관리센터, 대외경제연구원의 신흥지역연구센터,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직업정보센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센터들은 정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 또는 단순집행이 아닌 연구개발 노력이 가미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집중연구와 종합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정부의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성과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또는 관련제도와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일부 기관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연구하거나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등은 국제개발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한국 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연구기관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 대국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2005년부터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 수요자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3개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성과 및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를 발주한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계된 산학연 관계자,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10%)하고,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평점이 2007년 81.7점에서 2011년 85.2점으로 매년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서비스에 대한 각 부처, 학계 등 정책지식의 수요자들이 연구성과와 품질에 대해 점차 만족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이와 같은 성과에 비추어볼 때 그간의 연구는 주요 국정 아젠다를 비롯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기초연구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2. 융합연구 및 국가 중장기 전략 연구 강화

2009년 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미래전략 연구 및 중장기 국가 정책연구, 범정부 차원의 융합연구·협동연구 및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연구 기획·조정 기능과 더불어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간 정책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전략연구센터 설립 이후 협동연구사업 예산을 점차 확대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국가 정책연구에 대한 선정·지원 및 정책수립 근거와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했다. 협동연구 수행과 관련된 예산은 2008년도 71억원 대비 2012년도 115억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수행한 과제는 총 581개이다.

【연도별 협동연구 수행 현황】

(단위: 100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과제 수	35	72	152	154	168
예산규모	7,150	13,140	16,669	18,870	11,520

그동안 추진했던 협동연구는 주요 현안정책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중 한·중 FTA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 FTA 정책수립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개최된 국제석학 및 글로벌 전문가 포럼(Global Korea)을 통해 국가 주요 정책현안들에 대한 국내외 관점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2012년도에는 공생발전에 대한 범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고, 휴먼뉴딜 종합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 은퇴 등 급변하는 사회, 인구, 교육, 노동, 복지 등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아울러 녹색성장 종합연구를 통해 국가전략인 녹색성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중·장기 미래전략 제시 등 부처 간 정책 조정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또한 세계지역 연구를 5개년 계획의 단계별 심층연구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주요 전략지역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 기반 형성에도 기여했다.

제4절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23개 기관 중 서울에 잔류하는 4개 기관³⁾을 제외하고 20개 기관이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정부에서 승인한 각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포함한 14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자체청사로, 10개 기관은 임차청사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각 기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사의 매각대금으로 신청사 건설비용의 7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체청사와 임차청사로 구분했다.

세종시 단독청사로 이전하는 4개 기관⁴⁾은 세종시 내 연구시설용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입주할 예정이다. 이 기관들은 현재의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기부 채납하여 그 비용으로 청사이전을 준비 중이다. 2012년 12월 현재 4개 기관 모두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연내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임차청사로 이전하는 10개 기관⁵⁾은 세종시 내 연구시설용지에 입주하며, 임차청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하여 연구시설을 신축하고 25년간 임차기관의 임대료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국유지 위탁 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6년차부터는 연구·수익시설 임대료가 국고수입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약 283억의 국고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청사는 2014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턴키(turn-key)공사로 진행 중이며, 2012년 4월 시공·설계사 선정 이후 같은 해 9월 5일 기공식을 갖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완공 직후인 2014년 12월 총 2,241명의 연구인력이 이전하여 세종

시는 경제·인문사회분야의 국가 싱크탱크로서 연구·교육기능의 중심으로 한층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연구기관(6개)⁶⁾은 혁신도시 개발목적 및 주요 기능에 맞춰 이전이 추진되었다. IT·BT 등 정보통신 기술과 인력양성을 기반으로 한 테크노폴리스를 목표로 하는 충북 혁신도시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이 이전할 계획이

3) 서울잔류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통일연구원

4) 자체청사: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5) 임차청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 혁신도시 이전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다. 또한 농업중심지로서 농·생물산업 육성 등 농업구조 고도화를 견인할 전남혁신도시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에너지협력체제 및 국가에너지 정책의 구심도시를 목표로 육성되는 울산혁신도시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항만물류 및 국제수산유통의 거점을 목표로 육성되는 부산동삼혁신도시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각각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2012년 12월 현재 설계사 선정 및 설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2014년 12월까지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 먼저 청사 신축비용 마련 문제이다. 단독청사로 이전하는 연구기관은 종전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인한 매각지연으로 청사 신축비용 마련이 어렵게 되었다. 연구기관들은 우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아 청사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나, 차입이자 비용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의 발생으로 연구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또한 연구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점은 정주환경에 대한 문제이다. 혁신도시와 세종시 모두 새롭게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거, 교육, 편익시설 등이 부족하여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속한 정주환경 마련을 위하여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연구인력 기반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5 정부 정책홍보기획 기능 강화

제1절 정책홍보 기능강화 추진배경

1. 정부 출범 당시의 국정홍보 추진체계

이명박 정부의 국정홍보 추진체계는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홍보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2008년 2월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서 기존의 국정홍보처는 폐지되고 국정에 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다. 이와 같은 개편은 기존의 국정홍보처가 본연의 기능인 정부정책 홍보보다 언론규제 등에 치우치고 각 부처의 홍보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부처 자율홍보’로 국정홍보 업무 추진기조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정홍보에 관한 총괄부처가 없어짐에 따라 과거 국정홍보처에서 담당하던 부처 정책발표 사전협의나 정책고객 통합홍보 등 정부 부처의 홍보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조정기능도 함께 폐지되었다.

2. 부처 간 유기적 협력홍보 필요성 대두

이러한 ‘부처 자율홍보’ 기조 속에서 약 2년간 국정홍보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부처마다 업무 특성에 맞게 다양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되기도 했지만 친서민정책, 저출산대책, 국격제고, 4대강 살리기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범정부적으로 일관된 기조하에 긴밀한 협력홍보가 필요한 아젠다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처 간 조정기능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수행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각 부처 대변인이 참석하

는 대변인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었지만 상급 부처가 아닌 문화부가 각 부처의 정책홍보 현안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홍보기법 컨설팅 등 지원기능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일관된 기초하에 부처 간 협력홍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긴밀한 조정·조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들이 기획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면서 과제의 취지나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여론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어서 주요 정책홍보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유기적인 홍보 조정·조율이 절실히 필요하던 시기였다.

3. 국무총리실 정책홍보 총괄·조정 기능의 신설

이와 같은 문제인식 속에서 정부 내에서는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이 국정홍보를 기획하고 각 부처의 홍보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논의결과는 2009년 말 결실을 맺어 국무총리실 직제 개정을 통해 국(局)단위인 정책홍보기획관실이 국무총리실에 신설되기에 이른다. 2009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국무총리실 직제에 의하면 정책홍보기획관실은 ‘국정홍보의 기획과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홍보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제2절 정책홍보기획관실의 출범과 주요 업무

1. 정책홍보기획관실의 출발

국정운영1실 산하에 신설된 정책홍보기획관실은 1기획관, 1과(정책홍보기획과), 1팀(정책홍보협력팀)에 총 11명 규모의 인력으로 출범하였다. 홍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나급)인 기획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홍보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2명, 4·5급 및 5급)을 이체받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의 홍보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도 3명을 충원하도록 했다. 2010년 1월 2일자로 우선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 3명이 정책홍보기획관실에 배치되어 산과 역할을 수행했고, 문화부 인력의 이체, 개방형 직위인 정책홍보기획관의 임용, 부처 파견인력 및 전문계약직 충원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동년 3월 중순에 이르러 계획된 인력의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국무총리실로서는 미지의 분야에 홍보라는 이름으로 모인 한 무리의 외인부대가 탄생한 셈이다.

2. 정책홍보 : 미지의 땅을 개척하다

2010년 1월 정책홍보기획관실 신설과 함께 만들어진 업무계획에 의하면 크게 3가지 업무추진 방향과 5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조직의 비전과 미션이 담겨 있다.

업무추진 방향은 첫째, 국가적 정책의제에 대한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홍보 업무와 관련한 부처 간 소통 및 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홍보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실-국무총리실-문화부-각 부처로 이어지는 국정홍보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화하여 홍보업무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방향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했던 업무는 부처 간 정책홍보 협의·조정 추진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체로 ‘부처 대변인협의회’를 2010년 1월부터 개최했다.

또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지지도 제고를 위해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각 부처와 함께 실행해나가는 일도 국무총리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밖에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등에 근거한 이슈 분석, 정부정책과 관련한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홍보 지원, 각 부처 정책홍보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주요한 업무로 설정하고 추진했다. 국무총리실의 정책홍보 기능 신설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문화부 홍보지원국 등 기존의 국정홍보 총괄·지원 기능에 더해 중복이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부처 입장에서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정책홍보기획관실의 업무범위 설정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국무총리실은 청와대 홍보수석실 및 문화부 홍보지원국과 긴밀하게 협의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 협의채널을 가동함으로써 무리 없이 당초 목표했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다.

제3절 정책홍보 관련 주요 업무 추진성과

1. 부처 대변인협의회를 통한 정책홍보 협의·조정 활성화

국무총리실에 정책홍보기획관실이 신설된 후 가장 먼저 추진했던 업무가 부처 대변인협의회를 운영하는 일이었다. 대변인협의회는 정부정책홍보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각 부처 대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범정부 정책홍보 기조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을 협의·조율하는 한편, 정책홍보 업무와 관련된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는 일종의 소통채널로 활용되었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주재하고 20여 명의 주요 부처 대변인과 청와대 홍보수석실 및 문화부 홍보지원국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회는 2010년 1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국무총리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될 정책홍보 조정 및 지원업무 추진방향이 제시되었고, 각 부처는 친서민정책, 4대강 살리기 등 범부처적으로 협력할 국정과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소관 정책의 홍보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출발한 부처 대변인협의회는 격주단위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했으며, 2012년 1월 13일 마지막 회의까지 총 47차례 개최되었다. 회의는 먼저 지난 2주간의 국정관련 이슈를 되돌아보면서 홍보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계획 또는 홍보 방향에 관하여 참석자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함께 대국민 소통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끝으로 홍보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가 함께 공유하거나 협조할 사항들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평균적으로 5~6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대변인협의회를 주관하면서 초창기에 각 부처 대변인들 사이에서는 다소간의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으나, 회의가 횡수를 거듭하면서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공유하고 평소 대변인들이 홍보일선에서 고민하는 어려움들을 진솔하게 내놓고 토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부처 대변인협의회 개최 실적 】

차수	일시	주요 논의사항
2010년도		
1차	2010.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 조정·지원업무 추진방향
2차	20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계기 민생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방안 ■ 온라인(인터넷) 공보대응 우수사례 공유
3차	2010.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범 2주년 계기 홍보계획 ■ 국격제고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차수	일시	주요 논의사항
4차	201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정부 2년 성과 홍보방안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정책홍보 수범사례 : 미디어캘린더(기재부) 등
5차	2010.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출범 2주년 국정성과 지속 홍보방안 무상급식 관련 쟁점 등 상황 공유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계기 홍보방안
6차	2010.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방안 G20 정상회의 홍보 추진방향 뉴미디어 활용 홍보전략 및 사례 공유
7차	2010.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함 침몰 관련 상황 공유 구제역 관련 상황 및 대책 공유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홍보계획
8차	2010.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명선거 추진상황 및 홍보계획 인터넷 포털 제휴 정책홍보 사례 소개
9차	2010.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중 정상회담 관련 상황 공유 타임오프제 관련 상황 공유 나로호 발사 홍보계획
10차	2010.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홍보상황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토의
11차	2010.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60주년 계기 사업 추진상황 한미/한·EU FTA 추진상황 공유 장애연금 도입 관련 이슈 공유
12차	2010.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홍보방안 정책홍보 캘린더 활용방안
13차	2010.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G20 정상회의 홍보 추진상황 친서민정책 홍보 추진계획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상황공유
14차	201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햇살론' 추진상황 및 홍보계획 가격표시제(open price) 관련 상황공유
15차	201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서민정책 종합 홍보방안 통일세 관련 상황공유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추진상황
16차	201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대책 관련 홍보방안 쌀 수급대책 및 소비 촉진방안 공유 2011년 예산안 및 중점 홍보방향
17차	2010.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8·29 부동산 대책 효과분석 및 전망 한-EU FTA 후속대책 및 홍보방안 정책포털 및 교통방송 활용 정책홍보 추진방안

차수	일시	주요 논의사항
18차	2010.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고용전략 2020 및 청년고용대책 홍보방안 저출산 대책 홍보방안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홍보방안
19차	201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추진상황 이산가족 상봉 진행상황 및 후속 계획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차	2010.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 * 중앙부처 대변인 워크숍과 병행 개최
21차	201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평도 포격 도발 상황공유 및 홍보방안 한미 FTA 추가협상 관련 전략적 홍보방안
22차	2010.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 홍보상황 및 추진계획 2011년 예산안 처리 관련 상황공유 비상상황 시 취재지원 개선방안 토의
2011년도		
1차	20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국민소통 강화방안 정부출범 3주년 홍보기조 인터넷 유언비어 처벌조항 위헌 관련 후속대책
2차	201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SI 관련 상황 및 홍보방안 이명박 정부 3년 성과홍보 추진계획 무가지 활용 정책홍보 활성화 방안
3차	201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출수 등 2차 오염대책 및 홍보방안 공정사회 구현 종합 홍보방안 FTA 홍보 추진상황 및 임시국회 대비 홍보계획
4차	2011.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은행 사태 관련 상황 및 홍보방안 천안함 피격 1년 계기 안보의식 제고방안 정부 출범 3년 관련 언론반응 및 홍보상황
5차	2011.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절약 관련 상황 및 홍보방향 공유 천안함 피격 1주기 홍보방안 ODA 범정부 종합 홍보계획
6차	2011.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대지진 관련 원전 및 식품안전 상황공유 구제역 종합대책 관련 여론상황 및 후속 홍보방안 부처 정례 브리핑 추진계획
7차	201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 안전 종합 홍보방안 일본 교과서 검정 관련 대응기조 및 홍보방안 트위터 여론수렴 서비스 활용방안
8차	2011.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EU/한미 FTA 비준 관련 홍보전략 토의 서민금융활성화 종합대책 홍보방안 등록금 투쟁 관련 상황 및 대책 공유

차수	일시	주요 논의사항
9차	201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 안전점검 결과 발표 관련 홍보방안 5·1 부동산대책 관련 홍보전략 토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 홍보방안 공유
10차	201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프কে를 고엽제 매립의혹 관련 상황 공유 만 5세 공통과정 홍보 추진방향 도로명 주소 시행 관련 홍보방안
11차	201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프কে를 고엽제 매립의혹 관련 홍보방안 '반값 등록금' 관련 홍보기조 및 방안 호국보훈의 달 홍보 추진계획
12차	2011.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사회 중점과제 추진상황 및 홍보계획 여름철 에너지 절약 관련 홍보 추진방안
13차	201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홍보 추진방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홍보방안 한-EU FTA 발효에 따른 홍보대책
14차	2011.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 북한 도발위협과 한반도 주변 정세 공유
15차	2011.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사회 1년 계기 종합 홍보방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방안 4대강 개방행사 추진계획
16차	2011.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연착륙대책 관련 정부입장 공유 공생발전 공감대 형성방안 추석 계기 홍보 추진방향
17차	2011.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소득세 세율조정 관련 정부입장 공유 추석 연휴 계기 정책홍보 성과평가 국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정책홍보 사례
18차	201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예산안 홍보방안 토의 9·15 정전사태 관련 공보대응 평가 UN 사막화방지회의의 관련 홍보방안
19차	2011.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 이전부처 브리핑실 배치방안 논의 온라인대변인제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
20차	2011.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월 중점 홍보방향 및 점검사항 논의 * 4대강 이포보 현장 참관 및 회의 개최
21차	2011.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절기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전기절약 홍보 구제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계획 범정부 온라인 소통강화 전략
22차	2011.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 비준 이후 홍보대책 12월 중점 홍보방향 및 점검사항 복지정책 제감도 제고 추진방안

차수	일시	주요 논의사항
23차	201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 홍보 추진상황 점검 중편채널 개국에 따른 홍보 지원방안 * 중앙부처 대변인 워크숍과 병행 개최
24차	2011.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일 사망 관련 정부입장 공유 2012년 부처 업무보고 홍보 중간점검 정책네이밍 사례집 발간 및 공유
2012년도		
1차	2012.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부처 업무보고 홍보 점검결과 한미 FTA 농어업분야 추가대책 홍보방안 설 계기 홍보방안

2. 주요 국정 아젠다에 대한 홍보기획 기능 강화

일반 국민에게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홍보기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둘러싼 홍보여건 또는 상황을 분석하고 가용한 홍보수단이나 자원을 파악한 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구체적인 홍보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물론 홍보실행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다시 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하는 일도 넓은 의미의 기획에 포함된다.

국무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홍보기획의 대상은 전 부처 또는 다수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큰 국정 아젠다로 그 범위가 한정되었다.

예를 들면 정부출범 2주년, 3주년 등과 같이 의미 있는 계기에는 그동안 정부가 일해온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미리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 일관된 기초하에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홍보기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용한 자원, 여건에 맞게 각 부처의 홍보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실행계획 형태로 만드는 범부처 기획기능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실은 이러한 국정 아젠다에 대한 홍보기획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국무총리실이 정책홍보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25개월간 국정현안과 관련된 20여 건의 홍보기획서가 마련되었고, 다수의 부처가 기획서에 제시된 방향에 따라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대국민 소통에도 기여했다.

【국정 현안 관련 주요 홍보기획 사례】

① 정부출범 2주년 성과 홍보방안(2010년 2월 수립)

• 2010년 2월 25일 정부출범 2주년을 앞두고 '안정적 국정운영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체적 정책성과 제시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확보한다'는 홍보목표를 설정했다. 정부가 2년간 달성한 핵심정책 성과를 콘텐츠로 하여 치밀한 매체계획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홍보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홍보 아젠다로는 경제위기 극복(기재부), 교육개혁(교과부), ODA(외교부), 아동성폭력 예방(여가부), 녹색성장(환경부), 플랜트 수출성과(지경부), 농협개혁(농식품부) 등을 선정하고 집중 홍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홍보성과를 점검하고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가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② 친서민정책 종합 홍보방안(2010년 8월 수립)

•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가 높지 못하다는 상황 인식하에 부처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시기별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 1단계(2010.8)로 친서민정책에 대한 긍정적 프레임 형성을 위해 통합 브랜드 개발, 장·차관의 타운미팅(Town Meeting) 강화, 주요 계기 시 서민친화적 메시지 전파에 주력하도록 했으며, 2단계(2010.9~추석연휴)에는 추석명절을 정부의 친서민 기조 확산을 위한 계기로 활용키 위해 친서민 관련 정책토론회, 정부매체 및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민생정책홍보, 직장인·주부·네티즌 등 타깃별 홍보강화에 주력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추석연휴 이후)에는 정부의 진정성 부각을 위해 국민체감형 사례발굴 및 홍보, 장·차관 민생현장방문 지속 등에 역점을 두었다.

③ 규제개혁 성과 종합 홍보방안(2010년 10월 수립)

• 많은 규제개혁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엇갈린다'는 문제의식하에, 성과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홍보계획을 수립했다.

• 법정부 홍보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홍보 컨트롤 기구 설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타깃별 차별화 홍보, 성과홍보 및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 체감도 높은 생활접점 홍보 강화 등 홍보방안을 제시했다.

④ 이명박 정부 국정홍보 전략(2010년 11월 수립)

• 공정한 사회·친서민 등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가 설정됨에 따라 이를 홍보적 관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4년차·5년차 홍보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선진화 입지를 다진 성공한 정부'를 홍보목표로 '더 큰 대한민국'을 통합메시지로 설정하고 국민과의 소통·공감, 갈등이슈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홍보방안을 마련했다.

• 1단계(2010.11~2011.2)에는 '더 큰 대한민국' 통합마케팅,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초점을 두었고, 2단계(2011.3~12)에는 이명박 정부 핵심 국정성과 브랜드화, 뉴미디어를 활용한 젊은 층과의 소통강화, 남북관계 등 안보 리스크 관리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마지막 3단계(2012~)는 국정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한반도 미래 평화비전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⑤ 한미 FTA 추가협상 홍보방향(2010년 11월 수립)

• 이미 체결된 협정을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수정하는 데 따른 부정적 여론확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익균형·국익 극대화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이 절실했다. '굴욕협상', '밀실협상' 등 부정적·편향적 프레임을 극복하고 추가협상의 긍정적 프레임 형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 필수요한 오해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전문가를 활용한 객관화된 홍보, 이해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 협상진행상황에 관한 투명한 브리핑, 대외발표 창구 일원화, 긍정효과·보안대책에 대한 지속적 확산 도모에 관계부처의 홍보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⑥ 설 연휴 대비 구제역대책 종합 홍보방안(2011년 1월 수립)

• 구제역이 확산일로에 있는 와중에서 설 연휴(2011.2.2~6)를 계기로 대규모 국민이동과 함께 구제역의 추가확산 및 여론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 방역 노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 및 축산농가의 불안심리 해소를 홍보목표로 설정했다.

•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이동을 고려하여 「고향 가는 길」 배포, 지역단위 국민행동요령 홍보강화, 반상회보 등 국민생활 밀착 매체 활용 홍보, 공무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⑦ 공정사회 구현 종합 홍보방안(2011년 1월 수립)

•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지속화를 위해 친서민·규제개혁·일자리 창출 등 후반기 주요 국정 아젠다의 상위개념으로 공정사회를 포지셔닝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 공정사회 통합브랜딩 개발, 분야별 토론회·세미나 개최,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공정사회 담론 확산, 언론사 공동기획 퍼블리케이션 강화 등 주요 홍보프로그램에 2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했다.

⑧ 2011년 정책홍보 활성화 방안(2011년 1월 수립)

•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그간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년간 '일 잘하는 정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홍보방향의 수립 필요성 제기되었다.

• 주요 방안으로는 주요 국정이슈의 범정부적 협력홍보 강화, 안보·재난 등 돌발이슈에 대한 유기적 대응 체계 강화, 국민 각계각층과의 세분화된 홍보채널 및 뉴미디어 활용 활성화, 종편 등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유기적 대처 등을 제시했다.

⑨ 2011년 설 연휴 주요 현안 대국민 홍보계획(2011년 1월 수립)

• 설 명절을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각 부처의 홍보노력들이 서로 중첩되거나 혹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을 두어야 할 이슈를 선정,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홍보계획·아이템들을 조율했다.

• 주요 현안 이슈로는 ①구제역·시 확산 방지 ②한미 FTA 기대효과 ③이명박 정부출범 3년 성과 ④4대강 살리기를 선정하고 TV·라디오 캠페인,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시설 및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를 부처 간 역할분담하에 실시토록 했다.

⑩ 정부출범 3주년 성과 홍보방안(2011년 1월 수립)

• 이명박 정부출범 3주년을 계기로 정부 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 및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자신감 고취, 공정사회 구현·서민생활 안정·안보태세 강화 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는 정부 모습 부각을 홍보목표로 선정했다.

•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설 명절 등 계기별 홍보전략과의 유기적 결합을 피하면서도 범정부적 홍보활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①사전 분위기 조성기(~2012.1) → ②생활밀착형 정보제공 강화기(설 명절 전후) → ③성과 평가 확산기(정부 3주년 전후)로 나누어 단계별 홍보전략을 수립했다.

⑪ 2011 주요 과제별 소통강화 방안(2011년 3월 수립)

• 2011년은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대형 정치이슈가 없어 정부가 주요 국가 아젠다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해라는 판단하에 주요 아젠다별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했다.

• 대상 아젠다로는 ①4대강 살리기 사업 ②한-EU/한미 FTA 비준 ③공정한 사회 구현 ④복지논쟁 대응 ⑤국가안보 확립 등을 선정, 분기별로 주요 관련 계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희망의 숲 조성 사업(3월), 투르드 코리아(4월), 4대강 수질예보 시스템 가동(8월), 4대강 분류 준공(10월) 등 주요 이벤트에 맞추어 홍보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홍보방향을 제시했다.

⑫ 에너지 절약 종합 홍보방안(2011년 3월 수립)

- 에너지 위기경보가 '관심'→'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종래의 산발적·단편적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관계 부처가 협력하는 지속적인 연간 홍보프로그램 가동을 통해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물론, 녹색성장 등 상위 아젠다와의 연계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우선 단계적으로 2011년 상반기 중 직관적이고 간명한 핵심 메시지 개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홍보, 언론활용 기획홍보, 정부의 솔선노력 부각 등을 추진토록 했고, 장기적으로는 월별 에너지 절약 실천과제 선정 및 홍보, 에너지 절약 동참 캠페인 전개, 학생·주부·직장인 대상 순회교육, 지역단위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 홍보강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⑬ 공정사회 1주년 계기 전략적 홍보방안(2011년 7월 수립)

- '공정사회' 화두 제시 이후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기존의 나열식·일방적 홍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저축은행 사태 등 불공정 이슈로 인해 훼손된 정부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정과제 등 집중 홍보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공정사회 추진 저해요인 차단, 국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홍보방향을 제시했다.
- 단기 방안으로는 언론사 기획홍보, 공정사회 국민토론회 개최, 성과 홍보책자 배포 및 공익광고 추진 등을 담았으며, 장기 방안으로는 장기 로드맵하에 집중 홍보과제 지속 추진, 대국민 여론조사 정기 실시, 공정사회 통합브랜드 확산, 분야별 토론회 개최, 오피니언 리더 등과 연계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방안(2011년 7월 수립)

- 동계올림픽 유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공 시 국민적 자신감 고취를 위한 방안 강구와 함께 실패 시 이슈관리 방안을 Two-Track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기본적으로 대통령·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모습을 부각, 일체감을 갖도록 추진되던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결과 발표 전 사전홍보로서 유치단 출국행사 등을 통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대통령의 현지 행보 부각, 기획보도 추진에 주안점을 두었다.
- 개최지 선정 결과별로 성공 시에는 축제 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민통합 유도를 위해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국무총리의 강원도 현장 축하행보 등을 준비토록 했으며, 기타 외신순환 홍보 및 국민참여 이벤트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강원도민 위로 및 격려 메시지, 강원지역 파장 최소화를 위한 사후대책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메시지 확산방안 등도 병행하여 마련했다.

⑮ 2011년 추석 연휴 계기 종합 홍보방안(2011년 9월 수립)

- 이명박 정부에서 '공생발전'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한 직후인 2011년 추석 명절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이를 위해 논리자료집 제작 및 공무원을 통한 전파, 언론사 연계 기획홍보, 공생발전 온라인토론회 등을 기획했다.
- 또한 추석명절 민생 챙기기의 일환으로 민생안정종합대책(기재부)·비정규직 종합대책(고용부) 등 유사 친서민 대책들을 시기적으로 집중 발표토록 했으며, 국무총리를 비롯 32개 부처 장·차관의 민생현장 홍보 강화 등에도 공을 들였다. 그리고 한미 FTA·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도 병행토록 했다.

⑯ 월스트리트 시위 대응 홍보방향(2011년 10월 수립)

- 월가 시위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국내에서도 한미 FTA·반값등록금·비정규직 문제 등과 연결시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시도되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시도들이 국론분열 및 정부정책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적인 이슈관리가 필요했다.
- 대응전략은 이슈의 파급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우선 초기단계에는 '이론적 토대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이슈 확산단계에 접어들면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내 이념갈등·계층갈등·세대갈등·사회갈등의 축진제가 되지 않도록 사회주도층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강화, 사회갈등 심화 대비 대응프레임 개발, 언론 등을 활용한 객관적·합리적 토론 유도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⑰ 복지정책 체감도 제고 홍보방안(2011년 11월 수립)

-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인 복지논쟁 가속화 및 월가 시위를 계기로 재점화 조짐이 보이는 복지 이슈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위한 정보를 정부가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 현재의 복지수준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최대의 복지수준'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홍보목표로 정하고, 시리즈 형식의 사례중심 홍보를 집중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홍보수단(온·오프라인) 및 홍보대상(국민 전체·일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범주를 나누고 한 유형당 2개 정책씩 총 8개 정책(복지정보 제공, 행복 e음, 나눔문화 확산, 장애인 연금·활동지원제도, 희망키움 통장, 보육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양무자 소득기준 완화)을 선정하여 2011년 11월 중순부터 2012년 설 명절기간까지 순차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⑱ 2040세대 현상과 대처방안(2011년 11월 수립)

- 10·26 재보선 결과로 나타난 2040세대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정부정책에 대한 냉소적 태도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40세대의 분노원인(정치권의 무능, 상대적 박탈감), 소통방식(공감형 소통)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 2040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의 진정성 강화, 눈높이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20대(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대책), 30대(물가 안정, 전월세시장 안정, 보육·교육), 40대(자녀교육, 노후대책) 각 세대별로 관심도 높은 정책을 선정, 타깃별 정책별로 차별성 있는 홍보방안의 구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⑲ 한미 FTA 비준계기 종합 홍보계획(2011년 11월 수립)

- 국회비준동의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 차이가 노정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한미 FTA에 대한 지지 공고화, 유언비어 등 부정적 여론 확산 사전차단을 홍보목표로 설정했다.
- 국무총리실·기재부 총괄하에 부처별 소관분야 공세적 홍보, 생활밀착형 콘텐츠 홍보 강화, 비(非)이해관계자 대상 전방위 홍보 등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정부광고, 홍보간행물 배포, 방송 기획보도,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등을 실시토록 했다.

⑳ '군 복무기간 2개월 동결' 홍보전략(2010년 12월 수립)

- 군 병력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여건변화로 인해 군 복무기간을 2개월로 동결함에 따라 정책일관성 훼손 등 비판에 대하여 사과-설득-새로운 관점 제시로 이어지는 적극적 홍보전략을 제시했다.
- 젊은층 대상의 차별화된 온라인 홍보, 국방장관 신병훈련소 방문, 언론 기획홍보, 정부매체 활용 통합홍보를 통해 지지기반 확충에 주력하도록 했다.

3.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홍보지원

국무총리실이 정책홍보 총괄기능을 수행하면서 가지게 된 장점의 하나는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정보가 모이는 접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별 부처보다는 주요 국정현안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부처 TF 등 현안 대응체계가 국무총리실에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대응 측면의 관리·지원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선 국정과 관련된 현안이슈가 발생될 경우, 언론보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거나 대국민 소통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작업들이 주로 추진되었다.

【주요 국정 관련 현안이슈 분석 사례】

① 교육개혁 추진관련 언론보도 분석 및 향후 중점홍보 방향(2010년 4월 수립)

- 대통령이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무총리가 교육개혁을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등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홍보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 우선 언론보도분석 결과(2008.3.1~2010.4.15, 10개 중앙일간지)를 바탕으로 EBS 수능강의와 같은 긍정평가 과제중심의 성공사례 발굴,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쟁점과제에 대한 적극적 설명논리 개발, 농어촌 등 소외계층 지원정책의 현장사례 기획홍보 및 메시지 개발 등을 정책홍보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 그리고 6개 분야 총 2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개혁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언론의 긍정적·부정적 평가내용을 적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과제별 홍보방향을 제시했다.

② 국가유공자 및 보호 관련 사회인식 제고방안(2010년 5월 수립)

-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부 내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 이를 국가 전체적인 공감대 확산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캐치프레이즈 공모 및 온라인 태극기 달기, 희망 스티커 부착 캠페인, 천안함 유가족 공개편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희생자 추모행사 강화, 현충일 행사 확대시행 등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③ 정부 저출산대책 관련 상황분석 및 전략적 홍보방안 제언(2010년 7월 수립)

-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창출 및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책호응도 및 인지도가 낮은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홍보전략을 제언하고자 했다.
- 그 결과로서 계층별·직업별·연령별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프로그램 개발, 저출산 원인별·매체별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방안 등을 제언했다.

④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관련 최근 언론동향(2011년 7월 수립)

- 대학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지속 제기됨에 따라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는 시도를 했다.
- 언론은 해법으로서 정부지원 확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한 등록금 부담완화, 대학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장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구체대책 마련, 학생·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설득노력 및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긴급하게 대응·관리해야 할 현안이 발생한 경우, 관련 TF 등에 참여하여 홍보 측면에서 언론 및 여론 동향을 수시로 분석하고 대국민 소통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천안함 피격사건(2010.3), 연평도 포격도발(2010.1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2011.3),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2011.3), LH공사 지방이전 및 과학벨트 입지선정(2011.5),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의혹 대응(2011.5),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2011.9), 김정일 사망(2011.12) 등이 주요한 홍보대응 지원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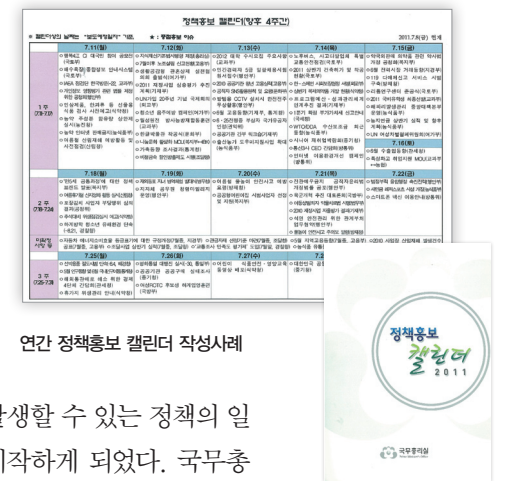
4. 정책에 대한 합리적 소통문화 조성 노력

정책홍보기획관실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발표 일정을 종합하여 캘린더 형식으로 부처 간 공유하고 일정 등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정부 정책홍보의 효과성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수시로 국정상황을 분석해보고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하여 홍보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했다.

1) 정책홍보 캘린더 작성·공유

정책홍보 캘린더는 각 부처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정책이 발표 단계에서 발표시점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부족하여 다른 관심이슈에 묻혀버리거나 타 부처의 정책발표 일정과 겹쳐 서로 홍보효과가 상쇄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작성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부처에서 서둘러 정책을 발표하다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 훼손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지는 취지로도 시작하게 되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각 부처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매주 금요일에 향후 4주간의 정책발표 일정을 미리 취합하고 주요한 발표사항을 캘린더 형식으로 작성하여 각 부처와 함께 공유했다. 각 부처에서는 유관부처의 정책발표 일정을 보고 필요한 경우 사전 조율을 통해 발표 시기·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정책발표 일정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협의·조정하거나 대변인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는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각 부처 입장에서는 4주 후까지의 정책발표 계획을 전략적인 시각으로 수립할 수 있었고, 유관



연간 정책홍보 캘린더 작성사례

부처와의 발표계획 조율을 통해 대국민 정책홍보의 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매년 연간단위 정책홍보 캘린더를 제작·공유함으로써 각 부처가 정책홍보 업무를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 국민소통자문단 운영

국민소통자문단은 긴급한 국정현안 발생 시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 또는 홍보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하고 주요한 정책 아젠다에 대한 대국민 전달력 제고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2010년 4월 26일 최초로 구성되었으며, 총 11차례에 걸쳐 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학계, 언론계, 광고업계, 온라인 등 홍보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16인이 참여하여 정부의 국정운영방향 전반, 주요 현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기조와 구체방안 등 유용한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했고,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대국민 소통강화방안을 조언하기도 했다.

【 국민소통자문단 운영실적 】

차수	일시·형식	주요 내용
1차	2010.4.26 국무차장 주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국정운영방향 ■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정현안 관련 홍보방안 제언
2차	2010.10.22 국무총리실장 주재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홍보 추진방향 및 정부홍보시스템 개선방안 ■ 신임 국무총리 핵심 정책 아젠다 제언
3차	2010.11.19 서면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국정운영 방향, 핵심 키워드, 국민여론 동향
4차	2011.3.23 국무총리 주재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한 국무총리의 민생행보 추진방안, 정책홍보시스템 개선방안, SNS 활용 소통 강화방안
5차	2011.5.6 국무총리실장 주재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방향, 저축은행 등 주요 국정현안 관련 여론,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 전달방식 개선
6차	2011.10.25 국무총리실장 주재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가 시위' 관련 국내영향 및 전망, 정부 대응방향 ■ 주요 국정 아젠다 관련 대국민 소통 강화방안
7차	2011.11.9 서면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세대 소통과 관련하여 이들의 소통방식, 맞춤형 정책홍보 추진방안, 국정홍보 시사점 및 제언
8차	2011.11.8 국정운영1실장 주재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6 보궐선거에 미친 소셜미디어 소통의 영향력, SNS의 부작용 및 규제 가능성

차수	일시·형식	주요 내용
9차	2011.12.1 서면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국정운영 방향, 핵심 키워드, 국민여론 동향
10차	2011.12.5 서면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비준 이후 홍보 여건 및 방안

5. 정부의 정책홍보 역량 제고

정책홍보기획관실에서는 각 부처 대상 정책홍보 업무평가, 다양한 정책홍보 기법의 전파, 홍보 업무 관계자들 간의 워크숍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홍보 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1) 정책홍보업무 평가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업무평가 영역 중 특정평가의 하나로서, 각 부처의 정책홍보업무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씩 했다. 총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정책홍보업무 기획/활동/성과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국무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실과 문화부 홍보지원국이 협력하여 '민관합동 평가단' (총 25~30명 규모)을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의 기본적인 취지는 각 부처의 홍보업무 추진실적을 기획에서부터 성과까지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사례에 대한 부처 간 벤치마킹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홍보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었다.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정책홍보 평가를 수행하게 되면서 범부처적인 주제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부처들이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도록 평가지표를 설계했다. 이는 정부정책홍보의 통합성·일관성을 확보하고 각 부처의 창의적인 홍보활동을 독려하는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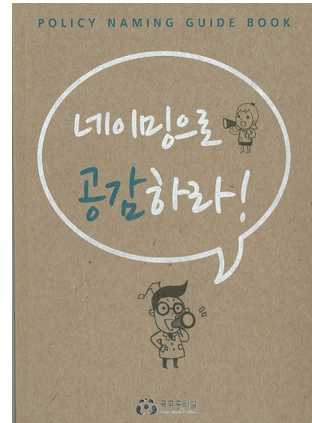
2) 기타 정책홍보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들

국무총리실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홍보 역량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홍보

기법이나 전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일목요연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 함께 공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변화된 정책홍보 환경 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무회의에서 토론함으로써 각 부처 리더들의 인식을 제고했다. 이 밖에 정책 네이밍의 중요성과 우수·미흡 사례들을 분석하여 가이드북으로 발간하기도 했으며, 2011년 9월 15일 국가적인 정전사태를 계기로 국가핵심기반분야에 특화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화부와 함께 주기적으로 대변인·홍보담당관 등 각급 관계관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홍보 분야에 업무 관계자 간 소통과 함께 최신 홍보기법 등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책 네이밍 가이드북
「네이밍으로 공감하라」 발간(2011.12)

【 정책홍보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

① 뉴미디어 활용 정책홍보 활성화 방안(2010년 4월 수립)

-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 등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정책홍보의 필요성과 그 구체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각 부처와 해외의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뉴미디어 활용 정책홍보 기반 강화, 사이버 홍보 전담제 운영 및 이해도 제고, 주요 현안 홍보에의 활용방안 등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제시되었다.
- 동 방안은 2010년 4월 6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고, 국무위원 간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② 전략적 정책브랜드 네이밍 개발(2010년 11월 수립)

- 정부가 생산하는 정책의 브랜드 또는 네이밍의 파급효과와 중요성을 기초로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외국의 정책브랜드(네이밍) 우수사례와 함께 각 부처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 브랜드 또는 네이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브랜드 네이밍 개발전략을 보여주었다.

③ 국가 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2011년 11월 수립)

- 2011년 9월 5일 발생했던 전국적인 정전사태 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핵심기반분야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언했다.
- 주요 개선방안으로 위기단계별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명확화, 부서 간 공조 강화 및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절차 명확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체 다양화, 위기관리 담당자 교육·훈련 체계화 등을 제시했다.

제4절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홍보 기능의 재편

2011년 12월부터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그동안 국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책홍보 기능개편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개편방향은 국무총리실의 정책홍보 기획·총괄 기능을 문화부로 일원화하여 기존의 홍보지원국을 국민소통실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개편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점은 시기적 요인에 기인한 정책홍보 수요의 변화이다. 임기 중반기는 다양한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홍보기획 또는 부처 간 협의·조율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마지막 해에는 그동안의 국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활용하여 알리는 업무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청와대부터 홍보수석실로 관련 업무를 일원화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문화부 국민소통실로 정책홍보 업무가 일원화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로 국무총리실의 정책홍보기획관실이 문화부로 이관되었고, 관련 인력도 함께 일괄 이체되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본다면 국무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실은 신설되어 약 2년간 존속하면서 정부 내에서 취약해져 있던 정책홍보 기획·협력·조율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운영 당시 정부가 필요로 했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환경변화에 맞추어 발전적으로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292 제1장 주요 정책의 기획·조정

494 제2장 공공갈등의 관리

1 주요 정책의 기획·조정

제1절 일반 행정·외교안보 분야

1.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건국·호국, 산업화, 민주화 등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목표를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도 동시에 달성한 ‘성공의 역사’로 부각함으로써 전 국민과 해외 700만 한인동포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고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60년의 출발점으로 삼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범국민적 기념행사 및 축제를 기획했다.

1)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구성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현승종 고려대 이사장,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를 두고 건국 60주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종합계획 수립, 각종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행사지원 등의 업무를 심의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실무 추진기구로 국무총리실에 건국60주년기념사업단(단장 : 고위공무원 가급, 관계부처 파견)을 구성, 위원회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지원하는 등 기념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진행했다. 위원회는 조정 회의를 통해 부처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유사사업은 통합 추진하며, 새로운 사업발굴을 독려했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주요 기념사업은 크게 <건국의 의미 상징화 사업>, <대한민국 건국 경축행사>, <700만 해외동포 자긍심 고취사업>,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호국 보훈사업>, <대한민국

건국 60년 학술적 의미 고찰사업>,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문화축전>,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전시회>, <산업발전 조명 및 미래산업 제시 사업> 등 건국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8개 분야, 총 63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 기획단 주도 사업



역사, 미래와 만나다 60일 강연



60일 강연을 하는 조순 박사

가. 60일간 연속 강연회 개최

<60일 연속 강연>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강연 형식으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 60인을 초청해 지나온 60년을 되돌아보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진지하게 점검했다. 7월 14일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의 강연을 시작으로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한비아, 정재승 KAIST 교수, 조순 전 경제부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9월 11일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마지막 강의를 했다.

60일 연속 강연은 ‘역사, 미래와 만나다’라는 슬로건하에 각계 명사 60인이 요일별 세부 주제에 따라 특색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매일 밤 강연이 열린 세종문화회관 뒷마당 ‘예술의 정원’은 도심 속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강연장 무대 앞에 마련된 좌석뿐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들계단과 주변 벤치에 앉아 청중이 강연을 듣는 풍경은 ‘예술의 정원’을 지적인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최고 지성과 대중이 문턱 없는 야의 공간에서 만남으로써, 시민들 가슴속에 배움을 향한 열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60일 동안 계속된 릴레이 강연 ‘역사, 미래와 만나다’가 거둔 가장 가치 있는 열매는, 좋은 생각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원하는 ‘대중의 발견’과 ‘소통의 장’을 연 것이다.

나. 광복절 행사 개최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중앙경축식>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된 장소인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 8월 15일(금) 오전에 개최되었다. 이날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산업화 및 민주화 기여자, 교육·경제·종교·문화예술·여성계 등 각계 대표와 주한외교단, 해외동포, 다문화 가정, 국토대장정 참여 청소년,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 등 총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축식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재확립하고, 대한민국 60년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세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의지를 표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기획했다.

<식전행사>는 ‘위대한 역사’를 주제로 광복 및 건국, 산업화, 민주화, 오늘의 한국을 음악·무

용·영상을 통해 표현했다. ‘새로운 꿈’을 주제로 기획한 〈본행사〉는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룩했던 대한민국 60년을 재조명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을 다짐했다.

행사 후에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국토대장정 참가자 1만명 및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퍼레이드를 통해 국민에게 통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 한국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성공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함과 동시에 근대화 성공모델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아카이브(archive) 구축작업도 추진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무형자산을 창출한다는 기획하에 한국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이념적 중립성, 객관성, 선택과 집중, 미래에 대한 대응성 등 4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가 한국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되 통계청, 국사편찬위원회,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국60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객관적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신생국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평가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를 총망라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인권·사회복지·다문화·양성평등과 같은 삶의 질 분야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과거와 미래가 소통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근대적 성공모델을 정립했다.

라. 건국60년 기념 세계지도자포럼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하고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이 주관하는 〈건국60년 기념 세계지도자포럼(World Leaders Forum)〉이 2008년 10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24명의 세계 정상급 지도자 및 주요 국제·지역 기구 대표들, 세계 유수의 석학들, 800여 명의 국내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서 각국의 석학들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평가하고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세계 금융위기, 기후변화 문제 등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녹색성장 등 우리나라의 해결방안 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표했다.

3) 관련부처 추진 주요 사업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추진사업 외에 각 부처에서도 자체적으로 건국 60년 기념사업을 추진했으며,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각 부처 추진사업을 지원하는 등 기념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진행했다.

가. 건국의 의미 상징화 사업(국립대한민국관 건립)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2차 전체회의(2008.8.4)에서 정부는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을 결정하고 광화문에서 송례문에 이르는 구간을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부지에 국립대한민국관을 세우고,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를 국민들에게 반환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이 일대 거리를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하여 전통과 미래, 지식과 정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부지에 들어서게 될 국립대한민국관은 전시관, 아카이브, 다목적 공연장, 수장고,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며, 부지면적 6,446㎡, 건축연면적 2만8,000㎡의 규모로 2014년 준공,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 건국 경축행사(건국 및 건군60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건국 및 건군60년을 맞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잠실 주경기장과 테헤란로에서 열렸다. 제2의 창군을 다짐하는 선진강군 출정식의 의미를 담아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3부요인과 국방부 장관, 군 수뇌부, 군 원로 및 참전용사, 시민 등 6만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후에는 행사장 인근 삼성교에서 역삼역까지 3km 구간에서 시가행진을 펼쳤는데, 5년 만에 열린 대규모 행사였다. 이날 저녁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대통령과 군 원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 60주년 경축연이 열렸다. 한편 군은 국군의 날 하루 동안 부대 개방 등 다양한 자축행사를 갖고 국민과 함께하는 강군의 모습을 보였다.

다. 700만 해외동포 자긍심 고취사업(2008 세계한민족 축전)

2008 세계한민족 축전이 전 세계 44개국 500명의 동포가 참가한 가운데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및 경주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계한민족 축전은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 창설한 이래 지금까지 100여 개 국가에서 1만 3,000여 명의 해외동포를 초청, 조국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한민족의 자긍심 고양과 해외동포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2008년에 열린 세계한민족축전은 고국의 발전상과 향수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한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특별 참가자로 해외 입양자들을 초청해 진정한 세계한민족 축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호국사업(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2008년 6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내 제2연평해전 전적비 앞에서 제2연평해전 6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기념식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기념행사로 격상되어 진행되었으며, 한승수 국무총리,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여야 정당대표 및 국회의원, 군인,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사 및 부상한 분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희생정신을 기리며 애국심 고취와 국민통합의 결의를 다졌다.

4) 건국60주년 사업 평가

건국60주년 사업은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을 다양하게 조명했다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역사적 의미를 재인식하게 했다. 건국60주년 사업은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 및 일류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계층 간·지역 간의 반목과 질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국민 대통합의 시대로 가고자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8.3	■ 건국 60년 기념행사 추진체계 관련 대통령 보고
2008.4.14	■ 「건국6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설치
2008.4.16	■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관련 대통령 훈령 제정 ■ 제2차 조정위원회(정부위원) 사업추진현황 보고
2008.5.1	■ 제2차 조정위원회(정부위원) 사업추진현황 보고
2008.5.21	■ 제3차 조정위원회(민간+정부) 추진현황보고 및 주요사업 60개 보고
2008.5.22	■ 제1차 위원회 전체회의, 기념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60개 보고
2008.6.19	■ 국무총리, 위원장 오찬 간담회
2008.6.29	■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2008.7.3	■ 제4차 조정위원회, 부처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2008.7.9	■ 고위당정협의회, 기념사업추진현황 보고
2008.7.11	■ 건국60년, 과거·현재·미래 세미나
2008.7.17~20	■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2008.7.31	■ 국가정책조정회의, 기념사업추진현황 보고
2008.8.4	■ 제2차 위원회 전체회의, 전야제·경축식·한강축제 추진계획 보고
2008.8.15	■ 건국60년 중앙경축식, 기념특별공연(여민동락)
2008.10.1	■ 건국 60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2008.10.30	■ 건국 60년 기념 세계지도자포럼
2008.11.26	■ 건국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지도자들> 개최
2008.12.12	■ 유엔승인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8.12.22	■ 건국60년 기념사업 백서 발간

2. 독도 영유권 강화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분쟁지역화 전략



최근 수년간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왔으며,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래 매년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 7월에는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이념보다 실익에 바탕을 둔 한·일 파트너십 심화를 담은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념을 초월한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아시아 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일본을 방문,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총리는 과거사보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신(新)시대’ 개척에 합의했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했으며, 실질적인 경제협약의 강화와 인적교류의 저변 확대에 역점을 둘 것을 명백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관계 개선 노력과 정부의 기재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지도를 제작해 공개했으며, 2월에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 홍보 팸플릿을 게재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14일에는 일본 문부성의 중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및 교과서 검정본 등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공식 발표했으며, 9월에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토문제가 미해결 상태임을 기술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경우에는 독도문제가 ‘북방 4개 섬(쿠릴열도)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향후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분쟁화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도출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관계 개선 노력과 정부의 기재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지도를 제작해 공개했으며, 2월에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 홍보 팸플릿을 게재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14일에는 일본 문부성의 중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및 교과서 검정본 등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공식 발표했으며, 9월에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토문제가 미해결 상태임을 기술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경우에는 독도문제가 ‘북방 4개 섬(쿠릴열도)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향후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분쟁화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도출할 수 있다.

2) 정부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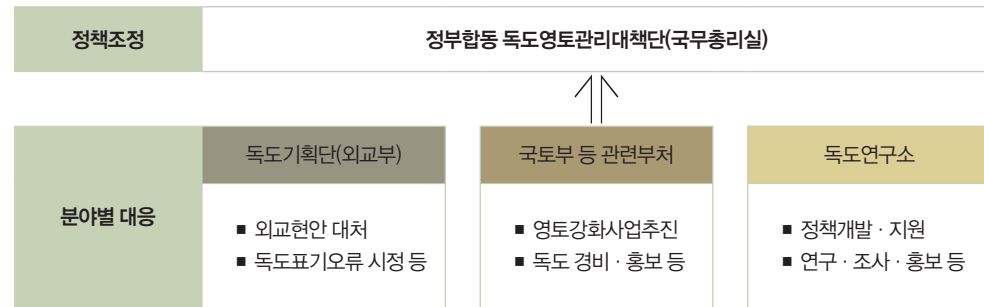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에 대해 정부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지만, 한·일 간의 협력 역시 중요하므로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 차원에서 독도 문제와 한·일 관계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이고 과도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통합적인 전략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었다.

가. 정부합동영토관리대책단 설치

정부는 2008년 7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독도관련 범정부적 상시대응체계 구축, 독도 영유권 논리 지속 연구, 대내외 홍보·교육 강화,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독도영토관리대책사업 수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2008년 8월 4일 「정부합동영토관리대책단(이하 '대책단') 규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에 국정운영1실장을 단장으로 14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대책단을 설치했다. 대책단에 참여한 부처·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환경부·경찰청·문화재청·해양경찰청·경상북도·동북아역사재단 등이다. 이명박 정부는 '단호하고 엄중한 외교 기조' 하에 독도관련 문제를 '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부처별 대응체계에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단장 : 총리실 국정운영1실장)' 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독도관련 현안 대응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추진체계도】



나. 정부합동영토관리대책단의 업무 수행 실적

대책단은 2008년 8월 4일 제1차 대책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9월 말 현재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대책단 회의를 개최하여 독도에 대한 영토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부처 간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일본의 독도관련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독도 영토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왔다. 대책단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교청서, 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등을 통한 일본의 연례적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해 대책단을 중심으로 사전 정보수집 및 정부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부당한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제 분쟁지역화 방지를 위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등 논의된 계획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우선 2008년 8월 독도문제 전담 독도연구소의 역할과 대책단과의 기능연계 방안과 대책단 내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또한 새롭게 발굴한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확정하는 등 대책단이 설치된 첫해에 많은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다.

2009년 1월,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와 기관별 상이한 통계수치를 바로잡기 위해 독도 홍

보 표준모델과 독도 통합홍보지침을 마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홍보 전략 및 방향을 설정했다.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늘어나는 입도객 편의 확대를 위해 독도 입도 절차 완화를 추진했으며, 독도 대사전 편찬계획을 논의하고, 독도·동해 표기 시정요청과 독도 인근지역 암초 지명 고시를 추진했다.

2010년 4월에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독도 교육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교과 해설서 수준을 상세화하고 교육과정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수도권 지역 독도교육홍보관 설치 필요성을 논의했다.

2011년 7월 일본 자민당의원 울릉도 방문 시도에 대해 신속히 대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의도, 법적·외교적·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정부의 입장을 마련함으로써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했다.

2012년 6월 열린 대책단 회의에서는 독도영토관리대책사업인 국토부 독도체험수련관과 환경부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건립사업 사이에 유사·중복 기능이 있어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으로 통합 추진하기로 조정했다.

특히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가원수로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입장을 행동으로 경고한 것으로, 정부의 확실한 독도 수호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2012.8.10)

일본은 국제분쟁지역화를 위해 외교적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대책단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 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대통령 독도방문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일본의 도발수위를 분석하면서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대응했다.

독도 영유권 강화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8.8.4	■ 독도 관련 외교적 대책 및 동향, 독도 시설물 설치사업 추진방안, 독도연구소 설립 등
2008.8.19	■ '독도연구소'의 역할과 대책단과의 기능연계 방안, 독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8.8.28	■ 독도 표기·홍보 관련 기관 간 역할분담 방안,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현안사항 논의 등
2008.9.18	■ 신규 사업 추진계획, 독도 표기오류 현황 및 대응방안, 홍보 표준화 방안 등
2008.11.17	■ 독도 관련 홍보현황 및 통합홍보 관리방안, 홍보 표준화 방안, 국회 독도특위 후속조치 계획
2009.1.22	■ 독도 홍보 표준모델 홍보방안, 독도 통합홍보 관리지침(안), 기관별 독도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5.8	■ 미국 등 외국정부 대상 독도·동해표기 시정요청, 독도 입도 제도개선, 독도 통합홍보 추진경과, 독도 관련 고교 교육과정 해설서 협의, 독도 대사전 편찬계획 등 관련 논의
2009.8.27	■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운영상황 및 향후계획, 독도 홍보자료 제작 및 사업추진 시 사전협의 강화, 독도 내 시설물 설치사업 추진 관련, 독도 통합 홍보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보고, 독도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경과보고 등
2010.11.23	■ 독도관련 전시회 개최, 울릉도 시설물 설치 관련 협의, 독도 주요 시설물 설치현황, 독도교육홍보관 설립
2011.1.25	■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2011년 추진계획 점검,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대응방안, 학교급별 독도 교육내용 체계 안 설명, 독도유공자 정부포상 건의
2011.2.17	■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대응
2011.3.30	■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직후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협의
2011.6.21	■ 독도 전시회 및 독도부교재 발간, 독도 전복·소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 독도지리지 발간, 건의사항 협의
2011.7.15	■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에 대한 대응방향
2011.7.18(7.25)	■ 일본 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 관련 정부 대응방안 협의
2011.8.1	■ 일본 방위백서 발표에 따른 정부 대응방안 협의
2012.3.22	■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관련 대응방안 협의
2012.6.8	■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2013년 예산편성, 쟁점사업 조정, 건의사항

3.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1) 추진배경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복지사업의 급증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2008년 지방재정 구조를 보면 지방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중은 58.9%이며,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의 34.8%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2006년 54.4% → 2008년 53.9%)했다.

【 2008 지방재정 구조 】

의존재원 47조8,000억원(38.3%)		자체재원 77조1,000억원(61.7%)		
지방교부세 24조1,000억원(19.3%)	국고보조금 23조7,000억원(19.0%)	지방세 43조5,000억원(34.8%)	세외수입 30조1,000억원(24.1%)	지방채 3조5,000억원(2.8%)

지방재정은 재산세 위주의 비탄력적인 지방세 구조에 의해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도가 심화(1995년 22.2% → 2005년 35.2% → 2008년 38.3%)되고 있었으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53.3%인 131개나 되었다. 또한 지방세의 48.8%가 재산과세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 노력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지방의 재정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부터 도입했다. 시행 첫해인 2005년 7만1,000명에게 6,426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2006년 34만1,000명에게 1조7,180억원, 2007년 48만3,000명에게 2조7,671억원을 부과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2008년 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8년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2조3,2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부과대상자가 2007년 보다 7만1,000명 줄었고, 부과액도 4,391억원 감소했다. 중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2006~2007년분 중부세 징수액 중 5,622억원을 납세자들에게 환급했다. 2008년 12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면서 일부 내용이 소급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국세청이 고지한 중부세는 2조8,803억원이었으나, 실 과세액은 5,523억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금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2008년 말 미국에

서 발생한 금융위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정책을 집행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비중이 급증했다.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논의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 부여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하에 지방재정지원체계 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2009년 초부터 지방소득·소비세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 자율성 강화,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원, 목적세 정비에 따른 교부율 조정, 분권교부세 개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 등 5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분권교부세 대안으로 사회복지교부금 신설을 건의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제도개편 시 지방교육재정 손실이 없도록 재원 중립적 검토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2009~2012년 교육투자확대 소요경비 총 20조5,000억원 확보 등 교육교부금 인상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세 방식의 지방소비세 도입, 종부세 이외에 소득·법인세 감세에 연동되는 지방재정 손실 별도보전 등을 건의하는 한편, 종부세 개편에 더하여 국세 감세로 인해 발생한 교부세·주민세 감소분을 포함,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7조원 규모를 보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약 7조원의 보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앙·지방 간 가용재원 배분에 따른 세출분권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 이므로 공동세 방식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역 간 재원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한편, 향후 제도개편에 대해 중앙·지방 간 재원중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요구한 교부금 추가 인상·신설은 2009년도의 20조원 내외 적자 국채발행 등 국가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하에서 일시적 적자국채 발행을 고착화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며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을 도출했으나, 관계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3) 지방재정 개편TF 운영을 통한 조정안 마련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이후에는 국무총리실에 지방재정 개편TF를 구성(2009.4)하고 부처 간 이견 조정을 계속해나갔다. 지방재정 개편TF에는 국정운영1실장이 팀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담당국장이 팀원으로 참여했으며, TF 산하 실무TF에는 국무총리실 총관정책관이 팀장으로, 기획

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담당과장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2009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이견 사항을 조정해나가면서 중요한 현안은 국무총리 주재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관련 장관회의에 상정해 합의를 모색했다.

지방소비세는 중앙-지방 간 재원중립을 전제로 한 도입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종전 시·도 교육청 전출금 확대를 통한 재원중립 방안 외에 지방교육세 상향조정을 통한 재원중립방안을 논의했다.

분권교부세 개편은 분권교부세의 복지·비복지 사업 분야의 운영실태, 효율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여 분권교부세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사업 분야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보전의 경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보전재원 및 균형재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보전방안을 재협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이익의 비수도권 지원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이익의 추정방법,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이익의 비수도권 지원제도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좀 더 심층적 논의가 필요(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될 경우, 향후 지방재정운용의 혼란야기 우려)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4)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정부안 도출

관계차관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009년 7~8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했다.

첫째,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관계부처 간에 부가가치세의 10% 또는 5%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2조3,000억원) 규모로 도입하되, 가중치를 적용한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16개 시·도에 배분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후 3년간 준비를 거쳐 5% 추가확대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현 소득할 주민세를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되, 납세자 불편 증대·세정비용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하여 3년간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2010년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향후 3년간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분권교부세 개편은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축소방지를 위해 분권교부세를 5년 한시 연장하되,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비복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넷째, 재원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 순증재원(1조9,000억원 내외) 중 1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지원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3,000억원을 (가칭) '지역상생발전

기금¹⁾에 10년간 출연하여 지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연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함으로써 국가가 보전하고, 동일한 액수만큼 지방교부세율을 인하하기로²⁾ 했다.

【 지방소비세 도입 및 재원증립 조정안³⁾ 】

(단위: 조원)

구분	증감	일반	지자체		교육지자체
			수도권	비수도권	
지방소비세 도입	△2.3	+2.3	+0.7	+1.6	-
내국세 축소에 따른 교부세(금) 자연감소	+0.9	△0.4	-	△0.4	△0.5
지방교부세율 인하	0.5	△0.5	-	△0.5	
교육교부금 증액	△0.5	-	-	-	+0.5
수도권규제합리화 관련 지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	-	△0.3	+0.3	-
순계	△1.4	+1.4	+0.4	+1.0	-

정부안을 확정된 후에는 당·정 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우선적으로 여당인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2009.9.2)에 국무총리실장이 개편방안을 보고했으며, 당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2009.9.9, 행안부2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개편안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지자체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방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방문하여 설명을 했다.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2009.9.16, 대통령 주재)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개정이 필요한 7개 법률⁴⁾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010년부터 시행했다.

5)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의 향후 과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원구조가 큰 변혁을 이뤘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현재도 재산에 대한 세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여 세원의 다양화를 이루면서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재정의 건전성 전체를 확인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지방재정 세원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개편,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였으나, 지자체는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신(新)세원 발굴 등 과세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근본문제와 함께 최근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필요성 등과 연계, 지방소비세율 재조정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2012년 무상보육의 지방비 집행의 어려움에 기인하여 지방재정특위를 구성,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방재정 문제와 함께 국가재정의 건전성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9: 1차위원회 개최(과제선정) - 2.26: 2차위원회 개최(과제별 부처의견 수렴) - 3.6: 3차위원회 개최(과제별 부처의견 개진 및 수렴) - 3.16: 4차위원회 개최(과제별 부처의 개진 및 수렴) - 3.23: 5차위원회 개최 - 3.27: 6차위원회 개최 - 4.13: 7차위원회 개최(위원회 마감 후 국무총리실 이관)
200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TF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1차회의 개최, 4.29: 2차회의 개최, 5.20: 3차회의 개최, 5.27: 4차회의 개최
2010.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0: 1차회의 개최, 7.3: 2차회의 개최, 7.22: 3차회의 개최
2010.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9: 1차회의 개최, 8.26: 2차회의 개최
2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당정 연석회의 개최 - 9.9: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개최
2010.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보고

1) 지방세로 조성되는 기금이므로 자치단체 조항을 운영주체로 하는 지방관리 기금화, 별도법률을 제정하여 세부운영방안 규정
 2) 지방교육교부금 증액규모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 시에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도 교육청 전출금 자연증가분을 감액하여 재원증립적으로 조정
 3) 항목별 재원규모는 연도별 세입전망 등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국세·지방세 등의 세입전망 규모 등을 토대로 부처 간 협의 결정
 4) 행안부 4개 법률(「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기재부 2개 법률(「부가가치세법」, 등), 교과부 1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 납북 피해자 보상지원체계 마련

납북자는 6·25전쟁 중(1950.6.25~1953.7.27) 납북자(전시 납북자)와 그 후 납북자(전후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 등을 고려하면 8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한 피랍자, 즉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다. 이 중 86.5%인 3,318명은 납북 후 1년 이내에 귀환했으며, 8명은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했다.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납북사건 사실조사 등을 통해 현재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를 517명으로 추정했다.

【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

(단위: 명)

구 분	계	어선원	대한항공 (KAL) 납치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랍자	3,835	3,729	50	30	6	20
귀환자	3,318	3,271	39	-	-	8
미귀환자	517	458	11	30	6	12

이명박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중요 과제로 추진했으며, 이산가족 범주 내의 접근이 아닌 송환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2009년 8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1) 전후납북피해자 지원사업의 추진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1953.7.27) 이후 발생한 납북자와 가족을 지원·보상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과 탈북귀환 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국가공권력으로 인한 사망과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07년 11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 피해위로금, 보상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납북자문제 실태조사,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대학교수, 법조인, 남북관계 전문가와 당

연직 위원인 정부 고위공무원, 납북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분야별로 검토하기 위해 「납북피해 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와 「납북피해 산정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위원회 출범 이후 납북피해자 신청 마감일(2010.10.27)까지 납북자 가족피해위로금 428건, 귀환납북자 정착금 8건,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보상금 12건 등 총 448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위원회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40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납북피해자 425건 145억1,000만원에 대해 지급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납북자 가족 피해위로금으로 416가족에게 129억1,400만원(평균 3,100여만원), 귀환납북자 정착금으로 8명에게 15억2,800만원(평균 1억9,100만원),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자 보상금으로 1명에게 6,800만원이 지급되었다.

【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

(2011. 9 기준)

구 분	신청(건)	지급결정(건)	지급액(천원)
피해위로금	428	416	12,914,573
정착금·주거지원금	8	8	1,528,320
보상금	12	1	67,604
합 계	448	425	14,510,497

2) 6·25전쟁 중 납북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

6·25전쟁 중 북한은 부역동원, 의용군 충원 등을 위해 우리 민간인을 대규모로 납치했다. 6·25전쟁 납북자 수는 전쟁 초기인 1950년부터 1963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정부가 작성한 피랍치자 명부를 통해 추정되고 있으나, 작성 시기 및 작성 주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 정부발간 6·25 전쟁 중 납북자명부에 의한 전시납북 피해규모 】

명부명	작성주체	시 기	인 원	존재여부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2,438명	보존
6·25사변피랍치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2년	8만2,959명	보존
6·25사변피랍치자	내무부 치안국	1952년	(12만6,325명)	유실
6·25사변피랍치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3년	(8만4,532명)	유실
6·25동란으로인한피랍치자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년	1만7,940명	보존
실향사민명부	국방부	1963년	1만1,700명	1권 보존
				2권 유실

6·25전쟁 납북자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정부의 납북자 문제해결 의지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이하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법률」)의 입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이 법률은 전시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유해송환 포함), 서신교환, 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법률」 시행령을 제정(2010.9.27)했다. 2010년 9월 27일 법률 시행과 함께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장관 등 정부위원 5명과 전문가 6명, 6·25납북자 가족대표 3명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납북자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정부 차원의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납북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정부, 전문가, 가족대표 등 9명의 소위원회(위원장: 통일부 차관)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시·도 실무 ‘납북자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고, 2011년 1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 납북피해신고접수처가 설치되었다.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2,332건의 납북피해신고가 접수되었으며, 2011년 8월 2일 ‘납북자명예회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식기구를 통해 처음으로 6·25전쟁 민간인 납북자 55명이 인정되었다. 이후 2012년 9월까지 743명이 6·25전쟁납북자로 인정되었다.

【납북피해신고 접수 및 납북자 결정 현황】

구 분	피해신고접수	납북자결정
2011.1~12	1,034건	272명
2012.1~9	1,298건	471명
계	2,332건	743명

정부는 전쟁납북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오랜 시간의 경과로 전후세대로부터 점점 잊혀가는 6·25전쟁 납북피해를 널리 알림으로써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왔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전 이후 최초로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로행사를 개최하고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와 버스, 지하철, 시장,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6·25전쟁 납북자명예회복위원회’는 구성일인 2010년 12월 13일부터 4년간(최대 6년) 활동하며, 활동을 마친 후 「납북피해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3)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출범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대책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줄곧 제기되어왔다. 특히 2011년 신숙자 모녀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대책기구를 출범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대책위원회를 연내에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고,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 통일부에 「납북자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2011년 12월 16일 드디어 국무총리 훈령인 「납북자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납북자 대책기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납북자대책위원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경찰청관계공무원 및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납북자 관련 현안 업무의 처리방향과 대책을 심의한다. 「납북자대책위원회」는 2012년 1월 20일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납북자 문제의 현황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 계기별로 납북자 문제 대책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5.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제도 개선

국가 정책은 예측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원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도 동일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가 연간 1,000만명에 근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 수요자 위주의 행정서비스 추진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시험 시작 20일 전에 시험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장은 변호사법시험 공고시기 개선을 담은 개정안이 차관회의(2011.9.8, 제36차 차관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시기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에서 공고시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련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국가 일반직 등 5종의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은

대통령령에, 교사는 부령에 공고시기가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국가자격시험 총 657종은 대통령령에 614종(93.4%), 부령에 33종(5.2%), 고시에 3종(0.4%)이 규정되어 있고, 근거규정 없는 자격⁵⁾도 7종(1.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시험은 규정상 공고기간이 6종 공히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가자격시험은 ‘시험 ○○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공고기간을 정하거나 ‘○월 ○○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특정일로 정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공고기간을 정한 경우(78종)는 시험 30일 전 공고 49종(63%), 특정일로 정한 경우(572종)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공고 556종(97%)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무원 및 국가자격 실태 조사

국가공무원시험 공고 실제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규정상 시험공고 일자를 시험 20일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일 이전에 정식공고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 일반직 및 중등교사 시험은 정식공고 이전에 사전안내를 하지만, 지방공무원시험은 사전안내가 없었으며,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정식공고를 하고 있었다.

국가공무원시험 공고시기 현황

- 일반직 : 통상 11월 중순~말경에 사전안내를 함
 - 사전안내(2010.11.25) → 정식공고(2011.1.1) → 첫 시험(2.26) : 91일간 공고
- 중등교사 : 통상 7월 중순~말경에 사전안내를 함
 - 사전안내(2011.7.29) → 정식공고(9.6) → 시험(10.22) : 83일간 공고
- 경찰 : 사전안내 없이 정식공고만 실시
 - 정식공고(2011.1.3) → 첫 시험 실시(2.26) : 53일간 공고
- 지방자치단체일반·소방직 : 시험출제는 행안부(시험출제과) 또는 방재청(중앙소방학교)에 위탁하거나 자체실시
 - 최소 공고기간 31일(서울 소방직), 최대 공고기간 119일(대구 일반직)
 - * 행안부 위탁출제 : 일반직은 서울 제외 15개 시도, 소방직은 대구 등 8개 시도
- 지방교육직 : 시도 교육청별로 공고하며 시험출제는 모두 자체실시
 - 최소 공고기간 31일(인천), 최대 공고기간 93일(제주)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556종) 등은 대부분 규정보다 빠른 정식공고 또는 사전안내를 하고 있었으나, 교통안전공단 등 기타 단체에서 개별 위탁해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전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 시행 국가자격시험 실제 공고기간 】

구분	계	1개월 미만	1~2개월	2~3개월	3개월 이상
내용	652종	10종(1.6%)	13종(2.0%)	9종(1.4%)	620종(95.0%)

3) 개선방안 마련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험준비에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한 모든 시험의 실제 공고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고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자격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시험 대부분과 부동산중개사시험·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시험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경우 국가자격시험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4) 공고시기 관련 관계부처 조정

공고시기 개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가운데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공고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고시기를 개선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했다.

이를 계기로 부처의 반대가 있는 공무원시험 및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부처회의(행안부, 교과부, 고용부, 경찰청, 방재청 참석)를 2차에 걸쳐 개최하며 의견을 조율했다.

먼저 행안부, 교과부, 경찰청, 방재청은 공무원시험의 경우 공고시기보다 채용인원이 중요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고시기 개선은 수험생에게 큰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2012년 1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시험 공고를 규정에 따라 20일 범위 내에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례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시험공고를 최소한 90일 전에 할 필요성이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90일 전까지 사전안내를 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둘째, 국가자격증 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험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을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적인 절차 등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험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2년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당초 일정보다 15일을 단축한 11월 30일에 공고한 사실 등이 제시되어 공고시기를 단축하면서 부처 간 행정적인 절차를 단순화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 개선방안 확정

공무원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공고시기 개선안은 공고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5종), 시험 30

5) 경매사, 경주선주, 경주심판,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전문강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일 전(46종) 및 시험 60일 전(24종) 공고토록 규정된 경우는 시험 90일 전으로 공고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연도 말까지(1종), 연도시작 15일 전(512종) 및 매년 1월 말까지(2종) 고지되던 공고는 연도 시작 30일 전으로 공고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일반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정확한 채용인원 확정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직 일반 공무원, 경찰직, 소방직 등 6개 공무원 채용시험은 시험실시 90일 전에 시험일자를 사전안내토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시험	종	개선 전	개선 후
공무원시험	6종	시험일 20일 전 공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예정시험 일정은 90일 전 공고
자격시험 (590종)	46종	시험 30일 전 공고	시험 90일 전 공고
	24종	시험 60일 전 공고	
	5종	공고일 미설정	연도 시작 전(前) 30일 전 공고
	512종	연도 시작 전 15일 전 공고	
	1종	연도 말까지 공고	
2종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		
합계	596종		

또한 시험공고 시기는 수험생의 이해와 직접 관계되는 사안이므로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 위임 시 부령으로 규정함이 원칙이나 일부시험은 공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거나(경매사 등 5종) 고시(보험중개사 등 2종) 등으로 되어 있어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공고시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사항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간적·행정적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일괄적으로 입법예고(2.15~3.6)를 실시한 후, 국무총리실에서 개정이 가능한 공인회계사 등 574개 시험에 대해서는 42개 대통령령을, 보험계리사 등 22개 시험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부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일괄입법이 아닌 개별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 5개 대통령령을 제외한 37개 대통령령을 일괄 입법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부처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자격증 관련 법령도 2013년도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개정을 추진했다.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제도 개선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10.1 ~ 11.17	■ 공무원시험 및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 조사
2011.11.17	■ 공무원시험 및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 개선방안 보고
2011.11.18 ~ 12.15	■ 공고시기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사
2011.12.15 ~ 12.20	■ 국무총리실 소관 정책관실별 관계부처 의견에 대한 검토
2011.12.20 ~ 2012.1.6	■ 정책관실별 검토의견에 따른 관계부처 2차 의견조사
2012.1.17	■ 공고시기 개선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공무원시험 관련부처 회의 - 국가자격시험 관련부처 회의
2012.1.18 ~ 30	■ 공고시기 개선관련 관계부처 3차 의견조사
2012.2.7	■ 공고시기 개선방안 확정 후 국무총리 보고
2012.2.15 ~ 3.6	■ 공고시기 개선관련 대통령령 및 부령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실시 (38개 대통령령 및 12개 부령)
2012.3.8~12	■ 공고시기 개선관련 규제심사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일부개정령안
2012.3.13~4.16	■ 공고시기 개선관련 37개 대통령령 법제심사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12.4.19	■ 공고시기 개선관련 37개 대통령령 차관회의 상정 의결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12.4.24	■ 공고시기 개선관련 37개 대통령령 국무회의 상정 의결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12.5.1	■ 공고시기 개선관련 37개 대통령령 관보게재 공포 시행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6. 검·경 수사업무 조정



검·경 수사업무 관련 조정합의안 발표(2011.6.20)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었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은 ‘수사권 조정 없이 수사현실을 법제화 한다’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를 전제로, 2011년 6월 2일부터 19일까지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조정을 추진했다.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수정여부를 둘러싸고, 검·경 양 기관 간에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 경찰 측에서는 수사현실의 법제화를 주장하며 제196조 제1항을 수정하여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명시하려는 입장을, 검찰은 196조 1항의 수정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달 20일 검·경이 양보하여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 내 조정안을 도출했으며, 이를 근거로 2011년 7월 18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p>제196조(사법경찰관리)</p> <p>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p> <p>③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p>	<p>제196조(사법경찰관리)</p> <p>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p> <p>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p> <p>③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p>

1) 형사소송법 시행령 제정 작업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 작업을 추진했다. 그동안 국무총리실은 검찰과 경찰 간 서면협의(2011.10)와 3박4일 실무조정회의(2011.11.16~19),

국무총리실장 주재 고위급 조정회의(2011.11.19) 등을 통해 양 기관과 대통령령(안)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협의과정을 통해 양 기관 간 의견차를 좁혀왔다.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국무총리실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 국민인권,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마련, 2011년 11월 23일 발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취지 : 수사권 조정이 아닌 수사현실 명문화

- 검찰의 포괄적 지휘권은 그대로 유지하되(196조 제1항), 포괄적 지휘권하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진행권을 명문화(196조 제2항)
- 수사개시·진행권 명문화에 따라 종결권은 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후 책임은 강화(196조 제4항)
- 복종의무가 삭제(「검찰청법」 53조)되면서 196조 제3항의 지휘준수의무로 대체되고, 지휘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형소법」, 개정은 검찰지휘권을 유지하면서 사법경찰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으로, 검찰권의 축소는 아니며 양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한 것임
 - * 국회 법사위에서 정부합의안중 196조 제3항의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변경

2) 사법경찰관의 수사 자율성 제고, 검사의 지휘권 합리화

국무총리실 조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던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78개 조문)의 내용을 대부분 대통령령에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10개 조문을 삭제하고, 10개 조문은 경찰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자율성을 제고하고, 검사의 지휘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새롭게 포함했다.

사법경찰관의 행위	사건관리방안				
<p>■ 검사의 사법경찰관 존중</p> <p>-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하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p> <p>■ 서면지휘 원칙 신설</p> <p>- 수사지휘는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상황 등의 사유로 검사가 구두 또는 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지휘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서면 지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p> <p>■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및 의견제시 규정 명문화</p> <p>-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에 대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p>	<p>■ 사법경찰관 행위의 수준에 따라 사건관리방안을 규정함</p>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때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제출원칙 (사건 관계인이 이익을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서면으로 관계서류 제출 요구)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제출원칙 (사건 관계인이 이익을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서면으로 관계서류 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제출원칙 (사건 관계인이 이익을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서면으로 관계서류 제출 요구) 				

-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은 검사의 위 조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 다만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주요 사건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법경찰관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
- **긴급체포 후 석방 시 검사 사전승인제도 폐지**
 - 긴급체포된 사람을 석방할 때 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히 석방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만 긴급체포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존치
- **수사개시보고 대상을 대폭 축소**
 - 종래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2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함
 - 다만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새로이 보고대상으로 추가함
- **수사단계별 수사지휘 규정 신설**
 - 종래 수사현실에서 인정되던 단계별 수사지휘 내용을 입건 시 지휘, 송치 전 지휘, 송치지휘, 송치 후 지휘 등으로 구체화하였음
- **검사 접수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지휘 가능 규정 명문화**
 -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검사가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지휘받은 때에는 사건 송치 전에 구체적 지휘를 받도록 함
- **인치 지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별도 명문규정은 두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2년 6월 말까지 MOU를 체결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수사협의회 신설**
 - 검찰청과 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수사협의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

국무총리실은 대통령령(안) 조정 시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다. 첫째, 현행 수사 현실을 중심으로 국민 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모색했다.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법경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사건관리방안을 규정했고, 피혐의자 출석 조사, 현행범인 체포 등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체포된 사람을 석방할 때 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한 석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둘째,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해소·예방하고 조화롭게 수사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수사협의회’를 두어 수사실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다시 지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재지휘권’을 명문화했으며, ‘호송·인치 지휘’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2년 6월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셋째, 검찰의 단계별 수사지휘권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법경찰관이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개시부터 사건 송치 이후까지 수사의 단계별로 검사의 지휘권을 구체화하여 수사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주요 사건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법경찰관이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을 토대로 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2011년 11월 24일 입법예고했으며, 국무총리실은 입법예고 이후 법무부와 행안부 참여하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

부 쟁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조정안을 토대로 2011년 12월 22일 차관회의, 같은 달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대통령령을 시행했다.

검·경 수사업무 조정 추진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11.6.20	■ 검·경 수사업무 관련 최종합의안 타결, 브리핑 및 국회 송부(11:30경), 사개특위 의결(16:20)
2011.7.18	■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2012.1.1 시행) - 수사지휘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2012.1.1 시행)
2011.10	■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2회에 걸쳐 검·경 간 서면협의
2011.11.16~19	■ 검·경 간 실무조정회의(국무총리실, 검·경, 법제처) - 3박4일 합숙토론
2011.11.19	■ 국무총리실장 주재 고위급 조정회의
2011.11.23	■ 국무총리실 조정안 발표
2011.11.24~12.14	■ 입법예고(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011.12.14	■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 논의
2011.12.15~16	■ 실무회의 개최
2011.12.16	■ 국무총리 주재, 일선 수사경찰 및 검찰 간담회
2011.12.17	■ 국무총리실장 주재 법무부·행안부 차관, 검·경 차장 회의
2011.12.30	■ 대통령령 공포 - 12.22 차관회의, 12.27 국무회의 심의·의결
2012.1.1	■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 시행

7.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1) 추진배경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군인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북한군은 연평도 인근 해상 및 내륙에 3회에 걸쳐 170여발의 포사격을 했으며, 우리 군(軍)은 즉각 경고방송 및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라 주민 대부분이 연평도를 탈출하여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함에 따라 서해5도 전체의 공도(空島)화가 우려되었다.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속·충분한 피해복구 및 지원과 더불어 출도 주민들의 조기 복귀 및 안정적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서해5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서해5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서해5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피해상황

- 인명: 사망 4명(군인 2명, 민간 2명), 부상 62명(군인 16명, 주민 46명)
- 재산: 주택 및 공공시설물 134동(포탄 직·간접 피해)
- 기반시설: 도로 6개소(L=700m, B=4.0~10.5m), 종합운동장



연평도 포격으로 피폭된 주택



피폭으로 불탄 주택

2010년 연평도 주민 상황(2010.12.4 현재)

- 실거주자 1,361명 중 1,097명 출도, 현지체류 264명(주민 193명, 공무원 등 7명)
- 출도주민 중 임시숙소 체류 276명(인스파월드 258명, 여관 18명)



연평도에서 피난 나온 주민 ①



연평도에서 피난 나온 주민 ②

2)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정 및 서해5도지원위원회 구성

2010년 12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대청도 등 서해5도 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연평도 포격도

발 이후 주민의 심리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의 생활여건 개선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2010년 12월 제정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2011년 1월 26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통상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나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은 서해5도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연직위원으로 인천시장이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소관부처 차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사례를 기초로 행안부 차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서해5도지원위원회의 실무위원회도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정운영1실장이 맡도록 했으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국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3) 현안 조정 및 서해5도 발전 기본구상 마련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연평도 주민들의 조기 복귀를 위해 2010년 12월 제정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해5도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은 서해5도 지원 실무위원회(위원장: 국정운영1실장)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해나갔다. 실무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자료를 기초로 2011년 2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연평도 피해복구현황을 보고받고 서해5도 발전 기본구상을 의결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 주민들이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해5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일체를 지원하는 한편, 서해5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에 비하여 높은 생필품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유류, 가스, 연탄, 펠릿연료의 해상운송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11년도에 주민 대피시설 42개소(연평도 7개소, 백령도 26개소, 대청도 9개소)를 신축하여 평상시에는 주민행사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안전한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 대피를 위한 비상발전 설비 등을 갖추나갈 계획을 확정했다.

4)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서해5도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6월 22일 제2차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개최

하여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총 78개 사업을 선정하고 재원 및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5도」 발전비전과 ‘살기 좋은 서해 5도’, ‘활력 있는 서해 5도’, ‘안전한 서해 5도’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편리한 해상교통 및 생활기반 시설 확충, 일자리 및 소득창출기반 구축,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 거점 육성 등 6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피폭주택 착공식(2011.5.30)

기본구상	종합발전계획
주민 생활안정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주생활지원금 생활필수품 운송비 교육비 대학 정원외입학 특례 	① 주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생활 안정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주생활지원금,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급 질 높은 교육환경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지급, 대학 정원외입학 특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문화·복지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공연, 돌봄학교 운영, 보육시설 확충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주택 개량 	② 주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주택 개량사업(신축/개보수) 슬레이트 지붕 환경개선
비상사태 대비한 주민 안전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피시설 주민 대피체계 구축 	③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피시설 현대화 추진(42개소) 노후 대피시설 보수(12개소) 및 유지관리 안보교육장 및 안보관광 단지 조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시설 	④ 해상교통 및 생활기반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여객선 해상교통수단 확충 항만 배후지 조성 및 어항시설 강화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산물 특화단지 조성 특화식품 및 수산식품 개발 	⑤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산물 명품화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바다목장 조성)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국민안보 체합·관광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교육장 및 안보관광 단지 조성 	⑥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체험공간, 해양복합관광 시설 역사문화 특화자원 활용 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교순례 성지화 개발, 테마로드길 등 생태자원 복원 및 관광 자원화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해양관광 개발 체류형 민박 활성화 도모 국제적 평화 거점 도서 육성 	

5) 서해5도 지원사업의 평가

서해5도 지원사업 추진 결과, 2011년 연평면 주민등록 인구는 1,937명으로 전년도 1,756명에 비해 181명이 증가했으며,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주민들과 언론 등은 긍정적 평가를 했다.

주민 평가 결과

- “집이 다 불탔을 때만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새집에서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아요.”(연평도 주민 중 신축주택 입주자)
- “지금 연평도는 평화롭고 생동감 넘치던 예전 모습을 기적처럼 되찾고 있다.”(연평도 1주년 관련, 2011.11, 연합)

서해5도는 남북이 대치한 현실에서 민간인이 살지 않는 군사적인 섬이 될 경우 전쟁억지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큰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으나, 정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공도(空島)가 되지 않고 주민이 사는 섬으로서 보다 발전하게 되었다.

2012학년도 대입에서 12개 대학이 107명을 정원의 선발대상자로 확정하여 서해 5도 출신 졸업예정자(48명, 대상 41명⁶⁾)보다 선발인원이 많을 정도로 제도가 조기 정착되었다.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현대식 대피시설을 신축했다. 서해5도 지역 전체에 걸쳐 인구분포·접근성·지역특성을 고려, 대·중·소 규모로 42개소를 신축했다.

【신축 대피소 현황】

구 분	계	대규모(200평)	중규모(100평)	소규모(50평)	예산(억원)
계	42개소	4	8	30	530
연평도	7개소	1	1	5	100
대청도	9개소	1	2	6	122
백령도	26개소	2	5	19	308

연평초등학교, 연평중·고등학교 인근의 기존대피시설은 MBC, 중앙도서관 등이 대피소를 활용하여 북카페(희망대피소, 북카페)⁷⁾를 만들어 타 대피소의 활용방안 사례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연평도 지역 학생들의 소외된 문화생활을 보완하기 위한 문화예술공연 및 음악강좌⁸⁾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2012년 7월,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형 여객선이 백령도 항로에 운항을 시작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6) 서해5도 고교 3학년 재학생 48명(연평 4명, 백령 33명, 대청 11명) 중 7명(타 지역 중·고교에서 전학 6명, 주민등록상 친권자와 미 거주 1명) 제외

7) MBC는 연평초등학교 내 대피소를 유·아동을 위한 놀이방 개념의 희망대피소로, 연평중고등학교 내 대피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증한 1,000여 권의 책을 이용한 북카페로 개조해 연평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킬

8) 민간 교향악단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2011년 9월부터 연평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주 1회 악기 연주법 교습 중



연평초등학교 옆 희망대피소

희망대피소 내부 모습

대피소를 이용한 북카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10.11.23	■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발생
2010.12.5	■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 위기관리 법령 등의 정비 추진 -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2010.12.27	■ 「서해5도 지원특별법」 공포
2011.1.26	■ 「서해5도 지원특별법」 시행 및 시행령 공포
2011.1.31	■ 서해5도 지원위원회 1차 실무회의 개최
2011.2.9	■ 제1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 개최 - 연평도 피해복구 현황 - 서해5도 발전기본구상 확정
2011.5.30	■ 국무총리 백령도·연평도 방문
2011.6.17	■ 서해5도 지원위원회 2차 실무회의 개최 -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내용 관계부처 협의(대피소, 경비행장 등)
2011.6.22	■ 제2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 개최 -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확정
2012.3.9	■ 제3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 개최 - 2012년도 서해5도 종합발전 시행계획 확정

8. 접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

1) 추진배경

접경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지역발전이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 및 수도권 정비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다. 한강·임진강·한탄강 등 풍부한 수계와 주요 생태계 분포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열악한 접근성, 각종 규제, 취약한 산업구조 등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고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며 통일시대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려면,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지역산업의 구조개편,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2) 추진과정

정부는 2008년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2008년 11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접경지역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강구했다. 2009년 12월에는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했으며, 2010년에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2011년 4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3) 접경지역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접경지역 초광역권발전계획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해외 개방형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성장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신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수립한 초광역권 개발권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 12월 15일 접경권 및 동·서·남해안권 등 4개 권역의 하나로서 접경지역을 남북교류·접경벨트로 지정했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및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정한 3개 시·도, 15개 시·군·구이다.

【접경지역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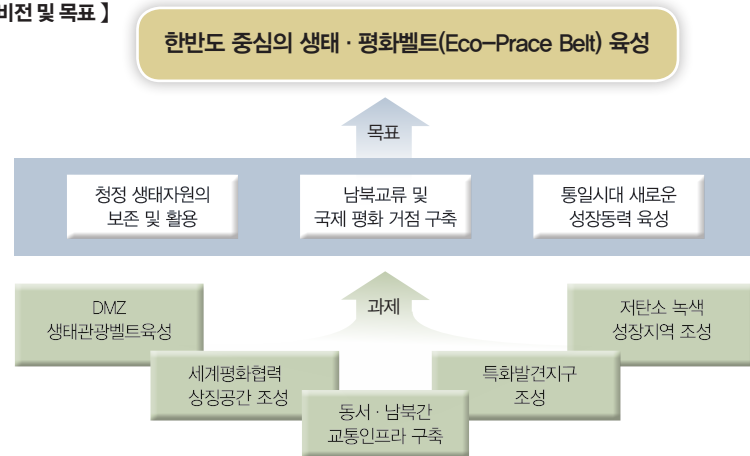
인천시(강화·옹진군), 경기도(고양·양주·동두천·포천·김포·파주시, 연천), 강원도(춘천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정부는 신지역발전정책 수립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국토연구원에 남북교류·접경벨트를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로 육성하기 위한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2009년 12월 2일 DMZ와 접경권 일원을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육성하는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을 확정·발표했다.

그리고 2010년 2월 정부는 기본구상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접경지역 시도계획(안) 작성지침 마련 과정에서 총리실에서는 예산 반영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현 정부 임기 내와 임기 후를 구분하고 초기에는 발전지원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지속적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했고, 이를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발전계획을 작성·제출토록 지시했다. 2011년 6월 시도에서 제출한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를 순회하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

2011년 7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전부 개정되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되면서 새로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접경초광역권의 비전 및 목표】



4)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이와 함께 정부는 「접경지역지원법」의 개정도 추진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은 남북분단 하에서 국가안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에 대해 주민의 복지향상 및 경제발전 지원,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반 조성 등을 위해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접경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에 해당하여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 1월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회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법령 주요 내용

- 법 제명 변경(일반법 → 특별법 격상)
- 접경지역 범위 확대: 읍·면·동 단위 → 시·군 단위로 확대
 - 98개 읍·면·동 → 15개 시·군(186읍·면·동)
- 행안부 장관이 시·도 발전계획을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 수립
-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및 해상교통 편의를 위해 선박건조 비용 지원
- 접경지역 발전 특례
 - 자금융자, 각종 부담금 감면 및 세제상 지원, 각종 기금 활용
 - 토지수용 근거 마련, 인·허가 의제 처리 확대(21개 → 34개)
- 접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유기적 추진체계 확립
 - 국무총리 소속 정책심의위원회, 민관 발전협의회, 발전기획단 구성·운영

의에서 정부입법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차례 거둬들인 토론과 조정과정을 거쳐 2010년 10월 4일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11년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접경지역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라는 상징성을 활용한 접경지역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범위를 읍·면·동의 단위지역 개념에서 기초생활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개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한편,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8.12.15	■ 초광역권 개발 추진구상 발표
2008.11.28	■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2009.12.2	■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확정
2010.1.26	■ 정부입법 추진계획 확정
2010.2.7	■ 접경지역 시도계획(안) 작성 지침 마련
2010.2.24	■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계획 입안
2010.2.25	■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 부처 협의
2010.4.14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2010.8.27	■ 법제처 심사
2010.9.28	■ 국무회의 의결
2010.10.4	■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2011.4.29	■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2011.5.19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공포
2011.6.13	■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2011.6.15	■ 관계부처 협의 및 주민공청회 결과 반영
2011.7.27	■ 제1차 접경지역정책심사위원회 개최, 발전 종합계획 심의·확정

9. 군인사망 보상금 및 서훈제도 개선

1) 군인사망 보상금 제도 개선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방위하다가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은 민간인 사망 보상금보다 상당히 적은 3,600만원에 불과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군은 장기복무자가 아닌 병, 하사관 및 장교가 순직할 경우 군 자체모금 등을 통해 유가족에게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가족의 박탈감을 달래왔다.

특히 2006년 3월 24일에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을 포함하여 경호, 대테러 작전, 산불 진화, 법정 전염병 치료 등 위험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순직하면 순직유족연금⁹⁾과 순직유족보상금¹⁰⁾을 지급하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으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군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위험직무순직보상금의 신설을 추진했으나, 예산당국에서는 군의 모든 업무는 위험직무이므로 순직보상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군인사망 보상금 개선방안은 담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가.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고에 따른 군인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군인사망자의 경우 전사, 순직, 일반사망자로 구분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며, 전사가 아닌 경우 민간사망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보상금(최저 3,600만원, 사병)이 지급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2010년 4~5월 실무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나. 관계부처 의견 조정

실무대책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실태와 1년간 필요한 예산을 조사했다.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병순직 시 사망보상금이 3,656만원으로 민간인 사망 보상금 지급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민성금과 군 자체 모금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실태를 확인했다.

9) 제4조(순직유족연금) ①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②순직유족연금의 금액은 순직공무원이 20년 미만 근무한 자인 때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자인 때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0) 제5조(순직유족보상금) ①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해 가운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임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경찰공무원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2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망보상금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순직 장병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평균 105명으로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순직자수】

(출처: 국방부)

연도		평균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직	소계	105	525	118	107	111	112	77
	장군	0.4	2	-	1	1	-	-
	영관	10.8	54	21	13	8	5	7
	위관	7.8	39	7	9	7	11	5
	준사관	3.2	16	2	4	3	4	3
	부사관	34.4	172	34	22	44	42	30
	병사	48.4	242	54	58	48	50	32

또한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하는 위험직무(국방부에서 제시하는 담당업무로 경찰·소방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사망자의 숫자를 확인한 결과, 5년 평균 3.8명으로 이 역시 많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험직무 순직자 현황】

(출처: 국방부)

연도	평균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3.8	19	6	5	4	4	-
영관	1.6	8	3	2	2	1	-
위관	0.8	4	1	1	1	1	-
준사관	0.4	2	-	-	-	2	-
부사관	1	5	2	2	1	-	-

관계부처 협의 시 기획재정부는 병 재해(사망) 보상금의 상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나, 급격한 상향조정은 기존 순직자 및 직업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위험직무순직 신설의 경우 업무특성상 군인의 전사에 해당하는 개념이 위험직무순직으로 볼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아울러 군의 경우 일반사망을 보상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안부 등에서 군의 업무특성상 모든 업무가 위험직무이므로 공무 중 사망이 모두 위험직무순직이 되므로 군인사망보상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이에 군과 공무원의 보상체계를 동일한 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병 사망 보상금의 경우 민간의 보상금 수준을 감안한 금액을 제시하여 관계부처 협의가 되었으나, 실무대책회의에서 이를 결정하기보다는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는 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위험직무 순직의 경우 군 업무 특성상 모든 업무가

위험직무가 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에서 공무원의 위험직무 범위를 기초로 대상을 선정하여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업무를 대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군의 위험직무 업무내역

-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나 잠수작업을 하거나 수중 파괴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를 수행하다 입은 위해
-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패스트로프 훈련을 하다가 입은 위해
-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벽암지상륙 임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비무장지대나 접적(接敵)해역에서 수색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범인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 경호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 전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임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활동(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위해
-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 산물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위해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2010.5.12)의 논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0.5.20)에서 병 사망보상금은 민간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최저 보상한도를 상사 18호봉의 36배로 하고, 보상체계도 군과 공무원을 동일한 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순직을 신설하고 일반사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 제도개선 결과

제도개선 결과, 군복무 중 순직한 장병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간부와 병 모두 현행 중사 최저호봉 월보수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하여 2010년 기준 사망보상금 하한선이 3,65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249% 인상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하여 생명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하한선은 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공무 중 사망 시 보상금 개선내역】

구분	현행	개선
사병	3,656만원	보상금 9,072만원(현행의 2.5배 인상)
상사 18호봉 미만 보수월액수령 간부	3,656만~9,072만원	9,072만원 이상 * 맞춤형 복지 보험금 1억원 별도 지급

【 군인사망보상금 개선제도 현황 】

군인			공무원		
구분	일시보상금	비고	구분	일시보상금	
전사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약 2억원)	신설	위험직무 순직	대간첩 작전 중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약 2억1,300만원)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 (약 1억5,000만원)			기타위험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약 1억6,400만원)
공무 중 사망	보수월액의 36배		공무 중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일반 사망	보수월액의 12배 (1,200만~6,900만원)	폐지			-

2) 서훈제도 개선

무공훈장·보국훈장 등 국가에서 훈장을 수여하는 경우 공적이 우선시되지 않고 대상자의 계급이 우선시되어 특별한 공적에 적합하지 않은 훈장이 수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천안함 폭침에 따른 천안함 수색작업과정에서 사망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경우 보국훈장은 장기 복무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의미가 없으며,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고 한주호 준위에게 수여할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국방부가 고 한주호 준위에게 수여한다고 발표했던 ‘보국훈장 광복장’은 “군에 오래 근무하면 누구나 받게 되는 훈장”이라고 언론과 국민들은 평가했다. 보국훈장 광복장은 33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면 받는 훈장이기 때문이었다.

2010년 4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에 따른 희생자인 고 한주호 준위에게는 여론 등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으나, 천안함에서 전사한 장병들에게 어떤 무공훈장을 수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실무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군 서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차적으로 훈장수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안전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회의에서 토론했다. 기본적으로 훈장수여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인식하고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서훈제도 개선방안이 수용되었다.

그 결과 현행 무공훈장 수여기준인 ‘전투참가’ 이외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 또는 접적지역(DMZ, NLL 등)에서 전투에 준하는 작전 등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자’로 법률개정(2011.8.4 개정 완료)을 추진했다.

보국훈장의 경우 계급(직급)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추서 등) 경우 ‘특별한 공적’의 기준을 구체화¹¹⁾하고, 각 부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계급·공적 등을 감안하여 훈격의 상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군인사망 보상금 및 서훈제도 개선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0.3.26	■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2010.3.30	■ 한주호 준위 구조작업 중 사망
2010.4.2	■ 2차 관계장관회의 개최 - 고 한주호 준위 훈장 훈격에 대하여 논의
2010.4.9	■ 3차 관계장관회의 개최 - 사고관련 희생자 예우문제 논의
2010.4.16	■ 4차 관계장관회의 개최 - 사망·실종장병 보상·서훈문제 논의
2010.4.23	■ 5차 관계장관회의 개최 - 보상·장의 등 예우 계획
2010.4.27	■ 실무대책반 1차회의 개최 - 국민성금 등 사망자 보상방안 논의
2010.4.30	■ 6차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성금 배분방안 확정
2010.5.6	■ 실무대책반 2차회의 개최 - 장병순직 보상제도 및 서훈제도 개선방안 논의
2010.5.7	■ 7차 관계장관회의 개최 - 서훈제도 개선방안 확정
2010.5.12	■ 실무대책반 3차회의 개최 - 장병순직 보상제도 개선방안 논의
2010.5.19	■ 관계차관회의 개최 - 장병순직 보상제도 개선방안 확정

11) ①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안위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하는 등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
 ②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기술혁신 또는 국가 중요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위상 제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③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상과 같다고 인정하는 자

10. 군 의료체계 개선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 장병의 건강문제는 모든 국민의 큰 관심사인 만큼 최고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의 현실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군 의료체계 부실의 요인과 문제점은 예방활동보다 질병발생 후 치료에 치중하는 의료체계 상 우선순위, 신병의 경우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운 병영문화, GOP/FEBA부대 등 격오지 부대 장병의 진료 접근성 제한, 외진방식(후송 수단, 진료시간 등)의 경직으로 인한 비효율적 진료체계와 후속조치 과정 미흡, 장기군외관 부족에 따른 의료자원의 양적·질적 부족, '대대→연대→사단'의 다단계 진료체계로 진단 및 치료 지연 등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국무총리실과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군 복무 장병의 건강을 증진하며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장병이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하여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1년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뇌수막염을 감기로 진단·처방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무총리실·국방부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11년 5~9월에 5개월간 논산훈련소, 신병교육대, 청평병원, 전방연·대대 의무실 등의 의료현장을 방문하고, 토의 등을 통해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2012~20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질병의 사전예방'에서 '환자의 조기진단 및 신속한 후송', '양질의 치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관계기관 회의 등을 주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국방부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군 의료시설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국민과 장병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6명의 위원회¹²⁾를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모두 세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의 현장 점

12) 정부위원 : 국방부 차관(위원장),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군 의무사령관, 총리실·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관련 국장
 민간위원 : 최강원 수도병원 내과과장(전 서울대 교수),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 강대희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황세희 국립중앙의료원 홍보실장, 김승호 연세대 응급의학과 교수, 성명숙 한림대 간호대학원장

검을 통해 위원회는 '질병의 예방 → 조기 식별 →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활동 】

2011.5.26	제1차 회의	군 의료사고 조사결과 보고, 개선과제 토의
2011.6.15	현장점검	육군훈련소
2011.6.23	제2차 회의	간호·의료지원인력 확보방안
2011.7.13	현장점검	청평병원 및 수기사 현장 점검
2011.7.29	제3차 회의	군 감염병 예방체계 개선 등 4개 과제

【 추진위원회 발표 군 의료체계 개선과제(2011) 】

단 계	과 제	추진위 발표
예 방	1. 군 감염병 예방체계 및 관련환경 개선	7.29
	2. 군 의료전문 연구기관 설립	7.29
	3. 병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9.8
조 기 식 별	4. 치명적 질환 환자 식별체계	7.29
	5. 응급후송체계 개선	9.8
	6. 병사 진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병영문화 개선	9.22
치 료	7. 사단급 이하 진료체계 개선	9.22
	8. 단기군외관 동기 부여 및 교육 강화	9.22
	9. 장기군외관 확보 및 인사관리 발전 방안	9.8
	10. 의료지원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	9.8
	11. 사단의무대 이하 진료기록 관리 강화	7.29
	12. 군병원 역할 및 기능 조정	9.22
	13. 군 병원 보강 방안	9.22
	14. 민간병원 이용체계(현역병건강보험, 위탁진료) 재검토	9.8
	15. 재활치료 보강 방안	9.8

2) 「2012~20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

국방부는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의 제시 과제를 기초로 '예방에서 진단과 치료까지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질병의 사전예방 능력 강화,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 장병이 만족하는 치료 등에 중점을 둔 「2012~2016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일부 시험적용과 검토과정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가. 질병의 사전예방

① 예방백신 접종 확대

치명률이 높은 뇌수막염 예방백신을 선제적으로 도입(총 7종 → 8종)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감염병 종류를 기존 파상풍 외에 뇌수막염,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등 4종으로 확대했다.

구 분	변동사항	접종량	예 산
수막구균	신규 도입 (전 입소장정)	30만명 (2012년 15만명)	연간 120억원 신규 (2012년 하반기 60억원)
계절독감	동절기 입소장정 ⇒ 전 장병	10만9,000명 ⇒ 64만명	연간 52억9,000만원 (기존 10억9,000만원, 42억원 추가)
유행성이하선염	4~6월 입소장정 ⇒ 전 입소장정	10만명 ⇒ 30만명	연간 28억2,000만원 (기존 9억2,000만원, 19억원 추가)
파상풍	백신제형 변경 (T ⇒ Td or Tdap)	41만3,000명	연간 33억8,000만원 (기존 14억3,000만원, 19억5,000만원 추가)

② 위생적인 병영환경 조성

개인위생용품의 수량 제한, 공용위생시설의 부족 등 군 장병의 생활환경이 공중보건학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군 감염병 발생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감염병 관리 담당자가 빈번히 교체되고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점도 감염병의 예방체계가 미흡한 원인이다. 이에 예방중심의 위생적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훈련병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샤워·세면시설 확충, 온수공급 확대 및 세탁공장 증축(183억), 매트리스 교체, 피복류 추가 지급(29억원), 군화건조기, 세탁기/건조기, 식기소독함 등 확충(80억원)이다. 또한 방역 취약부대(GP, GOP 등)에 방역기 및 개인방호물품(모기 기피제 등) 지급을 확대하고 공동사용시설 위생소독을 규정화하여 취사 시설은 2개월 1회, 생활관은 3개월 1회 위생소독을 실시토록 했으며, 전문 방역업체 외주 및 소독약을 추가 보급했다.

군 감염병의 관리는 사단급의 군의관, 간호장교, 수의장교부터 기타 대대단위까지 다양한 역할과 신분을 갖고 있는 관리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신분의 감염병 관리 담당자에게 그 신분과 역할에 맞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감염병 관리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군 감염병 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육군훈련소 내에 예방의학실을 창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질병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적인 감염병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토대를 구축했다.

③ 군 의료 연구역량 강화

현재 군 의료 연구기관인 국군의학연구소는 군 특수분야에 대한 의학전문 연구역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군의학연구소를 2012년 1월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적·질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군의학연구소 센터별 설립목적 및 주요 추진과제 목록】

군 감염병 센터	화생방전 센터	군 특수환경 센터
감염병 예방관리 전반의 기초조사·연구 수행	화생방전 대비 관련 기초연구 및 대책수립	전투력 유지발전에 적합한 환경연구
감염내과 전문의 및 환경 관련 전문가 등 배치	생리학 및 병리학 전문의 등 전문연구원 배치	미생물 전문의 및 환경관련 전문가 등 배치

나. 조기진단 및 신속한 후송

① 장병 진료접근성 향상

신병이 자대 배치를 받으면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에게 건강상담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여 이등 병 기간 동안 2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보장했다. 육군은 소속부대 군의관이 연대행정업무 통합관리체제를 활용해 장병들의 외래진료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휘관이 소속 부대 장병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약, 안정가료, 재진일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IPTV를 활용한 원격진료사업을 진행함으로써 GOP 등 격오지 부대 장병들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② 병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장병들의 건강 상태를 유지 및 증진하여 제대 후 건강한 국민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상병 대상 건강검진을 2012년에 시범 도입했다. 육군은 전방 9개 사단 및 후방 10개 사단을, 해·공군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상병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수술을 받은 사례도 있다.

【2012년 상병 대상 건강검진 시범 대상】

구 분	시범 대상	
육 군	전 방	1·3군 예하 9개 사단 의무대
	후 방	2작사 예하 10개 사단 및 국직부대 지원 군병원
해 군		14개 함대급 의무대(포항병원), 15개 전비대급 의무대
공 군		15개 전비대급 의무대

【 2012년 상병 건강검진 시행결과 】

구 분	계	의무사	육군	해군	공군
대상인원(명)	6만3,297	2만3,277	1만4,300	1만4,670	1만1,050
검진인원(명)	4만5,968	1만4,888	1만2,146	1만50	8,884
검진율(%)	72.6	64	84.9	68.5	80.4

③ 응급의료체계 개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군내 응급상황 시 민간 인프라(119·1339)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5119'(군 응급환자 지원센터)와 '1339'(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 간 다자간 통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군 응급환자 접수 시 응급의료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국방부와 소방방재청 간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MOU를 체결함으로써 119구급대와외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사단급 이하 제대의 응급후송능력을 보강했다. 이로써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가 군내 중앙 응급통제센터로 기능하게 되어 제대별 응급의료시스템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다. 장병이 만족하는 치료

① 장기군요양 증원

장기군요양 확보를 위해 지원자격 완화, 인센티브 신설 등 실효성 제고, 민간병원 수준의 보수 현실화, 정년 보장을 비롯한 공공의료 종사자로서의 일반적인 메리트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군요양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1~5명 수준으로 가변적인 '사관학교 출신 위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탁 교육 대상인원을 확대했다.

【 군요양 및 장기군요양 현황 】

(2012.9 기준 / 명)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전체군요양	2,470	1,898	292	280
장기	107	72	13	22

【 장기군요양 수급현황 】

(2012.9 기준 / 명)

연도	현원	증감내역						
		증감 계	사관생도 위탁		장기지원		군 장학생	
			획득	손실	획득	손실	획득	손실
2010	97	△3	5	1	-	3	-	4
2011	105	8	9	-	5	4	-	2
2012	112	7	5	-	4	1	-	1

장기군요양의 보수수준을 현재 국·공립병원의 75% 수준에서 2014년까지 국·공립병원 101%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14년 이후에는 민간 병원 수준으로 급여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② 사단급 이하 진료체계 개선

과거에는 군 의료기관의 진료전달체계가 '대대·연대·사단'의 3단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비효율적인 다단계 진료체계로 인해 적시 진단 및 치료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연대·사단'의 2단계로 진료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제대별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2012년 6월 「국방 환자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신속한 진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

③ 군 병원 역할 및 기능 조정

장병 의료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군병원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피지원 병력의 76%가 전방지역에 집중되는 등 전방의 의무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방 및 수도병원에 외래, 입원, 수술환자의 70% 이상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백화점식 군 병원 운영을 지양하고 군 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차등화·특성화하기로 결정하고, 수도병원·대전병원·양주병원 등 3개 병원을 수술집중 병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④ 군 병원-민간 병원 협력강화

군 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민간 병원보다 우수한 의료능력을 보유할 필요는 없고, 정형외과 등의 다빈도질환과 중증외상 등 군 특수질환에 대한 특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2011년 '석해군 선장사건' 당시 그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군의 최상급 병원인 수도병원은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진료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민간 대학병원과 협력을 통해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브랜드파워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2012년 4월 서울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해 수도병원의 의료역량을 강화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수도병원 외 군 병원은 지역 내 대학병원과 협진체계 구축 및 「진료협력센터」를 설치하여 대학병원 교수 등이 순회진료를 하고, 중증환자는 협력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며,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신속한 민간진료 보장과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5.26	■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2011.6.15	■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육군훈련소 현장 점검
2011.6.23	■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2011.7.13	■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청평병원 및 수기사 현장 점검
2011.7.29	■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2011.10.14	■ 국가정책조정회의(2012~20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
2011.11	■ 용역버스를 활용한 외진서늘들 시범운영
2012.1.1	■ 군 병원에 「진료협력센터」 운영
2012.1.1	■ 주치의 개념 도입, 전입 신병 대상 군의관과 일대 일 건강상담 의무화
2012.1.1	■ 신병교육기관 교육훈련지침 개선
2012.1.1	■ 상병 건강검진 시행
2012.1.18	■ 국방부-소방방재청 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MOU 체결
2012.2.22	■ IPTV를 활용한 원격진료사업 시범운영
2012.3.31	■ 「군의(軍醫)업무 훈령」 제정
2012.4.1	■ 육군 응급구조사 300명 편제 반영
2012.4.1	■ 신병교육대대 및 육군훈련소 군의관 증원(1명 → 2명)
2012.4.3	■ 국방부-서울대학교병원 간 MOU 체결
2012.5.1	■ 육군훈련소에 예방의학실을 신설
2012.5.2	■ 국무차장, 군 의료시설 현장방문(9사단 의무대, 국군고양병원)
2012.5.4	■ '통합응급의료 상황조치 매뉴얼' 작성
2012.5.31	■ 군내 자해사망자 분류체계 개편
2012.6.15	■ 군 '생물테러 대응 의무지원 핸드북' 발간 배포
2012.7.6	■ 사단급 이하 개선형 구급차량 보급(총 84대, 육군 77대, 해군 7대)
2012.8.1	■ 간호군무원(15명) 군 병원 채용 및 간호장교 사단급 전환배치
2012.8.10	■ 군 식품 매개질환(식중독 등) 역량강화 세미나
2012.8.30	■ 의무학교-서울의대 학술교류 협약체결
2012.9.16	■ 간호군무원(16명) 군 병원에 추가 채용
2012.9.21	■ 의무학교, 군의료 리더 양성과정 개설
2012.9.25	■ 국군대전병원 의료기관 인증
2012.9.28	■ 「수도병원 중증외상센터 설립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12.10	■ 대한적십자사와 응급처치 교육 MOU 체결 협의

11.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지원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배경 및 개념

국가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의 장관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했다.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포함 25인 이내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지원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처리토록 했다.

가. 추진배경

2001년 국제자유도시계획 및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의거, 지방분권 및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국가발전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했다. 특히 자본·노동·상품·서비스·정보 등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각국의 경제특구 경쟁적 육성¹³⁾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지방제도와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60년대부터 검토가 시작되어 그간 많은 연구와 국제적 환경조성 특례가 부여되었고, 적은 인구나 면적,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정책실행 성과가 단기간에 극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를 육성하고 핵심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려는 계획

나. 특별자치도 개념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결정과 책임하에 지역을 경영하는 특별지역이다. 별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2. 시와 군 및 구

13) 중국 푸둥, 멕시코 마킬라도라, 아일랜드·네덜란드·싱가포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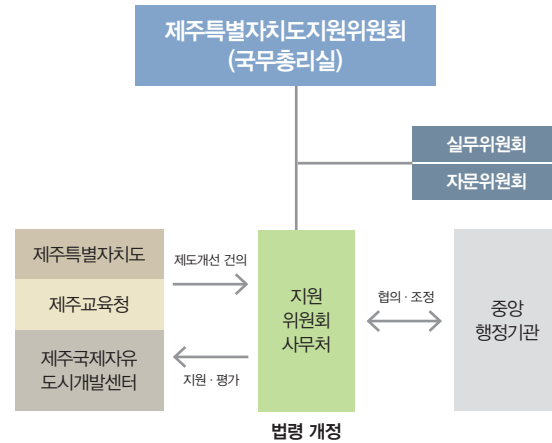
【 여타 특례도시와의 차이 】

	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지역특구
기본 개념	고도의 자치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 분권이 보장되는 지역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다른 경제활동의 예외조치허용 및 혜택이 부여되는 경제특별구역	산업 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자족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	정부규제를 특례적으로 완화하여 지자체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지역
대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6개 광역지역	시군 단위(6개)	시군구 단위(129개)
특례	권한이양 ○ 규제완화 ○	권한이양 × 규제완화 ○	조례지정△(지방세) 규제완화△(제한적)	자치특례△(제한적) 규제완화△(제한적)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 및 기능

가. 추진체계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처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나. 추진목표 및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산업육성,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아래의 과제를 추진해 왔다.

비전	목표	과제
친환경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 실현	③ 친환경 산업육성	3대 핵심산업(관광·교육·의료) 육성, 친환경 첨단산업발전(IT·BT·ET 등)
	↑	
	②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 최대 보장(No visa, No tax, No regulation)
	↑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고도의 자치권 인정 (특별자치도 설치, 고도의 자치권 부여)

【 기본계획 】

	국무총리실 기본계획(2005.10)	제주도 기본추진계획(2006.3)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의 자치권 부여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인사 자율성 강화, 의정활동역량 강화, 주민참여의 확대, 재정자주권 강화, 교육자치제의 선도적 실시,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 단계적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 규제의 Negative System 도입 ■ 핵심산업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 국제자유도시 부합된 교육서비스 제공,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육성, 첨단산업 육성, 청정1차산업 육성. ■ 산업인프라 및 여건조성 건설교통분야, 환경분야,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 추진체계 지원위원회 설치, 지속적인 권한이양, 단계적인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도 추진체계 구축 국무총리-제주도 간 협약 체결, 중앙전담기구 설치 ■ 특별법 후속입법 추진 특별법 관련 법령 제·개정, 권한이양에 의한 조례 제정 ■ 자치역량 강화 조직인사체계 혁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 설치, 제주자치도 재정운영기본방향 설정, 자체감사 강화, 의정역량 강화, 도민자치역량 강화, 교육훈련 전문성 강화 ■ 신설제도 운영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자치경찰제 시행, 특별행정기관 통합운영, 사회협력제도 시행, 공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교육자치제의 실시 ■ 핵심산업 추진 국제회의도시 지정, 제주특성 관광제도 마련, 청정 1차산업 육성, 제주연안 및 산지 효율적 관리, 국제교육환경 조성,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첨단산업 육성 ■ 국제자유도시 개발여건 조성 투자유치 기본환경 조성, 토지이용체계 개선,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생태도시구축체계 확립, 환경관리제도 강화, 도로관리 종합체계 구축,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제주형 보건복지기준 설정, 교통관리체계 정비 ■ 2단계 추진체계 구축 규제자유지역화 추진, 2단계 연구용역 ■ 특별법 홍보 및 도민공감대 형성

3)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가. 실질적 특별자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국무총리실에서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목표와 계획에 따라 실질적 지방분권(고도의 자치권)과 규제완화·국제기준적용(국제자유도시)을 마련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제주에서는 특별자치도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중심의 과제를 발굴하여 그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제주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의 의견조정을 통해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며 제주가 추진한 개선과제에 대한 성과와 평가의 과정을 통해 환류해나감으로써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정성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모두 3,839건의 제도개선을 완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분권자치의 새로운 모델과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다했다.

【 지금까지 제도개선 추진결과(요약) 】

구분	주요 내용	이양권한
1단계 (2006.2.21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특별법」 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자치조직·인사, 단일광역체제 구성 등 자치분권기반 확립 	1,062건
2단계 (2007.8.3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산업 육성 관련 특례이양 - 첨단과기단지·투자진흥지구 사업 출자총액 제한 적용 배제 등 	278건
3단계 (2009.3.25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 관광 3법의 제주도 적용의 배제, 도시개발 관련 규제 권한의 일괄이양 	365건
4단계 (2011.5.23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단위 일괄이양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119개 법률 	2,134건

나. 제도개선 추진 실적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에서부터 2011년 5월 개정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며, 이명박 정부하에서 추진한 두 차례(3·4단계)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단계 추진내용 】

1단계(2006.2) : 「제주특별법」 제정	2단계(2007.8) : 「제주특별법」 1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단계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새로운 행정시스템 도입과 조직·인사 등 자치기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추진했다. 주요 내용 ① 행정계층 구조를 개편하여 1도, 4시·군에서 1자치도, 2행정시 체제로 통합하고 350여 개 중앙정부 사무의 이양과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했다. ②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이양,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 외국교육기관 설치 허용,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 권한 등을 이양했다. ③ 새로운 분권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 설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직접선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④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치단체의 조세자율권을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단계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자율성 확대와 의료관광여건 개선 등 4+1 핵심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주요 내용 ① 관광산업을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 제5자유¹⁴⁾ 운수권 허용과 무사증 입국허가¹⁵⁾ 대상 국가를 169개국에서 180개 국가로 확대하고, 시내에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 확대(연 4→6회), 주류구입한도 완화(12만→40만원)하고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운영토록 했다. ② 교육산업의 국제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을 확대(5년간 30%, 이후 10%→50%)하고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설치기준 등의 권한을 이양하여 제주자치도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③ 제주를 의료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외국 영리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의료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환자 대상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를 허용하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14) 외국항공사의 제주 경유, 여객·화물 운송 허용
15) 2008.2 중국공안부, '제주' 지역에 한하여 무비자 출국 허용

① 3단계 제도개선 : 「제주특별법」 2차 개정(2009. 3)

1~2단계 제도개선은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권한 이양 중심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3단계 제도개선은 고도의 자치실현과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단계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규제정비를 전향적으로 추진했다.

2007년 4월 기준 관계부처 및 제주자치도의 검토의견 결과 거의 필수규제로 분류하고 있어 Negative System에 입각한 규제정비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Positive System 관점에서 핵심산업(4+1) 육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검토¹⁶⁾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규제개혁 내지는 규제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추진했다. 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분야별·기능별로 포괄적 일괄이양 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료 등의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도모했다.

첫째, 관광분야 법률 일괄이양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했다.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분야 3개 법률의 권한과 규제를 일괄 이양함으로써 법률이 규정하는 고객(관광객·사업자)의 실제수요와 현지 특성에 부합하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관광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 이외의 시내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휴양단지 내 일정금액 이상 휴양시설을 소유하는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교과과정·학생선발·교원임용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영리법인 초·중·고 국제학교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셋째,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절차 없이 7년간 조세를 감면하고, 지정대상업종의 확대(관광식당업 추가)와 내국인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조세감면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② 4단계 제도개선 : 「제주특별법」 3차 개정(2011. 5)

2008년 8월 헌법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법률단위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조기완성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했으며, 2008년 10월에는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개최되어 법률 단위 일괄이양 추진과 규제자유화 추진기반 및 제주도 자체규제개선 시스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확정되었다. 2009년 4월에는 법제연구원 주도로 헌법과 외국사례, 판례 등을 조사하여 법률단위일괄이양 배제기준 14개를 선정하고, 이양대상법률 162개

16) 「제주특별법」 제345조에 따른 규제자유화를 위한 전체 검토대상 규제(8,084건) 중에서 핵심산업 관련규제를 선별(5,129건)하여 관련기관 검토함

를 최종 선정했다. 총 1,161개의 법률을 전수 조사하여 외교·국방·사법에 관한 509개 법률을 제외하고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492개 법률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이양대상법률을 선정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2009년 9월에는 행정연구원에서 국내외 규제개혁사례와 제주도 규제사무(275개)의 검토 분석 등을 거쳐 규제개혁수단(모듈) 발굴과 활용 매뉴얼 개발을 위해 제주도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제4단계 제도개선은 기존의 개별단위 이양방식에서 탈피하여 법률단위 일괄이양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제자유화를 대규모로 추진했다. 이전에 실시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4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세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 이양했던 중앙행정권한(1,705건)에 비해 매우 큰 폭의 권한이양(2,134건)이 가능하게 되었다.

4단계 제도개선 주요 내용(2011. 5. 23 특별법 개정)

-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도입
 - 교육·문화·환경 등 2,134개 사무 일괄이양
 -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 제주자치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중사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근거 마련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 마련
 - 권한이양에 상응하는 규제 자유화시스템 구축 근거마련 등

* 이양 원칙하에 이양제외사무를 선정하는 Negative 방식

4단계 제도개선의 큰 특징은 Negative 방식의 규제개선과 필수규제(3단계 추진 시 검토 제외된 필수규제 사항 등을 포함함) 권한 이양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고, 행·재정적 지원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자치도 기반이 마무리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현행 헌법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이양(장관권한 → 도지사, 시행령/시행규칙 → 조례)했다는 데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분야 제도개선

행정시의 자치경찰대를 폐지하는 등 자치경찰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감에 감사위원 일부 추천권을 부여했으며, 감사위원장의 임기 명시 및 업무대행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자치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도입하고, 제주계정의 자율편성 3개 사업 중 2개 사업군을 1개 사업군으로 통합(시·도자율편성사업+균형발전사업 → 시·도자율편성사업)했다.

●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분야 제도개선

국제학교와 관련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내국인 입학자격을 확대하고, 외국교육기관(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각종 승인·허가 관련 권한을 이양했으며, 무상교육 등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대학 학교법인 설립허가, 재산·회계 및 고등교육기관의 지도감독 권한 등 각급 학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부여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권한·기준도 포괄적으로 이양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 모범도시의 조성 근거를

마련했으며,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권을 확대¹⁷⁾하고 풍력자원의 적정관리 및 조사, 풍력발전사업 허가, 풍력발전지구 지정·육성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제주자치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개선(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대신 도지사 확인서로 같음)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여건도 개선했다. 그 외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부지(일명 '알뜨르 비행장')를 제주에 무상 또는 대체부지 제공 조건으로 양여 가능토록 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지역 발전계획수립과 관리주체, 재정지원 등 근거도 4단계에서 마련했다.

4)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가. 주요 성과와 과제

정부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모델을 찾고 규제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추진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방대한 권한을 이양하고 각종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치경찰이 출범하고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되었으며, 감사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 의료가 개방되어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져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목표하에 역동적, 단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화 과정은 경험 부족과 더불어 주민자치의식의 미성숙, 행·재정적 능력의 한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네 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 규제 완화를 위한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으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다만 가시적·체감적 성과 및 핵심산업 관련 규제개선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어 그동안의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나. 향후 계획

2012년에는 제1~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된 권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2012.12)하여 2013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안을 확정(2013.6)하고, 하반기에 「제주특별법」을 개정(2013.9~)해나갈 계획이다. 5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제주도의 실질적 자치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치재원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에 대한 잔존규제의 완화와 특례도 재검점할 계획이다. 인적·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자치제도의 문제점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보강해나갈 것이다. 또한 네 차례의 제도개선 절차를 거치는 동안 조문은

17) 종전에는 2만KW 이하만 가능 → 장관과 사전 협의하에 2만KW 초과 가능

방대(460조)하고 복잡해진 「제주특별법」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알맞게 입법체계 개선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용역(2011.5~12) 결과,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2012.2), 지역주민의 공유를 통한 역량을 결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이루도록 분위기 조성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4단계 제도개선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8.10~11	■ 제도개선 TF 구성
2008.12~2009.1	■ 제주도 추진독려 및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수립 검토
2009.3	■ 제주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보고 및 계획안 확정
2009.4~6	■ 법률단위 일괄이양 기준 연구 및 이양방법 확정
2009.4~9	■ 제주도 규제자유화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009.7	■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특례과제 및 일반과제 요청
2009.7~10	■ 일괄이양 대상과제 및 특례과제 부처 협의
2009.11	■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2009.11	■ 제12차 제주지원위원회 서면 심의
2009.12	■ 제13차 제주지원위원회 개최
2009.11~2010.2	■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서면협의 및 과장급·국장급·차관 회의 등 단계별 협의
2010.1	■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제주도) - 관광부가세 사후환급,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 7개 분야 지정토론
2010.2~4	■ 「제주특별법」 개정안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 법제화 TF 회의(2회), 실무협의(2회)를 거쳐 입법체계 검토
2010.5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5~6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및 법안소위 회부
2011.4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 총 5차례의 행정안전위 소위 심사를 거쳐 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행안위 대안으로 통과
2011.5	■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시행

제2절 경제 분야

1.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육성

1)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전략, 신성장동력 육성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어왔다. 특히 중화학공업, 철강과 조선산업, IT산업 등 시대별로 산업의 중심을 발빠르게 전환하면서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여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요구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국가미래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 위기대처를 넘어 새롭게 성장 가능한 분야를 발굴, 시장선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부가 친환경 경제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다.

2)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은 기존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산업구분 방식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또는 서비스업종 간 융합(convergence)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한다는 목표하에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었다. 2008년 3월 출범한 민간중심의 신성장동력 기획단은 다양한 산업분야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같은 해 9월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을 팀원으로 하는 범정부 신성장동력 TF를 구성하여 민간기획단 건의과제와 각 부처가 추가로 발굴한 과제에 대한 실무검토를 약 3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보고회】



【신성장동력 17개 사업】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사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① 신재생 에너지 ② 탄소저감 에너지 ③ 고도 물처리 ④ LED 응용 ⑤ 그린수송시스템 ⑥ 첨단 그린도시	① 방송통신융합산업 ② IT융합시스템 ③ 로봇 응용 ④ 신소재·나노 융합 ⑤ 부바이오제약 (지원)·의료기기 ⑥ 고부가 식품산업	① 글로벌 헬스케어 ② 글로벌 교육 서비스 ③ 녹색금융 ④ 콘텐츠·소프트웨어 ⑤ 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융합관광

월간 실시했다. 이후 미래기획위원회 민간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9년 1월에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담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R&D 기술개발, 금융·세제지원, 인력양성, 시장창출 등 200개 세부추진과제를 부처별로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성장동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5월 26일부터 3일간 일산 컨텍스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신성장동력 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는 현대차, 삼성, KT 등 1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 국내외 석학들의 국제컨퍼런스, 기업지원정책을 설명하는 민관투자 교류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박람회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고,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톰 피터스 박사와 최태원 SK회장이 기조강연을 하는 등 산학연이 모두 모여 신성장동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신성장동력박람회 2009

3) 중간점검을 통한 강화전략 마련

2011년 정부는 2009년 이후 3년차에 접어든 신성장동력의 성과를 짚어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융합 트렌드 등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신성장동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2009년 이후 정부는 재정지원과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인력과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총 8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9개의 핵심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연구중심대학(WCU) 등 고급 R&D 인력양성, 21개 투자펀드 조성을 중점 추진했다.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일부 분야에서 상용화가 시작되고 투자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전기차 100% 국산화, 스마트십(Smart

【중점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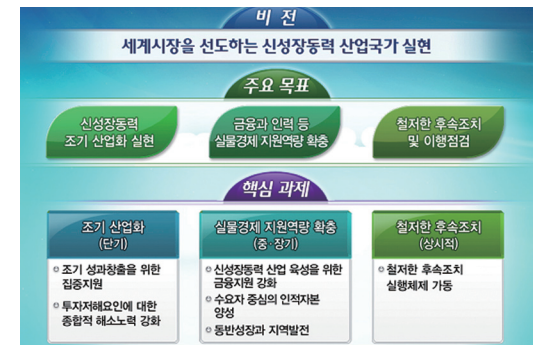
재정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간 총 8조8,000억원 재정 투입 (R&D 5조9,000억원 / 비R&D 2조9,000억원) - 2009년 2조 5,804억원 → 2010년 2조 8,148억원 → 2011년 3조3,973억원
육성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39개 후속대책 신속히 수립·추진 - SW(2010.2), u-헬스 (2010.5), 이차전지(2010.7), 신재생에너지(2010.10), 바이오시밀러(2010.11) 등
금융·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4조6,000억원 조성 (2011.3) → 7,345억원 투자 핵심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확대 - 고효율 LED칩 제조기술 등 9개 기술대상 : 공제비율 3~6% → 20%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등 투자촉진을 위한 37개 법령 정비 신성장동력 핵심규제 175개 발굴·개선(2009.10) - 건물옥상 태양광설치 허용, 친환경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신성장동력강화전략 보고대회

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정책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행점검 과정과 두 차례의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2011년 4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민간전문가와 부처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성장동력 추진과 관련하여 ①전략적인 선택과 집중 필요성 ②기업의 투자애로와 제도개선의 지원 ③금융지원 시스템 확충 ④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 부족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신성장동력 강화전략'이 발표되었다.



4) 대·중소기업이 공생 발전하는 토양 조성: 생태계발전형 프로젝트 선정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8·15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이라는 국정운영 철학을 발표하면서 '자본주의 4.0'이라는 글로벌 산업트렌드 속에서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신성장동력 산업에서도 그간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민간 양측에서 모두 제기되었다.

정부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전문가와 함께 건전한 기업생태계 육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성장과 창업 가능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생태계발전형 프로젝트'를 선정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제안한 20여 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 실무평가반¹⁸⁾ 검토, 평가위원회¹⁹⁾의 평가를 거쳐 프로젝트를 선정한 다음, 2011년 10월에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에서 최종 10개의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18) 연구원, 교수, 기업을 등 개별 프로젝트 전문가 중심으로 40여 명 내외로 구성

19) 개별 후보 프로젝트를 포괄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관련 산학연 대표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생태계발전형 프로젝트 주요 내용 】

프로젝트	주요 내용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육성(지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Ni-rich계(양극) 안정화 기술, 전해액 첨가제 개발 등 조기상용화가 가능하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소재 개발 적극 지원 기존의 수입된 부품·소재가 아닌 전기자동차용 30kWh급 리튬이차전지시스템 개발, 국산화된 소재·부품을 채택하는 수요연계형 전지제조기술 개발 지원 추진 등
고효율 박막태양 전지 기술개발(지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셀-모듈-장비-시스템의 value chain 간 공동R&D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open innovation 적극 추진, 투자효율성 제고 전방산업인 스마트 그리드(발전), 제로에너지 빌딩(건설)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신규시장 확보 지원 등
에너지 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 (지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과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과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모바일기기, 가전기기용 전력관리 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분의 국산화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신(新)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료·표준 등 원천부터 제품화까지 일괄 개발 등
스마트 LED 시스템 조명개발(지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시스템 조명을 구성하는 공통의 핵심부품-플랫폼-운영 등 전(全) 공급체계를 패키징화한 수요연계형 R&D를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LED조명을 시스템화하여 개발·중앙 제어 및 다양한 콘텐츠 디밍을 통해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추진 기반조성 등
해상풍력 수출 산업화 기반구축(지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MW의 부안-영광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을 위해 배후단지 기반구축사업을 2014년 이전까지 완료 총 9개 육·해상 풍력단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 4개 이상 단지를 개발사업에 연계 (2014년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등
막여과 정수산업 및 통합물관리 해외수출 지원(환경부/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까지 막여과 정수장 건립(중대형 4개소, 소형 19개소, 국고 1,455억원)을 통해 기술을 상용화하고, 향후 BTO사업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 추진 다수의 국내 적용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및 건설·운영사례 축적으로 해외진출 역량 확보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복지부/지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주도의 진출을 기본전략으로 하되 초기 시장형성과정에서 인프라 구축, 정부 간 협력(의료인 면허, 의약품 통관 등)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 국가유형별 시장분석을 통해 전략진출국 및 역점진출분야를 선정, 시범성공사례(pilot case) 조기창출 유도 등
스마트 콘텐츠 산업육성(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개발업체(중소기업), 콘텐츠 수요자인 기기·서비스 업체(대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시장창출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시대를 견인할 창의인재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민간주도 차세대 SW 플랫폼 구축 지원 (지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플랫폼 연관산업의 핵심 기반을 확보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R&D를 통한 SW플랫폼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미래시장 선도 역량 강화 등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 구축(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를 위한 중개·임상 연구 강화 줄기세포·재생의료 관련 인허가 등 제도 선진화 등 관련 인프라 개선 등

5) 업종별 전담관 지정으로 현장밀착형 기업애호체제 마련

2011년 5월부터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R&D부터 사업화까지 투자자 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전담관’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17개 동력별로 ①정책지원 수요가 높고 ②시장형성을 위해 우선지원이 필요하며 ③다수부처 관련사항으로 신속한 해결이 곤란한 1~2개 업종²⁰⁾을 우선 선정, 해당업종 소관부처 국·과장급으로 업종별 전담관을 지정했다. 업종별 전담관은 주기적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이 겪고 있는 구체적·핵심적인 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는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해당부처 소관이 아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도 소관부처 업종별 전담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측면은 간담회 등 기존 기업애호체제 방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6) 한·중·일 국제포럼 개최로 신성장동력 국제협력 강화

2011년 5월 개최된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3국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한·중·일이 이 분야의 노력을 주도해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스마트기기, 바이오 기술 등은 향후 시장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중·일 3국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경쟁과 협력이 모두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은 세계 GDP의 19%, 교역량의 18%에 이르는 경제력과 세계인구의 22%라는 풍부한 노동력 및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나날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기술, 투자, 인적교류 등에 있어 긴밀한 협력관계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2012년 5월,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공동으로 그간 3국이 추진해온 신성장동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조성 관련 3국 간 협력·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신성장동력 육성전략과 공생발전 한·중·일 포럼’을 개최했다.



【 3국 공동 신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

- ▶ 태양광, 친환경자동차 등 대형 공동프로젝트 추진
- ▶ 신산업 연구 및 기반 조성 위한 협력 자금 조성
- ▶ 한·중·일 FTA 추진 및 3국 정상회담 의제 상정
- ▶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및 국제표준 공동협력
- ▶ 신산업 협력 시범기지 구축

신성장동력 육성전략과 공생발전 한·중·일 포럼(2012.5.7)

20) LED조명, 전기차, 3차원 실감방송, 4세대 이동통신 등 24개 업종

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한·중·일 정부, 학계, 산업계, 8개국 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석학들의 열띤 논의를 통해 태양광, 친환경자동차 등 대형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 3국의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7) 향후 신성장동력의 나아갈 길

2012년 들어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성과를 종합점검하고 남은 임기 내 보완과제 발굴 등을 통해 차질 없는 마무리를 도모하는 한편,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신성장동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정부 신성장동력 성과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각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17개 동력별 성과를 토대로 간사부처(지정부, 기재부)에서 1차 평가를 실시했고, 국무총리실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점검위원회²¹⁾와 함께 보완사항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총괄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기존 점검과의 차별성을 위해 가급적 성과의 계량화에 중점을 두고 신성장동력 추진을 통한 경제적 성과 측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산업현장의 정책 체감도 파악을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신성장동력 분야별 주요 성과】

분야	주요 성과	
녹색 기술	태양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관생산체제(소재-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로 수출 증가 - 2007년 1억8,000만달러 → 2009년 17억3,000만달러 → 2010년10월 37억4,000만달러
	원전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원전 최초 수출(2009.12, UAE) - NF소나타급 100만대,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 수출 효과
	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초 40인치 LED TV 양산 성공(2009.6) 2010년 세계 2위 LED소자 생산국으로 도약하여 무역수지 흑자전환 - LED 무역수지 : 2008년 1억5,400만달러 → 2009년 1억7,200만달러 → 2010년 4억1,400만달러 10개 LED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러시아에 4년간 1조원 LED 계약 체결(2011.3)
	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Blue-On' 30대 출시(2010.9 핵심부품 100% 국산화)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용 이차전지 공급 - LG화학 → GM, Ford 등 / 삼성SDI → BMW 등에 이차전지 공급 - 수출 : 2008년 34억달러 → 2009년 41억달러 → 2010년 45억달러 → 2011년 53억달러
	플로팅 LNG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열더치셀로부터 LNG-FPSO 장기공급계약 체결(2009.7, 삼성중공업) - 향후 15년간 총 10척, 500억달러에 달하는 LNG-FPSO 독점공급

21) '생태계발전형 10대 프로젝트 선정' 이후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자문 및 생태계발전형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구성(위원장 포함 12명)

분야	주요 성과	
첨단 융합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폰 제조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11년 2분기 1위 등극 후 5분기 연속 세계 1위 유지 - 우리나라 스마트폰 세계시장점유율 : 2009년 4.2% → 2012년 2분기 37.1%
	RF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RFID리더 내장 USIM 세계 최초 개발, RFID 도입을 통한 생산이력관리 실시 (한미약품,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 스마트폰용 RFID 시제품 개발 완료(2010.1, SKT)
	스마트 선박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통신기술(SAN)을 세계 1위 해운사 선박 40대에 탑재(2011.3 현대중) - SAN(Ship Area Network): 선박 내 각종 항해장치 상태를 통합관리하고,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첨단 제어기술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용 로봇, 의료로봇 수요확대로 2011년 국내 로봇시장이 2009년 대비 2배 이상 성장 - 국내로봇생산액 : 2009년 1조202억원 → 2010년 1조7,848억원 → 2011년 2조1,464억원
	신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소재 등 10대 핵심소재(WPM) 기술개발 본격착수 - WPM(World Premier Materials) : 2011~2018 1조원 투자 프로젝트 꾸준한 신소재 개발 노력에 따라 소재분야 수출 증가 - 수출 : 2009년 563억달러 → 2010년 739억달러 → 2011년 916억달러
	바이오시밀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셀트리온(마크로젠 공동참여)의 '허셉틴'(유방암), 한화케미칼의 '엔브렐'(관절염) 등 제품 출시(2011~2012) - 매출 : 2009년 1조원 → 2012년 10조원 - 수출 : 2009년 1억달러 → 2012년 7억달러 주요 기업의 투자 : 삼성전자 2조1,000억원(송도), LG생명 7,000억원(오창), 셀트리온 6,000억원(송도), 한화 6,000억원(오송) 등
고부가 서비스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환자 유치 : 2009년 6만명 → 2011년 12만2,000명 해외환자진료 수익 : 2009년 547억원 → 2011년 1,809억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 유치 : 2009년 6만4,000명 → 2011년 8만9,000명 외국교육기관(누적) : 2009년 1개교 → 2011년 5개교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수출 : 2009년 23억2,000만달러 → 2011년 41억6,000만달러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 수출 : 2009년 73억8,000만달러 → 2011년 92억1,000만달러
	MICE·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 개최건수 : 2009년 347건 → 2011년 469건 외국인 관광객 : 2009년 782만명 → 2011년 980만명
	녹색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최초의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으로 역대 탄소금융 선도기반 조성

2012년 9월 5일 대통령 주제로 기업대표·학계·연구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보고대회에서는 신성장동력 정책추진 성과를 최종 평가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함으로써 그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향후 나아갈 방향²²⁾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산업계

22) 현 정부 신성장동력 역점 마무리 방안, 지식산업 발전 및 관련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글로벌 트렌드·경제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성장동력 제안 등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체로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①현 정부 신성장동력 역점 마무리 방안 ②지식산업 발전 및 관련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③글로벌 트렌드·경제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성장동력 제안 등 새로운 정책제언과 개선방안이 활발하게 제시되었다.

신성장동력 주요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민간기획단 발족(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경부 소관분야를 위주로 36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단장 : 서남표 KAIST 총장)들이 참여 ■ 민간기획단 자체조사, 민간수요 조사 등을 통해 6대 분야 21개 신성장동력 발굴(9월)
2008.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팀원으로 하는 범정부 신성장동력 TF 구성(9월) ■ 민간기획단 등과 각 부처에서 발굴한 「신성장동력」을 적절히 반영하고, 교육·금융 등의 서비스업을 중합,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발굴(12월)
20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 등 친환경 융합화를 준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비전 제시 - 시장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200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R&D 등 후속대책과 융합환경에 맞는 제도정비, 금융·인력지원 추진계획 수립 (200개 세부과제)
2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넘어 새로운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성장동력의 조기(早期) 산업화, 금융·인력 등 지원역량 확충방안 마련
20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발전형 10대 프로젝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에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 민간전문가의 심층검토를 거쳐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에서 확정
20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한·중·일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신성장동력 육성정책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
20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정책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남은 임기 내 차질 없는 마무리를 도모하는 한편,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신성장동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2.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방안 마련

1) 추진배경

보험범죄는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 등 강력사건과 함께 이루어지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전체 국민들의 보험금 추가부담으로 귀결된다 는 측면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한때 전 국민을 경악시켰던 강호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처갓집에 방화를 하여 장모와 전처를 살해하고 4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이나, 전직 간호사가 남편 명의의 4억5,000만원의 보험에 가입한 뒤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주사기로 마취제를 투여하여 살해한 사건 등 그 죄질이 악하고 사건의 치밀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민영보험 부문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을 2010년 기준 약 3조4,000억 원으로 추정(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공동연구)하고 있다. 이는 2006년 기준 2조2,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52.9%) 증가한 것으로, 연간 보험금 지급규모(27조4,000억원)의 12.4%에 해당한다. 이 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민영보험부문의 사기 규모 】

연도	구분	보장성 보험금(A)	보험사기 규모(B)	비율(B/A)	1인당	1가구당
2006	생·손보	16조298억원	2조2,303억원	13.9%	4만6,020원	13만7,737원
	생·손보	25조6,349억원	3조1,585억원	12.3%	6만3,924원	18만4,145원
2010	생·손보	27조4,156억원	3조4,105억원	12.4%	6만9,024원	19만8,837원
	(공제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연간 보험사기 규모추정 및 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12.4.25)

보험범죄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 험계약자의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험범죄는 금전적 피해를 넘 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특 히 대다수 국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부도덕화를 초 래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의 정직성 제고 노력 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 고 지속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했다.

2011년 1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대책」을 확정하여 2011년을 ‘보험범죄 추방 원년(元年)’으로 선포하고,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기 관 합동으로 민관 공동으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2) 범정부적인 보험범죄 수사·단속활동 강화

가.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중심의 수사·단속활동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먼저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 기관 합동으로 「보험범죄 근절대책(2009.6.19)」을 마련하여 2009년 7월에 관계부처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했다. 검찰·경찰, 국토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은 본부를 검찰에 설치했으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다각적 노력을 진행했다.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에서는 2009년 7월~2012년 9월에 323건의 보험범죄 사건을 접수해 대책반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각 지검의 전담검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활동을 전개했다.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접수한 혐의자료에 대한 분석기간을 단축하고 보험사기 단속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사기 혐의사항을 자체 발굴하고, 첩보사건의 입수 방법을 다각화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활동을 진행했다. 합동대책반에서 전국 단위의 기획수사를 전개한 대표적인 사례로, 환자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전국 37개 병원을 조사·적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은 이처럼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기획수사를 해서 다양한 유형의 구조적·조직적인 보험사기 혐의자료를 발굴하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고 국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보험범죄를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또한 보험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확대했다(2011.2). 18개 지검의 보험범죄 전담검사 24명 이외에도 8개 검찰지청에 보험전담검사 8명을 추가 지정하여 총 26개 지검·지청에 32명의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보험범죄에 대한 강력 단속 및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경찰청도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²³⁾했다. 이를 통해 2008년에 평균 5,312명이었던 보험범죄 관련 검거인원이 2009~2011년 연평균 1만910명(2012년도는 9월까지 누적 6,832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활동과 검거활동을 수행했다.

201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험범죄 단속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총 2,475건에 6,832명을 검거하고, 1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보험 범죄금액은 총 879억6,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허위입원(54%), 고의사고(24%), 허위사고(9%)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30%, 40대 28%, 50대 20%, 20대 14%순으로 나타났다.

나.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

보험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인 교통사고 허위입원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민관 합

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특별점검단을 편성하여 총 4회에 걸쳐 전국 496개 병·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2011.2~8)하고, 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병원 177개를 적발했다. 또한 지자체·보험업계와도 공동으로 전국 623개 병·의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2011.10~11)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30곳을 적발했다. 이러한 점검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부재환자 비율을 크게 낮추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2010년 교통사고 평균 부재율은 13.7%였으나, 2011년에는 8.3%로 대폭 낮아졌다.

향후에도 보험업계의 자체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불시점검·야간점검 등 점검을 강화하여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다. 보험범죄 조사 및 수사 역량 제고

정부는 보험범죄의 단속활동과 함께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단속인력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대책」(2009.6),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2011.1)을 통해 보험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인 보험범죄 아카데미를 활성화하여 일선 수사인력의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범죄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참가 대상도 전국 검찰 수사관·경찰 지능범죄 수사관·경찰 조직폭력 수사관·보험사 직원 등으로 확대하여 매회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보험사기 수법 및 관련 수사기법·자금추적 수사기법 등의 강의를 통해 일선현장에서 보험수사의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보험범죄 아카데미의 참석 대상을 일선 수사실무자급에서 검찰수사관 및 경찰간부급으로 확대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찰 간부급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보험범죄 수사기법·유형별 사례분석 등 다양한 연수를 포함한 보험범죄 아카데미에 경위급 이상 경찰 간부의 참여를 유도했다. 검찰수사관 대상으로도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수사능력을 강화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관 합동의 보험범죄 연구 활동도 활성화했다.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검찰·국토부·경찰·금융감독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금융보험학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2011.3)했으며, 이를 통해 유관기관 간의 수사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상호 연구자료를 공유했다. 아울러 생명보험협회가 주최한 '보험사기 방지 워크숍'에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도 참가(2011.6)하여 우리나라 보험범죄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간에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 밖에도 법무연수원 '기업금융범죄 수사실무과정'에 보험범죄의 유형별 사례 및 적발기법을 교과목으로 편성(2012.4)했다.



보험범죄 아카데미 개최

23) 1차 2009.3.23~5.31, 2차 2009.7.1~11.30, 3차 2010.8.1~10.31, 4차 2011.2.21~4.20, 5차 2011.9.1~10.31, 6차 2012.6.19~8.31

라.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수사인력에 대한 수사능력 제고와 함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정보처리 시스템 또한 대폭 개선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에서 2004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혐의자 선정 ②연계분석 ③혐의내용 확인 ④사건관리 ⑤통계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대폭 개선했다. 불량단체의 보험사기 개입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항목을 기존의 910개에서 1,294개로 42%가량 세분화하여 추가했다.

이를 통해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정비업소·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항목을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분석기능을 추가했다. 다양한 보험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과학적인 조사기법으로 신속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분석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적발하는 등 보험사기의 체계적·과학적 적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3) 광범위한 교육·홍보를 통한 보험범죄 예방기틀 마련

가. 현장 밀착형 예방교육 확대

당사자가 별다른 죄의식과 범죄라는 인식 없이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방지하고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도 확대했다. 의료 및 운수업 종사자·북한이탈주민·보험사 모집조직 등에 대해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북한이탈주민 등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도 제작·보급했다.

운수업자(159회, 2만9,758명), 새터민(25회, 1,950명), 범죄전력자(33회, 1,850명), 병·의원 원무담당자(1회, 80명)에게 보험범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주관 금융교육에 ‘보험사기 예방’을 추가(2011.3)하여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보험교육도 향상시켰다. 보험설계사의 의무와 설계사 연루 주요 보험사기 사례 등이 포함된 보험 모집종사자용 교육자료도 제작·배포(2011.7)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올바른 보험질서 정착을 유도했다.

나.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

정부는 이러한 보험사기의 근절 필요성과 대처요령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011년 8~9월에 라디오 캠페인과 TV 기획시리즈 방송 등을 했으며, 보험사기 적발실적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주요 언론매체의 기획보도를 지원(기사 참고자료 제공, 합동 취재 등)했다. 또한 보험사기 추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2011.6), 행안부(자치행정과)의 반상회보에 보험범죄

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안내하고 대처요령과 신고방법 등을 소개(2011.7)해 보험범죄 근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다. 보험범죄에 대한 신고 활성화

정부는 보험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보험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2011년 2월, 병원·정비업체 등에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과 신고포상제도 등을 안내한 리플릿 3만부를 배포하였고, 보험사별 보험범죄 신고센터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미비사항에 대해서도 보완 지도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강화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고포상제도 안내에 따라 구체적이고 사실개연성 높은 제보가 늘었으며, 특히 방화 및 조직형 보험사기와 관련된 제보로 고액 포상금(5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제보자도 증가했다. 전체적인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2010년 3만여 명, 2011년에는 7만여 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러한 제보를 보험범죄 적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보험범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내역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포상금(만원)	13,612	31,049	75,815	81,801
신고자(명)	166	334	1,171	1,299
인당 평균포상금(만원)	82	93	65	63

자료 : 금융감독원

4) 앞으로의 추진방향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보험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한다는 자세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검·경,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적극적 수사단속·수사역량 강화·보험범죄에 대한 대국민 안내홍보 등을 통해 보험범죄는 근절하고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는 보험 본연의 순기능은 살리는 등 정직한 보험질서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다.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방안 마련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9.3.10, 3.26, 5.7	■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2009.6	■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합동 「보험범죄 근절대책」 마련 (2009.6.19)
2009.7	■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중앙지검 내 설치
2009.3.23~5.31	■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1차)
2009.7.1~11.30	■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2차)
2010.1	■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합동 「보험범죄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수립·시행 (2010.1.26)
2010.2	■ 금감원 보험사기인공지능시스템 개선
2010.8.1~10.31	■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3차)
2011.1	■ 국무총리실 주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2011.2.21~4.20	■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4차)
2011.2	■ 병원, 정비업체 등 보험사기 신고포상제도 안내한 리플릿 배포
2011.2	■ 26개 지검·지청에 32명 '보험범죄 전담검사' 지정 완료
2011.2	■ 보험사별 보험범죄 신고센터 운영실태를 전수조사
2011.2~8	■ 전국 병·의원 부재환자 점검 실시(금감원·보험사)
2011.2, 5, 8	■ 보험범죄 아카데미 경찰 간부 참여
2011.3	■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워크숍' 개최
2011.5	■ 국무총리실 주관, 보험사기 근절 추진실적 점검회의
2011.6	■ 신고포상금제도안내 강화(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
2011.6	■ 보험협회 주최 '보험사기 방지 워크숍'
2011.8.29~9.2	■ 보험범죄 아카데미 개최
2011.9.1~10.31	■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5차)
2011.10	■ 국무총리실 주관, 보험사기 근절 추진실적 점검회의
2011.10~11	■ 전국 병·의원 부재환자 점검 실시(지자체·금감원·보험사)
2012.2	■ 국무총리실 주관, 보험사기 근절 추진실적 점검회의
2012.6~8	■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6차)
2012.6, 9, 10	■ 보험범죄 아카데미 개최

3.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

1) 부산저축은행 문제와 금융감독제도 개선 요구

2011년 2월 금융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시작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온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그동안 건설사 대출 사업인 PF사업(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적으로 나선 저축은행들의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결국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영업정지 조치로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원금손실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는 단순한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소홀, 비리 및 유착 등이 드러났으며 결국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수차례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차명을 이용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및 불법대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독부실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또한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 수사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불법 여신과 분식회계에 공모한 혐의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현실로 밝혀지자 개선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었다.

2) 금융감독 혁신의 본격 추진

가. 금융감독 혁신TF 운영

금융감독원의 자체 쇄신방안 발표(2011.5.4)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대통령 특별지시(2011.5.4 금융감독원 방문 시)로 저축은행 감독을 포함한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감독혁신TF」가 구성(2011.5.9)되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총 9차례에 걸쳐 TF회의를 개최²⁴⁾

금융감독 혁신TF(2011.5.9 출범 기준)

- 공동팀장 : 국무총리실장, 김준경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 팀원
 - 민간(6명) : 김경수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 김홍범 교수(경상대 경제학과), 선우석호 교수(홍익대 경영학과), 신인석 교수(중앙대 경영학과), 정영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명현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정부(5명)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4) 1차(2011.5.9), 2차(5.16), 3차(5.20), 4차(5.27), 5차(6.3), 6차(6.10), 7차(6.21), 8차(6.26), 9차(6.29)

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TF에서는 관련 전문가, 업계 및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²⁵⁾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했다. TF에서는 당초 2011년 6월 중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8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나. 저축은행 국정조사(2011.6.29~8.12)

국회는 저축은행 부실발생에 대한 원인과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실책임, 저축은행 관련 정책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저축은행 부실 재발방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3)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원인

가.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적 측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저축은행은 사외이사 및 감사 등의 내부통제제도를 통한 경영건제가 원천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는 등 대주주발(發) 경영부실문제²⁶⁾가 지속 발생했다.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대출, 저신용자 신용대출 등 고위험 여신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존재했다.

또한 은행권은 대기업의 자금수요 부진 및 여신금지업종²⁷⁾ 폐지(1998.1) 등 금융자율화 조치에 따라 여신업무를 대기업 중심에서 개인 및 서비스업 등 저축은행의 영역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이 저축은행의 가계여신 위축과 함께 전체 여신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은행 및 저축은행의 여신시장 점유율 추이(%)】

연도		1995	2000	2005	2010
구분	은행	36.5	55.7	70.0	68.2
	저축은행	6.2	2.8	4.1	4.5

자료 : 한국은행

한편 저축은행들도 금융규제환경의 급변과 이종 금융기관 간 경쟁심화로 고유의 안정적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한 채 규제완화정책에 의존하여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펀드 등 고수익·고위험자산에 편중 운용²⁸⁾ 함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퇴색하고 있었다.

25) 금융업계(7.14):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탁중앙회
 연구기관(7.20): 한국금융연구원, 한은경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7.21): 소비자시민모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원

26) 영업 정지 저축은행 16개 중 12개가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에 기인(2003~2010)

27) 골프장, 콘도업, 주점업, 부동산업, 사우나 등 과소비, 항락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은행의 여신대상에서 제외(한국은행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28) 저축은행 총대출 대비 PF대출 비중: 2005년 18% → 2007년 26%, 저축은행 총대출 대비 개인여신 비중: 1999년 34% → 2010년 13%

나. 정책·제도적 측면

정부는 그동안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를 실시해왔다. 소유권이 소수에 집중된 저축은행에 대하여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예금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8·8요건(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하여 동일한 여신한도 규제를 완화(2006.8)하는 등 일련의 규제 완화조치는 저축은행 부실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당시 과도하게 PF대출을 취급했는데, 이는 무리한 외형확대로 이어졌다.

【저축은행 PF 대출 잔액²⁹⁾ 및 연체율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PF대출 잔액(조원)	6.3	11.6	12.1	11.5	11.8	12.2
PF대출 비중(%)	18.0	27.3	25.6	20.9	18.2	18.9
연체율(%)	9.1	9.6	11.6	13.0	10.6	25.1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은행보다 엄격한 수준의 감독이 필요했으나, 이용 고객층의 취약한 신용도 등 현실적 측면을 감안하여 자기자본 비율규제, 건전성분류기준, 충당금적립기준 등을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의 취약한 리스크 관리능력, 소규모 자기자본 및 거액여신 취급 등과 맞물리면서 경기변동에 따라 부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를 신속히 발동하는 대신 유예권을 행사하고 M&A³⁰⁾를 지원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는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저축은행 관련 정책 변화】

구분	주요 내용	비고(부작용)
은행권 여신금지업종 규제 폐지(1998.1)	은행권 여신제한 대상 폐지	저축은행 고유시장이 시중은행에 잠식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2001.1)	2,000만원 → 전액 → 5,000만원 - 1997.11~2000.12, IMF 금융위기	도덕적 해이 조장
명칭변경(2002.3)	상호신용금고 → 상호저축은행	"
8·8 클럽 도입 (2006.8)	저축은행 여신한도 확대 - 80억원 이상 → 자기자본의 20%	PF대출 확대 요인의 하나로 작용
부실저축은행 자율 M&A 유도(2008.9)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 허용, BIS비율 산정 시 인수된 저축은행의 연결기준 한시 적용 배제	저축은행 대형화, 부실 규모 확대

29) 2008년, 2009년, 2010년 중 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된 PF대출 각각 3,320억원, 1조1,805억원, 3조6,990억원 등 총 5조2,115억원은 제외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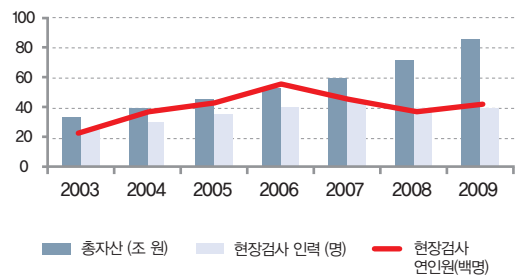
30) 2003~2010년 예보기금은 매년 연평균 3,535억원의 적자 기록

한하여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는데, 감독당국은 예보기금이 부족한 현실³¹⁾을 감안하여 당장의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유예제도를 활용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 규모 확대를 초래³²⁾하기도 했다.

다. 감독·검사상 측면

국제적인 금융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와 금융혁신 필요성에 따라 검사·감독이 느슨해진 측면도 있었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은 출자자대출 등 적발을 위하여 현장검사가 필수적이거나, 현장검사 인력은 2006년을 정점으로 현저히 감축되었다.³³⁾ 2005년 이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및 금감원의 상시감시 강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중심의 감독체계 추진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장검사(on-site examination) 축소를 추진³⁴⁾한 것도 사실이었다. 검사인력 감축, 감독과 검사부분의 통합 운영 등의 영향으로 2008~2010년에는 저축은행 업무 위반(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대한 제재건수도 크게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총자산과 현장검사 인력】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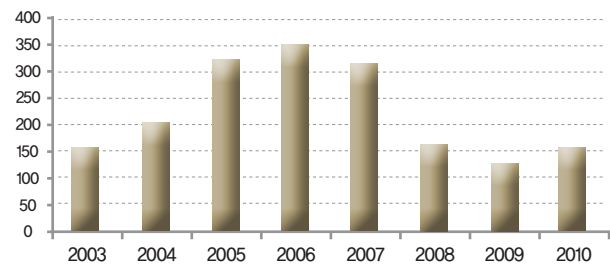


현장검사 축소와 함께 금감원 저축은행 담당부서 내 동일인 장기근무, 금감원 퇴직직원의 유관회사 재취업 관행 등으로 피검기관과의 유착현상도 부실검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저축은행 담당부서는 빈번한 금융사고 처리 등으로 금감원의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우수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었다.³⁵⁾ 저축은행 내부에서는 순혈주의, 폐쇄적 인사운영 등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가 작

동하지 않아 직원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도 인력이 제한(2008~2010, 담당자 1명)되어 있어 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어려웠다.

【저축은행 업무위반에 대한 제재 추이(건)】

자료: 금융감독원



31) 감독당국은 당초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 등 유인 제공을 통해 은행에 의한 부실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했으나, 은행의 인수포기로 대형 저축은행에 의한 부실저축은행 인수로 귀결(2008.9.26)
 32)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유예, M&A 후 PF대출 등 고위험 여신이 급증하는 등 도덕적 해이 심화
 33) 현장검사 연인원: 2006년 5만2,900명 → 2008년 3만7,100명 → 2009년 3만8,100명
 저축은행 자산총액: 2007년 53조2,000억원 → 2008년 64조원 → 2009년 75조원 → 2010년 86조원(6월 말 기준)
 34) 당시 '원칙중심(principle-based)' 감독 등 세계적 규제완화 분위기도 서면점검을 중시하는 감독·검사방식 전환에 일조
 저축은행 전담검사 인력: 2007년 45명 → 2008년 30명 → 2009년 29명 → 2010년 30명
 35) 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저축은행 담당부서 출신 직원 중 부원장보 승진자 전무

4) 금융감독 혁신방안 발표(2011.9.2)

정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2011년 9월 2일 발표했다.

가. 감독·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 제고

권역별 조직(은행, 보험, 금융투자)을 기능별(검사, 감독 등) 조직으로 전환하여 검사 기능을 강화했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등 운영방식도 개편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의 유예결정에 있어 요건·절차를 구체화하고 예보의 서면의견 제출을 제도화했다.³⁶⁾ 또한 금융위의 임명직 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금융위 담당과장 재직기간을 확대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했다.³⁷⁾

나. 엄격한 내부 통제를 확립하고 폐쇄적 인사원칙을 타파

비리발생 위험부서에 대한 순환배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감찰팀을 감찰실로 승격하여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및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재산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감사 추천 관행도 철폐했으며, 재교육·퇴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외부인력 충원을 대폭 확대했다.³⁸⁾

다. 감독·검사 역량 강화를 통한 고도의 전문성 확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 전체 여신 내역(매월 제출)을 분석하여 이상징후 여신을 조기 파악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전문분야(IT, 회계 등)에 민간전문가 영입 및 외부위탁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저축은행, 대부업, 신용카드 등 금융사고 위험이 큰 감독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의 검사인력 및 금융위의 전담부서도 확대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라. 업무 관행·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재량권 남용 억제

검사 전(준) 과정을 관리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제재결과의 공개대상³⁹⁾ 및 공개수준⁴⁰⁾도 대폭 확대했다. 또한 피검기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권익보호담당역(금감원 국장급, 임기 보장)을 신설하는 한편, 감독 관련 법령·규정 등을 전면 정비하고 유권해석 내용을 대외공개하기로 하는 등 금융감독 업무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최소화했다.

36) 유예여부 결정시한(예: 2개월) 및 최대 유예기간(예: 3개월) 명시 등
 37)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고, 임기를 분산하여 순차적으로 교체
 38) 현행 총정원의 약 15% → 목표 예시 20%(모든 부서별 10% 이상)
 39) 현행 공개 제외 대상인 '기관·개인주' 등 경징계까지도 공개
 40) 제재대상 사실, 조치내용, 관계법규 등 요약 공개 → 전체 공개

그리고 예금자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인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급금 지급 소요기간도 2주에서 4영업일로 단축했으며,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기능·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⁴¹⁾했다.

마. 변화된 금융감독 시스템의 효과적 정착 및 제도화 지원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감독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외부인사 중심의 상시평가기구를 금융위에 설치하여 검사·감독 업무를 관리토록 하는 한편, 재정부·금융위·한은, 금감원·예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법제화(대통령훈령 등)하여 공동검사·정보공유, 금융·외환 시장 분석 및 리스크관리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결정했다.

5) 금융감독 혁신 추진상황(2012년 10월 말 현재)

정부는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른 세부과제를 각 관계기관에 제시하면서 각 과제를 성격에 따라 2011년 하반기 및 2012년 상반기까지 이행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되며 이행이 완료되었다.⁴²⁾

감독·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 제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금융권역별 조직체계에서 기능별 조직체제로 전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권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금융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금융감독원),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금융위) 등의 과제를 추진 및 완료했다.

감독기구의 엄격한 내부 통제 확립 및 폐쇄적 인사원칙 타파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은 퇴직자 취업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및 인사 규정(금융감독원)을 개정했고, 비리직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 규정 및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감찰인력 보완, 강력한 퇴출제도 마련 등을 완료했다.

감독·검사 역량의 제고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 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당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검사기초·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검사인력 교육을 강화했다(금융감독원).

업무 관행·절차 개선을 통한 금융감독기구의 재량권 남용 억제와 관련하여 검사 및 영업정지 이후 대응 매뉴얼 정비·제정(금융감독원), 검사진행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검사종합관리시스템 구축(금융감독원), 검사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제도 도입(금융감독원), 피검기관 방어권 보장, 검사 사전통지 의무화, 진술내용 관리 강화 및제재내용 공개 확대 방안을 위한 검사 및 제재규정의 개정(금융위원회) 등의 과제가 완료되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부 과제들은 중장기적 법령 및 관계 규정 제·개정 관련 사항으로 다수의 관련기관 협력이 필요해서 지연되고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큰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혁신방안 마련 추진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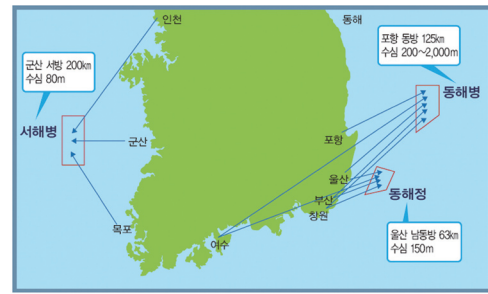
일 자	주 요 내 용
2011.5.4	■ 이명박 대통령 금감원 방문(오전), TF 구성 지시
2011.5.9	■ 기자 브리핑(장관, 민간팀장) ■ 제1차 회의(Kick-off 회의) 개최(16:00~18:20)
2011.5.13	■ 정책위의장 보고(국무총리실장)
2011.5.16	■ TF 2차 회의(16:30~19:10)
2011.5.18	■ 정무위 간사 보고(국무총리실장)
2011.5.20	■ TF 3차 회의(15:00~19:30)
2011.5.27	■ 10:00 정무위 현안보고(국무총리실장) ■ TF 4차회의(TF 활동 1차 연장 협의, 15:00~21:50)
2011.6.3	■ TF 5차 회의(15:00~19:40)
2011.6.9	■ 금융계 원로인사 오찬간담회(국무총리)
2011.6.10	■ TF 6차 회의(13:30~18:30)
2011.6.21	■ TF 7차 회의(14:00~18:50)
2011.6.26	■ TF 8차 회의(15:00~21:50)
2011.6.29	■ TF 9차 회의(15:00~16:40)
2011.7.20	■ 연구기관 조찬 간담회(국무총리실장)
2011.7.21	■ 금융소비자 오찬 간담회(국무차장)
2011.8.2	■ 저축은행 국정조사 시 TF에서 논의해온 금융감독 혁신 방안 주요 내용을 특위에 보고(국무총리실장)
2011.9.2	■ '저축은행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반영하여 금융감독 혁신 방안 발표(기자실에 보고서 서면 배포) * 8.31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서 채택

41)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검토
42) 다만 이 중 「저축은행법」 등은 일부개정 사항을 정부 입법으로 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폐기되어 현재 다시 정부 입법을 추진 중이다.

4.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금지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는 음식물폐기물처리폐수(음폐수) 등 해양배출이 허용된 폐기물을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해양배출업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지정된 해역(「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근거)에 최종 처분하는 제도이다.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해양배출이 금지되나 음폐수, 산업폐수·오니 등 해양환경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폐기물 해양배출업체(2012.5 기준 14개 업체)에 대하여 배출량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m³당 1,100~2,574원)을 징수하고 있다. 1988년 육상폐기물 투기해역(3개)을 지정한 이후 폐기물의 연간 해양배출량이 1991년 129만m³에서 2005년 993만m³으로 대폭 증가하여 국민건강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 폐기물 배출해역도 】



해양배출 육상폐기물은 고농도의 중금속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해저퇴적물에 축적되면서 해양환경 오염을 가속화했다. 또한 축적된 폐기물을 홍계, 고등 등 저서생물⁴³⁾이 섭취함으로써 수산업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⁴⁴⁾

【 배출해역 현황 및 배출가능 폐기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7 】

구분	거리	면적(km ²)	수심(m)	배출가능 폐기물	누적배출(1000m ³)
계		7,937			123,857
서해병	군산 서방 200km	3,165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뇨, 유기성폐수 폐수처리오니, 동식물잔재물 음식물류 폐수, 폐젓갈 	37,089 (30.0%)
동해병	포항 동방 125km	3,583	20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뇨, 유기성폐수, 음식물류 폐수 수산가공잔재물, 폐수처리오니 동식물잔재물, 수저준설토사, 폐젓갈 	60,581 (48.9%)
동해정	울산 남동방 63km	1,189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뇨, 유기성폐수 수산가공잔재물, 수저준설토사 	26,287 (21.1%)

* 참고 : 서울특별시 면적(약 500km²)

배출해역은 동해병(포항 동방 125km), 동해정(울산 남동방 63km), 서해병(군산 서방 200km) 등 3개 해역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동해병, 서해병은 각각 한일 및 한중 간 중간수역에

43) 해저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총칭
44) 2007년 8월, 배출해역의 붉은대게 조업 금지

인접해 있는데, 중국은 1994년, 일본은 2007년에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을 법령으로 금지하여 환경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및 그 외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인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에 2003년과 2009년에 각각 가입했다. 현재 당사가 입국 중 유일하게 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해양배출하는 국가로서,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해양배출을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6년 3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하수오니·가축분뇨는 2012년부터, 음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대책에서는 연간 해양배출 허용량을 설정하여 해양배출 폐기물의 총량을 제한했다.

【 연도별 해양배출 허용량 및 배출실적 】

구분	199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허용량	-	-	900	800	600	500	450	400
배출량	129	993	881	745	617	478	448	397

대책 수립 이후 관련부처는 소관 폐기물별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육상처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했으며, 가축분뇨의 경우 처리의 책임이 있는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실시, 처리시설 예산지원 등을 통해 2012년 시행에 맞추어 준비했다.

그러나 하수슬러지의 경우 주민민원 등으로 인해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109개 공공처리시설 중 18개가 2012년 이후 준공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할 경우, 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다.

1)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

2011년 6월 기준으로 전국 465개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9,345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다. 하수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 】

구분	합계	육상매립	소각	재활용	해양배출
2010	8,449(100)	347(4.1)	1,495(17.7)	3,005(35.6)	3,602(42.6)
2011.6	9,338(100)	654(7)	2,063(22.1)	3,148(33.7)	3,473(37.2)

이에 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다소 늦어지고 있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70개 시설이 가동

중이었고 21개 시설은 2012년 내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역민원·공법 선정 논란 등으로 인해 19개소의 설치가 지연되었다.

【하수슬러지 공공처리시설 현황】

구분	계	2011년 말 운영시설			2012년 이후 준공
		소계	가동 중	2011년 말 준공	
개소	109	91	70	21	18
시설용량(톤/일)	1만2,287	8,963	6,929	2,034	3,324

한편 민간처리시설은 전국에 71개가 있었으며 처리용량 또한 하루 8,296톤으로 공공부문의 처리 부족분을 감당할 수는 있으나, 민간처리시설 이용 시 약 2배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2) 관련부처 간 이견

국토해양부에서는 2006년에 수립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12년부터 하수오니·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8)하고,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하수오니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거나 해양배출금지 시점을 육상처리시설 준공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1년 10월 규제심사 진행 중 양 부처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환경부에서 시행령 시행시기 및 예외적 배출규정 문구에 대해 이견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정책신뢰성·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해 종합대책에 따라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공공처리 부족분은 일시적으로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및 지자체 간 연계처리를 통해 육상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행 지연 시 해양배출로 인해 어업피해를 받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 및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계획대로 2012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하되, 비상시를 위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반면 환경부는 18개 지자체의 하수슬러지 공공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처리용량이 부족하므로 18개 지자체에서 하루에 1,547톤 분량의 폐기물이 처리 곤란한 상태가 된다고 보았다. 이를 민간위탁으로 육상에서 처리하면 지방비가 약 469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해양배출금지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예외적 해양배출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며, 재정자립도 50% 이하 지자체(12개)에 대해 완공 시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위탁 처리비용을 50% 지원(126억원 소요)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국토부 및 환경부 간 이견은 해양배출 금지 시 현실적으로 큰 부작용 없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견 조

정 시 현 실태를 분석하고 배출금지 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3) 총리실의 부처 간 이견 조정

국토부·환경부 간 협의에 있어 기준이 된 것은 처리가능 여부, 지자체의 비용부담, 준비기간 등이었다. 먼저 처리가능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공공처리시설 용량은 하수슬러지 발생량 대비 1,547톤/일이 부족하나 이는 민간시설 활용, 지자체 간 연계처리 등을 통해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용부담에 있어 비용이 비싼 민간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를 정책변경의 사유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준비기간에 있어서는 2006년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12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서 육상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온 점을 감안할 때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무총리실에서는 예정대로 해양배출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11년 11월 10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1차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 국토부·환경부 간 입장차이가 명확하여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에서는 직접 하수슬러지 공공처리시설이 미비된 18개 지자체의 준비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국무총리실 자체 점검결과, 2011년 기준으로 일일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9,338톤이나 전체 공공처리시설에서 8,963톤을 처리하여 일일 약 375톤의 처리능력이 부족(환경부 주장 1,547톤/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일일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조사한 지자체 중 충주·계룡·부여·익산 등 4개 지자체(139톤/일)는 예전부터 해양배출을 하지 않으며, 육상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하고 있었던 관계로,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민간위탁처리 시 전량 육상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점검결과를 근거로 2011년 11월 15일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2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현황자료를 공유하여 국토부·환경부 간의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의 일치를 이루어내고, 합리적인 해양배출 보완방안을 도출했다.

4) 조정결과 및 성과

두 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해양배출금지 시행 관련 시기, 예외조항 규정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하수오니·가축분뇨의 해양배출금지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해양배출의 예외규정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문구는 육상에서 현저히 곤란하여(요건), 지자체에서 요청을 할 경우(주체), 국토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여(방법) 배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조정결과】

개정안	조정결과
4.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배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품목별 처리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폐기물의 종류, 대상지역,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가. 육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육상에서의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것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할 것

환경부에서 주장한 육상처리비용 지자체 국비지원은 여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대부분의 미비된 지자체들이 내년도 소요예산을 이미 확보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을 하지 않되, 수도권 매립지 관련 부분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2012년도 원만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지자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시·도 관계자 회의를 개최(11.29)하여 지자체별 처리대책을 점검하고 건설 중인 공공처리시설의 조기준공 등 세부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하수슬러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2012년부터 운영)하여 여유용량이 있는 인근 지자체 시설을 활용하고 지자체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보완대책도 마련하여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금지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 수립 - 하수오니 및 축산폐수는 2011년까지 전면 투기금지 조치
2011.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1.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규제영향평가분석서 제출
201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이견 제출
2011.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관련 1차 조정회의 개최(국무차장 주재) - 하수오니 해양배출 금지시기 이견 조정
2011.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관련 2차 조정회의 개최(국정운영2실장 주재) - 금지시기, 해양배출 예외규정, 국비지원 여부 논의
2011.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 심사완료
2011.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완료
2011.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20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오니·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시행
2012.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국토해양부)

5.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완화

지난 2001년 PC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금융 안전성 유지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공인인증서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사의 액티브-X(Active-X) 파일에서 구동가능하며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98% 이상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인터넷 환경과 연계되어 전자금융 인프라로 발전했다.

금융위는 2003년부터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최근 급속하게 보급된 스마트폰 금융거래에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⁴⁵⁾해왔다.

거래금액	e-뱅킹(은행, 주식)	전자결제(온라인 쇼핑 등)
30만원 이상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30만원 미만		공인인증서 사용면제

그러나 PC와 달리 운영체제가 다양한 스마트폰에서는 공인인증서 직접적용이 곤란하여 전자금융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언론, 전문가, 기업 등에서는 다양한 기술 경쟁 환경에 부응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완화하고 다양한 보안체계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1)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방안 마련

업계 등의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금융 거래 보안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온 만큼 공인인증서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기술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에서는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자문 검토, 국내외 전자금융거래 보안 사례 검토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동 규제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당정협의를 거쳐 전자금융거래 시 다른 전자금융거래 방법을 공인인증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방안」을 2010년 3월 31일에 확정,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현행규제를 풀기로 결정함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전자금융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사업자

들이 시장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적절한 보안기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기술의 선택권을 시장으로 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관계부처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다.

2)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완화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국무총리실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완화를 위한 3월 31일 당정협의 후속조치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전자금융거래 보안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교수,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보안회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공인인증서 수준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실무회의에서는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 기술적·법적 검토 등을 거쳤고,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해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0년 5월 31일 '전자금융의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 감독규정」(2010.6),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2010. 8)을 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인증방법의 선택권 부여를 확정했다.

이 규정은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⁴⁶⁾에 있어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토록 하되,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 정보처리시스템 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전자금융 거래내역의 무결성, 전자금융 거래내역의 부인방지기능 등 5개 항목 중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각자의 거래유형이나 보안위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3) 중소기업체의 부담완화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기대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⁴⁷⁾가 활성화되어 중소 흡소필물 등 관련업체는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인인증서용 앱(app)⁴⁸⁾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고,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산업, 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 연관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보안기술 시장창출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45) 2010년 3월 현재 스마트폰 소액결제에는 미적용

46) 30만원 미만 전자상거래는 동 규정개정 이전에도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예외로 인정

47) 소액결제가 온라인상 거래의 약 97% 차지

48) 스마트폰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application을 지칭)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완화 추진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10.3월 초	■ 관계부처 실무회의
2010.3.19	■ 관련업계 간담회
2010.3.23	■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조정회의(사무차관 주재)
2010.3.31	■ 당정협의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완화방안」 발표
2010.4.7	■ 「전자금융의 안전성 가이드라인」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10.4.15	■ 민관협의체 회의
2010.4.23	■ 민관협의체 실무 작업반 회의
2010.5.20	■ 민관협의체 실무 작업반 회의
2010.5.25	■ 민관협의체 회의
2010.5.31	■ 「전자금융의 안전성 가이드라인」 발표
2010.6.30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
2010.8.31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6.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추진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의 회복지연·청년실업·물가불안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 수요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큰 대부업 거래나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상인, 가난한 대학생과 청년실업자, 생계수단이 막막한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힘없는 이웃들이다. 불법사금융 가운데는 연 이자율이 수백, 수천%에 달하여 서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납치해 인신매매하고 성폭행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건수】

전체 상담건수 - 불법고금리 - 불법채권추심 - 대출사기	2009년 6,114건 → 2010년 1만3,528건 → 2011년 2만5,535건
	2009년 1,057건 → 2010년 748건 → 2011년 1,001건
	2009년 972건 → 2010년 1,136건 → 2011년 2,174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2009년 463건 → 2010년 794건 → 2011년 2,357건
	2009년 6,720건 → 2010년 5,455건 → 2011년 8,244건

자료 : 금융감독원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경제적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세우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매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일제신고·특별단속과 금융·법률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사금융 대책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2012.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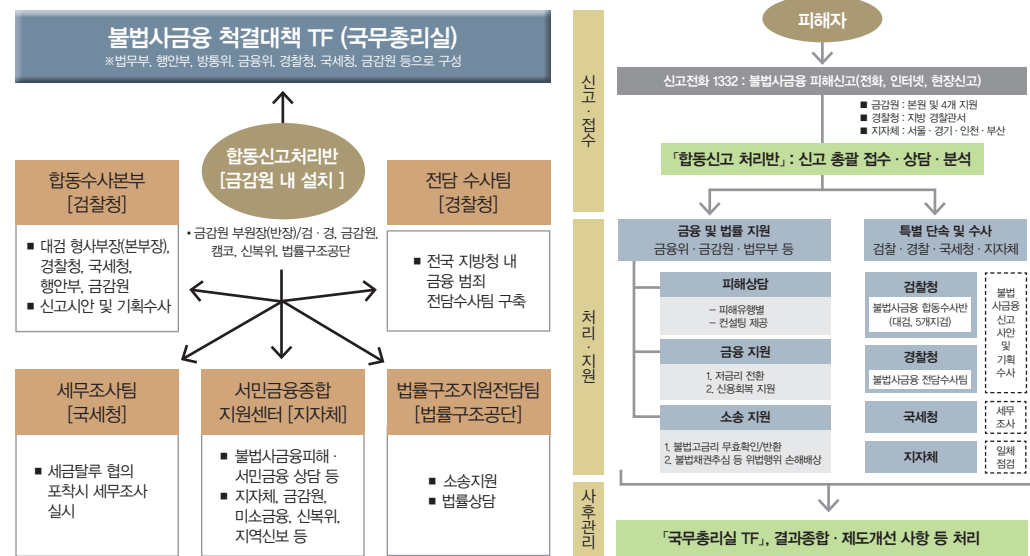
2) 추진체계

그동안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여러 관계부처에서 각기 이루어져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대부업 정책관리는 금융위원회에서, 대부업체의 등록 및 감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불법사금융 수사와 처벌은 검찰·경찰에서 담당해왔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인신상해가 없는 한 정보부족 등으로 대부분 내사종결(불기소) 처리되거나 처벌수위도 낮은

상황이었으며, 지자체는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미등록업체·불법사금융 조사·단속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서울·대전·울산 등은 1인당 150개 이상 대부업체를 담당하는 등 현실적으로 밀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를 설치하고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일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이를 철저히 뿌리 뽑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금융감독원 내에는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하고, 각 신고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검찰·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서민금융 지원기관, 법률구조공단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신고·상담·피해구제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자가 금융지원·신용회복·법률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추진체계】



3) 피해신고 접수현황

정부는 2012년 4월 18일 이후 7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대상은 불법사금융과 관계된 모든 범위반 사항으로, 주요 대상으로는 ①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②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③폭행·협박·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④대출사기(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 편취 행위) ⑤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광고·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⑥보이스 피싱 ⑦기타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 사항을 아울렀다.

금융감독원 내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하여 신고·접수 업무를 총괄했으며, 신고방법 및 채널도 다양화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전화신고(1332)뿐만 아니라 경찰청(112), 지자체(120)의 전화접수와 각 기관의 인터넷 신고 및 방문신고 등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 동안 8만여 건의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를 접수했다. 특히 신고 초기 한 달여 만에 2011년 1년간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피해신고 접수 건수인 2만5,000여 건을 초과해 그동안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던 서민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고내용을 수사·단속·금융지원·법률지원으로 각각 유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4) 수사 및 단속 실적

정부는 신고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우선 대검찰청 형사부에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을 본부장으로 경찰청·국세청·행안부·금감원 등이 참여한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수사본부에서는 지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관리·감독하고, 수사방향·성과분석 등의 수사를 총괄했다. 이와 함께 전국 5개 지검(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는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하여 직접수사를 담당했다.

경찰청에도 전국적으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1,600명)을 구성했다. 전국 16개 지방청에 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축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했다. 강력형사 등을 총동원한 집중적 단속을 실시했으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사이버 등 가용경찰인력(6,100명)을 총동원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대부광고·고금리·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미등록 대부업체가 폭행·협박, 조직폭력배 연계 등 다른 위법사항도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에서도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파악한 대부업자 관련자료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총 8,700여 명을 검거하고 이 중 300여 명을 구속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 법정 이자제한을 초과한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이었다.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통보한 피해신고(1만3,000여 건) 중 9,400여 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에서도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414억원을 추징하고, 세금 탈루혐의 123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자체에서도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지도를 통해 77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5) 금융·신용회복 지원

피해신고자 중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신고자에게는 맞춤형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실시했다. 신고 상담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2,200여 건

중 640여 건(약 29%)에 대해서는 지원완료(460여 건)하거나 지원결정 후 절차진행 중(180여 건)이다. 바퀴드림론(캠코), 햇살론(지신보), 신용회복, 미소금융 등에서 피해신고자의 상황과 서민금융기관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찾아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했으며, 지원곤란 2,900여 건에 대해서도 새희망홀씨 등 추가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검거 사례

- 사채 빚을 갚으려는 여성들을 유인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2,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성매매업주·조폭 등 13명 검거(구속 2명)【인천】
- 중소기업 50개 업체를 상대로 총 125억원 상당을 연이율 297%로 대부한 후, 미상환 시 담보어음을 부도 처리하겠다고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4명 검거(구속 4명)【서울】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대대적 홍보를 계기로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됨에 따라 관련 서민금융 문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바퀴드림론 등의 경우 2012년 2월 월간 문의건수가 4만여 건에서 피해신고기간인 4월에는 7만5,0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액도 2월 488억원에서 4월 57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사례

- 경기도 소재 ○○지하철역 근처의 통신사 대리점에 근무하는 B씨는 3개 저축은행에서 900만원을 이용하면서 33%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
 - 저금리 대환대출을 찾다가 우연히 저금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대부중개업자의 말에 속아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했으나, 오히려 저축은행보다 더 높은 39% 금리를 부담하는 등 어려움이 기중
- ➔ B씨에게 햇살론 상품을 안내, 800만원(13%)을 지원받아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상환

6) 피해자 법률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가 일괄하여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추진했다. 이는 5월 2일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방문 시 특별히 지시한 내용이기도 했다.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자 중에서 부당이득을 반환받거나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서민이 이러한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 신고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을 실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영세민 등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무료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최소한의 실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법률지원을 실시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기존의 43명이던 전담변호사·공익법무관을

86명으로 증원하고, 전문상담인력도 49명에서 95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본부 내 운영되던 「사금융 피해 법률지원팀」을 확대하여 지부(18개) 및 출장소(40개)에도 ‘법률지원 전담팀’을 설치, 운영했다.

신고기간(4.18~)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자 중 법률상담을 원한 650여 명에게 1차 법률상담을 제공했으며, 소송지원을 희망한 피해자(50명, 66건)에게는 부당이득반환·채무부존재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지원 중이다. 추후 검·경 수사(9,400여 건 진행 중)가 확정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피해신고자의 민·형사 소송에 대해 더욱 많은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대책추진의 성과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마련하고,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상담·법률구제·수사단속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했다. 법정최고금리(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 이상 이자지급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널리 홍보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을 제공했으며, 검찰·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불법 사금융업자를 대거 단속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가 불법사금융의 실체와 폐해를 재인식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8) 향후 추진계획

불법사금융은 일시적 집중단속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으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척결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는 척결의지를 확고히 하고 불법사금융의 단속·규제 및 피해지원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 등 특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금감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의 현행 피해신고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신고자가 원할 경우 서민금융지원·법률지원 등 피해구제 프로그램도 계속 제공한다. 아울러 2012년 설치가 완료된 시·도 서민금융 종합지원 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받는 등 피해신고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동 센터에는 지자체,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직원이 근무하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대출과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상담·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일반 서민들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알지 못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도 계속 진행한다. 지자체·경찰서·금융기관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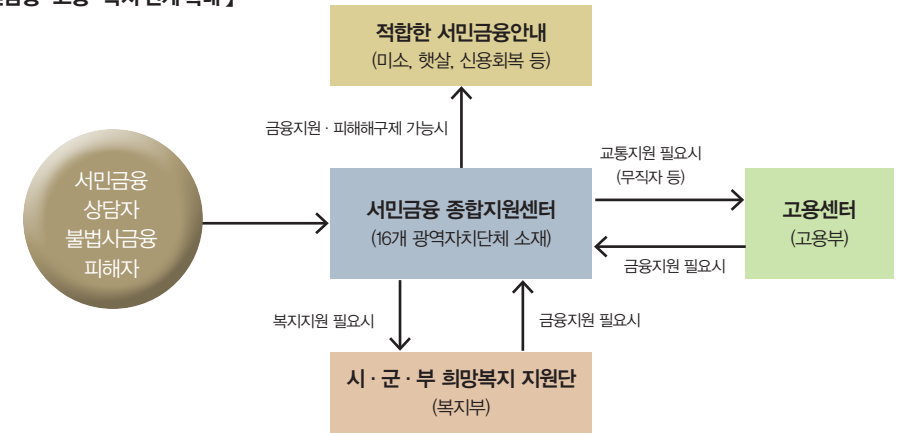
피해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대 요령’ 및 ‘일수대출 이자 조건표’ 등을 대학교·재래시장 등에 집중적으로 배부하는 등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융사랑방 버스 등을 활성화하여 농어촌 주민,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민금융상담 및 금융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제도 지원요건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소득·부채 기준 등이 지원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일정범위(예: 요건 상한의 10%) 내 신청자는 회생가능성·자활의지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바뀐드림론·햇살론·미소금융 등도 현행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사금융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상품별 주요제도 개선사항 】

제도명	현행	개선
바뀐드림론	■ 과거·현재 연체자는 지원 불가	■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직장 3개월 계속 근무	■ 동일직장 재직요건 폐지
	■ 고금리채무 성실상환 요건(6개월 이상)	■ 성실상환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는 지원 불가	■ 불법(미등록)업체로 인한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기소 등) 지원대상 포함
햇살론	■ 3개월 연속으로 소득발생	■ 소액대출(500만원)에 대해 재직확인서·사업사실확인서 제출 시 지원 허용
미소금융	■ 재산 대비 부채비율(50%) ■ 재산요건 기준 - 대도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 재산 대비 부채비율 완화(60%) ■ 재산요건 기준 상향 - 대도시(1억5,000만원), 중소도시(1억원)
신용회복	■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부분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했으나, 대부업체는 일부 미가입	■ 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 대부업체의 협약가입 유도·확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의 피해자는 연체·무직·무소득 등으로 서민 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와 지역 ‘고용센터’ 간 협조를 강화하여 재정사업 등과 연계된 취업·창업 등 소득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자금을 통한 긴급자금수요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지자체의 One-Stop 복지서비스)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유도한다.

【 서민금융-고용-복지 연계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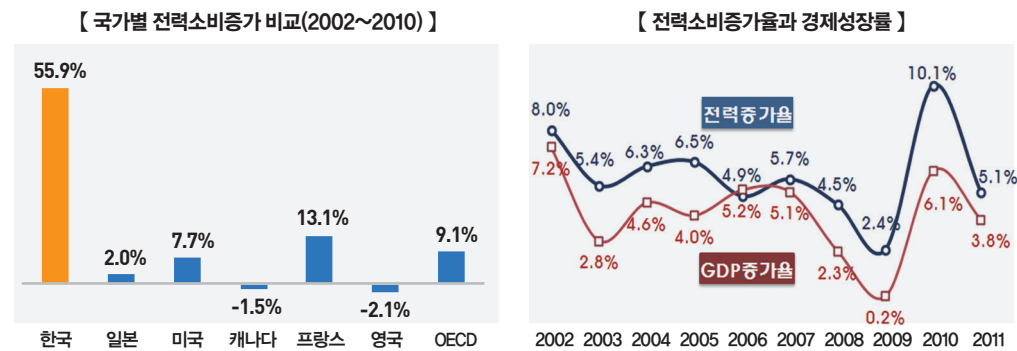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12.4.16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발표
2012.4.20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 1차 회의
2012.4.26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 2차 회의
2012.5.2	■ 이명박 대통령,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방문
2012.5.3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 3차 회의
2012.5.11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 4차 회의
2012.5.16	■ 국무총리, 불법사금융 척결 관련 서민금융지원 현장(캠코) 방문
2012.5.18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 5차 회의
2012.5.25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 6차 회의
2012.5.31	■ 불법사금융 척결 결과보고
2012.6.29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 7차 회의
2012.7.31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 8차 회의
2012.8.28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 9차 회의
2012.9.26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 10차 회의

7.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1) 전력수급 관리의 필요성

2002~2010년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55.9%로 OECD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국가 평균(9.1%)의 6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일본의 3분의 1, 독일의 4분의 1 수준인 저렴한 전기요금에 주된 원인으로, 전력소비는 경제성장률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신규부지 선정에서부터 발전소 건설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과도기적으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직접적 해결책이나, 서민생활과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력거래소는 때늦은 무더위 등 기상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고, 공급능력도 과대 계상하여 전력수급 위기를 초래했다. 전력거래소는 우리나라 전체의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에 순환정전을 요청했고 15시 11분, 한국전력은 13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단전을 시작해 19시 56분에 단전조치를 해제했다. 순환정전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2) 정부합동점검반 구성 및 정전사태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무총리실장, 정전재발방지대책 발표(2011.9.26)

정전사태 직후 국무총리실은 정전사태 상황조사, 발생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위해 국무차장을 반장으로 한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이번 정전사태가 전력당국의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 기관 간 상황정보 미공유, 그리고 대국민 홍보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과 적절한 전력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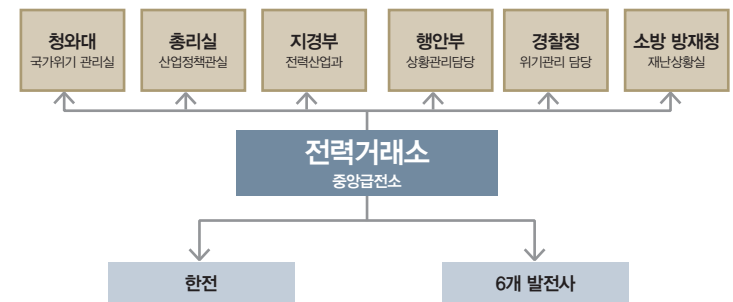
급 확보를 바탕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관 간 위기대응 협조체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범정부 정전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정전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수요예측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측프로그램을 전면 보완했고, 발전소 예방 정비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전력수급 위기 시 기업의 자율절전⁴⁹⁾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수요관리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고, 위기대응 긴급매뉴얼을 일반매뉴얼(4단계)과 구분했다. 또한 유관기관 간 핫라인(Hot-Line)을 개설, 위기발생 시 전력거래소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에 즉시 연락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전대비 민방위훈련 장면 (2011.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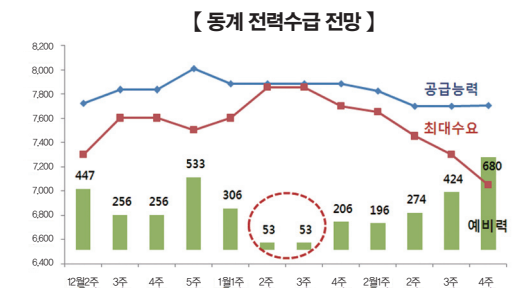
【 유관기관 연락체계 】



한편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 비상상황 사전안내,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실시하기로 했고, 승강기 갇힘 사고의 예방, 소형병원 및 교통신호등의 비상전력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대책 수립 이후에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이행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대책을 보완했으며,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정전사태를 가정한 민방위훈련을 11월 15일에 실시했다.

3) 2011 동계 전력수급 대책 마련

혹한과 전기 난방 증가 등으로 2011년 동계에는 예비력이 대부분 400만 kW 이하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력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절전규제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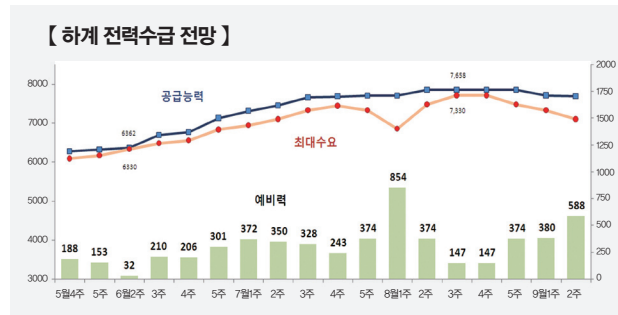
49) 자율절전 : 사전약정을 체결한 사용자가 필요 시 한전의 요청을 받아 자율적으로 부하를 조정하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제도

행했다. 1,000kW 이상 전기소비자에 대해 피크시간 중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했고,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중대형 건물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저녁 피크시간에 네온사인 조명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절전 참여를 유도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를 위해 절전홈페이지(www.powersave.or.kr)를 개설하고, 전력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이러한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동계기간 동안 500만k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기업들은 에너지 고효율 시설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상업용 건물의 과도한 난방 자제로 내복착용 및 절전상품의 이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절전문화가 확산되었다.

4) 2012 하계 전력수급 대책 마련

2012년 하계는 주요 원전 가동중단, 보령화력 화재 등 대형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해 5월 초부터 전력수급 위기가 찾아왔다. 5월부터 예비전력이 200만kW 이하가 되는 등 휴가가 집중된 8월 초를 제외하면 하계 대부분의 기간 중 예비력이 400만kW 이하에 그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5월 16일 하계전력수급대책을 조기에 발표했다. 이와 함께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들에게 전력수급 사정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7월 5주~8월 1주에 집중된 산업체 휴가일정을 8월 3~4주로 분산하고, 피크시간을 피해 조업을 조정하여 예비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하계대책 도입 전부터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종별 절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공급능력 극대화를 위해 발전소의 예방정비 일정을 봄에서 가을로 조정하고, 취약설비를 미리 점검하여 고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피크전력의 21%를 차지하는 냉방부하의 집중관리를 위해 대형 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냉방 시 문을 열고 영업하는 낭비관행이 크게 개선되어 5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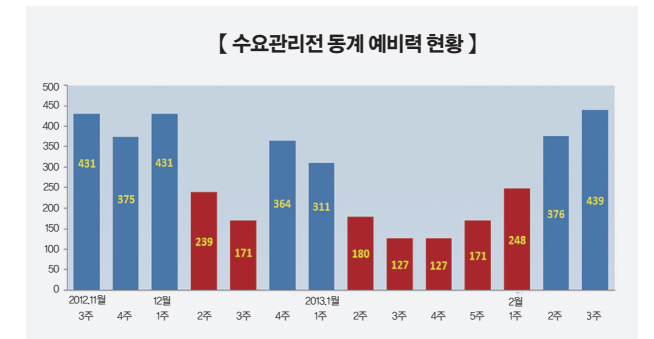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39%였던 준수율이 7월 27일에는 91%까지 향상되었다. 2012년 6월 21일 「정전대비 전력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전일 대비 최고 548만kW의 전력수요가 감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5) 2012 동계 전력수급 대책 마련

2012년 동계에는 영광원전 3기의 정지로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력이 12월에는 171만kW, 1월에는 127만kW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에 조기 돌입하는 한편, 생산차질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둔 동계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전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주였던 규제기간을 1~2월 피크기간 7주



로 단축하고, 규제대상 또한 1,000kW 이상 1만4,000여 개에서 3,000kW 이상 6,000여 개로 축소했다. 감축 의무도 10% 일률 감축에서 부하변동률 실적에 따라 3~10%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으며, 10월 말부터 수차례 전국·지역단위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계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또한 평상시 요금을 할인하는 대신 피크일·피크시간대에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선택형 최대 피크요금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절전 유인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실내온도 18℃ 유지, 개인전열기 사용 전면 금지 등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해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시키고,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오후 피크시간대 과도한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절전문화를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단기적인 전력수급대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발전설비를 확충하여 2013년 말까지 700만kW의 전력이 신규로 공급되면 2014년부터는 전력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고장을 최소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와 스마트그리드 체제의 구축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관리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9.15	▪ 순환정전사태 발생
2011.9.19	▪ 지식경제부 재발방지대책 발표
2011.9.26	▪ 정전사태 재발방지대책 발표(국무총리실장 브리핑)
2011.9.26	▪ 전력위기대응체계 개선 T/F 구성
2011.11.10	▪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 보고(지경부, 비상경제대책회의)
2011.11.15	▪ 정전대비 민방위훈련 시행
2011.11.30	▪ 범경계계 에너지절약 실천협약
2011.12.5	▪ 동절기 에너지절약 공고
2011.12.5	▪ 2011년 동계전력수급대책 상황실 운영(2011.12.5~2012.2.29)
2012.5.16	▪ 2012년 하계전력수급대책 발표(국무총리 대국민담화)
2012.6.1	▪ 에너지사용제한조치 공고
2012.6.7	▪ 2012년 하계절전 시민단체 공동캠페인 출범
2012.6.21	▪ 정전대비 위기 대응훈련 시행
2012.8.2	▪ 하계 전력수급대책 중간점검
2012.9.20	▪ 하계 전력수급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2012.11.16	▪ 동계 전력수급대책 발표(국무총리 대국민담화)

8.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1)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 사례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최초의 기록은 일제 때인 1911년으로 알려진다. 당시 소 15마리가 구제역에 걸렸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그 후 매년 발생하여 1918년에는 구제역에 걸린 소가 3만6,397마리에 이르렀다. 이후 구제역은 소규모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다가 1934년 3마리 발생을 마지막으로 종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식된 것으로 알려진 구제역은 2000년대 초 다시 몇 차례 발생하였지만 예방접종 등을 통해 대응하여 2002년 11월 29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2010년 1월 2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소재 젓소농장에서 A형 바이러스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국내에서 2000년과 2002년에 발생한 O형 바이러스와는 다른 형태였다. 이렇게 1월 2일부터 29일까지 2개 시·군(포천·연천)에서 6건의 구제역이 발생(살처분 두수는 총 5,956마리)한 이후 더 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3월 23일 종식을 선언했다. 2010년 4월 8일에 강화군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어 경기 김포(4월 19일), 충북 충주(4월 21일), 인천 강화(4월 27일), 충남 청양(4월 30일, 5월 6일) 등으로 확산되어 4만9,874마리의 소를 살처분했다.

2010년 상반기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살처분만 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2010년 9월 27일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2) 구제역 피해 현황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 소재 돼지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4개월 만에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총 6,000여 농가의 소 15만 마리, 돼지 332만 마리 등 348만마리가 매몰 처분되었다.

【 2010~2011년 구제역 발생 현황 】

구분	포천	강화	안동
발생기간	2010.1.2~29	2010.4.8~5.6	2010.11.28~2011.4.20
발생지역	1개 시·도, 2개 시·군	4개 시·도, 4개 시·군	11개 시·도, 75개 시·군
살처분	소	2,905마리	1만0,858마리
	돼지	2,253마리	3만8,274마리
	기타	98마리	742마리
재정지출액(잠정)	262억원	1,015억원	2조445억원

이로 인해 가축보상금, 방역비 등으로 약 2조원 규모의 재정이 지출되는 등 국민경제와 축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구제역 매몰지가 4,583개소에 거치면서 침출수 유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확산되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 가축처리비 등 정부의 재정지출, 가축폐사로 인한 수급불안정 등 직접적인 피해와 사료·도축 등 연관산업의 판매·수요 감소, 환경오염 등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안동 구제역이 국민경제에 미친 직·간접적인 피해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축종별 생산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한육우 3.9%, 젖소 8.4%, 돼지 32.0% 감소되었고,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93억원, 부가가치 감소액은 9,550억원, 고용감소효과는 4만7,8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3)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차원의 구제역 방역 대응 추진

2010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구제역의 심각성을 알고, 안동에서 최초로 신고(2010.11.28)하여 확진판정(2010.11.29)한 날부터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지원·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러나 구제역이 축산 밀집지역인 경기도로 확산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갈 기미를 보이자 2010년 12월 15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정부합동지원단'을 경기지역에 현지 파견하여 방역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김포의 구제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 격려 및 철저한 방역을 지시하는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방역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은 2010년 12월 하순부터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 경기 여주, 인천 서구, 경기 양평, 경북 청송, 강원 홍천과 횡성, 경북 영주 등으로 퍼져나갔다. 살처분 두수가 50만두를 넘어서면서 정부에서도 국가재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10년 12월 29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8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으며, 국무총리가 직접 종합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백신접종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11년 1월 13일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하고, 구제역의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수차례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철저한 방역방안을 지시하는 한편, 천안 등 구제역 발생이 심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방역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크게 확산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경 검역에 한계가 드러났다. 해외여행객 수가 2003년 1,200만 명에서 2010년 2,100만 명으로 크게 증

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동남아 등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축산관계자들에 대한 소독 조치는 미흡했다. 지난 2010년 5~11월에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 중 9,400여 명이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항·항만을 통과하기도 했다.

둘째,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체계가 미흡했다. 축산농장에는 사료, 분뇨, 수의 등 축산관련업자와 차량들의 방문이 잦지만 차량이나 사람을 소독하는 시설, 울타리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시설 설치, 출입차량·사람에 대한 소독·기록관리 등의 체계가 허술했다.

셋째, 질병발생 시 초동대응이 미흡했다.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력이 매우 중요하나 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부 지자체는 이동통제, 감염가축에 대한 매몰 등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대응력이 부족했다.

넷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가축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확산경로 파악은 탐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보제공이 없으면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다섯째, 백신접종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부족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요령이 있지만 구제역 등 급성 전염병 발생 시 백신접종 시기 및 접종범위에 대한 시나리오 등 세부사항이 없어 백신접종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가축 매몰지 관리체계가 부실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를 긴급하게 매몰하는 과정에서 매몰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일부 부실 매몰지로 인해 사회적으로 환경오염 우려와 축산업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구실을 제공했다.

일곱째, 그동안 축산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향상을 위해 열악한 축사환경에 가축을 과밀하게 사육함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가축질병에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국무총리실 주관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와 취약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 등 수차례의 관련부처 회의, 전문가 간담회, 생산자단체, 학계, 축산업계, 소비자단체 및 언론 관계자 등의 자문 및 현장방문을 통해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해외조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해외의 방역체계를 폭넓게 조사하여 벤치마킹할 선진화된 제도를 파악했으며, 이 중 정기적인 방역훈련, 강력한 초동대응, 백신접종 체계, 가축사체 처리방법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방역 및 국경검역 강화 방안, 살처분 보상시스템 개편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 등록제 도입, 친환경 축산 활성화 방안 등 '친환경 선진축산 기반 구축', 초동대응팀 신설, 방역·검역 관련 조직 개편 등 '축산관련 조직개편', 구제역 백신 국산

화, 가축사체 매물처리 방법 개선 등 ‘축산분야 R&D 강화’ 라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5)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및 후속조치

마침내 정부는 위와 같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완전히 개편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만 했기 때문에 기본방향과 세부추진방안을 구분하여 발표했다.

우선 축산업 선진화 기본방향은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정부합동으로 2011년 3월 24일에 발표했으며,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은 지역순회 토론회, 전국단위 전문가 워크숍, SNS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 5월 6일에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 발표했다.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동대응과 농가상시예찰을 강화했다. 발생 초기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중앙·지방방역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상방역훈련(CPX)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축산농장 출입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등을 의무화하고, 축산차량 등록제 도입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도 강화했다.

둘째,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시 신고·소독을 의무화하고, 여행자 휴대품 X-ray 등을 통한 검사를 임시검사체계에서 상시일제검사체계(1일 2편)로 강화했다.

셋째, 정부·지자체·축산관계자 간 책임분담원칙을 확립했다. 축산농가의 방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20~80% 감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는 살처분 보상금 20%를 분담시키고,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소·돼지)에는 백신비용 50%를 분담하기로 했다.

넷째, 가축사체 처리방법과 방역관련 조직 등을 개선했다. 매물 위주의 가축사체 처리방식을 소각, 렌더링 등으로 다양화하고, 매물지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던 검역·검사 기관(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과학적인 방역체계 확충을 위해 동물방역통합전산시스템(KAHIS)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섯째,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백신생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신 자가접종 매뉴얼을 마련하여 농가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백신접종 가축에 대해 예찰검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차질 없는 백신수급을 위해 백신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백신생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및 직불제 개편 등 친

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전문가, 축산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지만, 동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못지않게 축산관계자를 비롯하여 국민과 언론 등을 대상으로 축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과 동 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였다.

이에 3월 24일 발표대책과 5월 6일 발표대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구제역은 2011년 4월 영천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6)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조기 달성 추진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 마련한 선진화 방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선진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상의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초동 대응체계강화’, ‘국경검역강화’,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 및 상시예찰 강화’,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확립’, ‘친환경 감염가축 처리방안 강구’, ‘방역조직체계 개편’, ‘예방접종 계획’, ‘축산업 선진화 기반구축’ 등 총 8개 분야에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90% 이상이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제역백신 전량 수입 의존 등 약간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에도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2014년에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 불법조업 근절 추진

1) 추진배경

2011년 12월 12일(월) 오전 7시경 인천 소청도 남서방 47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무허가) 중이던 중국어선(요금어15001호, 66톤, 승선원 9명)을 해양경찰관이 단속하려 하자, 중국선원들이 흥기를 들고 무력으로 저항했다. 이에 해양경찰관 8명이 불법조업 어선에 승선하여 조타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천해경 3005함 경찰관(경사 이청호)이 선장이 기습적으로 휘두른 흥기로 옆구리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청호 경사 순직 당시 여론은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적 대응 강화, 총기사용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단속 실시 등 강경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언론에서도 중국정부에 대한 사과요구, 매뉴얼 개선, 불법조업 어선 단속 시 실무적인 어려움 등의 내용을 기사화하여 불

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일각에서는 총기사용 강화에 따른 외교문제로의 비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날로 늘어나는 서해상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심각성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었고,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또한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불법조업 실태

해양경찰청에서는 늘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해상공권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해상특수기동대 창설·운영(2008년 60명 → 2011년 342명) 및 단속경찰관 안전장비 보강 및 진압장비 개선(집행예산 46억원),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 인상(무허가 조업 등 최고 1억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중국근해 어족이 고갈되면서 2008년 이후 중국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2009년 이후 단속 건수도 증가했으며, 단속 시 어선 간 집단계류 후 도주·흉기사용·쇠창살·철조망 설치 등 조업행태도 지능적이고 저항도 폭력적인 양태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집단계류 후 도주

【 최근 중국어선 단속현황 】

구 분	단속실적(척)				담보금징수액
	계	영해침범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2009	381	37	91	263	55억3,000만원
2010	370	53	91	226	78억2,000만원
2011	537	32	171	334	144억1,000만원
2012.10	333	15	67	251	85억7,000만원

【 불법조업 실태 】



흉기소지 폭력저항



현측 쇠창살 설치



현측 철조망 설치

3) 정부의 대응

국무총리실에서는 사건 당일인 12월 12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해양경찰청·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고 이청호 경사 장례식장(인하대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으며, 해경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후속대책을 약속했다. 같은 날 국무총리실장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관계부처와 인식을 같이하고, 단속 인력 및 장비보강, 효율적인 단속방안 강구 등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고(故) 이청호 경사 장례식장 조문



간담회 개최

4) 불법조업 종합대책 수립

이에 12월 14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주관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관련 관계부처 1차 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 외교적 대응 및 법집행 강화 방안·인력 장비 보강·유가족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유가족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 보상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예산·인력 지원 및 법집행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정부에 대해 우리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자구책 마련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12월 16일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2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대형함정 9척 증강, 성어기 특별단속 실시, 인력 보강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세부 지원방안, 담보금 상향 수준, 어구·어획물 몰수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검토했다. 외교적으로는 한·중 외교부 차관급 전략대화 시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보다 강경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월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예산 9,324억원 투입지원, 벌금(담보금) 상향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어구·어획물 몰수를 주요

끝자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협의 후 국무총리실장은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은 근본적인 불법조업을 근절한다는 목표 아래 외교적 대응강화, 단속 역량 증대, 법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유인차단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여론을 환기하여 간접적으로 중국 내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가. 외교적 대응 강화

중국정부의 적극적 관리·감독이 문제해결의 선결과제라고 보고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외교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불법어업문제를 전담할 협의체 신설 등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농식품부),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농식품부) 등 기존 채널을 활용하여 단속당국 간 교차·공동승선, 단속현장 시찰 등 협력적 단속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조업 근절대책 및 어족자원 보호·관리, 해양오염 방지 등에 대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전담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조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농수산식품부·외교부·해경청 등) 합동으로 불법조업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민간 차원에서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외사례조사, 국내 법적 제도개선책 도출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나. 단속역량 증대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인 대형함정과 고속단정이 중국어선들의 규모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단속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단속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2019년까지 서·남해안에 대형함정 9척을 증강하여 총 27척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함정운영인력을 191명 증원하기로 했다.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해상 작전능력 및 단속 요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총 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원칙하에 우선 2012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진압작전 시 생명과 직결되는 방검부력조끼, 해상진압복 등 개인안전장비를 개선하고 안전한 단속을 위해 그물총, 유탄발사기 등 진압장비를 보강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

해 원거리·적외선 카메라 등 채증·통신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평택 등 5개 서해항만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하고, 2015년까지 중국어선 단속전담 어업지도선 4척을 확충하고 단속 인력 또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장비 및 인력 보강뿐만 아니라 단속방식 개선 및 단속요원의 사기도 진작시키기로 했다. 성어기(4~5월, 10~12월) 중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하여 해경 헬기 및 2척 이상의 해경함정·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어업지도선 9척을 서·남해역으로 이동 배치하기로 했으며,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지급했다.

개인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 불법 단속여건에 맞는 해상 시뮬레이션 사격훈련장을 설치하여 훈련을 강화하고, 중국어선 세부정보 D/B 구축 등을 통해 대테러 진압작전 수준으로 대응 전술을 고도화하여 승선 시 단속의 실효성·안전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해양경찰관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대를 위해 수당 추가 지급, 체력단련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다. 법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유인 차단

마지막으로 불법조업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했다. 벌금은 일본(1억5,000만원)·중국(9,000만원)·미국(2억3,000만원) 사례 등을 참고하고, 중국 불법어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벌금(담보금) 상한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현행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 부과기준을 상향(최대 1억원)하여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조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범 이상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벌금의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증금 납부 시에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 및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어선들이 반환된 어획물을 처분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후, 다시 불법조업을 하는 행태를 근절하기로 했다.

6)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의 세부추진과제

종합대책의 내용을 적기에 빠짐없이 실행하기 위해 세부추진과제별 일정을 마련했다. 단속 매뉴얼 개정 등 성어기(4~5월, 10~12월) 전 완료 가능한 과제는 즉시 추진과제(17개, 2012년 3월까지 실시완료), 대형함정 증강 등 시간이 소요되는 대책은 중장기 추진과제(8개, 2012~2019년 완료)로 선정하여 세부과제별 일정 및 소관부처를 지정했다.

7) 종합대책 추진성과

해경 단속함정을 우선 3척 증강(2012.7~9 배치)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을 특수부대 출신으

로 보강(2012.3, 102명 신규채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어선들의 규모에 비해 부족한 해경의 단속역량을 향상시켰다. 해경 특수기동대 전원 총기지급,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제정(2012.1.), 방검부력조끼 및 해상진압복 지급 등 안전·진압장비를 개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체력단련시설, 현장출동수당지급 등을 통해 사기를 높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2.5)하여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준(무허가조업 시 벌금상향 1억원 → 2억원, 어획물·어구 몰수 등)을 대폭 높여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낮추고, 경각심을 높였다. 중국과 협조하여 3대 엄중위반행위(무허가조업, 영해침범조업,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우리 EEZ 내 입어자격을 제한하고 중국 측에 인계하여 처벌토록 조치(2012.1 시행)했다.

외교적으로도 한·중 정상회담(2012.1), 한·중 외교장관회담(2012.3), 고위급 상설 협의회 설립을 위한 외교부 국장급 협의(2012.6), 어업공동위원회(2012.10) 등을 통해 중국정부가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중국정부에서 자체적인 교육과 지도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한·중 관계당국 간 고위급협의체’ 신설을 통해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하고, 상호 협력방안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개최(201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중국어업인 대상 현지 설명회(2012.9) 등을 통해 불법조업의 심각성 및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전달했다.

2012년 9월 현재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상의 세부추진과제 추진현황은 단기추진과제(17개)를 모두 완료했으며, 중장기 추진과제(8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 추진으로 단속역량이 강화되어 단속실적이 예년에 비해 증가(전년 동기(2011.1~9) 대비 나포척수 95척 증가)했으며, 우리 EEZ 내 허가 어선들의 조업질서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정부는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불법조업 근절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선 나포 해경사망 관련 관계자관회의 개최(국무총리실장 주재) -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마련하기로 결정
2011.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이청호 경사 빈소 방문 및 옥조근정훈장 추서 ■ 국무총리실장 종합대책 마련 계획 발표
2011.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관련 1차 관계부처 대책회의(국무차장 주재) - 외교적 노력, 단속장비 예산확보 방안, 유가족 지원방안 논의
2011.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관련 1차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정운영2실장 주재) - 제도개선 방안·외교적 대응 노력 등 개선방안 구체화
2011.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조업 관련 긴급현안 질의
2011.1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수립내용 국무총리 보고 완료
2011.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 ■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발표
2012.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조업 현황 및 대책 국무회의 보고(국토해양부)

제3절 사회 분야

1. 범정부 일자리 대책 추진 지원

1)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 및 정부의 대응

2008년 9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주가 급락,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3%로 급락하는 등 실물경기도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고용상황 역시 악화되어 2008년 12월부터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실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9년 1/4분기에는 사상 최초로 월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10만명을 상회했다.

【 주요 고용지표 추이(2008~2012) 】

(단위: %, 만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1/4	2/4
실업률	3.2	3.6	3.8	3.8	3.6	3.3	3.7	3.4	3.8	3.3
실업자수	76.9	88.9	90.8	94.3	88.6	81.7	92.0	85.5	94.7	84.1
고용률	59.5	58.6	57.4	59.3	59.1	58.7	58.7	59.1	57.8	60.2
취업자수	2,358	2,351	2,290	2,374	2,375	2,363	2,383	2,424	2,393	2,500
실업급여 신청자수(신규)	84	107	34	26	24	23	98	91	29	2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

정부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지원에 국정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 합동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를 설치하여 위기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생활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 범정부적인 일자리 대책 추진

가.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설치·운영

정부는 2008년 말부터 고용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일자

리 대책에 대한 범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국무총리실에 「고용 대책 TF」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용 대책 TF」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재정부·교과부·문화부·행안부·지경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중기청 담당 국장이 상시 참여하며, 안전에 따라 금융위·외교부·농림부·법제처 등 기타 관련 부처도 참여했다. 또한 노동연구원·고용정보원·직업능력개발원 등 일자리 관련 연구기관의 참여로 전문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정책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장급을 주축으로 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4월에는 추진체계를 보완했던 바, 「고용 대책 TF」와 별도로 운영되어온 국무총리실 내 「사회안전망 대책 TF」를 통합하여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로 운영키로 하고, 고용유지·지원 및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이 보다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TF 출범 이후 2012년 9월 현재까지 총 62차 회의를 개최하여 총 200여 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고용 분야의 경우, 범정부 고용대책 추진방안(국무총리실), 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대책(노동·복지부, 중기청), 실업급여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노동부), 일자리 나누기 추진현황 및 확산방안(노동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행안부), 일자리 관련 추경 규모 및 집행 계획(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대책 평가결과(노동연구원) 등을 상정하여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협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관련 일자리 정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계획,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추진 계획,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 추진상황 점검, 동절기 서민·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점검계획,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 하에 이와 같이 범정부적으로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를 신속하게 설치, 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당초 우려되었던 대규모 실업사태를 차단하는 등 고용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주요 안건 목록 】

회차	주요 안건 및 논의 내용
1회(2008.12.23)	■ 경제위기 대응 고용대책 TF 운영계획, 재정지원 청년 인턴사업 집행계획 및 추진현황 등 4건
2회(2009.1.6)	■ 경제위기 대응 범정부 고용대책 추진 방안 등 2건
3회(2009.1.19)	■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예산조기 집행 추진상황 등 3건
4회(2009.2.3)	■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추진실적 및 관리방안,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등 5건
5회(2009.2.11)	■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예비대책 보완 등 3건
6회(2009.2.24)	■ 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대책, 민간분야 일자리나누기 추진실적 및 확산방안 등 4건
7회(2009.3.3)	■ 청년고용 추가대책 등 3건
8회(2009.3.13)	■ 국내건설근로자 해외건설시장 고용 확대 방안, 실업급여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등 3건
9회(2009.3.24)	■ 청년·학생 창업 활성화 대책, 여성고용 현황 및 개선방안 등 6건

회차	주요 안건 및 논의 내용
10회(2009.3.31)	■ 일자리 대책 평가체계 구축방안,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사업 추진현황 등 3건
11회(2009.4.14)	■ 일자리 나누기 추진현황 및 확산방안,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등 4건
12회(2009.4.21)	■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등 4건
13회(2009.4.28)	■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 현황 및 계획, 퇴직 인력을 활용한 경제개발경험 수출 상품화 방안 「Gray Expert Project」 등 5건
14회(2009.5.6)	■ 「일자리 관련 추경 규모 및 집행 계획」 등 4건
15회(2009.5.12)	■ 「일자리 대책 평가 방안」,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계획」 등 4건
16회(2009.5.19)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소득 「재산조사 표준화 추진 계획」 등 4건
17회(2009.6.3)	■ 일자리 대책 평가 세부추진계획,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등 3건
18회(2009.6.10)	■ 국가 인력수급 연계강화 추진계획 등 3건
19회(2009.6.16)	■ 청년창업 지원대책 연계강화 방안 등 3건
20회(2009.6.24)	■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4건
21회(2009.7.7)	■ 비정규직 동향 및 고용지원대책 등 3건
22회(2009.7.14)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해외취업사업 개선방안 등 3건
23회(2009.7.21)	■ 고령자 일자리 대책, 일을 통한 적극적 빈곤탈출 등 3건
24회(2009.7.28)	■ 복지계좌 도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2건
25회(2009.8.4)	■ 글로벌리더 해외인턴사업 활성화 방안 등 3건
26회(2009.8.18)	■ 2010년도 일자리 사업 정책방향 등 3건
27회(2009.9.1)	■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2건
28회(2009.9.8)	■ 재정지원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추진계획 등 4건
29회(2009.9.15)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 관련 현안보고 등 3건
30회(2009.9.22)	■ 청년인턴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민생안정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3건
31회(2009.9.29)	■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 추진상황 점검,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활성화 방안 2건
32회(2009.10.14)	■ 2010년 청년창업대책 추진계획, 플랜트 해외인턴제도 개선방안 2건
33회(2009.10.20)	■ 2010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운영방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추진 현황 2건
34회(2009.11.3)	■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등 3건
35회(2009.11.17)	■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동절기 서민·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점검계획 등 4건
36회(2009.12.1)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점검계획 등 3건
37회(2009.12.15)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성과 및 2010년도 정책추진방향 등 3건
38회(2009.12.29)	■ 2010년도 청년인턴 운영계획 및 취업교육 강화방안 등 2건
39회(2010.1.12)	■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 3건
40회(2010.1.26)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지자체 고용대책 활성화 방안 등 4건
41회(2010.2.12)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부처간 복지정보 연계사업 추진계획 등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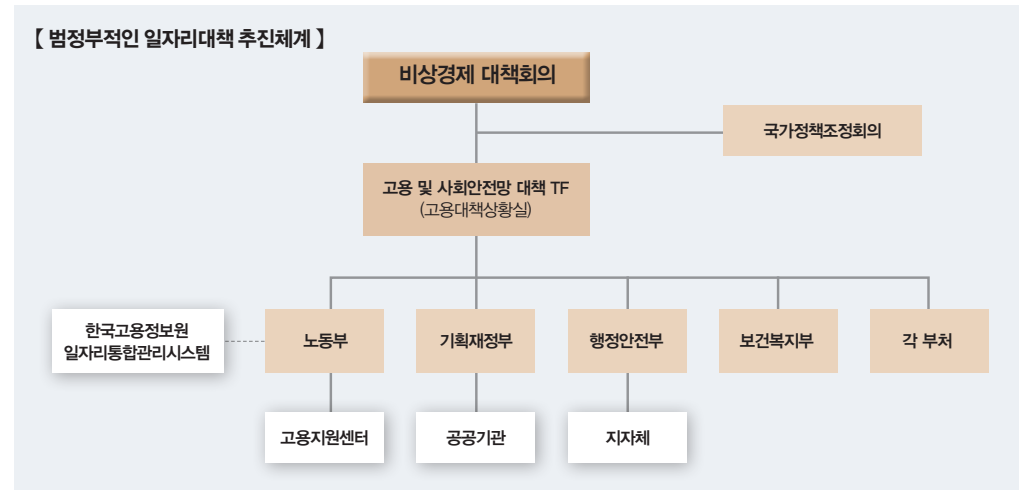
회차	주요 안건 및 논의 내용
42회(2010.2.23)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
43회(2010.3.9)	■ 민생안정대책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베이비붐세대 인력활용방안 등 4건
44회(2010.3.23)	■ 차세대 종합고용서비스망 구축 및 향후 추진계획, 재정사업의 고용효과 산정 시 고려사항 2건
45회(2010.4.6)	■ 국가고용전략 수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 2건
46회(2010.4.20)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일선기관의 취업지원 업무 추진실태 점검계획 등 4건
47회(2010.5.17)	■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여성인력 활용방 등 5건
48회(2010.6.1)	■ 장애인분야 사회안전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3건
49회(2010.6.22)	■ 행복e음 및 복지전달체계 현장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등 3건
50회(2010.7.13)	■ 자활공동체 활성화 방안, 고용영향 평가 결과 등 4건
51회(2010.8.10)	■ 국가고용전략(안), 민간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3건
52회(2010.8.31)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현황 및 계획 등 3건
53회(2010.9.15)	■ 한부모가족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등 2건
54회(2010.10.12)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차상위계층 지원체계 및 향후계획 등 3건
55회(2010.10.26)	■ 2011년도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추진계획
56회(2010.11.16)	■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효과적 운영방안, 가출 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대책 2건
57회(2010.11.30)	■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실태점검 결과, 청년 내 일 만들기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등 3건
58회(2010.12.21)	■ 2011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3건
59회(2011.1.25)	■ 최저임금 준수를 제고 대책 등 3건
60회(2011.3.31)	■ G20세대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방안,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실적 점검결과 등 6건
61회(2011.6.2)	■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등 2건
62회(2011.8.24)	■ 국가고용전략 세부추진과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결과 등 3건

나. 고용대책상황실 운영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무총리실 내에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실장으로 고용대책상황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고용부, 행안부, 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가와 기존 국무총리실 조직으로 이루어진 고용대책상황실은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의 운영을 지원하고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각 부처 상황반과 연계하여 정부 일자리 대책 집행상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고용유지지원금 계획 및 지급현황, 부처 및 지역동향, 주요 언론동향 등에 대한 일일 동향과 희망근로·행정인턴·공기업인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고용 및 실업관련 주요동향, 일자리 나누기 참여현황 등 노동시장의 주간 동향 점검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신속하게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한 ‘일모아 시스템’을 일선 집행부서에서 적극 활용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

극 독려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부처별·사업별 추진현황을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에 보고하여 신속한 일자리 대책 추진을 뒷받침했다.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2009년 들어 고용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고용시장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취약계층 지원 정부 일자리사업으로 10조9,000억원(추경예산 포함, 결산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83만개(4조6,000억원)의 직접일자리 창출했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3,318억원을 민간에 지원했다.

또한 실업급여 지원 등 고용촉진을 위해 4조5,000억원을 집행했고, 실직자 전직지원을 위한 능력개발에 1조4,00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직접일자리사업은 청년인턴(8만7,000명), 희망근로(25만명), 노인일자리(20만5,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17만 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했다. 이를 통해 당초 우려되었던 대규모 실업사태를 차단하는 등 고용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또한 노사민정 합의(2009.2.23)를 도출하여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운동 등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0년에는 고용위기 상황의 연착륙을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9조원을 투입하는 대신 상반기에 60%를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직접일자리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여건을 고려하여 60만 개(3조6,000억원)를 창출한 반면,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 고용유지 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2009년 1,142억원 → 2010년 436억원)했다.

2011년부터는 고용여건 개선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희망근로·행정인턴 등 한시적 일자리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전체 참여자 중 장애인·노령층 등 취약계층 비율을 70%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수혜가 대폭 확대되도록 했다.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가. 재정지원 일자리의 체계적인 분류 및 범정부적 규모 파악

2009년에 들어 추경예산 편성 등을 계기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비상대책이 수립·추진되었다. 그러나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화 및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범정부적인 일자리 대책의 분류, 예산 규모 및 수혜인원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국무총리실·고용부를 중심으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집계에 착수했다. OECD 노동시장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26개 부처 청 213개 사업을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단기일자리, 고용촉진, 창업 등으로 범주화했다. 또한 중복참여 방지 등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 www.ilmoa.go.kr)도 2009년 5월부터 구축·운영했다.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

2009년의 급박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관련 비상대책을 수립·추진했다. 이로 인해 서민층 생활안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이 난립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비효율에 대하여 정부 내부는 물론, 여론과 국회의 효율화 요구가 커져갔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는 만큼, 일자리 대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2009.12.24, 비상경제대책회의).

이에 정부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를 중심으로 효율화 방안 마련(2009.2~4), 관계부처 실무협의(2009.5~6) 등을 거쳐 「제1차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2009.7.2) 및 국무회의(2009.7.6)에 보고했다.

제1차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OECD 기준에 따라 일자리사업을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급여 등 6개 분야로 재분류하고, 2010년 일자리 사업 현황을 24개 부처 202개 사업 9조2,0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단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을 22개 부처 134개 사업으로 통폐합했고,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31개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취약계층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역차원에서 효과적인 일자리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은 고용부 주관 고용정책심의회, 지방은 지역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조정하도록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종류와 전달체계가 단순해져 수요자 이용이 편리해졌고, 취업취약계층에 더 많은 정부지원이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재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동일한 재원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2차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을 발표·시행(2011.8)했다. 직접일자리사업 개념을 정립하고 누락사업을 발굴했고, 장애인·노령층 등 취약계층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면서 반복참여를 제한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반으로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등도 마련했다.

2012년에도 유사·중복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지속 효율화하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제3차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2012.9)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현저히 준수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능력개발, 고용서비스 등과 연계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세 차례에 걸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종류와 전달체계를 단순화하여 수요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취약계층 등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2009~2012)】

(단위: 억원 / 1,000명)

구 분	2009년(결산)	2010년(결산)	구 분	2011년(결산)	2012년(예산)
계	109,126	90,042	계	86,086	96,279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인원)	46,438 (831)	35,862 (601)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인원)	24,359 (632)	25,127 (564)
고용유지 지원	3,318	641	직업훈련	10,186	12,278
능력개발	14,010	13,117	고용서비스	3,073	4,371
고용촉진	45,361	40,422	창업지원	1,461	4,354
			고용장려금	8,939	11,537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38,068	38,612

* 2011년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분류체계 개편

4) 성과 및 향후 계획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등을 통해 한정된 정부재원을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중점지원토록 하는 효율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고용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2010년 이후부터 40만명 내외의 안정적인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2012년 9월 현재 2.9%)

우리나라의 이러한 위기극복 노력은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언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한국이 위기 이전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을 달성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2010년 OECD 고용 전망Employment Outlook」).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우리나라가 경제위

기를 조기에 극복한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경기 침체에서도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위기 극복 이후에도 취약계층 등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TF 등을 통해 주요 일자리대책의 점검·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수요자 의견 청취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일자리대책 추진 지원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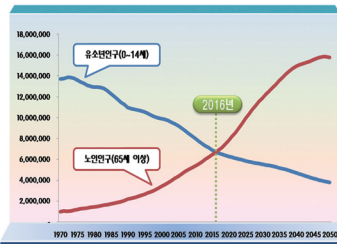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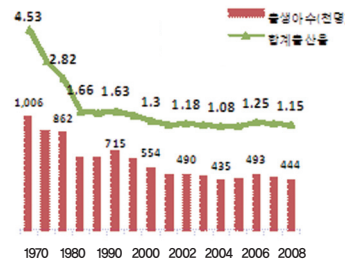
일 자	주 요 내 용
2008.9.15	■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본격화
2008.11.7	■ 정부, 2009년도 수정예산안 국회 제출(2009.12.13 국회 통과) (일자리 예산 4조9,000억원 포함, 총 10조원 규모 증액)
2008.12.23	■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고용 대책 TF」 회의 개최
2009.2.3	■ 기존 「고용 대책 TF」를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로 확대 개편하여 4차 회의 개최
2009.1.6	■ 대통령, 비상경제정부 선언(신년 국정연설)
2009.1.9	■ 국무총리실 고용대책상황실 설치
2009.3.30	■ 정부,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2009. 4.29 국회 통과) (일자리 예산 4조3,000억원 포함, 총 29조원 규모)
2010.1.21	■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2010.7.6	■ 제1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2.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1) 저출산·고령사회의 진입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비율 증가로 고령사회의 본격적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에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전체인구의 11%인 536만 명에 이르고 있고, 2030년 1,181만명, 2050년 1,616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다.

【합계출산율 및 인구구조 변화 추이】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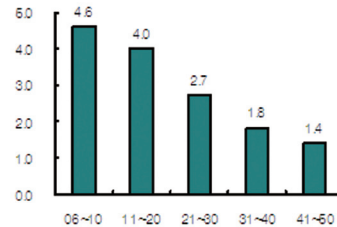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파급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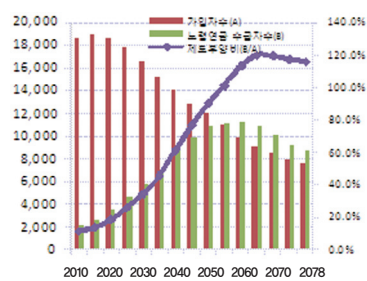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가 향후 우리 사회에 가져다줄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먼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노동력의 질과 양이 저하되며 소비가 위축되어 성장 잠재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42만명씩 2050년까지 1,377만명 감소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 중 50~64세 인구비중이 2010년 25%에서 2050년 41%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2만명, 1968~1974년생 605만명)의 은퇴와 저출산의 여파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이로 인해 2040~50년 잠재성장률은 1.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KDI, 2007). 다음으로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저해 및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잠재성장률 전망】⁵¹⁾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전망】⁵²⁾



50) 통계청, '전국장래인구추계(2006)', 각 연도 출산동향
 51)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KDI (2006)
 52)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2008)

등이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 및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기반이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해 재정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된다. 2009년 9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의료·교육 등 사회보장 지출 확대로 2008년 대비 2020년 총지출이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35조 원 악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2006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요양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큰 틀을 구축했다. 하지만 제1차 기본계획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특정 영역에 혜택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가정 양립, 고령자 고용 활성화 분야 등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한계도 나타났다.

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마련을 위한 준비활동에 착수했다. 그러나 전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수립에 있어 보건복지부만으로는 고용, 세제, 여성, 법제도 개편 등 범정부 대책을 이끌어내고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국무총리 지시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4개 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협의회를 두게 되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협의회는 10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여 2차 기본계획 수립의 추진체계,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주요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등 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협의회는 정부 내 협의와 사회적 의견수렴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 정책수요 조사, 연구용역,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및 국제학술대회 등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활동을 전개해나갔다.

이울러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협의회에서 효과적인 정부대책 발굴 및 신속한 이견 조정을 위해 분과별로 5개 TF를 구성(출산·양육, 고용인력, 고령복지, 재정·제도, 홍보·교육)하고, 분야별 책임부처를 지정해 정책 발굴 및 실무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또 쟁점별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에서 조정하고, 이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는 등 단계

별 검토 과정을 거쳐 2차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2010년 10월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된 제2차 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 정책을 확대·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회복(2030년경, OECD 평균 수준을 목표)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 적응을 정책방향으로 하는 한편, 이러한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4대 영역 231개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했다.

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

일·가정 양립 일상화 24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46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5개 등 총 95개 과제로 구성했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등 26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초는 유지하되, 정책 수요가 증가된 부분에 집중하고, 출산 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 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의 효과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 및 여성 고용률 제고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일정비율(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여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장기 육아휴직 후 고용시장 복귀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15%)를 복귀 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다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여 일하는 여성을 배려하는 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여성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세제지원 등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등 양육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확대, 아동·청소년 활동인프라 확충과 함께 아동학대·성범죄 등 아동 안전 위협요인에 적극 대처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영역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36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0개,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2개 등 총 78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17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재고용, 전직·창업지원) 및 공적·사적연금 내실화,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준비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분야별 사전 대응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고령자가 활동적·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내실화 방안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적정화를 동시 추진하는 등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했다.

다.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영역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31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13개, 고령친화산업 육성 14개 등 총 58개 과제로 구성했고,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등 15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성장동력 영역은 잠재인력 활용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신규 과제를 발굴·추진했다. 노동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를 확립하고, 산업현장의 사고예방으로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는 등 미래사회 노동력 규모 감소에 대비, 여성·외국 인력 등 잠재인력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했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한 주택·금융분야, 미래 재정 위험에 대응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라.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영역

교육·홍보 강화와 효과적 정책추진 체계 구축으로 구성했다. 방송·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명존중, 가족의 가치 및 활력 있는 노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출산 장려를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했다. 정부 전체 홍보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민간과 협력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학교 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 주기별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효과적 정책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지자체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성과평가제도 확립 및 평가결과 활용도를 제고했다.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투자 규모는 약 74조6,000억원으로 제1차 계획의 실제 투자규모 42조2,000억원 대비 76.7% 증가한 규모이며, 연평균 5%씩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저출산 38조9,000억원, 고령화 28조2,000억원, 성장동력 7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 베이비붐 세대 퇴직대비 대책

우리 사회 생산·소비의 중심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약 712만명)의 퇴직은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베

이비붐 세대 대책을 처음으로 정부시책에 반영했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차에 걸쳐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먼저 정부는 2011년 3월부터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대책 보완방안’을 준비하여 동년 10월에 발표했다.

동 대책 마련을 위해 2010년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출연연구기관 합동연구용역, 토론회,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현황분석 및 대안발굴 작업을 실시했다. 2011년 3월 29일 대책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논의를 위해 국무위원 집중토론을 실시했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민관 토론회(2회), 공감코리아 베이비붐 특집 기사 게재(1회) 등을 거쳐 마련된 초안을 토대로 국무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협의회(7월 9일), 고용사회 안전망 TF(7월 18일) 등을 통해 정부 대책(안)을 논의하여 10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지원하고, 베이비붐 세대 등의 취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중고령자에게 기업의 전직·구직활동 지원 및 퇴직교육 실시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직 은퇴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경험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를 위한 2차 대책으로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 나눔문화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마련하여 2012년 7월 발표했다. 동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나이’가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지표 개발

제2차 기본계획 수립으로 과제의 체계 및 내용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2011~2015년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성장동력 분야별로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지표별 목표치 및 가중치를 설정했다.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먼저 저출산 18개, 고령사회 17개, 성장동력 10개 등 분야별 핵심과제 총 45개를 선정했으며, 국민 체감도, 정책대상자 범위, 과제의 대표성 및 분야별 지표수 균형 등을 고려했다. 핵심 과제별로 추진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했고, 성과측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성과지표별로 수치화된 산식을 작성하는 한편, 제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이에 따른 연도별 목표치를 성과지표별로 설정했다. 또한 매년 각 성과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연도별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를 측정, 연도별 목표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보완계획

베이비붐 세대 은퇴, 100세 시대 도래 등에 따른 최근 고령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수요 급증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협의회(2012.9.13),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보완계획을 2012년 10월 16일 발표했다. 정부·지역사회·민간이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5대 분야 총 62개 핵심과제(제2차 기본계획 수정 40개, 신규 22개)를 발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다.

고령사회 보완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적 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제도 개선안 마련, 고령자가 스스로 미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검진제도 개편,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지킴이 체계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개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 및 추진 인프라 육성 등이다.

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장점 및 기대 효과

2015년까지 추진될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제2차 기본계획은 계획의 수립 및 관리 면에서 1차 기본계획과는 달리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보완했다. 매년 성과지표 평가를 통해 목표치 상회 시 향후 연도의 목표치를 조정하고, 목표치 하회 시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 강도와 성과지표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등 합리적 연동계획과 철저한 목표관리를 통해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이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 효과로는 첫째, 정책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이 제고되며, 둘째, 사회 각 분야의 영향에 대한 다각적·종합적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초래할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책임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2009.10~20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7개 국책기관 참여
2009.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대책 관련 대통령 보고대회
2010.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 중심 관계부처 협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분야 부처합동 TF 구성·운영(2010.5~8) -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2009.12~, 총 13회) - 국가정책조정회의(2010.6.25, 7.2, 7.16, 10.15 총 4회) - 관계부처 차관회의 및 간담회(2010.8.27, 9.1, 9.9, 9.24 총 4회)
2010.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경영계·노동계·사회단체 대상 대토론회(2010.5~6, 9차) - 복지부 장관 주재 토론회·간담회 개최(2010.5~7) - 민간연구기관 정책제안 토론회(2010.5), 연구소장 간담회(2010.5) - 대국민 초청 간담회(2010.7)
20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사회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2010.7.1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변동 전망과 대응방안 국제학술대회
2010.9.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試案) 발표 및 공청회
2010.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
2010.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표
2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이비붐 세대 퇴직대비 대책 협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7개 연구기관
2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부처 TF 구성(14개 부처)
201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민관토론회(3.30, 6.8)
201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대책(안) 논의를 위한 정부 협의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위원 집중토론(3.29),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협의회(7.9), 고용사회 안전망 TF(7.18)
2011.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이비붐 세대 퇴직대비 대책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상정·발표
20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지표 개발
201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발표
2012.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화부문 보완계획 마련·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협의회(9.13) - 국무회의 심의·의결, 발표(10.16)

3.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대 등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틀을 마련했다. 4대 보험과 공공부조 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등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⁵³⁾하면서 복지지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⁵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8.9%)은 총지출 증가율(6.3%)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국민들의 복지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수준으로, 이는 복지사각지대⁵⁵⁾ 상존 및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제도가 양극화·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복지제도 간 중복지원 등도 비효율적 복지제도에 기여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및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장수요에 맞는 대응 미흡 및 국민의 불만이 야기되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자 민관 합동의 「복지서비스 향상 TF」를 구성·운영했다. 복지제도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 TF」의 체계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 향상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 추진경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복지인력 확충 등 복지행정 효율화 방안을 적극 강구” 하라는 대통령 지시(2010.12.22)가 있는 후, 2011년 1월부터 5개월간 국무총리실에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민관 합동 TF에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국무총리 지시로 복지실태 점검을 위한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일주일간(2011.1.20~1.27) 지자체 조직진단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여 전국 10개 시군구 방문조사 및 60개 시군구 서면조사(방문조사지역 10개 포함)를 추진했다. 2011년 4월 25일, 현장 실태조사 결과⁵⁶⁾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53) 4대보험 원비 소요기간: 한국 32년, 미국 63년, 프랑스 60년, 독일 105년

54) 복지지출 규모: 2005년 50조8,000억원 → 2011년 86조4,000억원 (중앙정부 총지출의 28%)

55) 차상위계층은 170만명(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67만명 및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103만명)으로 추정(2007년, 보사연)

56) 실태조사 결과, 읍면동 복지직 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280여 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내방·전화민원 처리업무만으로 과중하여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는 곤란한 상황

2011년 3월 9일 「복지서비스 개선 대책 검토 추진방향」⁵⁷⁾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무원이 수혜자 가구의 손가락 수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과감하게 확충할 것을 지시했다. 3월 17일에는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복지 담당인력 확충규모를 도출했고, 3월 22일에는 인력충원 규모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대통령 보고를 실시했다. 4월 13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주관으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TF는 관계부처 협의와 내부토론을 거쳐 실무안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4.15, 5.4, 5.24) 및 실무 당정 협의(7.7)를 통해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3) 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복지전달체계 현황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기관 등을 활용하여 복지급여·서비스를 전달 중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복지부 등 13개 중앙부처에서 292개의 복지급여·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행정기관 등을 통해 전달⁵⁸⁾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노인·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전달⁵⁹⁾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인력 측면에서는 2010년 6월 현재 총 2만2,461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 사회복지직 1만335명이 시군구당 19.3명, 읍면동당 1.6명 배치되어 있고, 행정직 등은 1만2,126명이 시도·시군구 복지사업팀 및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다.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3,464)			
				소계	읍(214)	면(1,192)	동(2,058)
계	2만2,461	1,535	1만609	1만317	877	3,255	6,185
사회복지직렬	1만335	296	4,440	5,599	510	1,613	3,476
행정직 등	1만2,126	1,239	6,169	4,718	367	1,642	2,709

시스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2010.1~)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수행을 위한 업무효율화 기반을 구축했다. 개인별·가구별 정보 DB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으로 담당공무원의 자산조사 등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나. 문제점

우선 복지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에산 및 사업 증가에 비하여 담당 공무원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특히 읍·면·동의 인력 부족이 심각⁶⁰⁾했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한 충실한 상담,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지역 단위의 능동적 복지 수행에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다기화된 전달체계로 복지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 각종 복지사업이 13개 부처별·기관별로 다기화되어 제공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중복발생 및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⁶¹⁾되었고, 다양한 선정기준은 일선 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 사업집행상 혼란을 초래했다.

그리고 민관협력이 정착되지 못해서 민간 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한계를 드러냈다.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단위 복지 거버넌스가 미흡하여 지역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⁶²⁾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고, 일부는 행정기관 위주로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었다.

4) 개선방향

첫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2014년까지 7,000명)을 통해 복지체감도 제고를 추진했다. 특히 읍·면·동의 복지인력 확충을 통해 민관 협력,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했다.

둘째,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의 강화를 추진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자원 확보·배분 등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운영하여 복합적·다층적 복지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했다. 또한 시스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타 복지전산망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자의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셋째, 복지사업 간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진했다. 중복수급금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표준화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의 제고를 추진했다.

넷째, 민관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민간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의 발굴·연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57) 4대 검토방향: 일을 통한 빈곤탈출 및 예방지원, 복지서비스 내실화 및 시각지대 해소, 친서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58) 전달경로: 지자체(180개 사업, 61%), 보훈처·교육청·고용센터 등 특별행정기관(37개 사업, 13%), 보건소(26개 사업, 9%), 기타 공단·공사 등(49개 사업, 17%)
 59) 노인(6,005개), 아동(3,847개), 장애인(2,394개) 시설 등 총 4만8,872개 시설에서 35만1,045명이 중사(2009.12 현재)

60) 현행 읍·면·동당 1.6명 수준인 인력으로는 내방민원·전화민원 처리도 곤란한 실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 미흡
 61)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파악이 곤란하며, 복지서비스 신청·수령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체감도가 저하
 62) 중요 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복지·보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구 의무 설치(「사회복지사업법」, 2006)

5) 세부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계	읍·면·동(3,464개)	시·군·구(230개)
7,000명	4,930명	2,070명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7,000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있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현행 1.6명에서 2배 수준(3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상담 내실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복지담당 공무원(복지직+행정직)을 증원배치(9명 수준)하여 사례관리 활성화 및 사통망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7,000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해 복지직 신규 채용과 행정직 복지업무 배치를 병행 추진하되, 복지직과 행정직을 7:3의 비율로 충원⁶³⁾하기로 했다. 복지직 충원수 중 일부는 지방공무원 자연 결원분⁶⁴⁾으로 충원하여 기능 쇠퇴 분야 인력 재배치 등 인력구조 개선노력 병행하기로 했다. 연도별 충원계획으로는 2011년에 약 1,060명을 충원하되, 기 결정된 신규충원 예정인원(510명)과 육아휴직 결원인원(550명)에 대해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했다. 2012~2014년에는 약 5,940명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충원⁶⁵⁾하되, 성과 가시화를 위해 1차년도(2012)에 집중 충원(50%) 하기로 했다.

【연도별 충원 규모】

(단위: 명)

구 분	계	2011	3개년 계획				
			계	2012(50%)	2013(30%)	2014(20%)	
계	7,000	1,060	5,940	3,000	1,800	1,140	
복지직 신규충원	소계	5,200	1,060	4,140	2,100	1,300	740
	신규충원	4,400	1,060	3,340	1,800	1,000	540
	자연 결원분 충원	800	-	800	300	300	200
행정직 배치	1,800	-	1,800	900	500	400	

나. 공공전달체계의 구조 및 기능 개선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소관 복지사업·일자리사업의 자원 확보·사업계획 수립 후 복지부·고용부에 통보하고, 복지부는 일반 복지사업, 고용부는 일자리사업의 대상자 선정, 중복여부 등을 총괄하여 검토·조정 후 각 부처에 통보·시행하며,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국무총리실, 복지부, 고용부)하기로 했다.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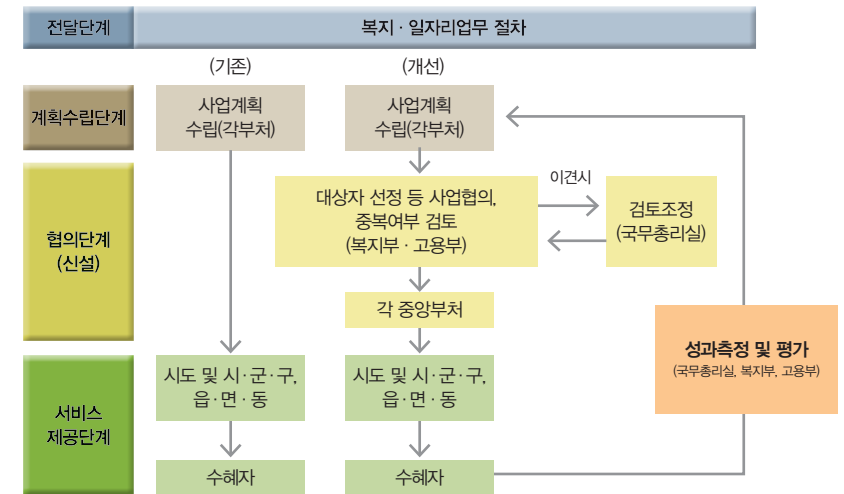
63) 복지직은 읍·면·동 및 시·군·구 서비스연계팀, 행정직은 시·군·구 통합조사팀 및 복지업무 담당과에 집중 배치

64) 자연 결원분(연 3%, 약 8,000명)의 약 10%(800명)를 복지직으로 충원

65) 충원비율: 2012년 50% → 2013년 30% → 2014년 20%

66) 국무총리실은 이견조정 역할 수행 / 복지부·고용부는 총괄·조정기능 수행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추진 / 기재부는 검토·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심의 및 편성 조치

【업무절차 개편 전후 비교】



둘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정보연계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과 복지정보공유시스템(행안부)을 통합운영하고, 정보연계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요 복지급여·복지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및 IT기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중복수급의 금지 및 유사사업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156개 유형)을 선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하여 중복수급을 금지 조치⁶⁷⁾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 가운데 특히 유사성이 높아 조정 필요성이 지적되는 대표 사례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⁶⁸⁾하기로 했다.

넷째,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을 표준화하고 있다. 복지사업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현재 사업별로 41개 선정기준 사용 중)하되, 복지부에서 선정기준 표준화 방안을 제시, 부처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섯째,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⁶⁹⁾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의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67) (예시) 복지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과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68) 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복지부) 및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농식품부) → 복지부 사업으로 통합, 기존 농식품부 사업예산은 농어촌 농어업인 개선사업 등에 활용
②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부) 및 희망리본프로젝트(복지부) → 각 사업을 1년간 실시한 후, 2012년 상반기 내 성과평가 등을 거쳐 통합·조정방안 마련
③ 기초수급자 접수리 사업(복지부),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국토부) 및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사업(환경부) → 국토부 사업은 당초 취지대로 2012년 종료, 대상이 슬레이트지붕 가옥인 경우 환경부 사업과 연계·일괄 수리(대상자 자부담 능력 있는 경우)

69) 희망복지지원단: 복합문제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조직

① 주민센터 → 희망복지지원단: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의뢰

② 희망복지지원단: 심층육구조사, 통합사례관리회의의 실시 및 종합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모니터링

* 읍·면·동 주민센터와 방문형서비스 체계화 등을 통한 사후관리지원체계 연계협력

③ 민관협력: 지역사회지원의체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④ 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복지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통합관리

여섯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여 보건·복지 외에 고용·주거·교육 등 핵심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법 개정 사항)하고 있으며, 협의체에 상근간사 의무배치⁷⁰⁾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복지정책 평가 항목에 협의체 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을 포함⁷¹⁾하기로 했다.

6)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 첫째, 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금급여에 치중했던 지자체 복지행정을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다 폭 넓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둘째, 복지수혜자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의 복합적 제공 및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로 복지수혜자의 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완화되었다. 신규인력 충원,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가 마련되었고, 그간에 비해 일선의 업무부담이 완화되었다.

넷째, 복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유사·중복사업 조정, 기준표준화를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수혜자 간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민간자원 발굴·연계 등 적극적인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동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의 세부 이행계획을 토대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7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배치 근거 마련, 인건비 지원방안 검토

71) 복지부에서 세부 이행계획 수립·시행, 활동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유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 주관 민관합동 TF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팀장),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서기관 등
2011.1.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동조사팀 구성, 지자체 조직진단 및 현상실태 조사 실시
201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서비스 개선대책’ 검토 추진방향 국무총리 보고
2011.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규모 도출
2011.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충원 규모 등 주요 내용 대통령 보고
2011.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공동 개최
2011.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 :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2011.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현상 실태조사 결과 국무총리 보고
201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 : 복지사업 간 연계조정방안, 귀농귀촌 지원방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의료안전망 확충 방안
2011.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 : 복지서비스 제고 종합 개선대책
2011.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관련 당정협의
201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개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논의·확정
2011.8.29, 12.19 2012. 3.16, 7.13, 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 주관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관련 부처별 추진실적 점검
2012.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지자체 복지인력운영실태 추진상황 국무총리 보고
2012.4.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복지인력운영실태 합동점검 추진(국무총리실, 복지부,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0개 시·군·구 전수 서면조사, 30개 시·군·구 현장방문
201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복지수석 주재 서민정책지원점검단 회의에서 지자체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인력 확충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12.6.1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인력 조기확충을 위한 지자체 현지독려 실시
2012.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추진상황 국무총리 보고

4.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망 구축

1) 추진배경

가.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

그동안 다양한 복지사업들(16개 부처, 293개 사업)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민 체감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⁷²⁾ 또한 부처별로 대상자를 각각 조사·선정해야 하고, 타 부처 복지서비스 수혜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누락·중복, 국가 재정 운용의 비효율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 구축된 행복e음(2010.1)을 바탕으로 각종 공적(公的)자료, 수혜이력 등을 각 부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정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행복e음'이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전국의 복지대상자 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서비스를 정확히 전달하고 부적정·중복 수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만든 복지업무시스템이다.

사회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1999~2009, 사회복지지출 연평균 13% 증가)해왔고 복지서비스도 100가지가 넘게 다양해졌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대국민 서비스에 소홀하여 국민들은 복지정책의 효과를 잘 체감하지 못했다. 또한 일부 복지예산 관련 부정사례(양천구 공무원의 장애수당 26억원 횡령, 해남시 공무원의 기초생계급여 10억원 횡령 등)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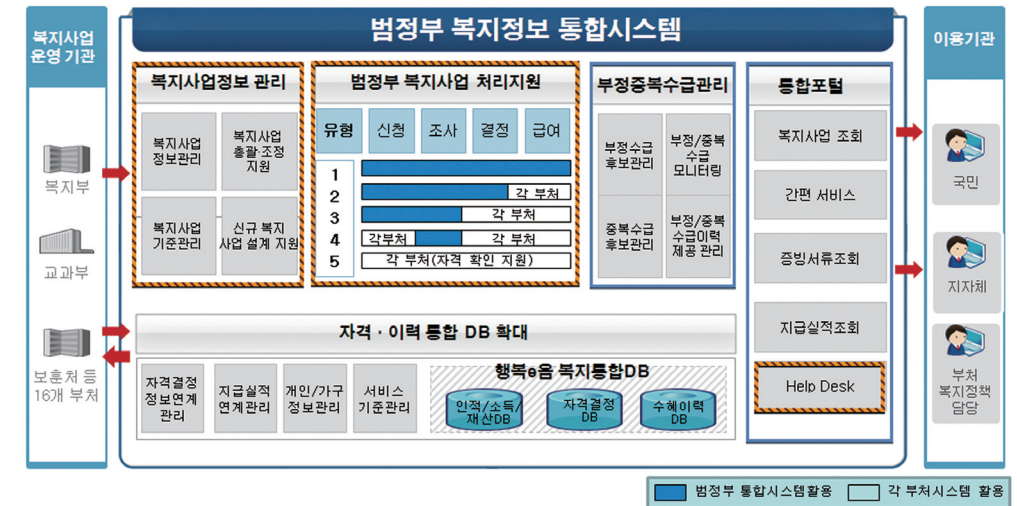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9.4.30 국회통과, 6.9 공포)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2009.6.1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2009.9.25)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했다. 또한 국무차장 주재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2009.5.19, 9.15, 10.20, 12.1, 2010.1.26, 2.22)를 통해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밀도 높은 사업추진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행복e음은 지난 2010년 1월 개통되어 현재 3만여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신청, 접수, 조사, 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등 업무를 동 시스템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개인별·가구별 통합DB 구축으로 대상자의 가구현황, 복지욕구, 복지서비스 수혜이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구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2011년 말 기준 4만7,000건)하고 있다. 또한 소득·재산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중복을 체크하여 부적정 수급과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있다(2010~2011 35만명 지급

중지, 국가 재정 7,375억원 절감). 이 밖에 업무처리도 효율화하고 있다.(신청서류 감소 : 37종 → 6종, 자산조사 기간 단축 : 60일 → 14일, 보육료 등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실시)

2)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의 개념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사업⁷³⁾의 대상자격, 수혜이력 등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DB로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이다.



3) 추진내용

가.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2011.6.10)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에게 꼭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정확히 전달하고 부적정·중복 수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무총리 훈령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2011.9.1)하고 보건복지부에 「범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 추진단」을 설치했다.

나. 단계적 시스템 구축 추진

국무총리실은 추진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과 같이 2단계에 걸쳐 범정부 복지

72) 복지수준 국민의식조사(2011, 보사연) 결과, 전반적으로 낮다는 평가(61.3%)

73) 복지사업 : 개인(가구) 단위로 직접 지급되는 현금, 현물서비스와 사업장(시설 등)을 통한 간접 지원, 각종 감면, 용자(대부) 및 특례 등을 모두 포함. 국가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기 확정된 293개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향후 추가 연계 예정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선 개인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가능한 현금급여 사업 및 이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1단계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1단계 사업에서 행복e음(복지부 101개 사업)에 11개 부처 97개 복지사업, 21개 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2012.8 개통).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복지정보의 연계 범위·수준 등에 대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13년 2월에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도 정비하고 있다. 개인·가구별 정보의 통합DB 적재·관리를 위한 인프라 증설과 함께 대국민 포털 및 지자체 공무원용 민원상담시스템 등에 대해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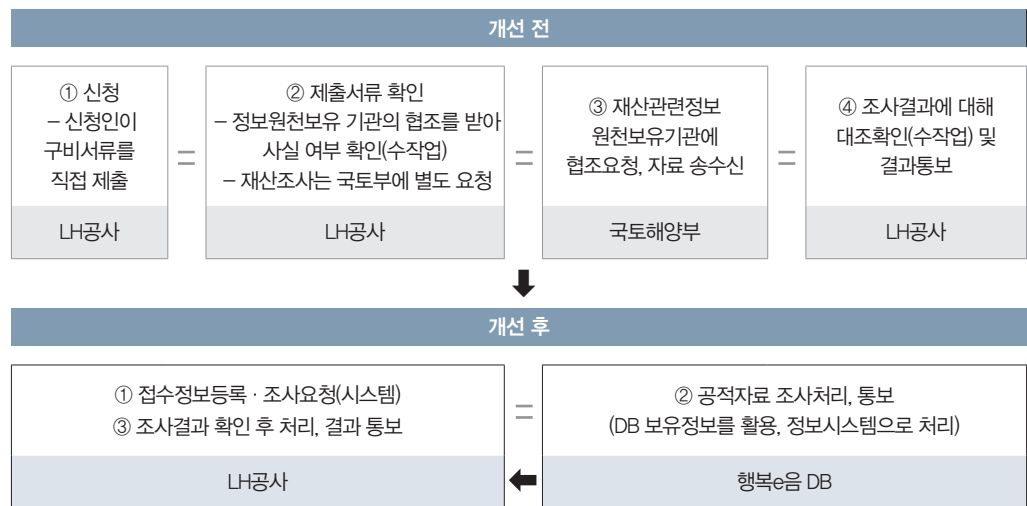
다.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

국무총리실은 범정부 복지정보연계 사업의 밀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회의(2012.2.3, 10.19), 국가정책조정회의(2012.7.6),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2012.8.7) 등에서 부간 정보연계 및 자료정비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가고 있다. 또한 각 부처 실무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제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2012.2.21)를 시작으로 제8차 추진상황점검회의(2012.9.13)까지 총 8회에 걸친 관계부처 회의들을 통해 연계대상 정보범위 등 부처 간 이견발생 시 이를 조정했다. 그리고 각 시스템 오류 조정, 자료 현행화, 중복수급 정비 등 각 부처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4) 기대효과

복지정보연계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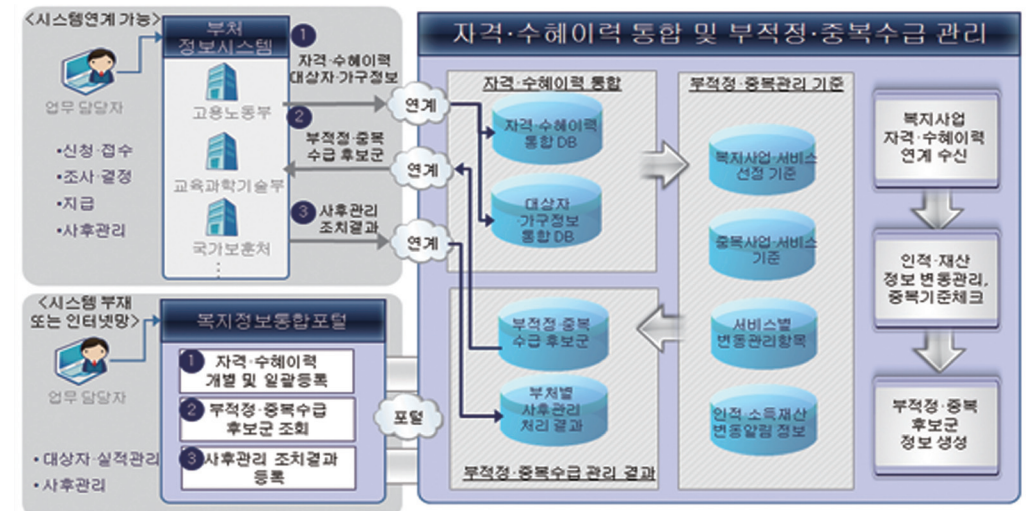
【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공급사업 업무처리 개선 사례 】



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희망복지지원단' 과 연계한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안내함으로써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할 수 있다.

둘째, 범부처 복지정보 연계를 통해 복지급여의 신청, 접수, 조사, 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정보 연계시스템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사업의 신청·조사·결정·지급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절차를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셋째, 정확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상자가 유사 서비스 또는 급여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지 여부, 자격 변동(사망·소득변동·가구분리 등)에 따른 대상 부적합 여부 등에 대해 연계된 200여 종의 공적자료(소득·재산정보, 인적사항, 수혜이력사항 등)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조회한다. 이를 통해 부적절하게 중복지원을 받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자가 지원을 받는 등의 복지예산 누수현상을 방지하게 된다.



넷째,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편리한 복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 사업의 통합DB 관리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검색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즉시 가능하게 하거나 담당기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섯째, 각종 정보의 공동 활용(16개 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200여 가지 정보 공동 활용)으로 불필요한 신청서류는 사라지고 처리기간 또한 짧아지게 된다.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은 부처 간 복지정보의 공동 연계와 활용을 위한 창(窓)을 만드는 것이다. 이 창을 통해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DB에 집적된 각종 정보를 각 부처·기관에서 보다 쉽게 공유·활용함으로써 누락·부적정·중복수급 확인, 질 높은 민원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제고되고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정보 통합관리망 구축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행복e음의 성과를 전 부처로 확대하기 위한 '법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결정
201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훈령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복지정보통합관리 추진단 설치
20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생활대책회의를 통해 법정부 복지정보연계 추진상황에 대해 국무총리 보고
2012.2.21, 3.20, 4.6, 4.24, 5.15, 6.19, 7.20, 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 주관 범부처 복지정보연계 추진상황 점검회의 운영 - 2012년 11월 현재 총 8회 점검회의 개최
201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법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개통 - 행복e음에 총 198개 관계부처 복지사업을 연계
~20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법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 전 부처로 확대하여 95개 관계부처 사업을 추가 연계(총 293개)

5.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

1) 추진배경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비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을 시행하여 외형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광범위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도입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시대적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공무원·군인·사립교원 등 일부 특수직역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정착은 비교적 빨리 이루어진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도입시기가 늦어져 자영업·농어민과 같은 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체계는 직역별, 규모별로 적용범위가 분리되어 있고, 관리 운영에서 직역과 관련된 부처 또는 각 공단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각 제도 간 연계 및 종합적 접근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계층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 사회보험이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및 관련 제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회보험의 가입 확대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민관 협동의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 추진경과

그동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논의는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및 수급의 사각지대 방지(적정 보장수준 확보)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급 측면 역시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 단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보장이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장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공공부조제도의 부담 및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히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여 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저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2011년 8월 8일 김성식 의원 등이 4대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각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미경 의원도 4대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발의안

- 김성식 의원 등 19인 (2011.8.8) : 4대사회보험, 장기요양보험
 - 30명 미만, 최저임금 130% 이하, 주 36시간 이상, 보험료 10~50% 지원
 - 재정추계 : 연간 1조108억원
- 이미경 의원 (2011.9.9) : 4대사회보험, 장기요양보험
 - 30명 미만, 최저임금 130% 이하, 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지원
 - 재정추계 : 연간 1조8,814억원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2011.8.26)에서 사회보험 가입확대 방안을 설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기획단

- 구성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단장), 사회총괄정책관, 재정부·복지부·고용부 담당 국장급, 민간전문가(6) 등
 - 실무 작업반(상설) : 고용부 과장(반장), 복지부, 관련 공단
- 운영기간 : 2011년 9~12월
- 기능 :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분석,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 설계방안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201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2011.9.9)했고, 국무총리실 내 설치된 기획단을 중심으로 총 네 차례의 기획단 논의와 더불어 실무회의 7회, 쟁점 조정회의 3회, 현장조사 1회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 시행계획 및 사회보험 가입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11년 12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 사회보험료 지원 시행계획

가. 2011년 9월 9일 당정협의(안)에 따른 시행 준비

2011년 9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원방안 개요

- 대상보험 :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 지원수준 :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각각 1/3씩 지원
- 지원시기 : 2012년 상반기 준비사업 실시 후 10월부터 전국 시행
- 2012년 소요예산 : 670억원

우선 보험료 지원 대상 사회보험은 비교적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으로 한다. 현재 산재보험의 경우 별도의 보험료 납부가 없더라도 위험(재해, 질병 등)이 발생하면 보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호받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를 수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연금 등을 수급할 수 없고, 특히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않으면 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 문제가 상존한다. 따라서 급여 수급을 위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며,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주 지원대상으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5~9인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40.4%, 15.9% 수준이나, 1~4인 사업장의 경우 각각 62.7%, 60.1%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5~9인 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임금 역시 최저임금 130%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미가입률에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대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은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수준은 지원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각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따라서 보수월액이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달 총 3만4,500원(사업주 1만7,667원, 근로자 1만6,833원), 연간 41만4,000원(사업주 21만2,000원, 근로자 20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준비사업을 거쳐 2012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준비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기타 행정체계가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다만 준비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준비사업 실시 후 본 사업 실시 전까지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준비사업 수행 지역은 '지역균형', '5인 미만 사업장 밀집도', '산업 분포' 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되, 지역별로 일정 정도의 지원요건을 차등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준비사업 실시와 함께 모니터링 및 평가를 병행하며 준비사업 시 사회보험료 지원 절차, 방식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확대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근로유인 효과 등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준비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상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전국 시행 시에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각각에 대해 3분의 1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주로 도매 및 소매업 28.2%, 숙박 및 음식점업 20.7%, 개인서비스업 12.6%, 운수업 12.0%순이며,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보험·국민연금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입률이 70% 안팎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모두 약 30% 수준으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가입률도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개인 임금소득이 연간 약 1,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여성·비정규직(임시일용직),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 소득구간은 70만~100만원 구간이 54.6%로 가장 많고, 비정규직이 50.9%, 임시·일용직이 90.7%, 고졸이 53.1%, 서비스 및 판매직이 41.8%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별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⁷⁴⁾

(단위: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62.7	6.2	74.6
5~9인	40.4	3.8	48.4
10~29인	25.1	2.3	31.3
30~99인	14.4	1.1	20.7
100~299인	6.8	0.7	9.6
300인 이상	3.6	0.3	6.2
고용형태			
비정규직	50.5	4.5	59.0
정규직	17.2	1.7	24.3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10.8. 통계청)

7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 = 직장가입 / 임금근로자전체, 고용보험 가입률 = 직장가입 / (미가입 + 직장가입)

이와 같은 사업장 및 근로자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원대상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인 경우 가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남에 따라 지원절차를 단순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고,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장의 변동폭을 고려해 3개월 연속 10인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6인 사업장이 지원을 받기 위해 근로자 2명을 해고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기본 목적과 달리 오히려 근로자를 감소시키는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한정된 예산,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으로, 신규 가입자의 경우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양자 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가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 체계에 맞추어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지원기준을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결정은 각 보험에서 각각 판단하여 지원한다. 또한 허위·축소 신고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며, 이 경우 환수금은 보험료와 별도로 징수하되 각 보험 간의 지원자 명단 교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나. 2012년 예산확정에 따른 사업 시행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국무총리실·기재부·고용부·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했으나, 국회의 2012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어 동 사업의 규모가 당초 정부안(670억원)보다 확대(2,654억원, 1,984억원 증가)되었다.

먼저 지원대상 사업장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근로자 '5인 미만' 인 사업장에서 '10인 미만' 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각 보험에서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을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한 보험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보험만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지원수준도 보험료 부과체계를 고려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각 3분의 1씩 지원' 에서 '2분의 1~3분의 1차등지원' 으로 확대지원된다. 신규 가입자는 당해연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전년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르게 지원한다.

우선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초 정부안대로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은 준비사업을 거쳐 2012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3개월 앞당겨 7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했다. 준비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준비사업 실시 후 본 사업 실시 전까지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지원(2~6월분 보험료, 5개월분) 했다. 준비사업 수행 지역은 당초 ‘광역 1개, 기초 1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16개 시·도 모두 각 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되도록 일부 기준을 조정했다. 특히 임금근로자 및 지원대상(10인 사업장) 근로자가 적정규모로 분포하고 사업장이 밀집했으며, 인근에 양 공단지사가 소재하여 시행이 원활한 기초자치단체를 준비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준비사업을 통해 보험료 지원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가입 유인효과, 보험료 지원프로세스의 운용상 문제점, 사회보험 가입에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지방고용관서의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분	정부안	최종
지원대상	5인 미만	10인 미만
추진시기	2012년 10월	2012년 7월
지원수준	1/3	1/2, 1/3
시범사업	광역 1, 기초 1	기초 16
수혜인원	최대 122만 명	최대 212만 명

4)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방안

가.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 신고 활성화 추진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실무작업반’의 검토 결과, 고용주 대상 사회보험 미가입 사유 중 1위가 신고불편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사회보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지역단위로 고용부, 자치단체, 각 사회보험 공단 및 지역 사업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기관이 협력하여 가입 안내, 사업주 가입 유도를 통해 현장에서 가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준비사업 지역부터 구성을 추진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사업주의 신고부담 감소를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신규로 가입시킬 경우 지원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업종별 연합회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보험가입 누락이 많은 취약업종의 가입을 확대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셋째, 취약지역 및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가는 보험가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 현장 가입서비스반(가칭)’을 구성·운영하고 사업주가 현장 방문 요청 시 현장에서 즉시 가입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넷째, 각 공단 콜센터,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가 쉽게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가 직접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 신청 시 각 공단이 사업주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불응 시 조사 후 사회보험 관리기관이 직권 가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사회보험 적용·자격 관리 강화

첫째, 사회보험 공단 성과지표에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가입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복지부는 공단 경영성과 계약 시 목표를 부여하며, 각 공단은 지사 단위로 매년 목표치를 부여하고 우수자 포상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적용 및 자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상·하반기에 각 공단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기간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각 공단이 공동으로 사업주 설명회 개최 및 사업장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고의적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고의적으로 사회보험을 미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사업주들이 신고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각 공단이 공동으로 점검하여 가입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사업주 제재조항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넷째, 사업장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소속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 시 가입 조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5) 평가 및 향후과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기획단」은 그동안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사회보험 중 실질적인 사각지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나라 1차 사회안전망 공고화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다.

이번 사회보험 가입확대 방안은 제도의 외형적 확대를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기획단은 실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신고불편으로 가입을 꺼리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 강화,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유도 등 가입 확대를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 방안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근로빈곤층’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상실, 실업, 질병, 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논의 시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정책대상이 되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동 기획단에서는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각지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가운데 ‘실제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결국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보험을 통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수급의 사각지대’이며, 이는 ‘적용의 사각지대’와 ‘실제 사각지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적용의 사각지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소득 자영업자 문제, 건강보험료 지원 필요성 및 피부양자 문제 등은 기획단 구성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으나, 한정된 예산과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획단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못했다. 동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그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사회보험제도를 상호 조정하고 부처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사회보험의 경우 각 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발전되었기 때문에 각 체계가 확립되어 공통된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지원방식과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 부처·공단의 이견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지난한 작업이었다.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획단 논의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방안이 상당 수준 검토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장기과제 및 지속적인 사회보험 내실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1) 추진배경

정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2004.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1차 2005년, 2차 2009년) 등을 통해 제도적·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폭력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유관부처와 시·도 교육청 간 유기적인 연계 부족,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교원의 생활지도 전문성 부족, 학생·학부모의 인식 미흡 등과 같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1년 12월 대전·대구·광주 등 ‘지’에서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2) 추진과정

대책 마련과정에서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였고, 관계부처에서는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다수 표출되어 국무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 실국장회의 및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 결과 117통합센터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전문상담인력 확충 등 인력증원과 예산확보 등 정책 실행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총 30여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끝에 2012년 2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학교폭력=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통한 사전예방,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중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교사·학교의 역할 강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학교폭력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였다.

교과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민관합동 학교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전문가)를 구성·운영하여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동 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광역 단위에



Wee센터 현장간담회(2012.1)



종합대책 담화문 발표(2012.2)

는 교육감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위원장 : 부단체장)가 예방대책을 수립하며, 광역117신고센터를 지방경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초 단위에는 교육장이 학부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위원장 : 부단체장)가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단위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호선)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추진하고, 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피해학생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	
직접 대책	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대처권한 부족 및 학교폭력 은폐 → 대처 권한 및 역할 대폭 강화 은폐시 엄중조치로 책무성 확보
	②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신고번호 분산 체계적 대응체계 부재 처벌 및 보호조치 미흡 → 신고체계 일원화 조사·지원기능 체계화 가해/피해학생 조치 강화
	③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간편한 또래문화 미형성 → 학생간의 자율적 갈등해결 학교단위 예방교육 체계화
	④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참여 부족, 무관심 책무성 미흡 → 학부모 교육·지원봉사 확대
근본 대책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 실천
	⑤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현 학업성취 수준은 높으나 인성·사회성은 낮은 수준 → 바른생활습관 학생생활규칙 준수 등 실천적 인성교육 추진
	⑥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민·관이 유기적 대응 미흡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 민·관 협력체계 강화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
⑦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기능 미흡 → 게임·인터넷 심의·규제 및 예방·치유교육 확대	

3) 주요 내용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대책과 동시에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실현 등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도 포함하여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이다. 학교장과 교사가 학교폭력 근절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출석정지일수 제한을 없애 유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징계사항을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제공토록 했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의 심의를 거쳐 졸업 직후 삭제하는 등 보완조치도 마련하였다. 한편 교사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사의 책임도 강화하여 학교폭력 은폐사실이 발각될 경우 학교장 및 관련교원을 금품수수 등 4대 비위 차원에서 징계하기로 했다.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중학교에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학생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2012년 500명, 2013년 1,000명 증원)와 계약직 상담인력(3,500명)도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둘째,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교과부·여가부·경찰청 등 이원화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조사체계를 시도 광역단위의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통합(17개소)하여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학교

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로 사건을 이송하여 처리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해당 학교 및 학교폭력신고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가해학생보다 피해학생에 대해 불리하게 규정된 것으로 지적되어온 피해학생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이 요청할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했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조기에 경감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심리상담 실시를 의무화했으며, 교육지원청 단위로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을 통합 지원하도록 했다. 또 피해학생 치료비를 학교안 전공제회가 선(先) 부담한 후,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 4년~고등 3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피해 현황 및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1차 실태조사 발표 이후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제2차 조사(8.27~10.12)는 온라인을 통한 조사, 친숙한 콘텐츠 구성, 공개방법 변경 등을 통해 제1차 조사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으며, 학교의 자발적인 학교폭력 해결노력을 유도했다.

학교폭력의 집단화 추세를 반영하여 일진회의 존재여부를 주기적으로 탐색·대응하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하였고, 117신고센터 접수내용 및 학교폭력실태조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 밖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전국 10개 센터에서 법 교육, 비행원인 진단 및 심리 상담, 치료, 보호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비행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6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학교장 연수 특강(2012.5)



강원117신고센터 개소(2012. 6)

셋째, 또래활동 강화 등 예방교육을 확대했다. 학교폭력 발생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학교 내 갈등 등과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건전한 또래문화(Peer Culture)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포털과 협약을 통해 사이버 상담지원도 강화했다.

넷째,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했다. 일과 후 학교설명회 개최(연 2회) 및 교사-학부모 간 상담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가해학생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 및 학교폭력 예방관련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지역사회 인사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육기부 인력풀 1만 명'을 확보하여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상대로 1:1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섯째,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을 천명했다.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해 교과에 인성교육 요소를 강화하고, 인성교육 실천지원방안을 마련(2012.9)해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 및 학벌 위주의 기업채용 등 관련 제도와 관행도 함께 검토하여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를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여섯째,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이다. 대책 발표 이후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가족캠프 및 토요일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 단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가정과 사회의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했고,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도입을 계기로 토요일 활용 ‘학교밖’ 문화·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이다. 게임·인터넷 중독, 음주·흡연 등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은 유해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섀도우게임 도입으로 과도한 게임이용을 제한했고, 비교육적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했으며, 게임산업계의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주요 시기별·단계별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의 자가진단 및 관찰자 진단을 위한 ‘학생 생활 지도 요령’을 마련했다.

4) 지속적 점검 및 보완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를 통해 총 네 차례 추진상황을 점검해왔다. 그간의 개최 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차	일시 및 장소	안건
제1차	2012.4.4 /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	(보고) 학교폭력대책 추진현황 보고, 117 신고센터 및 일진대책 현황 보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학부모 교육·치료 지원방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 (사례 보고)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또래상담 우수사례
제2차	2012.6.12 /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	(보고) 학교폭력근절 주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 인성교육 실천 추진 계획, 학교 전담경찰관 운영 (사례 보고)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우수사례,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 학교폭력 근절 우수사례
제3차	2012.9.4 /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	(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주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인성교육 비전(시안) 보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성화 방안,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활성화 방안
제4차	2012.11.16 /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	(보고) 제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부처별 추진 성과 및 실적 보고

먼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및 학교전담경찰관의 세부 운영계획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2차 회의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 보고했다. 또 제1차 회의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제 운영계획이 마련,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2012.4) 결과, 우편조사로 인한 낮은 회수율, 조사결과의 학교별 비교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8.27~10.12)에서는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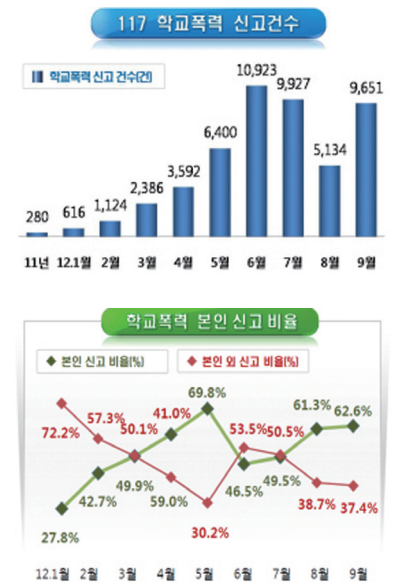
학교폭력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학교현장 컨설팅 지원단 운영 필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후 학교현장컨설팅(2012.6~7)을 실시했다. 한편 그간 복수담임제를 통해 학생과의 상담시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시행, 담임 업무를 담당할 교사 수 부족, 학교의 형식적 운영 등으로 학교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어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2012.8), 시행했다. 그 결과 복수담임제는 학내 구성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결정하도록 보완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학교현장컨설팅(2012.6~7) 결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학부모 위원 구성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현행 2단계(담임교사 종결 → 자치위원회 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3단계(담임교사 종결 → 전담기구 종결 → 자치위원회 심의)로 세분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에 안내했으며, 분쟁 조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가·피해학생 보호자 간 원활한 합의를 유도토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5)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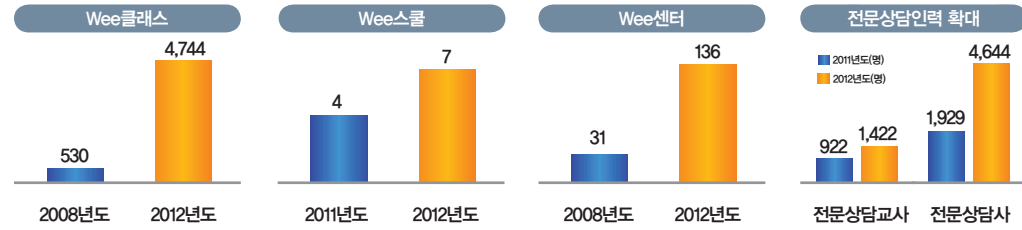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학교현장에서 117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들 수 있다. 117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증가⁷⁵⁾하고, 월별 학교폭력 신고자 비율에서 학생 본인 신고비율이 증가⁷⁶⁾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의 다각적인 정부 대책에 힘입어 학교현장에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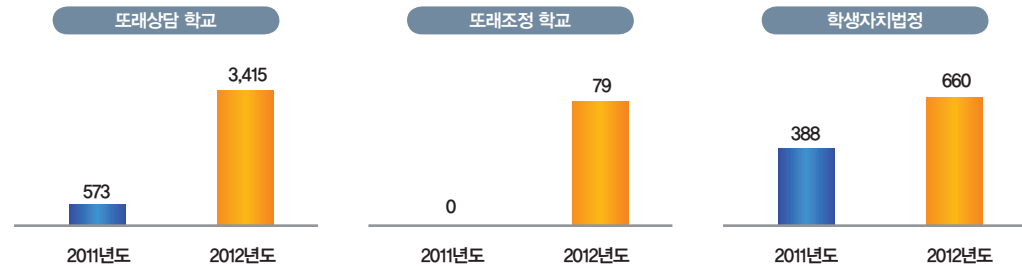
75) 2011년 280건 → 2012년 9월 4만 9,753건/누적
76) 2012년 1월 27.8% → 2012년 9월 62.6%

둘째, 학생들이 학교폭력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학교 단위 Wee클래스, 교육지원청 단위 Wee센터, 광역교육청 단위 Wee스쿨 등 Wee프로젝트가 강화⁷⁷⁾되었고, 전문상담인력이 대폭 확충⁷⁸⁾되었으며, 접근성이 좋은 네이버 지식iN과 다음 마이피플에 상담코너를 개설 운영하는 등 사이버 상담도 추진하고 있다.



셋째,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치료가 지원되었다.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총 505개 기관에서 학생 5만099명, 학부모 2만1,010명(2012년 계획)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총 318개 기관에서 피해학생 3만221명, 학부모 1만214명(2012년 계획)의 교육·치료지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또래활동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배양되었다. 또래상담, 또래조정 및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가 증가⁷⁹⁾했다.



다섯째, 가정의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 교육 확대를 들 수 있다.

구분	학교설명회			학부모 상담		
	일과 중	일과 후(주말 포함)	미개최	일과 중	일과 후(주말 포함)	미개최
2009	86.4%	8.4%	5.2%	35.1%	11.2%	53.7%
2012(상반기)	27.4%	71.3%	1.3%	25.0%	74.4%	0.6%
2012(하반기)	6.7%	93.1%	0.2%	11.8%	88.1%	0.1%

77) Wee클래스 2008년 530개 → 2012년 4,744개 예정 / Wee센터 2008년 31개 → 2012년 136개 / Wee스쿨 2011년 4개 → 2012년 7개 예정
 78) 전문상담교사 2011년 922명 → 2012년 1,422명 / 전문상담사 2011년 1,929명 → 2012년 4,644명
 79) 또래상담 2011년 573교 → 2012년 3,415교 / 또래조정 2012년 신규 79교 / 학생자치법정 2011년 388교 → 2012년 660교

여섯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확산 움직임을 들 수 있다. 2012년 10월 현재 228개 전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를 완료했고, 각 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례⁸⁰⁾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8.27~10.12)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8.5%인 32만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고 응답했고, 심한 욕설, 금품 빼앗기, 집단 따돌림 등 그 유형도 다양하고, 특히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도 11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해나가야 하겠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인간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가치와 문화가 존중받는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4.7.30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
2005.2	■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2005~2009) 기본계획 수립
2010.1.13	■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2010~2014) 기본계획 수립
2010.6.23	■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1.5.19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
2011.7.29	■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을 마련·발표
2012.2.6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2.4.1, 5.1	■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4.4	■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2012.6.12	■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2012.9.4	■ 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2012.11.16	■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80) 광역단체 6개(대구, 광주, 충북, 경북, 경남, 제주) / 기초단체 6개(서울 강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경북 봉화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영주시)

7. 콘텐츠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1) 추진배경

세계 콘텐츠시장은 2010년 기준 1조4,195억달러로 미국이 세계시장의 31.2%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9위로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⁸¹⁾ 최근 한류(韓流)의 인기로 2011년 콘텐츠산업의 총매출액은 82조4,13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조2,928억원(14.3%), 수출액은 4조 7,65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355억원(27.8%) 증가했다.

2011년 86개 콘텐츠 상장사의 영업이익률(15.62%)은 전체 상장사(5.89%)보다 약 2.7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콘텐츠산업이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위	국가	시장규모(비중)	순위	국가	시장규모(비중)
1위	미국	4,281억달러 (32.4%)	6위	프랑스	619억달러 (4.7%)
2위	일본	1,643억달러 (12.3%)	7위	이탈리아	419억달러 (3.2%)
3위	독일	885억달러 (6.7%)	8위	캐나다	323억달러 (2.4%)
4위	중국	758억달러 (5.7%)	9위	한국	288억달러 (2.2%)
5위	영국	732억달러 (5.5%)	10위	스페인	286억달러 (2.2%)

출처 : PwC(2010)

콘텐츠산업은 교육·의료 등 서비스업, IT기기 등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은 물론 유럽, 중동, 미주 등 세계 각지로 확대되고 있는 신한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광산업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2012년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만 12조원에 이르고, 고용유발효과도 6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⁸²⁾

또한 콘텐츠산업은 급속한 경제발전 성과만을 부각시켜온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문화와 스타일을 더하며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약 100만명(전체의 10%)이 '한류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프랑스 르몽드(Le Monde)지는 "유럽의 한류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현저히 기여한다"고 보도했으며, 영국 비비씨(BBC)방송은 "한류는 삼성을 대체할 한국의 국가 브랜드"라고 평한 바 있다.

81) PwC 2011
82) 매일경제·네모파트너즈 2012

콘텐츠산업은 국가의 17대 신성장동력(2009.5), 미래 3대 먹거리 산업(2011.1)으로 선정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나 지원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며, 문화예술을 토양으로 하면서 장르 간, 매체 간 연계와 저작권, 통상, 기술(CT), 금융 등 인접 분야와의 통합적 연계가 매우 중요해지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콘텐츠산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특히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 미디어 간 융합에 따른 초국적 거대시장의 형성으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접근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바,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주요 국가의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 】

국가	정책 방향	주요 계획
영국	1997년부터 '창조산업'에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금융업에 이은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콘텐츠 강국으로 부상 * 2009년 영국 경제의 부가가치 : GDP의 5.6%, 수출의 4.1%, 고용의 7.8%, 기업수의 8.7% 비중 차지	'디지털 브리튼' (문화부, 2009.6)
일본	문화산업을 21세기 리딩산업으로 아젠다화하고 콘텐츠산업 육성정책 방향을 '문화대국'으로 연계하여 육성, 2004년 6월에는 「콘텐츠 창조·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산업대국전략' (경제산업성, 2010.4.5)
중국	급속한 경제성장과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사업(의식개혁)에서 문화산업(경제발전)으로 전환하는 정책방향 수립	'문화산업진흥계획' (국무원, 2009.9.27)
대만	디지털콘텐츠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가치사슬구축, 중국과 교류 확대, 투자지원, 인재양성 등 4개 전략 수립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계획' (행정원, 2010.7)

2) 콘텐츠산업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는 2002년 제정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2010년 6월 10일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이로써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콘텐츠산업진흥법」(2010.6.10) 주요 내용

-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콘텐츠' 개념 등 재정립 (제2조)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구성 (제7조)
-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제9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제21조)
- 콘텐츠 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제22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24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36조)

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출범 배경

과거 콘텐츠 영역을 두고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간 정책기능의 중복문제로 오랜 논쟁과 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손실이 적지 않았다.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콘텐츠 영역을 둘러싼 부처 간의 대립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콘텐츠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 규정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과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는 달리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총괄·조정’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정책 충돌을 막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리라 기대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행 계획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해당연도 사업 추진방향,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과 세부 수행계획, 콘텐츠 유통 촉진계획,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 활성화 시책 및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 등이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②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개요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 관련 각 부처의 장 및 민간 콘텐츠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총괄 조정기구이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에 따라 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총괄·조정 ③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 ④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에 관한 사항 ⑤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실무위원회는 문화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11개 관련부처 고위 공무원 및 8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매년 정기적인 이행실적의 점검 및 평가와 성과분석,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 간 협력사업의 발굴 등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③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출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2011년 4월 13일, 12명의 당연직 위원과 8명의 민간직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

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교육과학기술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식경제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국토해양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는다. 위촉직 위원(8명)은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콘텐츠산업의 융복합 추세에 부응, 콘텐츠 관련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 영화·게임 등 콘텐츠 각 분야, 학계·금융투자·기기 등 관련 분야를 망라하여 구성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콘텐츠 산업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가.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정부는 2011년 5월 23일 정부중앙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콘텐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라 콘텐츠산업 전 범위에 걸쳐 범정부적으로 수립하는 종합적 계획이다.

그 내용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방송·애니메이션·디지털콘텐츠 등은 물론, 교육·의료·공공정보 등 관련부처 소

관의 콘텐츠 전 분야를 망라한다.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후 5월 초까지 계획 초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쳤다. 2011년 5월 12일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3일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은 게임·영화·3D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제2의 국가경제 성장의 모멘텀으로 만들고자 콘텐츠산업의 범국가적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 스마트 콘텐츠 코리아를 비전으로, 2013년까지 세계 콘텐츠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2013년까지 스마트시대를 선도할 청년일자리 5만 명을 창출하고 2015년까지 GDP 규모 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현재 2.7%에서 5%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이를 위한 5대 핵심전략으로 ①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②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③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④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⑤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며, 우리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면 콘텐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콘텐츠 유관부처 간 협력모델 발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및 민간의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5대 핵심전략		15대 중점과제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①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체계 확립 ② 콘텐츠산업 투자재원의 획기적 확충 ③ 범정부 융합콘텐츠 개발(新시장창출)
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① G20 창의 인재양성 ② 콘텐츠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③ 창작여건 개선
3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강화 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③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지원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① 기기-서비스-콘텐츠 동반성장 유도 ② 저작권 보호강화 및 이용 활성화 ③ B2B, B2C 공정경쟁 환경조성
5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①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 ② 선진 유통기반 마련 ③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R&D) 개발

나.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정부는 2011년 11월 24일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글로벌시장 진출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 5대 추진전략하에 총 6,5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은 지난 5월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3년 단위의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의 2012년도 콘텐츠산업 정책 기본방향과 세부사업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2012년 콘텐츠산업 매출액 80조원, 수출액 45억달러, 일자리 60만명을 달성하고자 정부예산 총 6,595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2012년 시행계획의 핵심방향은 스마트·융합, 공생발전·공정경쟁, 창업·창직 글로벌 경쟁력이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가천대 경원캠퍼스에서 열린 ‘앱개발자 경진대회’를 방문, ‘차세대 콘텐츠 부스’를 참관하여 3D 한류 콘텐츠를 관람하고 있다.

역점 실천과제로 모태펀드, 글로벌 펀드 등 민간투자 확대 유도, 1인 창조기업 등 콘텐츠분야 지원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콘텐츠산업은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아이디어 중심의 창의산업이라는 점에서 청년실업이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안건과 별도로 ‘스마트콘텐

츠산업 육성전략’(문화체육관광부)과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향’(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되어 위원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전략’은 2011년 10월 13일 정부의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에서 스마트콘텐츠산업이 정부의 10대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조치였다. 스마트콘텐츠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등)와 인터넷의 자원이 결합되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로 양방향성, 사용자 친화형 등의 특징을 가진다. 스마트콘텐츠는 향후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한편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위원회 개최에 앞서 100명의 젊은 개발자가 54시간 동안 모바일 콘텐츠의 기획부터 개발까지 진행하는 앱개발자 경진대회를 참관하고, 차세대콘텐츠 부스를 둘러 앱 콘텐츠 등을 직접 시연하며 젊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 콘텐츠산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 노력이 수반되는 산업으로서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서 청년층 실업을 타개할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정부는 2012년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에 수립된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은 관계부처의 2013년도 콘텐츠산업 정책 기본방향과 세부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2013년 콘텐츠산업 매출액 100조원, 수출액 52억달러, 일자리 61만명 달성을 목표로 정부예산 총 3,961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역점 실천과제로 문화기술 R&D 통합추진체제 구축, 콘텐츠산업 투자·지원 자금 확대,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콘텐츠 분야 취업·창직 지원, 글로벌 기업 발굴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스마트기반의 융합서비스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문화콘텐츠의 원천인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산업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심의안건과 별도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창조경제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창조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계획’(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도 이루어졌다.

4) 주요 성과

변화된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한 일원적 콘텐츠 정책 수행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콘텐츠산업 관련 각 부처의 장 및 민간 콘텐츠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문화콘텐츠와 디지털콘텐츠를 이원적으로 접근했던 과거와는 달리 콘텐츠 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온라인-오프라인, 아날로그-디지털 콘텐츠 정책 및 저작권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디지털화된 음악시장에서 K-pop을 필두로 한 신한류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콘텐츠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추진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10.6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공포
2010.12	■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
2011.4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운영
2011.5	■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5년) 수립
2011.11	■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위원회 상정·의결)
2012.11	■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위원회 상정·의결)

8. 지방보육료 부족문제 해소 및 보육지원제도 개선

1) 문제의 시작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정책방향에 따라 당초 보육료 지원 대상을 5세(2012) → 4세(2013) → 3세(2014)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2012년에는 만 5세 누리과정(만 5세 전 계층 보육료 지원)을 도입하고, 기존 0~2세 소득하위 70%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2011년 12월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급증하는 등 당초 정부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2) 국회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결정에 따른 문제점

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증가

2012년 10월 현재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는 84만명(2012.9.31, 복지부 추계)이며, 2012년 월평균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는 7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추산했던 월평균 51만명보다 51%가 증가한 숫자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수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은 ‘국회의 보육료지원대상 확대 결정’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즉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기존에 가정에서 양육되던 영아들도 어린이집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 도입 이후 ‘가정 내 양육실태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2012.4~5)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가정양육을 하던 부모 500명 중 235명은 국회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결정 이후 개인시간이 필요해서(22.3%),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19.2%) 어린이집을 신청한 것을 알 수 있다.

0~2세 영아는 정서발달을 위해서 부모와의 공감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OECD에서도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30%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2년 6월 기준 56.9%로 OECD 권고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많은 영아들이 가정양육보다 시설인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맞벌이 등 실수요자의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

기존에 가정에서 양육되던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늘자,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정원을 초과하면서 정작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꼭 필요한 때 어린이집을 구하기 어렵거나 구하더라도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영아는 맞벌이 부부의 영아에 비해 같은 보육료를 내고도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짧아 어린이집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영아보다 전업주부들의 영아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맞벌이 등 실수요자들의 어린이집 구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다.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저하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자 수가 늘면서 어린이집은 영아를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줄어들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라. 지방 보육료 부족

지자체는 국회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결정 이전에 정부의 2012년 예산안을 기준(보육료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으로 이미 지방 보육료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였으나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자체에서도 관련 법령⁸³⁾에 따라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증가분을 새로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 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국회 예산 증액과정에서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국회의 보육료 지원 확대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지방보육료 부족분 전체에 대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주장하며 추경편성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일선현장에서는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3) 보육지원체계 개편 과정

정부는 국회의 갑작스러운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결정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보육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했다.

가. 여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우선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이 중심이 되어 현장간담회를 개최(1.16, 2.17, 3.14)하여 바람직한 보육지원체계에 대해 부모와 보육교사 등의 요구사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양육수당개선 TF를 만들어 관계전문가 등과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보육·양육지원체계를 모색하는 한편, 보육·양육정책 보완방안 간담회(6.25)를 열어 아동·여성·육아 관련 전문가 및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 등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한 보육제도 개선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7.19)하여 현 보육지원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보육지원체계에 대해 토론했다.

나. 관계부처 논의 및 지자체 협의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원대상과 지원방식 등을 두고 국무위원간담회(3.4), 국가재정전략회의(4.28),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3.6, 3.14, 5.2, 6.14, 7.9, 7.27, 8.24),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7.17, 9.12) 등 고위층 회의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논의결과를 반영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향을 전국시도지사임원단 대표(9.13, 관계부처 및 간담회 시), 시군구청장협의회 임원단 대표(9.17, 관계부처 및 간담회 시) 등에게도 적극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다. 국회설명 및 당정협의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방향 등에 대해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7월 17일의 고위당정협의에서는 지방보육료 부족문제의 해결방안을 포함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고, 9월 12일 열린 지방재정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지방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국회 지방재정특위 위원장 및 양당 간사를 직접 방문(9.18, 국무총리실장) 하여 관련내용을 설명했다.

라.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

보육사업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의 관계부처 논의 내용과 지자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9.24). 이에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전면 무상보육의 포기’라며 반발했고, 특히 10월 5일 복지부 국감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영유아 무상보육을 100%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당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4)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

가. 개편 방향

정부의 9월 24일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은 국회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둘째,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현상을 최소화했다(영아의

83) 「영유아보육법」 제4조 ‘보육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책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우선 확보의무’

가정양육 유도). 셋째, 기존에는 어린이집 이용이 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종일반으로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맞벌이와 전업주부 등 수요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도록 지원시간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금년도 지방보육료 부족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도록 했다.

나. 구체적 내용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영아의 가정양육 유도

현재는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가정은 보육료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나⁸⁴⁾ 2013년부터는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에게 현금(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⁸⁵⁾

부모는 지원받은 현금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인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모가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현상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차원에서 부모가 어린이집 이용 시 카드 형태로 지원되는 바우처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게 지원되도록 하여 '보육료 전 계층 지원'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했다. 다만 중앙과 지방의 재정상황과 개인의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현금지원은 '소득하위 70%' 에게만 지원하여 소득상위 30% 이상인 계층에게는 어린이집 이용 시 일정부분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하도록 개편했다.

또한 3~5세도 도서·벽지 등 시설 보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맞벌이 등 실수요자 요구 반영

기존에는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형태가 종일반 형태로 획일화되어 전업주부·맞벌이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고, 정부의 종일반 지원시간(12시간)이 전업주부 영아의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7~8시간)보다 많아 어린이집에 실제보다 많은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벌이에게는 종일반을, 종일반까지는 지원받을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에게는 반일반을 제공하여 수요자에게 맞게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업주부라도 학생이거나 직업훈련, 출산, 질병 등으로 종일제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맞벌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규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되, 이용비용에 부모부담을 일부 적용하여 시설의 적정이용을 유도해나

갈 계획이다. 그리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라도 외출, 병원 이용 등 비(非)상시적인 시설 이용 필요 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2013년도에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향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③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영아의 가정양육이 증가하면 어린이집 이용수요 초과로 발생한 어린이집 서비스 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시설 및 안전·운영 투명성 등 보육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확대·강화하고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재정지원을 차등화하여 보육서비스 질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5) 시사점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은 2011년 말 국회에서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개편방안 마련을 통해 정부의 정책, 특히 많은 재정부담이 소요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복지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과 지방의 재정여건과 지속가능성,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매칭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복지사업 확충 시에는 사전에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 중요 사례라 할 것이다.

84)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까지만 현금(양육수당)지원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85) 단가는 동일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 지원대상 확대 : 2012년 11만2,000명 → 2013년 66만8,000명

보육지원제도 개선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위원 간담회(3.4), 관계 차관회의(3.6, 3.14), 국가정책조정회의(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 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주례보고(2.28, 3.21) 시 보육·양육 지원체계 개편방향 보고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발표(3.22, 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 발표(3.29) 지방재정 TF(3.30)
20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 TF(4.20) 국가재정전략회의(4.28) 시 보육제도 보완방안 논의
20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5.2) 서별관회의(5.22)
2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6.14) 보육·양육정책 보완방안 간담회(6.25)
20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7.9) 서별관회의(7.10) 고위당정협의(7.17)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7.17) 보육제도 개선방향 공개토론회(7.19)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7.27)
2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지방협의회(8.1)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 발표(8.2)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8.24)
20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차장 주재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부단체장 간담회(9.11)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원방안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방향 최종 합의 국회 지방재정특위 보고(9.12) 중앙부처·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회의, 국무총리면담, 국무총리실장 브리핑(9.13) 국무총리실장 주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담회(9.17) 국회 지방재정특위 위원장 및 양당 간사 설명(9.18) 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발표(9.24)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한 새누리당 반대 성명 발표(9.25)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한 민주통합당 반대 브리핑(9.25)
20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위 무상보육 예산 증액 결의(10.5)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보육료 지원방안 최종 수용(10.11)

9. 성폭력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그러나 2006년 용산 초등생 성폭력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2008년 8세, 10세 여아가 폭력 등 전과 2범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가 정해졌고, 정부에서는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등 범죄예방과 가해자의 신속한 검거 및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2008년 4월 30일 발표했다.

또한 대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9개 부처 국장급(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단원으로 구성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 형량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새로운 범죄발생유형에 대한 대응⁸⁶⁾과 함께 제도운용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대책 추진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보완⁸⁷⁾하고 아동·여성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 후⁸⁸⁾에도 국무총리실에서는 2012년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 추진점검 5년차를 맞아 지난 4년간의 부처별 이행 성과를 살펴보고 그 미비점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검토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2012.5.25)하는 등 대책의 체계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건은 계속 발생⁸⁹⁾되었고, 그 결과로 노출·확인된 제도상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한 긴급 개입을 위해서는 부처별 개별대응이 아닌 관계부처 합동의 종합적 처방을 마련하기 위한 국무총리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었다.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기존 대책들의 추진상황을 이행 점검함과 동시에 2011년도에는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한 장애인 성폭력, 그리고 2012년의 경우 성폭력, 문지마범죄 등 사회안전저해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부 분야별로 대대적인 보완대책도 추진 중이다.

86) 2009년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길태, 김수철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국회에서도 2010년 3월 18일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발표

87) 2009년 10월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2차 대책)', 2010년 6월 '정부의 아동안전 보완대책(3차 대책)을 발표

88) 2010년 6월 제10차 회의부터는 단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변경하여 2012년 3월까지 총 17차례 회의를 개최

89) 제주올레길 여성살인사건(2012. 7.12), 통영초등생살인사건(2012.7.16), 중국동주부살해사건(2012.8.20)

2)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 추진

가.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의 관계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44개)에 구성하고,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도제작⁹⁰⁾을 통해 아동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약국, 문구점 등 2만3,983 개소를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전국 경찰관서 249개 서에서 2,270명의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12개 → 22개 직군) 및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신설(「아동복지법」 전부개정, 2012.8.5 시행)했다. 실시간으로 범죄를 모니터링하고 가해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2009~), 공원놀이터(2011) 및 학교에 CCTV 설치를 확대⁹¹⁾하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나. 신속한 구조와 검거

신속한 구조와 검거를 위해서는 수사인력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일선 지방경찰청 58개에 성폭력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성폭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검거 및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2010년 7월 26일부터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의 DNA를 채취, 사망 시까지 관리하여 신속한 검거를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배치(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반복진술을 방지하고 진술의 증거능력을 높이고 있다. 실종아동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종아동 발생 시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위치정보수집 시스템⁹²⁾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탐문·수색이 가능해졌다.

다.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및 재범방지

종합대책 수립 당시인 2008년에는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년간 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대체로 뒤늦게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아동성폭력 특성을 고려해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 여성 대상의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는 범행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음주를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지 않도록 법을 개

정하고, 강간의 객체로 여자 아동·청소년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내 용	대책 수립 이전	현 재
13세 미만 여아 강간죄	5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3세 미만 유사강간행위	3년 이상 유기징역	7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강제추행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벌금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함으로써 성범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성범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10년간 제한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시설(30만개소, 총132만명) 범죄경력 조회로 성범죄자 46명 적발, 해임 및 영업장 폐쇄 등 조치(2011)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범죄자 거주 인근 지역 주민에게 우편고지

- 신상정보 등록 : 2008년 268명 → 2009년 877명 → 2010년 1,003명 → 2011년 1,676명
 - 인터넷 공개 성범죄자 수 : 누적 1,187명(2010~2012.1)
 - 우편고지 실적 : (2011) 206건, 54만2,637세대 고지(2011.6.17 최초 실시)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에게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감시하고,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2011.7.24. 시행)
 - 전자발찌 착용자 수 : 2008년 151명 → 2009년 127명 → 2010년 393명 → 2011년 932명

라.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성폭력피해자가 한 번의 방문으로 상담·수사·의료·법률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⁹³⁾를 전국에 31개소로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의 국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상담사, 임상심리사, 여성경찰관, 간호사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상주하면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지원인원 및 서비스 지원 건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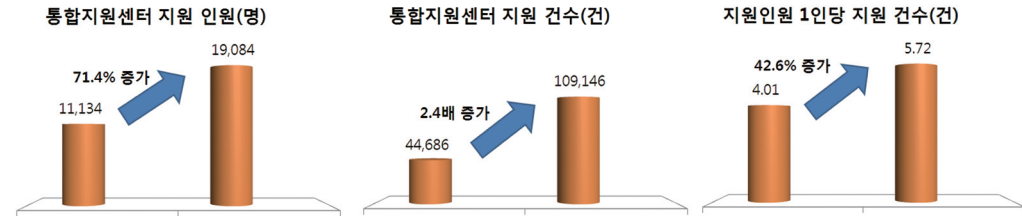
90) 2011년도에 전국 초등학교(5,881개교) 중 55.4%(3,259개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91) 전국 초·중등학교의 CCTV 설치율 : 2008년 31.3% → 2011년 97.1%

92)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2명에 대해 유괴·실종 경보시스템을 발령하여 그 중 63.4%인 191명 발견. 전국에 일시보호센터를 60개소 지정하여 지정된 곳에만 실종아동을 보호

93) 통합지원센터 : ①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전담센터) ②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③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 통합지원센터 개소 수 : 2008년 18개소 → 2011년 31개소

94) 2008년 1만1,134명에게 4만4,686건 지원 → 2011년 1만9,084명에게 10만9,146건 지원



이와 함께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상향조정했으며, 2011년부터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에게까지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전국에 21개소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친족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로 인해 가정복귀가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0년 최초로 전국에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2개소를 설치했다. 그 외에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취학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 현황 】

응급신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 24시간 전국 17개소 150여 명 상담원 근무 - 1366 내 성폭력 피해 상담 : 2008년 8,205건 → 2011년 9,700건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응급키트 의료기관 무료보급 의료비 지원 확대(2010년, 최대 3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전국 327개 의료기관 지정)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가족(부모 등)까지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 제공
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 법률지원(민·형사소송 등의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법률조력인 지원제도(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 지원)
취학·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외 지역의 취학 및 전입학 지원(2011~) 성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을 위한 주거지원(2008~)
상담소 및 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165개소(87개소 국비지원), 보호시설 21개소(전부 국비지원) 설치·운영

마. 안전한 성장환경 개선 및 돌봄 시스템 구축

Wee프로젝트(학생안전통합프로그램)⁹⁵⁾와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⁹⁶⁾을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상담을 강화⁹⁷⁾하고, 인터넷 유해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과 함께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셋다운제, 2011.11.20)을 통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⁹⁸⁾했다.

95) Wee 스쿨 7개, Wee 센터 126개, Wee 클래스 4,497개 운영 중

96) CYS-Net 서비스 지원 청소년 수 : 2008년 5만6,899명 → 2011년 14만5,376명

97) 성폭력기해청소년 교육 : 2008년 222명 → 2009년 312명 → 2010년 293명 → 2011년 577명

98)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체계 상시화 :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총 3만4,941명 단속 (2008~2011)

또한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와 문화바우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성폭력피해 우려가 큰 ‘나홀로 아동’의 사회적 돌봄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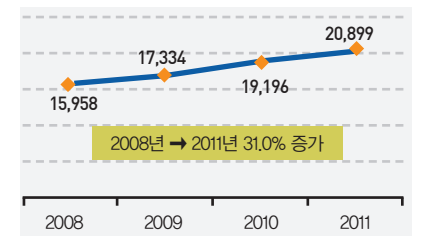
방과후 아동 돌봄 대책		2008	2009	2010	2011
초등 돌봄 교실	운영교실(개소)	3,334	4,622	6,200	6,639
지역아동센터	운영센터(개소)	3,013	3,474	3,690	3,985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개소)	185	178	161	200
	참여인원(명)	7,980	7,560	6,804	8,200
문화바우처	수혜자(명)	21만8,000	29만6,000	46만9,000	122만

3)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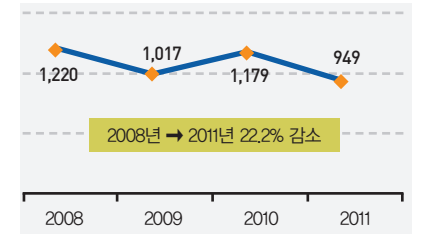
법정부적 아동·여성보호대책의 추진기간 동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성폭력(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03~2008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발생 신고건수는 2009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11년에는 아동대상 성폭력 신고건수가 1,000건 아래로 감소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 검거인원이 늘고 실종자를 조기에 구조하는 성과를 보였다.

성폭력범죄자 검거인원은 2008년 1만7,825명에서 2011년 2만159명으로 약 13.1% 증가했고, 2008년 이후, 총 302명에 대해 유괴·실종 경보시스템을 발령하여 그 중 63.4%인 191명을 조기에 발견하여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사전 예방했다.

【 13세 이상 대상 성폭력 발생 신고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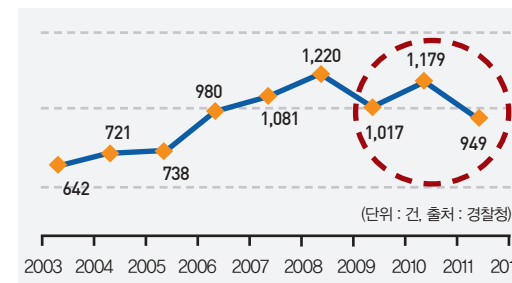


【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 신고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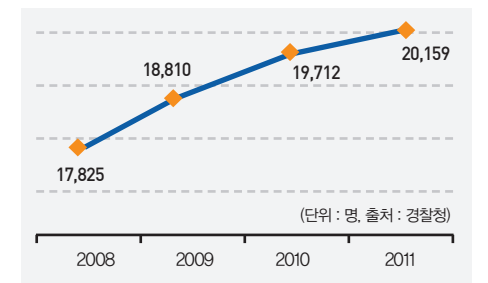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 신고 건수 】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

【 성폭력범죄 검거인원 】



(단위 : 명, 출처 : 경찰청)

4) 장애인대상 특별조치 이행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과는 별도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장애인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2011.10.7)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9.27, 10.5)⁹⁹⁾를 개최하여 여론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포괄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동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친고죄를 폐지하고,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했으며,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상시적 인권 실태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대책발표 이후 대책의 이행력·체감도 제고를 위해 각 부처 및 집행 현장의 추진상황·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체 점검(10.10~24)과 관계부처 합동 특수학교·복지시설 등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추가보완대책을 마련(2011.12.9)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추진과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관리를 통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① 복지시설 장애인 인권보호(복지부)	■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예방 감시체계 구축, 성범죄자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배제 등
②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여건 개선 (교과부)	■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교육 내실화
③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여가부)	■ 피해자지원시설 단계적 확충, 시설 통폐합 등 운영 효율화
④ 성폭력범죄 예방 강화(법무부·복지부 등)	■ 전자장치 부착대상 관리 강화, 장애인 인식교육 내실화 등

5)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범죄 근절 추진

지속적인 제도 정비 이후에도 나타나는 현장의 사각지대 발생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행태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안대처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공동대응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에만 위임하지 않고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신속하게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는 계속 노력했다.

99) 6개 분야 22개 과제: ①인화학교·인화원 처리 ②가해자 처벌 강화 ③피해자에 대한 보호 확대 ④사회복지 법인·시설 투명성 ⑤성폭력범죄 예방 강화 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012년 다시 문자메시지, 성폭력 등의 사회문제화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대책」(7.26), 「사회안전대책」(8.27)을 마련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보완하면서, 현장의 사각지대 발생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대책」(7.26)으로 우선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를 확대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진위 여부 확인 절차 강화, 스마트폰 활용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경찰의 우범자 정보수집 활동 관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범자 특별점검 및 CCTV 추가 설치 등을 추진했다. 그리고 피해자구제 확대를 위해서는 피해자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등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피해가족 치료 등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아동음란물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제작·수입·수출 및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소지한 자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부처별로 각기 시행 중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연계·조정하고, 등·하굣길 동행서비스 제공 등 취약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새로운 범죄유형 및 행태에 대한 효과적 현안대처뿐만 아니라 사회 부적응·소외자의 우범화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역점을 두는 「사회안전대책」(8.27)도 마련하여 병행 추진했다. 우선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성폭력 우범자 관리강화, 인터넷 음란물 단속강화, ‘문지마’ 식 범죄 DB구축 등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출·재소자 사회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강화(치료시간, 교육기관 확대)하고, 출소자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 알코올중독 등 사회 부적응·소외자를 위한 범부처 중독종합대책을 마련하고(2012년 말), 방과후 돌봄 및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인프라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사회안전 필요 인력·예산 확충을 통한 실질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인력재배치·증원을 통한 경찰력과 보호관찰관 등을 확대(경찰관 등 1,707명 증원)하고, 부처별 관련 소요예산을 2013년도에 적극 반영했다.

한편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팀장: 국무총리실장)를 구성,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는 한편, 관계자 격려 및 정책추진 현황 점검·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 현장보고회 등도 실시했다.



위차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2012.9.19)



국무총리주재 관계전문가 오찬간담회(2012.9.26)

또한 국회에 구성된 「아동여성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9.10~12.9)의 활동과 긴밀히 협력하여 입법 필요사항의 급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11.22 국회통과¹⁰⁰)했다.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성충동·폭력을 유발하는 사회문화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부응하고, 사회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지역사회 등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공청회(9.27), 국무총리주재 간담회(9.26)와 함께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의 지속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조성」 관련 홍보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성폭력 등 아동·여성 대상 근절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8.4.30	■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
2009.10.9	■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2010.6.26	■ 정부의 아동안전보완대책(국가정책조정회의)
2011.11.7	■ 장애인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대책
2011.12.9	■ 장애인 성폭력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2.5.25	■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 4년 성과 및 향후계획(국가정책조정회의)
2012.7.26	■ 아동여성 성폭력근절대책(관계장관회의)
2012.8.27	■ 사회안전대책(관계장관회의)
2012.9.4	■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국무회의)

100)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 특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상 여성가족부 소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상 법무부 소관)

10. 다문화가족 지원대책 수립

1) 추진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은 한국사회 전체 결혼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해도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했으나 2004년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건수의 10%를 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줄곧 전체 결혼의 9~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혼인건수	30만2,503	30만8,598	31만4,304	33만0,634	34만3,559	32만7,715	30만9,759	32만6,104	32만9,087
국제결혼건수	2만4,776	3만4,640	4만2,356	3만8,759	3만7,560	3만6,204	3만3,300	3만4,235	2만9,762
국제결혼비율(%)	8.2	11.2	13.5	11.7	10.9	11.0	10.8	10.5	9.0

통계청 「2012년 혼인통계」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결혼이민자 수도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인구가 급증하자 생산가능인구 증가,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 반면 사회통합이 지연될 경우 인구의 빈곤과 인종계층 간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취학하게 되고, 가까운 장래에는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는 2009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합동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정부는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10년 5월 7일에 열린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의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년)'을 논의·확정했다.

2) 다문화가족 지원개선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09년 6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문화가족 지원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종합대책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와 다문화 가족의 책임성 제고 및 지원확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분야별 개선 방향과 추진체계 재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야별 개선 방향은 결혼준비단계, 가족형성단계, 자녀양육·교육단계, 가족역량강화단계 등 4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사업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 추진체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 역할 강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민관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12.4.18)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 중앙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갈등, 유사사업 조정 등을 위한 총괄·조정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국무총리 훈령 540호,

2009.9.11)」을 제정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출범시켰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당연직 위원¹⁰¹⁾과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2011년 4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2011.4.4, 시행 2011.10.5, 법률 제10534호)되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동 위원회의 조정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향후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성숙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2년 9월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했고, 다문화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까지 국무총리실장이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정책의 조정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10년 3월 다문화

가족정책 주관부처 이관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¹⁰²⁾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조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간 이견조정 및 위원회 운영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4)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의 체계적 재정비를 위해 2010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토대로,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국격 제고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존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정비했으며, 전체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5대 영역은 ①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②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③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지원강화 ④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⑤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이며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등)의 서면제공 의무화, 외국현지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자립가능한 이민자의 유입을 위하여 사증발급 심사기준에 기존의 ‘혼인의 진정성’ 외에 ‘건강한 가족 형성’ 및 ‘사회통합 용이성’ 등을 포함하고, 가정폭력·상습적 성범죄 전력자 등의 외국인배우자 초청자격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를 위해 부처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법무부)의 한국어교육 기준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국적취득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놓여진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 방문교육지도사의 방문교육 서비스, 한국어교육통합정보망(누리·세종학당)을 통한 온라인교육 등 한국어교육 방법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10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물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동일하게 구성

10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2011.4)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조정

셋째, 결혼이민자의 취업의욕 및 기술향상 등을 위해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2011년)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¹⁰³⁾ 발급을 확대(2010년 200명 → 2012년 400명)키로 했으며,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개선(2011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성별, 출신국, 거주지역 등을 감안한 적합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



103) 구직자에게 일정 한도(200만원)의 계좌 발급, 총훈련비의 20%는 본인 부담

넷째,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을 상향조정¹⁰⁴⁾하여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구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및 이주여성쉼터·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그룹홈 등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유아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희망유아교육사 및 다문화언어지도사를 통한 언어발달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다수(15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교과학습지도를 지원하고, 자녀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이중언어교육을 활성화(방과후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교실 등)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재량·특별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으며,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과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적인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먼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종합계획의 기본 틀을 잡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안을 작성했으며, 초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보완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자센터 등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정책에 반영했다.

5)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강화방안 마련

한편, 2010년 7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사망사건¹⁰⁵⁾을 계기로 국제결혼제도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TF¹⁰⁶⁾를 구성,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2010.10.15)」을 마련했다. 그간 결혼중개

104) 국내체류 허가기간을 1회 심사 시마다 최대 3년까지 연장(현행 1~2년)

105) 2010년 7월 8일 베트남 출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정신병력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으로 피의자는 평소 환청이 들려 부모를 폭행하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임

106)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으로 구성

업체에 의한 집단 맞선과 속성결혼(4~5일)의 사례가 빈번했고 한국 배우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으로 결혼 후 인권침해와 가족갈등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속출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캄보디아가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잠정 중단(2010.3~4)을 통보했으며, 국가품격의 심각한 손상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입국 단계에서부터 국제결혼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10년 10월 15일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11.11.23)에서는 동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방향을 논의하였다.

국무총리실은 현행 속성·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관행이 다문화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혼인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국제결혼이 사랑과 신뢰, 책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 주요 내용(2010.10.15) 】

- 1 국제결혼중개 제도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9개 과제)
 - 결혼중개업법 개정 및 업체단속 등 중개업 관리 강화
 -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협의체 구성 등 협력강화
- 2 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입국관리 강화(2개 과제)
 - 결혼사증 발급심사 기준 및 발급심사 강화 등
- 3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3개 과제)
 - 초기적응 지원 확대, 긴급지원 및 가정갈등 예방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6)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종합대책 수립

국무총리실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문화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무총리의 다양한 행사 참석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먼저, 국무총리는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일선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다문화가족 및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으며,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30명)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에서의 생활과 근무여건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또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100쌍의 합동결혼식에 참석하여 결혼식을 축하하고, 주례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이자 일꾼으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당부하였다. 2012년에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고교과정 대안 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학교¹⁰⁷⁾ 개교식에 참석하여 45명의 입학생들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개교를 축하하였으며, 축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맘껏 꿈을 펼치고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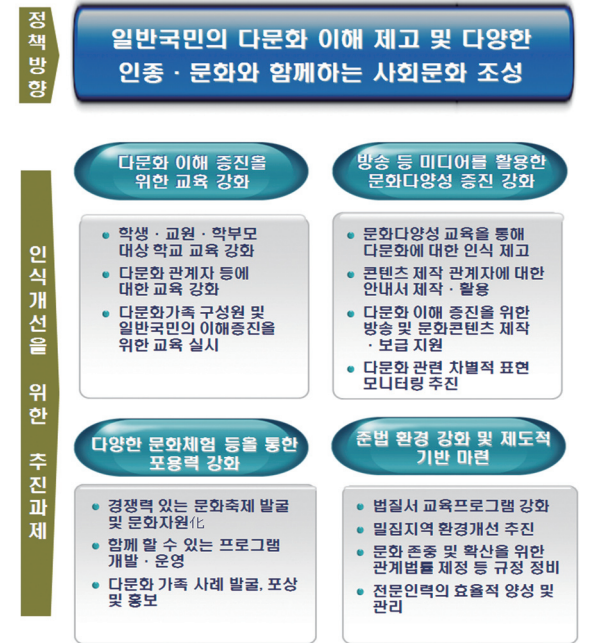
다솜학교 개교식 참석(2012.3.2)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 논의(2012.8.17)

또한, 2012년 들어 국무총리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및 수용도 제고’를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2012.8.17)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 대책은 ‘우리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여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자’란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했다.

동 대책은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인종·문화와 함께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으며,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방송 등 미디어 활용 문화다양성 강화, 문화체험 등을 통한 포용력 강화, 준법 환경 강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등 총 4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확정된 세부추진계획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영역의 세부추진과제로 포함·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2012) 】

107) 사회문화 적응교육 및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3년제 기술계 대안고교로 충청북도 제천 소재

7) 정책적 함의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 및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즉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통합·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정보공유 등 효과적인 연계체계 확립 및 정부·민간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단순 수혜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의 자립능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취업대책 및 자녀에 대한 교육대책 등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한 것이었다.

2012년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이 마무리되는 해이며,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1.4)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인 만큼,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정책 추진실적 등을 꼼꼼히 점검·평가,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대책 수립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8.10.6	■ 국무총리 광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2008.10.11	■ 「건국 60년 기념 다민족·다문화 한바탕 축제」에서 국무총리, 다문화 가정 100쌍 합동결혼식 주례
2009.4.28	■ 2009년 관계부처 합동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지원 현장점검
2009.7.10	■ 국무총리 괴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2009.9.28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총리훈령) 제정
2009.12.17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 및 민간위원 위촉(2009.12.17~2011.12.16)
2010.1.27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10. 2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현장방문 - 2.18,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방문 - 2.24 부산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 출입국 관리사무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0. 5. 7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 기본계획 확정·발표
2010. 8. 6	■ 국무총리 춘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2010.10.11	■ 국무총리 대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2010.10.15	■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 발표
2011. 3. 11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및 다문화출신 공무원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
2011. 4. 4	■ 다문화가족지원법령 개정
2011.11.23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
2011.11.11	■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 점검
2011.12.17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2011.12.17~2013.12.16)
2012.3.2	■ 국무총리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개교식 및 이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2012.4.18	■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
2012.6.1	■ 국무총리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2012.8.17	■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 발표

1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미래 인적자원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 4월 고용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수립했다. 동 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0만명(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다. 국무총리실은 교과부, 외교부 등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정부지원협의회(국무총리실장 주재)」를 운영(2008.12~)하면서 부처협의·제도개선, 정책수립과정의 이견조정 등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주요 내용

가. 해외취업, 취업 무대를 세계시장으로 확대

해외취업 사업은 해외취업 희망자에 대한 직무교육 후 취업처를 알선해주는 연수사업, 해외 우수 일자리와 국내 인재를 연결해주는 알선사업 및 플랜트 등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건설인력 양성사업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우수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장기적·안정적 해외인력 수요처 확보를 위하여 중동 등 전략지역의 대형 리크루트사와 MOU를 체결했으며, 우수 민간기관을 육성하고 있다.

나. 글로벌 직장체험으로 국제적 마인드를 높이는 해외인턴

해외인턴사업은 2·4년제 대학생 및 물류·관광·농업 등 전문분야 전공자 등에게 다양한 글로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의 인재로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교과부)·국제무역전문인력인턴(지경부) 등 10개 부처 18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정부는 취업연계 강화, 민간과 차별화된 효과적인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 인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등을 통한 인턴업체 적극 발굴,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굴·확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글로벌 감각을 갖춘 국가 인재를 육성하는 해외봉사
해외봉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보건·농촌개발 등을 지



중동 해외취업박람회

원하기 위해 파견되는 청년층 봉사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OICA 해외봉사단, 대학생 해외봉사단 등 3개 부처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봉사단 파견으로 저개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육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정부지원협의회」 운영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정부지원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기재·교과·외교·행안·농림·지경·노동·여가·국토해양부) 차관급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실적을 점검하고 차년도 계획을 확정하며, 제도개선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정부지원협의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 실무협의 및 안건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정부지원협의회를 5회, 실무협의회를 11회 개최하여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4) 사업 추진경과

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목표조정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각국의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는 등 계획 수립 당시에 비해 대외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목표 현실화 및 사업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2009년 5월과 10월 정부지원협의회 등을 통하여 양적 목표를 축소·조정기로 했다.

당초 2009~2013년 5년간 10만명(해외취업 5만, 인턴 3만, 봉사 2만) 양성을 목표로 했으나, 일부 사업이 제외(워킹홀리데이 등)되고, 사업별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2012년 9월 기준 최종목표를 6만여 명(해외취업 2만4,000명, 인턴 1만6,000명, 봉사 2만1,000명)으로 조정했다.

나. 2011년 해외취업·인턴사업 개선방안 마련

사업 시행의 중간 시점인 2011년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추진실태 전반을 점검(2011.4)하고, 「해외취업·인턴사업 개선방안」(2011.8)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취업사업은 연수취업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알선취업을 확대했으며, 연수과정을 내실화했다. 또한 해외 수요처 발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는 등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해외인턴사업은 유사사업 간 통합 및 민간과의 차별화를 강화하고, 취업연계를 강화하며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토록 했다.

다. 2012년 중동진출 확대 및 개선방향 마련

2012년 2월 중동순방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플랜트 등 전문인력의 중동진출 확대를 지시(2012.2.14, 국무회의)함에 따라,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수립했던 2012년 계획을 수정하여 중동 파견인원을 대폭 확대(2011년 563명 → 2012년 1,247명)했다.(2012.3.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정부지원협의회)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동지역에 우리 청년층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중동국가와의 MOU 체결 등 협력 강화, 현지 리크루트사(Nadia, EAI)와의 연계를 통한 수요처 발굴 확대 및 중동취업박람회 개최(2012.5.10 두 차례 개최) 등을 통해 현지 일자리 발굴 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2012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그간의 사업 추진성과, 문제점을 평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현장점검(2012.7)을 통하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2012.8)을 마련했다.

동 개선방안을 통해 「글로벌 일자리 사업」(해외취업)과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해외인턴·봉사)으로 구분하여 해외사업별 목적에 따른 특화 발전 및 총괄부처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해외수요처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해외인턴사업은 성과평가 기능강화 및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참여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5) 사업별 실적 및 성과

정부는 그간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청년층 해외진출 사업을 해외취업, 인턴, 봉사로 체계화하고 각 사업분야별 총괄기관(취업 : 고용노동부, 인턴 : 교육과학기술부, 봉사 : 외교통상부)을 통해 성과관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지원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 부처간 이견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등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관리체계를 통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어려움속에서도 2009년 이후 최근 3년간 해외취업 등을 통해 총 3만6,415명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해외 취업, 인턴, 봉사 각 사업 분야별로도 파견국가를 신흥국가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등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가. 해외취업(고용노동부 주관)

최근 3년간(2009~2011년) 1만4,612명이 해외에 취업했으며, 2012년에는 취업연수 2,000명, 취업알선 600명, 해외건설인력양성 600명, 민간해외취업알선 1,500명 등 2개 부처 4개 사업 총 4,700명의 해외취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그간 구직자 선호국(일본, 미국 등) 외에 국내인력 진출가능성이 높은 신흥국가의 리크루트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연수기관 선정 시 신규국가 진출 과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국가 다양화를 모색한 결과, 2009년 37개국이었던 진출국가를 2011년에는 53개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4개국의 연수인원 비중이 2009년 90.7%에서 2011년 79.9%로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해외취업 사업 대상국가수 증가 현황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취업국가수	33	37	42	53	53

(단위: 개국)

그리고 해외취업 해외 최대조직망을 가진 KOTRA와의 해외취업연계 추진(2011.7, 약정 체결)을 통하여 해외진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해외인턴, 봉사 등 글로벌사업 참여자를 해외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DB도 구축하여 관련사업 참여자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나. 해외인턴

최근 3년간(2009~2011년) 인턴사업으로 총 9,215명을 해외에 파견했으며, 2012년에는 대학생 글로벌현장학습(250명), WEST(400명), 글로벌무역전문가인턴(지경부, 720명), 중소기업해외인턴(중기청, 200명) 등 10개 부처 15개 사업을 통해 총 3,520명을 파견 추진 중이다.

특히 2011년부터는 정부해외인턴사업도 수요자 입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6개 부처 10개 인턴사업은 교과부에서 예산 등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1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인턴사업을 ①글로벌 역량강화 유형과 ②취업연계 강화 유형으로 재편하고 유형별 중점 추진 방향을 정립하여 글로벌 역량강화 유형은 대학 등 민간인턴사업과 차별화를 추진하고, 취업연계 강화 유형은 인턴 참여가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화했다.

【 정부해외인턴사업 재편현황 】

부처	재편 전(2011)	재편 후(2012)
교과부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WEST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여가부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
	농진청	
지경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농식품부	외식기업 청년인턴
문화부	해외 농업인턴	해외 농업인턴
	중기청	중소기업 해외인턴
국토부	-	물류인력 해외인턴(신규)

① 글로벌 역량 강화
② 취업연계 강화

다. 해외봉사

최근 3년간(2009~2011년) 총 1만2,588명의 해외봉사활동을 지원했으며, 2012년에는 외교부(KOICA 해외봉사단 1,068명), 교과부(대학생해외봉사단 2,300명), 행안부(대한민국 IT 봉사단 550명), 교과부(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35명) 등 3개 부처 4개 사업을 통해 총 3,953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봉사단 파견을 위하여 KOICA 해외봉사단(외교부), 인터넷 청년봉사단(행안부), 대학생청년봉사단(교과부),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교과부) 등 기존 기관별로 추진되어 온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사업을 2009년 5월 「WFK(World Friends Korea)」라는 통합브랜드로 새로이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통합추진의 범위 내에서 단일 브랜드를 통한 봉사사업의 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도 파견국 선정, 수요조사, 모집선발, 교육, 현지관리 및 사업 평가 등 통합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청년 참가자가 ODA 경험 축적을 통해 ODA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귀국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 일정

일자	주요 내용
2008.4.29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수립(교과부, 외교부, 고용부 등 9개 부처 합동)
2008.9.4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정부지원협의회 구성(국가정책조정회의)
2009.5.31	■ 해외봉사사업 WFK(World Friends Korea) 통합브랜드 출범
2009.10.28	■ 글로벌 청년리더 해외취업 개선방안 보고(글로벌 정부지원협의회)
2011.7.29	■ 고용부(인력공단)-KOTRA 간 해외취업연계 추진
2011.8.24	■ 해외취업·인턴사업 개선방안 마련(고용 및 사회안전망 TF회의)
2012.3.2	■ 글로벌 청년리더 중동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글로벌 정부지원협의회)
2012.3.14	■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및 정부지원협의체 구성(고용부)
2012.5.29	■ 2012년 상반기 중동진출 해외취업박람회(COEX) 개최 - 해외인턴, 해외봉사 홍보관 형태로 참여
2012.8.14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보고(국무회의)

12. 선진형 재난·안전·환경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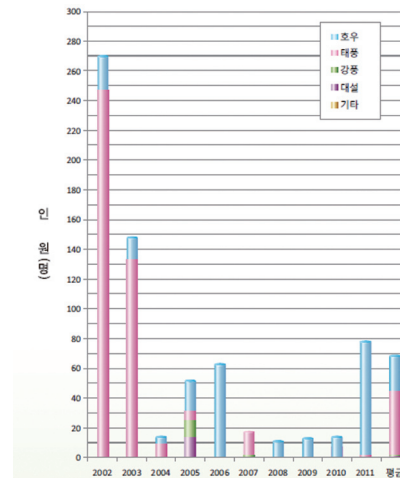
1) 추진배경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 발생 빈도는 증가 일로에 있으며, 피해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 초고층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증가 등으로 복합적인 대형재난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더불어 경제수준 향상 및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환경정책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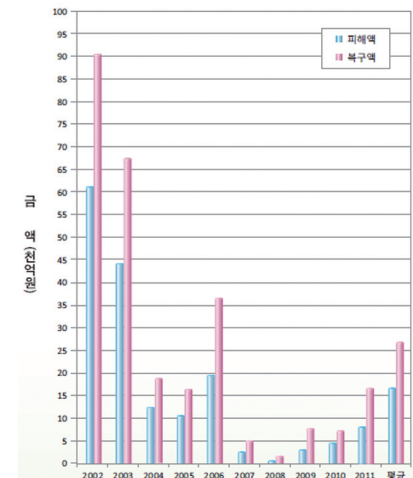
2) 자연재난에 대응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최근 10년간(2002~2011) 자연재해로 매년 평균 68명의 사망자와 1조6,582억원의 재산피해(피해복구비 2조6,751억원 투입)가 발생했다.

【 최근 10년간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 】



【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액 현황 】



인명피해는 감소 추세이나,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으로 재산피해 규모는 급증했다. 향후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하천 유역, 도심지 등 홍수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존의 예측치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누적된 온실가스 영향 등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기상청 발표내용(2011.11.29) 】

2050년	기온	강수량*	해수면*
전 지구	2.3℃(1.8℃)	3.2%(3.0%)	33.7cm(59cm)
우리나라	3.2℃(2℃)	15.6%(11.5%)	27cm(9.5cm)

(*)안은 기존 전망치이며, 전 지구 강수량·해수면의 경우 2100년 전망치

이런 상황 인식하에 정부는 해빙기, 집중호우·태풍, 동절기 등 계절별·계기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재난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복구 보다는 사전 안전점검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방재시설 확충, 제도개선, 안전의식 제고로 이어지는 재난 예방체계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강우집중지역, 하천범람, 도시침수 우려지역을 사전 예측하는 등 한 단계 앞선 상황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려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가뭄피해현장(2012.6.26, 화성시)

또한 DMB 등을 활용한 재난경보 방송 전달체계를 구축(2009.8.31)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발생 시 첨단 IT 이동통신망(LTE)을 기반으로 휴대폰을 소지한 국민들에게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휴대폰의 재난문자 수신기능 의무화를 법제화(2012.2.22)하는 등 재난 예보체계를 강화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서민밀집위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사전 정비·개선하고, 우수저류시설 확충에 재원을 집중투자했다.

【 재해예방시설 투자실적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685	1,714	1,495	1,662	1,925	2,255	5,546	5,539	5,535	6,535
재해위험지구정비	850	940	1,015	1,165	1,332	1,583	3,489	3,083	3,075	3,118
소하천정비	835	774	480	497	593	672	1,909	2,072	2,072	2,269
우수유출저감시설	-	-	-	-	-	-	148	384	388	578
서민밀집위험지역	-	-	-	-	-	-	-	-	-	400
급경사지 붕괴위험	-	-	-	-	-	-	-	-	-	170

아울러 국무총리가 자연재난 피해발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2011년 3회, 2012년 5회)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구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2008~2012, 19회)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지역의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예산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피해가구 주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농어민에 대한 복구자금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2012년 5월 이후 약 두 달간 강우 부족과 저수를 저하 등으로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0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단기대책 및 장기대책을 수립(2012.8.17)하여 추진하고 있다.



태풍 볼라벤 피해현장(2012.8.31, 해남군)

【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분야별 과제 】

5개 기본전략, 9개 분야 28개 핵심과제		
기후변화 사전에측능력향상	1.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예측능력 제고 ① 우리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및 기상예측 체계 마련 ② 빈틈없는 선진 기상예보체계 확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2. 도시 내 빗물처리가능 확충 ① 도시 내 배수 및 저류시설 확충 ② 빗물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3.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①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한 도시계획 마련 ② 도시 내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③ 취약시설물 재해예방대책 마련 ④ 유역단위 관리로 도시하천 홍수예방
맞춤형 투자로 재해에 강한 국토조성	4. 홍수·가뭄 등 대비 수자원 관리 ① 국토 치수능력 제고를 위한 하천 및 댐 시설 등 정비 ② 홍수 예측 및 대비를 위한 인프라 개선 ③ 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④ 해수면 상승에 대비 재해취약 항만지역 개선	5.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선진화 ① 산사태 저감을 위한 사방사업 확대 ② 재해에 강한 산림자원 조성·관리 ③ 산사태 피해 예측능력 향상 및 대응 인프라 확충
통합적 재난대응체계구축	6. 안전영농을 위한 기반 정비 ① 재해위험대비 수리시설 기준강화 ② 농어업 환경변화에 대한 시설 재정비 ③ 해수면 상승대비 방조제 및 어항 정비	7. 재해취약지역 조기정비 및 관리강화 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 정비사업 추진 ② 생활권 주변 방재대책 강화 ③ 소하천, 비법정 소규모 기반 시설 조기정비
재난관리 인프라 강화	8. 통합적 재난대응체계 강화 ①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②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③ 재난정보 전달 및 비상통신체계 확충 ④ 재난복구 지원제도 개선	
	9. 미래대비, 재난관리 상시 역량 제고 ①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 선진화 ② 국민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재난안전 기술력 향상 및 방재산업 육성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침수, 서울 우면산, 춘천 지역 산사태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재난관리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재난관리 개선 TF와 실무추진단을 구성(2011.8)하여 범정부적인 재난관리개선 대책을 마련(2011.12.9)하게 되었다.

재난관리 개선 TF를 구성함에 있어, 일선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위주로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현장감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3개 관계부처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관련 대책의 주관부처가 책임성을 가지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참여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했다.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8.2	■ 기후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재난관리대책 수립 지시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
2011.8.9	■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방향 대통령 보고(국무총리)
2011.8.10	■ 재난관리개선 관계기관 민관합동 TF 출범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민간전문가 공동팀장으로 관계부처(13개) -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1급 및 관계전문가(5명)로 구성 - TF 실무추진단(단장 :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 구성
2011.8.12	■ 재난관리개선 민관합동 TF 제1차 회의
2011.8.26	■ 재난관리개선 민관합동 TF 제2차 회의
2011.9.1	■ 기후변화대응 시민 대토론회(서울시, 프레스센터)
2011.9.8	■ 재난관리개선 민관합동 TF 제3차 회의
2011.9.30	■ 재난관리개선 민관합동 TF 제4차 회의
2011.10.14	■ 재난관리개선 민관합동 TF 제5차 회의
2011.10.28	■ 공청회(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 15:00~18:00)
2011.12. 9	■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 국무총리 보고회 (기상청 다울관, 10:30)
2011.12.12~27	■ 백서 작성 및 TF 해산

민관합동 TF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단기적으로는 ‘취약분야 집중투자로 국민의 안전체감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선진형 방재시스템 정립 및 재난관리 체질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5개 시도), 기존대책분석,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TF회의를 개최했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20회)를 통해 조정했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 지자체,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예측·예방부터 현장대응·복구까지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검토하여 5개 기본전략을 중심으로 9개 분야 28개 핵심과제, 163개 세부개선과제를 포함하는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미래에 대비한 국가적 방재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2년도에는 2011년보다 21% 증가한 약 5조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약 6조8,000억원(지방비 등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중기재정 계획에도 반영, 안정적인 재해 관련 투자가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3) 인적재난 대응체계 선진화

지난 10년간 인적재난은 연평균 총 28만여 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38만 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4,900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502명 사망, 720억원 피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192명 사망, 1,605억원 피해),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843억원 피해) 등에서 보듯이 대규모 인적재난은 치명적인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므로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영역이다.

대형화재, 폭발, 붕괴 등 후진적 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2009년 11월 14일 부산의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우리 국민은 물론, 일본인 관광객까지 사망함으로써 국격을 실추시키는 등 후진적 형태의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 종합대책 개요(3대 추진전략, 11개 중점과제) 】

추진전략	안전관리 제도 개선	예방역량 및 점검강화	국민 안전의식 제고
중점 과제	1. 다중이용업소 재난 예방제도 개선	1. 안전관리 및 의식 선진화 기반구축	1.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체계 확립
	2. 대형재난 우려시설 특별관리		
	3. 유통물류시설 재난요인 근절	2.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구축	2. 의식개혁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4. 대형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5. 외국인 이용시설 안전성 제고	3.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3.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꾸기 위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선진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3대 추진전략, 11개 중점과제, 44개 세부과제)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단계적 확대, 피난 유도선 설치 업종 확대 등 소방시설 기준 강화, 화재보험 의무가입 단계적 확대로 건물·사업주의 자기책임 강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조기입법, 상설 안전점검체계 구축, 안전지수 개발 및 활용, 안전교육 강화,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등을 담고 있어 안전관리 제도개선과 더불어 안전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재난 및 안전 취약분야 중점점검, 안전의식 제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 국무총리실 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의 민간전문가 및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상시 점검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시에는 범정부 차원의 ‘2010년 G20 안전관리종합대책’(2010.10.12) 수립, 시설 안전점검, 치안·교통 등 관련상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지원했으며,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시에도 종합상황실 운영, 교통대책 등을 추진,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 의장국으로 국가 품격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4) 국민건강 보호 중심의 환경관리

최근 다양한 환경오염 요인이 나타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확산되면서 환경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기대도 늘고있다. 지난 5년은 대기·수질 등 전통적 환경매체에서의 환경문제보다도, 석면 등 신규 오염물질과 가축매몰지 등 신규 오염원의 등장으로 인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관리체계의 발 빠른 구축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가.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과거부터 건축자재·자동차부품 등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7월 관계부처 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말 지하철역사·학교 등에서 석면이 노출되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석면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석면문제가 이슈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2009년 2월 부처별 석면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존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뉴타운·석면폐광산 주변지역 주민 피해대책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보완대책(안)을 마련했으나, 석면관리 통합법 제정, 석면피해구제 재원 마련 방안 등 일부 과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9개 쟁점과제를 조정하고,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을 거쳐 기존의 19개 과제에서 55개 과제로 보완·강화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석면관리 통합법」 제정, 석면함유제품 관리 강화, 건축물 사용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석면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방안 마련, 석면광산 관리 등이 주요내용이며, 동 대책에 따라 정부는 2010년 3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일반 국민의 석면피해 구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

인적재난대응 추진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09.11.17	■ 후진적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지시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
2009.11.18	■ 제1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2009.12.9	■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2009.12.18	■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선진화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2009.12.29	■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선진화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2010.10.12	■ 「G20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2010.10.20	■ 국무총리 주재 G20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종합상황실 운영 결정)
2010.10.27	■ 국무차장 주재 G20 관계부처회의(자율 2부제 등 교통대책 확정)
2010.10.21~11.13	■ G20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2012.3.20	■ 국무총리실장 주재 핵안보정상회의 교통대책 관계차관회의 (차량 2부제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
2012.3.22	■ 국무차장 주재 핵안보정상회의 교통대책 관계부처회의 (차량 2부제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방안 마련)
2012.3.15~28	■ 핵안보 정상회의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 석면관리 종합대책 보완·강화 주요내용 】

구분	2007년 대책	2009년 보완대책
참여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부,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부처 3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재부, 교과부,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지경부, 환경부, 노동부 산림청, 관세청, 식약청
기간 및 예산	2007~2010(4년) 603억원	2009~2013(5년) 1,545억7,500만원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분야 19개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분야 18개 중과제 55개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 원천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 원천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탈크(talc) 등 석면함유기능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다중이용시설 모니터링 및 석면관리 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지도작성 의무화 건축물 석면관리기준 마련 석면정보 DB화 및 통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구체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결과서 제출 대기환경 중 석면기준 설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결과서 제출 작업장 주변 석면배출기준 설정 및 음압기 인증제 도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 관리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 관리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자·분석자 등 자격제도 도입 감리제 도입 선(先) 석면제거, 후(後) 건축물 철거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석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석면 분류 및 처리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석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석면 발생 추적을 위한 정보공유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 지원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건강피해 조사·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건강피해 조사·감시·구제
법령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추진

나. AI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물 안전대책 수립

또한 이 시기에는 AI,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이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했다. 2008년에 AI가, 2010년에는 대규모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가축 사체 매몰지의 환경관리가 부수

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매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몰지 침출수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주민들의 먹는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매몰지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우기철을 전후하여, 악취·침출수 발생·제거 및 성토·배수로 보완 등 가축 매몰지의 관리실태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매몰지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보완 조치를 했다.

2009년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물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매몰지 침출수 관리, 상수도 공급, 살처분 방식 및 매몰기준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2010년 4월에는 구제역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 방역 위주의 긴급 매몰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매몰단계부터 환경담당이 참여토록 하여 보다 철저한 매몰지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구제역 발생 여파가 어느 정도 잦아든 2011년부터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해빙기, 장마철 등에 대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 미비점을 개선하여 가축 매몰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환경관리 추진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관리종합대책(2007.7) 추진상황 점검 (관계장관회의 시 국무총리 지시)
2009.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해물질(석면함유 탈크 등) 관리 TF(단장: 국무차장) 회의
2009.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관리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조정회의
2009.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관리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2009.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물 안전대책 발표
2011.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차장 주재 구제역·AI 가축 매몰지 관리 관계부처 회의
2011.5.1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마철 대비 구제역·AI 매몰지 정부합동 현장점검
201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장 주재 가축 매몰지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발표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12.2.27~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봄철 해빙기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점검
2012.5.30~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점검

13. 범정부적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1) 추진배경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사회위험 요소로는 빈곤, 질병 등을 들 수 있지만, 녹차에서 파라티온 농약 검출(2007.8), 이유식에서 멜라민 검출(2008.9),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식품 방사능 오염(2011.3) 등 일련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예측할 수 없는 식품사고가 새로운 사회위험(Social Risk)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의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과 영양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수입국의 다변화, 제조·가공 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새로운 위해 요소가 증대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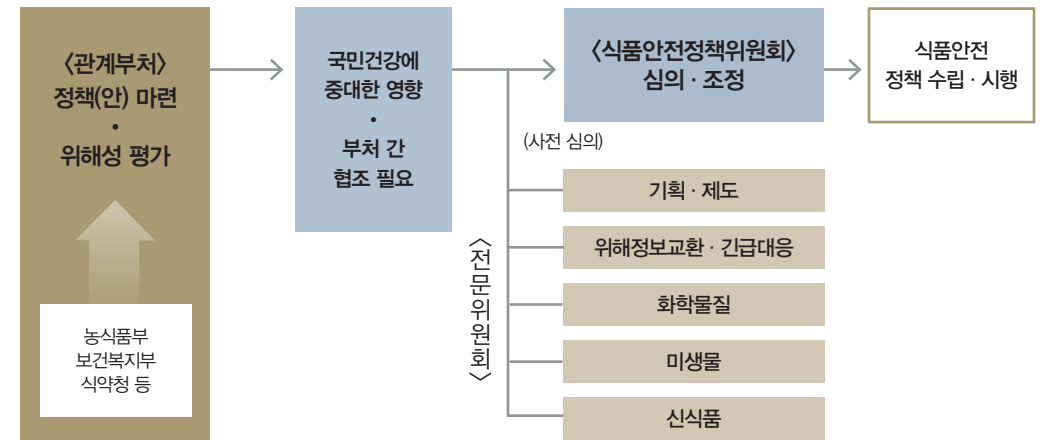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먹거리 문제만큼은 ‘국민건강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먹거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7.11, 이명박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시)

2) 범정부적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정부는 식품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긴급대응을 강화하고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별로 수행 중 이던 식품안전 행정을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2008년 6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했다.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하에서는 국가 차원의 총괄조정 역할이 없어 식품 사고 발생 시 혼선을 초래하고 식품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식품안전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동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조정 등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 식품안전정책 관리체계 】



식품안전정책위원회(2008.12 설치)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8명)¹⁰⁸⁾ 및 민간위원(11명 이내)으로 구성했다. 동 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식품 등의 안전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식품안전 법령 및 기준·규격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5개 분과)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사항 중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신종식품, 오염물질, 위해미생물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관리방안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받은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과학적 합리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3년)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부처 간 업무 협의·조정을 통해 범정부적인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원전사고 대비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례적인 식품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총리

108) 정부위원: 기재부·교과부·법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 장관, 식약청장, 국무총리실장

실에서는 식품안전정책 추진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축산식품 이력관리 강화 방안 마련’, ‘주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FTA시대 수입식품 체계관리 방안 마련’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식품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정책에 대해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나가고 있다.

3)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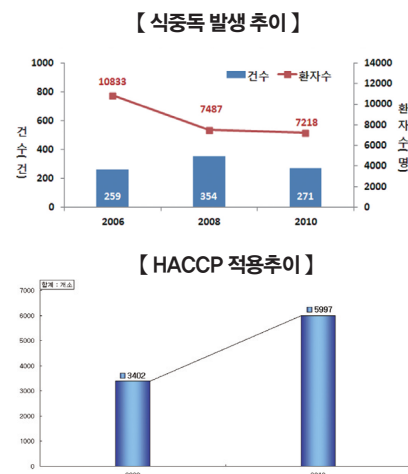
가.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09~2011) 수립·시행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3년간(2009~2011) 4대 전략분야 54개 과제를 추진하여 식중독 실시간 모니터링,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국 현지점검 등 수입관리, HACCP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업체 확대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사전예방적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대형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성과로는 다음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신속하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GAP(농산물 우수관리)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영세업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기준을 개발·보급했다. 또한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및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노후된 축사시설, 밀집사육 등 열악한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며, 수산물 생산 해역의 안전평가를 통한 해역별 위생등급을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을 확립하고자 했다.

둘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평가로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사전관리를 강화했다.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2008년 1,638개의 기준에서 2010년까지 EU 수준인 1,882개로 확대¹⁰⁹⁾ 했다.

셋째, 우수수입업체 제도를 시행했다. 해마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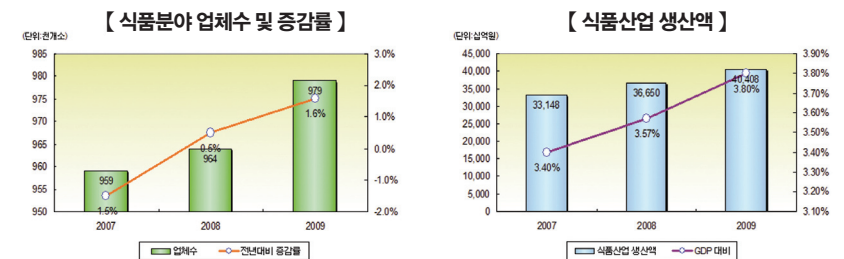


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칭타오 등에 현지식품검사기관을 설치하여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을 확보하고, OEM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 생산업체의 현지 위생점검 의무화를 추진하는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조기 정착화했다.

넷째, 식품 관련 기초자료 확보 및 식품정보 전달의 효율성 증대로 소통을 강화했다. 식품위해정보를 제공, 문제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제도를 강화했다. 일선 유통업체에 관련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을 예방하고,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부처 간 업무연계의 좋은 본보기를 보였다.

나.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2~2014) 수립·시행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2~2014)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추진된 제1차 기본계획(2009~2011)을 이어받은 향후 3년간의 범정부적 식품안전관리 계획이다.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현장점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식품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 고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나노기술 등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의한 소비자의 우려 등 식품안전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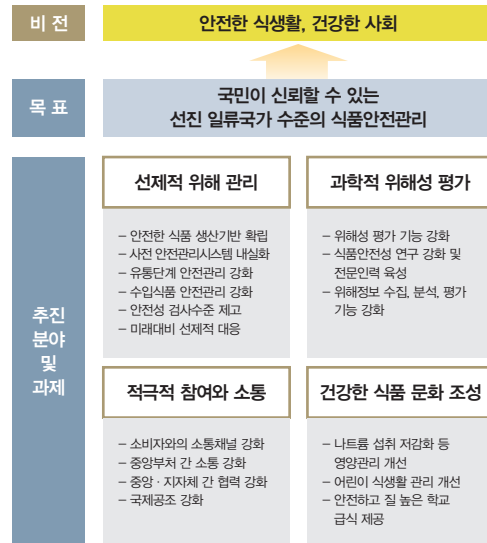
주요 추진내용은 HACCP 적용¹¹⁰⁾을 2014년까지 업체 기준으로 일반 식품 20%, 축산물 85%까지 늘리고, GAP 인증은 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검증체계 구축, HACCP 적용이 어려운 영세업체에 대해서 GHP¹¹¹⁾ 적용 및 의무화 추진 등 사전 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산지 단속 효율화를 위한 DNA 검사 등 과학적 식별법을 개발 확대하며, 위해식품 판매를 계산대에서 자동차단할 수 있는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사범 처벌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 병행을 추진하고,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와 수출국 제조업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대비하여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단」을 식약청에 설치·운영키로 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

109) 중금속(57종 → 61종, Codex 수준), 곰팡이 독소(3종 → 7종, EU 수준), 동물용의약품(87종 → 131종, EU수준), 잔류농약(398종 → 430종) 등이다.

110) HACCP 인증(%): 일반 식품 2011년 5.2% → 2013년 15% → 2014년 20%, 축산물 2011년 75% → 2013년 82% → 2014년 85%
111) GHP(우수위생관리기준, Good Hygiene Practice): 위생적 식품제조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및 관리절차에 관한 기준

보호하기 위해 「기능성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기능성 평가 기업지원, 교육·컨설팅·정보제공, 기업공동 R&D 등을 수행기로 했다.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수판매업소를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공표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료 구매의 투명성 확보 및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아·임신부 등 식품위험 민감층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섭취량 조사 등 과학적 위해성 평가 기반을 강화하는 등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로 각 부처의 식품안전관리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통일되고 일관된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분야 】



14. 해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 통합

1) 추진배경

최근 국격제고와 K-POP 등 한류 확산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주로 재외동포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한국교육원은 원장 1인 체제의 영세한 규모로 증가하는 한국어 및 국제 교육교류 수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교육원과 문화원이 각각 설치·운영됨으로써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외에서 문화원과 교육원을 따로 운영하기 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2) 해외 한국문화원·한국교육원 운영 현황

해외 한국문화원은 20개국 24개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 보급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한국영화제와 같은 문화예술 행사 개최·후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구분	해외문화원	한국교육원
근거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성격	재외공관(정부기구)	민간기구
원장신분	주재관	민간인 또는 행정원
기능	문화교류, 언어교육, 자국홍보 (전시, 공연, 한국어 강좌 등 기획)	재외국민 대상 한국어·한국사 등 교육, 유학생 유치·지원, 교육정보 수집
현황	20개국 24개원 (아시아 9, 유럽 9, 미주 5, 아프리카 1)	17개국 39개원 (일본 15, 미국 6, 러시아 4, CIS 3, 기타 10)
	* 중복(9개) : 일본(도쿄, 오사카), 미국(워싱턴, 뉴욕, LA), 영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호주	
평균직원	9.35명	2명
평균면적	1,869㎡	591.79㎡(66㎡ 이하 12개원)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 대상 민족교육을 목적으로 시작된 해외 교육기관으로, 17개국 39개원이 설치되어 한국어 보급, 한글학교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지 학교 한국어과정 채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고 있다.

범정부적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추진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08.6.13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공포
2008.12.14	■ 「식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
2008.12.14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2009.2.27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구성
2009.5.20	■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09~2011) 수립
2010.3.24	■ 2010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위원회 상정·의결)
2011.3.23	■ 2011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201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상정·의결)
2011.11.16	■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2~2014) 수립
2012.3.22	■ 2012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201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상정·의결)

3) 해외 문화원·교육원 통합 논의 추진

가. 통합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

한국어 보급이 외국인과 동포로 나뉘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예산 등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해외문화원과 교육원을 통합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지원의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통합이 추진되었으나, 문화원과 교육원의 설립 목적 및 운영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통합안 마련이 쉽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이 2012년 1월에 주관한 두 차례의 국장급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통합 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주요 쟁점인 통합 기관 명칭, 관련법령 개정, 통합근무 문제 등에 대해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급 회의를 개최(2012.2.1)하여, 통합기관의 명칭은 공모를 통하여 결정하며, 통합기관에서 교육과 문화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양 부처는 국무총리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국무총리실은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통합기관의 명칭에 대해 해외 15개국의 사례와 심층 인터뷰를 포함하는 전문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 결과,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이 국제적 추세와 인지도, 개방적 이미지에 높은 점수를 받아 기관 명칭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결과에 따라 다시 개최된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급회의(3.12)에서 양 부처는 통합기관의 명칭을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으로 합의했다. 이 후 국무총리실 주관 실무협의를 거의 매주 개최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 통합근무 등에 대한 부처 간의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2년 4월 12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차관이 모여 통합기관의 명칭을 ‘한국문화원’으로 정하고, 재외국민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원 관련 조항 삭제, 외교통상부 직제에 교육원 기능 추가, 통합기관의 운영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 등 통합의 원칙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나. 세부 통합안 수립

통합의 원칙에는 모두 합의했으나, 세부 통합안을 마련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주재의 과장급 실무회의를 4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개최(4.24, 5.2, 5.9, 5.17, 6.20)하여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이 중복 설치·운영되고 있는 8개 지역의 통합근무에 대한 의견수렴(4.18~24)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운영 지침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협의했다. 또한 한국문화원이 교육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교육원을 삭제하는 법령 개정 절차도 진행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10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7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에도 국무총리실 주재의 실무협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문화원·교육원의 제도적 통합을 위해 38개 교육원 중 12개는 문화원으로 통합, 22개는 문화원 분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문화원·교육원의 제도적 통합을 위한 지역별 전환계획(안)을 마련했다.

4) 성과와 향후 과제

국제문화교류와 우리문화 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이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기능까지 확대 수행하는 ‘한국문화원’으로 통합되어 교육과 문화 간 상호 결합의 효과를 창출해냄은 물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에서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일부 국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교육과 문화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해외문화원·교육원 통합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2.1.17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주재 국장급 회의 개최
2012.1.27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주재 국장급 회의 개최
2012.2.1	■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급 회의 개최
2012.3.12	■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급 회의 개최
2012.3.16	■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주재 실무협의
2012.3.20	■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주재 실무협의
2012.4.10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주재 국장급 회의 개최
2012.4.12	■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급 회의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국무총리실·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
2012.4.24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주재 국장급 회의 개최
2012.4.26	■ 문화원·교육원 운영 현장 점검
2012.5.2	■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주재 실무협의
2012.5.9	■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주재 실무협의
2012.5.17	■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주재 실무협의
2012.6.20	■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주재 실무협의
2012.7.5	■ 차관회의 보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2.7.10	■ 국무회의 보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2.9.13	■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주재 실무협의

2 공공갈등의 관리

제1절 공공갈등 관리기반 구축

1.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필요성

일반적으로 갈등은 크게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 ‘정부와 정부 간의 갈등’, ‘민간과 민간 간의 갈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같은 갈등을 말하며, 대부분의 공공갈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정책결정 및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소송제기 등으로 인해 공공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인당 GDP의 27%에 달하며, 갈등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1인당 GDP가 연간 5,000달러 이상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공갈등을 ‘관리’ 해야겠다는 인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갈등을 관리·해결하기 위해 2007년 2월 12일 「갈등관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지원·총괄 기관인 국무총리실에서는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 처음으로 도입된 각종 갈등관리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공공갈등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각 부처와 협력해서 공공갈등 관리기반을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한 공공갈등 관리기반 구축은 각 부처가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갈등관리에 일차적 책임을 갖는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을 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2. 공공갈등관리의 기본원칙

「갈등관리규정」에서는 공공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공정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갈등은 갈등의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인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정책 수립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넷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3. 공공갈등의 예방 : 매뉴얼 보급,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갈등은 일단 발생하면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후해결보다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발생 초기에 관리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종 갈등예방제도 등을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첫째, 각 중앙행정기관의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 국무총리실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갈등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각 부처는 배포된 표준매뉴얼에 기초하여 개별 부처의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매뉴얼을 갈등관리과정에 활용했다.

둘째, 갈등영향분석(conflict assessment)을 실시했다. 갈등영향분석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정책의 경우,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내에서 생소한 갈등영향분석의 도입과 실행을 돕기 위해 「갈등영향분석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갈등영향분석이 내실화되도록 갈등전문가들이 수행한 「송변전 시설 갈등영향분석」 등 연구사업을 지원했다. 국방부는 2009년, 수원비행장 갈등영향분석을 활용하여 수원비행장 근처의 이해관계자(신구시가지 주민, 수원시, 수원시의회, 시민단체)의 갈등 특성과 실질적 쟁점을 분석하여 갈등저감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시 지자체, 주민 및 시민단체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해결절차를 제시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조정협의회(국토부, 구리시, 범시민대책위, 시공사업단,

2008.12.10~2009.7.13)를 구성하여 노선 선정을 마무리했다.

셋째, 각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정책의 갈등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국무총리실 매뉴얼 등에 따라 현재 31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동 위원회를 설치했고, 매년 각 부처의 갈등관리종합시책과 갈등영향분석 등을 심의하고 있다.

【갈등영향분석 주요 사례】

갈등사안 (소관부처)	국립산청호국원 조성 (보훈처)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보건복지부)	공군기지 이전 및 소음보상 요구 (국방부)
쟁점사항 (이해당사자)	국립묘지를 혐오시설로 인식, 조성 반대(보훈처 vs 지역주민)	정신병원 재건축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복지부 vs 지역주민)	소음피해 등으로 공군기지 이전 및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공군 vs 지역주민)
갈등해결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영향분석 실시(2010) 주민협의회 구성 및 주민의견 수렴 3회 주민을 대상으로 기 조성된 호국원 견학 실시 관계기관 협의, 국도 및 지방도 조성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영향분석 실시 (45명 면담) 시나리오 워크숍 추진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영향분석 실시 (수원·광주비행장) 인근주민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주민 요구사항 수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호국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착공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과의 대화' 5회 실시, 서울병원의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비고	갈등해소	갈등해소	갈등 진행 중

4. 공공갈등의 해결노력 : 갈등조정협의회,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이미 공공갈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전에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더 큰 혼란과 경제적 비용의 초래를 막을 수 있다. 갈등해결방식은 과거 시민참여를 배제한 하향식 갈등 해결과는 달리, 이제는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공공갈등규정에서는 참여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갈등조정협의회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활용된다.

첫째,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사안별로 이해관계자들이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동의 이익이 되는 해결방안을 합의·도출하는 절차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각 부처가 주요 갈등현안에

대해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용하도록 매뉴얼 보급,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독려하고 있다. 주민과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온 '국립서울병원 현대화사업' 문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대표적 사례이다. 보건복지부와 광진구청은 주민의견 수렴창구인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



정읍역사 신설 현장 갈등조정협의회 (2012.6.28)

하고, 이해당사자(주민대표, 국립서울병원), 관계기관(복지부, 광진구청), 갈등관리 전문가 등 총 21명이 31회의 회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했다. 현 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설립하여 중구역 일대 개발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로 최종 협의(2010.2.11 업무협약 체결)를 도출한 것이다. 한편 2012년부터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갈등현안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이 겹치는 사안에 대해 권익위원장을 협의 회 의장으로 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범운영했다. 이를 통해 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 주민 간 갈등 발생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던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신축 공사가 재개되는 등 2012년도에만 시범사업 6건 중 3건의 갈등이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은 시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당시, 계룡산 생태계 환경훼손을 염려하는 환경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오송~공주 구간의 건설을 반대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생태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생태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시도했다. 이렇게 시민·이해관계자와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갈등을 예방하고, 현재 공정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

5. 공공부문 갈등관리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우리 사회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갈등관리 역사와 전통이 매우 짧기 때문에 갈등관리문화의 조기 정착이 중요하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갈등관리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결국 이를 운영하는 인력·조직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갈등관리 교육,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워크숍, 갈등관리 민관 합동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갈등관리문화를 확산하고 부처의 갈등예방 및 관리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첫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6,800명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들이 갈등관리교육을 이수했다. 국무총리실 지정 갈등관리연구기관인 KDI 공공정책대학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갈등해결사례 중심의 갈등예방 및 해결내용에 관한 교육과정을

제공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교육을 통해 갈등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갈등관리의 기법, 협상방법을 학습하여 일선 정책현장에서 활용해나가고 있다. 둘째, 국무총리실에서는 매년 각 부처 공공갈등관리 업무담당자가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갈등관리 워크숍을 통해 각 부처의 갈등관리 노하우와 성공·실패사례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갈등영향분석 작성실무, 갈등현장학습 등 각 부처의 갈등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했다. 국무총리실은 한국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권역별로 갈등관리 민관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공공갈등관리 포럼을 통해 갈등관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현황과 관련된 갈등 전문가들의 진단을 경청하여 갈등관리 제도 내실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6. 고질적 갈등분야 제도개선 및 갈등관리 연구

고질적으로 갈등이 빈발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했다. 「화장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2009.7)은 부족한 화장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지자체·주민과의 사전 협의·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2010.7). 갈등관리 시스템이 활성화되려면 학술적·이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실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선진 갈등해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갈등영향분석 조사·연구 등 국내외 미개척 분야인 공공갈등관리부문의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 : 갈등관리 연구지원사업】

연도	주요 연구과제	갈등관리연구기관
2008	갈등관리 실태진단 및 개선사업 I :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 갈등	행정연구원
	갈등관리 실태진단 및 개선사업 II : 화장시설 입지선정 갈등	
	갈등관리교육지원 사업 : 건설환경사례 갈등관리 교재개발	KDI
	갈등관리기본법 개선 및 발전 시안 마련	
	분야별 갈등유발 법제 발굴 및 개선안 검토	
	현황갈등 해결지원 및 모범사례 확산	
갈등관리 DB구축 방안		

연도	주요 연구과제	갈등관리연구기관
2009	군사시설 관련 갈등관리실태 진단	행정연구원
	정부간 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갈등영향분석(송변전 시설 관련)	KDI
	갈등관리매뉴얼 개발·보급	
공공갈등교육매뉴얼 개발·군사시설 사례 개발·보급		
2010	참여형 갈등해결기법 도입방안 연구	행정연구원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 연구	
	비선호 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연구	
	갈등관리 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모형 개발	
2011	주요 공공시설 입지갈등 해결방안 연구	행정연구원
	주요 공공시설의 비선호 인식 전환 방안	
	갈등유형과 원인에 따른 합의형성절차 설계	
	갈등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2012	분야별 갈등관리 사례분석	행정연구원
	갈등관리 기본교재 발간사업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실태점검·평가모형 개발 연구	

7. 갈등관리 제도 내실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사회가 민주화·다원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갈등 해소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발견할 수 있는 순기능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사회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대화와 토론,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과 함께 갈등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참여적 갈등관리기법 도입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는 등 갈등관리기반 구축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중앙·지방 간 갈등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

국무총리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01년부터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도 커짐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그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민간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등 4명의 당연직 위원, 안전과 관계되는 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지명직 위원, 4명의 민간 중립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회 운영절차는 갈등관련 당사자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협의 또는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내용을 보고한 후 조정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간사기관은 행정안전부이지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장이고 기본적인 조정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내안설정, 조정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실무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논의와 조정안을 수립한 후 분위원회에서 최종조정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할 것을 통보한다.

2008년 이후 수행한 주요 조정안건인 제2롯데월드 신축, 포스코 신제강공장 신축, 안양교도소 재건축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순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가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정안의 이행에 문제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안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압력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때 검토되었던 부분이고 행정대집행 등을 규정했으나, 자치권 침해라는 자치단체의 비난 등의 이유로 중재 및 권고 기능만 입법화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조정위원회 결정안에 대하여 이행명령준수의무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2006.11)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향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 실적 】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현황

연번	주요 분쟁 내용	조정 및 결정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 개야도 어업권 손실 보상금 분쟁 (전북 군산시→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개야도 어촌계의 영업권 연장허가 신청(1995.11~2000.11)에 대해 군산시가 건교부 회시 협의의 공문에 의거 불허하자 개야도 어촌계는 군산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2000.10) - 군산시는 손실보상금 64억원을 변제하고 이에 대해 건교부에 구상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200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결정(200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실무조정위원회 개최(2001.5) - 대체사업 지원의견 제시 - 실무위원회 개최(2001.9 국무조정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지역현안사업비로 지원토록 조정 - 제1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200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에 보상한 금액(66억원)범위에서 외항 연결도로(1.1km) 확 · 포장사업을 지원토록 결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지도 폐기전처리시설 보상분쟁(환경부→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는 난지도 폐기전제품 처리시설 부지가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 부지로 결정(1999.6)되자 - 동 시설을 이전코자 이전 보상금 20억원을 서울시에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거부하자 협의조정 신청(20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취하(200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의 손실보상 요구는 법적 논리가 부족하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 - 환경부가 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취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 정치망 어업권 손실보상 분쟁(1) (경북 포항시→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가 정치망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선박 입 · 출항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1993.8) - 이에 따라 어업권자인 이상태는 포항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1999.9) - 포항시는 대법원 확정판결(원고승소)로 손실보상금 지급 후 해양수산부에 구상청구했으나 거부하자 협의조정 신청(20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취하(2003.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건을 사전협의 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국장회의 개최(2003.4) - 국가(해수부)가 소송비용을 포함한 보상금액을 지역현안사업비로 지원토록 협의조정 - 포항시가 실무조정회의 의견을 수용 취하신청(2003.5.3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 정치망 어업권 손실보상 분쟁(II) (경북 포항시→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가 정치망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협의결과에 따라 선박 입 · 출항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1993.8) - 이에 따라 어업권자인 이상태는 포항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1997.11) - 포항시는 대법원 확정판결(원고승소)로 손실보상금 지급 후 해수부에 구상청구했으나 거부하자 협의조정 신청(20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취하(2003.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건을 사전협의 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국장회의 개최(2003.4) - 국가(해수부)가 소송비용을 포함한 보상금액을 지역현안사업비로 지원토록 협의조정 - 포항시가 실무조정회의 의견을 수용 취하신청(2003.5.31) ※ 위 2건을 통합, 총 26억원 범위에서 지역현안사업비로 지원토록 협의조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당선 개포 1, 2역 신설비 분담분쟁 (철도청→서울시, 토지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청에서 1989년 11월 분당선 실시설계에 따라 선릉-수서 간 개포지역에 1개 역만 설치기로 결정했으나 교통영향평가결과 개포2역과 강남구 지역 주민의 요구로 개포1역 등 2개 역을 추가하여 변경추진 - 철도청은 추가설치된 2개 역사에 대한 사업비 분담률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자 협의조정을 신청(20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결정(2003.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포1역은 국가와 서울시가 50%씩 부담 - 개포2역은 당초 부담비율대로 분담토록 결정 ※ 국가 22.77%, 서울시 26.48%, 토지공사 50.75%

연번	주요 분쟁 내용	조정 및 결정내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명 선정분쟁 (충남 천안시→건설교통부) - 건교부에서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의 역사명칭을 충남도에 의뢰(2000.8) - 충남도는 잠재역으로 의견 제시(2000.10)하고 건교부에서는 천안아산역으로 결정하자 속지주의를 무시한 자치권의 침해행위라며 협의조정 신청(200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각하(2003.8.26) -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전국적 규모의 사업이며,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의 전속적 사무에 해당하므로 협의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2복선 전철사업비 분담금 분쟁 (철도청(한국철도시설공단)→경기 부천시) - 철도청과 부천시는 경인 2복선 전철 건설사업비 중 일부를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협약을 체결(1994.1.25)했으나 - 부천시는 지가하락, 분담금 과다책정 등을 이유로 국고지원 또는 사업비 중 분담액 25%(72억5,000만원)를 경감해줄 것을 요구하자 철도청(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초 체결된 분담금협약서에 따라 분담금 전액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협의조정 신청(2003.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취하(2004.10.18) - 본 안건을 사전협의 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국장회의 개최(2004.6) • 당사자 간 재협의토록 권고 - 당사자 간 2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2005년 상반기까지 부천시에서 미납금을 납부키로 합의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협의조정 신청 취하(2004.10.1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산국가산업단지 방재대책 관련분쟁(건교부→부산시) - 2003년 9월 태풍 매미 내습 시, 녹산국가산업단지의 해안변 공장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338개 업체 572억원) 발생 - 부산시가 동 공단의 항구적인 방재대책 추진에 필요한 주관부처 결정과 사업비 확보를 요구했으나, 관련부처 이견으로 결정이 유보되자 행정협의조정 신청(20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결정(2005.9.14)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녹산국가산업단지 방재대책 사업비를 국가 60%, 부산시 20%, 토지공사 20% 분담토록 조정 결정(2005.9.14) <p>※ 2006년 9월 현재 토지공사 주관으로 방재사업 용역추진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p>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항만 명칭 관련 분쟁(해양수산부→부산시·경남도) - 1997년 10월 '부산신항 건설사업' 고시 이후 경남도에서 명칭변경을 지속 건의하는 등 신항만(2006.1 개장예정) 명칭을 둘러싼 부산시와 경남도 간의 분쟁과 관련 - 해양수산부가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으나, 관련 지자체 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협의조정 신청(20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각하결정(2005.9.14)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항만사업은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의 전속적 사무에 해당하므로 협의조정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결정(2005.9.1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분쟁(서울시→국방부) - 제2롯데월드 신축을 위해 건축높이 555m로 한 건축계획에 대해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국방부에 통보했으나, 비행안전구역으로 203m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는데도, 당초대로 건축의 높이를 결정하자 국방부가 비행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을 신청(2006.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결정(2007.7.26) - 서울공항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보장을 위하여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 결정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 기무사 부지 도시관리계획 관련 분쟁 (국방부→청주시) - 청주시가 국유재산 도시계획결정(공원) 취소결정에 대해 국방부가 이에 대한 취소를 위해 행정협의조정 신청 (2008.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신청취하(2011.10.18) - 국방부와 청주시 간 원만한 협의로 신청을 취하

연번	주요 분쟁 내용	조정 및 결정내용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분쟁(서울시 ↔ 국방부) - 2007년 7월 26일 행협위 결정 이후 비행안전 관련 여건 변화가 있고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롯데물산(주)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가 관련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을 위해 협의조정을 신청(200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결정(2009.3.31) -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주)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안)」 이행을 전제로,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한 2007년 7월 26일자 결정을 철회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 관련 비행고도제한 완화 (경북도 ↔ 국방부) - (주)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 공장 최고높이를 85.8m로 신제강공장을 신축하는 사안에 대해 포항시에서 국방부와 협의없이 건축허가하여 이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행정협의조정 협의신청(2010.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결정(2011.1.18) - 포항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보장을 내용으로 해군과 포항시, (주)포스코 간에 합의를 체결하도록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전제로 국방부와 경상북도(포항시) 간의 이견이 해소되어 고도제한 완화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분쟁(법무부→안양시) - 법무부는 안양교도소의 노후화로 건물 구조상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안양시에 재건축 협의했으나 '재건축 협의불가' 처분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취지로 행정협의조정을 신청(2011.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결정(2012.1.31) -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할 것을 결정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권고

- 2000년 5월 13일 설치 이후 14건 접수 · 처리(조정 7, 각하 2, 취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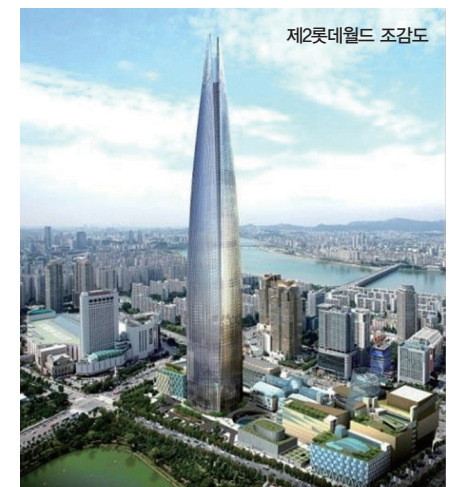
2. 제2롯데월드 건축

1) 협의조정 신청(2006.5.23)

2004년 10월 26일, 롯데물산(주)은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높이를 112층 555m로 한 건축계획을 송파구청에 도시계획변경안으로 제출했다. 송파구청을 거친 이 변경안을 수정계획으로 접수한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5년 1월 14일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내 부지는 해발 137m, 비행안전구역과 인접한 부지는 203m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



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2005년 12월 6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하자, 공군은 2006년 2월 21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포함한 비행안전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006년 2월 22일, 높이 계획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인 600m를 유지하고 허용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상향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가결하면서 2006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고시 2006-145호로 「올림픽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C2부지(제2롯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초고층 건물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제2롯데월드 건물의 높이를 가결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비행안전 보장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6년 5월 23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을 신청했다.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2007.7.26)

서울시는 국방부의 협의·조정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협의조정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정되므로 협의의견을 계획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협의조정대상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설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조정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분쟁대상인 도시관리계획결정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이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무처리과정에서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서 2006년 7월 27일 행정협의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결과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건축물의 높이가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주관으로 '문엔 지니어링', '한국항공학회'에 의뢰하여 2006년 10월 2일부터 2007년 1월 2일까지 비행안전영향평가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대해 용역사와 국방부 간 견해 차이가 매우 컸다. 용역사 측은 일부 비행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장비를 보강하면 비행안전에 큰 문제없이 초고층 건물신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였고, 공군 측은 비행절차 등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련 장비를 보강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07년 2월 27일 용역결과보고회, 2007년 4월 25일 전문가 자문단의견 수립, 2007년 5월 22일 실무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용역결과를 지속적으로 논의했지만 용역사와 국방부, 즉 공군 사이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2007년 6월 27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실무위원회 차원의 검토의견을 정리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28일 실무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가 용역사와 국방부 간 쟁점을 분석 검토하도록 결정했다.

2007년 7월 26일 제2롯데월드 신축 예정지가 국지계기절차 수립기준(TERPS, FAA Order 8260.3B)에 의하여 설정된 계기접근절차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서울공항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보장을 위하여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2009.3.31)

롯데물산(주)는 2007년 7월 26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 이후 항행안전장비의 성능과 정밀도가 향상되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2008.9.22.)되어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 환경이 변화했으며, 비행안전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경우 비행안전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공항의 비행안전보장을 위한 비용의 부담의사를 표명하면서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2008년 12월 30일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

서울시장은 현재 행정협의조정에 따라 초고층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나 비행안전 관련 여건 변화가 있고 비행안전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롯데물산(주)의 요청에 대해 관련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12월 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을 신청했다.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하여 롯데 측에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확보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09년 1월 7일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고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방안을 재검토했다. 실무위원회는 국방부의 서울공항 비행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새로이 제기된 동편활주로 약 3°방향 변경안이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우선 국회에서 제기된 비행안전 관련내용을 검증하는 단기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한국항공운항학회(회장 : 김철영 한국항공대 교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10년 3월 24일 한국항공운항학회가 국회에서 제기된 비행안전성 관련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검증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날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검증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제1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2010.1.7)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한 「동편활주로 3°방향변경 및 장비보완안」의 시행을 전제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제2롯데월드는 국내법상 비행안전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하여 원칙적으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은 보장되지만,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동편활주로 3°방향

변경 및 장비보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외국 국빈항공기는 정밀접근절차로 착륙하며 제2롯데월드는 정밀접근절차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는 서울공항을 입·출항하는 외국 국빈항공기와 무관하고, 제2롯데월드가 신축되더라도 서쪽방향으로의 출항경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로 인한 외류·난류는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전문가 토론회 결과, 의견이 크게 3가지로 모아졌다. 첫째, 제2롯데월드는 비행안전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하여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이 보장된다. 둘째, 제2롯데월드가 FAA 7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3월 31일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203m로 제한했던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주요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롯데월드를 555m로 신축할 경우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이 보장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주)가 협의하여 작성한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주) 간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안)(이하 ‘합의서’라 한다)」의 이행을 전제로 국방부와 서울특별시 간의 이견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한다.

둘째, 이에 따라 본위원회는 선결조건(합의서 제6조)을 포함한 합의서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한 2007년 7월 26일자 결정을 철회한다.

셋째, 국방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공군본부가 요구한 장비 및 시설 보완이 원활히 이행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건축허가 및 시공, 사용승인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감독하여, 롯데물산(주)가 합의서 이행을 해태할 경우 건축공사의 중지, 건축물 사용 불승인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서울시가 롯데물산(주)의 합의서¹⁾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불이행 시 건축허가 취소, 건축물 사용 불승인, 관계기관 협의 시 부동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 결정 이후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신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투자 활성화²⁾와 일자리 창출³⁾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수도 초고층건물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 롯데물산(주)는 건축공사 완료 후 서울시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며(「건축법」 제22조), 서울시는 사용승인 전 국방부와 협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2조 제5항).

2) 제2롯데월드 사업비 약 1조7,000억원(외자 10억달러 포함)

3) 롯데물산(주) 측은 동사업추진 2만 3000명의 고용창출효과 기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주요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7.7.26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고도제한 결정
2008.9.2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2008.12.30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울특별시장)
2009.1.7	■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
2009.3.5	■ 제2차 실무위원회 개최
2009.3.25	■ 제3차 실무위원회 개최
2009.3.31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도제한 완화 결정

3. (주)포스코 신제강공장 증축

2008년 5월 (주)포스코는 경상북도 포항시 동촌동 소재 포항제철소에 신제강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장 최고높이를 85.8m로 한 건축허가를 포항시에 제출했다. 포항시는 6월에 건축을 허가했고 (주)포스코는 신제강공장을 같은 해 8월 착공했다.

그러나 허가과정에서 신제강공장이 포항공항을 기준으로 한 비행안전 제5구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구(舊)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비행안전구역내 제한고도 이상 건축물 허가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사전협의를 필요) 규정을 간과하고 사전협의 없이 허가를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주)포스코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초과(19.46m)하는 신제강공장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합참본부는 9월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 합참의장)를 개최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행안전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 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 완화규정」을 새로이 신설했다.

하지만 신설 규정을 적용하려면, (주)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허가 이후 신설된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제한고도 초과부분에 대한 비행안전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들이 많았다.



포스코 신제강공장 전경

1) 협의조정 신청

2009년 7월 31일 해군 제6전단은 (주)포스코가 건축 중에 있는 신제강공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표면높이를 초과하여 건축 중이고, 최초 건축허가 및 이후 세 차례의 변경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 관할부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 행정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포항시에 요청했다. 포항시는 8월 1일 (주)포스코에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해군 제6전단 및 국방부와 협의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주)포스코는 해군 제6전단과 협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4차 건축허가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해군 제6전단과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2009년 9월 30일 해군 제6전단은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검토결과 통보’를 통해 ①신제강공장은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허가되어 설치 중인 위법 건축물로 건축허가 관련 협의대상이 아니며 ②포항시가 제기한 고도제한 완화규정은 합동참모본부지침에 따른 세부 검토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이상,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표명하며 협의를 거부했다. 같은 해 10월 15일 포항시는 (주)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경부에 제출했다. 같은 달 22일 관계부처인 지경부와 국방부는 허가 후 제한완화 규정의 소급적용 가능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비행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재논의하기로 협의했다.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 22일까지 관계부처 장관간담회에서 신기지 건설, 고정익(固定翼)기지 이전, 활주로 표면상향 방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5월 20일 합참심의위원회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이 조항을 적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선결조건인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명백한 평가가 요구된다는 최종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포스코는 신제강공장이 최초 건축허가 당시 해군 제6전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 고도제한 완화규정의 신설(2009.8, 「군수시기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제5항), 자체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신제강공장의 국가경제적인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에 행정협의조정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포항시는 경상북도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상정을 요청했고, 경상북도는 (주)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2010년 6월 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포항시는 2010년 6월 9일 (주)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허가 사전협의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했다.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10년 6월 9일에서 7월 12일까지 세차례 관련부처 실무회의를 열고 (주)포스코와 국방부 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010년 7월 20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위원회는 신제강공장 신축건에 대해 행정협의조정 대상이 되며, 고도제한 완화규정의 소급적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쟁점사항인 비행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해소와 고정익 비행장의 양양 이전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결정했다.

또 8월 3일과 8일, 23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무총리실장이 부처별 이견인 항행안전 시설 및 안전기준 강화와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강릉공항 이전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비행안전성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용역 완료 직후 관계부처 회의를 재개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조정협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주관으로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의뢰하여 2010년 9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비행안전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용역안을 토대로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중간보고 시 용역결과에 대한 국방부 검토요청사항 반영을 위해 용역기간을 11월 5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11월 9일 용역결과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 11월 24일 5차 실무협의, 12월 1일 국방부 자체 협의, 12월 7일 실무이견 조정회의 등을 거치면서 당사자 간 이견 해소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는 고도제한 완화규정은 최초 허가 이후에 시행된 규정이지만 현재 유효한 법률 규정이므로 향후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절차를 통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또 (주)포스코에서 사설기관인 비행안전영향평가원에 의뢰하여 포항비행장 현 시계 및 계기비행 절차와 물리적 요소, 국내외 항공 규정 및 비행절차에 따른 시계비행 입·출항 절차 및 ‘선회금지구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제강공장은 포항비행장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완화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제강공장은 고도제한 초과 및 협의절차 흠결의 하자 이외에는 「건축법」 등 다른 관련 법령을 위반함이 없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며, (주)포스코의 기업이익을 넘어 사회경제적 공익에 기여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그 가능

4) ① 신제강공장 증설로 인하여 증산된 연간 180만톤의 철강소재가 건설, 자동차 및 조선 등의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관련 사업은 통당 약 4만원의 원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여 국가경쟁력 전체에 기여한다. ② 신제강 공장 건설로 인하여 건설인력 약 100만명(2년간)의 고용이 창출되며, 2조4,000억원 규모의 Finex 신설 사업 등 후속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역 및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신제강공장은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허가되어 건축 중인 위법 건축물로 건축 허가관련 협의대상이 아니며, 포항시가 제시한 고도제한 완화규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건축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실정법을 위반하여 건축 중인 공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군 제6전단에서 실시한 비행안전 평가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심의한 결과 고도제한 완화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실정법을 위반하여 건축 중인 신제강공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적용될 수 없고, 비행절차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기지의 법적 지위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행안전 확보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 처리하고, 향후 위법성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경우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월 10일 개최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는 시계비행 및 비상시 비행안전성에 영향이 있는 활주로 375m를 연장하는 대안과 고도제한 완화 규정 적용가능 여부 등 쟁점사항을 해소했고, 6구역 내 13m와 관련한 비행안전성 확보와 활주로 연장 시 수용범위, 공사재기 시기 및 이행담보 방안은 추가 실무협의를 거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유사사례 재발 등 타 지역 확산방지 방안은 별도의 정책과제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1월 18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사전논의 등을 기초하여 군사시설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국가기간산업, 지역경제 기여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그 결과, 2011년 2월 1일 해군과 포항시, (주)포스코는 행정협의조정결과에 따라 포항기지의 비행안전성 향상과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3) (주)포스코 신제강철강 건설과 고도제한 완화 및 국가경제 기여

(주)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과 관련된 행정협의조정은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포항기지의 전략적·지역적 특수성과 비행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철강소재 증산으로 인한 원가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후속투자 활성화 등 지역 및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행정협의조정과정에서는 ‘비행안전 영향평가 및 대안 검토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실시’, 수차례의 관계기관 실무회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공항의 비행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하고,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을 공사재개 시점으로 합의했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원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주)포스코 신제강 건설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8.6.4	■ 포항시, (주)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허가
2008.9.2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고도제한 완화규정 신설
2009.7.31	■ 해군6전단 제한고도 초과분 공사중지 명령
2009.9.30	■ (주)포스코, 지경부에 고도제한 완화 요청
2009.10.15	■ 관계부처(지경부, 국방부) 협의
2010.4.22	■ 관계부처 장관간담회 개최
2010.5.20	■ 합참심의위원회, 고도제한 완화 부동의
2010.6.1	■ 경상북도, 행정협의조정 신청
2010.6.9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협의(1차, 국정운영1실장 주재)
2010.6.18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협의(2차, 국정운영1실장 주재)
2010.7.12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협의(3차, 국정운영1실장 주재)
2010.7.28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1차, 국무총리실장 주재)
2010.8.3	■ 관계부처 차관회의(1차, 국무총리실장 주재)
2010.8.5	■ 관계부처 차관회의(2차, 국무총리실장 주재)
2010.8.9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협의(4차, 국정운영1실장 주재)
2010.8.23	■ 관계부처 차관회의(3차, 국무총리실장 주재)
2010.9.10	■ 비행안전성 확보방안 연구용역(9.10~10.25, 한국항공운항학회)
2010.10.18	■ 용역(안)을 토대로 국방부와 협의(국방부 회의실)
2010.11.4	■ (주)포스코 신제강공장 추진상황 국회 설명(국방위원회)
2010.11.24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협의(5차, 국정운영1실장 주재)
2010.12.10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2차, 국무총리실장 주재)
2011.1.18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
2011.2.1	■ 비행안전성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

4. 노원구 도로 방사성폐기물 처리

1) 노원구 도로폐기물 발생

2011년 11월 1일 노원구 주택가 도로에서 방사선 이상준위가 측정되었다는 신고가 노원소방서에 접수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즉시 전문가를 현장에 출동시켜 방사선량을 측정했고, 다음날인 11월 2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 전문가팀이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장 정밀조사

이후 월계동과 공릉동 인근도로 두 곳에 대한 2차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11월 8일 현장 정밀조사 및 시료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주택가 도로와 학교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연간 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 미만이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

시료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2000년에 구청에서 도로시공을 하면서 채움재로 사용한 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아스팔트 재료에 혼입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아스팔트 재료에 대한 세부조사는 당시 아스콘 공급업체가 도산하여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정밀 조사 및 시료분석 결과

- 측정된 방사선량(0.51~0.69mSv)은 일반인이 자연상태에서 받는 연간 평균방사선량(3mSv)의 약 1/6 및 1/4 수준에 해당
- 방사선 검출의 원인물질은 세슘(Cs-137)으로 확인되었으며, 방사능 농도는 1.82~35.4 Bq/g로 분석



노원구 도로철거 현장



현장조사와 시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안위는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만큼 현장 정밀분석 결과를 기다려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노원구청은 원안위와 협의 없이 11월 4일 임의로 해당도로를 철거함에 따라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노원구에서 무단 철거한 도로폐기물은 노원구청 관내인 마들공원에 임시 보관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주민이 계세계 반발하자 노원구청 뒤 공영주차장으로 다시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다시 노원구청 인근주민들이 운반차량을 저지하면서 노원구 도로폐기물은 마들공원과 노원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분리 보관되기에 이르렀다.

2)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기관 간 갈등

기관 간 갈등이 야기된 주된 이유는 도로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었다. 노원구에서 발생한 도로폐기물에는 방사성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혼재된 상태로 별도의 선별작업이 필요하고, 각각의 폐기물에 따라 처리주체, 처리방법, 비용분담, 임시보관장소 발굴·선정에 있어 기관 간 입장이 달라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도로상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도로법」 제67조 : 도로관리청이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 환경오염 원인을 야기한 자가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국가배상법」 제5조 : 도로·하천 등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특히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상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에 대한 관계법은 5개 법으로 관계기관 간 해석과 입장이 달랐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조물(營造物)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생성된 경우 이에 대한 처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인공 방사성물질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이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노원구청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원구는 발생자가 아니라 발견자로 도로폐기물처리 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고, 도로폐기물을 인근에 위치한 한전 중앙연구원 내 중·저준위 간이보관시설로 이전하길 희망하고 있었다.

반면 원안위는 안전규제기관으로 도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지식경제부가, 도로폐기물 처리는 도로관리청인 노원구청이 조치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지경부는 안전위와 협의가 없는 상태라서 공식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지만, 지경부가 방폐장운영 주체로 폐기물 창고 반출입 및 장비사용 시 원안위의 승인을 받고 있으므로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교과부는 폐기물의 원자력연구원 이전과 관련하여 원안위와 협의가 없는 상태이며, 폐기물 보관장소, 비용부담 및 처리주체 등 쟁점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회통합정책실장 주재로 원자력안전위, 지경부, 교과부, 국토부, 행안부, 서울시 담당국장과 노원구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회의(1차 2011.11.29, 2차 2011.12.5, 3차 2011.12.15.)를 개최하고 도로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결과, 노원구청에서 철거하여 두 곳에서 보관 중인 도로폐기물을 우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노원구청 관내 공동동 한전연수원(원자력연구원 연구로 부지)으로 임시이전하고, 이전한 장소에서 도로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선별작업을 하기로 했다. 선별을 마친 방사성폐기물은 드럼 포장하여 경주 인수저장시설로 이전하고, 지경부는 한전 측이 한시적으로 연수원 부지를 제공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폐기물 처리계획(선별장소 이전 및 경주 이전계획)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안위에서 총괄하여 지식경제부, 서울시(노원구) 합동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고 동시에 폐기물을 신속하게 한전연수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도로폐기물의 선별장소 이전 및 선별작업과 관련 공동동 지역주민 반발에 따른 설득은 노원구청이 주도하고 원안위에서 지원기로 했다. 그러나 처리비용 부담주체에 관해서는, 서울시는 국비지원이 필요하고,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먼저 폐기물 이관·선별 조치하되, 비용부담 주체, 분담방안 등은 추후 관계기관 간 재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류작업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한전연수원 부지는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도로폐기물 총량】

(단위: 톤)

일반폐기물	방사성폐기물	합계
327.93(41.8%)	457.15(58.2%)	785.08

정부와 노원구는 분류작업장 개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했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노원구청 뒤 공영주차장에서 분류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분류작업 장소 선정 이후 2012년 1월 27일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주재로 원안위, 지경부, 교과부, 행안부, 서울시 국장 및 노원구 부구청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폐기물 분류작업은 원안위 관리·감독하에 노원구 주관으로 실시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작업하기로 했다. 소요비용도 노원구가 우선 집행하되 정확한 발생량을 재산정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협의했다.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작업은 2012년 3월 23일 착수되어 2개월 후인 5월 23일 완료되었다.

폐 아스콘을 분류한 결과, 일반폐기물이 41.8%, 방사성폐기물이 58.2%로 분류되었으며, 분류작업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감시단 입회하에 방사능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분류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주체 및 비용부담 방안 결정

노원구에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도로폐기물은 발생자가 불명확한 폐기물로서 이에 대한 처리주체 및 비용부담 방안에 대한 법적근거나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처리주체 및 비용부담 방안을 결정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법제처는 수차례 심의를 거듭한 끝에 현행 법령 규정상 불명확하나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는 국가라고 결론내렸고, 그 결과를 원안위에 회신했다.

비용부담 주체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요지

- 「도로법」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한 방폐물의 처리 비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76조 제항에 따라 타 행위의 비용 부담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어 방폐물의 처리 및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할 수 없음
-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도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에서 발생한 방폐물 처리 책임이 발주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런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는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오염원의 제거, 방사능오염의 확산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폐물의 처리업무는 법령 규정상으로는 불명확하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의 법률 취지에 부합하므로 국가에서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국가의 어느 부처가 어떤 재원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에서는 2012년 6월 15일 국무차장 주재로 지경부, 원안위, 기재부, 법제처의 실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원인불명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주체는 원안위가 총괄 관리하고, 노원구 도로 방폐물의 처리비용은 방폐기금 운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무상 반입을 강구하되, 불가 시 금년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한 원인불명의 방폐물 처리에 대한 현행 법령의 법적 흠결 부분은 소관 기관이 관계 법령개정 등을 통해 추후 보완하기로 하고,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원안위의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후속조치 과정에서 방폐기금 또는 예비비 두 재원의 사용을 놓고 관계 부처인 지경부와 기재부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계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게 되었다.

법제처는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검토결과,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법령해석하여 그 결과를 9월 10일 지경부에 회신했다. 법제처

처리비용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요지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
- 공단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해당
- 동 법 기금용도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도 기금에서 사용가능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안위와 지경부는 9월 11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방폐기금 사용을 위한 절차, 방폐물 포장·운반 절차 및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10월 7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11일 원안위의 관리·감독하에 이전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12월 30일 노원구 방사성 도로폐기물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이전을 완료했다.

4)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평가

노원구에서 발생한 도로폐기물에 대한 처리주체 및 비용부담 방안에 대한 법적근거나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간 큰 입장차이를 보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계속 되었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여 기관 간 입장을 조정하고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보관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적절한 임시 보관장소로 이전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었던 처리주체 및 비용부담 방법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이는 국무총리실이 개입하여 관계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한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다.

노원구 도로 방사성폐기물 처리 주요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구 주택가도로 방사선이상준위 측정 노원소방서 접수 ■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측정
201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 현장 정밀조사
201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노원구청을 방문하여 안전기술원의 시료 분석·평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노원구청에 요구 ■ 노원구청은 원안위와 협의 없이 해당도로 철거
201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 분석 결과 및 향후대책 발표
2011.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도로폐기물 운반 - 지역주민의 항의 시위로 도로폐기물 운반 중단

노원구 도로 방사성폐기물 처리 주요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리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제1차 국무총리실 주재 국장급회의 개최
201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폐기물 이전부지, 기관별 역할, 비용부담 및 주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국무총리실 주재 국장급회의 개최
2011.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연수원 부지 최종합의를 위한 제3차 국무총리실 주재 국장급회의 개최 (한전연수원 부지로 결정)
2011.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반대로 한전연수원 부지 무산
2012.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구 비상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노원구청 뒤 보관장소에서 도로폐기물 분류작업 합의
2012.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구 폐기물 분류업체 선정 및 분류작업 준비
2012.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작업 착수
2012.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구 도로폐기물 처리주체(국가와 지자체) 관련 법령해석 의뢰
2012.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회신(국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
2012.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작업 종료
2012.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관계기관회의 개최
2012.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구 방폐물 처리를 위해 방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령해석 의뢰
2012.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회신(방폐기금 사용 가능)
2012.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폐물 포장·운반을 위한 관계기관회의 개최
2012.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처리비용 의결
2012.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폐물 포장·운반 용역업체 선정 및 준비작업 착수
2012.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폐물 1차 운반 완료
2012.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폐물 운반 관련 경주지역 주민설명회
2012.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폐물 전량 운반 완료

5. 안양교도소 이전

1)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둘러싼 안양시와 법무부의 갈등

법무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일원에 위치한 안양교도소가 1963년 준공된 이후 48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구조상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현 부지에 주변 경관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 현대식 구조의 최첨단 교도소를 재건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2006년 10월 26일 안양시의회 또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하는 교정당국과 상생을 제언해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양교정시설 재건축 조감도】



2007년 12월 20일 안양교도소장이 안양시장에게 재건축과 관련된 건축협의 절차를 질의한 결과, 2008년 2월 14일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 중 하나로 교도소 부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계획에 대해 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8년 2월 27일 안양시장 등은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여, 안양교도소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안양시에 요청하면 시민공청회 및 재건축을 위한 여론수렴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안양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0년 5월 전체 사업부지(23만7,412㎡) 중 29.1%에 해당하는 6만9,063㎡에 주민생활시설을 조성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2010년 7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 반대의견 없이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2월 20일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재건축 협의

권자인 안양시장에 건축협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신청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양분되고, 주거부지로 인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로 보기가 어렵고, 수십 년간 시민교통에 공용되어온 현행도로의 폐도는 불합리하며, 특히 신청대지가 안양권 통합시에 상징성이 요구되는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도시가 단절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미래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협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법무부와 안양시가 2006년부터 협의해온 재건축 설계(안)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2010년 7월 번복하고 건축협의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법무부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건축 재협의 재신청을 했으나 안양시에서는 각각 4월과 8월 당초와 같은 사유로 불가 처분했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건물 84동 중 50동이 건물안전등급 C등급으로 더 이상 재건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안양시를 상대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취소’ 취지로 2011년 7월 18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의조정을 신청했다.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

위원회는 법무부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이후 관련 당사자 및 부처 실무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했다. 그간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무차장 등 행정협의조정실 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관계자들이 2011년 8월 세 차례 안양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안양교도소 관계자로부터 노후하고 열악한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재건축의 시급함에 공감하게 되었다.

실무위원회 실무회의 과정에서 2011년 8월 17일 안양시는 현 교정시설의 외곽이전을 전제로 대체부지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이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법무부와 대체부지에 대하여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실무위원회는 안양시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체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방향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9월 30일 안양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완료됐다. 법무부는 안양시 자체용역결과 제안한 대체부지와 안양시가 실무회의에서 추가로 제안한 부지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대체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2011년 11월 2일 당사자(안양시, 법무부)와 관련부처(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가 주장하는 현 위치 재건축안과 안양시가 연구용역한 관련 이전 부지를 비교 평가하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실무위원회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적인 검증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2개 기관을 추천받아 국토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정시설 입지갈등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2011년 12월 15일 국토연구원은 재건축과 이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지역민원, 사업의 시급성, 소요기간 등 전반적인 면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건축이 더 적합한 안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먼저 재건축 시에는 시급한 건축물을 우선 건축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2015년까지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전 시에는 이전부지 군부대 이전, GB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부지매입 등 타 이전사례 등을 감안하면 최소 8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재건축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 오픈 스페이스 제공으로 재건축에 대한 극심한 반대는 없었으나, 이전 추진 시에는 이전지 주민들의 직접적 갈등과 반대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안양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전부지에 대한 구상은 아파트 단지 위주의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법무부의 재건축 계획은 민간 연수시설 수준의 외형설계와 주변 녹지공간 조성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다.

넷째, 안양시에서 검토 중인 자체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민관합동 SPC 방식을 제안한 데 대하여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섯째, 재건축 시 국토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서울·안산·수원 등지로부터 접근이 양호하며 대중교통접근체계가 우수하여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반면, 이전지역은 급경사 지역으로 접근이 불편하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따라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출정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2년 1월 13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안양교도소 건축물의 50%가 건물안전등급 C등급으로 판정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전 시에는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양시가 회의에 불참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추가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이에 법무부에서는 당초 교정시설 부지의 29.1%를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는 이외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거나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2012년 1월 30일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논의결과를 수용하여 현 위치에서 재건축기로 결정했다. 또한 교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으로 기존 법무부가 조성하여 제공키로 한 주민체육시설 용도 이외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시민이용 주차장 설치 등 주민의 이용가능성, 필요성 등을 보다 채고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을 함께 제시했다.

3) 공용 건축물 안전과 수용자 인권 확보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한 갈등 해결은 재건축으로 인해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 등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보다 공용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용환경 열악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 침해소지 예방이라는 공익의 입장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사례를 제시했

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갈등조정과정에서는 ‘교정시설 입지갈등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회의, 현장방문 등이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갈등조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에 상응한 지원방안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4) 위원회의 결정 이후 진행상황

법무부가 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2년 3월 6일 현 위치에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를 안양시에 신청했으나, 안양시가 4월 24일 또다시 협의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법무부는 더 이상 협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7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를 상대로 ‘건축협의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1월 말 현재 소송진행 중이다.

2012년 1월 30일의 위원회 결정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선 안양시가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주도로 위촉하므로 결정 또한 중앙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은 공공갈등관리 차원에서 위원회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999.10.26	■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 경기도에서 후보지 추천, 주민 반대로 무산
2007.1.20	■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질의
2009.9.30	■ 안양교정시설 재건축 예비조사 설계용역 실시
2010.7.2	■ 신임 안양시장에게 재건축 협조 요청
2010.7.20	■ 재건축 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2010.12.28	■ 건축협의 신청(1차)
2011.2.11	■ 건축협의 불가 통보
2011.3.8	■ 건축협의 신청(2차)
2011.4.22	■ 건축협의 불가 통보(2차)
2011.5.26	■ 건축협의 신청(3차)
2011.7.15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신청
2011.8.3	■ 건축협의 불가 통보(3차)
2011.8.10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2011.8.19	■ 구조안전진단 실시
2011.8.25	■ 국무총리실, 안양교도소 답사(1차)
2011.9.30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계부처 회의
2011.10.7	■ 국무총리실, 안양시 제안부지 2개소 협장답사(2차)
2011.11.14	■ 교정시설 입지갈등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
2011.12.15	■ 용역결과 보고회(국무차장 주관)
2011.12.27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계부처 회의(2차)
2011.12.29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계부처 회의(3차)
2012.1.13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2012.1.30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

제3절 입지갈등

1. LH공사 지방이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특히 업무·기능 중복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대국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양 공사를 통합하여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2005년 수립된 공공기관 이전계획(한국토지공사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 대한주택공사의 경남 혁신도시 이전)은 양 공사의 통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인 이전지역 결정이라는 새로운 정책문제가 대두되었다.

1) LH공사 이전지역 결정에 대한 갈등과 정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LH공사 통합 이후, 정부는 LH공사 지방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발전위원회, 관계 부처 및 전북·경남이 참여하는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를 구축하고, 네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2009.11, 12, 2010.3, 8). 제1차 회의는 향후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협의한 자리였다.

우선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에서 LH공사의 지방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협의를 거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 심의를 거쳐 이전계획을 확정하도록 합의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경남·전북 양 지자체에 각각 이전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 통합에 따른 LH공사의 이전지역 입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전북은 종전 공공기관 이전계획대로 전북·경남에 LH공사를 분산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전북에 사장 및 기획부서(24%)를 배치하고 경남 혁신도시에 사업부서(76%)를 분산배치하거나, 토지·주택부문을 전북·경남에 나누어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북 LH본사유치비상위원회 연좌농성



경남혁신도시지키기 진주시민본부 활동

에 반해 경상남도는 LH공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는 대신, 전북에 추가 국책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 후 4차 협의회까지 정부는 양 지자체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상호 수용가능한 대안' 제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양 지자체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2) 지역 간 합의 난항에 따른 정부의 다각적인 조정안 검토

2009년 10월 공사통합 이후 1년여 간 지속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LH공사 이전방안에 대한 지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과 과도한 지역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LH공사 이전방안을 조속히 확정키로 하고 조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조정안 검토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LH공사의 일괄배치, 분산배치 및 기능분할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다만 모든 문제의 시초가 두 공사의 LH공사 통합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므로 배치방안 역시 우선적으로 공사통합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분산배치는 정치적 분쟁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경영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했을 때 향후 공사 차원의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 간 소통을 저해하여 경영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더욱 큰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었다. 분산배치로 인해 (구)토·주공 직원 간 화학적 통합 및 조직결속을 저해하여 LH공사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장기적인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복청사 건축, 양 본사 간 출장비, 업무협의 애로 등 유무형의 추가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지역 중 사장이 근무하지 않는 지역은 지역본부 또는 출장소로 전략할 우려가 있고, 사장이 근무하는 지역도 일부기능 수행 및 소수인원 이전으로 인해 혁신도시 내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여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더불어 사장 배치지역 결정기준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아 추가적인 갈등을 예고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하나의 지역으로 LH공사를 일괄이전하는 경우, 사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분산배치에 비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LH공사를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고, LH공사가 이전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보완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했다.

공사의 통합목적인 경영효율성을 고려하여 LH공사 이전을 하나의 지역으로 일괄이전하도록 추진할 경우에도 전제되어야 할 핵심요건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우선 어느 한 지역만 이득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양 혁신도시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LH공사가 이전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토지공사, 주택공사 인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이전기관 재배치와 세수를 고려해야 했다. 둘째는 인원과 세수를 보전하는 경우에도 타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관의 추가배치나 국책사업 지원 등은 지양하고, 당초 두 혁신도시에 이전할 예정이었던 기관을 재배치하는 범위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전북·경남 혁신도

시의 핵심기능군은 최대한 유지토록 하여 혁신도시의 성격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일괄이전 및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넷째, LH공사 외의 다른 기관이 재배치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수용가능성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일괄이전·분산배치 평가】

대안 평가	일괄이전		분산배치	
	(제1안) LH공사 경남 이전	(제2안) LH공사 전북 이전	(제3안) LH공사 사장 경남 배치	(제4안) LH공사 사장 전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공사 통합 취지에 부합 ■ 양 혁신도시 기본 성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공사 통합취지에 부합 ■ 양 혁신도시 간 핵심 기능 간 교환은 지역특성상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형평성 유지 가능 ■ LH공사 통합취지 및 경영효율성 저해 	

위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LH공사 일괄이전 시에는 경남 이전이 전북 이전보다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기존 공공기관 이전계획대로 혁신도시의 핵심기능(경남 : 산업지원 및 첨단주거 선도도시, 전북 : 농업생명 허브도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구)토공·주공 인원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기관을 재배치하는 경우 전북 일괄이전안은 9개 기관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반해 경남 일괄이전안은 재배치 대상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하여 당초 양 혁신도시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변경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경남·전북 혁신도시 관련 현황】

구분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	경남혁신도시(진주)
비전	■ 농업생명의 허브 Agricon City	■ 산업지원과 첨단주거를 선도하는 Inno Hub City
면적	■ 1,014만5,000㎡(307만평) - 농업생명군에 673만3,000㎡ 배정	■ 411만8,000㎡(125만평)
계획인구	■ 2만9,018명 * 9,673호, 85명/ha	■ 3만8,378명 * 1만3,234호, 355명/ha
사업비	■ 1조5,423억원 - 용지비 9,228억원, 조성비 6,195억원	■ 1조2,318억원 - 용지비 4,489억원, 조성비 7,820억원
이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기관 - 농업생명군(6) : 농진청, 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농업대학 - 국토개발군(2) : 토공, 지적공사 - 기타(4) : 지방행정연수원, 전기안전공사, 식품연구원, 간행물윤리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기관 - 주택건설군(3) : 주공, 주택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 - 산업지원군(3) : 중진공,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 기타(6) : 국민연금공단, 남동발전, 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관세분석소, 저작권위원회
이전인원	■ 5,250명 * 토공 1,168명(22%)	■ 4,565명 * 주공 1,919명(40%)

따라서 LH공사 통합취지 및 경영효율성, 혁신도시 성격 유지, 재배치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LH공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고, 당초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로 재배치하여 전북 혁신도시에 (구)토공 인원을 보전하고 세수부족분은 별도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3) 정치권까지 퍼진 지역갈등과 협의를 통한 해결 모색 노력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2011.3.30) 이후, LH공사 이전 입지선정이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지역 간 입지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분산배치를 주장하는 전북의 반대가 거셌으며, 국회에까지 관련 내용이 의제화되어 민주당이 LH공사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결정(2011.5.5)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에 정부안의 보고(2011.5.13)를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제5차 LH공사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2011.5.14)하여 정부안에 대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시도했으나 전북이 불참하는 등 협의과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한편 경남은 기존 경남 혁신도시 배치예정이었던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배치에 반대하는 등 양 지역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균형있는 조정안 마련을 위한 절차를 추진했다.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를 개최(2011.5.16)하여 LH공사 이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LH공사 본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로 재배치하여 전북 혁신도시에 (구)토공 인원을 보전하는 정부의 LH공사 이전(안)을 수용하는 대신, 세수보전방안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2011.5.16, 14시)에서 지역위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경남 일괄이전과 함께 전북에 대한 세수보전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LH공사 이전안을 논의, 결정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및 LH공사 이전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2011.5.16)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2011.5.16)를 통해 그간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향후 사업추진 시에도 국민의견의 폭넓은 수렴과 진행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갈등을 최소화할 것임을 밝혔다.

4) 정책적 합의

LH공사 이전 결정사례는 첨예한 입지갈등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인 갈등양상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례였다. LH공사라는 거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두고 지역적 차원에서 정책결정의 합리성보다는 지역 차원의 정치적인 합리성이 우선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여 양 지자체 간 무한대립이 지속되고, 양측이 협상의 여지를 외면하거나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도 지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이전갈등으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을 조기종식시키고자 LH공사 통합취지 및 경영효율성, 혁신도시 성격 유지, 재배치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전이 무산된 지역의 정치적 입장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했다. LH공사 이전지역 결정은 비록 첨예한 지역갈등으로 인해 양 지자체 간 완벽한 의사합의에 따른 정책결정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1년여에 걸쳐 최대한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점, 공공기관 통합이라는 국가정책적 큰 틀하에서 양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방안을 도출하려 노력했던 점 등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LH공사 지방이전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5.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 (구)토공은 경남 혁신도시, (구)주공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지역 결정
2008.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 (구)토공과 (구)주공 통합 결정, 통폐합기관의 지방이전 방침 수립
2009.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출범
200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 - 향후 협의 절차 논의(협의회에서 방안 마련 → 국회 협의 → 지역발전위 확정)
200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 - 양 지자체는 기존 입장(경남-일괄이전, 전북-분산배치) 고수
20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 - 경남은 일괄이전 3개 방안을 제시했으나, 전북은 경남의 대안이 일방적·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반대
20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 - 양 지자체는 기존 입장 고수

LH공사 지방이전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 -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LH공사 이전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이 주요 정치쟁점으로 집중 부각
201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공사 유치를 위한 비상시국 선포, 김완주 전북도지사 석발식 단행
2011.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사당 주변 2,000명 규모 상경집회 개최
201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은 'LH공사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확정
2011.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고 추진 - 야당의원 저지로 무산 - 언론브리핑을 통해 LH공사 이전 정부안 공개
2011.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행정부지사·도의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반납, 정부 불복중 운동 전개 발표
2011.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 개최
2011.5.16, 0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위원회 공공기관이전특위 개최 - LH공사 이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2011.5.16,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위원회 개최 - 심의·의결을 통해 LH공사 이전방안 확정
2011.5.16,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LH공사 이전방안에 대한 정부 수용
2011.5.16,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 LH공사 이전방안에 대한 정부 수용입장, 전북의 세수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전을 약속

2.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최근 세계 항공운송시장은 항공협정, 항공 자유화, 글로벌화 등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거대한 축으로서 미래의 항공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경제교류 증가 및 동북아 항공시장의 성장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항공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항공수요 예측조사 실시

정부는 이러한 세계 항공운송시장의 변화와 대내외 경제교류 증가에 대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적기에 지방 항공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연구 결과, 동남권역⁵⁾의 국제 항공수요는 2025년 1,026만명으로, 2006년 250만명에 대비해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중국 및 동남아 등 단거리 여행 수요 증가 및 저비용 항공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항공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 지역의 국제 여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동남권 국제 항공여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기존 동남권 공항들의 시설은 국제 항공수요 증가분을 수용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동남권 국제항공 수요 처리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해공항의 경우 2025년경 연간 활주로 운항 횟수가 현 시설능력(14만6,000회/군(軍) 3만4,000회, 민(民) 11만2,000회)에 도달하여 공항시설 능력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동남권역의 국제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동남권 지역에서는 지역 공항의 국제노선이 부족하여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접근시간 및 통행비용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면서 동남권 국제항공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동남권 지역민의 편의성 증대와 기업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2) 항공수요 예측조사 결과

2007년 연구 결과와 지속적인 지역 건의, 동남권 기존 공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를 시행하게 되

5) 공항 권역은 중부권·서남권·동남권·제주권 등 4개 권역으로 분류되며, 권역의 국제선 공항의 영향권 개념으로서 동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도 포함

었다. 그 결과 인천공항에서 전환되는 수요를 포함하여 동남권 항공수요는 2025년 약1,600만명, 2030년 약1,900만명으로 예측되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동남권 국제 항공여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기존 동남권 공항들의 시설은 장래 국제항공 수요를 수용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동남권 국제항공 여객 수요 처리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해공항 활주로는 2027년 그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지역 간 갈등완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정부는 신공항 후보지 분석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입지 기준⁶⁾에 따라 영남권 35개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경상남도 밀양 일원과 부산광역시 가덕도 일원 두 곳으로 신공항 후보지를 압축, 제시했다. 한편 부산·대구 등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의 조속한 선정 및 착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신공항 입지를 두고 해당지역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신공항 유치추진단, 범시민 유치위원회 등을 결성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입지 평가를 위해 지자체 간 합의를 도모하면서 지자체 추천 인사를 참여시켜 공정한 입지 평가를 시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입지와 공항 명칭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 극명한 입장 차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지역 간 갈등과 유치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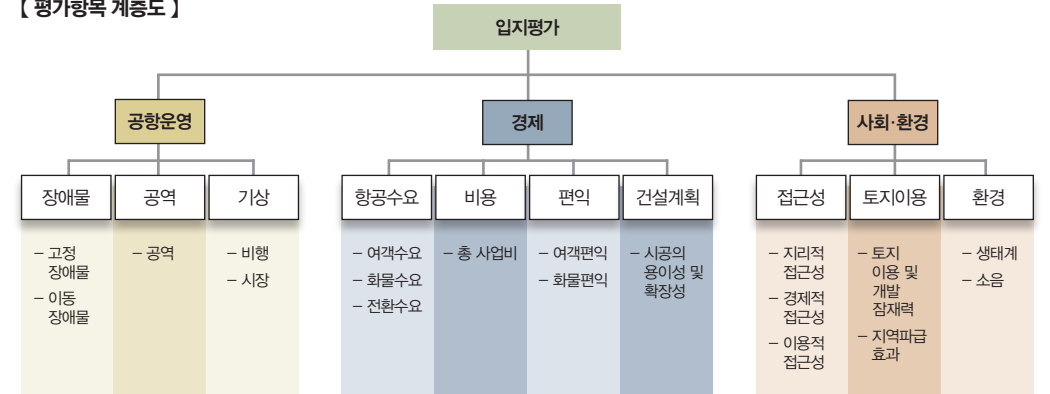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밀양과 가덕도 2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기존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보지 입지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항공, 교통, 지역개발 등 19개 관련 분야 기관, 단체에서 분야별 전문가 139명을 추천받아 전문성, 인지도, 출신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20명을 선정해서 2010년 7월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입지평가위원회는 기존 연구용역 결과와 지자체별 의견 등을 고려한 입지평가 자료 검토, 평가를 위한 주요사항 심의 의결(평가지침 수립 및 평가자료집 구성, 평가항목·가중치·평가방법 마련, 평가단 구성방안 검토 및 선정), 입지평가 결과 승인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했다.

입지평가위원회 위원은 국내외 공항 입지평가사례 및 국제항공기구에서 제안하는 입지평가 요소와 관련된 전문분야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공항운영 분과(장애물, 공역, 기상) 위원 6명, 경제분과(경제성, 건설계획) 위원 7명, 사회환경 분과(접근성, 토지이용, 환경) 위원 6명 등 총 20명이 선정되었다. 입지 평가항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과 인천공항 등 타 공항 입지평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 분야, 10개 평가 항목, 19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했다.

6) 공역, 장애물, 기상조건, 접근성, 소음, 개발계획, 확장성, 지형지질, 공공지원시설 등 9개

【 평가항목 계층도 】



입지평가위원회와 별도로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단도 구성했다. 평가단은 가덕도와 밀양 두 곳의 신공항 후보지를 입지평가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주체로 구성했으며, 평가단원은 항공, 교통, 지역개발 등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분과별 동수인 9명씩, 총 27명을 선정했다.

평가단은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평가 자료집과 지자체별 제시 의견 등을 중점 검토하고, 분과별 토론회 후보지 현지답사 등을 거쳐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를 실시(2011.3.30)했다. 입지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의 입지평가 결과,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후보지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항 운영상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공항 규모에 비해 건설비가 과다하여 신공항의 입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입지평가 당일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의 평가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정부 입장으로 수용하여 동남권 지역에 새로운 공항 건설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4) 정책적 함의

지역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영남권의 항공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대책은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영남지역을 기점으로 보다 많은 국제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 공항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공항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7.3.6~11.5	■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 /국토연구원
2008.3.28~2009.12.18	■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국토연구원
2010.7.18~	■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2011.3.24~25	■ 입지평가위원회 후보지 현지답사 및 지자체 의견 청취
2011.3.27	■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단 구성
2011.3.28~30	■ 평가 시행(평가단 현지답사 및 합숙 평가)
2011.3.30	■ 평가결과 발표

3. 위례신도시 군시설 기부·양여방안 조정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양극화를 심화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 종합대책을 세우고 신도시 개발 등 대책을 강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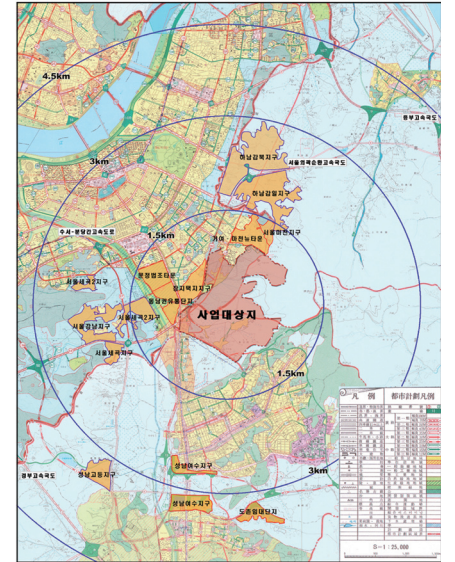
위례신도시사업은 이러한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위례신도시사업지구는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의 3개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수도권 중심부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약 15km에 위치하고 있다. 개발면적은 677만5,000㎡(서울 38%, 성남 41%, 하남 21%), 건설호수는 4만3,419세대이며, 약 10만8,0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개발이 진행되어 2017년 12월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⁷⁾다.

7) 2011년 9월, 공동사업자로 참여

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탄생한 위례신도시

2003년 10·29 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강남 및 분당 등을 시작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타 신도시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경향을 보이자 정부는 부동산 거품 확산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8·31 부동산 대책의 특징 중 하나로 공공역할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를 들 수 있고, 송파·거여 일대의 신도시 개발, 재개발 규제완화 등이 이 대책에 포함된다.

특히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된 송파거여지구의 개발은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2005년 12월 27일 송파거여지구 개발방침을 발표하면서 위례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위례신도시는 총면적 677만5,000㎡ 중 군용지가 73%, 국공유지가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군용지를 포함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과의 토지보상에 관한 협상 결과가 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위례신도시 위치도

2) 군사시설 등 기본협약체결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국방부는 2006년 3월 31일 「위례신도시(구 : 송파거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군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작성했다. 양 부처의 장관이 직접 서명한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로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예하부대 등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본협약에 포함된 대상사업은 첫째,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사업(인접 간선시설 포함), 둘째, 주거복지시설의 설치사업, 셋째, 남성대CC 등 기존 체육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의 제공 등이다. 대상사업의 추진은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자기비용으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고, 종전 군부대의 토지·건물 등 이전대상시설(양여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다. 또한 국방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장급을 공동협의회장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이전협의회를 합동으로 구성·운영 하도록 했으며,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예하부대 등과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이

전대책반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본협약서에 따라 대상사업, 비용부담의 주체, 기존 재산의 처리방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회 및 대책반 등을 정한 후 구체적인 세부사항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와 대책반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부처는 좀처럼 상호 협의점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세부사항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얼마 남지 않은 참여정부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양 부처는 남은 과제를 차기정부(이명박 정부)로 순연하기로 했다.

3)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 추진으로 신도시사업 탄력

이명박 정부도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2008년 9월 19일, 연간 50만호의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을 지속하고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는 보금자리지구는 아니지만 공급예정인 4만 3,419세대 중 2만2,374세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특징은 사업절차를 간소화(개발·실시계획 통합 등)하여 공공에서 도심 인근에 부담 가능한 가격의 택지를 신속 공급하고, 주변시세 50~70%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며, 사전예약 제도를 도입한 점 등이다. 특히 강남권 등지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우수한 입지여건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서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 사전 예약제도란 주택건설에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주택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 단계(사업승인 이전)에서 공급물량의 일정 부분(약 80%)을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때 본청약 시기와 주택가격의 최고한도를 제시하게 된다.

위례신도시는 2010년 2월 26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주택가격 1,280만원/3.3㎡(84㎡ 기준)에 2,233호(입주예정일 : 2013.12)를 공급한 결과, 무려 2만9,762명이 신청하여 평균 신청률이 1,333%나 되었다. 공급절차를 앞당기는 사전예약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신도시사업은 탄력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전체면적의 73%를 차지하는 국방부와 의견 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예약을 실시함에 따라 주택가격의 수준·본청약 시행시기 등에 대한 대국민 약속이행과 관련해서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이 기한 내에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떠올랐다.

4) 국방부와 LH공사 간 이견 사항

양여재산 처리, 기부재산의 인정범위, 정산방식 등에 대하여 부처 간 합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양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기관별 입장차이가 매우 컸다.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기본협약서 제9조제2항에 「국유재산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규

정에 따른다고 했으나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적용⁸⁾을 두고 국방부와 LH공사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양여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신도시개발로 인한 그린벨트 해제와 용도지역의 변경사항 등이 반영된 시가평가를 주장했다. 반면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한 평가를 주장했다. 「토지보상법」에 의해 평가하면 신도시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된 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신도시개발 전 상태,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고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방식 차이를 금액으로 정확히 산출할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이 예상되므로 양 부처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양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평가시기 등 기타 다른 사안에 대한 것들도 택지개발사업과 기부대 양여 사업에 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1년 이상 국토부·국방부·LH공사의 실무자들이 수차례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하나하나가 단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부처 간 이견을 좁힐 수 없었고, 2010년 2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2011년 6월 실시기로 약속한 본 청약시점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본 청약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분양업무 절차상 사전에 조성원가 등이 산정되어야만 후속업무(본 청약 업무 등)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LH공사는 평가방식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5) 국무총리실의 이견 조정

양 부처는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국무총리실로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위례신도시가 국민에게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임을 인지하고 먼저 현안의 핵심사항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현안의 핵심사항은 사전예약 당시 공고문에 주택가격 수준 및 본청약 시기가 고시되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완료되어야 대국민 약속이 이행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조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곧바로 차관회의를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차관회의 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 및 해결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또한 신속한 조정완료를 위해 회의단계별로 회의의 성과물이 나오도록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당사자에게 고지했다.

2011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1차 차관회의가 개최되었다. 1차 회의는 양 부처의 쟁점사항과 기관별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가격(1,280

8)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국방부 주장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 국토부 및 LH공사 주장

만원(3.3m)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사업비 등 LH공사 사업자료를 바탕으로 양자 간 추가 협의를 한다'는 조정원칙을 세운 뜻 깊은 자리였다.

조정을 위한 후속 회의가 연달아 개최되었고, 거듭하여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현안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5월 31일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국방부·국토부 담당국장·LH공사 등 합동회의, 6월 9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2차 차관회의를 거쳐 6월 22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3차 차관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안을 최종 조정했다.

마침내 2011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 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무총리실(실장 임종룡), 국방부(차관 이용걸),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가 서명한 합의문이 작성되었다. 합의문에는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흔적들이 엿보였다. 즉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분양가를 준수한다'는 사항을 합의문 제1조에 표현했던 것이다. 합의문 제2조에는 양 부처가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서로 양보하여 대타협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즉 국방부의 시가평가 의견과 국토부·LH공사의 계획 수립이전 토지이용상황을 적용한다는 의견을 각각 반영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차관회의 결과(합의문)

1.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분양가를 준수한다.
2. 평가방법은 시가평가를 하되,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이전의 토지이용상황(개발제한구역 미해제 및 종전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3. 평가는 2011년 7월 보금자리 분청약을 위하여 양여재산을 양여시점 기준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감정평가하고, 부대별 기부·양여시점에서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정한다.
4. 정산은 개별정산 방식으로 실시하되, 부대별 기부·양여차액이 발생할 경우 기부목록 중 주거복지시설부지비 등(간선시설설치비는 제외)을 활용하여 차액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5. 향후 언론브리핑 및 대응, 민원발생 시 양 부처가 서로 사전협의하여 수행한다.

2011. 11. 4

6) 정책적 합의

금번 국무총리실의 위례신도시 현안문제 조정은 정부부처 간 대립되는 문제에 대하여 원칙은 지키되 서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며, 부처의 이익을 뛰어넘어 국가적 이익을 이루어내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조정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군시설 기부양여방안 조정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5.8.31	■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2005.12.27	■ 송파거여지구 개발방침 발표
2006.3.31	■ 군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 작성 (국방부 : 건교부)
2006.7.21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2008.8.5	■ 개발계획 승인 고시
2008.9.19	■ 정부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발표
2009.1.7	■ 보상 착수
2010.2.26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시행 공고
2010.7.23	■ 기본협약서 변경
2010.11.3	■ 실시계획 승인
2011.1.28~	■ 기부·양여 재산평가 및 시행방안 용역시행
2011.4.27	■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1차 차관회의
2011.5.31	■ 국무총리실 주관 국방부-국토부-LH공사 합동회의
2011.6.9	■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2차 차관회의
2011.6.22	■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3차 차관회의
2011.11.4	■ 국무총리실 관계차관회의 결과 합의문 작성
2011.11.30	■ 보금자리주택 분청약 시행 공고

제4절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갈등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1)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UN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는 아니지만 2009년 기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⁹⁾이자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온실가스 증가추세¹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¹¹⁾)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내외에 발표했다. 이 목표는 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비 의무감축국에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범위(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5~30%)의 최고 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이산화탄소톤(tCO₂) 이상인 458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소비량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낮은 전기요금, 기업·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 부족 등으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목표 미달 시 최고 벌칙이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한 한계를 안고 있는 목표관리제만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또한 녹색성장을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우리의 경제구조를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선진국 진입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보다 강력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이전에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추세를 감소추세로 전환시키고 우

9) 2009년 에너지 연소 부문 전 세계 CO₂ 배출량 순위(2011년, IEA) : ①중국(68억7,720만tCO₂-eq) ②미국(51억9,500만tCO₂-eq) ③인도(15억8,580만tCO₂-eq) ④러시아(15억3,260만tCO₂-eq) ⑤일본(10억9,290만tCO₂-eq) ⑥독일(7억5,020만tCO₂-eq) ⑦이란(5억3,320만tCO₂-eq) ⑧캐나다(5억2,070만tCO₂-eq) ⑨한국(5억1,550만tCO₂-eq) ⑩영국(4억6,580만tCO₂-eq)
10) 우리나라의 CO₂ 배출(에너지 연소 부문)은 1990년(2억2,930만tCO₂-eq) 대비 2009년(5억1,550만tCO₂-eq)에 124.8%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최고(일본 2.7%, 미국 6.7%, OECD 평균 8% 증가 / 2011년, IEA)
11) BAU(Business As Usual, 통상경영추계방식(通常經營推計方式)) :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

리의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¹²⁾으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 「배출권거래법」 제정 과정에서의 갈등 조정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11년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면서 제도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사를 표명했으며, 관계부처 간에는 제도 시행시기, 주무관청, 할당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첨예하게 이견이 대립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연구용역 3건을 수행하고, 해외사례 및 관련 현황에 관해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법안에 반영하는 한편, 지식경제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산업계·NGO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률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갈등 해결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배출권거래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1월 입법예고한 이후에도 2010년 11월과 2011년 1월에 두 차례의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와 2011년 2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시기 및 할당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쟁점을 조정했다. 이후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산업계와의 10여 차례의 추가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여 2011년 3월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은 조정과정에서 산업계·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①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②과태료 상한선을 당초안인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했으며 ③과징금 상한선도 톤당 배출권 평균가격의 5배에서 3배로 인하하고 ④제1차 계획기간 무상할당비율을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는 지식경제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정하고 산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원활히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는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2011년 6월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산업계·NGO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총 7차례의 특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2012년 2월 법률안이 특위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2년 5월 2일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적 153명, 찬성

12) 2009년 11월 국내 연구기관(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이 직접규제 방식(현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비 약 60%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

148명, 기권 3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EU·뉴질랜드·호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전국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3)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의 갈등 조정

2012년 5월 14일 「배출권거래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녹색위는 법률 시행일인 11월 15일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했다.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는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시행령 제정에 관한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고,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EU 등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행령안 마련에 착수했다.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회의 9차례, 산업계 간담회 9차례, NGO 간담회 2차례, 관계부처 차관급 및 국·과장급 회의 9차례,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분과위원회 회의의 2차례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들을 시행령안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은 시행령안을 마련하면서 2012년 7월에 두 차례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회의를 개최하여 주무관청 등 거버넌스, 배출권 무상할당비율, 조기감축실적 및 상쇄 인정비율 등을 포함한 조정을 완료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주무관청 문제였다. 환경부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EU 등 외국 사례, 제도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경부·국토부·농림부 등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4개 부문별 관장기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의 조정결과, 주무관청은 강력한 감축과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하되, 지경부·국토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즉 가장 중요한 절차인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결정과정에서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들로 공동작업반(반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작업반 산하 부문별 실무작업반에서 업체별 할당량 시안을 만들고, 이를 공동작업반에서 검토하여 할당량안을 만든 후, 이를 다시 관계부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위원: 관계부처 국장급)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계의 최고 관심사였던 배출권 무상할당비율은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 결과와 2005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EU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100%를 무상할당하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에는 97%를 무상할당, 3%만 유상할당하기로 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이른바 세계를 무대로 경쟁이 치열한

철강, 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100% 무상할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 밖에도 다른 기업의 배출권을 구매하여 자신의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이른바 '상쇄' 인정비율도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에서 3%로 최종 조정되었다.

7월 말 입법예고 이후에도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산업계·NGO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시행령안에 반영했으며, 2012년 9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12년 11월 15일 시행령을 법률과 함께 시행했다.

4) 향후 계획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소 지정 또는 설치, 배출권등록부 구축, 배출권 할당기준, 상쇄 인정범위 등 각종 지침 제정(약 17개의 고시) 등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본계획, 할당계획 및 각종 지침 마련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반발 및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간의 첨예한 이견이 표출될 것이 명백하므로, 국무총리실은 산업계, NGO,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의 이견을 적극 조정하여 향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배출권 거래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추진경과

일 자	주 요 내 용
2008.12~2010.1	■ 법률 제정 관련 연구용역 2건 수행
2010.6~11	■ 전문가, 산업계·NGO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2010.11.17~12.7	■ 법률안 입법예고
2010.11.26	■ 법률안 공청회 개최
2010.11.15	■ 국무총리실장 주재 제1차 관계차관회의
2011.1.21	■ 국무총리실장 주재 제2차 관계차관회의
2011.1.13	■ 규제개혁위원회 1차 심의
2011.2.9	■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2011.2.10	■ 규제개혁위원회 2차 심의·의결
2011.2.28~3.3	■ 법률안 재입법예고
2011.3.30	■ 법제처 심사 완료
2011.3.31	■ 차관회의 의결
2011.4.12	■ 국무회의 의결
2011.4.15	■ 법률안 국회 제출
2011.6.29	■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2011.8~2012.2	■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2012.2~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2012.5.2	■ 국회 본회의 통과
2012.5.14	■ 법률 제정·공포
2012.11.15	■ 법률 시행

「배출권거래제법시행령」 제정 추진경과

일 자	주 요 내 용
2011.5~2012.7	■ 시행령 제정 관련 연구용역 2건 수행
2012.3~2012.7	■ 전문가, 산업계·NGO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 전문가 회의(9회), 산업계 간담회(9회), NGO 간담회(2회), 차관급 및 국·과장급 관계부처 협의(9회) 개최
2012.7.2	■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회의
2012.7.10	■ 국무총리실장 주재 제1차 관계차관회의
2012.7.16	■ 국무총리실장 주재 제2차 관계차관회의
2012.7.23~9.1	■ 시행령안 입법예고
2012.8.17	■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2012.9.20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사전설명회
2012.9.27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2012.10.5~10.15	■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2012.11.6	■ 법제처 심사 완료
2012.11.8	■ 차관회의 의결
2012.11.13	■ 국무회의 의결
2012.11.15	■ 법률 및 시행령 시행

2. 섯다운제 도입

1) 게임과몰입의 사회문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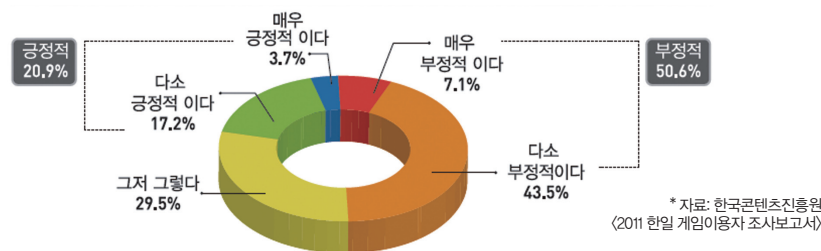
『2011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58.6%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즐겨하는 활동도 1위가 게임(29.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임산업의 부가가치율은 50.71%로 영화 32.68%보다 높으며, 수출액은 16억600만달러로 영화 수출액인 1,350만달러를 크게 앞서고 있어 콘텐츠산업에서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¹³⁾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한국은 세계시장의 25.9%를 차지하며 세계시장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게임의 인기와 경제적 효과에 비해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 이미지가 50.6%로 긍정적 이미지보다 2배가량 높다. 게임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보면, 부정적 시각(54.5%)이 높으나, 긍정적인 응답자(45.5%)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일본의 결과와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게임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며 온라인게임 등 게임이용자가 급증했으나 여가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여건에서 게임의 과도한 이용이 폭력성향, 의존증이나 사회부적응 등의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겠다. 특히 인격형성기를 보내는 청소년의 게임과 몰입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747만명의 약 7%인 51만명이 ‘게임과몰입’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게임의 과다이용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통일되지 않았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과몰입·중독’을 나란히 쓰고 있다. 이는 치료를 요하는 게임중독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의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과몰입’ 또는 ‘게임중독’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실태, 사회적 병리현상과의 인과관계, 예방과 치유 등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 게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



13) 2011 콘텐츠산업통계

2) 게임 섯다운제의 추진

가. 추진배경

섯다운(shut-down)은 ‘접속제한’을 의미하며 특정시간대 또는 일정시간이 지났을 경우 자동으로 게임을 할 수 없게 차단하거나 로그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게임과몰입 방지를 위한 규정이 불충분하여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게임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 게임물 규제정책으로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어왔다.

폭력성·선정성·사행성 등 게임물 내용에 대한 규제방식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유통 이전에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부여받은 연령별 등급(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게임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게임 섯다운제가 추진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연령대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한하는 ‘강제적 섯다운제’를 검토했다.

나. 입법 경과

2008년 7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을 대표로 의원 30명이 제안한 섯다운제 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재발의되었다. 2009년 4월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다시 ‘섯다운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2010년 4월 22일, 두 법률안을 하나로 합친 상임위 대안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은 4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중 규제의 가능성과 법체계상의 적합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편 2010년 4월 26일, 게임과몰입 방지대책을 담은 「게임법」 역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3) 게임 섯다운제 관련 정부 협의

가. 섯다운제 도입의 쟁점

부처 간 이견은 규제법령, 용어, 대상과 제한시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근거법령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용과 게임산업에 대한 규율은 「게임법」에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성가족부는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규제사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적 성격인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자제력이 높지 않은 19세 미만 모든 청소년 대상을 대상으로 강제적 섷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인터넷 중독률이 심각하고 가정의 게임이용 지도가 어려운 중·고교생이 제외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률적 제한은 성인 명 의도용, 해외게임 이용 증가, 해외로의 서버 이전 등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을 우려했다. 대안으로 친권자 요청에 의한 섷다운제를 추진하고, 강제적 섷다운제는 온라인게임 회원 가입 시 부모 동의가 의무화되어 있는 ‘만 14세 미만’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규제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산업 관련규제는 「게임법」에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보호정책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
섷다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섷다운제 - 친권자 요청 시 심야시간 청소년 접속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적 섷다운제 - 오전 0~6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 차단을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적 섷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및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생명권, 수면권, 건강권과 부모의 자녀양육권이 중요

나. 섷다운제 관련 정부협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새로운 조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양 부처의 입장차이는 좁혀질 수 없었다. 이에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통일된 정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처 간 조정을 추진했다. 국무총리실은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네차례 정부 단일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양 부처가 동의할 만한 조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꾸준한 여론수렴과 부처협의를 지속하여 201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하는 수정조정안을 마련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이용방법, 게임이용시간 등 제한 4. 게임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 의무화(세부사항은 「게임법」에서 규정) 2.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제공 금지 3.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에게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고지(세부사항은 「게임법」에서 규정)
대상 :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 16세 미만 청소년

수정조정안의 내용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인 ①게임 섷다운제 ②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의무화 ③게임사업자의 친권자에 대한 게임이용 정보제공 의무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규제사항은 「게임법」에서 규정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4) 게임 섷다운제의 입법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어렵게 수정조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부처의 갈등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11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게임 섷다운제의 적용범위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용범위를 ‘PC기반의 온라인게임’으로 한정하려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게임 전반(스마트폰게임 포함)’을 적용범위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다시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침내 양 부처 장관이 합의발표(2011.4.11)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1년 4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게임 섷다운제만을 규정하고 우선적으로 PC기반의 온라인 게임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의결했다.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도도입 2년 후에 제도적용 필요성을 평가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게임법」에 위임했다.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210명 중 117명의 찬성투표를 획득하여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었다. 법률 내용상 「청소년보호법」과 병행처리가 필요한 「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1년 7월 21일 의결되었다.

【 주요 게임물 규제정책 현황 】

		법적 근거	주요내용
이용 시간 제한	강제적 섷다운제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여성가족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섷다운제	「게임법」 제12조의 3 (문화체육관광부)	만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물 이용내역 정보를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요청 시 게임이용시간 등을 제한
내용 규제	등급분류	「게임법」 제21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 전반에 대하여 유통 전에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연령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5) 게임 섷다운제의 전망과 과제

가. 섷다운제의 시행

2011년 11월 20일부터 PC 온라인게임의 심야 청소년 접속 제한이 시행되었다.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은 1년 6개월간 적용유예를 받았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2년마다 평가하여 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2년 7월 1일부터 '섷택적 섷다운제'가 시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제도적 보완과제

게임 섷다운제의 도입은 게임중독과 연계된 사회부적응과 아이템 불법거래, 폭력 등 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인 정책의제로 입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게임과몰입과 중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부각시켰으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일깨웠다 할 수 있다.

다만 규제 도입 이후 운영실태와 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청소년 게임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객관적 정책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게임과다이용의 부작용,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제도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논란도 진행 중이다. 그간 시민단체와 문화계를 중심으로 섷다운제의 위헌성(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침해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 청소년 이용가로 분류된 게임에 대하여 다시 이용 시간대를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게임물 이용자의 본인인증 요구는 국내 인터넷 정책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흐름과 상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운영상의 부작용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섷다운제가 국내 게임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해외 채널링 서비스를 통한 규제 회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규제의 풍섷효과로 국내 게임업체가 해외법인으로 옮기거나 청소년불가 게임에 편중하여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는 현행 섷다운제가 규제 회피 동기, 주민등록번호 도용 또는 해외서버 이용 등을 통한 규제의 회피가능성이 모두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복잡한 본인인증 절차와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비용이 중소 게임업체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논란도 진행 중이다.

청소년의 주요 여가활동인 게임이 가진 폭력성과 선정성, 사행성과 중독성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정책적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그간의 논의가 제도의 도입 여부에 집중되어왔다면, 앞으로 도입 이후 싷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의 강구와 더 많은 협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섷다운제 국무총리실 조정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0.4.22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
2010.4.26	■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방위 통과
2010.5.7	■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대책 1차 실무회의(과장급)
2010.5.13	■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대책 2차 실무회의(국장급)
2010.5.26	■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대책 3차 실무회의(국장급)
2010.6.8	■ 청소년 게임중독 법안 관련 1차 차관회의
2010.9.27	■ 청소년 게임중독 법안 관련 2차 차관회의
2010.10.20	■ 청소년 게임중독 법안 관련 3차 차관회의
2010.12.2	■ 청소년 게임중독 법안 관련 4차 차관회의
2011.4.29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11.11.20	■ 온라인게임의 심야 청소년 접속 제한(섷다운제) 시행

국무총리실 5년의 기록
조화로운 정책
선진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❶ 2008.2 ~ 2013.2

발행인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발행처 국무총리실

기획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실

발행일 2013년 1월 31일

발간등록번호 11-1101000-000051-0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홈페이지 http://pmo.go.kr/pmo_web/main/

제작 MOON P&C

인쇄 정원문화인쇄



국무총리실
Prime Minister's Office

